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록

Dokumentation der dritten Sitzung des Deutsch-
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인프라특별위원회 간이록

1. 농지 및 산림 사유화

(2013.06.27)

1. Privatisierung den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n Flächen

27. Juni 2013

241

2.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처리

(2013.06.27)

2. Der Umgang mit dem Vermögen
von Massenorganisationen und
Parteien

27. Juni 2013

301

3. 구 소유권 반환 요청 처리

(2013.06.28)

3. Der Umgang mit Ansprüchen
von Alteigentümern

28. Juni 2013

361

4. 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2013.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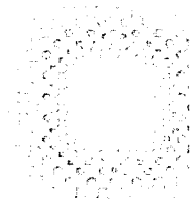
4. Unternehmensprivatisier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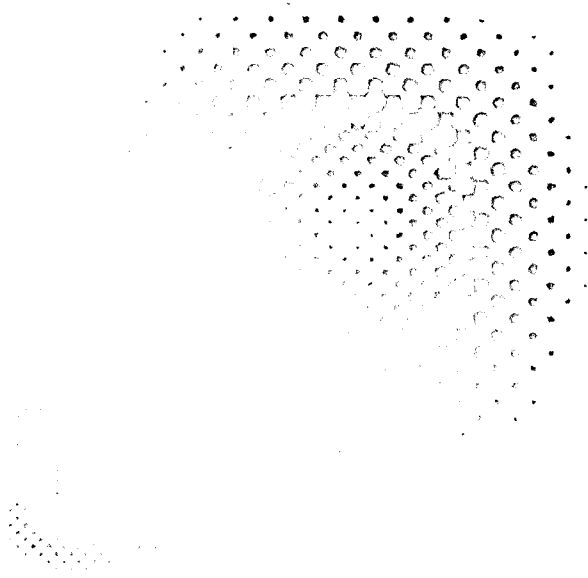
28. Juni 2013

421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록

2013. 6. 27-28 서울





1

농지 및 산림 사유화

2013. 6. 27



PART 01 농지 및 산림 사유화

■ 일시 : 2013. 6. 27, 09:30~13:00

■ 사회 : 천해성 실장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예, 통일부의 통일정책실장 천해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환영 만찬이 있었고 어제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나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 번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위해 찾아오신 독일연방 내무부의 벤투만 실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님들께 통일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내실 있고,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저희 회의는 당초에는 원래 정례회의대로 양측의 차관님이 진행하시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양측의 실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농업, 임업의 민영화, 그리고 공공재산의 처리문제, 몰수 재산 등 미해결 재산권의 처리문제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앞으로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가 이번 3차회의부터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해 주신 다른 분들의 활발한 토론 발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는 나눴습니다만 양측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십니다. 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이십니다.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종욱 대사님이십니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십니다. 아, 그리고 전문가이신 김영욱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쪽에 그동안 통일자문위원회 참석하셨던 전문가분들인 통일부와 외교부

의 실무자들이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벤트만 실장님께서 독일 측 참석자 위윈소개 및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요르크 벤트만 실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해성 실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어제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은 장관님께서 친히 참석하셔서 의견 나눌 수 있었고 아주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업무를 우리가 해왔으며 또 통일자문회의 내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얘기해보고 주제도 미리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나누게 될 텐데 저희가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 주제를 잘 다룰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일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저희 전문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하르트 슈뢰더 님, 이분은 통일과정의 증인이라 할 수 있으며 구동독 사민당 원내대표를 지내셨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이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칼-하인츠 파케 전 작센-안할트 경제장관이십니다. 학술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실무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것이 많으실 겁니다. 튀디거 폴, 전 할레경제연구소 소장님은 경제발전 현황이 구동독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실무경험을 통해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하네스 루데비히 전 신연방주특임관이십니다. 헬무트 콜 정부 하에서 아주 중요한 통일정책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다음으로 함만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관리회사의 사장님이시며,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 구동독의 토지개혁, 그리고 재산수용에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라우스-디터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실장이자 통일조약 팀장이셨습니다. 통일과정에서 통일조약을 직접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통일조약, 법과 관련된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쾨 페테르 파울린 국장님이십니다. 신탁청의 국장을 역임하셨고 저희가 다루려는 주제의 진짜 실무를 경험하신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또한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연방내무부의 카커씨, 저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독

일 대사관 측에서 와주신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자문회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통일부에서 저희 사절단을 잘 맞아주시고 자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신 점,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었던 점, 모든 것이 통일부의 협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천해성 실장님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진첩입니다. 내용은 구동독 도시들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1950년 과거의 도시 모습과 2008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변천사를 보실 수 있는 사진첩입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행사 때도 장관님께서 사진첩 말씀해 주셨습니다. 90년 독일통일 20주년 행사가 열렸을 때 당시 현인택 장관님께서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하신 바가 있었고 저도 통일부 대변인으로서 장관님을 수행해서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 열렸던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독일측의 적극적인 협조에 통일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진행을 하고 오후의 세션은 벤트만 실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통일과정에서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농지, 산림의 사유화와 소유권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원내대표님께서 통일과 체제전과정에서 소유권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측에서 김영훈 연구부장님께서 농지 및 산림의 사유화 관련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만 사장님께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농지 및 산림의 소유권 재형성에 대해서 발제해주시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준비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독일 측 보충발언에 이어서 자유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발표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슈뢰더 위원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통일과 체제전환에 있어서의 소유권 문제의 의미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열린 최초의 자유선거에서는 동독마크와 서독마크의 교환 비율과 소유권 문제, 이상 두가지 주제가 화두였다. 바로 동독주민들이 통일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가장 큰 두개의 걱정거리였다. 소유권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미해결 재산문제 (offene Vermögensfragen)’라 칭했다. 70년대 양 독일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래 동-서독의 문제가 아니었다. 먼저 점령국 소련이, 그리고 1949년부터 동독이 많은 동독인의 재산을 수용/몰수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수용이 당사자의 범죄와 연관 되어 징벌적 성격의 수용 형태를 띠었기에 이들은 가능한 경우 서독으로 탈출했다. 이들 동독탈출 주민들은 50년대 당시 평화조약을 통해서 부당한 수용 조치를 되돌릴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1989년 초까지만 해도 주장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대부분의 동서독 주민들은 믿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동독에 있는 재산이나 조부모의 집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집이나 수백년 동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터를 잃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미 다른 동독주민들이 수용된 부동산의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유럽역사에 있어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혁명 이후 1813년 프랑스의 왕들이 몰려날 때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24년) 반환은 불가능하고 보상 조치만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BC 251년 고대그리스 도시 시키온(Sikyon)에서 50년간의 폭정이 막을 내리자 아라토스(Aratos)는 자신의 벗인 프톨레마이오스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폭정기에 추방되었던 600명의 재산문제를 해결하고자 10인 위원회를 두었다. 이 위원회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원소유지 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받을 것을 설득하였다.(Cicero, de officiis II, 81) 아쉽게도 1990년에는 220만 건의 반환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할만한 5,000억 마르크로 추산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왕은 없었다.

재산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수용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

입법자들이 총 4년간 만들어낸 해결 방안을 언급할 것이다. 끝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의 시행 결과, 문제점, 대안을 논하고자 한다.

I.

1. 1945년에서 1949년 사이 소련이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시행한 대규모 수용 조치로 시작된다. 15,000개의 기업(그 중 중소기업의 수 : 10,000개), 농·임업 기업 14,000개(면적 : 330만 헥타르)가 수용되었다. 수용의 근거를 계급을 통해 설명했다. 자본가들과 대지주들(윙커)이 나치통치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나치의 반대자들의 재산 또한 수용되었다. 일명 ‘민주적 토지개혁’을 통해 100ha가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토지만만 아니라 동산에 대해서도 전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 소유주들은 추방되거나 일시적으로 감금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치출신이거나 나치를 지원한 의혹이 있는 자들 모두의 재산이 수용되었는데 이 과정에 있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는 부재했다.

전후 토지개혁이 필요했고 다른 점령지역에서도 관련 계획이 있었는데 이는 (구독일 제국의)동부 영토를 떠난 국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계획들에 따르면 특정규모(예:100ha) 이상의 토지만 수용하고 이를 보상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점령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은 새로운 농부들과 소농(小農)뿐만 아니라 91,155명의 동부 영토에서 추방당한 국민들에게는 유용했다. 평균적으로 농가당 8ha의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 토지개혁 대상 토지 중 2/3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었고 나머지 1/3은 인민농장에 귀속되었다. 기존의 농업구조가 파괴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 시기에 수확물이 줄었다.

기업의 수용도 많은 손해를 야기시켰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업소유주들이 기업의 특허, 상표, 기술자들과 함께 서독으로 떠나 서독 경제의 기적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2. 1952년 사통당(SED) 2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공포했다. 사회주의 건설이란 “계급투쟁의 심화”와 “적대적 저항의 타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계급투쟁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권력이 국민들을 향한 당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계급투쟁은 자영업자들을 겨냥했다. 사법부는 완전하게 테러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농부들이 공출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토지를 빼앗겼다. 1952년 8월에서 1953년 1월말까지 농부들을 상대로 한 재판이 1,250건 열렸다. 당시 15,000명 이상의 농부들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 결과 경작되지 않은 땅이 500,000ha에 이르렀다. 서독으로 달아난 자들의 재산도 수용되었다. 소매상과 도매상이 대출 거부, 공급금지, 트집잡기 식의 세무조사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도매상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3,000개의 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100건의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300명이 구속되었고 3억 3천 5백만 마르크를 징수했다. 스탈린 사망 후 소련 지도부는 사통당 지도부에 이러한 ‘국가테러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요했고 사통당은 이를 따랐다. 하지만 소련이 동독에 건넨 ‘자제해야 할 목록(Liste der Repressionen)’에서 노동자의 노동성과를 10% 늘리는 부분이 누락되었고 이를 다시 무효화하지 않았기에 1953년 6월 17일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이로써 징벌적 성격의 수용 형태는 종결되었다.
3. 난민들과 서독인들의 부동산은 국영화되었다. 낮은 임대료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은 과잉채무로 인해 인민재산(Volkseigentum)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형태의 수용을 ‘냉혹한 수용’이라고 일컫는다. 비록 토지는 인민소유였지만 동독주민들에 대한 단독주택 판매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72년 호네커 당수는 남아있는 마지막 민간기업/준국유기업(9인 이상 기업)에 대한 수용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상만 이루어졌다. 겉으로 보았을 때만 보상 없는 수용이 아니었다.
 많은 동독주민들이 유지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다가구주택과 셋집을 대가 없이 국가에 넘겼다. 국가는 선물(주택)을 받기에 앞서 이들의 부채상환을 요구했다.
4. 동독은 마지막까지 주택부족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사통당은 일명

‘주말농장(Wochenendgrundstück)’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다차(Dacha)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주말별장의 운영을 승인하였고 이를 통해 지하경제의 넘치는 창조력과 조직능력을 발휘하였다. 누가 부동산등기부상 토지 소유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가능했다. 즉 국가, 서독국민, 동독국민 모두 해당되었다.

II.

동독은 재산에 대해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과는 동떨어진 자율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재산 관련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첫째, 인민재산에 대한 해석이 그랬다. 인민재산(Volkseigentum)은 매각할 수 없고 담보대상도 될 수 없다. 오직 국가의 지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인민재산은 조합재산과 정당들과 대중조직의 재산(이들은 자체 기업을 소유했다)과 함께 개인재산(das persönliche Eigentum)과 구별되는 사회주의 재산(das sozialistische Eigentum)을 구성했다. 국가의 주택건설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단독주택 건설을 장려했다. 집은 비록 국유지 위에 지어진 것이지만 개인재산에 속해서 판매, 상속이 가능하고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개인 건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집을 지은 땅은 대부분 수용된 개인재산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서독인의 토지였다.

앞서 언급한 조치들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했기에 동독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높지 않았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가가 집 또는 다차(주말별장)를 짓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사용권(Nutzungsrecht)이다. 또한 집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항상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실질적은 점유, 즉 사용권이 언제나 재산소유권 보다 중요했고 재산소유권과 별개의 것이었다. 사용권을 대여한 것이지 판매한 것은 아니었다.

서독에서는 동독에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체제의 적극적인 지지자라는 오해가 퍼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통당 동지(당원)들은 훨씬 저렴하게 자신의 뜻대로 짓거나 개조한 집에서 저렴한 세를 내고 살고 있었다. 안락한 그들의 사냥오두막도 ‘인민재산’에 귀속되어 있었다. 집주인들은 (월)세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세를 마련해야 했다.

둘째, ‘토지개혁 해당 토지(Bodenreformland)’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토지개혁 해당 토지에 대한 완전소유권(Volleigentum)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영농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즉, 앞으로도 계속 영농목적으로 활용할 때만 상속이 가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토지기금, 즉 인민재산(Volkseigentum)으로 귀속된다. 이로써 심리적인 테러로 강행된 농업부문의 집산화에는 바뀐 것이 없었다. 토지개혁 해당 토지는 지위의 변화 없이 농업생산조합으로 편입되었다.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농민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 점을 보았을 때 조합의 허구는 계속되었다. 부동산등기부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개혁 해당 토지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농업생산협동조합은 기존의 토지경계를 무시하여 토지개혁 해당 토지를 소유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3자에게 농지로 넘겼다.

호네커가 물러나고 자유선거가 있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1989. 10. 18 ~ 1990. 3. 18) 모드로총리(사통당) 하의 블록정당들의 ‘연합정부’가 세워졌다. 이 정부는 소유권 문제에 대해 세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토지개혁 해당 토지를 완전소유재산으로 인정했으며 인민재산의 판매를 허용하고 호네커 시절 이루어진 기업들에 대한 수용조치를 되돌려 처음으로 ‘반환’을 실시했다. 또한 서독과 공동으로 소유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위원회를 조직했고 소련도 자문에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자유선거로 선출된 드 메지에르의 최고 인민의회가 일을 더욱 더 진행시켰다. 그 결과 1990년 6월 15일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고 이 선언을 근간으로 세부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되었다.

다음은 4가지 중요한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1. 소련의 점령주권에 기반을 둔 수용은 더 이상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소련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당시 결정되었던 조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이를 역사적 발전 과정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인식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 차원의 보상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래 전(全)독일 의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2. 동독시기, 즉 1949년 이후는 ‘보상 이전의 반환우선원칙’이 적용된다.
3. 동독주민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redlichem Erwerb) 재산 또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반환이 조리상 불가능한 경우(예: 토지에 학교

가 지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4. 동독주민에 대한 세입자 보호 및 기존 이용권은 계속 유효하다. 1, 3, 4는 동독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2번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동독은 관련 자료의 결여로 보상건수를 추정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서독 측은 보상규모를 알 수 없기에 조약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보상 이전의 반환우선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서독 기민당에서는 보상 위주의 원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독 자민당의 입장은 달랐다. 자민당은 더 나아가 토지개혁의 원상회복을 원했다. 특히 1과 2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논쟁에 직접 참가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1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련과 동독의 정부와 최고인민의회는 토지개혁의 원상회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소련은 동독정부가 점령주권에 기반을 둔 조치들을 평가/비판하거나 수정을 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했고 이러한 원칙을 1990년 9월까지 고수했다. 소련에게 있어서는 위신과 체면의 문제였다. 동독은 토지개혁의 회복을 통한 대규모 소요를 염려하고 있었다. 토지개혁을 되돌리는 조치를 시행했다면 이는 ‘정의의 경계’를 오더강과 에르츠 산맥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오더강과 에르츠 산맥 건너편에 부동산을 잃은 사람들은 그 지역이 이제는 폴란드, 체코,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0만 건의 반환신청 중 20%만 승인되었다. 나머지 80%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보상 조치만 가능했다. 많은 이들이 반환우선 원칙이 동독 지역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이유에서 비판을 가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예외가 있는 반환우선 원칙’ 이라고 하든 ‘많은 예외가 있는 보상우선 원칙’ 이라고 하든 사실 똑같은 것이다. 동독이 하지 않은 나치들이 수용한 유대인들의 부동산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비록 동독의 세입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지만 여전히 부동산등기부에 서독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반환조치가 필요했다. 동독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치국가가 되팔기 위해 재산을 수용하는 과거 동독도 하지 않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독인의 토지가 이미 ‘냉혹한 수용’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우연에 맡겨야 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만약 냉혹한 수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프틀레마이오스왕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가? 동독인들? 서독인들? 아니면 토지를 받

환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기금이 필요했다. 기금의 규모는 180억 마르크에 이르렀고 주로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제 개별 사항에 대해 언급하겠다. 원소유자에게 반납될 국유지 위에 건축을 한 사람들은 토지가치의 절반의 가격에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토지이용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독일 민법전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토지와 부동산을 결합시켰다. 이러한 방법을 일명 보충구매라고 한다. 서독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고 있지만 소유권자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수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의(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모든 갈등 상황에서 언제나 약자에게 선매권을 주었다. 1990년 6월 15일 공동성명에서는 갈등상황을 대비해 각 지자체가 마련하는 대체 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생각이 비록 법에 반영은 되었지만 그 어떤 지자체도 대체 토지를 마련하지 않았다. 보상지급에는 두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다. 임야의 경우 1935년 가격의 3배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는 동독이 도로공사 등을 위해 수용했을 때 사람들에게 지급한 수준이다. 건축용지에 대해서는 20배를 책정했다. 또한 체감을 적용하여 10,000-20,000 마르크에 대해서는 30%, 3백만 마르크 초과 시 95%를 제했다. 토지개혁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농경지확보 프로그램(Flächenerwerbsprogramm)에서 다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지개혁 이전의 원소유주들과 농업생산조합에서 탈퇴하고 다시 농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에 판매했다. 남의 땅 위에 지어진 다차(주말별장)에 대해서는 10년간은 회수할 수 없고 1990년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평생 회수할 수 없었다. 소유주가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물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양 당사자가 동독주민인 경우였다. 동독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중요해지자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분쟁도 생겨났다.

III.

반환우선원칙을 비판하는 두 개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반환우선원칙은 부당한 처사였고 동독주민에게는 근심과 불안

을 야기시켰다.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상우선원칙을 내세웠다면 서독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서독인들은 자유선거로 선출된 동독정부가 법치국가의 질서를 무시한다고 비판했을 것이다. 서독인들이 분노가 어땠을 지는 소련점령고권 하에 수행된 수용에 대해 ‘반환 대신 보상’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을 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두번째 주장은, 반환우선원칙이 투자의 큰 장애물이었다는 주장이다.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첫째, 최고인민의회 그리고 훗날 연방하원이 중요한 투자계획이 반환우선원칙으로 인해 방해 받는 경우 반환을 제한했다(투자우선법). 둘째, 1990년 이후 동독지역의 사업체 수가 적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많았다. 규모가 큰 기업들과 슈퍼마켓은 어차피 미개발지에 회사를 차렸고 도심에 회사를 세우는 회사에 대해서만 투자제약이 있을 수 있었다. 오히려 ‘보상 보다는 반환우선’ 원칙은 투자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서독인들이 비록 수익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반환 받은 가족의 재산을 다시 가꾸기 위해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영역은 바로 농업생산조합이다.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민재산과 국유기업이 아니라 조합의 형태다. 서독의 법도 조합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자율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아니고 결국 사실상 농업산업(Landwirtschaftsindustrie)으로 변모했다. 마지막 동독정부와 서독정부는 농업생산조합을 실제 조합처럼 취급하여 조합 스스로 자율조합이나 유한책임회사(GmbH) 또는 주식회사가 될 것인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결정이라는 아이디어가 현실에서는 ‘타인결정(Fremdbestimmung)’이 되어 버렸다. 조합장들이 많은 경우 자신의 조합원들을 속였다. 조합에서 탈퇴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자들은 마을에서 집단적 압박을 받았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농업생산조합의 2%만이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다. 중견 농가 규모로 독립을 하는 조합원의 수는 매우 낮았다. 전통이 무너졌다. 농가의 자재는 너무 낙후 되어 대부분 새것으로 교체해야만 했다. 재창업농가들(Wiedereinrichter)은 조합재산에서 너무 미미한 재산을 배분 받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분배할 재산이 얼마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거의 없었다. 동독의 농업부분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농가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200ha로 서독의 4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독에서는 가족농가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반면 동독에서는 가족농가는 드문 형태이고 특정부문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한편 동일한 생산성을 가정했을 때 동독 농업부문의 노동수요가 75% 줄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 손실은 관광산업을 통해서만 보완할 수 있다.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0년 전부터 구동독지역의 지역 신문에 독자투고란에 소유권에 관한 글들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보다는 (대부분 서독출신의) 원소유주들의 불만이 좀 더 오랜 기간 표출이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큰 논란이 되는 주제는 아니다. 1994년 동독인 작가 한 명이 동독주민의 절반이 소유권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집이나 거처를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오늘날 구동독 지역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빈집, 건축용지 그리고 오래된 집들이 넘쳐난다. 동독지역의 물가가 비교적 낮고 생활의 편리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동독으로 이사를 가는 연금생활자들이 있다.

[첨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미결재산 처리규정에 관한 공동성명
(1990년 6월 15일)

독일의 분단으로 인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주민 이동 그리고 양 독일 국가의 상이한 법체계는 독일민주공화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 다수와 직결된 수많은 재산권 관련 문제를 일으켰다.

현 재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양 독일 정부는 양측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 그리고 소유에 대한 권리는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현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기본 원칙이다. 이를 통해서만 향후 독일의 법적 평화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양 독일 정부는 다음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다.

1. 점령법과 점령주권에 기반을 둔 수용(Enteignung)(1945-1949)은 더 이상 원상회복될 수 없다. 소련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당시 결정되었던 조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이를 역사적 발전 과정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인식한

- 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 차원의 보상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래 전(全)독일 의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2. 신탁행정, 토지소유와 기업운영과 기타 재산에 대해 취해진 유사한 제한 조치들은 해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산이 탈출(Flucht)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해 국가로 귀속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다시 부여한다.
 3. 수용된 토지재산은 원칙적으로 a)와 b)의 경우를 참고하여 이전의 소유주나 그 상속자에게 반환한다.
 - a)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복합적인 주택 및 거주단지 건설에 사용되었거나, 사업 용도로 전환되었거나, 새로운 기업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 유형과 목적이 변형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안의 성격상 원주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유효한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
 - b) 독일 민주공화국 국민이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물적 사용권을 정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유사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해주거나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전 소유주에게 사회적으로 합당한 상쇄책을 취해야 한다. 국가 신탁기관에 의해 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 c) 이전 소유주, 또는 그 상속자에게 반환 요구권이 있는 한 반환 대신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가치변화를 상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4. 제3호 규정은 과거의 권한자 혹은 권한자의 위탁을 받아 관리되다가 경제적 강압에 의해 인민소유로 이전된 주택 토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본 성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권 및 기존 이용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으며 이 권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의 해당 법에 의해 규정된다.
 6. 대리 운영되던 기업에는 기존의 처분권 제한은 해제되고 소유주가 자신의 기업재산을 넘겨받는다. 1972년 인민소유로 이전된 기업이나 지분에는 1990년 3월 7일의 민간기업 설립 및 활동과 기업참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제19조 2항 4문이 다음과

- 같이 해석된다. 국가의 지분은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기업에 매각될 수 있다. 즉, 매각 결정은 관할관청의 재량권에 달려있지 않다.
7. 1949년과 1972년 사이 몰수에 의해 인민소유로 이전된 기업이나 지분은 기업의 가치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기업 전체 혹은 기업 지분 혹은 기업 주식의 형태로 이전의 소유주에게 반환된다. 이는 이전 소유주가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규정이 요구된다.
 8. 사용권을 포함한 재산 가치가 부정행위(예를 들어 매입자의 권력남용, 부정부패, 강압, 협박 또는 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권리 취득은 보호 가치가 없으며, 무효화되어야 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3호 b)가 적용된다.
 9. 법치국가원칙에 배치되는 형법절차에 따라 재산 몰수가 이루어졌다면, 독일민주공화국은 사법적 형태의 절차를 거쳐 이 상황 수정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0.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이 소지한 과거 예금해지채권(Altguthaben-Ablösungsanleihe)에 대한 지분권(Anteilrecht)은 금리까지 포함해 1990년 후반기 - 즉, 화폐교환 이후 - 에 지급된다.
 11. 지불거래에 아직도 남아 있는 외환 제한은 화폐, 경제, 사회동맹의 발효와 함께 폐지된다.
 12. 공법단체 청산법(Rechtsträger-Abwicklungsgesetz)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관청이 신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동독 지역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공법상 법인의 소유 재산은 권한자 혹은 그의 법적 후임자에게 이양된다.
 13. 재산 정리에 대해
 - a) 독일민주공화국은 필요한 법지침 및 절차 규정을 즉각적으로 마련한다.
 - b) 독일민주공화국은 국민들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장소를 알려야 한다. 신청기간은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 c) 보상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은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독립적인 보상기금을 마련한다.
 - d) 독일민주공화국은 제13호 b)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과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수 없다. 단, 당사자들 간에 반환을 고려하지 않

거나 반환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이다. 과거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 10월 18일 이후에 매각된 토지와 건물은 재검토 대상이 된다.

14. 두 정부는 각각 전문가에게 구체적 사항을 해결하도록 위임한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슈뢰더 박사님 발제 감사합니다.

생생한 본인의 경험까지 포함한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시피, 당시 동독에서 2차대전 이후 소련의 주둔 이후에 있었던 토지개혁 그리고 동독 정부에 의한 토지개혁 등 그리고 대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알려진 것과 실제 운영에서 토지등기부와 관련된 실제 소유주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유자들 세입자들의 문제까지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남북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북한의 현실이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한 형식적인 내용과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실간의 차이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될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측 김영훈 박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입니다.

우선 이 중요한 회의를 개최해서 저한테 발표자리를 마련해 주신 통일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귀중한 자문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 독일에서 여기까지 오신 독일 측 자문위원들 그리고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북한지역 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농장의 사유화와 민영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발표를 마친 후에 독일측 전문가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지역 농장 사유화 및 민영화에 관한 기본인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1. 북한의 집단농장

- 북한의 농촌은 집단화된 대규모 농장(협동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동농장 : 리 단위로 통합된 공동소유, 공동운영의 집단농장으로서 북한 농촌의 생산 및 생활공간(공유, 공동운영)
 - 국영농장 : 토지개혁 및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국유화된 농장으로, 농사시험장, 채종농장, 종축장, 축산전문농장 등으로 구성(국유, 국영, 도영)
 - 종합농장 :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의 모든 협동농장과 농업관련기관, 기업소를 통합하여 설립한 대규모 농업종합기업소(국유, 국영)

- 협동농장
 - 협동적 소유, 협동적 경영관리를 기초로 하는 집단농장
 - 농업생산, 농산물분배, 신용 등 농촌의 경제활동과 행정, 교육, 복지, 문화 등 주민의 행정·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관리하는 농업농촌조직체.
 - 1950년대 말 북한 농업의 집단화(협동화)가 완료되었을 때 3,700여 개소에 달했으나, 도시화 진전, 농장 합병, 국영농장 및 종합농장 전환 등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3,000여개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
 - 북한 전체 경지의 90% 이상을 차지.

- 국영농장(혹은 국유농지)
 - 국유, 국영을 기초로 하는 전문농장
 - 토지개혁(1946), 농업집단화(1953~58) 과정에서 일부 농지를 국유화하여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장기업소에 위탁
 - 채종농장, 종축장, 원종장 등 종자와 종축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공급하는 농장 (대개 각 군마다 1개소)

- 가금, 돼지, 염소, 타조 등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축산전문농장(공장)
 - 과일, 묘목, 공예작물 등 특수한 작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장
 - 농사시험, 종자생산과 증식을 목적으로 농업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농장
- ※ 이외에 공장기업소, 각급기관에 '원료기지' 나 '부업농지' 로 할당된 국유농지가 있음.

○ 종합농장(郡국영농장)

- 정책적 근거: 협동농장을 종합농장으로 재편·통합하는 것은 농업생산수단의 국유화, 농업의 공업화, 농민의 노동자화를 지향하는 북한 농업시책의 발현.
- 종합농장 설립의 물적 토대: 1960~70년대 초반까지 북한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농자재와 농산물의 순환이 계획대로 기능
- 국유, 국영을 기초로 하는 대규모 집단농장
- 북한경제가 발전도상에 있던 1960~70년대에 일부 지역의 협동농장을 재편하거나 군 단위로 통합하여 국유·국영의 시범적 종합농장으로 편성.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를 주축으로 군 내 모든 협동농장과 농업관련 기관 및 기업소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농기업으로 전환한 형태 (함경북도 선봉군종합농장, 량강도 대흥단군종합농장, 황해남도 통연군종합농장(이상 1964년), 평안남도 속천군농업연합기업소(연도 미상) 등)

〈표 1. 북한의 집단농장〉

구분	협동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
경지	170만 ha	7만 ha	9만 ha
기능	식량 및 농산물 생산	종자, 종축, 축산물, 특수작물 생산	식량 및 농산물 생산 특수작물 대규모 생산
종류	-	채종농장, 종축장, 원종장 전문농장(과일, 담배, 양묘) 축산농장(가금류, 돼지, 염소)	일반 농산 종합농장 전문종합농장(과일, 담배)
관리	공유에 기반 - 협동경영	국유에 기반 - 국영, 도영	국유에 기반 - 국영
소득분배	배분과 국가수매	임금지불과 국가수매	임금지불과 국가수매

○ 기타 특수 국영농장

- 기존의 협동농장을 국영화하거나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국영화
- 특수작목 전문종합농장: 과일, 담배 등 특수한 작목과 특수 계층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목적으로 국영화한 농장(평양 만경대국영농장(연도 미상), 황해남도 과일군국영농장(1967년), 4.25담배농장, 국영5호농장, 국영8호농장, 국영9호농장 등)
- ※ 몇 개 군(郡)을 대상으로 종합농장(군郡국영농장)을 설립한 이후 경제의 장기침체와 '정부공급부족' 발생으로 추가적인 국영화에 장애 발생 - 1990년대 식량위기 이후 자력갱생이 일반화되면서 각각의 집단농장 간 차별성이 약화됨.

2. 협동농장 보유재산의 소유권과 이용

- 협동농장의 모든 재산은 명목상 협동적 소유(공유), 전인민적 소유(국유), 개인소유(사유)로 구성
 - 협동적 소유: 협동농장 고유의 토지, 시설 및 생산수단, 영년생 작물
 - 전인민적 소유: 국가에서 농장에 배속시킨 대형농기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 문화 및 생산시설, 국가가 지어준 주택
 - 개인 소유: 농업협동화 이전부터 상속된 살림집, 소가축과 농기구, 개인 분배몹, 텃밭 산출물, 부업 생산품
- 농장에 배속된 모든 보유재산은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농장과 농장원이 배타적으로 이용
 - 공동이용: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 사회문화시설
 - 개인이용: 살림집, 텃밭, 개인소유 가축과 물품
- 국유재산과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농장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
 - 농장원 합의 처분: 토지 이외의 협동적 소유 재산
 - 국가 처분: 모든 토지, 국가에서 농장에 배속시킨 농기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 문화 및 생산시설

- 개인 처분 : 개인 소유 재산

○ 협동농장 보유재산의 관리

- 토지: 1960년 전국적으로 작성된 1 : 50,000 토지도면을 기본으로 각 협동농장별로 '토지도면' 과 '토지대장' 을 작성하여 관리
- 재산: 토지, 시설, 장비, 농기계 및 농기구, 역축, 살림집, 사회문화시설 등 모든 재산 보유 및 변경 내용을 매년 협동농장 부기장부에 등록하여 관리(채권, 채무, 생산, 자재조달, 분배상황도 관리)

〈표 2. 협동농장 보유재산의 소유 및 이용〉

구분		재산 내역	법규정
소유권	공유	협동농장 고유의 토지, 시설 및 생산수단 영년생 작물	민법 제45조 제2호, 제48조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제5조
	국유	국가에서 농장에 배속시킨 대형농기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 시설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 살림집	민법 제49조 민법 제49조 민법 제50조
	사유	농업협동화 이전부터 상속된 살림집 소가축과 농기구 개인 분배품, 텃밭 산출물, 부업 생산품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제7조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제7조 -
이용권	공동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 사회문화시설	민법 제42조
	개인	살림집, 텃밭 개인소유 가축과 물품	토지법 제13조, 농업협동농장기준규약 제6조 -
처분권	공동	토지 이외의 협동적 소유 재산	민법 제42조, 제43조
	국가	모든 토지 국가에서 농장에 배속시킨 대형농기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 문화 및 생산시설	민법 제55조, 토지법 제13조 민법 제 49조 민법 제 49조
	개인	개인 소유 재산	-

〈표 3. 북한 협동단체 토지소유권 관련법령 규정〉

법률	내용
민법 제37조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
토지법 제11조	협동단체 소유토지는 구성원의 집단적 소유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
토지법 제13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처분권)
토지법 제12조	국가는 협동단체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협동소유 토지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 가능

3. 북한지역 농장의 민영화(사유화)

3.1. 민영화(사유화)의 이해

- 북한 농장 민영화의 두 차원
 - 보유재산의 사유화
 - 새로운 농업경영체(농가, 농기업, 조합 등) 설립과 등록

- 농장 민영화의 목표와 원칙
 - 목표 : 공정한 재산권 처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의 창설
 - 원칙 : 농장 구성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민영화 과정에서 농장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

- 농장 자산 사유화의 초기조건
 -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법적 소유형태 상이
 - 국영농장의 재산은 법률적 실질적으로 국유 (일부 국영농장의 운영은 협동농장과 유사)
 - 협동농장 농지소유는 법률적으로 농장원의 공유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
 - 북한 토지개혁의 합법성 여부
 - 북한 농업협동화(집단화)의 합법성 여부
 -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 법규의 인정 여부
 - 북한 토지개혁 이전 구소유권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확보

3.2. 협동농장의 사유화와 민영화 방향

- 현행 인식과 논의
 - 구소유권자에게 반환(보상)
 - 일괄 국유화한 후 처리
 - 일부 국가 수용 일부 구성원 분배(임대, 매각)
 - 모두 구성원 분배(임대, 매각)

- 현행 북한 법규에 대한 고려와 판단
 - 북한 토지개혁의 합법성 판단 여부
 - 북한 농업협동화(집단화)의 합법성 여부
 - 북한의 현행 소유권 관련 법규의 권능 인정 여부
- 북한 토지개혁의 합법성이 부인될 경우
 - 토지개혁 이전 구소유자에게 반환과 보상 가능. 그러나 이 경우 공부(公簿)의 뒷받침이 없어 실제 구소유자에게 반환과 보상 곤란
 - 이 경우 국가가 일괄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권 향배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하며 시장경제 개편 지연.
- 토지개혁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협동화(집단화)의 합법성이 부인될 경우
 - 협동화 이전의 소유권자에게 반환 및 보상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부(公簿)의 뒷받침이 없음.
 - 이 경우에도 국가가 일괄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권 향배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하며 시장경제 개편 지연.
- 북한 토지개혁과 협동화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북한의 현행 소유권 관련법(헌법, 민법, 토지법, 협동농장규약 등)의 권능이 인정될 경우
 - 협동농장 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용
 - 협동농장 내 개인재산(주택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인정
 - 협동농장 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농장 구성원의 권리(이용권)와 국가의 권리(처분권)를 동시에 인정
 - 협동농장 공유재산은 '신속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를 거쳐 국유화 몫과 구성원 분배몫을 결정해야 함. (고려사항 : 구성원 이용권과 국가 처분권의 경중, 구성원별 기여도, 북한지역 비농업 근로자와의 형평성, 북한지역 농민간 형평성, 남북한 농민간 형평성,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 북한지역 농업의 경쟁력 등)

○ 국유화 몫의 처리

- 편입 재산의 가치에 대한 구성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
- '국유화기금'에 편입 후 국유재산 사유화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
- 국토이용계획에 의거하여 국유토지기금의 토지를 구분하여 관리.
- 농용지는 경영규모 유지에 관한 조건부 임대와 매각을 통해 사유화.
- 기타용지는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공개매각

○ 구성원 분배몫의 처리

- '농장구성원분배기금'에 편입 후 농장 구성원의 총의로 분배 결정
-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의 '농업구조조정법'과 같이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법규가 미리 제정되어야 함.
- 분배 형태, 임대차 형태, 경영체 형태의 자율선택(정보와 법률지원 제공)

○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창설과 등록

- 한국의 현행 '민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통일 후 북한지역 농장에 적용될 '북한지역 농업구조조정 및 지원법 (신설)' 등에 의거해 설립

3.3. 국영농장의 민영화

○ 국영농장은 협동농장과 법적으로 다른 형태임

- 소유 형태는 국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노동자 신분임.
- 국영농장의 법적인 형태를 중시한다면 농장을 우선 국유화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국영기업과 함께 민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이에 해당되는 국영농장은 종축장, 채종농장, 원종장, 시험농장 등임.

○ 협동농장과 사실상 구별할 수 없는 국영농장도 있음. 이에 해당되는 국영농장의 민영화는 협동농장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일반 농산 및 축산 국영농장

- 전문 작목을 재배하는 특수 종합농장
- 군국영농장(군종합농장)
- 다만 군종합농장 내 농업기관 및 기업소는 국유재산의 민영화 방안에 따라 처리

3.4. 제도 마련

○ 국유농지 및 국영농장 관련 제도

- 국영농장 자산의 관리 및 사유화와 관련된 법규 제정
- 신규 편입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를 규정하는 법률에 국영농장 부문을 따로 규정
- 국영농장의 사유화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국유재산 사유화 관련 법률에 국영농장 사유화를 규정

○ 협동농장 관련 제도

- 협동농장의 자산 평가, 협동농장 자산의 소유권 정리
- 협동농장 자산의 분배방식 및 절차
- 협동농장의 청산 절차 등

○ 신설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도

- 북한 농장의 후속 경영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신설 농업경영체의 적응을 위한 지원은 현행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가능함.
- 현행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 통일 후 북한지역 농장에 적용될 '북한지역 농업구조조정 및 지원 법률' 신설

○ 북한지역 농업구조개혁 과정에 단기 지원조치도 필요함.

- 농업경영체의 형태, 선택 가능한 농장개편 방향, 농민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안내, 홍보 브로셔)
- 농업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농민교육 프로그램을 가동
- 농장총회에서 농장의 미래에 관해 충분히 토의한 후 구조개편 방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
- 북한지역 농업경영체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김영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북한 지역의 특히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을 위주로 한 농업의 민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훌륭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김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통일과 관련된 논의가 있거나 토지소유권, 원상회복 또는 보상우선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준비는 해야되지만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불필요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김박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위주라는 것이고, 물론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양국의 정부에서 주관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 한국측 참석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주제발표로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주제 발표로 토지평가관리회사의 함만 사장님께서 농지 및 소유질서 재형성과 관련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데트레프 함만 토지평가관리회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무엇보다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재편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미 슈뢰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첩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에서 4개의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 두 번째 1989년 이후 소유권의 재편, 세 번째 시기는 토지매각

관리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1992년부터 업무를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통일 직후에 이뤘던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발표를 시작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토지에 대해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동독 당시에 토지를 사용했던 실사용자들의 문제 소유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뢰더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민주적 토지개혁에 대해서입니다. 1945년 9월에 국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100헥타르 이상의 모든 토지와 재산에 대해서 보상조치 없이 수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임업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 졌죠.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소위말해서 집과 마당에서부터 쫓겨났다는 독일의 속담처럼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에 소련 점령 지역에서도 완전히 그 지역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구호가 있었으면, 소련 점령 주둔 주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련주둔군은 항상 어떤 뒤에 있었습니다. 항상 담당청이 일을 개입했었습니다. 이걸 소련주둔군들이 원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주둔군이 여기에서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상 저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죠. 말씀드렸다시피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와 재산에 대한 수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00헥타르 미만의 토지에 대한 수용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강제 집산하가 실시되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치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토지개혁 기금이 당시 이주민들에게 배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땅들은 동독에 속한 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평균 영농규모가 많지 않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10헥타르였습니다. 사실상 8헥타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나 예전에 있었던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 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8헥타르의 작은 규모로는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언급할 것은 대영농에 대해서입니다. 100헥타르 미만이라고 하지만 80~90헥타르까지 되는 대영농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계도 돌려야 했고 가축도 먹여야 했으니 어려움을 겪었겠죠. 토지개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영

농들의 경제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강제 집산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분배되지 않은 토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기금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영인민농장으로 넘겨졌습니다. 국영인민농장은 인민재산이고, 국가재산입니다. 국가가 소유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소영농주들에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토지들의 소유주가 국가에서 소영농주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소영농주들이 누릴 수 있었던 상대적 자유의 시대는 끝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리적 강압에 의해서 결국은 독립적 지위를 유지했던 농부들도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8~10헥타르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소영농주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소위 말하는 노동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상속만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속받는 사람이 영농 목적으로 쓸 때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9년 이전에 농업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요. 농업생산조합은 4,500개가 있었고 국영인민농장은 약 400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치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영인민농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소유농업용지는 220만 헥타르가 있었습니다. 이는 농업용지의 35%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리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지도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 가지 헥타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플라워슈트케라고 하는 독일어 부분입니다. 즉, 총 1080만 100만단위입니다. 헥타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받은 인민소유이고 나머지 받은 개인소유 또는 노동목적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510만 헥타르의 개인소유 토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속 가능하고, 판매 가능하고, 임대 가능한 점을 봤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1989년 이후에 소유권 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독에는 어떤 매우 작은 농가들이 있었고요, 약 20헥타르의 규모 지금 동독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동독에는 규모가 좀 더 컸었습니다. 각 농장 규모 당, 그리고 생산력이 매우 높은 농업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종사자들

이 85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금 현재는 15만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독과 서독 간에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재고할 필요가 있었고 노동력을 감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재건을 위한 보조금 등이 있었고, 적응을 위한 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독직원의 부분에 있어서 많았다고 할 수가 있었겠지만 유럽 집행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럽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럽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회원국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1989년 이후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원래 의도는 사실상 농업구조의 조치를 위해, 재정조달을 위해서 민영화를 통해 얻은 수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판매를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510만 유로 정도의 수익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유로 정도의 수치가 있지만 사실상 기록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드시피 결국 남아있는 40억으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신탁청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법적인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실업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토지들이 신탁청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3차 실행법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시행령이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제4차 시행령도 있었고요. 이러한 4차 시행령은 안보관련 건물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던져진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국유화된 토지를 어떻게 시장화하는가, 어떻게 시장경제에 맞게 재판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려진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산귀속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3차 시행령에 따라 이런 것이 이루어 졌고 굉장한 심사숙고를 통해서 제3자에게 토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놓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주가 직접 토지에 살거나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토지로부터 매우 멀

리 떨어진 곳에서 살거나 아니면 이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들은 법적 민영화에 대한 원칙들입니다. 여기서 이미 던질 수 있는 토론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당한 조치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당한 조치는 슈뢰더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독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서독으로 이주할 경우에 부당한 경우를 당한 그런 것들이죠. 법적조치를 따름으로써 자신들이 부당한 경우를 당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배상 및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취득 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폴 선생님께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의 규정은 현재 정부, 연합정부들이 소유주들에게 다시 한 번 배상 및 보상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주에 의한 토지취득을 다시 한 번 인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도는 민영화였습니다. 민영화가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부분보다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및 산업과는 다른 점입니다. 원래 의도는 농업의 민영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진행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시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를 빨리 했는데 아직 토지는 마련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결국 토지에 대한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민소유에서 개인소유로 넘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토지를 시장에 적합하도록 쉽게 장기적으로 시장성을 갖도록 할까 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탁청 설립은 90년 1월이라고 되어있지만 3월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 토지매각관리회사에서 작성한 수치이기 때문에 잘못 나와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토지매각관리회사도 1992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온지 얼마 안 돼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설립초기부터 계셨던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탁청으로부터 다음에 관리회사 설립되는 그러한 연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두 개의 단계를 겪었습니다. 은행에 소속이 되기도 했었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임업과 농지에 대한 민영화를 담당하는 회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연방재무부를 통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표로 나타

내자면 임대 및 관리입니다. 일단 그 토지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배상 및 보상법에 따른 우대판매입니다. 물론 첫 번째 단계에도 우대판매라는 것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대판매는 종료가 되었고, 원래 원소유주에 대한 우대판매 형태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써 놓은 것들은 독일 내에 거래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농지 임대차 토지에 관련된 거래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항상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형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센-안할트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중동국가가 개입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단계입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일어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기임대가 목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를 할 만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가, 사업계획을 세우는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숨길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임대하는 사람, 임대 계약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떤 컨셉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한다든가 등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가 약속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사업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후에 어떤 규정도 지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인들이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정권자들은 비즈니스 플랜을 그냥 제출만해라고 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토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다지 투명성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 매우 투명성이 없었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수정해야할 상황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더 경제성을 가질 지 사업운영을 잘할 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것은 왜 판매가 좋지 않고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력을 통한 건전화라든가, 지금 자본투입이 가능하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변동도 방지할 수가 있구요. 일단 무엇보다도 토지매각관리회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여기서 가격형성 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선발기준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대임대차는 허용되지 않았고 거주지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거주지에 있어서는 이 당시 거주지에 주어진 조건을 따르는 것이 좀 더 선호되었습니다. 영농운영자 능력이 중요했고, 일자리 규모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단 민영화 그리고 이전 단계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우대판매를 통해서 보조금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럽보조금의 제한선까지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어떤 틀을 제공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토지가 그에 걸맞는 시장가격과 시장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유럽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토지 매각관리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가격의 35%까지 판매가격을 인하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결국은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판매보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 예를 들어서 구매자들을 대하게 되는 단계, 시장화의 시장경제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공모를 했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모든 매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 관련된 논란과 갈등도 있었죠. 그래서 모든 장기 임차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상한선과 이 민영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부터 토지를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민영화 원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구조를 확실히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92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요. 예를 들어서 1999년 당시에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매우 큰 토지를 그대로 한번에 임차를 해버리고, 18년 후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시장에 다시 한번 진입하도록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상한선을 두게

된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던 사람은 임대했던 토지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뉴커머들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직접전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은 임차인에게만 결국 구매 권리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결정이 여러 개가 된 것입니다. EU 집행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비교가능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가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가격을 수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임차인은 월말 더 이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결국은 얻게 되고 구매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토지를 양도받게 되는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정과정에 있어서 좀 그래픽컬하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연방 및 주법이 있고, 우리 독일에서 제시하는 정치적인 정책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유럽 연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책적 기본조건을 위해서 민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조건은 2009년부터 연정합의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반적 업무를 종결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매우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9월 22일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고 다시 한번 재무부를 통해서 다른 수치들이 제시될 것 같고 어쩌면 이 기간이 좀 더 앞당겨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제시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변경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던 우대판매법이 관련된 것입니다. 이전 소유자의 취득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 이 규정은 종료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소유자 문제가 완전히 다 이런 사례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되었던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민영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 임차인에 대해서 그 상한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2025년까지 업무를 종결하려면 언젠가는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도 하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저희의 일상

업무 중의 하나는 높은 가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0년전 보다 5배나 많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은 가격이 형성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일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선호되는 기후적 조건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농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금융시장의 전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융상품에서 더 이상 상품성을 찾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토지매입 등에 눈길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각 연방주 간에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10여개의 주가 있고, 동독에서 2~3개 연방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양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재무부가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었는데요. 다시한번 비교하기 쉽도록 수치들을 나타냈습니다. 1991년 당시에 약 11,000개 영농수가 있었고 동독시절도 그대로 이어진 것인데 오늘날 약 두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독, 우리가 정부 및 국가 측에서 판 양도 구매에 대한 상한선을 정한 것이 결실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종사자의 자세한 수치도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종사자 수가 매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독에 농가들의 생산성은 매우 크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토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독 농가와 서독의 농가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어떤가하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서독의 생산력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구동독과 구서독이 비교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봤을 때는 동독이 매우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력, 생산조건은 동독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EU의 농업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활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해 드린 내용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질문 있으시면 기꺼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임업 분야 소유권 재편

테를레프 하만 - BVVG(토지매각관리회사) -

제3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 강연

2013. 6. 27/28

SCD C



농·임업 분야 소유권 재편

- I.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
토지개혁(1945년~1949년), 집산화(1949년 이후)
 - II. 1989년 이후 소유권 재편
법적 민영화, 최초 조치
 -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토지의 장기임대(초기), 토지의 판매 및 임대 병행, 토지의 판매(후기)
- 여론(餘論): 구 동독지역 연방주 농업상황

SCD C



I.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

일명 '민주적 토지개혁'

- 1945년 9월의 명령:
보상조치 없이 100 ha 이상의 토지와 모든 재산 수용/몰수.
- (1952년 강제 집산화가 실시될 때 까지)
100 ha 미만의 토지에 대한 수용은 실시되지 않음.
- 수용된 토지는 토지개혁기금으로 귀속.

페이지 2



I.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

- 농업 용지의 30%,
영농 7,160개(및 소위 '전범자들의' 영농 4,537개)
- 총 330만 ha의 토지 재분배,
이 중 2/3가 농부, 이주민, 소농에게 분배.
- 평균 영농규모는 10 ha 규모로 경제성이 부족하였음
사료나 기계에 대한 외부 의존성

페이지 3



I.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

- 재분배되지 않은 토지(토지기금의 약 1/3에 해당)은 국영인민농장(VEG)으로 넘겨졌음.
- 1952년부터 강제 집산화 시작, 농업생산조합(LPG)의 설립.
- 즉 토지개혁의 '용익권자(Nutznießer)'는 자신들의 토지를 반드시 LPG에 귀속시켜야 했고 결국 조합원이 되었음.
- 이제껏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했던 농부들도 (특히 물리적 강압에 의해) 토지를 양도해야 했고 마찬가지로 LPG 조합원이 되었음.
- 기존의 소유자들은 명목상으로 소유자 지위를 유지했으나 더 이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음.
- 일명 노동소유(Arbeitseigentum)로 변경(매각 불가, 농업 목적으로 활용 시에만 상속 가능, 그 외의 경우 토지기금으로 귀속)
- 1972년 강제 집산화 종료.

페이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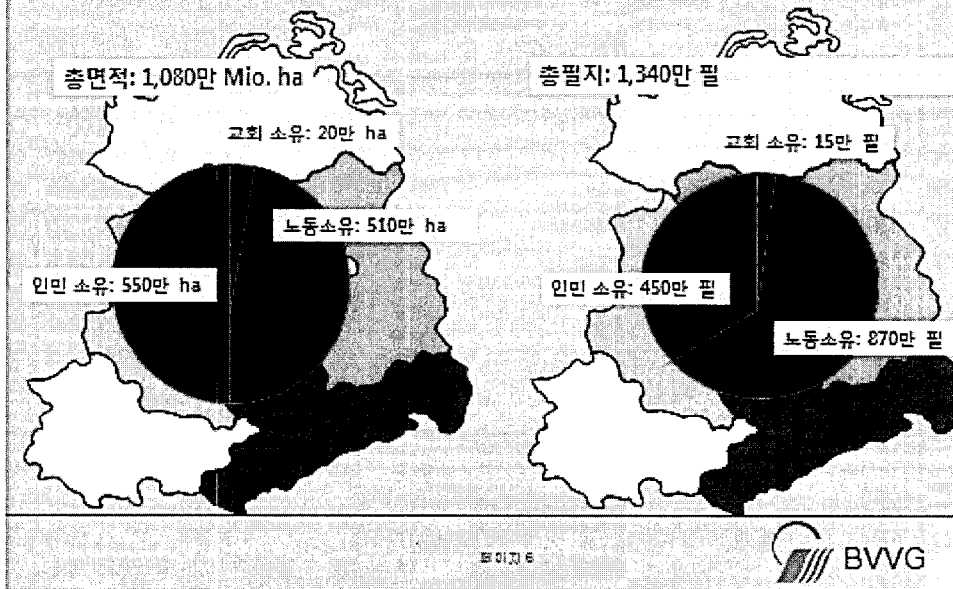
I.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 1989년 이전 농업상황

- 농업생산조합(LPG) 4,500 개
- 국영인민농장(VEG) 515 개
- 국가소유 농업용지 220만 ha(농업용지의 35%에 해당)
- 국가소유 산림면적 200만 ha(산림면적의 90%에 해당)

페이지 5



I. 1945년 이후 소유권 재편 - 1989년 이전 농업상황



II. 1989년 이후 소유권 재편 - 농업상황

- 서독 가족농(약 Ø 20 ha)
- 동독 대규모 영농구조(농업생산조합/ 국영인민농장)
(농업생산조합 약 Ø 3,500 ha -축산 LPG는 토지 없음)
- 노동력 과잉(1990: 비농업 부대사업 영역을 포함한 종사자 850,000 명,
2010: 종사자 148,000 명 또는 노동 단위체 98,000 개)
- 건물 및 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
- 유럽시장의 수요에 맞는 공급의 조정 필요.

표이그 7



II. 1989년 이후 소유권 재편 - 재정 상황

- 동독과 서독간의 생활수준 격차(임금 및 집세 등)를 조정하기 위한 상당한 재정수요
- 노동력 감원, 재교육 및 조기은퇴에 따른 비용
- 영농의 재건 및 신설을 위한 포괄적 투자보조금(EU 재정을 통한 지원 포함)
- 구 농업생산조합 및 국영인민농장에 대한 조정보조금
- 사유화를 통한 수입을 농업인프라를 위해 지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페이지 8



II. 1989년 이후 소유권 재편 - 초기의 조치

- 신탁청(THA)의 주업무는 구동독(DDR) 국영경제의 민영화
- 구동독 지역의 붕괴된 판매시장을 고려할 때 산업분야의 민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했음
- 하지만 농업부문은 상황이 달랐음
- 몰락한 계획경제를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민재산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켜야 했음
- Option: 원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투자자에게 매각

페이지 9



II. 1989년 이후 소유권 재편

- 1990년 6월 17일자 신탁법과 신탁법 시행령을 통해 인민재산의 상당 부분이 신탁청 소유로 전환되었다
- 농업 및 임업 용지(1990년 8월 29일자 3차 시행령), 군사 부지(1990년 8월 22일자 2차 시행령), 국가안전부 부지(1990년 9월 12일자 4차 시행령)
- 신탁법에 따라 인민소유기업(VEB)은 신탁청이 지분을 소유하는 자본회사로 전환되었다. 인민소유기업이 산업 및 상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한책임회사(GmbH) 및 주식회사 형태의 자본회사로 이전되어 신탁청은 토지에 대한 간접적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페이지 10



II. 1989년 이후 소유권 재편 - 원칙과 법률

- 고유 관청은 1991년 3월 22일자 재산귀속법(VZOG)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록이 남아 있는 인민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토지 매각을 실시할 수 있었다.
- 신탁법 제1(6)조에 의거한(즉, 농업상의 경제적, 환경적, 구조적 및 및 소유권상의 특성을 고려한) 민영화
- 배상 및 보상법(EALG)과 토지취득규정(FIEnwV)에 의거한 우대 판매
- 토지가 판매되기 이전까지: 임대 및 자체 운용(구 인민소유기업)을 통한 합법적 임시운용
- 농업구조조정법(LwAnpG): 농지에 대한 처분권을 규정하고 재산권 분쟁의 합법적 처리 조정

페이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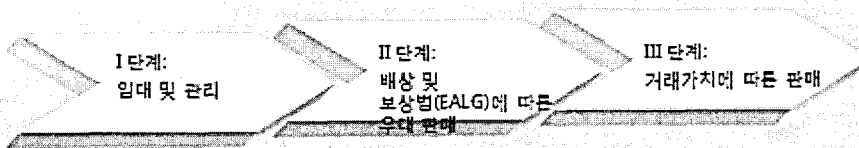
II. 1989년 이후 소유권 재편 - 국가소유에서 민영화로

- **신탁청 설립(1990년 1월)**
 - 목표: 인민재산 민영화
 - 농업부문 민영화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업
-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설립(1992년 7월)**
 - 목표 1: 농업 및 임업 분야 국가재산 민영화
 - 목표 2: 재산의 반환 및 귀속
- **연방재무부를 통한 토지매각관리회사 감독**
 -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와 협력을 통해

표 17 12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안정화 • 토지운용 확보 • 산림운용 확보 • 1992년~1996년 판매 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건전화 • 폭넓은 소유권 기반 마련 • 새로운 사유 산림구조 개발 • 1996 - 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지시장에서 농지 판매 • 산림(임여) 면적 판매 |
|---|--|--|

표 17 13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신속한 판매 보다는 장기임대 우선

- + 영농의 토지이용에 대한 낮은 자본수요- 건물과 기계에 대한 자본투입 가능
- + 재정을 통한 농업 및 영농구조 건전화 및 농업 전문지식을 통한 건전화
- + 토지시장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가격변동 방지
- + (소량의) 소유토지를 안정적인 대출담보로 보존
장기적인 활동에 따른 높은 사용료 및 관리비(<=> 토지의 가치변화)

페이지 14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I 단계 - 임대

- 목표: 경쟁력 있는 영농의 안정화
- 방법: 시장가격 - 투명성 - 공정성
- 형태: 장기임대(12~18년)
- 기반: (최소) 4개년 사업계획

페이지 15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임차인 선발기준

- 자체운용(전대자(轉貸借)는 허용되지 않음)
- 거주지
- 영농 운영자의 능력
- 계획한 투자/일자리 규모
- 농업구조에 미칠 영향
- 토지를 수용 당한 원소유자에 대한 이해조정
- 이전 영농의 생존보장

페이지 16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II 단계 - 원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우대 가격에 판매

- 목표:
 - 폭넓은 개인 소유권 형성
 - 영농의 안정화
 - 토지개혁을 통한 재산몰수 보상
- 원칙:
 - 유럽연합 보조금 제한선(시장가격의 35%)까지 판매가격 인하
 - 영농당 최대 200 ha

페이지 17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판매에 대한 보조

이전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및 농업 장려프로그램의 연계

공공재정의 적절하지 못한 할당으로 이어질 위험

- '적절하지 못한 농장'에 공공재정 투입
- 농장들이 '적절하지 못한' 곳에 재원을 사용

목표상충 및 불공정 사례의 발생 가능성

높은 금액의 보조금으로 인한 사기 및 부패 발생 가능성 증가

十 토지판매 촉진

표 19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특별한 계약조건...

- 판매금지:
 - 20년 동안(현재 15년)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소멸되고 토지는 토지매각관리회사로 반환된다.
- 목적구속 및 인적구속:
 - 용도변경 및 전대(轉貸) 불허
- 자본회사의 경우 소유자 구조를 문서상으로 확정
 - 소유자 구조 변경 > 25 % - 계약소멸

표 19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III 단계 - 농지의 거래가격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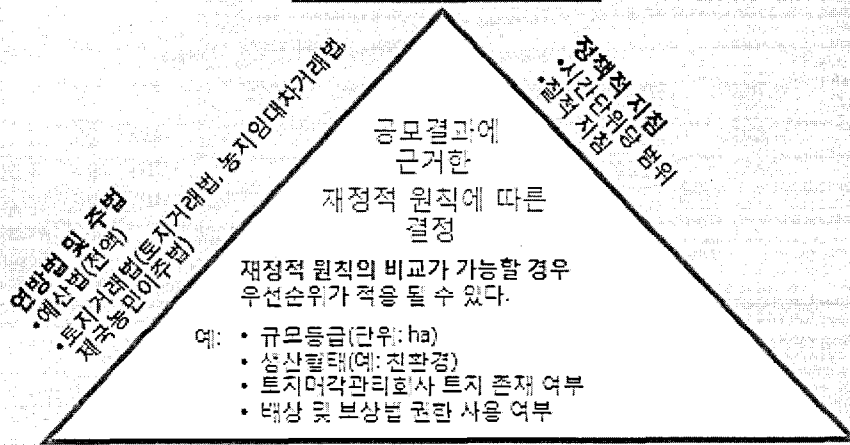
- 개별 양도 이전 공모시행의 원칙
- 공모절차
 - 인터넷, 광고, 보고서
- 직접양도 시, 비교가격제도에 따른 평가
- 어떤 조건이 검증 되었는가?
 - 일자리
 - 투자
 - 용도변경 제한

페이지 20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VVG) 업무

토지 민영화 기본조건



유럽연합법

- 차별 금지
- 보조금 지급 금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

페이지 21



III.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매각관리회사(BWVG) 업무

현재의 정책적 기본조건

- 2009 연정합의 사항
"... 2025년까지 전반적 업무 종결 ..."
- 2. 토지취득변경법
원소유자의 취득 우대
- 2010 민영화 원칙
관할 연방주의 농업구조 감안
장기 임차인에 대한 판매 상한선: 450 ha
- 높은 가격에 대한 비판: 글로벌 추세
- 연방주의 취득의향
- 현재까지 연방이 55억 유로 수입

표 10 22



여론(餘論): 구 동독지역 연방주 농업상황

면도/ 5ha 이상의 영농기업	1991	2010
영농기업	11,158	22,256
평균 규모 (ha 면적/영농)	462	249
종사자수	850,000	150,000

- 현저한 생산량 증가(밀: 1989년: 45dt/ha, 2008년: 76dt/ha)
- 제법 빠른 시일 내 서독의 노동생산성에 접근했지만 여전히
면적당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10 23



[사회자 : 천해성 실장]

함만 사장님. 바로 역사적인 경과부터 최근의 경과까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발제 감사합니다. 벌써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10분간 35분까지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잘 쉬셨습니까. 곧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독일 측에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보충발언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자유 토론을 갖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독일 측에서 먼저 보충발언을 해 주실 분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측 보충발언 : 파케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제장관]

네,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안에 대한 의미입니다. 대안적인 반환, 즉 보상 이전의 반환 원칙에 있어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습니다.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슈뢰더 전 사민당 원내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이 문제, 즉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특히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변화, 시장경제로의 변화,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구 동독 재건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실제 산업 자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토지가 아닙니다. 즉, 산업 시설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반환, 보상 이전의 반환이라는 것이 사실 산업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서비스 분야였습니다, 오히려 특히 도시 분야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보상 이전의 반환이라는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밖의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긴급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솔루션들을 그때그때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1990년대의 전환기를 보면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너무 과장되게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법률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많은

토론들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나중에 현실을 보니 이 성장과정에 있어서 동독경제재건에 있어서 보상 이전의 반환이라는 원칙이 생각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쪽에 투자가 있을 때 대부분은 그린필드인베스티션이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어떤 설비가 아니라 그린필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 있어서 너무 큰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과장된 평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에는 이야기된 것 만큼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서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함만 사장님께서 농사에 있어서의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제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농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얼마나 각각의 분야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농업이 그리고 산업이 전체적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구 동독에서 서독과 비교해 볼 때 발전해왔는가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책에서 발제한 도표입니다. 영어 버전인데 보시면 1991년에서 2008년까지의 경제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 추이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농업에 있어서의 종사자 수를 employee라고 위쪽에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생산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가치 창출이라는 것. 종사자 당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보면 1991년에서 2008년도 추이를 그래프로 보시지 않습니까. 함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도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어떻게 보면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산성의 트렌드를 보면 90년대 중반부터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있어서 서독과 비교해 볼 때 이미 100 정도의 수치를 90년대 중반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바입니다. 구동독에 있어서의 이전 과정, 즉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 보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독에서 농업분야는 성공적이라는 것이 저희의 평가입니다. 또 산업에 있어서 보시면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경제의 생산성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제조분야에서의 생산성입니다. 1991년에서 2010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서독 수준으로 동독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

다. 먼저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즉,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 표준화된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 이런 다른 쪽 분야와 달리 농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발전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약 80% 정도 서독 수준으로 생산성이 올라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80%입니다. 근데 100%는 아직 아닙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바로 여기에 어떤 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R&D에 있습니다. 서독은 R&D 중심인데 동독산업은 R&D보다는 다른 생산설비, 규모의 확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농업과 일반적인 산업을 비교를 해보면 명백하게 이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전환, 이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즉,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전환 과정은 보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는 용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북한이 계속적으로 농업이 중심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동독은 농업이 주요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시면 북한의 농업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마 독일과 같이 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경제측면에서 볼 때 농업분야의 성과를 평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에 감사합니다. 폴 박사님 먼저 하시지요.

[워디거 폴 박사]

우선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 박사님에 대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영화의 목표에 관련된 것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목표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가를 갖추는 것, 경쟁력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소유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독점적 규모를 민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작은 영농가를 민영화할 수도 있습니다. 영농 경제에 대한 제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독일의 경우는 폭넓은 민영화를 실시한 경우인데, 한국에서 어떠한 형태를 결정할 것인가를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태의 토지일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넓은 토지라고 한다면 거의 산업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혹은 사용 각각의 다른 생태적 특성적 차별화된 토지 영농의 운영을 원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대규모 토지라는 것은 거의 독점적 사업운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목표, 경제력에 대한 특성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서 이를 수익이 어떤 형태로 얻어지게 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문제는 민영화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민영화를 한다고 한다면 기업과 농업을 떨어트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향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대출시스템이 있는가? 금융시스템이 있는가? 즉, 이러한 구매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떤 대외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북한의 식료품 수출입에 대한 완전히 자유를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농업에 있어서도 북한은 전혀 다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출입관련해서 어떤 규정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이 적용하는데 구조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기서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유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민영화란 결국 소유권을 준다는 의미이지만 소유권의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농영이 결국 사업이 망했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영농가가 갖추어할 어떤 노동조건 혹은 고용조건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민영화를 독립적인 실행으로만 보지 말고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서독의 규정을 동독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바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유향조건이 없으면 결국 실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한 분 더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토론으로 한국 측 자문위원님들의 말씀도 같이 진

행하겠습니다. 예, 슈뢰더 박사님 말씀하시죠.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개인적인 질문인데 북한에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10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개인토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 민영화에 대해서 농업이든, 기업이든, 집이든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토지, 주택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산업에 있어서 15~20년 정도의 기술적 공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독일통일 후 3년 정도나 동독의 트랙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새로 사야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빨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누가 얼마를 받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야 하는가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께서 주택이 어떠한 상태인가 누구한테 주택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주택 상태를 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재건축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의 새로 짓는 것에 반 이상이 재건축 비용으로 들어갈 지도 모릅니다. 제일 먼저 상태가 어떤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종사자수가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30%가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농업에 있어서 사람들이 분업이 더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독당시도 생각해 보면 북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서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해왔던 그러한 업무들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보육시설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민영화가 되면 효율적으로 할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자리 재편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독에서 보육시설을 새로 열 때 어디서 비용이 들것인가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민영화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현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함만 사장님이 신청해주셨으니 좀 더 토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한국 측 분들도 토론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트레프 함만 토지평가관리회사 사장]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토지 당 생산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는데 브란데브르크 주의회에서 지난해 앙케이트 위원회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 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연구가 있었습니다. 동독 농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토지 당 생산력에 대해서는 어떤 진보가 없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대비 생산력에 있어서도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소영농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20헥타르 이하의 소영농은 제 생각에는 규모가 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구조에서 사회적 계층에서 결정적 현상을 목격할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신이 위험성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소영농주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감사합니다. 홍양호 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지금까지 독일 측으로부터 민영화, 사유화에 대해 구체적인 것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해서 독일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토지나 재산이 민영화, 사유화 했는데 동독에서는 동유럽 내에서 여러 가지 산업시설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인프라가 낙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국토개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북한에 계획적인 인프라 구축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 시설을 만들 계획을 하면서 북한의 땅을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주로 재산 민영화, 사유화를 했는데 동독을 산

업 발전시킬 때 토지사유화, 민영화하면서 동독의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계획을 가지고 민영화, 사유화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민영화, 사유화를 시키고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새롭게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동독의 농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해주어 농업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동독인들이 동독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토지를 임대받았던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축척해서 그 토지를 개인소유화한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도 전문가들이 통일이 됐을 때 동서독처럼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해 왔듯이 북한사람들이 부와 자유가 더 많은 남한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북쪽땅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때 북한사람들이 북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사람들이 거기에서 토지를 임대하던 사유화 시키던 생산력을 높여서 가능하면 북한사람들이 그 곳에 사는 것이 통일이후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 사람들이 토지를 임대해서 농업생산성이 높아져서 개인 것으로 사유화시키고 동독에 정착해 나가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차관님 감사합니다. 바로 독일 측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기 전에 한국 측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각범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이각범 교수]

홍양호 차관님의 질문과 연관되어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도시개발 국토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참고 삼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공공 토지 소유의 비율이 사유지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상당히 많은 토지가 사유화 되어있기 때문에 인프라 스트럭처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토지 보상비에 지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1킬로미터를 건설할 때 전체 건설비용의 90%가 토지보상비용에 들어갑니다. 현재 토지 시스템이라면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건설은 매우 느릴 것으로 보고 독일에서는 도시를 개발할 때 일단 자유베를린대에서 한학기 동안 한국과 독일의 도시계획을 비교 연

구 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도시를 계획할 때 연방토지계획 주도지계획, 그리고 도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개발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토지 소유 시스템 때문에 그런 개입이 불가능해서 택지별로 개발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라고 하는 소유시스템은 앞으로 북한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도시의 근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의 토지 소유 제도를 가지고 가면서 점차 민영화 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국에서는 개발 계획이 정해지면 그 때부터 해당 개발지역에 토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엄청난 가격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른바 모텐스펙클라치온이라는 토지 투기가 엄청나서 렌트시킹클래스를 등장시키는 경제의 정의가 확립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원래 농지였던 땅이 현재 농지로 남아 있는 땅의 절반도 못됩니다. 농지는 바로 산업용지나 건설용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하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로써만 계획되기 보다는 다른 개발수요와 맞춘 국토로써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이교수님께서 독일의 통일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현재 한국사회의 토지 및 농지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독일 측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오전 세션 뿐 아니라 전체 회의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안두순 교수]

먼저 파케교수님의 안나크루미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환원칙 그 자체가 독일의 투자에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디빌란트의 책에서 그런 논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장애제거법과 1992년 투자우선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그 덕에 투자가 우려했던 것보다 촉진되지 않았나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칙, 반환불가원칙 그 자체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슈뢰더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1990년 양 정부에서 재산 문제에 관한 공동 발표를 했지요.

거기 보면 독일연방에서는 앞으로 독일의 국회가 장내 어떤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향후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는 유보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독일의회에서 이런 결정 내렸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여쭙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첫 국가 조약에 대한 관련자들이 이런 보상보다 반환의 원칙에 대한 반대자들이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모드로 정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1990년 3월에 소위 말하는 우대판매, 부동산 우대 판매에 대한 것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는 구 사통당 정권에 관련된 일들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모드로의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판단 수용 가능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합당한 구매에 대해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그러면 지명해서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시민당 원내대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질문하신 것에 대해 이미 함만 선생님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반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토지 프로그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금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보적 판단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독주민들이 그들이 자신이 있었던 땅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고 경찰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반환된 케이스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의견이었느냐면 합당한 구매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원칙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모드로 정부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연방의회에서 이미 입법이 된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드로 정부에서 3/2는 보충구매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가치를 지불했다면 동독에서는 마르크화가 없어서 35년 가치로 해서 환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집을 샀었는데 35년 당시로 보면 12,000마르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같은 액수의 리노베이션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5년과 92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정말 모드로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리노베이션에 너무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드로 정부에서 2/3는 모드로 보충구매였습니다. 결국은 토지 가치의 절반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모드로 정부 당시 임차인이 토지를 사고 싶지만 입법자들이 임차인들이 스스로 토지에 많은 투자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그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했을때만 그런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즉 모드로 정부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구매는 무엇이었을까요? 합당한 구매라고 하는 것은 부정행위 없는 구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독정부 당시에 있었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동독정부는 부당한 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당한 구매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독정부가 판매자에게 편의적인 구매를 가능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송건이 있기는 했으나 물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조합원들은 편한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은 굉장히 똑똑했고 피를 부려서 결국은 왜 비싼돈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냐. 저렴하게 계속 임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원한대로 꾸미고 낮은 세로 임대할 수 있는데 토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민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기보다 그냥

인민재산으로 두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르크 벤트만 실장]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통일이 될 때 구 동독에 이미 있는 것들은 투자가 큰 경우에는 새로 지었지만 기본 인프라가 괜찮은 경우 수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독일통일의 교통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을 재정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 인프라를 세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된 이후 통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을 옮기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소유권 관련된 문제가 많았죠.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 있어서도 결국은 환경법, 기타 환경부담요건이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우선법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법치국가 하에 구체적 법규를 만들어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수리복구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투자해서 새로 구축을 했는데 결국은 서독에 있었던 모델을 동독에 적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종류의 인프라가 서독에서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구동독에서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적으로 볼 때 보상에 있어서도 상한을 두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어떠한 가치로 보상을 할 것인가를 규정을 했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보상원칙에 따라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슈뢰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드로 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케이스에 있어서 실제로 일부분은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언론에서 떠들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취득 과정에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즉 구동독 공산당에서 경과과정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소유권 규정이 바뀌니 재산이라는 것이 가치가 없어져 빨리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던거죠.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이 바뀔 것 같으니까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공산당 간부들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토지가 매각되는 것을 막으려고 연방 헌법재판소가 모드로법을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전에 살았던 곳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관련 부처에서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와 관련해서 소송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토지 취득 문제는 법률 소송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드로 법을 통해서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 간부들만 보충구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고 다른 소송들을 보면 다른 경우도 처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간부들은 집세도 내지 않고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인민재산 살고 있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모드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임차인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대했었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은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쉬납아우프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

한 가지 법적문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훈 선생님과 함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예를 들어 토지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적어도 독일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만선생님께서 6.15 공동성명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도 인용을 하셨었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자면 90년 이후에 어떤 유보를 ... 독일 의회... 그 다음에 어떤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기본법에 53조입니다. 슈뢰더 박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법 14조에 있는 소유권보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나 여기서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이것은 타 국가에 수용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치는 소련 주둔군이 뒤에 있었지만 실제 조치를 행한 것은 동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결정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당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구요. 구텐베르크가 당시 기민당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도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인용된 것이 조약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법 153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법 14조에 소유권 포함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1년 현재의 결정에 따르면 14조, 153조에 대해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감사합니다. 김영훈 박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장]

쉬납아우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슈뢰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칼-하인츠 파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반환원칙이 나중에 투자나 시장화구조개편에 큰 방해되지 않았다고 두 분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동독의 경우는 반환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이전에 구소유권자를 가릴 수 있는 공부가 있었고 농지 집단화 이전에 구소유권자를 가릴 수 있는 공부와 증거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구소유권자가 법적으로 특정화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결정하든 보상을 결정하든 그 결정에 따라서 법정에서 결정하면 그만인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으나 북한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북이 통일된 후 구소유권 처리에 의해서 토지개혁이 전 소유자가 권리가 있으니 반환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구소유권을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은 했는데 누구한테 줘야할지 모른다는 상황이 온다면 개별적으로 법정에 끌고가고 그 법정에서 공부의 뒷받침 없이 개별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사유화 민영화가 지연되고 계속 투쟁과 분쟁만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화 구조 계획은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부의 존재, 공적 대장 유무가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이미 토지개혁 이전에 구

소유권, 집단화 이전에 구소유권에 관한 공부를 공식적으로 다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의 협동농장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인 경우는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반환을 결정한다면 굉장히 장애가 생길 것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워디거 폴 선생님께서 민영화 목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폴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정부가 다 끌고 갈 수 없고 빨리 사유화, 민영화해야 경쟁력이 있어지고 투자가 촉진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민영화가 되어야 하는가가 대규모 경영체가 창설이 되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협동농장 민영화 및 사유화 과정에서 국유화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장했는데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 경영체를 창설하거나 아니면 국유화 기금에 편입된 토지가 우리 인프라 스트럭처 건설에 이용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 기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분배기금을 통해서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는 북한법상으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국유화 기금도 만들고 구성원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구성원 분배몫도 만들고 양쪽으로 민영화 사유화 소유권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분배는 기금은 구성원에게 맡기고 국유화 기금은 정부에게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실장]

김영훈 박사님께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경험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이라 하신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수]

슈뢰더 선생님과 함만 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서 감사드립니다.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농지에 관해서도 다르지만 북한에 가서 평양이나 개성에 주거형태나 산업형태를 보면 대부분

이 고층건물에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유화하는 문제가 독일과 우리가 다른데 우선 기본적으로 법이 독일은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그 위의 토지 사용, 건축을 해서 사용하는 사용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1917년 이래로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슈뢰더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고층 건물의 경우 토지 소유권보다 각각의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의 소유권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독일은 개혁 이후에 실제 소유권의 장부하고 실제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처분해서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들, 서독 투자자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사유화할 때는 꼭 거기에 농사를 짓거나 실제 거주한 거주자 위주로 했는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부에 나왔던 있는 관리자 위주로 사용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함만 사장님께서서는 주로 사유화를 할 때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했다고 하거든요. 동독의 경우에는 실제 법률에 따른 소유와 사용이 많이 분리됐고 한국에 있어서는 만약 동일이 되는 경우에 가급적 현재의 이용자에게 현재 이용자에게 사유화해주는 것을 바람직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관련해서 김선생님의 발표에 의하면 약 90%가 협동농장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동농장에 관련된 법에 보면 1차적으로 협동농장 소유이고 토지법에 의해서 그 위에 국가의 소유로 인정하는 이중구조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일소유권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토지사용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남한에서는 법률로 규제해야 하는 것을 국가의 소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통일된 이후 협동조합 위주의 집단 소유랄까 기업농장 같은 것으로 전환하고 그 협동농장을 각 농민에게 분할해서 소유권을 쪼개줄 것인지 아니면 공동의 조합이나 기업으로 운영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 90%에 해당하는 협동농장의 경우에 독일과 같은 중간단계로서의 신탁회사 같은 것이 필요가 없이 만약 북한이 붕괴돼서 토지를 사유화 한다면 일단 협동조합 소유로 했다가 그것을 각 농민에게 분할해주는 형식을 취하든가 그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형태로 사유화하게 돼서 독일과 우리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충고해주십시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감사합니다. 워디거 폴 박사님이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선 듣겠습니다.

[워디거 폴 박사]

두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김영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공적인 문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없다면 반환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보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도 항상 민영화 가능하지요. 어떤 민영화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겠죠? 여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민영화할 것인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인가? 예를 들어 서울이 되겠죠? 서울 출신에 수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모두가 북한으로 물러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영화를 위한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구매를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하고 자본을 위해서 재정조달 컨셉트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금융 등이 동원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어떤 가치로 민영화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몇 마르크다라고 시장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시장가치를 민영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 반환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기서의 포커스는 어떻게 민영화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환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모든 것은 국유화되는 것이고 가장 나쁜 솔루션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교수님에 대해서는 협동농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하신 복층구조 다층구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재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국유화된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민영화 작업이 30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체 국유화인데 순차적이 문제인 것입니

다. 우리가 신탁청을 동원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실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동독은 아직도 산업이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착점은 민영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은영 교수]

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협동조합의 소유를 아예 통일된 경우 부정하고 국가의 소유로 했다가 그것을 사유화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이 맞다라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튀디거 폴 박사]

예, 맞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조금 전에 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이 한국에서 통일 이후에 어떤 소유권, 재산권과 관련해서 첨예한 논쟁이 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하르트 슈레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초반에 던져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어떤 토지가 먼저 동독 주민에게 판매된 이후에 소유권이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그리고 유럽에서는 어떤 로마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소유권, 점유권에 혼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사례라고 보셔야 합니다. 동독은 로마식 법을 거절했었고 등기부를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토지는 결국 인민 재산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택을 위에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썼다면 국유재산 위에 개인재

산 집이 지어졌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 건물에 한 토지에서 서로 다른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점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소유권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원소유주자가 일단 주택 소유권자는 자신이 매입이나 상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선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나 점유권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주말별장 같은 것이지요. 임차인이 점유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으나 어떤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그가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원소유자에게 2015년까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토지를 매입하지는 못하지만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별장의 형태로 말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원소유주가 와서 나가라고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전독일 법에 따라서 자기 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택에 대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예외들로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속건축법입니다. 여러 소유주가 있을 때 하지만 임대계약은 90년 이상 되었을 때 원소유주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던 고향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개인소유의 주택으로 결국 바꾸어 버리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임대했다면 20년 후엔 당신의 주택이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한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를 자신이 소유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고향에서 있었던 실제 예입니다.

[데트레프 함만 토지평가회사 사장]

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이야기 하자면 농업부분에서는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성 원칙을 내세운 것을 어떻게 해결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홍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어떤 많은 공백이라던가 많은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수입이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이 있었던 토지라든가 장소를 떠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생활에 질이 나쁘다고 해서 떠나도록 하면 안되겠

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폴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소유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결국 국유화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우리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성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개인사유으로 이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된 형태인 조합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 한국에는 조합의 형태로 있는 것이 제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진공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할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벤틀만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요르크 벤틀만 실장]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구조에 있어서 또 통일 과정에 있었던 법구조에 있어서 어려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발견했고 발견하고 있는 부분들 폴, 슈뢰더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구동독에서도 항상 토지대장이 국가적으로 소유권 증명을 할 때 근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 동독에서는 새로운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적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전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소유자가 정해져 있는 토지 대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역사나 소유주를 모두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추가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 전의 자료를 없애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하되 30~40 년대에 있었던 도서관에서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누가 소유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도 있었고, 바이마르공화국시대에도 변화들이 있었고, 결국은 소유권의 변화도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전제조건이었고 결국은 객관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규칙들을 정해서 어떤식으

로 구소유권자를 정할 것인가를 문서도 있었지만 변화된 상황도 고려했었고 북한에서 문서를 다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예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완전히 새로운 근거를 만드셔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대장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예 구소유권에 대한 토지 대장이 없으니깐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모델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2개 또는 3개의 법적인 구조를 새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을 너무 어려운 개별적 소유자를 찾는 데 쏟기 보다는 아주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면 프로이센적인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동독에 있었는데 그게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이미 전에 이은정 교수님 신청하셨으니 그 다음에 다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교수]

저도 이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생각들을 들었는데요. 국회에서 토지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에서 대량 탈출 상태가 나타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량탈출을 막으려면, 주거지, 토지, 이것을 민영화하지 않고 즉 중여를 하자. 돈을 받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법적으로 한국에서 이것이 가능한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혹시 독일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상황을 들으셨으니깐 그렇게 하는 것이 독일의 경우 가능했는지 가상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먼저 하시고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르크 벤트만 실장 또는 뤼디거 폴 박사]

독일에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인 근거에 보면 자기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기본법에 따라서 구동독의 지역에 있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입장을 쉬납아우프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소련시대에 수용되었던 것들을 헌법에 따라서 소련점령 하에 수용된 것까지 소유주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타국에 의해 이루어진 수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은정 선생님의 말처럼 모델이라는 것은 그린필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국유화를 만들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토지를 증여하는 것은 독일에서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국가라고하더라도 다 증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 기업체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유럽법에 의해서도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독일국가의 헌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다만 이은정 교수님이 국회에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떤 분이 어떤 여건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김영훈 박사님의 발제 끝나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국내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돼겠지만 좀 전 김영훈 박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북한에 우리가 현재 인정할 수 있는 공부 없다고 하셨지만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제국주의에서 바로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제시대에 있었던 등기부, 공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구소유권을 주장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예컨대 한국에서도 일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일본정부의 재산을 불하하는 과정에서 경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북한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정치적, 사회적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장]

벤트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폴 교수님께서도 단호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구소유권자를 찾을 수 없다. 뭐 물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제의 부분적 공부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일 뿐 전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없고 만약에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고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면 구소유권자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요. 지금의 소유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농장과 국유농지, 국유토지는 당연히 국유화되고 북한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가 통일이 되면 통일정부의 소유가 되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국유로 되는데 한 가지 특수한 것은 협동농장농지의 소유자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법에 협동농장 농지는 협동농장원들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동농장도 사실상 국가가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것도 국유화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독일에서 통일이 됐을 때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셨을테니 과연 협동농장의 소유권이 협동농장원에 있는데도 이를 국유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처분권이 있으니까 일부는 국유화, 일부는 사유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결정하기 쉽고 어떤 쪽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기가 쉬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감사합니다.

[이은영 교수]

접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소유는 1917년 이전에 한국에 양반들이 갖고 있던 소유권은 완전히 부정되고 1917년부터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남한에서는 그 이후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쪽 이어져 오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1917년부터 1945년부터 소유는 완전히 부정하고 농지개혁 이후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갖고 협동조합이다, 개인소유다, 국가소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상황이 다르죠. 독일은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등기부가 계속 권리를 말해주고 있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북한의 토지나 주택을 국유화한 다음에 사유화하는 경우에 우리가 독일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사적인 소유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누구냐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부동산을 잃고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이은영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독일 측, 일단 폴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슈뢰더 교수님 순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더거 폴 박사]

간단히 코멘트하겠습니다. 민영화를 증여를 통해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증여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받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어떤 토지들은 비싼 땅도 있고 싼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부정부패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여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증여라는 것이 소유권이라는 것을 함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의 경우에서 중요했던 것은 토지를 지속적으로 영농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영농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유권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측정해야겠지만 결국 이윤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면 소유권자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권을 주지 않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은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대량탈출 사태는 심각한 사항이고 한국 측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잘 사는 쪽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인적자원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남한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를 들어 이슬람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솔루션을 찾고자 하신

다면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낙오자,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은 동독에서 실업자가 양성되지 않았습니까. 통일이 되면서 실업률이 동독에서 엄청 높아 졌습니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통일이 되니 난 불이익을 당하고 통일의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디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통일과정에서 실패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보장 체제 안에서 이들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마지막으로 슈뢰더 박사님 토론까지 듣고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하르트 슈레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독에서 증여할 수 있겠냐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증여를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증여방식은 아니고 신규배분 이런 쪽입니다. 동독에서는 통일하고 관계없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부당한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하고 그 다음에 돌려준다는 것이 서독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동독에서는 한번 수용돼서 몰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절대 안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열띤 토론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뒤에서 정리하는 직원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전세션을 마치고 미흡했던 부분 좀 더 말씀하실 부분은 오후 또는 내일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처리

2013. 6. 27



PART 02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처리

■ 일시 : 2013. 6. 27, 14:30~17:15

■ 사회 : 요르크 벤틀만 실장

[사회자 : 요르크 벤틀만 실장]

두 번째 시간 오후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동독에 있어서의 정당 대중조직의 재산처리에 대해서 토론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보면 특별한 케이스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핵심은 제대로 작용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세우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실현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쉬납아우프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지만 쉬납아우프 선생님은 통일조약에 대해서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 위원회, 소위 말하는 우카피파우 독립정당자산강점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

구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

클라우스-디터 쉬납아우프(Klaus-Dieter Schnapauß)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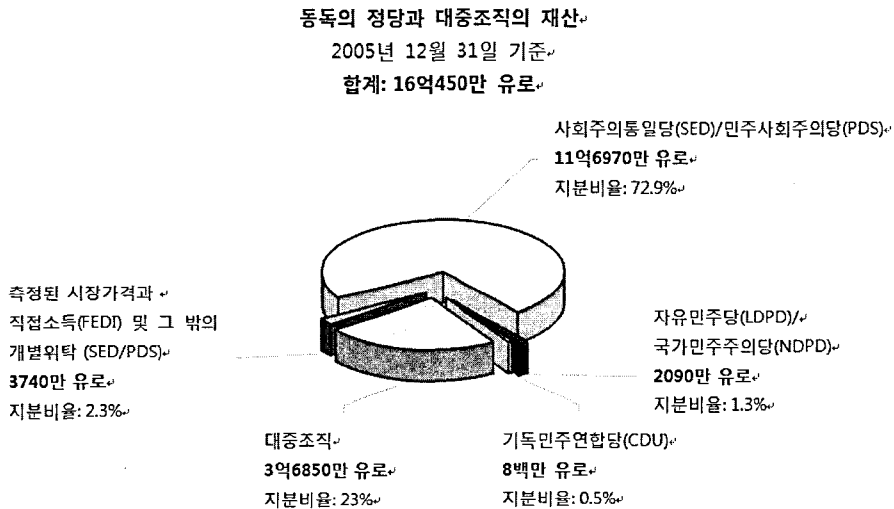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과제는 소유와 재산에 관련된 문제였다. 소유와 재산에 관련된 문제에는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기타 정당들, 그리고 그 정당들이 관리했던 대중조직 및 각각의 후속 기관들의 소유관계와 재산상태를 재편성할 필요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우선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었다.

- (1) 구 동독의 권력 시스템과 통치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던 사회주의통일당 및 민주사회주의당과 독일자유노조연맹(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DR)은 부동산, 국내의 기업, 국내의 은행계좌, 예술작품 등의 형태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통일당 및 민주사회주의당에 1,677건의 부동산이, 독일자유노조연맹 여행사를 포함하여 독일자유노조연맹에 1,682건의 부동산도 해당되었고, 이 부동산은 구 동독의 재산권 질서와 법 질서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기관의 자산이거나, 기관이 소유한 건물이거나, 권리를 실행하거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법치국가의 기준에 어긋나게 획득된 것이었다. 신 연방주에서의 자산상태와 소유관계를 헌법질서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에 차츰 맞춰 가면서, 구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의 소유와 재산관계를 재편성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 (2) 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따라서 기본법은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헌법상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했고, 헌법상 기관(verfassungsrechtlich Institution)의 일종으로 승격시켰다. 정당은 시민과 국가간의 매개역할을 하고, 정당 없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 정당은 우선 선거참여와 민주주의의대표기관에 그들의 정치적 강령을 대변하면서 국민과 국가간 연결고리 및 중개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적인 경제활동이나 기업에 대한 참여가 - 미디어 부문에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 정당의 정치적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수익이 정치적 업무에 필요한 재정보다 훨씬 많을 경우 이는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사회주의통일당 및 민주사회주의당이 소유한 상당한 규모의 재산가치를 정상적인 정당의 정치적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반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 (3) 정당의 자유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어서, 정당간의 기회균등 내지 평등한 경쟁관계의 보장은 필수적인 요소다. '독립 정당자산 검증 위원회(Unabhängigen Kommission Parteivermögen, 이하 UKPV)'에 따르면 UKPV가 2006년까지 활동하면서 1989년 10월 7일까지 존재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된 구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이 16억 유로를 웃돌았다는 것을 밝혀냈

다고 한다. 그 중 거의 4분의 3, 즉 11억 6천 9백만 유로가 사회주의통일당 및 민주사회주의당의 재산가치였다.

이 재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UKPV가 2006년에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실린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비교해 보면 서독 정당들은 매우 적은 규모의 재산 가치를 소유하고 있었다. 1990년을 기준으로 한 서독 정당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약 3억 7천만 마르크(DM)였으며, 유로와 마르크 교환 비율을 1대 1.95583로 두고 산정했을 때, 이는 약 1억 8천5 백만 유로에 해당된다. 이것은 UKPV가 조사한 사회주의통일당 및 민주사회주의당 재산의 15%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여러 관점에서 구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가치에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존재했다.

2. 동독 정당법 제20a조와 제20b조 - UKPV

수정과 재편을 위한 첫 번째 조치는 1990년 3월 18일에 새로 선출된 인민의회가 1990년 5월 31일에 의결한 법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 법은 정당과 여타 정치 단체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법이었다(1990년 2월 21일에 제정된 동독 정당법). 이를 통해 1989년 10월 7일에

존재했거나 그 이후 대체된 정당 및 정당과 연계된 기구, 법조인, 대중조직의 재산이 신탁관리로 지정됐다(동독 정당법 제20b조 제2항). 이는 그 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은닉되고 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신탁관리는 동독 정당법 제20b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독 총리에 의해 대체된 UKPV로 이전되었다. 동시에 동독 정당법 제20b조 제1항은 1990년 6월1일 법이 발효되면서 정당 및 정당과 연계된 기구, 법조인, 대중조직 측의 재산변동은 UKPV 위원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했다.

UKPV는 동독 정당법 제20a조 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증거조사를 할 권리, 형사소송법의 절차상 규율에 따라 증인을 심문하고, 가택수색과 그 밖의 수색 또는 압류할 수 있는 권리” 를 위임 받았다.

결국 동독 정당법의 개정은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였다.

이 독립 위원회는 우선 11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중에는 인민회의 교섭단체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현저히 많았다. 의장은 무소속 출신의 변호사였다. 1990년 11월까지의 위원회의 업무 수행, 특히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처리하는데 전일제로 근무하는 의장 외에는 두 명의 자문 위원만이 위원회에 있었다. 정부와 인민의회, 그 누구도 사무국이나 외부 감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활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부 정보와 경제적 관련성을 보여 주는 지표도 누락되었다. 위원회의 업무 조건은 결코 효과적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은 아니었지만, 1990년 7월 12일에 동독 총리에게 제출된 첫 보고에는 신탁관리에 놓인 대규모의 재산가치, 특히 사회민주당과 자유독일노조연맹의 재산가치목록이 기록되어 있었다.

3. 통일조약

UKPV의 업무, 권한, 조직은 독일 통일에 관한 조약(Einigungsvertrag, 이하 통일조약)으로 동독이 서독으로의 가입 효력이 발생하면서 현저히 확대된 법적 토대를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통일조약이 동독 정당법 제20a조와 제20b조의 효력 지속을 규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법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개정과 확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연방정부는 연방대통령과 협의하여 6명의 UKPV 추가 위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는 위원회 내에 있는 대표적인 조직들과 기관의 스펙트럼을 넓히도록 해 주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서독 전문인력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 UKPV는 연방 정부의 전문감독이 아닌 법적감독 하에 놓였다. 이는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의 원칙적인 자유를 보장하는데 부합했다.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당은 현행법의 감독 하에 있긴 했지만, 국가기관의 측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에 큰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2006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객관적이고 넓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대폭 개편되고 확대되었다.
 - 우선 한편으로는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과 UKPV가 기능적인 의미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UKPV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 및 정당과 연계된 기구, 법조인, 대중조직의 재산의 신탁관리가 신탁관리청으로 이전되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회에 남아 있는 그 밖의 업무를 넘겨받았다.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확보되지 않은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을 계속해서 조사해서 밝혀내고, 신탁관리로 이전시키고, 결정적으로 신탁관리된 재산의 향후사용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통일조약은 다음의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 (1) 재산가치 조사에서 이전 소유자가 밝혀질 경우, 그 재산은 다시 본래 소유자나 법적 후계자에게 반환되었다.
 - (2) UKPV에 의해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법치국가적인 원칙에 부합하여 획득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확인된 재산만 다시 정당과 기타 기관에 반환되었다.
 - (3)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히 신 연방주의 경제 재건을 위해 사용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당사자들과 관련된 법적 행정 문서에 대한 결정권은 신탁 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관리청에게 있다고 보였다. 그렇지만 신탁청은 내부적으로 UKPV와 긴밀하게 협조하였고, UKPV는 결정을 내리는 데 절차상으로는 물론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졌다.
- UKPV는 독일 통일의 완성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업무를 매우 많이 수행

했다.

- 신탁관리를 피하기 위해 은닉되거나 은폐된 재산가치 조사, 확정 및 확보

특히 사회주의통일당 및 민주사회주의당의 막대한 양의 불법재산 회수와 이전 소유자 또는 후계자에게 반환

- 신 연방주의 시급한 경제 발전과 재건을 위한 막대한 양의 자본 확보

- 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적으로 재산 축적한 재산에 대한 추후 원상 복구

UKPV의 주요업무는 경쟁 관계에 놓인 정당들 간의 재정적 기회균등과 평등한 경쟁 관계로의 회복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법적으로 신탁 관리청에 속해 있던 재산을 다시 조사한 것은 그저 부득이한 수단이자 부차적인 목적일 뿐이었다.

□ UKPV의 업무 이행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개선하기 위해 일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이 조직 개편에서는 위원회 위원이 임명되고,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다.

- 국가법과 헌법분야에서 능력 있고 저명한 대학교수를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1991년 초부터 1998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재판부장(Senatsvorsitzend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으로 선출될 때까지 거의 7년 동안 위원회에서 임기를 맡았고, 후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소장을 역임했다. 열정,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원들은 - 의장뿐만 아니라 모두 명예직으로 일했는데 명망이 높았고, 인사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임명은 위원회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매우 많은 기여를 했다.

- UKPV는 최대 16명의 구성원과 2명의 자문위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조직으로서 초기부터 일상적인 업무, 특히 재산조사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UKPV는 1990년 말부터 베를린에 있는 사무국을 통해 보조를 받았다. 사무국에 고용된 직원의 수는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달라졌다. 1992년에는 85명이 활동했고, 2006년에는 8명만 활동했다.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위원회 결정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사무국은 자문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UKPV의 회의를 준비했다. 그 밖에도 위원회를 위해 신탁관리청과 연방통일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업무에 참여했다.

- 즉각 내려져야 했던 위원회의 결정들은 UKPV 의장단이 사무국장과의 협의하여 결정

했다.

- 그 밖에도 위원회는 개별 사례나 여러 가지 그룹별 사례를 위해 위원회의 권한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다.
- 최종적으로 사무국장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률분쟁에서 위원회를 대표해야 했다.

4. 위원회의 업무방식과 법적 수단

UKPV가 확인한 내용이나 결정, 혹은 업무 결과에 대해 여기서 일일이 모두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여기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 즉 한반도 통일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일반적인 경험과 사건, 기준과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다룰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음에서 UKPV의 업무 방식과 법적 수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a) 사무국의 인적·물적 자원 - 재산조사에 회계법인 투입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개인의 역량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과 위원회를 보조하는 사무국 직원들, 특히 이미 설명한 바 있는 사무국장에게도 해당되었고, 소위 말해 대표단결정에도 마찬가지로였다. 특히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가지의 위원회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 직원들은 우선 재산관리나, 결산, 세무, 회계 및 기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했다. 되도록이면 조사에 해당되는 구 동독의 정당이나 조직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했고, 그 정당이나 조직에서 활동했던 과거 이력이 없어야 했다. 가능한 한 은폐되고 복잡한 사태를 조사하고 규명하는데 경험이 있고 형사적인 직감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 법조인들은 서독과 동독의 국법, 헌법, 정당법, 시민법, 상법, 경제법, 사회법을 숙지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했다. 거기다가 행정기구에서의 경험이 있고 법정 재판에

서 민주사회주의당이 실질적인 법치국가적으로 재산가치를 축적했는가에 대해 UKPV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어야 했다.

- 해당 정당과 해당 기구의 저명한 대표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특히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던 사무국 직원들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거만하고 공격적인 태도나 위협, 부적절한 지시 등에 동요하지 않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했다.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0년 말과 1991년에 사무국을 설치할 때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통일로 인해 기존의 연방주나 신 연방주 행정부 신설과 관련하여 적합한 지원자들이 있던 인력시장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행정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무국은 시작부터 외부 전문인력의 임금을 예산 항목에 설정해 두었다. 여기에 회계 법인이 재산을 조사할 때 -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액수였는데 - 이것을 자문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이 조사를 빨리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b) 구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 재산검증과 조사

앞서 언급했듯이 인민회의가 만든 UKPV를 위한 법적 토대는 법적으로 신탁관리청에 해당되는 구 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그들의 업무였다.

UKPV는 이미 1990년 6월 20일에 동독 정당법 제20a조에 의거하여 해당 정당과 정치 기관에 1989년 10월 7일자로 측정된 재산상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UKPV의 요구에 따라 정당과 대중조직이 제출한 서류는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불완전했으며, 위원회 초창기 업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으며, 특히 사회주의통일당과 민주사회주의당 쪽의 서류는 불완전하고 누락된 부분도 많았다. 그 원인은 업무가 복잡했고,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 해당 정당과 대중조직 담당자가 통찰력이 부족했고 무지했으며 협력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했고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보고서는 불완전하고 결함도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 설정한 목표였던 정당과 정치 조직이 공인회계사의 도움 없이 만든 그들 재산에 대한 보고서의 완전성을 검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보고서에 기록된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부분적으로는 명백하게 틀린 것이었다. 따라서 UKPV는 정당

과 기구들과 협의하여 회계장부와 그 밖의 정당과 기구들의 정보원로부터 회계 법인이 UKPV의 위임을 받아 재산상태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회계 법인은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이나 신생 기업과 관련한 재산상태를 검사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 다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c) 위원회 자체조사

위원회 사무국은 대규모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자체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특히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도 공공연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들에서는 대규모의 재산이 유출된 것이 나타난다. 하지만 장부에 나타난 수취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이 지출 내역이 올바른지에 대한 여부는 대부분 회계 보고서의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의문들은 위원회 및 사무국이 계속해서 다루어야 했다. 여러 다양한 감사 보고서의 개별 결과들을 '상호연결' 시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철저하면서도 성공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정밀한 세부조사에서 개별 결과와 수치가 정확한지가 검증되었다.

또 다른 성공적인 조사방식은 은행 계좌 평가로 이루어진 방식이었는데, 그 계좌들은 761개의 은행에 조회하여 사무국에 공개된 계좌들이었다. 여기서 사회주의통일당의 계좌만 약 1,000여개가 밝혀졌다.

그 방식은 여타 다른 조사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부분적으로는 위원회 사무국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회계사들이 개별조사에 위임을 받았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당국의 직무상의 협조도 필요했다. 여기서 검찰이나 사법경찰 같은 다른 조사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정당과 대중조직의 토지재산을 조사에서 특히 어려움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독립 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와 개별적 대상의 확인과 재산관계의 검증에 관련된 것이었다. 사전에 발견된 자료들에서는 주로 주소정보였고, 부분적으로는 그마저도 불확실했다. 토지재산, 넓이, 층수, 건축 종류 등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었다. 그래서 토지조사는 대다수의 경우 시찰을 가거나 현지 관공서에 문의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었다. 토지대장과 토지관련서

류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해당 관공서의 업무도 초과 상태였다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계속 해서 발생했다.

d) 형사소송법상 절차법에 따른 증거조사법

앞서 설명했듯이 동독 정당법 제20a조 제4항은 UKPV가 형사소송법상 절차법에 따라 증인을 심문하고, 가택수색 그 밖의 수색과 압류를 실행할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정당과 대중조직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권한을 빈번하게 사용해야 했다. 1991년 말에서 1992년 초까지만해도 민주사회주의당 베를린 사무소와 지역 사무소 및 50곳이 넘는 개인과 기업에서, 신 연방주에서 17곳, 코블렌츠(Koblenz)와 보훔(Bochum)에서 대규모의 수색과 압류가 이루어졌다. 압수된 서류는 UKPV에 의해 분석된 후에 당사자에게 다시 송환됐다.

독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색과 압류에는 판사의 지시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법률적 수단으로 방어를 여러 번 시도했어도 모든 법적 심사의 수색과 압류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형사 소송의 방식은 2003년부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그 시기에 대부분 국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외국 당국에 대한 특수한 독일 법적 토대의 목적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가시밭길이나 다름 없는 방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e) 밝혀지지 않은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재산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독일 의회는 1994년에 그 당시 신탁관리청과 UKPV의 입장에서 밝혀지지 않은 재산 신고에 대해 공동으로 5백만 마르크(250만 유로)를 포상금으로 내걸었다. 보상금을 내거는 것이 조사에 적용할 만한 정보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재산가치를 반환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아니었다.

f) 기본법의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른 취득

앞서 설명했듯이 통일조약은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획득한 재산을 해당 기관에 다시 반환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될 세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른 취득
- 이를 위해 적용된 기본법의 기준
- ‘증명가능성’의 기준

(1) 기본법의 기준

재산가치들이 대부분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기 이전에 동동법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재산가치의 반환은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연방 헌법을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된 재화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부진정 소급인지 혹은 예외의 경우가 드물었지만 허용은 되는 진정 소급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 제시된 두 가지 중요한 시점에서 미해결로 남겨 질 수도 있다.

첫째, 규정의 목표와 목적은 통일된 독일 내에서 정당들 간의 기회균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헌법에 입각한 정치일 뿐 아니라, 합헌적이었으며 이에 필수적인 신중한 검토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 규정을 정당화 시켜주었다.

둘째, 헌법적으로 보면 통일조약은 통일된 독일을 위한 헌법제정이었다. 통일조약은 계약의 형식으로 서독과 동독의 의회주의 대표 기관에 의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게다가 이것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통일 독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는 헌법적으로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정당과 대중조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명백하게 적법한 것이었다.

(2)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재산획득

‘기본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재산획득’이라는 용어는 정해지지 않은 법률용어로,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법률용어가 다 그렇듯,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고 특히 UKPV와 신탁관리청과 같은 관청에서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해

석여지를 열어두었다. 하지만 이렇게 곧 추가로 설명되듯이 독일 행정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법률용어의 해석과 사용이 개별적인 경우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가 따랐다.

UKPV는 '기본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재산획득'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법률용어의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전 소유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가치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구 동독 정권의 당원들을 다루는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는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인 결정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런 개별결정들의 합산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위원회가 맨 처음에 딱 한번 소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본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재산획득을 위한 '기준' 을 만들었다. 여기에 위원회는 저명한 두 명의 국법학자의 법률적 감정을 참고했다. 그 밖에도 위원회는 해당 정당과 기관에 토대가 된 기준에 대해 서면상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었고, 여러 번의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근거로 1992년 여름 위원회 결정에 기초였던 토대가 된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UKPV에 의해 발전되고, 그 기준의 시작점이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고, 이 판결에 따라 정당의 전체 활동을 충당하는 재정자금 부문에서 직접적인 후원금을 통해 재정이 뒷받침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꼭 필요한 선거비용이 반환된 것 외에 국가적 방식으로 정당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당의 일반적인 활동에 부분적으로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전체 또는 많은 부분의 재정수요를 국가에서 충당하려는 것이 정당의 원칙적 자유와 국가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UKPV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재산이 다시 보장되는 통일조약의 규칙을 해당 기관의 몰수가 아닌, 이전 소유권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상태' 의 회복이 목적이었고, 그 외에 정당의 기회균등 회복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었다. 따라서 UKPV의 시각에서 기회균등 회복은 정당과 기타 기관이 구 동독 시절에 가지고 있던 권력 우위와 관련된 특권 의식을 없애는 것을 의미

했다.

그 결과 UKPV는 만약 그 재산이,

- 제 3자의 자유권과 소유권을 침해했거나,
- 국가와 사회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 국민의 동의에서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적인 통치 규율 없이 폭력적 통치와 독재정치를 이용하여 획득했다면 기본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획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인 진술이나 기준은 1992년 여름에 이루어진 UKPV의 판결에 해석되고 근거가 뒷받침 되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져 발전되고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그 점에 대해 상세히 논의될 수 없고, 필요하면 추후에 다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원회가 추후 개별결정을 위해 매우 확실하고 투명한 결정의 토대를 발전시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첫째로 당사자들이 그 토대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이해의 대립이나 의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경우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성공적이었다.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과 정치적 공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 봐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 둘째는 UKPV의 활동을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 즉 정당법 제20a조와 제20b조, 그리고 통일조약의 규율들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발전시키고 그들의 결정의 토대가 된 기준이 법원에서부터 연방헌법재판소까지 수많은 소송에서 존재했고, 특히 민주사회주의당이 개별적인 경우에 그 토대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3) '증명가능성' 의 기준

마지막 기준도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취득한 것의 증명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위한 UKPV이 설정한 전제조건과 결정에도 해당된다. 한번에 법치국가적인 원칙과 합의되지 않은 입증책임이 반대로 발생했고, 이는 당사자에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재산을 획득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필요할

경우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UKPV가 그 재산들이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끔 만들도록 시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 독일 행정법에 따라 해당 관청과 사무소가 원칙적으로 직무조사원칙 하에 놓인다. 하지만 민사소송처럼 진술이나 입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서 해당 행정관청이 법정에서의 행정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토대가 되는 사실을 조사되거나 밝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 결정을 위한 중대한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될 수 없다면, 이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고, 이것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되는가?

□ 아니면 반대로 이 사실이 당사자를 위하여 받아 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 사항들은 모든 전문분야와 법률분야에서 동일하게 판단되거나,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사건과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적인 시설이나 설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고, 기준과 한계치가 준수되고 있고 그것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주는지 의심을 하는 것을 의심하는 법률영역에서 이 사항이 필요하다.

구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재산들이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획득된 것이 아닐 것 이라는 공공연한 추측이 존재했었다. 거기에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구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이 장악했던 지나치게 많은 재산가치를 회수했다. 정상적인 민주 법치국가적 수준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5. 국외조사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이 신탁관리되고, 1998년 여름 UKPV의 보고서로 기본적인 국내 조사가 독일 의회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반면, 이에 해당하는 국외조사는 그로부터 8년 후인 2006년 UKPV 최종 보고서와 함께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특히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것이었고, UKPV는 2006년 최종 보고서에서 그 밖의 긍정적인 결산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성공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UKPV의 집중적인 국외조사의 필요성은 다방면의 시각에서 나타났다. 이미 UKPV 활동 초기에 정당의 재산이 외국에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이고, 내용적으로 막연했기 때문에 조사 착수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출발점은 1991년과 1998년에 독일 의회의 조사 위원회의 이른바 '상업 조정기구(Kommerzielle Koordinierung)'로 생겨났다. 여기서는 동독 외교부에 설치된 부서로 이 부서는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수많은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외화를 조달했다. 조사 위원회와 UKPV는 긴밀하게 협력했다. 조사위원회의 밝혀낸 것들뿐만 아니라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와 UKPV의 국외 조사에서 얻은 결과에서 국가재산과 정당재산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사실상 적지 않은 규모가 해외로 유출됐거나 해외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UKPV가 추정하곤 하는데 의하면 부분적으로 이체나 현금 사업과 같은 '쉬운' 형식으로, 그 밖에는 여러 번 국경을 넘어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장소나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었고 전환기 이전에 활동했던 노련한 상인들이 활동을 했다고 한다.

UKPV는 국외조사에서도 몇몇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최종보고서에는 당시 집중적으로 조사를 7년이나 한 후였는데 약 16년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법정에서 세우는 것과 유사하게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묻혀있는 정당재산'은 추측해야 할 뿐이라고 나와 있다. UKPV는 대상이 복잡했던 것 외에 UKPV의 조사 활동이 첫 해부터 1998년까지 긍정적인 이유에서 국내에 집중했던 것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우선 가장 강력하게 정당간의 경쟁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영향을 끼치면서, 조사 시각에서 성공률이 보장된 경우들을 급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사건들 간의 시간적 공백이 커지면서 증거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했다.

- 은행이나 무역회사의 문서의 법적 보관 유효기관이 이미 1995년에 다 지났다.
- 우선 관공서나 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독일 내 가능성을 활성화 시키고 협력하는데 외국이 도와 줄 준비가 꼭 필요했다.
- 전환기와 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돈세탁은 처벌 대상의 행위가 아니었다.
- 수익이 은닉된 재산가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있던 헝가리에서는 전환기와 그 후에 기록 문서가 명백하게 '수정됐다'.
- 은행비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특히 보호 할만한 법익과 이를 처리하

는 것을 굉장히 민감한 대상으로 보아왔다. 은행위기와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 해외에 확인된 재산가치를 처분하는 데는 장기적이고 특별히 더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었다. 우선 올해 스위스 법정에서 1년짜리 법적 분쟁에서 오스트리아 은행이 노퍽(Novum)사(社)와 구 동독회사의 재산 2만 4,500만 유로를 상환해야한다는 최종판결이 났다.

6. 법률상 목적에 따른 이용

확보된 16억 유로의 재산가치에서 청산비용, 행정비용, 필요한 상환 등 2006년까지 법률상으로 9억 1,700만 유로를 제공됐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통일조약에 따라 처리가능한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었다. 기존의 사용규정은 1997년 3월 6일부로 과거부채처리법(Altschuldenregelungsgesetz)에 의해 개정되어 처리 가능한 재산으로 신 연방주의 과거 채무를 변제하고 신 연방주에서의 기념물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되었다. 그 밖에도 이 법은 1998년 6월 5일에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을 위한 재단'을 설치하여 정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을 이 재단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법률상 목적에 따라 처리 가능한 재산들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단위: 100만유로	
상속부채변제기금(구채무청산법)	375.8	41%
신연방주 경제성장촉진	311.1	34%
신 연방주 문화, 예술, 기념물 관리	155.1	17%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 재단	75.0	8%

여기서 41%라는 큰 부분이 신 연방주의 과거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기는 했어도 통일조약의 기존 목표에 의해 신 연방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도 엄청난 양의 처리 가능한 재산가치가 투입되었다. 이 스펙트럼은 지역 발전과 스포츠발전에서부터 문화시설 후원을

넘어 신 연방주의 기념물 보호적 조치를 위한 기념물 보호 재단에까지 이르렀다.

7. 2006년 12월 31일자로 UKPV 활동종료

UKPV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17년간 이상 지속해 온 활동을 종료했다. UKPV는 그때까지 85회 이상의 놀라운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며 광범위한 업무 스펙트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UKPV는 독일 의회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연방 하원의 정기 간행물로 출간되었고, 이 정기 간행물은 앞으로의 업무들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UKPV의 핵심적인 활동을 요약하면, 구 동독의 정당과 그 정당 산하의 대중조직이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축적된 것이 아닌 상당한 양의 재산가치를 이전 소유주에게 반환했고, 신 연방주의 공동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동시에 자유로운 기본법적인 조건하의 정치적 경쟁에서 기회균등이 회복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했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52, 63, 82f 참조.

Alexandra Schindler, Die Partei als Unternehmer, 2006, Nomos-Verlag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52, 63, 84ff 참조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85, 264, 289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84, 209 (303)

연방법령간행물(BGBl) 제1권 434쪽

연방법령간행물(BGBl) 제1권 1226쪽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쉬납아우프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매우 심도 높은 법 관련된 주제로서도 가치가 높았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복잡한 자료에서 한가지 보아야 할 것은 사통당이 독일 통일 시기에 있어서 자신의 재산들을 일부러 새로 생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란 것입니다. 항상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똑같은 법적 기관을 통해서 형태 명칭만 다르게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SED 또 다른 명칭만 바꾸어 왔다는 것이죠. 항상 명칭만 바꾸면서 똑같은 재산에 대한 소유주가 되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생각은 재산조사에 관련된 것인데 사통당이 통일시기에 특정 컨셉이 있었습니다. 일부만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데 어떻게하면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도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이러한 제한들을 자기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 통일전시기 1989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30년부터 시작되어서 사통당이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던 불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다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하자면 사통당은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렸으나 하지만 사통당은 독일의 한 정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탁청을 활용하는 그리고 법적으로 검증은 받는 등의 법적절차를 거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닉전략은 나중에는 저지가 되었죠. 여러 가지 민사당의 노력을 통해서 쉬납아우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은 인민의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제시가 되었지만 다른 정당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검증위원회 내에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멤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1년 쯤에 변호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검증위원회 초기에 매우 유명한 변호사가 이러한 근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검증위원회가 발전돼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쉬납아우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통당에 재산관련된 것이 거의 2억 유로의 재산에 대한 판결 들으셨죠? 노봄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스트리아 국가기관 은행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

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말 초기에 사통당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의도적인 기술적인 전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90년에 통일이 이루어지던 전후시기 의도적으로 재산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보충이었습니다. 여기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했던 대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게 휴식시간을 갖고 3시 45분에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토론을 시작합니다. 한국 측에서 질문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두순 교수]

정보들은 굉장히 자세하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해결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통일되기 전에 한국에서 가끔 언론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스위스에 만콘토 최근에 버진 아일랜드에 조세피난처문제가 한국에서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인키피브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정말 독일처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독일처럼 과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회의가 앞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국하고 독일하고 다른 점들을 부각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는데 그 전에 한가지 기술적인 질문이 있는데 수사절차가 코블렌츠와 보쿰에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쿰이나 코블렌트까지 돈의 은닉이 가능한 지 거기까지 결국은 문제가 파급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보다 걱정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경제는 사실은 두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국민경제 다른 하나는 군경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어느 정도 규모인

지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최소한 북한경제 전체에 4/1~3/1은 군경제가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략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동독의 국가인민군(Volksarmee)이 서독의 군대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그저 독일통일사회당(SED)의 자산정도로 끝날 것이 아닌 것이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외에도 별도로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욱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연관된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독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독일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돌아보면 보완할 측면도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당문제 관련해서 독일과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2경제를 말씀하셨는데 군부의 북한전문가들이 제시한 하지만은 GDP가 2백 달러 정도 된다고 친다고 하면 그 중에 공식적으로 국방비가 5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의미에서의 숫자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군대 이상으로 노동당이고, 그리고 노동당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 제일수석, 김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는 물론, 경제적인 부의 독점도 상상하기 힘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경제는 인민 경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층의 개인적인 부분, 가족적인 경제라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2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북한이 제2경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자금 소스는 거의 불법적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걷는 세금보다는 해외에 무기판매, 마약 심지어 위조지폐 등을 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독일은 사통당이 다른 민자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일어나게 되면 독일하고는 다른 측면이 노동당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이 계

시지만 노동당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당은 통일 이후 없어질 것입니다. 노동당, 특히 김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본이 해외에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문제일 것이다.

독일은 정당이 가지고 있던 사통당이나 민사당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리하면서 그 기준이 일단 동독의 정당들도 다른 정당들과 경쟁을 한다는 전제를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전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독일에서 동독정당들의 자금을 처리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통일 이후에 동독의 구정당들도 서독의 정당들과 똑같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독의 정당, 사통당이 가지고 있던 정치자금이나 예산이 서독의 정당들보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건 공정한 정치게임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찾아내고 몰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통당을 정당한 정당으로 인정을 한다면 새롭게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치자금이 사통당에게 정당한 자금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아마 논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에 대한 정치 자금이라든지 혹은 정당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당한 정당 재산에 대한 근거가 혹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아까 위원회 말씀 하시고 거기서 결정한 것으로 추측을 하지만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의제기 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토만 실장]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송태수 교수]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주제를 굉장히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나온 것과 연관해서 좀 더 드리고 싶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여기에 은행 계좌들이 761개의 은행에 조회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 은행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사통당의 계좌 천 여개를 근거로 해서 범위를

설정하신건지? 왜냐하면 첫째, 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범위 설정이 굉장히 애매했을 텐데 그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정종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김박사님께서 하시겠지만 노동당의 소유 자산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김 일가의 자산이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그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호네커의 은닉재산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수상급의 은닉자산의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장]

실질적인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재산취득과 실질적인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한 재산취득이 어떻게 구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니 재정에 지원을 받은 부분은 정당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른 재산취득이 아니므로 결국 그것은 환수하게 되어있으나 그 외의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기준은 없었는지 그 이외의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는지, 사법적인 판단에 맡겼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납아우프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

전체적으로 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군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그 점은 답하기 어렵고, 코플렌츠보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검증위원회가 1993년 보고에 나온 것으로 코플렌츠를 압류 수색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청소년 GMBH 유한회사 하나를 압류 수사 했던 것입니다. 에너지 수자원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노조 기관이었는데 코플렌츠하고 보험에 있었던 것이 서독의 노조였는데 서독에 있었던 노조 쪽에 구동독 노조의 재산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압류 수색을 했던 것입니다.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은행의 경우 761개 은행의 계좌라기보다는 761개 은행을 조사를 했던 것이고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건, 어떤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재산 조사와 관련해서 중요했던 것

은 제가 추측하는 바인데 아마도 사통당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통당의 행동에 대한 추측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엘리트 집단이 만들었을 텐데 그 요건이 은행이 761개로 했던 요건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통당과 관련해서 요건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위원회가 상당히 투명한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3가지 케이스 그룹을 만들어서 업무를 했는데 그 절차가 매우 합법적이고 투명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명 가능성이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개념이 정의가 안된 기준을 적용할 때 투명성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개별 사례에 적용을 할 때에도 사통당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보충하자면 코플렌츠와 보훔의 경우 다른 장소도 있었습니다. 구 서독의 경우도 압류수색이 이루어 졌었는데요. 사통당이 전략적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유한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인을 통일이 된 후, 신연방측 뿐만 아니라 구연방측, 구서독쪽에 있는 회사들도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기 때문에 코플렌츠를 압수수색한 것이고, 정당의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사통당이 보훔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DZ라는 사통당의 유젠트하인이란 FD요트라는 조직을 수색되었다는 것이고요. 노조와 관련해서 보충하자면 FDZB는 구동독의 노조인데 1990년, 통일이 되기 전까지 구동독의 노조가 항상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독에 있었던 금속노조나 그런 쪽에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재산을 서독 파트너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서 구동독에 재산을 서독쪽으로 왜냐하면 보훔에도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한두번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보니 받아주었는데 그러다 계속해서 재산을 옮기면서 서서히 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당이 통일이 되면서 서독 쪽에도 결국은 정식 통일 전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흘러들어 간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현상을 양산했고요. 또 해외에도 정당의 재산을 많이 보냈죠. 관청간의 협의라는 미명하에 스위스 관청이나 스위스 검찰, 은행 이런 쪽에 해외 조사를 할 때 스위스와 특히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외조사의 경우에는 그 당국의 관청과 협력이 중요했는데. 간부의 경우 높은 당 간부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취한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미 인민재산을 자기 사유재산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임.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코코라고 하는 상업조정기구가 있다고 해드렸는데 커머셜 코디네이션 샬코브스키가 담당자였고요. 이는 정당조직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국가조직이었습니다. 당시 대외 교육부 안에 있었던 통일되기 전에 구 동독 사통당 하에 대외교역부에 있었던 상업조정부서였습니다. 여기에 상업조정부서가 대외교역부의 부서이면서 해외의 기업 등에게 자본 출자 등을 통해서 기업이나 회사들에 출자를 해서 외화를 조절하는 업무를 했던 것이므로 해외에 출자된 재산 이런 것들이 모두 불법적인 것이므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는 많이 있으며 예를 들어 북한의 김 일가의 재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특히 코코라고 하는 대외교역부서도 무기거래라든지 기타 이런 거래를 통해 엄청난 외화를 조달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아마 북한도 해당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당 간부들의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국가의 외화부족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이용되었는데 코코라고 말씀드린 이런 부처가 북한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자금과 관련해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989년에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총선이 있었고 바로 인민회의가 나타나게 되는거죠. 정당 자체의 구조가 변합니다. 구동독의 사통당이 있고 소위 블록정당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었던 사통당 하위에 있던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 정당들이 지자체의 선거에서 자유총선에 의해서 총선이 이루어지면서 구동독 주민들이 직접 뽑은 정당이 갑자기 합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즉, 구 동독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적인 선거에 따라서 구성된 인민회의 사이에 정당구조 정당의 내용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당 자금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금지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 복잡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사통당의 경우에도 재산의 몰수, 재산의 소유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 다만 과도했던 권한을 환수했다라는 것, 법률적인 용어로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몰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다시 환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

참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언할 때 잊어버린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이 정당들에게 있어서 자유권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정치적으로 정당이 재산을 가져야 하는 것 헌법상으로 자유를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 다만 합법적으로 법치국가에 의해서 사통당이 정당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당시에 우리는 실증적인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성낙인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교수로서 독일이 통일 이후에 사통당의 재산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서독 기본법과 같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조항을 개수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서독에서 현실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에 비추어본다면 혹여 사통당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재산 등 말씀이 많이 나왔다면 통일 이후에 바로 그 동독의 핵심조직인 사통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정종욱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경우 만일 독일과 비슷하게 통일된다면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혹여 독일에서 그런 문제가 통일 이후에 재산은 안됐길래 정당에 대해서 재산일부 몰수하는 것으로 그쳤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정치적으로나 헌법 학자들 사이의 논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화 과정이라는 것이 통일이 된 국가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시장경제로 넘어오면서 사유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체제 전환국가,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오면서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되면서 시장경제로 넘어오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산수단이 토지나 전부 국공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으로 사적소유로 넘겨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세 배로 쳐주었다고 하시는데 세 배로 쳐주어도 당장 동독 사람들이 그것을 살 돈이 없고 임차할 수준만 된다. 서독 사람들이 사겠다고 나서면 그만 아니냐 그런 문제이죠. 그런 과도기적인 양상에서 그들의 소유권은 아니지만 통일 이후에 이용권에 불과하지만 그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법적 조치가 보호되어야 정당에서의 실질적 법치뿐만 아니라 통일독일의 동독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문의 가지게 되어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슈뢰더 교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까.

[슈뢰더 교수]

마지막에 하신 것은 소유권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이 길어질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동독자체에서 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민주주의, 예를 들어 인민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헌법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먼저 혁명이 있었고 사통당에서 새로운 강령이 있었고 그 강령을 통해 단독적인 대표성을 스스로 포기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통당이 스스로 죄가 없다. 손을 털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89년 이후에 사통당이 완전히 새로운 강령을 내걸게 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독은 형식적으로는 단일정당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련 주둔군이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당형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민사당, 기민당도 있었고 소련 점령군은 두 번이나 기민당에게 강요를 해서 사통당에 반대하는 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민당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두 개의 정

당이 생겨났고요. 형식적으로는 다수표를 인민의회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다수표에 의한 대표정당이었던 것입니다. 사통당이 연합정부를 형성하려고 했을 때 89년 9월에 그 때 기민당도 여기에 의회 의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민당이 서독을 통해 파트너를 얻으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독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서 자매결연을 맺으려 했는데 그때 콜수상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의회로 가서 정당하게 투표를 하자 그리고 콜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의견을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오염된 기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민당과 새로운 기민당이 함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투표가 일어나고 50% 이상을 기민당이 얻게 되었고 각자 정당도 각자 후보를 내 걸 수 있었고 사통당과 민사당은 16%만 얻었습니다. 금지당이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통당은 소비에트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소비에트는 사통당을 비호하고 있었고 통일을 위해서는 소비에트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소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범치국가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도 만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당도 없앨 수 없고 금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통당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를 몰수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청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이리면서 민사당은 이러한 재산들이 신탁청에 맡기게 되면서 민사당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당 시절에 “못된 일을 하더니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너희들의 행동을 금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의 돈만 필요하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민사당이 90년에 법적 근거를 얻지 못 했다면 서독 연방정부가 연방의회가 사통당, 민사당에게 금지령을 내렸다면 오히려 사통당이 회복되고 부활되는 현상을 겪었을지도 모르고 사통당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법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고 사람들이 사통당에 대해서 존재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갑자기 이해되어서 상기시키면 사통당의 금지는 위헌적이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연합을 이룬다고 했을 때 나의 계약 파트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을 맞춰야 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금지를 어떻게 족쇄를 채울 것인지 그러한 시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다보면 파트너에게 금지령을 갑자기 내리는 상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하자면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민족의회가 어떤 조정에 의해서 정말 흡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바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조정하도록 둘 정도로 무시하지 않고 지금 독일 통일에 의해서 자유 투표로 의해서 선출된 인민 의회가 있는 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신다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보충판매가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보충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된 불쌍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동독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서독의 30%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생산력을 봤을 때 서독보다 생산적이었다고 봅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서독에서 동독과 같이 일했다고 생각하면 서독에서 훨씬 돈을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30%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동독의 생산력만 보면 전혀 나쁜 경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인민의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고 공산당에서는 디카프라고 하는 다른 명칭을 가졌을 뿐 공산당은 엄연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FDJ라고 하는 티를 동독에서 입고 다니면 문제가 없지만 서독에서 입고 다니면 경찰에게 잡혀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데 명칭만 바꾸어서 경찰에 와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스운 과거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아까 정당금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독일 기본법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당, 정당의 금지를 위한 심사 신청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를

위해서는 다른 헌법 조항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활동을 최소한 방한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케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제장관]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국 측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정당을 금지시키기에요. 예를 들어 적어도 어떤 공격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 독일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더더욱 쉽지 않았겠죠. 형태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통당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강령을 도입했던 사통당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것을 입증했어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있는 국가주의 국가사회주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NPD라고 하는 테러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독일의 NPD에 대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이성에 근거한 것이고 사법적으로도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법률가적 시각으로도 전혀 수정이 필요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또한 법률적인 측면 아니라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형태, 흡수라는 말을 하셨죠. 그게 흡수든 식민화라는 의미이든 법률적으로도 틀린 용어이고 구동독은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신연방정부를 만들었고, 독일의 기본법에 적용범위가 동독의 자유총선에 의해서 선출된 인민의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용어로 명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민의회가 구동독에 있는 신연방주가 서독연방공화국의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형태였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헌법

을 만들었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힘들었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었고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헌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런 의미에서 구동독 주민들이 구동독의 헌법을 새로 만들지 말고 서독의 기본법에 근거한 체제를 받아들이자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매우 정치적인 디스커션과 의사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흡수된 것이 아닙니다.

[루디거 폴 박사]

제가 범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정당 금지와 관련해서 첨언하고자 합니다. 좀 더 다른 문제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사실상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독일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독보다 열등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억압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부적인 저항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PDS 라는 것은 구동독의 사통당의 후신인 구동독에서 유권자의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구동독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압했던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것이 반증해주는 바는 구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동독의 정당을 금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큰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구 동독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그 정당을 금지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헌법에 위반된다면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 동서독이 하나가 됐지만 정서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그리고 또한 PDS가 동독쪽에서 사실 유권자의 표가 구동독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한 지 20년이 되었고 민사당의 유권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이 프로세스는 어쩌면 내부적인 저항감이 해소되고 있다는 즉, 세대가 바뀌면서 정서적인 동독주민들의 열등 의식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PDS 현재는 민사당의 유권자의 표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당금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을 금지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역풍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건 이때 중요한 것은 민사당과 사통당이 지난 20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 눈 여겨 보십시오. 사통당이 민사당으로 변했는데 이 정당이 초기에는 동독의 지역정당에 불과했습니다. 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동독에서 동독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PDS가 볼 때 정당 전략적으로 이런 유권자들만 가지고는 생명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표가 줄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사당이 전략적으로 변모합니다. 더 이상 동독의 정당이 아니라 전국적인 독일 전체적인 좌파당으로 변모해가는 것이거든요. 구동독에 대한 지역정당성을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유권자는 그쪽이지만 따라서 민사당의 발전 추이를 보신다면 사통당이든 민사당이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 정당들의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파케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제장관]

저도 짧게 한가지 언급하겠습니다. 한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90년대 초 많은 사람들이 민사당이 단지 짧게 나타났다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과정에서 실패감을 그 정당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유권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천천히 지금 20년 동안 통일 25년 동안 그러나 구동독에는 민사당이 여전히 유권자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당에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 지지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지지율이 줄어들고 있는 속도가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은 경제적,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명심하십시오. 독일에서도 교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발언 감사합니다. 슈뢰더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시민당 원내대표]

제가 두가지 시민당 준거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좌파당은 전독일 그런 정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실질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 정책이라든가, 각 주의회 대표로 나온다는가, 그런데 예를 들어 시스템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서독에서 오히려 자신의 투표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반대해왔던 서독에서 득표를 얻는다는 것이요. 재미있는 것은 좌파당이 오히려 성격 자체는 보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굉장히 많은 인력을 통해서 연금관련 상담을 해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당은 그 이후에 지금 유권자 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어느 당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당의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당원들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을 보고당을 떠나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계속해서 민사당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당이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정말 제가 민사당을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족민주당이라고 하는 NPD에 대한 당에 대해서는 금지를 한다면 다른 당도 금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사당에서 가장 높은 문제가 되는 것은 스타 컨설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 당원들을 끌어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당원이 줄어든다고는 하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안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안두순 교수]

독일의 정당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중에서 성낙

인 교수님하고 정종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따라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불법화시켜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남한하고 북한의 정권이 파트너 ship에 입각해서 협상을 할 때 그때를 상정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합법적으로 사후적으로 인정하실 것에 대한 우리 걱정이 있고 두 번째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3조에 의하면 북한 영역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정권은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고치려고 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파트너ship에 입각해서 고치면 문제가 없으되 아까 상정한데로 만약에 북한이 불법단체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붕괴가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지 우리가 파트너로서의 북한당국을 불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영 교수]

쉬납아우프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구동독 정당의 재산을 국내와 해외에서 찾아냈잖아요. 그 재산을 동독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몰수 재산을 동독지역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법률이 있었는지, 또 실제로 동독만을 위해서 그 돈을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

제 발표에서 기준을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통일조약에 명시된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정당 대중조직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만일에 실증적으로 법치 국가적인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재반환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동독의 재건을 위해서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장]

최근에 해외에서의 은닉재산을 밝혀낸 노름사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

들이 어떻게 정교하게 은닉되고 그런 것들의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의해서 확인했는지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관련이 되었었습니다. 노름이라는 것은 제가 담당했었고요. 첫 번째 스위스에서 소송이 있었던 공판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노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유한회사가 40년대 말, 50년대 초에 동베를린에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사당도 있었는데 오세아 출신의 사당이었고 이 사람들이 당시 구동독 사통당 하에서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구동독이 대외교역을 할 때 이 회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서독의 회사가 구동독 쪽에 신발을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이 때 예를 들면 서독회사는 이 노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노름이라는 회사가 구동독의 정당과 손을 대준거지요. 이 커미션을 노름이 받았는데 이 커미션을 구동독에 반환이 된 것이 아니라 노름이 스위스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위스에 있는 계좌에 병커처럼 모으게 된 것이지요. 돈을 그쪽에 모아둔 것인데 역사적으로 결국 이런 회사들이 오스트리아 공산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런 것들을 보낼 때 결국 오스트리아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무기 등을 구동독으로 거래할 때 커미션 방식으로 노름을 거쳐서 무기거래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스위스에서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베를린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문서를 갖게 되었는데 쉬납아우프 선생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행정문서들을 보니 노름이 신탁청 하에서 관리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저희 쪽에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갑자기 오스트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 사람이 다른 돈을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결국은 회사를 성장시켰고 또 출자자본은 5만 마르크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켰을까 조사를 해보고 회사장부를 조사했더니 스위스 계좌가 장부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계장부를 통해 스위스에 이것이 도달하게 되었고 스위스 검찰과 협조를 해서 스위스 계좌를 조회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상 국제사범공조를 하게 되어 있어서 노름회사 트렌드카본 사장 두명과 오스트리아 은행장의 도움을 받아서 검

증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을 때 신탁청에 위탁해서 돈을 신속하게, 그리고 스위스 은행들도 관료적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룩셈부르크나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관청들과 공조를 해서 이 돈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돈이 없어져 버리면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부분적으로 이미 유출이 된 상태였는데 노뭉이라는 회사가 오스트리아에도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신탁청에 관리하에 있었던 회사에 재산인데 이 재산이 유출 됐다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스트리아의 은행도 조회를 하는 매우 복잡한 은행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 연방 법원에 스위스 검사 도움을 받아서 스위스 은행계좌를 가지고 취리히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이죠. 법률소송에서도 일심, 이심, 이렇게 재판을 했었고요. 이것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드렸고요. 아주 긴장감 있는 노뭉, 신탁청의 관리에 들어왔던 두 개의 유한회사에 대한 조사였었고 이것이 수십년에 걸쳐 거래했던 것을 밝혀야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검증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 공산당이 40년대부터 이들이 관여했다는 것 또 정당의 강령에서도 결국은 사통당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오스트리아와도 관련이 되어서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동독 사통당에게 가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범인을 이용한 국제적인 사범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때 우리가 알았던 것은 오스트리아 공산당이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돈이 가장 많은 정당이었고 왜냐면 전후에 엄청난 거래를 통해서 산업체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공산당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제적으로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법원에서 일심에서 패소했었고 이심으로 가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위스 사법계와 공조해서 이루어냈던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외줄타기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적의 기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것을 결국은 나중에 독일로 매각을 해서 독일회사가 된 회사를 스위스 법원에 세웠다는 것은 세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복잡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형사처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스위스 은행, 스위스 검찰의 공조를 끌어내는 것은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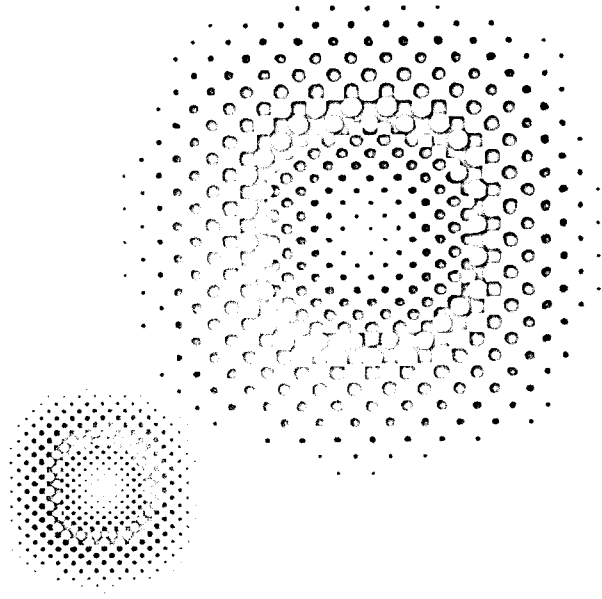
[천해성 실장]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는 오후의 진행을 걱정하는데 걱정과는 달리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설명하신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 이후에 그 이전에 상황에 대한 과거사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수준에서 또 이는 정당의 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일이지만 헌법과 법률, 독립된 검증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벤트만 실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여러 참여했던 부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 구체적 위원회 구성부분까지 정리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최근 한국에서 인터넷 매체 중에 카리브해의 소위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한국의 유력한 전직대통령의 가족, 우수한 기업인, 문화인 등 계좌가 매주 몇 명씩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쪽 지역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수한 그룹의 회장님의 계좌가 나왔다고 하나씩 훨씬 더 은닉 재산에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보면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자산관리공사라고 있는데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그것을 처리할 때 기업인들의 은닉재산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끝까지 찾아서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안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한국 내에서 통일과 관련한 시나리오 중에 정부가 가지는 아주 공식적인 통일에 대한 방식은 합의에 의해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급진적인 통일을 염두해 두는 것도 사실이기에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것은 설명해주셨던 장벽붕괴 이후에 통일, 곧 짧은 일년 사이에도 동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컨대 실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은 통일을 이루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현재와 같은 조선노동당 조직이 이미 북한 주민들의 주권적 결단이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조선노동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좀 더 다양

한 경우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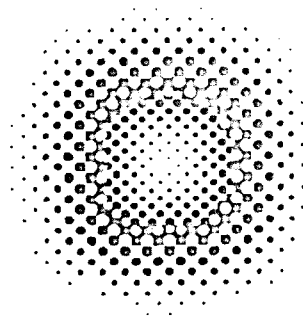
저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해성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동독이 당시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인민의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모범적 사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좋은 예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이 신선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구요. 내일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오늘과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통일에 있어서의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토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는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즐거운 만찬 되시길 바랍니다.



3

구 소유권 반환 요청 처리

2013. 6. 28



PART 03 구 소유권 반환 요청 처리

■ 일시 : 2013. 6. 28, 09:30~12:30

■ 사회 : 천해성 실장

[통일기반조성과장]

네, 그럼 지금부터 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2일차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폰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와 동일하게 실장님께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벌써 두 번째 날, 세 번째 세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만찬 때 우리 홍양호 차관님께서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나 타이트하게 일정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정을 했던 것은 세 번째 세션이 구소유권 반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우리와 독일 측이 협의한 끝에 오전과 오후 회의의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업의 사유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측 그리고 독일 측의 발제를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전 일정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 반환요청과 관련된 문제는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오늘 회의 때부터 새롭게 어제 회의 참석 불가피하게 못하시고 오늘부터 참석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독일 측에서 한분, 그리고 우리 한국 측에서도 한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측에서 요하네스 루테비히, 전 신연방주 특임관께서 오늘 회의부터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요하네스 루데비히 특임관]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에서야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이런 회의에 2년 전에도 참석한 바 있었고 작년에도 참석한 바 있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특임관, 그리고 특히 재무 관련해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 재건에 대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총리실에서 이런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동독 경제 재건이 경제부로 넘어가면서 업무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거의 7년간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특임관님 감사합니다. 한국 측에서도 오늘 새롭게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한국정치학회 회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유호열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실 참석했어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세 나라 학자들이 최근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핵심되는 안건인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저희 대통령께서 어제 중국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회의를 하느라고 어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참석하면서 어제 제가 들은 얘기들, 배운 얘기들 기회 있을 때 들려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두 분 위원님들 참석하신 것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어제 빠지셨지만 오늘 더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에서 송태수 박사님께서, 동독 측 기업 사유화와 관련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송태수 교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실제 직접적인 정책 결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의 앞에서 이렇게 제가 독일 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근거 하에서 특히 한국이 어떤 함의를 받을 수 있는지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국에서 현재 독일 통일, 특히 신탁청 사유화 정책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연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영화 및 산업구조 전환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독일 통일에 대한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일 후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 사유화 정책 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비용과 경제적, 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 국유자산 사유화나 민영화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아래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 토지 소유권 정리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제도 논의 되었다시피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시장경제적 도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북한의 지역 및 산업적 특성이 어떠한지 또는 산업과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경쟁력이나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통일비용 및 경제적, 사회적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의 산업구조 성격 및 현황에 대한 연구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유화 관련한 연구에서는 세부 주제별 연구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총론적인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서는 어제 논의되었던 특히 농업, 농지 사유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자산소유권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민영화 원칙 관련해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시현된 민영화 정책에서는 나치 및 동독 정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몰수된 자산의 반환 및 보상원칙이라는 일관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적 원

칙의 회복을 통해서, 법치국가적 정의를 회복한다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서 초기에는 구소유자에게 반환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였지만 구 소유자 반환 원칙은 수 많은 소유권 분쟁을 유발하였고 이는 2차리에 걸쳐서 투자 장애제거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를 통해서 완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 거래가 거의 부진한 상태에서 시장가격도 형성되지 않아서 보상기준 수립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농경지의 경우에 1935년 토지 단가 가격의 세 배를 원칙으로 해서 정했고, 그에 따라서 보상반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상가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들이 토의되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상당히 많은 쟁송들이 가능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결정 절차를 걸쳤고 또는 어떤 근거들이 있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어제도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반환보상 보다는 이 부분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사유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법 제도적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남한 내에서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거나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법제 내용에 대한 언급 보다는 독일에서 이런 법제와 과정에서 특히 사유화 관련해서 어떤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총괄적인 평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 정책은 비록 4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시 신탁청과 그에 따라서 신탁청이 준비되고 출범하게 되는 90년 9월까지의 시기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90년 10월부터 91년 봄까지의 신속한 사유화 진행시기, 세 번째로 소극적인 경영 정상화 동반기로서 91년 중반부터 92년 가을까지 그 다음으로 끝으로 네 번째, 92년 가을부터 94년 말까지 산업 핵심의 부분적인 정상화 내지는 회복이라고 하는 뭔가 나름의 정책적 변환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각 단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히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신속하게 매각협상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 망 산업이라든가 항공, 전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제한적인 매각협상 기준이 있었을텐데 어느 분야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셨던 것인지. 그 다음에 2단계 관

련해서는 기업 분할법 기준 설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사유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크게 구 동독 지역의 주정부가 특정 핵심 산업의 회생을 위해서 신탁청에게 지주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공적 사례는 무엇이었는지 혹은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시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업 민영화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준비기, 집행기 그리고 감시기라는 엄격한 절차적 체계화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단계에서 상호 몇몇 대치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든가 목표설정으로 인해서 부분 산업별 회생 혹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 경제 회복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평가됩니다. 이런 신탁청에 대한 평가 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신탁청이 기업 인수 후에 인수자의 수자 계획과 고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비공개 방식 매각을 선호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혹은 매각대금만 낮추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및 고용은 오히려 인수자에게 일임하고 기업을 조건 없이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높이는 방식을 생각한다면 뭔가 이게 두 마리의 잡을 수 없는 토끼를 쫓기 보다는 어느 한 쪽에 집중하는 방식은 어떠했는지의 문제. 두 번째로는 독일의 신탁청이 신속한 사유화에 치중하고 구 동독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엔 소홀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자생능력 회복의 측면에서 물론 현재 25년이 지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동독 지역의 지역 경제가 회생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경영 정상화 정책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히 대기업을 사유화한 것으로 인해서 동종 업종에게는 매각하지 않는 방식은 어떠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 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대기업들이 많이 있고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의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경영 효율성을 중시해서 독일식 사

유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특히 사회적 수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독 주민에게 종업원 지주제라든가 아니면 국민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했음직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잘 아시는 한스베르너진이라든가 베를린대 진 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동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실제로 기업의 매각대금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구 동구권 전체에서 기업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굳이 현금 매각에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두를 필요가, 다른 방식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괄하자면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주택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좀 논의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관리 기관이나 아니면 운영 방안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산관리 전담기관이 법적으로는 신탁청이 연방재무성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으면서 업무관련해서는 연방재무성이라든가 연방경제성 혹은 기타 경제관련 부처 공동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설치된 연방의회신탁관리청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연방감사원 또는 신탁청 자체의 내부감사기관 또는 행정위원회 등의 업무 감독 기능도 수행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 매각 내지 사유화에 있어서는 경쟁 제한적 요소들에 대해서 EU의 감독 내지는 집행위의 감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감독에서는 수행 절차라든가 아니면 회계감사 또는 정책감사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독망을 피해갔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탁청 스캔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리의 유형을 한다면 어떻게 유형화가 가능한지. 우리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의식으로 제기를 드리겠고요. 또 각 유형별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지 혹은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탁청 자체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탁청 업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사업을 수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직원 수는 초기에 147명에서

활동 종료 시점에는 약 4,200명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고급 인력을 확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동시에 업무 과정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상당히 업무에 따라서 숙련도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를 요구했을 것이고 이런 점이 있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의 선발이 있어서는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또 적용했어야 했고 그런 만큼 이 인력들이 엄선되었고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라면 이후에 이관기관 4개의 후속기관에 일정정도 사업을 수행한다라든가 하는데에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인력들은 어떤 이관 과정들을 거쳤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봉착해야 될 문제이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화폐통합에서 화폐교환비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 조건 또는 통합 과정에서 코메콘이 붕괴되고 또 기존에 과잉 노동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던 문제들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신탁청이 매우 짧은 시기 동안에 사회적 다양한 요구들의 분출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정정도 잘 조정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회 보장제도라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알맞게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고 또 재정적자 심화 내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높았다는 점들 그리고 기업에 가치에 현실화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어쩔 수 없이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총괄적으로 적어도 민영화에서 가장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특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어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원칙이랄까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송태수 교수님께서 국유자산 민영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특히 독일 측에 제기 되는 여러 가지 질문 내지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역시 현재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합리성 내지는 타당성을 찾아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또 그게 단기적으로 5년, 10년 뒤의 평가 또 20년 뒤의 평가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과 또 지금 이미 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상황과 인식을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독일 측에서 파울린 전 신탁청 국장님께서 신탁청을 통한 기업 사유화와 관련해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울린 국장]

제가 오늘 이 말을 꼭 하려고 어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은 행복이었고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과 행운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신탁청에서 일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 희망하는 바로는 우리 한국 측에서도 여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다르게 했었는지 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표는 3개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산업 부분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사

유화의 준비, 두 번째는 사유화의 핵심 부분이고 세 번째는 결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프로젝트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준비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대형 프로젝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화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전혀 모르는, 다른 선택이 전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일단 준비를 해보자. 일단 시작하고 나서 우리 방법이 틀렸다면 그 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청은 3월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30명 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후에 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THA는 신탁청의 약어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기업 조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조사 후에 첫 착수 부분이 준비 단계의 세 번째 부분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시간표를 그렸는데 표에 나타나지 않는군요. 네, 죄송하지만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부문으로 타임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이라고 했지요. 제 생각에는 대충 한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테이블에는 사유화가 되지요. 말 그대로 사업이 급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결산 부분입니다. 거의 반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준비에서 이미 사유화를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결산, 청산부분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타임테이블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먼저 준비하고 조사를 하고 청산이라든가 파산선고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기업 조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일단 그 기업의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청에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기 전에 이러한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지 못하시겠지만 신탁청이 시작된지 2년이 되었는데도 새로운 기업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본래 기업 외에 또 다른 자회사가 나타나는 등 계속해

서 기업 아래 또 하부 기업이 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대리점이라든가 지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말해서 각 기업마다 저희가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탁청 번호였습니다. 너무나도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에 각각 이름을 붙이고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에 대한 첫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건전화로 시작해야 했지만 건전화를 시작하다보니 한 달도 되지 않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컨셉트, 소위 말해서 어떤 기업의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의 수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정보들을 얻기 시작했었는데요. 초기에는 정말 혼란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업에 매달려서 세 개의 부분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업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over view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신탁청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밑부분이 잘렸네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이후부터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런데 우리 구조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은 베를린 중앙 업무성으로 보내고 그리고 각각의 다른 작은 기업들은 각 우리 다른 연방주에 있는 작은 사무소에 보내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어서 이 기준보다 넘으면 베를린은 중앙 사무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한 것이 대기업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책에서 이것을 스캔하느라고 저도 읽을 수가 없는 수치이네요. 여기에 뒤에 보면 사실 만약 읽을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써두었던 각각의 코멘트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각 사무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각각 코멘트를 남겼는데, 책을 스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캔이라서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각 연방주 별로 사무소 별로 각각 다른 업무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연방주는 좀 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예,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서도 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여기서 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표의 글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제는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신탁청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해 횡단 기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나면 각각의 operation에 예를 들어 사유화, 건전화, 청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횡단적 기능에는 참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신탁청에서 어려운 업무가 있었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이런 횡단적 기능에 기인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횡단적 기능이 모두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재사유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을 겪은 다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횡단적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오늘날 훨씬 더 다르게 할 수 있었고 지금 전반적인 그런 중앙 사무소에서까지 나서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초기의 활동인데요. 아직도 사실 준비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필요로 했을까요. 제가 여기에다 천억디마르크라고 대충이라고 썼지만요. 저희들은 사실 초반에 이것을 전부 다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시에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의 기업들이 말 그대로 거의 파산상태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했다는 천억디마르크라고 쓰여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지만 저희는 사실 작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건전화에 대해서만 얘기했었습니다, 기업어요.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기업 해체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구매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익숙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터링 회사라든가 아니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전부 해체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사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은 각자의 사유화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산 부분이 되었는데요. 더 이상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단도록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 초반에 사유화는 어떻

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인데 요, 지금 말하자면 모회사를 먼저 사유화를 시켰고, 아이젠 하크에 어떤 공장이 있었는데 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라비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 된 동독의 차량이요. 그 다음에 또 스피카오라든가 다른 동독 지역에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드워이라는 곳에도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동독에서 새로운 공장을 다시 한번 어떤 한 부분을 이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초반의 사유화 들은 제 생각에는 한 90년 8월에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부분에 오겠습니다. 제2장인데요. 이제 사유화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초반에 사유화를 충분히 준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핵심 부분인 사유화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2년 반 정도가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사유화를 시작을 했을까요. 일단 사유화의 규칙이 무엇 이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략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전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전략이 많지는 않았 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화의 형제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건전화 그 다음에 청산 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 신탁청은 건전화를 전혀 안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렵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기울여 서 건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먼저 그 기업의 건전화를 해서 먼저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사유화의 배경,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화는 적어도 제 시점에서 말씀드린 다면 소위 말하는 양도 컨셉, 어떻게 보면 이제 take over concept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 일까요.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나타나서 '나는 이 기업을 이런 상태로 구매하고 싶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take over conce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컨셉이 좋으면 사는 것이고 컨셉이 나쁘면 이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take over concept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까만색으로 쓴 모든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지식입니다. 먼저 그 기업이 시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가, 그 다음이 상품 개발입니다. 상품에 대한 개발이 어려운가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가, 상품 개발 같은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그 다음은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일부분에는 정말, 사실 동독의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니다. 일부는요. 그런데 두 가지 그들이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마케팅이었고요. 왜냐하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그들이 정말 마케팅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겠지요. 명령이 내려지는 대로 이행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한다면 정말 앞으로 그 기업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외부 사람들을 계속 투입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로지스틱과 컨트롤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독 사람들이 어찌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말을 했었던 것이요. 동독인들은 굉장히 아주 빨리 물류에 대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령만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었고요. 예를 들어 매카닉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매우 똑똑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파이낸싱 부분에 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파이낸싱할까요. 기업이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썼어야 했고요. 그 다음은 투자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용인들을 둘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합치면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매자가 와서 '내가 이 기업을 사겠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겠다. 점점 15%, 20% 이렇게 내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구매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면 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는 구매자들, 투자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여러분만 정직하게 여기에 대해 접근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을 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면담, 상담을 했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기밀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상담 결과,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구매자가 이런 구매를 했다고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그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사유화 과정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중에서는 이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직원에 대해서 당신이 이만큼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신탁청에 다른 어떠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표현날이라고 하는 어떤 말을 좀 패널티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기업에 대한 어떤 패널티는 전혀 문제 없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관련 패널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르크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기업들은 결국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들을 감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패널티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발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사회를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서 어떤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패널티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결국 위험성을 부담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실하게 성공사례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던 것이 사유화의 주요한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take over concept,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들을 쓰고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고 온 concept 계획서가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조차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황령이라든가 안 좋은 불법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concept는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컨셉을 정말 기업이 너무나도 컨셉이 많아서 내용에 있어서 거의 상담도 할 필요가 없었고 레오라고 불리는 프랑스계 회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컨셉을 쓰는지 우리에게 배워간 것처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계약부분으로 넘어옵니다. 계약의 조건입니다. 어떤 것이 쓰여 있어야 합니까. 구매가가 쓰여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구매가를 말하려니까 제가 벌써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군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미디어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는지. 그런

데 사람들은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어떤 기업을 구매하게 된다면 먼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것이 구매가입니다. 구매가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기업이 채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 채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투자가가 구 채무를 그대로 얻어서 가져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2천만 마르크를 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중에서 정말 20%가 정말 구 채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1 마르크 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말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좀 더 많은 제공, 가격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bidding을 하다보면 결국은 구매가가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경제적인 구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서에 제대로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구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 투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지금 어떤 그 이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투기를 했는지 혹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기업을 그대로 인수를 하는 것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계약서에 쓰여 있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 전략 부분에 넘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전략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결정했었고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었지만 사실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이 없었습니다. MBO, MBI라는 것이 있는데 Management By Out이라는 것입니다. MBI라고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가 사는 것, 매니지먼트가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다음에 Manage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해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사서 어떤 다른 회사로부터 그런 회사를 사게 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뱅크폴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적 압박에 의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위에는 전략이라고 써놨

지만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전략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략은 없었고 시간과 압박만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초반에 저에게 그랬죠. 파울린씨 당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사유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쪽에서 초반에서 너무 빨리 서두르느라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빨리 이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부, 집행부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어떤 전략을 세우려면 기업에 대해 이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로 매킨지 포맷이었습니다.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의 두 매트릭스가 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기업에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강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사유화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결합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화를 했거나 아니면 차별화해서 시장화를 했거나 아니면 기회적으로 시장화를 했거나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면 신탁청이 닫은 후에나 결국은 사유화, 매각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든지 우리가 매각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략은 적어도 우리가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그런 최소한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유화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당시에 120개의 기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동차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농기계 부문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콤비나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콤비나트 진보 이런 말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통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제가 농기계 관련 된 것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120개의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150개의 기업으로 시작해서 500건의 사유화를 만든 것입니다. 거의 4배가 된 것이지요. 동독의 기업은 서독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을 해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수가 4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산 부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독일 말로는 청산이라는 말과 결산하다, 끝맺다 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요. 청산이라고 해서 끝맺은 것은 아니다, 이렇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결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4년에 신탁청의 구조를 해체한 것은 저희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청은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업무를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느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신탁청,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BVS로 결국 이름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머리에서 그냥 신탁청은 없애버립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똑똑한 그런 행동 아납니까?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말씀했듯이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를 해체를 할까 생각을 했지요. 네, 말씀드렸듯이 400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의 4,200명까지도 직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다시 0이라는 숫자로 바뀌, 반환해야 하지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문으로 결국 넘어가는데요. BV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름을 다르게 바꿨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1년 전부터 우리 같이 앉아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정부, 집행부를 우리가 점점 해체를 해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없도록 할까.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룹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동독 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독 지원들 마지막으로 바로 제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떤 것까지 했냐면 우리 직원 중에 사유화 했던 기업 중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이 직원, 이 직원 쓰시면 안 됩니까, 이런 연락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Overview를 보자면 이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작업은 계속해서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모두 다르다. 실제에서는 이러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overview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아 아까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목 차

- 1. 준비기
- 2. 사유화
- 3. 마무리

제

1장

준비기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준비기

- a. 시간 계획
- b. 신탁청의 조직/기업 파악
- c. 초기 조치

3

시간 계획

준비	사유화	마무리
1,5 a	2,5 a	0,5 a
기업 조사 및 파악	사유화	계약미행
구상	기업 독립/해체	신탁청(THA)해체
최초 접근	청산	
지사 조직	초기 해체	
구매자와 접촉		

4

기업 조사 및 파악/신탁청 조직

기업 조사 및 파악

1. 합법적 형태 조직(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2. 분야코드
3. 기업마다 번호 부여
4. 일차 정보: 매출, 고용인, 자가생산 비율, 결과, 면적 등

신탁청 조직

1. 대규모 기업- 중앙
2. 소기업-탈 중앙 (지점)
3. 다부서간 기능(Querschnittsfunktion)

5

미사회	기호	비고
모든	U4CH	
결산	U3B1	FEN으로 통합
부서코드	PEN	
통계청 코드	U1B5	국경
소방 코드	U4FB	
국회기호		국경
민수기호	U1B8	
결산	U20F	국경
결산 기호	U4FM	
부-집안	U3LF	
경기 결산	U4ET	
민수기호	U3IV	
국회		국경
부서코드	USEM	
국회	USEI	국경
국회	AHB	
국회기호	KI	국경
국회	VK	1882로 국경

6

이사회	기호	비고
베를린	U1DL	1993년 09월
코트부스	U1FL	1992년 09월
프랑크푸르트/오더강	U1GN	1992년 09월
캠니츠	U4HP	1993년 09월
드레스덴	U4TL	1993년 09월
라이프치히	U5HQ	1992년 09월

1993년 09월 현재

7

신탁청(THA)지사 (1993년 현재)

Lfd. Nr.	지역	연방주
1	베를린	베를린
2	코트부스	브라운슈바이크
3	프랑크푸르트/오더강	브라운슈바이크
4	캠니츠	작센
5	드레스덴	작센
6	라이프치히	작센
7	에르푸르트	작센
8	게라(Gera)	작센
9	술(Suhl)	작센
10	할레	작센-안할트
11	막데부르크	작센-안할트
12	포츠담	브라운슈바이크
13	노이브란덴부르크	브라운슈바이크/작센-안할트
14	로스토크	브라운슈바이크/작센-안할트
15	슈베린	브라운슈바이크/작센-안할트

8

다부서간 기능 (Querschnittsfunktion)

명칭	비고	기간
투자 서비스	영의 사무소	
물보실		
통계보수		
주 권권 업무	주의 회관사합?	?
법		
연습/무역관계		?
컨트롤링(Controlling)		
기업 조사	자정부의 고스	?
Koord. NL		?
Org. JEDV		
등부사업(Ostgeschäft) 견문권	북스 케이스	?
연사		
자 사유중		

9

초기 활동

- 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현금 확보 (추정 금액: 1천억 마르크)
- 기업의 컨셉트(계획) 요구(컨셉트 개발: 건전화, 해체, 사유화 필요한 정리)
- 초기의 사유화/정리

10

제

2장

사유화
핵심 활동

11

사유화

- 사회화의 규칙
- 사회화의 전략
- 사유화의 벗: 희생과 정리

12

사회화의 규칙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수 컨셉트

- 시장 파악
- 제품 개발
- 경영
- 금융
- 투자
- (투자자 별) 손익 계정

13

사유화의 규칙

계약의 조건들

- 구매가격
- 환경 부담
- 부채(인수)
- 투기 관련
- 인수 시기

14

사유화의 전략

- 가이드라인 없음(그러나 시간적 압박)
- 다양한 방식의 접근 (MBO/MBI, 경영 합자회사(Management KG), 독일은행 컨소시엄(Bankenpool), 박람회, 홍보, 주식)
- 그러나 전략적 확정사항: 화폐, 서독법, 소유권 관련 규정/원상회복

15

전략

이사회의 사유화 매트릭스(1992년 중순부터 > 1.5년 후)

- 2개의 매트릭스 조합 (기업의 견고성과 사유화 상황)
- 결과: 사유화 지침
 - 공격적 마케팅
 - 차별적 마케팅
 - 상황에 따른 마케팅

15

제

3장

마무리작업

계속된다

17

마무리 작업

- 1. 과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신탁청, 연방통일관련특별업무청).
- 2. 기구의 해체,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 3. 전망: ... 많이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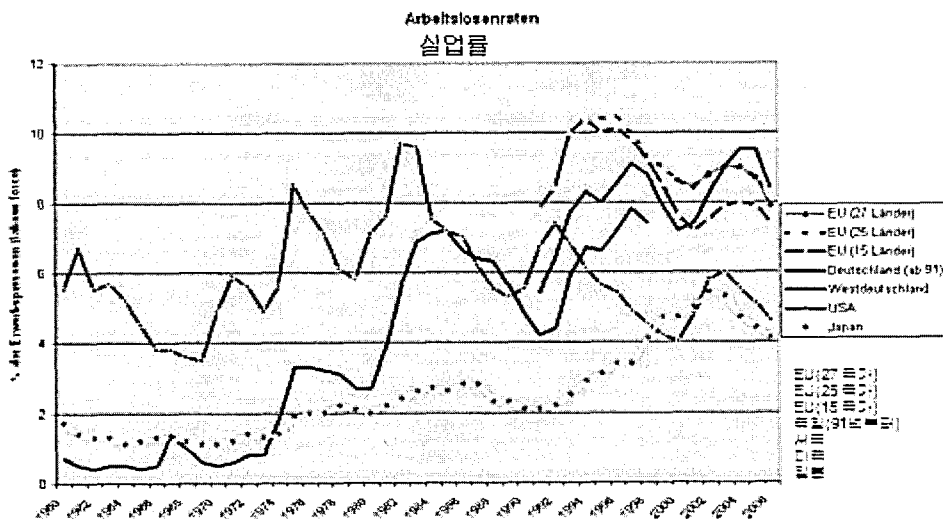
동독-가치 평가

- 동독 모드로 정부: 1조3천억 마르크(DM)
- 1990년 로베더: 6000억
- 신탁청 해산(1994): - 2600억

→ 우리 너무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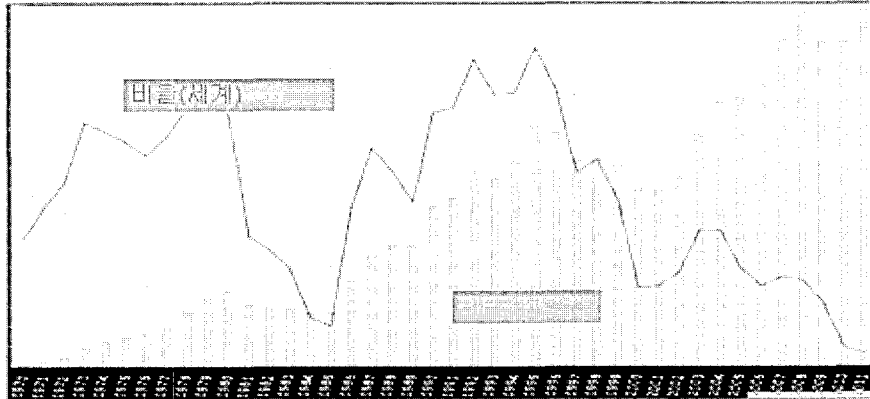
15

10년 이 지난 후 '정상' 수준...



20

GDP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21

질문....

- 속도?????.....너무 빨랐다????.....아니다!!
- “구역” 나누기.....불가능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 신탁청????...좋다, 하지만 기능이 더 좋아야....
- 언론.....감안해야 한다...
- 신탁청 내에서의 관할???.....명료하게 그리고 분야에 따라

22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파울린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고 처음에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했고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말씀이 저희한테도, 저한테도 아주 굉장히 가슴에 와 닿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닥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설명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35분부터 잠깐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조금 토론을 진행을 한 다음에 잠깐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먼저 우리 한국 측에서 또 질문, 제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독일 측 참석자분들이 답변 겸 토론을 먼저 시작을 해 주시고 다시 마이크를 한국 측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루테비히 박사님. 그 다음 파케 박사님께서 하겠습니다.

[요하네스 루데비히 특임관]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 너무나 질문이 많아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답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한국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송태수 교수님의 번역본을 읽었는데 몇 가지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보니까 언급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나면 왜 민영화라는 것이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빠져 있는데요. 내용은 사실 전체 내용에서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구 동독의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시장으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 동독에 고객이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독의 기업들이 고객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 자 오늘 갑자기 하루 아침에 고객이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과거에는 계획경제 하에서 생산됐던 제품을 샀던 고객이 있었는데 시장이 열리니까 갑자기 구 동독의 시장도 무너지고 구 동독의 제품들을 사줬던 고객들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없어진 상황, 이것이 엄청난 시간 압박을 저희에게 주었고 기업들이 고객을 찾지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왜냐하면 국가도, 동독이라는 국가도 고객이 없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또 국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게 핵심 문제 솔루션은 아니었어요. 핵심 문제는 기업이 생산을 해도 팔창도록 고객을 어디서 데려오지? 이게 핵심 질문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access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였던 것이지요. 이 투자자들은 이미 비슷한 산업 분야에서 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객이 있고 비슷한 제품을 생산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와서 이 기업을 인수해야 고객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희가 압력을 행사해서 갑자기 기업들이 무조건 민영화했던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분들이, 또 저희들도 이 기업들이 왜 신속하게 민영화가 되어야만 했던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 시장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 고객이 없어진 상황,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솔루션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 솔루션이라는 것이 최대한 빨리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인수해서 고객컨택을 하고

이미 고객이 있어서 이 기업을, 동독의 기업들을 계속해서 그 투자자가 운영을 해서 고객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 전혀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민영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1단계에서 6단계, 그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단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6단계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자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투자자가 그 산업의 전문가인 투자자가 와서 이 기업을 최대한 상존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했지요. 갑자기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대감도 있었죠. 물론 기업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까, 정치인들, 파울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 동독의 모든 기업들이 정부에다가 그리고 신탁청에다가 자기 기업에 대한 컨셉, 비즈니스 컨셉을 스스로 개발을 해서 어떻게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까라는 그런 컨셉들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컨셉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컨셉을 만드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평가했어야 했습니다. 외부의 제3자, 예를 들어 회계법인 같은데 넘겨서 이 비즈니스 컨셉이 괜찮느냐. 자, 모든 기업들이 갑자기 컨셉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정말 컨셉대로 가도 괜찮은지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컨셉을 모두 감사, 평가를 했고 이것이 정말 미래 전망이 있다면 그래서 민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즉, 기본적으로는 생산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고 국내 시장에든 세계 시장에든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고 바로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자본을 이것이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안 되더라도 국가가 이렇게 전망이 있는 기업은 외부의 회계 감사를 통해서 전망 있는 기업은 캐피탈을 넣어야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 이 컨셉을 만들었어요. 만일에 현실적으로 전망 있는 기업이라면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냐면 정부가 캐피탈을 준 것이고 신탁청에다가 줘서 이 기업을 현실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투자자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몇 분 만에 투자자를 찾을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민영화라는 것은 4년, 이론적인 기간일 겁니다. 파울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4년보다도 더 많이 걸렸습니다. 4년이라는 것은 잊어 버리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파울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영화 사례를 들어서 화학 공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중부 독일은 국영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작센-안할트, 작센 이쪽은 화학 중심 산업인데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1996년, 1997년에 즉 통일되고 6, 7년 만에야 비로소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인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당시 화학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화학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기업들이 비록 좋은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도 사실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럴 때 신탁청에다가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재정지원을 가져서 의미있는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즉 이런 화학 공장은 6, 7년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철강산업도 비슷합니다. 사실 철강산업도 민영화가 어려웠어요. 세계 경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4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민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외국 투자자들이 독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도 많이 왔고요. 이것이 저희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또 다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통일은 절대 동독을 서독이 갑자기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니에요. 동독에는 자유 총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해서 의사를 대변해서 선출된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인민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사대변 기관이었고 이 의사를 대변하는 인민 의회가 서독과 협상을 통해서 합친 겁니다. 많은 협상이 있었어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 절대 아니고 인수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동서독이 같이 만들어내서 두 건을 협상을 한 것이지 절대 서독이 동독을 take over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해야 했던 것은 고객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상황 때문에 시간 압박이 정말 컸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소련

군이 당시에 구 동독에 있었죠, 그 때 예를 들면 소련과 그리고 구 동독권과의 경제관계,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변화 또 1991년 초반을 한 번 보면 그 때 당시의 헬무트 콜 총리와 고르바초프가 키예프 근처에서 정상 및 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협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많은 기업들, 구 동독의 기업들이 소련에 구매자들 또는 고객들, 이쪽에 어떻게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2,500만 도이체마르크화에 달하는 구매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협상을 콜 수상이 했었죠, 고르바초프와 했었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1991년 말에는 더 이상 소련과의 관계가 없어서 간단했는데, 1991년도 소련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기에는 동독 물건을 소련에다 어떻게 팔 수 있는지를 콜 정부가 소련과 협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91년 말은 ‘제로’ 라고, 제로의 시간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 동독에서도 아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차의 화차를 소련으로 수출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차의 화차를 소련에 수십억을 판매했던 회사가 갑자기 고객이 없어진 상황.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런 화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역량있는 좋은 기업이었어요. 단지 소련의 시장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 능력있는 기업, 다만 시장이나 고객이 갑자기 없어져서 도산하기 직전인 기업, 이런 기업에는 저희가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고 work out을 해서 이 기업이 상존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거죠. 바로 이 신탁청의 철학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신탁청에 대한 논의가 정확하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간에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더 세부적인 것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6단계, 시기적으로 이렇고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고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통일 당시에 총리실에서 직접 실무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연방 경제부 차관을 지내시

면서 실제 통일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까지 다 경험하셨던 루데비히 박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항상 그 당시에 국내 정치, 국제 정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등의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 이후에 또 언론, 전문가들, 학자들의 시간이 지난 뒤에 또 판단이나 평가 역시 일정 부분 우리가 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해서,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파케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케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제장관]

네, 존경하는 한국 측의 동료 여러분 이 토론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심 부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의 문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기에 정말 액티브하게 참여한 사람이야 말로 정말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굉장히 강한 비판 부분이 있는데요. 한스베르너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90년대 초에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화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미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스베르너진씨는 제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학교에 있는 명예교수이고요, 우리 정말 좋은 친구이고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좋은 우정을 다지면서 아주 열린 토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은 달랐지만요. 하지만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차이점을 우리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스베르너진씨를 토론에 향후 기회가 있다면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의 어떤 상념, 인식을 갖추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스베르너진씨가 '칼슈스타트'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91년에 썼던 저서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풀이 했을 뿐만 아니라 사유화 모델에 대한 어떤 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이의 모델은 산업 자본이 이미 시장에 갖춰졌다는 그런 전제화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어떤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결국 제시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어떻

게 보면 영국의 사유화, 80년대 있었던, 그런 것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처 정부였었죠. 당시 영국 정부의 유명한 몇 가지 사유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리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정말 시간을 많이 들였었고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시간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영국 정부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잘 정의된 그리고 잘 정리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루데비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긍정적인 자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 구매자들에게 당시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그러한 어떤 상품 목록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가치로 보면 0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 컨셉트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제 자본 가치가 이제 좀 더 흑자,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파울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도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엄청난 경제적 구채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 가치가 마이너스로 판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루데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라는 팩터였습니다. 당시의 경제장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스베르너진씨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동독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경쟁력이 없는 수익성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시장에 나타나서 결국은 독일 정부에 의해서 어떤 해체가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헤야트가 주창했던 시장, 주창된 그 사회적 시장 경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려고 한다면 정말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간이라는 팩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요. 즉 루데비히 선생님이나 파울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용적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놀랄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우처리튼가 이런 것을 동반한 어떤 익명의 시장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익명으로 지금 분배가 돼서 알 수도 없는 누군가에게 다시 한 번 넘어가고 누군가 알 수 없는 경영진으로 넘어가게 되고 누군가 알 수도 없는 누군가 다시 한 번 어떻게 해

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제품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든 시장성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라든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유럽 국가들이 있지요. 그 동유럽들은, 그들은 이러한 길을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보셔도 나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당시에 그런 국가였는데요, 그 때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독일식의 모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루데비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동성이 중요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독일은 EU의 회원국이었으므로 자유가 필요했고 자유로운 자본 그리고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동유럽의 국가는 달랐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10년 후에야 EU회원국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진화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보다도 아직도 1/3, 1/4에 해당되는 임금이 그 쪽의 수준입니다. 그것은 정말 20년, 4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임금이 1/3, 1/4이라는 것, 그건 결국 성공이라고 볼 수 없질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당시 했었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경제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물론 파울린 선생님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지요. 카스타 로베더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탁청 수장이요. 그 분이 이제 자본에 대한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요,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우리가 지금 소련이 붕괴되고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적자를 기록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2,000억 디마르크라고 하는 적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일단 아무튼 시간의 그런 압박이 있고 제대로 된 제품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놀랄 것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적자라는 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동독은 전반적으로 자본 가치가 마이너스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우처 사유화 부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우처를 도입했다면 사람들이 정말 결

국은 자기가 지불을 했어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졌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결국 서독 중에서도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국 적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흑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신탁청에 대한 우리가 비판을 얻을 수 밖에 없었지만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000억 마르크 유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황금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유화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었느냐면 서독이 와서 동독을 도둑질 했다, 동독의 것을 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탈했다라고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확실하게 국민 경제적으로 제가 어떤 수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91년입니다. 그 때 그 경제 활동자, 서독의 8만 마르크의 부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체 합해서 48만 마르크의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독이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우리는 일인당 거의 서독과 비슷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조 디마르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2천억 디마르크 채무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수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러한 규모의 국민경제를 제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었습니다. 반드시 불가피한 필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를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오늘 경험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뉘른베르크에 노동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각 기업의 지난 20년 동안의 기업의 발전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탁청 기업이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소위 말하는 신탁청 기업은 정말 정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평균 이상으로 발전을 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의 사유화가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성공이었다는 점이 귀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또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루테비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상품, 그 제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품의 각각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슈뢰더 선생님도 이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생각한다면 각 부문 별로 각각 다른 면, 예를 들어 소비자 부문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맥주를 본다면요, 여기에서 비교적 쉬웠습니다 사유화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맥주에 대한 이름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맥주 브랜드에 대한 어떤 말을 들면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술 쪽으로 갈수록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화학으로 갈수록 아니면 이러한 문제로 갈수록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30년대 기술에서 정말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렵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사유화였습니다. 마지막 가장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정치에 관련된 것인데요. 신탁청은 어떻게 보면 인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얻는다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겠습니까. 어떤 기관에 의해서요. 하지만 이 신탁청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정치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번개를 만들어 내는 자’, 직역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신탁청에 쏟았고 그래서 사통은 그것을 그냥 견뎌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 분노가 빚겨난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탁청이 이런 분노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탁청이 결국 이제 해체가 되었지만요. 이런 신탁청을 해체해서, 기관 해체한 것은 굉장히 이제 현명한 선택이라고,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에 이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을 이해시키고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모델에 있어서 사유화, 신탁청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파울린 선생님께서 나타내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어제에 이어서 역시 오늘도 기대에 부응하는 아주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기 보다는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또 한국 측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 원래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만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참석하셨는데요. 한국 국회의원이고 지금 국회에서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에 한독의원친선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님이 오늘 우리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완영 전 의원]

오늘 정중욱 전 대사님 그리고 슈뢰더 전 동독 시민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독일 전 문가님들 방문을 환영하고 저를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한독 의원친선연맹의 이사로 있으면서 독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다릅니다. 저는 국회의원 전에 노동부 공무원으로 25년을 보냈습니다. 독일을 10차례, 분단 때도 가봤고 통독 이후에도 가봤고 해서 독일 통일과 제조 강국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독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의원 신분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정과제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도 통일을 통한 창조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한독통일자문 위원회에서 정말 뜻 깊은 행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며 꼭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저는 원래 청년 때에는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이 통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휴전선을 맨몸으로 그냥 걸어가서 통일을 국민운동으로 펼쳐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뢰밭이 있어서 그렇게 건너갔다면 그 때 아마 제가 죽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도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일 통일 교훈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통독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한국이 통일로 가는 길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로 가기 위한 수단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당의 역할은 어

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 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통일을 먼저 이루고 나서 그런 경제상황, 모든 어려움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험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든 이루어내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들조차도 엄청난 통일 비용으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부터도 우선 바꾸어 나가야만 한국의 통일이 빠른 기회에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이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과연 통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있는가 하는 의문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한국이 통일을 대비하는 방법,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의 자리가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예,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 독일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11시 25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자리를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잠깐의 휴식시간도 사실은 휴식시간이 아니라 회의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휴식 없이 계속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시 15분인데 원래는 12시 15분부터 점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분씩 늦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12시 30분까지 토론을 하고 점심은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일 측 두 분의 토론에 이어서 한국 측에서 안두순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고,

다시 또 독일 측으로 넘기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순 교수]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독일어로 하겠습니다. 파울린 선생님, 루테비히 선생님 그리고 파 케 선생님 모두 발표하신 방식이 매우 확신을 주는 내용이었고 정말 매우 열정적인 내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독일 국민들이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매우 가치를 높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그 미래가 너무 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세 분 모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확신에 찬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약간 우리에게 겁을 주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우려를 자아내는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내기도 하셨습니다. 즉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조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이라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질문이라고 하겠는데요. 물론 신탁청의 이런 수치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토지매각회사, 베를린 경영참여 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그 다음에 후속 특별관리청 등 네 가지. 그 다음에 구 채무 변제회사 등에 이러한 기관 혹은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신탁청의 후속기관 및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명칭들이요. 후속특별관리청, BVS는요. 어떻게 보면 신탁청의 후속기관 중에 가장 중요했던 후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지금 BVS, 후속특별관리청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신탁청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여러 개의 기관으로 아예 이관을 해서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탁청처럼 엄청난 하나의 동일한 단일 기관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세 번째는 좀 예민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너마리아볼케 씨가 신탁청의 수장으로 취임한 아주 짧은 시기 이후에, 그 다음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어디선가 들은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때 시간마다 백만디마르크에 관련된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는 것, 그런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제가 어디선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파케 선생님께서 한스베르너진이라고 하는 동료 학자님의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저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스베르너진 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프리베도 있었고요, 볼프강 아이베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프란체스카이구스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언론사의 편집인이었고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말린의 유력 일간지의 편집장을 지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평가들이지요. 수천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몇 명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들이 그 신탁청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이구스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을 그대로 한 번 봅시다. 신탁청의 성과에 대해서 ‘재앙의 자본주의와 자본의 재앙’이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좀 강한 비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질문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비평가들은 자신만의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련의 유명인들이 왜 이런 비평을 했을까요. 일단 제 질문은 이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안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저는 독일 측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교수님께서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각범 교수]

아, 오늘 발표를 해주신 파울린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코멘트를 해주신 루데비히 특임관님, 그리고 파케 교수님 얘기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독에서는 통일이 되기 전에 코메콘 분업 체계에서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산업생산, industry product형에 있어서 전체 코메콘 지역의 44%를 동독이 담당 했습니다. 그 애

기는 뭐나하면 옛 동독 지역이 산업 생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업을 재편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1년에 두 개의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하나는 예나 지역에 있는 예나오탁, 원래 예나오탁이 예나에 있었죠. 그 유명한 공장이 기계마다 따로따로 분해되어서 매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나오탁에 기계를 사러 온 덴마크 출신의 바이어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기계를 사러 왔느냐고 했더니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계를 가진 그 공장이 국제 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 했느냐면 세계 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생산을 했던 것이 아니라 코메콘 체제에 있어서의 생산 할당량을 위해서 생산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의 공장은 엘베강 연안에 있는 생산 라인이 1km가 되는 힐리 화학공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새롭게 조성된 공장이었습니다. 그 새롭게 생긴 공장이 바로 또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러시아식의 큰 것이 좋다. 러시아 사람들은 불쇼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큰 공장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를 전혀 다르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화학 공장이 서구의 공장처럼 환경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과 동독이 갖고 있는 매우 커다란 차이입니다. 동독은 통일이 되었을 때 코메콘의 분업체제에서 생산했던 코메콘 지역의 인더스트리 센터였고 북한은 그 분업 체제가 1989년 무너져 지금까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26년 동안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연관 관계, 그게 무너져 버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영화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전혀 새로운 분업체제로 바꾸려고 하면 개별 공장, 개별 기기는 아주 우수한 동독지역에서 이것을 전혀 새로운 분업체제로 바꾸려고 했을 때 개별 공장 단위에 있어서의 매각이나 청산 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어떻게 새로운 분업체제에서 적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동독 지역 전체의 어떤 새로운 인더스트리 플랜 같은 것이 없었는가? 신탁청인가?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기업들이 부담하지 않던 사회적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비용,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해야 하는 사회적 기여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 동독 지역에서 새롭게 민영화 또는 구조 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예, 안교수님 감사합니다. 독일 측에서 슈뢰더 박사님께서 아까 발언 신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리하르트 슈레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아, 그런데 그것은 그 전 섹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려도 그게 주제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나중에 할까요?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지금 말할까 말까 했던 신탁청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등의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할까요?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럼 진행해주시고 그 부분은 좀 짧게 해주시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하르트 슈레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좀 전에 주택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아우 구슈타인의 언론인의 말에 대해서 제가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의문을 느꼈습니다. 아우 구슈타인은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판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딘가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30%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뭔가 잘못 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잘못 했는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그냥 신탁청이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팠으면 의사가 잘못 했겠지, 외교가 잘못 됐으면 대사관이 잘못 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제는 동독의 경제 자체가 사통당 하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애걸크렌트가 당시의 동독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89년에 통독

전에도 매우 비판적으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 신탁청은 아예 경제에 손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돼지우리 같다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카아우구슈타인이 이런 비판을 한다면은 아우구슈타인은 동독의 경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국제 경쟁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통당 시스템 하에서 얼마나 안 좋은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비판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아우구슈타인이 정말 이것은 못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소인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것은 정말 화가 나는 바입니다.

[요하네스 루데비히 특임관]

네, 저도 이 부분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백명 이상, 수백명의 저널리스트들이 다 비판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전문가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여러 다른 자료들이 있으니 한 번 읽어 보시면 그 시기에 전문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전체 경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폴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도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독일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가지고 이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때 당시 경제연구소들이 매 반기마다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읽어 보시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매우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 그 때 상황이 정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안도 있고, 결과도 있고,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널리스트의 의견은 그들이 정말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이 정도의 잠담 내용 같은 것도 가십거리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 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 독일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콜 총리도 이 전문가들 위원회와 직접적인 토론들을 많이 했었고 경제 연구소들과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도 모두 도전이었습니다. 학자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토론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다만 말씀 드렸던 그런 경제연구소나 경제 상황을 다루었던 전문 위원회의 보고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탁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인데 사실은 행정 평의회라고 council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고요. 경제부 쪽에 그리고 재정부에서 온 그리고 여섯 분의 주 총리, 구 동독의 모든 주 총리들과 그리고 노조에서 4명의 대표자, 그 독일 노조 총연맹, DAG라는 것은 사무노동자 노조, 그리고 산업 노조 중에도 화학 노조와 금속 노조, 이렇게 4개의 노조의 위원장이 이 신탁청에 있었던 council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6명의 구 동독 총리들, 4명의 노조 대표자 그리고 경제부, 재무부의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신탁청이 될 해야 되는지 이 평의회에서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시도 했던 것들은 무엇이나면 합의를 해서 책임자들, 구 동독의 주 총리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솔루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됐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이 공동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것은 아직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조 대표자가 4명이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도 모두 고려가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로베, 고어캐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청에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 제 담당이었습니다. 또 코어캐와 로베 이 분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베씨는 말씀드린 council의 의장이었고 고어캐씨는 신탁청의 사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사업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의 매니저가 council에서 굉장히 성격이 다른 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의회 의장과 사장의 의견, 또는 성격이 개인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면 사실은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철학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이 다른 두 사람의 수장이 일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연방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로베씨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고어케 사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고어케 사장 이 사실은 공로가 큰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전적인 매니저 문제라고 보셔야지,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서로, 그리고 매니저들이 신탁청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달랐지만 신탁청 자체가 나가야 할 바는 말씀드린 평의회 쪽에서 정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메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의 기업들은 예를 들어 코메콘 부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공장의 수준이 높은 기업들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이라는 영화 프로덕션이었는데요. 탑 퀄리티의 아주 준수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경이 무너지고 이 필름이라는 것이 국제, 세계 시장에서 갑자기 비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판매가 안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종업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 종업원들이 심리적으로 어찌까지 우리는 탑 퀄리티의 최고 그야말로 전체 코메콘에서 알아주는 필름 프로덕션 공장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루 아침에 한마디로 최정상에 있다가 두 달 간만에 최하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 두 개가 아니었고 과거 구 동독에 이런 기업들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특히나 종업원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동독에 많았습니다. 또 노력들이 있었고 민영화의 노력도 있었고 구조조정의 노력도 있었고 워크아웃의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따로 극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조금 있다가 함만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만 후속 기업 조직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자, 지금 독일 측에서 계속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말씀을 듣고 다시 또 한국 측으로 넘기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파케 박사님이 먼저 해주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파케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제장관]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열정과 이성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지금 토론을 하죠.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겪은 문제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토론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제가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논의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논의를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성입니다. 슈뢰더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 사람들이 디테일한 세부적인 상황을 정말 알고 하는 말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싸잡아서 갑자기 선입견을 갖고 나뉘었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카씨도 아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아주 파국에 이른 자본주의. 이름은 좋죠. 헤드라인으로 멋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저는 나중에 1996년에 구 동독 쪽으로 와서 업무를 봤고 1996년에 갔기 때문에 초기에 있었던 과정에는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말이나, 상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말하죠. 독일의 토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학자들, 전문가들이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스베르너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은 오히려 소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루데비히 특임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메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루데비히 특임관님에 의하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코메콘 부분, 저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바로 이 코메콘입니다. 구 동독의 모든 기업들이 완전히 보호주의 하에서 성장한 기업들이었다는 것이죠. 보호주의. 즉, 세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환성 있는 화폐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완전히 고립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각범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야 했던, 지금 그 예나가 가

장 톱 퀄리티의 설비였는데 장벽이 무너지니까 갑자기 최고 성능의 설비가 완전히 새로운 설비가 이게 다 해체가 돼서 팔려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찾아서 빨리 처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필름 생산 기업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후지고라든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동독의 필름 생산 공장의 경우는 코메콘화에서 최고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 시장이 열리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이 필름이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구 동독에 있어서 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닥쳤다는 겁니다. 구 동독, 구 동구권의, 구 동구 유럽의 국가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것을,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 여러 수단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비극적이었죠. 사람들에게 특히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라는 것이 자기가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저 또한, 저는 이제까지 이 상황에 그 극단적인 이 심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때 당시에 결국은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 찾아와서 투자를 하는 이것이 가장 유일한 길이었고 우리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바로 구 동독이 말씀드린 코메콘에서는 최고의 산업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비극이 큰 것입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더 큰 비극인거예요. 동독과 서독 얘기를 할 때 한국 경우로 하면 한국 통일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은 이겁니다, 동독이 최고의 산업국이었던 것. 그런데 북한은 지금 농업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독과 같은 산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통일이 되면 그 상실감과 비극적인 극단적인 상황, 사람들의 좌절감 상실감. 아 죄송합니다. 구 동독에 비해서 북한은 농업이기 때문에 산업에 있어서는 동독 만큼의 비극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다소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산업으로 인한 동독이 느꼈던 비극적인 하루아침에 최고의 산업국에서 최하위로 떨어진 추락하는 충격 같은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린 구 동독이 40년 동안 산업을 발전시켜 왔고 코메콘은 최고의 산업국가로 올라갔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계획경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고립된 상황이었고 결국 세계 경쟁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탁청이 했던 것은 이것을 발견하고 평가하고 끄집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경제로 이행되게끔 하는 과

정에서 신탁청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탁청은 희생양이었다는 것, 특히 저널리즘에 있는 사람들이 신탁청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지금 한국 측에서도 발언 신청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짧게 안교수님께서 짧은 코멘트를 해주시고, 아까 발언 신청을 해주신 송태수 박사님 그리고 홍양호 차관님,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또 독일 측으로 넘기겠습니다.

[안두순 교수]

네, 사전에 말씀 드렸지만 비판은 꼭 부정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름을 다 거론했던 이 비판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판을 대표하는 예만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한 것 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루데비히 선생님 아주 가치 있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부분이라든가 어떤 자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읽을 기회는 없습니다만 예는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독일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는 제가 많이 읽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앙케트 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16권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실에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상세한 내용을 다 익히고 있다는 것과 저도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저 송 교수님 말씀해주시지요.

[송태수 교수]

네, 먼저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사후적인 평가이고 또 아주 다이내믹했던 그 시간 상황을 벗어나서 평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이제 아마 연구자들의 접근방식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장악되고 뭔가 통제 되었어야 했던 그런 점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 상태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어떤든 가장 중요하게 일자리들을 많이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취했던 부분들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 함의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 잘 아시는 바대로 그 다음에 파케 교수님 지금 잠깐 언급 하셨습니다만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라고 하는 것은 동독과 서독의 격차보다 훨씬 큼니다.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바 대로 북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주 경제 체제였고 실제 만약에 세계 경제에 열린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디를 재생하고 재구조화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는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찌보면 특히 이제 중요하게 노동 시장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북한의 예를 들면 농업 분야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상당히 많은 노동력을 나름대로 완충제로서 흡수할 수 있는 분야로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이제 특히 동독은 굉장히 산업화된 이런 국가의 경험인데 특히 우리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사유화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언급하신 그런 문제 말고 좀 더 원칙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한 번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문제 특히 정책 집행자로서, 어느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심했다 내지는 중요했다, 파울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부분들 좀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홍양호 차관님 말씀해주십시오.

[홍양호 이사장]

예, 제가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독일 측에서 한국 측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다, 그런 견해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동서독의 통일은 평화적인 혁명이고 민주 시민혁명이고 그리고 지금 독일 측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직적인 측면하고 신탁청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일어났는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째, 파울린 선생님이 이제 동독 재산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 본 과거의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일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국에는 부실채권을 가진 기업이나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잘못된 기업들의 재산을 인수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동독의 재산들을 민영화하기 위한 신탁청을 구성했습니다만 과거에 동서독이 분리되었을 때 서독 내의 어떤 부실 채권이나 이런 부실 기업들을 인수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공공기관이 없었는지요. 그런 공공기관이 있었으면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인력들이 이제 동독의 재산들을 민영화시키는 그런 신탁청으로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상당히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신탁청에서는 인력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400명이 있다가 4,000명까지 갔을 때 4년 동안 일을 했다고 했다면 대부분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받아서 훈련을 시켜가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국에서도 통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민영화하는 일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또 협상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 전문성의 인력을 평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이 제가 좀 궁금하고, 그건 좀 전에 송태수 박사님이 발제하시면서 또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데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루테비히 선생님도 그렇고 아까 전에 슈뢰더 선생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

서독이 통일 되어서 동독과 서독 서로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신탁청 내에도 루테비히 선생님이 이제 평의회를 구성해서 재정부와 경제부의 책임장관, 그리고 신연방주 총리들도 참석하고 노조도 참석했다고 했을 때 각각 쟁점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쉽게 합의되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쟁점이 주로 어떤 것이었고 그런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탁청은 어떻게 됐던 서독 제도를 동독에 이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부나 경제부나 신탁청 내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서독 측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제가 우선 생각해 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서독 중심으로 일을 추진했고 평의회에 참석했던 구 동독주의 총리라든지 노조들은 동독 측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동독 측에 계신 분들이 서독 측에서 제시한 기획안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반대를 했거나 문제를 삼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또 처리했는지 어떤 합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했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지금 독일 측에서 발언 신청하신 분이 함만 사장님, 슈뢰더 박사님 그리고 폴 박사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것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원래 말씀하셨던 것도 괜찮습니다. 그 순서대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트리프 함만 토지평가관리회사 사장]

네,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안 교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전 루테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신탁, TGL 회사였는데요. 그게 이제 신탁청의 후속이지요. 이 회사는 지금 그 다음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예요. 그 리먼 브라더스, 그 문제가 있었을 때와 비슷한 시기였죠. 그 다

음에 임업하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산업 부분과는 이제 구분이 되고요. BVS, 소위 말하는 후속특별관리청은 계속해서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체 단계에 있고요.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세히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산 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방 정부에 있는데 그 연방 정부가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탁청을 말하자면 이제 면세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청에 대한 재정은 예를 들어서 연방 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흐지부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방 은행에 의한 이런 재정 말입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슈뢰더 선생님 말씀해 주시지요.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측 토론은 세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두 번째 차원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가, 세 번째 차원은 그러면 한국은 이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까. 이런 세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데 저의 과제는 첫 번째 차원, 즉 무엇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오해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어떤 근본적인 지식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주택에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110만개의 주택이 각 지자체에 의해서 지금 양도되었다, 인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택 회사하고 다릅니다. 주택 조합, 회사 이런 단어가 다른 것이지요. 주택 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임대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독 사람은 반 이상이 아직도 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합하고는 다릅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손대지도 않은 것입니다. 독

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AWG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굉장히 순수한 조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소유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손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원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매각하지 않았을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했는데요. 한국어로는 잘못 번역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택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형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매각이 되었을까요. 구매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었느냐면 어떤 중요한 의도가 없이는 말하자면 이것을 수입과 지출을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이 아주 쉽게 끝나 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 채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채무는 결국은 신탁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이런 주택 회사들은 그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일부만 변제하고는 나머지를 다 변제할 때까지 너희들이 매각을 해라라고 말한 것이지요. 즉, 이 어떤 주택들은 매각한 것은 말하자면 주택 회사, 조합이 아닌 회사에서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뭐지, 예. 지자체가 굉장히 채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주택 회사 그리고 어떤 아파트 회사들은 매각을 통해서 그들의 채무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임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화된 그런 데이터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한 예로 든 이유는 정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전제조건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폴 박사님 말씀해주십시오.

[워디거 폴 박사]

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새로운 분업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송 교수님이 북
 한과 관련해서 하신 주제와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조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제 입장을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구 동독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이
 해를 하고 이 문제라는 것이 북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은 구 동독에서 국경이 열리니까 한마디로 구 동독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
 니다. 구 동독에 자동차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출이 됐던 것이지요. 세계 시장
 에서 구 동독의 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내
 버려 뒀어야 했을까요. 산업 공장들이 구 동독에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제품의 생산 설비
 는 있는데 이 설비들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요. 세계 시장에 북한이 카메라든 텔레비전이든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갑자기 내놓아
 야 하는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제적인
 분업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자 이런 것이 가능할까. 자, 프랑스에서 중국에서 자동차를 수
 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구매력이 없는데 이런 제품을 어떻게 분업
 을 해서 다른데서 사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구 동독이 직면했던 상황과 북
 한이 비슷할 겁니다. 갑자기 북한은 세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부합한 산업 제품
 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신탁청의 업무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문 닫게 하는 것이 가장 간편했겠죠. 그런데
 신탁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을 갖게끔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탁청의 노력이 충분했느냐. 대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니다.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민영화를 해서 경쟁력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신탁청이 했던 업무, 안간힘을 써서 생존시켜 보려는 노력이 그럼 없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투자를 촉진
 해야겠죠. 그리고 엄청난 창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 완전히 모든 산업 기업
 을 새로 창업을 시키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고, 자, 투자자도 필요하죠. 매

니저도 필요하죠, 기술자들 필요하죠,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
 각 해보십시오. 구 동독에서는 비교적, 제가 볼 때 구 동독이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민영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 생산시설 그리고 공장들 중에 좋았던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에도 기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독이 아직도 서독에 비해서
 세계 시장의 경쟁력은 적지만 그래도 40년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삶을 끝내고 40년
 이후에 갑자기 경제 체제 질서가 바뀌어졌을 때 북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투
 자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진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하지 못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통
 일이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 동독의 경제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저희
 가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었겠죠. 수입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
 은 독일에게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유 교역 상황에서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독일 경제를 생각해야 했던 것인데. 전체 독일은
 사실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새로운
 투자를 찾을 수 있을까,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에 이 지역을 국
 제 시장과 관련해서 북한이라는 쪽을 조금 약간 내부 세계와 약간 차단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것이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보조금도 필요
 할 것입니다. 투자도 필요하고, 물론 남한이 지불해야겠죠. 누가, 남한 외에 누가 북한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통일이 돼서 남한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 대가
 일 것입니다. 서독도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불을 했죠. 동독 쪽으로 서독도 많은 투자를 했
 고 보조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남한이 통일되면 치러야 될 대가라면 그런 것일 것입
 니다. 자, 새로운 업무 분장이라는 것, 새로운 업무 분업이라는 것, 이것은 그 기준이 되어
 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게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시장
 의 압박, 세계 시장의 수요라는 고려를 해볼 때 그래서 지원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북한을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것은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생각할 때 보호조치 같
 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말하자면 통일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

이것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조금만 주어야 되는 경제 위기가 북한에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량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북한에 살 희망이 없으면 북한에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북한에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북한에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량탈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 동독은 소득 수준이 서독보다 80%입니다. 초기에 동독 사람들도 엄청나게 서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동독에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독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북한의 대량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경제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 측에서 유호열 교수님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호열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신탁청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편견이라고 할까요. 부족했던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북한하고 독일과 같은 시기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의 기업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생각나는 것은 북한에 있는 대동강 맥주 하나가 남한 사람들이 여전히 선호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살려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같이 우리가 남북 합작 기업들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과 동독의 그런 합작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통일 후에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아마도 우리처럼 그렇게 공단을 구성해서 우린 지금 개성공단에 5

만명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123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좀 더 발전하면 아마 숫자는 통일되기 전에 더 많아질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합작, 남북 합작 기업의 통일 후의 자생력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북한 기업을 얘기할 때 농업이 대부분 이제 주요 산업이긴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수공업, 중공업이고, 또 하나는 광업과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통일된 후에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저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 기업 중에 이런 군수공업과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외국과 아주 수십년, 50년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독들이 외국과, 제 3국과 장기 계약으로 운영이 되는 기업이 있었다면 그런 기업을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네, 유호열 교수님께서 또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저희가 또 점심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오후에도 토론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측에서 루데비히 박사님이 일단 신청을 해주셨으니 루데비히 박사님 말씀까지 듣고 오전 회의를 종료하고 식사하고 나서 또 오후에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데비히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요하네스 루데비히 특임관]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이제 신탁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청은 일단 그 목적이 단순히 기간 뿐만이 아닙니다. 즉, 순전히 사유화, 건전화, 청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신탁청의 다른 기능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들, 어떤 그룹에 대해서 어떤 정말 평의회를 가져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내

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재무부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 평의회에서 위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의 주총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탁청의 모든 결정들은 결국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총리라든가 아니면 뭐 노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당시 그 노조가 하는 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그룹, 사회 계층의 그룹에 대표자들이 함께 대표해서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차원을 말씀하셨죠. 이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런 질문이 나오지만 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갑작스럽게 대처하면서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동독의 경제는 정치가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담당자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담당자들이 경제 주체들과 함께 대화하고 '자, 당신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총리실에 있었던 예를 들자고 하자면 굉장히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었는데요. 동독재건회의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었는데요. 총리가 수장을 맡았고 동독 출신의 여섯 명의 주총리가 있었고 노조 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각 경제 협회들의 수장이 왔었습니다. 산업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큰 대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번 회고를 해보자면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통일의 프로세스가 정치가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경영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업이 기여를 하겠다, 문제를 하는데.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의 당시 수장이었죠. 총리실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상황이다. 그러면서 우리 폭스바겐은 동독에다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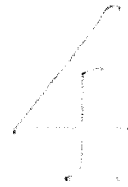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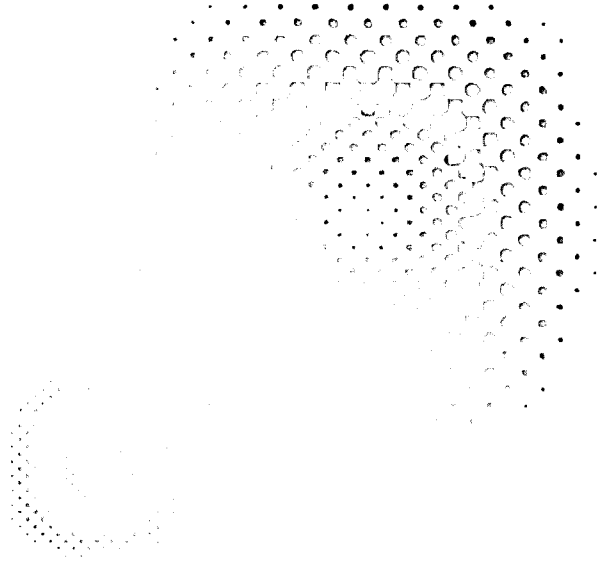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스라는 미국 사람이 경영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총리실에 갑자기 나타나서 총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총리님, 우리는 독일 기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펔과 아이젠 하크에 그 때 공장을 지은 것입니다. 파울린 선생님도 이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셨었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상황들을 어떤 역사적 과제로 생각하고 자신이 기여를 하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좋으면 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안하겠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주체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일단 들어야 하고 그래서 경제가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그들도 중요한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그들도 매우 중요한 과제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축구경기와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경기를 관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축구 경기처럼 하면 안 된다. 경기 관람만 하지 말라. 우리는 필드에서 실제 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자들에게 정치가들이 하는 것을 그냥 마치 관람객처럼 보지 말고 보고 나서 우리가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말고 당신들도 뛰어들어서 같이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경제에 기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한국은 훨씬 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를 또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정말 이미 벌써 많은 단계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는 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체적인 화폐를 그대로 통용, 허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수들을 모두 다 합해

서 경제 주체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천해성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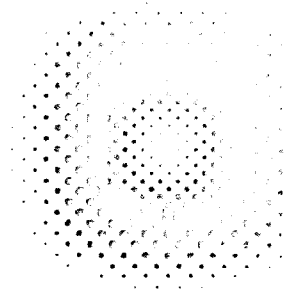
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 역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가벼운 말씀 하나 하면서 오전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조금 전에 한국 측의 유호열 교수님이 북한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 얘기하시면서 대동강 맥주라는 북한의 특정 맥주 브랜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독일 측 분들은 그게 어떤 얘기인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잘 아실 겁니다,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에서 통상 대규모로 대량 생산되는 맥주들과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비교를 했는데 대동강 맥주가 훨씬 더 맛있다. 원래 맥주 본연의 맛이 있고 훨씬 더 맛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에 한국의 유력한 언론인 중앙일보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북한 맥주가 한국의 맥주보다도 맛있을 수가 있나 해서 독일, 영국, 미국, 한국의 애주가들, 맥주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대동강 맥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시판하는 한국 맥주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맥주 좋아합니다만 그 뒤에 이 일은 술을 마시는 여러 애주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과거 동독 또는 체코에서 들어온 원래 맥주의, 유럽 맥주의 본질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맥주가 더 맛있는 것이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맥주는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식의 맥주도 있고 독일 맥주도 있고, 최근에는 물론 여러 양주, 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한국에서 유명한 소위 폭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맥주 맛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맥주 맛과 관련한 그 일파만파의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통일 이후의 민영화든 또는 현재 교류협력이든, 사실은 우리가 북한 아까 어느 분들이 이제 뭐 농업 국가 말씀도 하셨지만 북한이 농업 국가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남한이 오히려 농업

국가적인 성격이 있었고 북한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는 주로 한반도 내에서는 사실은 공장이 많고 지하자원이 풍부했던 공업 국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성격이 많이 변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하든 통일을 준비하든 할 때 사실 지금 저희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 많이 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좀 더 북한을 잘 알고 그렇다면 지금의 맥주 산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또는 잠재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통일 과정 또는 그 이후의 통합 과정에서의 사유화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투자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점심은 이 호텔의 22층 루비홀이 있습니다. 루비홀에서 점심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2013. 6. 28





■ 일시 : 2013. 6. 28, 14:00~18:00

■ 사회 : 천해성 실장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독일 측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한국 측 동료 여러분.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전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지요. 이 회의를 위해서요.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토론에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남은 시간에 한꺼번에 모두 종합해서 토론할 것인지 생각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오후에 구속요건에 관한 주제를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자로서 모시고 싶은 분은 안두순 교수님이십니다.

안두순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두순 교수]

분단으로 인한 소유권의 복잡성과 한국적 대안의 모색

발제자: 안두순

본인의 발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첫째, 한반도에서 소유권 문제의 복잡성 둘째, 한반도 위기 시 예상되는 혼란과

재난 방지를 위한 비상계획에 대한 구상 셋째, 토론을 위한 독일 전문가들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1. 독일보다 더욱 복잡한 한반도에서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소개

통일문제와 관련, 독일과 한반도 모두 외세에 의해 분단된 사실은 동일하지만 사실 다른 것이 너무 많다. 지정학적, 역사 문화적 차이 외에 분단 양측의 경제력 격차와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의 경험과 인식이 다르다. 그 외에 독일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이념적 차이에 기인한 전쟁을 겪었고 그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소유권 처리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해방직전 북한 농촌지역의 소유관계는 그 집중도가 남한보다 더욱 심했다. 농가 호수 4%의 지주가 전체 농지의 58%를 소유하고 농가 57%인 빈농의 소유농지 비중은 불과 5.4%였다.

해방과 함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에 창설되고 1946년 3월 중요 산업의 국유화와 함께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식의 토지개혁에서 몰수대상은 일본제국주의자, 민족반역자, 대지주 등의 땅이며 토지개혁 결과 42만여호의 각종 농가로부터 100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 몰수되었고 72만여호의 농가에 98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 분배되었다. 분배는 고용농민 2.3%, 토지 없는 농민 61.5%, 토지 적은 농민 35.2%, 그리고 이주한 지주에게 1.0% 등이며 혜택을 받은 농가는 전체 농가의 72%에 해당하였다.

북한의 산업자원 국공유화

북한은 토지개혁에 이어 여타 산업자산의 국유화도 시행했다. 1946년 8월에 산업, 철도, 운수, 체신, 은행 등의 재산이 국유화 되고 1947년 2월 수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생산수단의 사유제 철폐와 국공유제 정착작업을 계속, 1958년에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완전한 주인” 이라고 선언하였다.

1947년 3월 농지 외에 산림이 몰수되어 국가소유로 귀속되었고 과수원, 관개시설, 14,477동의 건물이 몰수되어 큰 것은 학교, 병원, 기관, 사회단체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건물과 가축, 농기구, 종자, 비료 등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1949년 농업총생산의 91.4%를 소상품 경제형태가, 5.4%를 자본주의 경제형태가, 나머지 3.2%를 국영경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3년부터 전개된 협동화 운동은 1958년 8월에 완결되어 농촌에서는 협동조합을, 그리고 기타 산업분야에서는 연합기업소 중심의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확립되었다. 이로써 1946년까지 100%였던 농업분야 개인경리는 1959년에 와서 협동경리(82.0%)와 국영경리(8.0%)로 완전 대체되었다.

전쟁과 경계선 변경에 따른 북한 소유구조의 복잡성

북한의 1차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토지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53%로 이는 해방 전 소작지면적의 99%에 달하는 규모였다.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총 농가 호수의 72%를 점하였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과 국유화 조치 외에 남한에서의 토지개혁도 소유권 처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

남한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소유권 변화가 있었다. 1950년 유상매수 유상분배 식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했고, 전쟁 후 38도선 이북의 수복지구 농지는 농지개혁에 의한 보상, 그리고 여타 토지 원소유자는 1991년 말까지 소유자 복구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에 대해서도 구소유권 복구나, 가상적 농지개혁에 의한 보상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 후 남북 간 경계가 달라지면서 야기된 소유관계의 변동이다. 즉, 한반도의 소유권 문제는 양측의 토지개혁과 북한의 국유화 조치 외에 6.25 전쟁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전쟁 중인 1950년 7월4일 북한군이 일시 점령했던 지역의 “남반부 토지개혁” 시도와 1951년 16일에 공포된, 월남 피난민들의 재산 몰수조치, 그리고 전쟁 후 변경된 경계선, 즉 38선에서 DMZ선으로의 변경에 따른 소유권 문제도 역시 통일 후 소유권 처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남북 소유권 문제의 초헌법적 역사성

독일의 경우 구소유권 처리에 있어서 동독에서 소련군 점령시기(1945-1949)와 동독정권 수립 후를 구분하여 처리했음은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소유권 문제는 제도나 체제의 문제와 함께 비극적 역사와 관련된, 초헌법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즉 외세에 의한 남북의 분할점령 외에 6.25전쟁 및 북한의 남한 점령, 연합군의 북한점령 등에 따른 후퇴와 수복, 정치적 억압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 등 일련의 사건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통일 후 북한 소재 자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 제3조의 영토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북한 당국은 불법단체이다. 따라서 토지개혁을 포함한 북한당국의 모든 소유권관련 조치도 당연히 불법화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 소유권은 남북분단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민이나 협동단체 등의 자산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둘째, 독일의 경우 소련점령 지역에서 1945년-1949년간 점령고권에 기초하여 수용된 재산은 반환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는데,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도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기 전 또는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공식 출범 전의 재산권 관련 조치와 그 이후의 조치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가?

셋째, 북한의 등기부 원본(Geundbücher)을 모두 파기된 상황에서 소유권자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2. 독일과 다른 한반도 사정과 통합의 과제

소유권 관련 주체 파악의 어려움과 북한주민의 박탈감

한국방송공사는 6.25이전에 월남한 인사를 350만, 그리고 6.25로 인한 월남자 수를 100만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에서 1946년 3월 토지개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본인과 일본

국 소유 토지를 제외하면 대략 220만내지 320만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정전까지의 기간 월남자의 수는 자료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예를 들면 이북 5도청에서는 보통 500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84만 내지 140만으로 본다.

통일이 되면 6.25 전쟁 이전에 월남한 이주민들의 소유권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를 피해서 월남한 지주, 자본가, 관료,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기독교 신자 등이 토지개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소유권 문제는 월북인사와도 관련이 있다. 6.25 전후의 시기에 월북한 인사는 약 30만 명으로 주로 북한군 점령 시 남한에서의 토지개혁 관련자나 인민정권수립 관련자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남한에서 소유했던 토지를 버려두고 월북했기 때문에 월남인의 소유권이 거론된다면 월북인의 소유권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체제적 특성으로 평생 동안 재산축적 기회를 박탈당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만약 통일을 기회로 점유, 이용, 경작하는 토지와 주택을 모두 원소유주에게 돌려준다면 이 또한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통일 한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급진통일시의 대안 : 북한 전역을 경제특구로

독일의 경우 반환원칙과 보상원칙을 채택하였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많은 예외를 두어 법적·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작용을 낳았다. 한반도와 독일 간에는 분단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점들이 너무 많고 소유권 문제도 독일보다 훨씬 복잡한 변화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한반도에 독일처럼 급진적 통합과제가 대두 될 경우 다음의 질문들이 제기된다.

첫째, 긴급 상황 발생 시 북한지역의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소유권 문제 해결은 법률적 해석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 대공영과 민족 화합 차원을 우선할 것인가.

셋째, 북한 주민들의 단기적 일상생활 위협은 어떻게 대처하며 토지나 기타 부동산의 투기 위협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가 등.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제자는 소위 “북한 경제특구 구상” 을 1993년 이래 계속 주창한 바 있다.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통일과제가 대두되면 북한 전역을 일정기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특별 관리하자는 하나의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이다. 한반도에서 독일 식 통합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은 하나의 “재앙”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특구” 방식 채택에는 한시적 이주의 자유 제한, 보호주의적 산업육성 방안, 마샬플랜 식의 대규모 원조 계획 등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구호조치와 소유권 문제 해결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정치적으로는 1국가 1체제로 전환하고 행정 및 경제적으로는 적응을 위한 과도기를 설정,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 전역을 하나의 “경제특구” 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과도기적 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1) 국경의 잠정 통제와 점진적인 개방
- 2) 북한경제의 한시적인 보호
- 3) 북한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4) 북한주민 우선의 공공자산 이용권 배분 및 사유화
- 5) 대규모 원조계획 수립

북한을 당분간 “경제특구” 로 유지하는 목적은 체제붕괴에 따른 혼란방지와 신속한 북한 경제 안정을 통해 남한 경제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남한 측의 대규모 경제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원조계획은

첫째, 북한주민들의 생활기반 안정을 위한 긴급 구호조치

둘째, 북한주민들의 “탈주” 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지에 머무는 북한주민들에게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북한 재산을 우선 배분하는 지원 장치 마련,

셋째,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기업들의 대단위 자본투입을 유도하는 제반 재정, 금융 및 산업정책적 지원

넷째, 북한의 낙후된 기반시설과 기타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등

을 크게 포함한다.

이 구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며 추구목적은 아니다. 이 구상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3. 토론을 위해 독일 전문가들에 던지는 질문 (작성자 안두순)

앞에서 한반도의 소유권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혔는지를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 다음의 질문과 토론 소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독일의 전문가들께서는 독일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I. 동서독 간의 제1 국가조약에 대한 협상 내용과 과정 관련 질문들

1. 제1 국가조약에 대한 협상 당시 동독 측의 대표들은 “보상에 앞선 반환” 원칙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2. 당시 서독은 “비 반환 원칙”에 대해 차후 통일독일의 의회에게 국가적인 조정을 위한 최종적 결의를 위임사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연방의회에서 사후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요?
3. 1949년 10월 7일과 1989년 10월 18일 사이 소유권이 박탈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에 앞선 반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예외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4. 동독에서 등기부 원본이 대부분 불완전하게 관리되었다고 들었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요? 이 질문과 관련, 북한 당국은 모든 등기부 원본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고 합니다.
5. 1990년 3월 7일 모드로브(Modrow)정권은 소유권 박탈되었던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그 덕택에 동독정권의 수혜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후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Modrow-Erlass)을 무효화 시켰는

데 이 결정이 사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II. 충격요법 식 체제통합과 신탁관리청의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 관련 질문들

6. 신탁관리청 초대 청장이었던 골케(Reiner Maria Gohlke)씨가 취임 후 곧바로 사직한 이유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참고로 그의 변을 들어보면

“30분마다 한 번씩 수십억 DM 짜리 지출 결의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또 다른 현안을 다루어야 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겠나?”

7. “조급했던 통화통합과 지나치게 서두른 사유화가 합작하여 동독 경제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는 비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 다수의 견해는 당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독일 전문가들 역시 모두 같은 견해인 줄 압니다. 한반도의 여건과 상황은 독일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 내가 제안한 “경제특구 구상” 에 대해 하나의 위기관리계획으로 어떤 평가를 하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8. 신탁관리청의 모토는 “최대한 빠른 사유화” 였고 재건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렸습니 다. 이러한 신탁관리청의 접근방식에 대해 저명한 지식인들을 포함,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 얀 프리베(Jan Prieue)는 오직 시장경제의 환상에 빠져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무시했다고 했고,
- 볼프강 사이벨(Wolfgang Seibel)은 신탁관리청이 벼락을 유도하는 역할(Blitzableiter) 만을 했다고 했으며,
- Zeit-Magazin, FAZ, SZ 등의 편집인을 지낸 아우구슈타인(Franziska Augustein) 은 신탁관리청의 성과를 “재앙의 자본주의와 자본의 재앙” 을 동시에 실현한 것으로 혹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II. 구 소유권 반환절차와 반환청구소송의 홍수에 대한 질문

9. 호네커가 실권한 1989년 10월 18일 이전 정당한 방법(redlicher Weise)으로 구매한 재산은 재산법 4조에 의해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닌데 이 때문에 자신의 주택이 제 삼자에게 매각된 구 소유권자들 중 대부분이 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신 소유자가 해당주택을 “정당하게” 매입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당한 매입”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요?
10. 통일조약 부칙과 재산법 5조의 규정에도 토지와 건물의 “반환 예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중반까지 2백 7십만 건의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예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 통일 초기 동독지역의 사법체계가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이러한 청구소송의 홍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요?
 - 얼마 정도의 반환청구가 승인되었는지요?
11. 구소유권 청구소송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가 승인된 비율은 매우 낮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반환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까요?
12. 1991년 3월의 장애제거법과 1992년 7월의 투자우선법으로 반환우선 원칙에서의 예외 범위를 사후적으로 더욱 넓혔습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질문은
- 이런 예외조항을 1990년 9월 재산법 제정 당시에 채택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요?
 - 이처럼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13. 동독 탈주자의 재산 건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이들 재산은 형식 논리로 보아 소유권 박탈이 아니라 파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의 매입은 합법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재산을 북에 남겨두고 남한이나 해외로 이주한 북한 출신 주민들이 최소한 백만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IV. 신탁관리청의 해체와 그 후계 조직들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질문

14. 신탁관리청은 2,700억 DM의 손실, 730억 DM의 매출, 1,540억 DM의 재건과 청산비용, 그리고 1,450억 DM의 구 부채를 남기고 1994년 12월 31일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부터 참여경영유한회사(BMG), 토지활용 관리회사(BVVG), 신탁관리청 부동산회사(TLG), 통일관련 특수과제 연방관리청(BVS) 및 연방의 유산 부담 말소기금(Erbblastentilgungsfond) 등이 잔여과제를 맡았습니다.

이들의 현재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15. 아예 처음부터 방대한 과제를 신탁관리청이라는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대신 여러 기관에 기능별로 분산시켜 맡기는 것을 고려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어찌면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에 대입시켜 제기됩니다.

16.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에서 소유권 처리를 할 경우 어떤 대안이 고려될 수 있겠는지요?

이상의 주제와 제가 앞에서 제기한 “경제특구 구상”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예, 발표를 해 주신 것,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과 한국에서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추후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풍부한 정보가 매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폴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폴 교수님께서서는 소유권 반환요청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리더거 폴 박사]

원소유자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발표자료. (서울, 2013년 6월 27-28일)

(1) 정치적 합의 : 동독에서는 국가의 개입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빼앗겼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수용과 사기업의 강제 국유화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로 동독 국민들뿐만 아니라 서독 국민과 외국인들도 피해를 보았다. 소유자들은 국가의 이러한 조치를 불법행위로 여겼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사회주의 사회체제의 와해가 진행되면서 독일인들은 이러한 불법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고 동독, 서독 정부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전까지는 두개의 독일이 존재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는 원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 할 수 있는 청구권 관련 규정이 제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2) 공동선언: 동독정부는 이미 1990년 초 재산손해에 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미해결 재산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은 양 독일 정부의 공동 계획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1990년 6월 15일자 “미해결 재산문제 조정에 대한 서독과 동독 정부의 공동 선언”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약 2페이지 가량의 이 문서에는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관련 핵심 쟁점들이 열거되어 있다. 무엇보다 더 수용된 부동산 자산은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반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처분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가 기업 재산을 인계 받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 “공동선언” 에 근거를 둔 재산법이 1990년 9월 통과되었다. 재산법은 원소유자의 청구권 조정에 있어 근간이 된다.

“미해결 재산문제 조정에 대한 서독과 동독 정부의 공동 선언” 전문을 첨부하였다. 통일조약 41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해결 재산문제 조정에 대한

서독과 동독 정부의 공동 선언은 통일조약(첨부 3)의 일부다.”

“미해결 재산문제” 라는 명칭은 1972년 12월 21일 체결한 기초조약 (Grundlagenvertrag: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이 있다. 양국은 재산문제의 조정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해결” 이라는 술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동독 정부의 사유재산에 대한 개입은 서독 입장에서는 불법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동독은 서독과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 (3) 시장경제: 재산문제 조정에 관한 결정은 동 서독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서독이 동독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소유재산에 대한 해석은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에 근거를 두었다. 서독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사유재산은 이러한 체제의 구성요소다. 1990년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서독식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4조

- (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2)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3) 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을 통해 또는 법률에 기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보상은, 공공과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하여야 한다. 보상액으로 인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정규 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 (4) 신속한 결정: 원소유자들의 청구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즉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중요한 역할을 한 재산법은 장벽이 무너진 후 10개월 만인 1990년 9월에 완성되었다. 이는 재산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주목할 만한 정치적 성과다. 재산손해의 청산이 곧바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고 반면 초기에 법적 규정에 있어 허점이 몇 군데서 나타났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

지만 장점이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재산문제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조정은 참고사례가 전무했다.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법원들은 자신들에게도 생소한 법을 적절하게 해석했다.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국가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이들 기관들은 재산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빠른 법적 규정, 역량 있는 법원,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들 이상 3가지 요소로 동독시절 발생한 재산손해문제를 성공적으로 청산할 수 있었다.

재산법이 재산의 반환을 위한 근거를 규정했던 반면 해결되지 않았던 다음의 3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높은 보상비용, 1945년 5월 8일(2차세계대전 종전)과 1949년 10월 7일(동독의 설립) 사이에 이루어진 수용에 대한 보상, 나치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 이러한 결점은 1994년 9월 27일 배상 및 보상법(EALG)의 탄생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법은 다음의 법들을 포괄한다. 배상법(배상의 규모와 조건과 절차를 정한다)과 보상법(자연인과 상속인에 대한 보상 - 이들이 배상 없이 점령법 또는 점령주권을 기반으로 한 수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나치탄압피해자보상법(1933-1945 사이 나치정권의 탄압을 받고 재산손해를 입고 반환조치가 시행될 수 없거나 보상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5) 청구권한: (반환이나 배상의 형태의) 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동독의 정책을 통해 재산손해를 입은 자 또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동독국민뿐만 아니라 서독국민 또는 외국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1990년까지 대략 4백만명이 동독을 떠났다. 여기서 재산은 넓은 의미의 재산이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다. 2백 2십만 필지에 대한 재산 청구 신청이 있었다. 이러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구 동독지역의 토지의 판매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진행 중인 재산권 신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업도 재산의 범주에 포함된다. 기업 관련 약 97,0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그 외에도 동산, 통장잔고, 특허권과 같은 특정권리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

청구권한을 가진 자와 조정에 포함되는 재산항목은 재산법 2절에서 나열하고 있다. 자

연인과 법인, 인적회사(Personenhandelsgesellschaften)의 상속과 권리승계 외에도 특히 '독일에 대한 유대인 청구권회의(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를 권리승계인으로 인정했다. 기업 반환 또한 요청할 수 있었는데 과거 손해시점 당시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능했다.

- (6) 보상권의 제한 : 보상권은 소유자가 동독지역에서 재산손해를 입었을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보상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년간 만들어 놓은 동독의 경제와 사회를 쉽게 복구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에 동독의 사유재산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간섭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는 아니었다. 전체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통일조약에서는 동독에서 시행한 조치들이 통일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동독의 강제조치들과 일명 '독일의 분단으로 인한 부당 처사(Teilungsunrecht)'를 수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국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서독과는 달리 동독에서는 나치시대의 수용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법을 나치시대에 확대하여 적용했다(예: 유대인, 반나치 운동가, 정당, 노조 등의 수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고려하여).

- (7) 청구 근거: 재산법에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다. 총 9가지 경우다. 이 중 3가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보상 없는 수용: 난민들의 재산 수용이 전형적인 경우임.
- (b) 경제적 강제/동독 법에 의한 과도한 채무: 대표적인 예로 동독은 낮은 월세정책을 폈기에 집주인들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과도한 채무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 건물을 국가에 팔 수 밖에 없었다.
- (c) 부정한 행위: 동독법 반하는 위법 행위였던 강제조치들에 대한 보상. 권력남용, 비리, 강요, 기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로 출국신청자들은 자신의 토지를 양도할 것을 강요받았다는데 이는 동독법에 반하는 행위다.

보상청구권은 동독법에 반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독법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었던 경우에도 재산법에 명시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재산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 신청이 거부되거나 신청자들이 신청을 취소하였다.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토지에 대한 신청 건 220만 건 중 130만 건이 거부되거나 신청 취소되었다.

재산법 1조에서는 보상청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보상 없는 수용
- 차별 보상: 일례로 동독은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동독국민들에 비해 서독국민들에게 더 낮은 보상금을 지불했다.
- 국가관리인에 의한 양도: 동독은 간혹 개인재산을 국영화하였고(재산 소유권은 개인에게 남아있었지만 개인이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빈 깡통과 마찬가지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재산을 완전히 몰수한 셈이기 때문에 이로서 국가의 불법행위의 강도가 심화되었다.
- 1972년 국유화 된 기업: 동독은 1972년 기업가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동독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국가에 매각하라고 강요 또는 협박을 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정치적 압력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과세 또는 공급제한과 같은 국가 정책과 조치로 인해 국유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1990년 기업법의 발효로 과거 기업주들이 과거 자신의 기업을 다시 매입할 길이 열렸다. 주의: 반환이 아니라 매입이었다. 재산법에 따라 매입조건은 과거 기업주에게 더 유리했다.
- 경제적 강제/과도한 채무
- 국가 관리: 동독은 예를 들어 재산 소유자들이 허가 없이 동독을 떠날 경우 이들의 재산을 국유화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이러한 형태는 199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 탄압으로 인한 재산 손실: 나치시대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 또는 개인의 사상으로 인해 탄압받은 자들의 재산손해 관련.
- 복권 이후의 반환: 동독의 반법치국가적 판결로 편입된 재산 관련. 사전에 복권절차에 의해 반법치국가적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

- (8) 예외 사항: 재산법은 몇 건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소련 점령기간 중에 수용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제외 된다. 소련의 반대가 이유였다. 소련은 소련 점령기간 중의 조치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독일 통일을 찬성 했다(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정말로 소련이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소련 점령기 당시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자연인만 해당. 법인이나 기업은 제외)들을 위한 다른 보상 기회를 마련했다(보상법).
- (9) 신청절차: 원소유자들은 재산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즉 보상은 기관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청 마감 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자로 정했다. 어떤 재산에 대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신청서를 검토 그리고 승인 또는 거부하는 업무는 신연방주들과 베를린주에서 관할했다. 신연방주들과 베를린주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미해결 재산문제 관리청과, 주(州) 미해결 재산문제 관리청을 설립했다.
- (10) 보상 보다는 반환 우선: 재산 피해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원소유자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수용된 재산의 반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반환이 불가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닐 경우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 보다는 반환 우선'이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재산의 반환은' 소유권에 대한 기본법의 해석에 부합한다. 소유자는 어떤 재산이 위법한 절차로 몰수당했을 때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보상금이 반환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가격상승으로 소유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금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반환이 더 적절한 조치다. 보상금 지불은 국가예산에 부담이 되지만 반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11) “현재 상태로” : 재산물은 “현재 상태로” 반환한다. 과거 재산의 수용으로 받은 대가는 반납해야 한다. 재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한다. 소유권을 잃은 시점 당시의 부동산담보권은 해제되어야 한다. 한 기업의 반환 시 모든 자산과 부채 즉 빚도 인수해야 한다. 수용 이후 기업자산에서 분리된 토지에 대한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본을 공급받는다.
- (12) 제외 요인: 반환 우선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가가 특수한 경우에 대해 반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제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a) 반환이 조리상 불가능한 경우.
- (b) 기업운영이 정지되고 기업운영 재개를 위한 요건이 결여 되었을 때 해당 기업의 반환은 배제된다.
- (c) 부동산의 이용 방법 또는 용도가 변경되고 부동산의 이용에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
- 부동산이 공동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합 주택단지로 활용되는 경우(예: 부동산의 경계를 넘어선 건축단지)
 -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반환 시 기업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d) 동독 주민이 정당하게 부동산이나 부동산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예: 토지에 집을 건축할 권리)에도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
- (e) 투자우선 원칙도 중요한 배제사유 중 하나다.
- (13) 투자우선원칙: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투자유치가 매우 시급했다. 반환원칙에 입각한 토지, 건물, 기업의 반환은 투자의 장애요소였다. 반환절차는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특히 다수의 반환권이 충돌할 경우). 재산소유문제가 미결인 상태에서는 즉 반환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토지, 건물,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 투자우선원칙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자대상이 될 수

있고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소유자의 권리는 보상으로 대체된다.

위와 같은 논리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기업 등을 반환 받은 소유자들이 투자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경우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구 동독지역의 여러 도시에서는 소유자가 투자비용을 상회할 만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점점 낙후되고 있는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투자우선 원칙은 이미 통일조약 제41조 2항에서 예시하고 있다. “특별 법률제정을 전제로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 특히 기업의 설립과 같이 긴요한 투자목적이 있을 경우 이 투자가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와 같이 국가경제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의무를 지워야 한다. 이 법에서는 이전 소유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부분도 다뤄야 한다.” 개별 사항은 1992년 7월 22일 ‘투자우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1조: 재산법에 따라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거나 될 수 있는 토지, 건물, 기업 등의 전체나 일부를 다음의 규정을 전제로 특수한 투자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권한자는 이 경우 당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특수한 투자목적’에 대해서는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특수한 투자목적이라 함은 이 투자로

1. 고용안전 또는 고용창출을 할 때
2. a) 새로운 주거공간을 만들 때, b)폐허가 되거나 폐허가 되어가는 주거공간의 복구 또는 c)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난방에너지 또는 수도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기존의 주거공간의 활용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건설조치
3. 투자를 위해 필요하거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조치

(14) 이해의 충돌: 원소유주의 권리문제 처리 시 가장 큰 문제는 자주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었다. 예: 수용되어 국유지가 된 토지에 동독주민이 단독주택을 지었다. 집

은 자신의 소유고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토지이용권한을 취득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의 반환을 요청한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대립상황이다! 동독의 법적 행위(토지 이용권을 집주인에게 판매한 행위)가 단순히 무효화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조약에서는 동독이 법적 행위가 유지되며 오직 개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정을 가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이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해의 충돌은 무수히 일어났고 입법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공동성명’에서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상쇄” 해야 할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언급한 예에서는 반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원소유주와 존속보장을 원하는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여기서 입법자가 판단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상쇄는 원소유주의 반환권이 사라지고 대신에 보상금을 받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지난 동독 시절 40년 동안 이용방법과 목적이 변경되어 과거의 토지소유관계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 반환이 배제되었다. 지금까지의 토지 이용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반환을 원하는 원소유자의 이해관계와는 충돌하는 것이다.

- (15) 조작: 1990년 이후 조작행위를 통해 반환제외사유가 되어 원소유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시행일자규정을 도입했다. 반환제외를 위한 근거는 입법자가 어떤 사유를 반환제외 사유로 허용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16) 정치적 평가: 원소유주의 청구권 문제의 처리는 1990년대 독일에서 많은 감정과, 공격성, 갈등을 야기시켰다. 원소유주의 반환청구권과 동독시절 정당한 절차로 재산(예: 토지)의 이용권을 취득한 이들의 존속이익 간 대립이 있었다. 원소유주 중 많은 수가 서독 출신이었고 이용권을 취득한자들이 동독출신이었기에 이 문제는 동서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독에서는 반환에 대한 제한조치로 동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고 동독 주민들은 동독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자산을 잃고 결국 통일의 패배자가 되는 것을 염려하였다. 정치권은 ‘사회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방식의 이해조정' 을 추구했다. 사용자의 존속이익이 인정되었고 원소유주는 반환 대신에 보상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환결정이 보상결정을 상회했다. 부동산의 경우 420,000건에 대해 반환조치가 취해졌고 103,000건이 보상조치가 취해졌다. 일방적으로 원소유주의 반환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은 독일의 사회에서 용인되기 힘든 방식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는 반환과 보상에 관한 분쟁은 사라지는 추세다.

[첨부]

-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1990년 6월 15일 미결재산 처리규정에 관한 공동성명
- 독일통일 연표(베를린 장벽 붕괴-독일통일)
- 소유권 반환: Case Study
- 통계자료

[참고자료]

본 원고는 다음의 자료를 근간으로 작성했다.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연방 미해결 재산문제 관리청):
Offene Vermögensfragen, Versuch einer BilanzBerlin 2001

다음의 인터넷 자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핵심업무 및 미해결재산문제를 위한 연방청)

Stichwort: Offene Vermögensfragen

http://www.badv.bund.de/003_menu_links/e0_ov/index.html

위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정을 조회할 수 있다.

앞에서 명시한 자료들의 출처에서 다루고 있는 규정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 VermG/ 미해결 재산문제 조정 법)vom 23.9.1990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9. Februar 2005 (BGBl. I S. 205), zuletz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23. Mai 2011 (BGBl. I S. 920) geändert.

본 원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출처를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알찬 토론을 해주신 연방재무부의 중급사무관 (Oberregierungsrat) 카이 브로샤트(Kai Broschat)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1990년 6월 15일 미결재산 처리규정에 관한 공동성명

독일의 분단과 분단으로 인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주민 이동 그리고 양 독일 국가의 상이한 법체계는 독일민주공화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 다수와 직결된 수많은 재산권 관련 문제를 일으켰다.

현 재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양 독일 정부는 양측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 그리고 소유에 대한 권리는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현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기본 원칙이다. 이를 통해서만 향후 독일의 법적 평화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양 독일 정부는 다음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다.

1. 점령법과 점령주권에 기반을 둔 수용(Enteignung)(1945-1949)은 더 이상 원상회복될 수 없다. 소련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당시 결정되었던 조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없

다는 입장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이를 역사적 발전 과정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인식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 차원의 보상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래 전(全)독일 의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2. 신탁행정, 토지소유와 기업운영과 기타 재산에 대해 취해진 유사한 제한 조치들은 해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산이 탈출(Flucht)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해 국가로 귀속된 사람들에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다시 부여한다.
3. 수용된 토지재산은 원칙적으로 a)와 b)의 경우를 참고하여 이전의 소유주나 그 상속자에게 반환한다.
 - a)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복합적인 주택 및 거주단지 건설에 사용되었거나, 사업 용도로 전환되었거나, 새로운 기업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 유형과 목적이 변형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안의 성격상 원주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유효한 규정에 따라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
 - b) 독일 민주공화국 국민이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물적 사용권을 정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유사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해주거나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전 소유주에게 사회적으로 합당한 상쇄책을 취해야 한다. 국가 신탁 기관에 의해 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 c) 이전 소유주, 또는 그 상속자에게 반환 요구권이 있는 한, 반환 대신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가치변화를 상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4. 제3호 규정은 과거의 권한자 혹은 권한자의 위탁을 받아 관리되다가 경제적 강압에 의해 인민소유로 이전된 주택 토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본 성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권 및 기존 이용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으며 이 권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의 해당 법에 의해 규정된다.
6. 대리 운영되던 기업에는 기존의 처분권 제한은 해제되고 소유주가 자신의 기업재산을

넘겨받는다. 1972년 인민소유로 이전된 기업이나 지분에는 1990년 3월 7일의 민간기업 설립 및 활동과 기업참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제19조 2항 4문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국가의 지분은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기업에 매각될 수 있다. 즉, 매각 결정은 관할관청의 재량권에 달려있지 않다.

7. 1949년과 1972년 사이 몰수에 의해 인민소유로 이전된 기업이나 지분은 기업의 가치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기업 전체 혹은 기업 지분 혹은 기업 주식의 형태로 이전의 소유주에게 반환된다. 이는 이전 소유주가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규정이 요구된다.
8. 사용권을 포함한 재산 가치가 부정행위(예를 들어 매입자의 권력남용, 부정부패, 강압, 협박 또는 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권리 취득은 보호 가치가 없으며, 무효화되어야 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3호 b)가 적용된다.
9. 법치국가원칙에 배치되는 형법절차에 따라 재산 몰수가 이루어졌다면, 독일민주공화국은 사법적 형태의 절차를 거쳐 이 상황 수정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0.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이 소지한 과거 예금해지채권(Altguthaben-Ablösungsanleihe)에 대한 지분권(Anteilrecht)은 금리까지 포함해 1990년 후반기 - 즉, 화폐교환 이후 - 에 지급된다.
11. 지불거래에 아직도 남아 있는 외환 제한은 화폐, 경제, 사회동맹의 발효와 함께 폐지된다.
12. 공법단체 청산법(Rechtsträger-Abwicklungsgesetz)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관청이 신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동독 지역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공법상 법인의 소유 재산은 권한자 혹은 그의 법적 후임자에게 이양된다.
13. 재산 정리에 대해
 - a) 독일민주공화국은 필요한 법지침 및 절차 규정을 즉각적으로 마련한다.
 - b) 독일민주공화국은 국민들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장소를 알려야 한다. 신청기간은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 c) 보상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일민주공화국은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로 독립적인 보상기금을 마련한다.

- d) 독일민주공화국은 제13호 b)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과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수 없다. 단, 당사자들 간에 반환을 고려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이다. 과거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 10월 18일 이후에 매각된 토지와 건물은 재검토 대상이 된다.

14. 두 정부는 각각 전문가에게 구체적 사항을 해결하도록 위임한다.

출처: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핵심업무 및 미해결 재산문제를 위한 연방청)

http://www.badv.bund.de/003_menuue_links/e0_ov/c0_gesetze_verordnungen/b0_grundlagen/gemeinsame_erklaerung.pdf

Download am 18.6.2013

독일통일 연표(베를린 장벽 붕괴-독일통일)

- 1989.11.09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 독재정권의 와해
- 1989.11.18 모드로 총리의 동독 정부구성 (1989.4.12까지)
동독의 대표적인 조치
- 1990.01.25 합작회사 규정마련(Joint - Venture Verordnung)으로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
- 1990.03.01 기업전환령(Umwandlungsverordnung): 인민소유기업의 자본회사로의
전환
- 1990.03.01 신탁청 설립 (훗날 동독 기업의 민영화 업무 담당)
- 1990.03.07 기업법: 1972년 국유화된 기업에 대한 기업 반환을 위한 틀 마련
- 1990.03.06 토지개혁 해당 재산(Bodenreformigentum)에 대한 제한 해지
- 1990.03.19 판매법(Verkaufsgesetz)의 발효로 임차인이 국유지를 매입 가능
- 1990.03.18 동독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민주총선으로 드 메지에르(de Maiziere)
정부 출범(1990.10.03까지)
- 1990.06.15 서독과 동독 정부의 미결재산 처리규정에 관한 공동성명: 재산문제 처리
를 위한 중요한 지침
- 1990.08.23 동독 최고인민의회가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정부로의 편입을 발표
- 1990.09.20 양국에 의해 통일조약이 승인 됨: 1990년 6월 15일자 공동 선언 내용
을 통일조약 41조에 편입하고 투자우선원칙에 대해 규정
- 1990.09.23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재산법재정(통일 이후에도 유효함)으로 재산 청구
권 관련 문제 조정을 위한 틀을 마련
- 1990.10.03 통일: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소유권의 반환 : Case Study

신청인 : 서독에 사는 시민

대상 : (동)베를린의 토지와 임대건물: 부모의 재산

부모는 1960년 서독으로 탈출

신청인은 그 사이 사망한 부모의 유일한 상속인

탈출 당시 토지에 대한 담보 부담은 미미한 수준

탈출 이후 동독(국가)이 신탁청을 통해 인수

대수입은 국고에 귀속

관리자는 건설 융자(Aufbaukredit)를 받음(하지만 작은 규모의 보수만 할 뿐이다)

채무초과: 국가에서 정한 낮은 임대료가 비용 초과

수용: 채무 초과로 토지를 조합에 팔거나 국유재산으로 편입

1990년 상황: 건물은 임대건물로 사용

1990년 건물 상황: 많은 보수가 필요함

신청내용 : 미해결재산문제조정청(ARoV)에 임대건물과 토지의 반환 신청(1992.12.31 이전)

베를린 ARoV : 장소관할 : 해당

해당 신청 건이 재산법에 적용할 수 있는 건인가: 그렇다.

ARoV는 직권조사를 수행

신청인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증빙에 참여

결과 : 임대 건물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 됨

결정 : 반환에 대한 신청자와 주거조합 간의 합의점 없음: 반환

신청인의 손을 들어준 결정

주거조합은 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건물 보수를 위한(건물 낙후) 가액조정금 (Wertausgleich)은 미지급

반환결정은 더 이상 반복 불가능

베를린 ARoV이 토지 등록 신청

위의 경우는 사안의 복잡성이 없는 없다. 다음의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제3자가 건물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합은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유지관리 조치로 인한 가액 조정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상액 산정

토지와 기업을 위한 보상액 산정 예시 예: 임대건물(2가구 이상)

(1) 보상 산정기준

손해 발생 시점에서의 재산의 가치는 얼마인가?

손해 발생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과세 표준 가격(Einheitswert) 130,000 RM

(또는 보조가치)

1990년 시장가격 추정금액

재산별 인수 곱하기 x 4.8(인수)

기업 1.5 = 624,000

복합부동산(주거목적 >50%) 6.4

미개발 토지 20

산정에서 제하는 금액공제액

장기부채(예: 부동산 담보유자) 50,000 RM

기 수취한 대가(예: 구매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기준액 = 574,000 DM

(2) 보상금액 계산

보상금액은 체감한다(degressive)

산정 기준 보상비율 15%/574,000

10,000 DM 이하 100% (가산) 52,000 =

100,000 DM	47%	
1,000,000 DM	20%	
3,000,000 DM	13%	
	감소된 보상금은	138,100 DM
(3) 필요 시 반환청구에서 공제(예: 부담조정지급금)		47,000 DM
	반환청구금액	= 91,000 DM

(4) 청구권의 이행

- 규칙: 보상기금의 채권 분배
- 채권에는 이자가 붙는다
- 채권은 연불입금 방식으로 상환된다
- 채권을 채권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다

통계자료

재산법(나치 정권에 의해 탄압받은 피해자들의 신청은 제외)

날자: 2012년 12월 31일

출처: 핵심업무 및 미해결재산문제를 위한 연방청

신청인	: 815,313
대상 재산물	: 2,372,729
이 중 경지구역	: 2,227,079
처리된 경지	: 2,221,908
이중	
반환 조치	: 419,009
국영화	: 101,270
보상조치	: 103,027
거절	: 1,006,339
취소	: 300,373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풀교수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요. 정말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향후 또 토론을 할 만한 굉장히 좋은 근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지금 질문이 들어왔고요. 이미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반환 신청이 홍수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발표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3단계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주별로 그 다음에 연방, 청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리방식의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리되었으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밖에도 행정의 집행가능성이 있었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방법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빠르게 기능하는 행정구조가 구 동독에 빨리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자체, 행정청, 연방주, 사법 이런 많은 주제들 사이의 말하자면 이런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것을 대신해 주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법 분쟁이 있을 때 빨리 필요한 판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청의 홍수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였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을 정식으로 시작하고자 하려는데 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루데비히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루데비히 특임관]

한 가지 코멘트만 하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도 당시 그 협상에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해결 선언에 대한 그 협상이요. 그 때 총리실에서도 이러한 협상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언급하고 싶은 것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열띤 협상이었습니다. 서로의 강경한 입장이 있었고요. 먼저 그 원소유자가 있었고, 오늘날 사용자가 있었고,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재건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협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문제에 대한 것이 이미 5월에 당시 통화연합과 함께 묶어서 빨리 해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통화 연맹, 동맹 부분에 있어서 안되겠다, 재산문제만 떼자 해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6월이 되어서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8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45~49년 사이, 소련 점령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군터 크라우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때 오랫동안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앉아서 뭐라고 했냐하면, 이제 서독사람들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독 의회 측에서는 자유 선출된 의회에서는 반환에 대한 구소련 관련된 반환에 대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서독사람이 결정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서독 측은 연립정부였는데, 지금까지 겪었던 협상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봉착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45년 부근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지만요, 그 때 소련 점령 기간이었고요. 그때 겐서 외무부 장관도 동독출신이었고, 미시닉이라고 자민당도 동독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동독 측이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협상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때 통일의 위기까지 올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정말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항목에 있어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협상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말로 치면 정말 “된통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협상 부분이었고, 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보고 생각하면 오늘 더 이상 놀랄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잘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예, 보충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증인의 눈과 귀를 통해서 이런 것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쉬납아우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직접된 것이 아니라면 이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수]

자세한 설명으로 저희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에서 이런 긴급 상황시에 재산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환이나 아니면 보상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사례들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북한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반환이나 보상의 경우나 똑같이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재산이나 토지 같은 것이 북한이 사용하던 행정 목적의 재산이나 또는 북한 노동당이 사용하던 재산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한국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지만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내버려 두는 것이 원래 남한의 자유주의적인 소유제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독일에서는 그런 방식을 취했나 궁금했는데 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90년 6월에 미결재산 처리규정에 관한 공동성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보상금이나 구소유자에게의 반환이 결정되게 되었는데 왜 서독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이런 협정을 체결했어야 되었는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생겨서 북한의 토지가 남한과 함께 병합된다고 한다면 행정목적의 토지를 제외하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환이나 보상을 할만한 정부의 재력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1990년에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정치적 배경, 또 그것이 왜 정당했는가, 그런 성명이 왜 정의로웠던가에 대해서 좀 더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토만 실장]

예, 폴 박사님 발표자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뤼디거 폴 박사]

경제질서 체제를 무엇으로 정할까의 문제죠. 시장경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골자가 뭔가요? 사유권, 소유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동독은 다른 경제체제를 선택했어야 했겠죠. 이것이 근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중심 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한 것이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유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 소유된 것은 제가 소유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질서 체제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하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한다면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반환의 원칙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볼 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갑자기 손에 수백만 마르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의 형태로 유가증권 형태로 받았습시다. 즉,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유가증권 같은 것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나중 어떤 시점에 태환, 환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각적으로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을 얼마나 해 주어야 할까, 금액도 문제죠. 저희가 생각할 때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중요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다, 그런데 50만 마르크화 정도의 가치다 하면 50만 마르크를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70% 정도를 받은 것이죠. 토지가 비쌀수록 %로 보면 받는 돈이 더 적어졌던 거죠.

[이은영 교수]

제 생각에는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나치냐 아니면 소련이냐 누가 이것을 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다 손해배상이다 또는 돈을 준다 했을 때 서독의 정부가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왜 서독의 사람들이 손해배상비를 지불을 해야 하느냐라고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같이 정치적인 의사합의

를 한 것, 정치적 결정 자체가 저에게는 회의적이거든요.

[류디거 폴 박사]

나치의 경우를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 동독에서는 사실상 1차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동독은 나치에 대한 재산몰수 이것을 보상을 안했습니다. 서독은 나치가 몰수한 재산을 보상을 했는데 동독은 안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시대에 몰수된 재산, 이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고려가 안 되었구요. 왜냐하면 서독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서독이 보상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전체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동독에 살든, 서독에 살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가지고 한 것이지 서독 사람이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이 된 순간을 보면, 사실 동서독간에 아무런 논의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독일의 문제이지 동독의 문제, 서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또 말씀 드릴 것은 독일 국민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은영 교수]

예. 만약에 남한이 북한을 수복하게 되는 경우에 북한이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러시아군이 토지를 수용했던 것에 대해서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남한의 국가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누가 소유자인가를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런 소송의 소멸시효를 정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북한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자기네 토지사용을 계속하거나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적 토지를 국가가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하지만 자기네들이 싸운 것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이 현재의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말씀된 것 같습니다. 개인간의 재산분쟁, 원소유자와 이용권자간의 재산분쟁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판사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중재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서 특히나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에 의해서 합의를 해서 그 합의에 따라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규칙을 정해야만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 판사들도 신속하게 좋은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적공간에 있는 분쟁의 자유라고 할까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은 이것이 사회자체가 불안해지고 평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사적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먼저 슈뢰더 선생님, 그 다음에 루데비히 선생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독일 측에서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토지장부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토지장부가 마치 있는 것처럼 토론을 하시나요. 동독에서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지만, 독일이 이미 그 토지대장에 원소유자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서독사람이 와서 동독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수용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지금 이런 것이나 다름이 없죠. 북한에는 토지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토지대장에 남한사람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토지대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에 똑같은 집을 증여한다고 칩시다. 사실상 그런 사용권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뭐라고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정말 어떤 텃밭에 대해서만 그것이 허락되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텃밭에 와서 이것을 가져가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 그 정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드렸듯이 일단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뤼디거 폴 박사]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정의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부정행위를 다시 한 번 정의를 통해서 세우는 정의를 다시 세워주는 것, 정의를 통해서 정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은영교수]

그렇다면 독일은 동독에 있어서의 소유권 관계가 부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뤼디거 폴 박사]

물론 항상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평등은 합의를 얻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경제재건이고 경제재건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빠른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교수]

그렇다면 여기에 기본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함만 선생님.

[데트레프 함만 토지평가관리회사 사장]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 번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일단 이 사례는 독일의 과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나치시대에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때 부당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독은 이런 과거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했고, 서독의 이러한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는 통일 이후에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949년~1959년 사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 받아야 할 원소유주가 사실 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여 그런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고, 이런 것은 성공사례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개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묘사를 드리자면 100ha 이상 몰수당한 원소유자들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선매권을 받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30ha 이상이요. 즉, 그가 30ha 이상 선매권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선매권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통합사례에 있어서 마련한 상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 교수]

북한의 토지를 정의롭게 재배분하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문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제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고 해결될 것인가가 의문인데 폴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뤼디거 폴 박사]

자,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은영 교수]

구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워디거 폴 박사]

글쎄요, 소유권한을 갖는 것, 당연히 헌법적인 권한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소유권한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면 국가가 하여야 됩니다. 소유권한이 헌법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것을 필요할 경우 공익을 위해 제한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만일에 국가가 이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어난 것을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바로 국가가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테이블에 앉은 모든 분들, 저와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것, 소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경제 하에서 이것이 보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안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는데 구 동독에서는 소유권한이라는 것이 헌법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면서 수정한 것입니다. 자, 그 백그라운드를 한 번 볼까요? 제가 강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장경제를 도입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경제가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경제체제라고 했고, 동독이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예, 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앞쪽의 성낙인 교수님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성낙인 교수]

이들간 열띤 토론을 하시니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겨우 말씀드릴 기회를 한 번 가졌고, 오늘도 제가 더 이상 손을 안 들면 하루 종일 전혀 빠지지 않았지만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을 정도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우리 사회자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간 제가 보건 대, 역시 독일의 사정과 한국의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결국 상대적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졌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라이프치히에서 끝없는 유채꽃 물결과 공장들을 보면서 북한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또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르크를 1:1로 맞교환을 했을 정도로 달리 말하면 저희들이 보지 않는 동독에서는 나름의 이미 통독 이전에 시장경제,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는 이미 세계 최빈국의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독의 예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좀 전에 지금 재산권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원리도 말씀이 나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문제, 사소유권, 특히 토지가 되겠죠, 옛날에 산업화 이전으로 치면, 토지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동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이전 단계에서는 다들 사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독의 땅, 북한의 땅에 다 옛날 1930~40년대까지는 사적 소유권이 다 있었다고요, 다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것 빼고는, 그 다음에 소련군 점령, 동독 인민민주주의 정부, 이런 과정에서 동독은 보니까 1972년에 와서야 그야말로 토지재산권의 국공유화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1946년에 국공유화를 다 이루어서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헌법적 가치의 수용인가의 논쟁이 제기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 상황의 문제, 결국 시대적인 상황을 떠나서 정의라는 것, 헌법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안두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제전환과 관련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같은 나라에서 국가 전체가 인민민주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온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 한국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동독의 계획경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혹여 동독에서도 지금 안두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북한과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휴전선이라는 것, 우리는 전쟁까지 했기 때문에 그어져 있으니까, 통일이 된 이후에도 그쪽에 블록을 쌓아서 경제특구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독에서도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그게 제가 보기에 제 말씀부

터 먼저 드리면, 안 교수님은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헌법교수인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되는 말씀했다고 생각되는데, 혹여 독일 통일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또 논의가 없었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예, 쉬납아우프 교수님, 그 다음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답하려고 했던 답변이 이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안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 헌법 제3조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영토에 대해서 불법영토이기 때문에 이런 몰수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권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도그마틱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실용적으로 플래그머틱하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데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즉, 지금 그 개혁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헌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 수용을 하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청구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현명한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하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법적인 해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정도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성적이고도 정당한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적인 원칙까지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즉, 이를 통해서 통일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거의 이런 원칙적인 문제까지도 왔을 때 우리가 이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플래그머틱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예, 이 교수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각범 교수]

통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통일하는 시기에 협상을 담당하시고 전체적인 기획을 하신 분들과 이런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가 독일과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이 기회와 더불어 중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들과 같이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도 있었는데, 한국이 정말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할 때, 과연 한국경제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중국이나 일본 측 사람들과 갖습니다. 특히, 일본의 학자들은 독일이 그 당시에 동독을 관리했던 정도의 경제적 힘을 한국은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하면서 은연중에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일본의 협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했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을 장기 채권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민영화라든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달하셨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과 더불어서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성낙인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해를 하는 의대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 분은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북한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방문하고 있고, 그 분이 상당히 북한 입장에 대해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만약에 되어서 북한사람과 한국사람이 지금 바로 섞이게 된다면 한국의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재앙(catastroph)이 일어날 것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결핵’ 같은

병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없었던 병입니다. 이미 극복되었던 옛날 병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 이것도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는 해결되었던 병입니다. 그 다음에 A형 간염, 이것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동독의 통일 전 상황과 지금 북한의 상황과 다른 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법적인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북한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야한다기 보다는 독일 말로 ‘암파슴스파지’이랄까요, 적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원활한 통일을 위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한편으로는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전 한국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필요하죠. 그것이 투자의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요. 그런데 루데비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탁청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국제적 투자자들을 모색했습니다. 동독의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모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그 재건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자유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문제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특구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준자율적, 준주권을 마련하자는 이런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호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가능한 모델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 이것이 한국 측에서 헌법상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바는 아니겠고요. 그런데 적어도 practical한 면으로 봤을 때는 시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독일 측에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동맹 이

후에 말씀드렸듯이 인민의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먼저 다른 또 다른 동독을 만들어내서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까지도 했었지만 이것은 결국 진행이 굉장히 빨리 역동적으로 되면서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모델로서는 우리가 생각했지만 정말 그 구체적 정치적 상황에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핸들바’, 실행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주민이 갑자기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할지도 모르겠죠. 먼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런 후 자유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모델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89년 장벽이 무너졌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때부터 '90년 완전히 통일이 될 때까지 독일에 있었던 것은 이것이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파케 선생님께서 혹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김교수님께서도요?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부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폴 교수님께서 한 발제를 듣고 저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자유, 정의, 헌법까지 갔다가 다시 실무적인 문제로 넘어오네요. 좀 끊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 궁금증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통일 후에 유래가 없는 상황에서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합리성, 효율성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발표문에서 11번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11번에 보면 현재 상태로 재산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을 현재 상태로 반환한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만약 그 기업이 부채를 지고 있다면 부채도 그대로 인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업이 과거 동독시절에 경영을 잘 해서 재산을 늘렸다면 그 늘린 재산까지도 반환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저의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관리청이 한 일은 기업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세 번째로 청산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의 위탁관리청과 비슷한 기관인 우리 통일정부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때 남북한 통일정부가 세운 신탁관리청, 예를 들면 '신탁관리청' 과 같은 기관이 하는 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독 지역에 있던 기업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기술도 있고, 설비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 전문가 인력도 있고, 물론 부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평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업무가 많았을 수 있는데, 북한의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동강맥주' 빼고는 그렇게 눈에 띄게 가치가 있는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기술도 없을 것이고, 또 설비나 장비, 건물들은 이미 1950~60년대 지은 아주 낡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따진다면 그것을 쓰레기처리화하는 비용이 더 많고, 오히려 그 기업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땅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업이 만약 살아있다면 그 기업의 건전화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북한의 기업에 그런 가치가 없다면 고용이 승계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재앙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기업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만 있다 하면 오히려 사유화 절차가 매우 단순해 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폴 교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예, 폴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루디거 폴 박사]

어려운 질문인데요, 첫 번째 11번,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상태'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토지를 다시 반환 받는다. 그런데 토지에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반환이 된 후에 훨씬 더 이익을 보는 경우겠지요? 이 경우에 보상금은 반환을 했을 때 자기가 이룬 것만 받아야 됩니다. 이익이 있었다면 이익금도 환수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기업이 있어요. 구동독에서 이 기업이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예

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그런데 더 이상 이 기업이 축소가 된 거예요. 확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업의 운영이 변화되면서 토지가 축소된 경우에, 있는 그대로 토지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토지, 이것은 그냥 그대로. 그런데 또 기업이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부채가 많은 기업도 있어요. 처음에 몰수되었을 때는 채무가 없었는데 받으려고 보니까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너무 큰 손해가 난 경우에는 국가가 이 손해를 보전을 해주어서 최소한 초기의 가치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북한에 기업이 없다면 기업을 평가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 기업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토지만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토지를 누가 반환받아야 하며, 여기에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가?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지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죠. 어떤 상태냐 이 기업이. 상태를 평가해야겠죠? 이 경우에 저희가 했던 바를 말씀 드리면 이 기업을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또는 민영화를 할 수 있느냐, 투자자를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기업을 인수할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인수자가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투자자, 인수자가 없다고 한다면 문 닫을 수 밖에 없겠죠. 더 이상 건전화, 워크아웃이 의미가 없다면. 그런데 문을 닫지 않게 하면 결국 계속해서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기업이 사실 회생가능성이 없는데 보조금만 줘야 한다면 사실 국가가 엄청난 이 기업들, 사실 건전화를 할 수 없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기업들인데 다 워크아웃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일정기간 동안은 워크아웃 기간을 주는 것,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은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기업을 다 민영화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자,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하고, 인수자가 아무도 없다면 이 기업이 사실은 가치가 없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10명의 인수자가 있다면 심지어

매각가격을 협상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일에 기업들이 없고, 투자만 있고, 토지만 있다면 좀 더 문제가 간단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믹스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토지반환 문제와는 별개로 관찰해야 하는 문제였고, 파울린 국장님이 민영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더 이상 없는 것, 결국 원칙적으로는 이익이 있었다면, 그 이익도 국가에 다시 돌려주고, 너무 큰 채무가 있었다면, 이것은 또 적절하게 보상하는 원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 엄청난 노력을 해야 민영화, 또 새로운 기업을 창업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해서 할 수 밖에 없겠죠. 세계시장 경험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있다면 보조금을 쥐서 생존시켜야겠지요. 일종의 경제특구 같은 것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구동독도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특구나 다름이 없었어요.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줬습니다. 서독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다가도 만일에 비슷하게 적응기를 둔다면, 누구하고 이것을 합의하시겠어요, 협상테이블에 북한에서는 누가 나오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 동독에는 협상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적응기를 정한다고 할 때 인민의회가 있었고, 우리가 협상테이블에 협상대화자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하자나요, 누가 협상에 참여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독일은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저쪽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이 협상 상대 파트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협상은 안되고 통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예, 정종욱 대사님.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종욱 대사님 이후에 제 생각에 열띤 토론이 커피가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휴식을 취했다가 토론을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종욱 대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욱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종합세션에서 이야

기를 하는 것이 더 나올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잡니다만, 반드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산권 반환, 그리고 보상문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독일 측으로부터 독일이 먼저 가면서 어려움을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또 만들어 냈던 지금의 '독일 통일'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신탁청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200명으로 시작했던 전문가들이, 나중에 2,000명, 4,000명 선으로 확대되는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신탁청의 업무 폭주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한국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통일이 오는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느냐 하는 자괴심 비슷한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독일 참석자들이 작년의 베를린 회의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교시를 해주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측에서 몇 분께서 한국과 독일의 케이스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 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강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르다'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전달될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시다만 '문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독일하고 한국은 문화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꼬집어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가 다르고, 그런 문화의 이질성이 독일에서의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재산권을 포함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하고, 한국에서의 문제처리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독일 참석자 가운데, 지금 우리가 독일 경우에는 사회정의, 법질서, 그리고 헌법정신, 플러스 경제효율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갈등되는 부분을 조정해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문화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의 경우에 법질서라든지 사회정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독일 특유의 정치문화

적인 요인이 재산권 처리라든지 혹은 통일 이후 문제처리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이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문제처리에 투영을 시켜야 될는지 그러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독하고 북한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분께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과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북한에서 정치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정치적인 공백상태가 생기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동포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나면 그걸 떠나가지고 북한 체제 하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독 경우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또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탈북자, 우리가 흔히 탈북자라고 합니다만, 탈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 내부에서 볼 때는 북한을 배신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 사람들은 북한 내부에서 자신들은 탈출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금의 북한 질서가 와해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경제, 정치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가지고 배려해야할 경우가 없는지, 앞서간 독일의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관점에서 어떤 충고와 고언을 해줄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실장]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지금 해주신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토론의 주제를 새롭게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할 충분한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15분 후 40분까지 다시 오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커피브레이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두 분, 세 분 모이셔서 토론이 더 뜨거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루려는 주제가 휴식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토론을 종합토론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정종욱 대사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정치체제, 정치문화라는 것이 독일의 경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독과 동독에서 정치문화가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나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독일도 있었고, 또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저희가 통일 과정에서 정치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 영향은 어땠는지,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치문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측면이,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 북한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통일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 즉, 북한 내에서 자행된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박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평화롭게 통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던져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대사님의 질문을 논의를 이제 할 텐데요. 제 생각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 구 동독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자유총선으로 선출된 인민회의에서 과거에 불법적으로 박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명예회복,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 정치범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범

를적인 측면에서만 이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과거 청산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었고요. 구 동독 시절에 이미, 그 때 당시에 ‘슈타지’, 비밀경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타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청산과 다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슈타지, 비밀경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청산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적인 담론’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필요한. 말하자면 과거의 권력 엘리트들과 그로 인해 박해받았던 사람들 간의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이야기였죠.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두 계층 간의 화해가 필요했고, 이것을 해야만 법률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평화로운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 대사님의 질문이 저희 토론에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심도 깊게 토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대사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어떻게 자문회의를 이끌어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제 생각에는 주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틀 동안 열면 토론을 했는데, 매우 구조적인 주제들 많은 부분 집중적으로 열면 토론이 있었고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갖게 된 생각은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근본적인 의사결정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했던 의사결정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답변이 될 것 같고,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의사교환을 할 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 질문이었고요, 다시 한번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조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이나 입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프로그램 진행상 토론부분으로 왔는지 결산부분으로 넘어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자: 요르크 벤투만 실장]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시간표를 그대로 지키려는 의도보다 전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마를 결산할 겸해서 다음주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 였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룰지 다른 차기회의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토론을 이끌어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할 테마가 어떤 주제가 있는지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이제 민감한 문제는 어제와 오늘 충분히 논의되었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지 않더라도 독일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국 측에서 들었고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차이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간에 공감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음 기회에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1차회의 때는 총괄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 했다 면, 작년 독일에 2차 회의는 국방분야, 경제사회통합분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 주로 경제부분에 있어서 민영화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다음 연도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정부 간에 합의된 것으로 5년간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경제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4차 년도에는 비경제 분야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차회의 때도 외교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내년도에는 외교영역의 분야에서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마음의 통합이나 새로운 체제에서 교육을 어떻게 새롭게 했는가라는 주제들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제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외교, 교육 분야, 동서독 주민들이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앞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같이 교환해서 양독정부 간에 나중에 실무적으로 회의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고 우선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성낙인 교수]

네 지금 벤트만 실장님께서 다음 주제를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사장님께서 외교, 통합, 교육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에 논의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민영화라든가 경제문제는 그 동안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됐고, 체제불복청산에 관련해서 저희들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또 그런 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일독일 관련해서 체제불복청산이 비교적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닦혔을 경우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로 체제불복의 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에도 사실 민영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랑코 체제 이후라든가 싸우스아프리카 만델라 정권 등장 등을 본다면 우리도 통일의 시점에 비교적 보수적이고 온건한 체제불복 청산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이고 그런 점에서 독일의 이해가 많이 참조가 되리라고 보고 아까 체제불복청산과 동시에 연계되는 문제가 독일식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법의 역할을 독일 측에서 강조해 주셨고 또 실제로 그러한 역할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 통일과정에서 사법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체제불복청산과 직접적 연계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불법체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엘리트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가, 이들에 대한 형법상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은 복권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와도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통일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중요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루데비히 선생님, 파케 선생님, 이은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 루데비히 특임관]

먼저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전체 그림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

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을.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저에 대해서 정정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적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 협력을 긴밀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온다면요. 북한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남한과 협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취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남한 측에서 어떠한 제한을 할 것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민영화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법, 청산 더 먼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 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점진적으로 계획경제가 역동적으로 좀 더 발전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전혀 다른 역동성이 생겨나도록 말입니다. 사유화 같은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야기 해봅시다. 폴 교수님께서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독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투자를 끌어들이든가 유치라든가 인센티브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적질서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확실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흥미로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토지대장이 없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정당한 실행을 하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도 북한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델이나 시나리오를 말씀하셨지만 만일 북한이 갑자기 좀 더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하겠다고 자세가 되었을 때 한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고를 하게 될 것인가, 북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갈 것이라고 권고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다른 외국에서 북한에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사유화를 했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통일로 이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멀리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꼭 이렇게 한국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경제 개방 등 제가 만일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진적인 것을 위해서 한국식의 10조항 계획은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질 것인가, 어떠한 10조항 계획을 만들어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게 될 것인가, 1번부터 10번까지 등등 몇십조항을 통해서 갑자기 정권을 통째로 바꿔놓겠다는 의도가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북한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내실 수 있고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구체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위한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 측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탄탄한 투자가 되겠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무엇일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특구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특구의 범위를 넓힌다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예 감사합니다. 파케 교수님. 다음에 이교수님 순서를 정해서 가겠습니다.

[파케 전 작센-안할트 주정부 경제장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경제학자로서 관찰해 본 바를 보면 제가 과거에 연방주에 경제장관으로서 일을 할 때 느꼈던 것, 과거 경제장관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독일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신탁청과 같은 통일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찍부터 싹이 트지 않았느냐 어떻게 동독이 동독의 행정부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행정능력이라는 것이 이미 통일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동서독이 함께 성장하는데 있어서 아주 일찍부터 동독에 행정부에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 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학자이기도 했지만 경제부 장관이었고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렸듯이 경제부 장관하면서 관찰을 해 보니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 동독에서도요. 또 이들이 기회가 오니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 행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독일의 경우는 동독출신의 정치인이 벌써 연방주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성이요, 이 말은 동독에서 이미 차세대 엘리트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이들이 통일되기 전에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상황이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구조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제장관으로 있을 때 전체적인 경제, 재정부분의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세 국세청이 있습니다. 지방세무청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무라는 것이 600개를 보는 세무 관청이 있었는데 출판물을 발행을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세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 해서 출판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독에 있는 연방정부하고 파트너십을 가졌습니다. 작센-안헬트는 리더 작센이 파트너 연방주였습니다. 저희는 동독연방주였고, 서독연방주인 리더작센주인 2004년에 고객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한 정보 리더작센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였죠. 세금이라는 것 뭔지 조세라는 것이 뭔지 근데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이야기가 뭐냐면 특히나 세무를 관장했던 관청들에서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동독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나중에 한국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필요했던 것은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세금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사람들은 세금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 동독에 있는 연방주가 서독에 있는 연방주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발행했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었다는 것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구동독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대학에도 있었기 때문에 경제부 교수들은 구동독에서 어떻게 보면 구경제체제를 강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시카고나 하버

드에서 공부한 미국의 경제의 이러한 체제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구 동독에서는 경제교수들이 사실 구 경제체제를 강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서독에서 경제학들이 많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에게 갑자기 새로워진 경제체제, 세금제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알려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노력들이 한국에서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트만 실장]

감사합니다. 슈뢰더 박사님 말씀하시지요.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사민당 원내대표]

루테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한국 측 동료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북한에서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질서를 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혁명적인 것은 물론 상황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에는 혁명을 위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굶는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궁전혁명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산당 간부들이 카드를 공개를 하면서 혁명이 아닌 진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있지만 지도자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질서를 잡자는 것은 우리가 진화된 정권에 대해서 그들과 대면해야 하는데 그들을 감옥에 가야하는데 그들은 감옥에 가기 싫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숨길 수는 없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도자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나타나서 어떤 질서를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할레 연구 소장님이신 폴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이 스스로 개방하게 된다면 내부로도 정권이 몰려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여론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없이도 북한 내에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상해야 하는 것은 북한에 민주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론이든 우리가 북한사람을 대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야 합니다. 결론은 청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일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자유를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영 교수]

슈뢰더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동독지역의 행정공무원, 그리고 판사 같은 사법부의 요원 교사, 교수 같은 교육담당자,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교육되거나 교체되거나 보충되거나 하는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지도층의 재교육은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뿐 아니라 북한이 자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갈 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동독의 기록들 슈타지같은 문서보관소 같은 그러한 동독의 기록들을 어떻게 인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음 심포지움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회자: 요르크 벤투만]

예, 감사합니다.

[이각범 교수]

이번에 소유권 문제 민영화 문제로서 경제문제가 상당히 다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31도입니다. 아마 전

력에 있어서 상당한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1도 올라감에 따라서 전력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당국은 상당한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예비 전력률은 10%미만이고, 독일의 예비 전력률은 40%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은 프랑스나 스위스와 같이 한나라에서 전력이 부족할 때에는 땀겨서 쓰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오늘 잘 배웠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하지만 한국은 현재 그러한 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90년대 문민정부 때 1차 핵 위기가 있어서 제네바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북한에 두 이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북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새로 지은 양질의 원자력 전기는 북한의 기왕의 더러운 전기와 섞이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지은 원자력 발전은 남한으로 끌어 들여와서 남한의 전력체제에 의해서 다시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에너지 체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바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와 다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인가? 북한의 재건사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소 하나는 1~2년 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감사합니다. 천 실장님 말씀하시지요.

[천해성 실장]

오늘 이 시간이 종합토론이고 내년도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으로서 한독통일위원회에 처음 참여를 하였습니다. 유익했고 독일통일경험과 관련해서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인력으로 많은 경험의 공유와 우리 내부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면서 오전 독일 측 한분이 이야기 하시면서 실제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비판한 적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사안, 실제로 그때 협상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신탁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분들로부터 경험을 듣고 공유하는 것은 저희 같은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험의 공유가 축적되는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동서독과 남북관계의 차이라든지 문화적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점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슈뢰더 박사님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말씀을 하였고 제가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에 의한 통일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이고 무력으로 북한을 점령해서 군정을 한 다음에 북한에 불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도를 이식해서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구상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은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소강국면에 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라면 화해협력단계를 거쳐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국체제 하에서 그러나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인 남북연합을 거쳐서 1민족 1국가의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독일 측 참석자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합의에 의한 통일일 때 북한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통일과정에 있을 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의 북한일지 그 내부에 우리가 바라는대로 올바른 선택, 변화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어떤 올바른 변화된 모습에 북한이고 그리고 그러한 북한에 당국자와 우리가 통일문제를 좀 더 실질적이고 실의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논의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근래 들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대로 아주 신중하고 예민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정부나 이전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해서 현재 남북관계라든지 또는 북한에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이르

는 과정을 저희가 관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토론할 주제는 지금도 여러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측 또는 독일 측에서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통일부가 연방내무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고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더 의미 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열 교수]

독일통일에서 많은 시사점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독일통일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독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서독간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 부분, 우리도 물론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그러한 정상회담이 갖는 자기네들 체제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긍정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에 반대쪽 측면 어떻게 하면 체제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남쪽에 통일노력을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 중에서 가장 부럽기도 하고 배워야 하는 측면이 파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세대가 북한에도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북한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대단히 통제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독일에서처럼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이 등장을 해서 효과적인 원칙을 정하고 법안을 만들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통합과정을 겪을 수 있을 지라는 부분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북한체제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그리고 핵심 엘리트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한 체제유지 그리고 들어나지는 않지만 북한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양극화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북한 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속성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서 도출한 내용들을 사전에 독일의 경험을 예를 들어 과거의 불법 또는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사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처리한 것에 모델을 북한에 전해줄 수 있다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기득권 세력들이 남한주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지금과 같은 체제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사적 집단적 이익을 손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북한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이번에 중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중국이 과거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지했습니다만 설사 남한주도의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중국의 과거 지정학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끔까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북한이 독일통일에서 교훈을 얻고 체제를 지키고자 했던 방식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체제유지를 고집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는가라는 방안에 대해서 독일의 경험과 독일의 지혜를 배우면서 공유하는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안두순 교수]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 이전에 루데비히 선생님께서 제기한 문제 즉,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남한하고 경제협력을 하자고 하면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한하고 북한은 1974년 이래 계속해서 서로가 협력을 하자고 약속을 했고 구체적으로 그 결실이 나온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홍양호 이사장님께서 최근까지 개성에서 마지막 날까지 계신분이라 잘 아시는데 남한은 북한이 원하도록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계속 하자고 말입니다. 그런 제안의 이면에는 동서독간에 경제협력이 얼마나 착실하고 꾸준하게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북한에게 수 없이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실질적인 경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남한식 내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북한에 퍼지면 자신들의 권력구조가 무너질까봐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좋은 제안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동독하고 서독이 비교적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서독의 잘 발달된 사회적 시장경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시장경제는 같은 영미식 시장경제와는 달리 그야말로 소셜네트워크 사회적인 안전망이 착실히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이 동독 주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 지금 서독사람들하고 거의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있다고 봐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선택은 해야겠지만 사실은 흥 이사장님께서 제안하신 안 중에서 내적인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인 통합하고 독일식 사회 안전망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가지고 동독사람들이 통일 이후에도 서독사람들의 비근한 그런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회자 : 요르크 벤투만 실장]

에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주제들 리스트업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구조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데비히 특임관님께서 과도기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었죠. 제 생각이 엘리트교체, 체제교체 이 시기에 동독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사회에 만드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제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사법체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 때 전환과정이 어떤 식으로 독일에서 이루어 졌는지 그때 당시에 문제는 없었는지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하나에서 문제를 다 다룬다면 제 생각에 48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는 답변되지 않는 질문도 많습니다. 저희가 같이 양국에 통일부와 내무부에서 지속적으로 회의 이후에도 연락을 해서 4차 회의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갈지 합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제뿐만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어떤 구성을 가지고 4차 회의가 조직이 되어야 할 지,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흥미를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양부처가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한 부분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참가자들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식견을 가지고 해주신 말씀들 또 무엇보다 전문

가적인 식견에서 나온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는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제 3차 회의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구성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도 좋은 자문회의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짧으나마 결산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 분위기에 있어서는 이틀 동안 회의가 휴식시간에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열띤 토론에 열기가 식지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질문도 아주 세부적이고 정교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를 오히려 고무시켰고 저희가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시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활발하고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협력해서 회의를 이끌어 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rivatisierung den land - und forstwirtschaftlichen Flächen

27. Juni 2013



27. Juni 2013

[Moderator – CHUN Haesung Ministerialdirektor fuer Vereinigungspolitik,
Wiedervereinigungsministerium]

Wie sie wissen ist es in Korea sehr sommerlich und heiß und ich freue mich sehr darüber, dass Sie trotz der Hitze heute wieder hier gesund erscheinen. Ich freue mich sehr über diese dritte Sitzung, die in Seoul stattfindet. Sehr geehrter Herr Dr. Bentmann, sehr geehrte Delegationsmitglieder, ich möchte Sie im Namen des Vereinigungs- ministeriums noch einmal offiziell ganz herzlich willkommen heißen. Und ich hoffe, dass die dritte Sitzung auch Früchte tragen wird. Wie Sie bereits wissen, hatten wir ursprünglich geplant, dass die Sitzung unter Leitung der Staatssekretäre beider Ministerien stattfinden sollte. Aber nun findet sie auf der Ebene der Abteilungsleiter statt. In diesem Jahr werden wir Industrie, Landwirtschaft und Privatisierung der Forstwirtschaft sowie die Bearbeitung öffentlicher Vermögen, enteignete Vermögen etc. behandeln, also sehr konkrete Themen. Ich denke, die Zukunft unserer erfolgreichen Arbeit im Rahmen des Konsultationsgremiums hängt sehr von den Ergebnissen dieser dritten Sitzung ab, d.h. wenn wir diese dritte Sitzung erfolgreich gestalten, dann werden auch die Sitzungen in Zukunft entsprechend erfolgreich laufen.

Ich hoffe, dass Herr Dr. Bentmann uns gleich die deutsche Delegation einmal kurz vorstellen wird. Ich werde zunächst die koreanischen Teilnehmer vorstellen. Und zwar Herrn Prof. Song Nagin von der Abt. Rechtswissenschaften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rn Ahn Dusun von der University of Seoul; Herrn Lee Kangbom, Ehrenprofessor von KAIST; Frau Lee Eun-young, Professorin an der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rn Jeong Jeong-moo, ehemaliger Botschafter; Herrn Choi Wan-kyu, Präsident de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d Herrn Hong Yang-ho, ehem. Staatssekretär des Vereinigungsministeriums. Dann noch die Experten: Zunächst Herr Kim Yong-hun, Forschungsdirektor Abt. f. Internationale Kooperation des Koreanischen Instituts für Entwicklung des Ländlichen Raums und dann sind noch weitere Experten anwesend, die bereits an den vorangegangenen Sitzungen teilgenommen haben und Mitarbeiter des Ministeriums. Ich hoffe, dass Herr Dr. Bentmann uns nun die deutschen Delegationsmitglieder vorstellt.

[Dr. Jörg Bentmann Leiter der Abteilung 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Auch von mir einen schönen guten Morgen. Lieber Kollege Chun, ich möchte mich ganz herzlich für die netten Worte zur Begrüßung bedanken. Wir hatten ja gestern abend schon die Gelegenheit im Rahmen eines sehr schönen Dinners mit Ihrem Minister auch einige Gedanken und Fragestellungen auszutauschen. Auch das war für uns eine sehr schöne Erfahrung und ein sehr angenehmer Abend und zeigt in welchem Geist der guten Zusammenarbeit wir bisher im Rahmen dieses Dt.-Kor.-Konsultationsgremiums gearbeitet haben - und ich bin sicher - auch weiter arbeiten werden. Sie haben ja die Themen genannt, eine ganz interessante Materie haben wir uns dieses Mal vorgenommen. Ich bin sicher, wir werden wieder in eine vertiefte Diskussion einsteigen können. Ich freue mich insofern darauf, dass wir Ihnen unsere Erfahrungen, die wir im Vereinigungsprozess gesammelt haben, vermitteln können. Und ich glaube, dass wir dafür auch wieder ganz hervorragende Persönlichkeiten gewinnen konnten auf unserer Seite. Insofern freue mich Ihnen jetzt unsere Experten vorstellen zu können. Ich beginne der Reihe nach: Prof. Dr. Richard Schröder, ein unmittelbarer Zeitzeuge des Vereinigungsprozesses und als ehemaliger SPD-Fraktionvorsitzender in der frei 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auch ein unmittelbarer Kenner der politischen Entscheidungsprozesse und Entscheidungsgrundlagen. Dann Herr Prof. Dr. Paqué,

Ihnen sicherlich auch schon von anderen Vorträgen bekannt, ehem. Staatsminister der Finanzen im Bundesland Sachsen-Anhalt und insofern auch mit wesentlichen Fragen vertraut, die er dann allerdings auch wissenschaftlich vertieft hat und nicht nur aus politischer Sicht beurteilen kann. Herr Prof. Dr. Pohl, ehem.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in Halle, der sich auch sehr intensiv in seinem Institut, aber auch darüber hinaus, mit Fragen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er neuen Bundesländer beschäftigt hat. Dann wird im Laufe des Tages noch eintreffen Dr. Johannes Ludewig, der unmittelbare Mitarbeiter des ehemaligen Kanzlers Kohl im Bundeskanzleramt, dort in der unmittelbar entscheidenden Phase Koordinator der deutschen Politik. Dann komme ich zu Herrn Dr. Hammann, er ist Geschäftsführer der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und ein Experte für die Privatisierung der Landwirtschaft in den neuen Ländern und insofern für das heutige Thema als besonderer Experte dazugeladen. Dann kommt Herr Dr. Schnappauf, er ist ein ehem. Kollege von mir aus dem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als Abteilungsleiter für Verfassungsrecht zu Zeiten der Wiedervereinigung zuständig für die Erarbeitung des Einigungsvertrages und insofern der Experte für das Einigungsrecht. Dann darf ich Ihnen weiterhin vorstellen Herrn Ken-Peter Paulin, er ist einer der Direktoren der Treuhand-Anstalt und insofern ein unmittelbarer Zeitzeuge für die Fragestellungen, die uns heute auch berühren und Kenner der Materie in der Treuhandanstalt. Das sind die unmittelbaren Experten am Tisch. Dahinter darf ich Ihnen vorstellen, Vertreter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en aus meiner Abteilung, Frau Karger, die zuständige Referatsleiterin und der Ihnen bekannte Herr Kuhrt, der seit Beginn des Gremiums für die Organisation auf deutscher Seite verantwortlich ist. Und wir freuen uns auch Vertreter der Deutschen Botschaft hier in Seoul begrüßen zu dürfen.

Ich möchte die Gelegenheit zu Beginn noch ganz kurz nutzen, mich schon einmal für die bisherige Arbeit und die bisher bereits erwiesene Gastfreundschaft von Ihrer Seite ganz herzlich zu bedanken, denn ich glaube es war auch ganz wesentlich

das Vereinigungsministerium, das dazu beigetragen hat, dass wir jetzt eine sehr gute Grundlage für die heutigen und morgigen Besprechungen haben. Denn das war ja doch auch eine gewisse organisatorische Arbeit die Fragestellungen so aufzubereiten, dass sie von Ihren Experten dann auch entsprechend bearbeitet werden konnten. Aber auch für den sonstigen Rahmen meinen ganz herzlichen Dank. Als kleines Gastpräsent, lieber Kollege Chun, darf ich Ihnen einen Bildband überreichen, der beinhaltet wiederbesuchte Orte zwischen Ostsee und Erzgebirge. Das sind Bilder aus den neuen Ländern, einmal 1989-90 und dann aber auch bis in das Jahr 2008, da kann man wunderbar die Entwicklung der neuen Länder bildlich erkennen. Das zeigt dann auch rein optisch, welche Erfolge solch ein Vereinigungsprozess bietet und wie er die Lebensverhältnisse der Menschen sehr positiv verändern kann. Herzlichen Dank.

[Moderator – Herr CHUN]

Sehr geehrter Herr Bentmann, vielen herzlichen Dank für das Geschenk. Sie haben den Bildband gestern auch dem Minister überreicht. Ich freue mich sehr darüber, dass ich auch dieses Geschenk erhalte. Als das zwanzigjährige Jubiläum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in Deutschland stattfand, an dem unser Minister Hyun In-tack teilgenommen hat, war ich als Sprecher des Vereinigungsministeriums tätig. Deshalb hatte ich die Ehre an den Berliner Feierlichkeiten und auch an denen in Bremen teilnehmen zu dürfen. Ich persönlich erinnere mich heute noch an diese Ereignisse in Deutschland, also das zwanzigjährige Jubiläum. Umso mehr freue ich mich darüber, dass ich heute die Gäste aus Deutschland begrüßen darf. Im Namen des Vereinigungsministeriums möchte ich noch einmal ganz herzlich meinen Dank zum Ausdruck bringen.

Jetzt wollen wir aber richtig mit der ersten Session beginnen, sie wird moderiert werden von mir. Die zweite Session heute Nachmittag wird dann moderiert von Herrn Dr. Bentmann. Die Themen der ersten Session sind bereits ausgewählt, Fragen des Eigentumsrechts im Zuge der Wiedervereinigung, Privatisierung,

Privatisierung von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n Flächen usw. Zunächst wird Prof. Dr. Richard Schröder zum Thema "Die Bedeutung der Eigentumslage im Prozess der Wiedervereinigung und der Systemtransformation" vortragen und im Anschluss daran wird Herr Prof. Kim Yong-hun einen Vortrag zur Fragestellung der koreanischen Seite bezüglich der Privatisierung von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n Flächen in Nordkorea halten. Danach wird Herr Dr. Detlef Hammann zur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in Land- und Forstwirtschaft sprechen. Ich glaube diese Herren sind alle Experten zu diesem Thema, deshalb freuen wir uns sehr darüber, dass wir von Ihren wertvollen Erfahrungen lernen können. Wir haben sehr große Erwartungen, dass wir heute von Ihren tatsächlichen Erfahrungen profitieren können. Nachdem wir diese Vorträge angehört haben, werden wir eine kleine Pause haben. Dann gibt es ergänzende Kommentare der deutschen Teilnehmer und eine Diskussion. Damit wir die erste Session effektiv gestalten können, hoffe ich, dass wir den gegebenen Zeitrahmen nach dem Programm einhalten werden. Herr Prof. Dr. Schröder, darf ich Sie bitten.

[Prep.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 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Die Eigentumsfrage in ihrer Bedeutung für die Transformation und die Wiedervereinigung

Bei den ersten freien Parlamentswahlen in der DDR am 18. März 1990 gab es beim Wahlkampf nur zwei Hauptthemen: den Umtauschkurs zwischen Ostmark und Westmark und die Eigentumsfrage. Das waren zugleich die beiden Sorgen, die sich für die Ostdeutschen mit der Wiedervereinigung verbanden. Diese Eigentumsfragen wurden offiziell „offen Vermögensfragen“ genannt, weil sie sich in den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seit den 70er Jahren nicht hatten lösen lassen. Sie waren aber ursprünglich gar keine Ost-West-Fragen, denn sie waren entstanden, weil zuerst die Sowjetische Besatzungsmacht und ab 1949 dann die DDR sehr viele Einheimische, also Ostdeutsche, enteignet hatte. Da diese

Enteignungen mit der Kriminalisierung der Betroffenen verbunden, also Strafenteignungen waren, flohen sie, wenn sie konnten, nach Westdeutschland. Diesen Ostflüchtlingen hatten die Bundesregierungen in den fünfziger Jahren immer wieder zugesagt, dass das Unrecht ihrer Enteignung in einem Friedensvertrag rückgängig gemacht werden müsse. Das war aber eine Zusage auf eine unbestimmte Zukunft, von der noch Anfang 1989 die meisten in Ost und West nicht glaubten, dass sie sie noch erleben werden. Viele hatten deshalb ihr ostdeutsche Eigentum innerlich aufgegeben oder das Haus ihrer Großeltern geradezu vergessen. Andere bedrückte noch immer der Verlust ihres Elternhauses oder eines Stammsitzes, der Jahrhunderte der Familie gehört hatte. Im Laufe jener vierzig Jahre waren aber längst andere Ostdeutsche Nutzer oder Eigentümer der enteigneten Immobilien geworden. Solche Probleme sind in unserer europäischen Geschichte nicht ganz neu. Als die französischen Könige 1813 nach der Revolution zurückkehrten, entschieden sie, dass nach so langer Zeit (es waren 24 Jahre) keine Rückgabe, sondern nur Entschädigung in Frage komme. Und als im Jahre 251 v. Chr. in der kleinen Polis Sikyon eine fünfzigjährige Tyrannis endete, beschaffte sich Aratos einen größeren Geldfonds von seinem Freund, dem Ptolemäerkönig, und setzte für die 600 rückkehrenden Verbannten eine zehnköpfige Kommission ein, die immer einen von beiden, den Alteigentümer oder den Neueigentümer, dazu überredete, Entschädigung anzunehmen, so dass schließlich alle zufrieden waren (Cicero, *de officiis* II,81). Leider war 1990 ein Ptolemäerkönig mit geschätzten 500 Mrd. DM nicht in Sicht, um die Konflikte aus insgesamt 2,2 Millionen Anträgen auf Rückgabe ähnlich elegant zu lösen.

Um die Probleme der Eigentumsfrage zu verstehen, müssen zunächst die verschiedenen Enteignungen beschrieben werden. Danach sollen die Lösungen vorgetragen werden, die der Gesetzgeber in insgesamt vier Jahren erarbeitet hat. Drittens werden wir auf die Folgen, Probleme und mögliche Alternativen der getroffenen Lösungen eingehen.

I.

1. Den Anfang machten die großen Enteignungen, die die Sowjetunion in ihrer Besatzungszone von 1945 bis 1949 durchführen ließ. Enteignet wurden 15.000 Industriebetriebe, davon 10.000 mittelständische, sowie 14.000 Land- und Forstbetriebe mit insgesamt 3,3 Millionen Hektar. Begründet wurde die Enteignung klassenmäßig. Die Kapitalisten und die Großgrundbesitzer (Junker) hätten die Naziherrschaft gestützt, was so pauschal nicht stimmte. Es wurden auch erklärte Gegner der Nazis enteignet. Bei der sog. demokratischen Bodenreform wurde der Grundbesitz über 100 ha vollständig und entschädigungslos enteignet, dazu sämtliche bewegliche Habe der Betroffenen. Sie selbst wurden ausgewiesen oder vorübergehend interniert. Außerdem wurden alle enteignet, denen vorgeworfen wurde, sie seien Nazis gewesen oder hätten sie unterstützt. Ein geordnetes Verfahren für solche Beschuldigungen gab es nicht.

Eine Bodenreform war nach dem Krieg durchaus angezeigt und auch in den anderen Besatzungszonen gab es entsprechende Planungen, auch um die Bauern, die aus den verlorenen deutschen Ostgebieten geflohen waren, Land zu verschaffen. Diese Planungen sahen vor, dass nur das Land über eine bestimmte Größe (z.B. 100 ha) enteignet wird, aber mit Entschädigung. Trotzdem kam die Bodenreform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neben Neubauern und Kleinbauern auch 91.155 Vertriebenen aus den Ostgebieten zugute. Die Bauernhöfe hatten im Durchschnitt 8 ha. Zwei Drittel des Bodenreformlandes wurden so verteilt, ein Drittel wurde in Volkseigene Güter umgewandelt. Die Zerschlagung der bisherigen landwirtschaftlichen Strukturen hatte einen Rückgang der Erträge zur Folge, und dies in der Hungerzeit.

Auch die Enteignung der Industriebetriebe hat erheblichen Schaden verursacht, weil die ursprünglichen Eigentümer mit ihren Patenten, Markennamen und vielen Spezialisten in den Westen gingen und dort das Wirtschaftswunder mit beförderten.

2. Auf der Zweiten Parteikonferenz der SED im Jahre 1952 wurde der Aufbau des Sozialismus verkündet. Das hieß zugleich „Verschärfung des Klassenkampfes“, den „feindlichen Widerstand brechen“. Im Klartext: die Staatsmacht wurde zur Waffe der Partei gegen die Bürger, das war mit Klassenkampf gemeint. Der Klassenkampf richtete sich gegen wirtschaftlich Selbständige. Die Justiz wurde regelrecht als Terrorinstrument eingesetzt. Bauern wurden enteignet, weil sie das erhöhte Ablieferungssoll nicht erreichten. Von August 1952 bis Ende Januar 1953 kam es deshalb zu 1.250 Gerichtsverfahren gegen Bauern. Mehr als 15.000 Bauern flüchteten damals nach Westen. 500.000 ha lagen schließlich brach. Wer in den Westen floh, wurde auch enteignet. Der private Handel und Großhandel wurde mittels verweigerter Kredite, Zulieferungsverboten und systematisch eingesetzter schikanöser Steuerprüfverfahren zerschlagen. Bei der Zerschlagung des Großhandels wurden in 3.000 Betriebsprüfungen 2.100 Strafverfahren eingeleitet, 2.300 Personen verhaftet und ein Vermögen von 335 Millionen Mark eingezogen. Nach Stalins Tod zwang die sowjetische Führung die SED-Führung, diesen Staatsterrorismus einzustellen. Sie gehorchte. Weil aber auf der Liste der Repressionen, die die sowjetische Führung übergab, die zehnpromtente Normerhöhung der Arbeiter vergessen worden war und nicht widerrufen wurde, kam es zum Volksaufstand des 17. Juni 1953. Damit endete die Phase der Strafenteignungen.
3. Grundstücke von Flüchtlingen und von Westdeutschen wurden nun unter staatliche Verwaltung gestellt. Da die niedrigen Mieten die Unterhaltungskosten nicht deckten, wurden die Grundstücke oft überschuldet und dann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Man nennt das „kalte Enteignung“. Grund und Boden blieb Volkseigentum, aber Einfamilienhäuser wurden oft an DDR-Bürger verkauft.
1972 wurden unter Parteichef Honecker die letzten privaten oder halbstaatlichen Betriebe (alle mit mehr als 9 Angestellten) enteignet, dabei wurden minimale Entschädigungen bezahlt. Insofern waren es keine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aber nur formalistisch betrachtet.

Schließlich haben viele DDR-Bürger Mehrfamilienhäuser und Mietshäuser unentgeltlich dem Staat übergeben, weil sie die Unterhaltskosten nicht bezahlen konnten. Der Staat verlangte Tilgung der Hypotheken, bevor er das Geschenk annahm.

4. In der DDR herrschte bis zum Ende Wohnungsnot. Als Kompensation genehmigte die SED sogenannte Wochenendgrundstücke, auf denen Wochenendhäuser, nach dem Russischen „Datschen“ genannt, errichtet wurden, in die überschüssige Erfindungsgabe und das Organisationstalent der Schattenwirtschaft flossen. Dabei spielte kaum eine Rolle, wer als Eigentümer im Grundbuch stand. Volkseigentum, Westeigentümer, Osteigentümer - alle nur denkbaren Fälle kamen vor.

II.

Die Eigentumsfragen im Einigungsprozess waren deshalb so schwer zu lösen, weil sich in der DDR ein eigenständiger, vom Bürgerlichen Gesetzbuch abweichender Eigentumsbegriff gebildet hatte.

Da war erstens der Begriff des Volkseigentums. Es durfte nicht verkauft und nicht beliehen und nur nach staatlicher Vorgabe verwendet werden. Zusammen mit dem genossenschaftliche Eigentum und dem Eigentum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ie besaßen eigene Unternehmen) bildete es das „sozialistische Eigentum“, dem das „persönliche Eigentum“ gegenüber stand. Da der staatliche Wohnungsbau den Bedarf nicht decken konnte, wurde unter Honecker der private Einfamilienhausbau gefördert. Das Haus war dann Privateigentum, verkäuflich, vererbbar und beleihbar, auch wenn es auf volkseigenem Grund und Boden stand. Im Grundbuch wurde dann ein eigenes Gebäudeblatt eingefügt. Dieser Grund und Boden war aber zumeist enteignetes Privateigentum, zumeist eines Westdeutschen.

In der Folge dieser Regelungen war in der DDR Grund und Boden nicht viel

wert, weil er nicht frei gehandelt werden durfte. Entscheidend waren die Nutzungsrechte, die der Staat verlieh, für Häuserbauer und Datschenbauer. Auch jeder Hauskauf bedurfte staatlicher Genehmigung. Der tatsächliche Besitz, die Nutzungsrechte, waren immer wichtiger als das Eigentum und von ihm weitgehend unabhängig. Diese aber wurden verliehen und nicht gekauft.

Im Westen war der Irrtum weit verbreitet, Hauseigentümer seien in der DDR vor allem die Stützen des Systems gewesen. Das war falsch. Die SED-Genossen lebten viel billiger in Häusern, die nach ihrem Wunsch gebaut oder umgebaut, aber ihnen dann billig vermietet wurden. Auch ihre komfortablen Jagdhütten waren „Volkseigentum“, allein zu ihrem persönlichem Gebrauch. Denn die Hauseigentümer hatten ja nichts von den Mietsubventionen. Sie mussten zudem selbst Hand anlegen.

Zweitens muss noch der Status des Bodenreformlandes beschrieben werden. Es wurde nämlich nicht Volleigentum, sondern war an die landwirtschaftliche Nutzung gebunden. Es konnte also nur vererbt werden, wenn die Erben es weiter landwirtschaftlich nutzten. Sonst fiel es an den Bodenfonds zurück bzw. wurde Volkseigentum. Daran hat sich bei der Kollektivierung der Landwirtschaft, die übrigens mit Psychoterror erzwungen wurde, nichts geändert. Das Bodenreformland ging in die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ohne Statusänderung ein. Im Grundbuch standen immer noch die Bauern. Insofern wurde die Fiktion der echten Genossenschaft aufrecht erhalten. Da zudem das Grundbuch schlampig geführt wurde, wurden Änderungen im Status des Bodenreformlandes oft nicht eingetragen. In den Großflächen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wurden zudem die ehemaligen Grenzsteine gar nicht mehr berücksichtigt, so dass Bodenreformland ohne Rücksicht auf die Eigentumsverhältnisse an dritte als Bauland vergeben wurde.

In der kurzen Phase zwischen Honeckers Rücktritt und den freien Volkskammerwahlen (18. Oktober 89 bis 18. März 1990) kam es zu einer „Koalitionsregierung“ der Blockparteien unter 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SED). Diese Regierung traf drei wichtige Entscheidungen in der Eigentumsfrage. Sie erklärte das Bodenreformland zum Volleigentum. Sie erlaubte den Verkauf von Volkseigentum an Grund und Boden. Und sie machte die Enteignungen der Industriebetriebe unter Honecker rückgängig, d.h. sie praktizierte erstmals die „Rückgabe“. Und sie gründete zusammen mit der Bundesregierung eine Kommission, die die grundsätzlichen Fragen zum Eigentum lösen sollte. Die Sowjetunion wurde in die Beratungen einbezogen. Die Regierung der frei gewählten Volkskammer unter Ministerpräsident de Maizière führte die Verhandlungen fort. Das Ergebnis war die Gemeinsame Erklärung vom 15. Juni 1990, die für alle weiteren Regelungen grundlegend wurde.

Entscheidend sind vier Bestimmungen:

1. Die Enteignungen der sowjetischen Besatzungsmacht werden nicht rückgängig gemacht. „Die Regierungen der Sowjetunion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ehen keine Möglichkeit, die damals getroffenen Maßnahmen zu revidieren.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nimmt dies in Hinblick auf die historische Entwicklung zur Kenntnis. Sie ist der Auffassung, dass einem künftigen deutschen Parlament eine abschließende Entscheidung über etwaige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vorbehalten bleiben muss.“
2. Für die DDR-Zeit, also nach 1949, soll gelten: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3. Keine Rückgabe erfolgt bei „redlichem Erwerb“ von Eigentum oder Nutzungsrechten durch DDR-Bürger, und wenn Rückgabe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öglich ist“ (Beispiel: auf dem Grundstück steht nun eine Schule.)
4. Mieterschutz und bestehende Nutzungsrechte von DDR-Bürgern bleiben in Kraft.

Die Punkte 1, 3 und 4 waren Forderungen der DDR-Seite. Nr. 2 ergab sich auch daraus, dass die DDR-Seite den Umfang der anfallenden Entschädigungen nicht beziffern konnte, da einschlägige Unterlagen fehlten. Darauf hat die westliche Seite erklärt, Entschädigungen unbekanntem Umfangs können nicht

Vertragsgegenstand werden. Also: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In der West-CDU gab es durchaus Befürworter für den anderen Grundsatz, nicht aber in der West-FDP. Die wollte auch die Bodenreform rückabwickeln. Heiß umstritten waren besonders Punkt 1 und 2. Ich kann als Beteiligter bezeugen: es war so, wie es in Punkt 1 heißt: Die Sowjetunion und die Regierung der DDR, übrigens auch die Volkskammer der DDR, waren damals gegen die Rückabwicklung der Bodenreform. Die Sowjetunion hat der DDR-Regierung grundsätzlich untersagt, ihre Maßnahmen als Besatzungsmacht zu beurteilen oder zu verändern und hat darauf bis in den September 1990 ausdrücklich beharrt. Das war für sie eine Prestigefrage. Die DDR-Seite befürchtete massive Unruhen auf dem Lande, wenn die Rückabwicklung der Bodenreform angekündigt wird. Ob die Befürchtungen der Landbevölkerung vor einer Rückabwicklung berechtigt waren oder nicht, war damals zweitrangig. Wir mussten die tatsächlichen Befürchtungen berücksichtigen. Hätte man die Bodenreform rückabgewickelt, hätte man außerdem die „Gerechtigkeitsgrenze“ nur verschoben hinter Oder und Erzgebirge, denn diejenigen, die dort ihre Immobilien verloren hatten, konnten sie ja jedenfalls nicht zurückbekommen, da sie nun in den Nachbarländern Polen, Russland und Tschechien lagen.

Von den 2,2 Millionen Anträgen auf Rückgabe hatten lediglich 20 Prozent Erfolg. Die anderen 80 Prozent waren teils unberechtigt, teils kam nur Entschädigung in Frage.

Viele kritisieren den Grundsatz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weil er im Osten gewaltige Unsicherheit ausgelöst habe. Das ist richtig. Betrachtet man die Gesamtlösung des Problems, ist es aber fast egal, ob man sagt: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mit vielen Ausnahmen oder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mit vielen Ausnahmen. Denn jedenfalls mussten die von den Nazis enteigneten jüdischen Grundstücke zurückgegeben werden, was die DDR unterlassen hatte. Und zurückgegeben werden mussten auch diejenigen Grundstücke, bei denen

der westliche Eigentümer noch im Grundbuch stand, auch wenn die östlichen Mieter sich oft als Eigentümer fühlten. Denn dass der Rechtsstaat enteignet, was nicht einmal die DDR enteignet hatte, um es sogleich zu verkaufen, war ja wohl unvorstellbar. Ob ein Westgrundstück der kalten Enteignung bereits unterworfen worden war, oder nicht, war reiner Zufall. Wenn dieser Zufall ausgeglichen werden sollte, hätte man zum Verkehrswert entschädigen müssen. Aber wer sollte das bezahlen ohne ptolemäischen König? Die Ostdeutschen? Die Westdeutschen? Oder die, die ihre Grundstücke zurückbekommen haben? Einen Entschädigungsfonds brauchte man ja dennoch für die oben genannten Fälle. Er belief sich auf 18 Mrd. DM und wurde im Wesentlichen aus Steuermitteln finanziert.

Nun zu den einzelnen Fallgruppen.

Wer auf volkseigenem Grund und Boden gebaut hatte, der nun seinem ursprünglichen Eigentümer zurückgegeben wurde, konnte wählen zwischen Kauf zum halben Bodenwert oder Erbbaurecht. So wurden Grundstück und Gebäude wieder zusammengeführt, wie das Bürgerliche Gesetzbuch es vorsah. Das sind die sog. Komplettierungskäufe.

Mieter von Westgrundstücken, die sich wie Eigentümer verhalten und erhebliche substanzerhaltende Maßnahmen durchgeführt hatten, konnten ihre Immobilie erwerben.

In allen Konfliktfällen wurde der unterlegenen Seite ein Vorkaufsrecht eingeräumt.

Die Erklärung vom 15. Juni 1990 hatte für Konfliktfälle Ersatzgrundstücke vorgesehen, die die Kommunen aus ihrem Bestand hätten stellen müssen. Die Idee ist zwar in die Gesetzgebung eingegangen, aber es hat wohl keine einzige Kommune für diesen Ausgleich auch nur ein einziges Grundstück zur Verfügung gestellt.

Die Entschädigungszahlungen sind zwiefach gestaffelt.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 Flächen betragen sie das Dreifache des Einheitswertes von

1935. Das ist derselbe Satz, den DDR-Bürger in der DDR bei Enteignungen etwa für den Straßenbau bekommen haben. Bei Bauland beträgt sie das Zwanzigfache desselben Einheitswertes. Außerdem gibt es eine Degression. Bei über 10.000 DM bis 20.000 DM werden 30 Prozent abgezogen, bei über 3 Millionen 95 Prozent.

Die Ausgleichsleistungen für die Bodenreform-Opfer sind im Flächenerwerbsprogramm berücksichtigt worden. Für die Alteigentümer der Bodenreform, für diejenigen, die aus einer LPG ausgetreten sind und wieder eine bäuerliche Landwirtschaft betreiben wollten (Wiedereinrichter), sowie für diejenigen, die einen bäuerlichen Betrieb neu eröffnet haben, werden in diesem Programm landwirtschaftliche Flächen zum halben Verkehrswert verkauft. Für die Datschen, also Erholungsbauten auf fremdem Grund, wurde festgelegt, dass sie zehn Jahre absolut unkündbar sind, für Senioren, die 1990 60 Jahre alt waren, lebenslang. Außer für Eigenbedarf bei Eigenheimbau darf erst ab 2015 normal gekündigt werden. Wenn der Eigentümer die Pacht kündigt, muss er für das Gebäude, das ihm dann zufällt, eine Entschädigung zahlen. In mindestens der Hälfte dieser Fälle sind übrigens beide Parteien Ostdeutsche. Seitdem Eigentum an Grund und Boden wieder wichtig ist, gibt es auch unter Ostdeutschen wieder entsprechende Auseinandersetzungen.

III.

Gegen den Grundsatz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sind zwei Einwände erhoben worden. Der eine ist psychologischer Art. Der Grundsatz habe viele Ängste und Verunsicherungen unter den Ostdeutschen ausgelöst, die unberechtigt waren, wenn wir die Gesamtregelung betrachten. Das ist richtig. Aber der umgekehrte Grundsatz hätte eine westdeutsche Empörungswelle ausgelöst und den Vorwurf, die frei gewählte DDR-Regierung würde den Rechtsstaat mit Füßen treten wie die SED-Regierung. Das Ausmaß der westlichen Empörung kann man abschätzen, wenn man die Empörung in Betracht zieht, die im Westen der Grundsatz

„Ausgleichsleistungen statt Rückgabe“ hinsichtlich der Enteignungen unter sowjetischer Besatzungshoheit ausgelöst hat.

Der andere Einwand lautet: dieser Grundsatz habe sich als großes Investitionshemmnis erwiesen. Ich möchte das bezweifeln. Erstens hat schon die Volkskammer, später auch der Bundestag, die Rückgabe eingeschränkt, wenn entscheidende Investitionsvorhaben dadurch behindert würden (Investitionsvorranggesetz). Zweitens gab es im Osten ab 1990 nicht zu wenige, sondern zu viele Gewerbegebiete. Große Unternehmen und Supermärkte haben ohnehin auf der grünen Wiese gebaut. Nur für Unternehmen, die auf den Innenstadtbereich angewiesen sind, konnte hier eine Investitionsbremse überhaupt entstehen.

Umgekehrt wurde der Grundsatz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ein Investitionsanreiz, weil viele Westdeutsche ihren wiedererlangten Familienbesitz mit ihren Mitteln wunderbar renoviert haben, obwohl die Rendite oft bescheiden war.

Ein anderes Problemfeld stellen die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ar. Formal gesehen handelte es sich bei ihnen ja nicht um Volkseigentum und Volkseigene Betriebe, sondern um Genossenschaften, wie sie ja auch die westliche Rechtsordnung vorsah. Sie waren allerdings nicht freiwillig zustande gekommen und schließlich de facto in Landwirtschaftsindustrie umgewandelt worden. Sowohl die letzte DDR-Regierung als auch die Bundesregierung haben die LPGs wie echte Genossenschaften behandelt und ihnen überlassen, was sie werden wollen, eine freiwillige Genossenschaft, ein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oder eine Aktiengesellschaft. In der Praxis ist aus dieser schönen Idee der gemeinsamen Selbstbestimmung – Fremdbestimmung geworden. Oft haben die LPG-Vorsitzenden ihre Mitgenossen über den Tisch gezogen. Wer aus der LPG ausscheiden und selbständig werden wollte, geriet oft unter den dörflichen Gruppendruck. Für das Land Brandenburg wird geschätzt, dass lediglich zwei Prozent der LPG-Umwandlungen vollkommen korrekt erfolgt sind. Allerdings muss man auch folgendes sehen: die Bereitschaft, mit einem mittleren Bauernbetrieb

in die Selbständigkeit zu starten, war unter den LPG-Mitgliedern sehr gering. Die Tradition war abgebrochen. Die Betriebsmittel waren zudem so veraltet, dass ohnehin das meiste neu angeschafft werden musste. Der Klagen der Wiedereinrichter, dass sie zu wenig aus dem Genossenschaftsvermögen bekommen haben, darf man wohl oft entgegenhalten, dass aber auch nicht viel realisierbares Vermögen zu verteilen war. Das Gesamtergebnis wiederum gibt heute wenig Grund zum Klagen. Die ostdeutsche Landwirtschaft ist konkurrenzfähig, und zwar auch deshalb, weil die Betriebsgröße bei durchschnittlich 200 ha viermal so groß ist wie die durchschnittliche westdeutsche Betriebsgröße. Während im Westen die Tradition des Familienbetriebs noch eine Rolle spielt, gibt es so etwas im Osten nur bei wenigen, meist hochspezialisierten Betrieben. Übrigens ist in der ostdeutschen Landwirtschaft der Arbeitskräftebedarf wie in der Industrie bei gleicher Leistung um 75 Prozent zurückgegangen. Dieser enorme Arbeitsplatzverlust kann nur durch Tourismus kompensiert werden.

Die Lösung, die die Eigentumsfragen schließlich gefunden haben, können im Ganzen als befriedend und befriedigend bezeichnet werden. Seit mehr als zehn Jahren spielen sie in den Leserbriefen ostdeutscher Zeitungen keine Rolle mehr. Etwas länger hat sich die Unzufriedenheit der (meistens westlichen) Alteigentümer der Bodenreform artikuliert. Aber Sprengstoff stellt das Thema nicht mehr dar. 1994 hatte eine ostdeutsche Autorin prophezeit, die Hälfte der Ostdeutschen werde aufgrund der Regelungen zur Eigentumsfrage ihr Haus oder ihre Wohnung verlieren. Inzwischen gibt es im Osten wegen des demographischen Wandels Leerstand von Wohnungen sowie Baugrundstücke und alte Häuser mehr als genug. Es gibt westdeutsche Rentner, die in den Osten ziehen, weil dort vieles etwas billiger ist, der Wohnkomfort aber derselbe.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Prof. Dr. Schröder, für den Vortrag. Ein Vortrag vor allem basierend auf eigenen Erlebnissen und Erfahrungen. Wir konnten daraus lernen, dass die

Ostdeutsch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durch sowjetische Besatzung und den Wiedervereinigungsprozess vieles durchgemacht haben. Wir konnten lernen, dass vieles anders verlief als wir es gelesen oder gehört haben. Wir sind sehr interessiert daran, zu wissen, wie wir das Problem mit dem Eigentumsrecht im Falle ein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lösen können. Wir merken: das was man theoretisch weiß und das was man praktisch erleben muss, sind verschiedene Dinge. Deswegen werden uns solche konkrete Fälle und Erfahrungen, wie die von Ihnen geschilderten, sicher zugute kommen. Nun gebe ich das Mikrofon an den koreanischen Referenten.

[KIM Younghoon Research Director, Dept. of Global Cooperation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Grundlegende Erkenntnisse bezüglich der Privatisierungen in der Landwirtschaft in nordkoreanischen Gebieten während der Systemtransformation

Yeong-hun Kim

Forschungsdirektor d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ieser Vortrag beschäftigt sich mit den der Transformation des nordkoreanischen Wirtschaftssystems folgenden Richtungen der Privatisierungen in der Landwirtschaft. Diesbezüglich erhoffen wir uns von den deutschen Spezialisten, uns mit ihrem Fachwissen zur Seite zu stehen.

Vor der Diskussion müssen hinsichtlich der Privatisierung der nordkoreanischen Kolchosen von bestimmten Vorbedingungen ausgegangen werden. Diese bedeuten eine zügige Vereinigung von Nord- und Südkorea oder die Notwendigkeit einer raschen Systemreform in Nordkorea zur Vereinigung der nord- und südkoreanischen Wirtschaft.

1. Die nordkoreanische Kollektivlandwirtschaft

Die Agrarlandschaft Nordkoreas setzt sich aus kollektivierten landwirtschaftlichen Großbetrieben zusammen. Die Besitzformen lassen sich in Kollektivbetriebe und Staatsbetriebe unterteilen (Siehe Tabelle 1).

Tabelle 1: Kollektivbetriebe Nordkoreas

Einteilung	Kolchose	Staatsbetrieb
Ackerland	1.700.000 ha	160.000 ha
Funktion	Produktion von Nahrungsmitteln und Agrarprodukten	Produktion von Saatgut und Zuchtvieh Produktion von Viehzuchterzeugnissen, Sonderkulturen
Art	-	Agrar-Versuchsstation, Saatgutproduktionsbetrieb, Zuchtstätte, Spezialbetrieb (Obst, Tabak, Jungbaum-Anpflanzung), Zucht (Huhn, Schwein, Ziege)
Besitz und Betrieb	Auf Basis des Allgemeinguts - Kollektivverwaltung	Auf Basis des Staatsbesitzes - Staatsaufsicht oder Provinzverwaltung

Kolchosen entsprechen de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 Diese Betriebe machen mehr als 90 % der gesamten nordkoreanischen landwirtschaftlichen Nutzfläche aus (insgesamt 1.700.000 ha), und sie produzieren die Nahrungsmittel und Agrarprodukte, die von der Bevölkerung konsumiert werden. Die Kollektivbetriebe sind Allgemeingut der Mitglieder und werden unter der Staatsführung kollektiv verwaltet.

Die Staatsbetriebe ähneln den Staatsbetrieben Ostdeutschlands. Das Ackerland in Staatsbesitz macht mit 160.000 ha ungefähr 10 % des gesamten Ackerlandes aus. Unter staatlicher Verwaltung stehen hauptsächlich Agrar-Versuchsstation, Saatgutproduktionsbetrieb und Zuchtstätten sowie Spezialbetrieben für Obst, Tabak oder Jungbaum-Anpflanzungen und auch Großbetrieben für die Zucht von Hühnern, Schweinen oder Ziegen. Sämtliches Vermögen der Staatsbetriebe gehört dem Staat und sie werden von Agrarverwaltungseinrichtungen, die dem Staat oder den Provinzen unterstehen, betrieben.

2. Ursprünge und Besitzrechte der Kolchosen und Staatsbetriebe

Die Ursprünge der nordkoreanischen Kollchosen liegen in der Bodenreform und der Kollektivierung der Landwirtschaft. Durch die Bodenreform in Nordkorea 1946 wurde der größte Teil des Ackerlandes an Kleinbauern umverteilt und ein Teil wurde verstaatlicht. Das zu jener Zeit verstaatlichte Ackerland bildete den Ursprung der Staatsbetriebe.

Nordkorea begann ab 1953 mit der Kollektivierung von privaten Landwirtschaftsbetrieben, sodass 1958 sämtliche Privatbetriebe in Kolchosen eingliedert wurden. Nach Abschluss der Kollektivierung der Landwirtschaft waren in Nordkorea nur noch staatlichen und kollektiven Großbetrieben übrig geblieben. Während die Besitzrechte des Vermögens staatlicher Betriebe eindeutig beim Staat liegen, gestalten sich die eigenen Besitzrechte der Kolchosen vielseitig. Sämtlicher Besitz der Kollektivbetriebe unterteilt sich nominell in Allgemeingut der Mitglieder, Staatsbesitz und Privatbesitz (siehe Tabelle 2).

Allgemeingut bezieht sich auf den Boden der Kolchose, gemeinschaftlich genutzte Einrichtungen, Produktionsmittel und ganzjährige Feldfrüchte wie Obstbäume. Staatsbesitz setzt sich aus großen Landmaschinen, die dem landwirtschaftlichen Betrieb vom Staat zugewiesen wurden, Einrichtungen und Wohnungen, die vom Staat errichtet wurden, zusammen. Privatbesitz besteht aus Unterkünften zum Leben, die von der Zeit vor der Kollektivierung stammen, Kleinvieh und Agrarwerkzeug usw.

Jedoch können die Mitglieder der Kolchose das Besitzrecht über den Boden im Besitz des Betriebes nicht geltend machen. So steht es im nordkoreanischen Gesetz zur Regelung des Bodenbesitzrechtes. Artikel 11 des nordkoreanischen Bodengesetzes besagt, dass die Besitzrechte des Bodens eines Kollektivbetriebes bei den Mitgliedern liegen. Allerdings wird im Artikel 13 des Bodengesetzes sämtlicher Boden unter das Besitzrecht des Staates gestellt. Demnach ist das Boden-Besitzrecht nicht eindeutig: zwar befindet es sich nominell bei den Mitgliedern, in Wirklichkeit liegt es aber beim Staat (siehe Tabelle 2).

Tabelle 2: Besitz und Verwendung von Vermögensbesitz der Kolchosen

Einteilung		Aufteilung	Regelung
Besitzrecht	Allgemeing ut	Eigenes Land der Kolchose, Anlagen und Produktionsmittel, ganzjährige Feldfrüchte.	Zivilrecht § 45 Nr. 2, § 48 Kolchosen-Satzung § 5
	Staatsbesitz	Große Landmaschinen, die dem landwirtschaftlichen Betrieb vom Staat zugewiesen wurden.	Zivilrecht § 49
		Kultur- und Produktionseinrichtungen, die vom Staat eingerichtet wurden. Vom Staat erbaute Wohnungen.	Zivilrecht § 49 Zivilrecht § 50
Privatbesitz	Unterkünfte zum Leben, die von der Zeit vor der Kollektivierung stammen. Kleinvieh und Agrarwerkzeug Eigener Verteilungsanteil, Erzeugnisse von Gemüsegärten und Nebenerzeugnisse.	Kolchosen-Satzung § 7 Kolchosen-Satzung § 7 -	

Tabelle 3 : Gesetzliche Bestimmungen des Bodenbesitzrechts nordkoreanischer Kooperativen

Gesetz	Inhalt
Zivilrecht § 37	Einteilung in Staatsbesitzrecht, Besitzrecht der Kooperativen und Privatbesitzrecht
Bodenrecht § 11	Bodenbesitz der Kooperativen ist allgemeiner Besitz der Mitglieder Staat schützt Bodenbesitz der Kooperativen per Gesetz
Bodenrecht § 13	Kontrollrecht (Verfügungsrecht) des Staates über den Boden
Bodenrecht § 12	Staat kann auf Willen der Kooperativen-Mitglieder den allgemeinen Bodenbesitz in Staatsbesitz umwandeln

3. Privatisierung der Kollektivbetriebe

Kommt es zu einer raschen Umwandlung des Wirtschaftssystems unter den beschriebenen Besitzverhältnissen der Kollektivbetriebe, bleibt nur die Privatisierung der nordkoreanischen Kolchosen. Der Schlüssel der Privatisierung der Kollektivbetriebe in Nordkorea liegt in der Errichtung eines konkurrenzfähigen Landwirtschaftsmangements auf Grundlage einer gerechten Privatisierung.

In diesem Prozess müssen zwei Prinzipien verfolgt werden. Erstens müssen die Betriebsmitgliedern mit ausreichend Informationen versorgt werden. Zweitens muss

im Privatisierungsprozess ein autonomes Entscheidungsrecht der Mitglieder garantiert werden.

3.1. Privatisierung der Kolchosen

Bezüglich der Privatisierungsmethode der Kolchosen in Nordkorea hinsichtlich einer vermuteten Systemtransformation existieren unterschiedliche Meinungen. Diese voneinander abweichenden Meinungen lauten wie folgt; Rückgabe oder Erstattung für Personen mit Besitzrechten vor der Bodenreform. Abwicklung im Verlauf der Privatisierung des Staatsvermögens nach einer allgemeinen Verstaatlichung. Ein Teil wird vom Staat übernommen, ein Teil an die Mitglieder verteilt (kostenfrei, vermietet, verkauft). Das gesamte Vermögen wird unter den Mitgliedern verteilt.

Ob diese Meinungen rational sind oder nicht, hängt davon ab, ob die nordkoreanische Bodenreform und die nordkoreanische Kollektivierung der Landwirtschaft überhaupt als rechtmäßig zu bewerten ist und ob die Gesetze der gegenwärtigen Besitzrechte in Nordkorea anerkannt werden oder nicht.

Erstens, im Falle dass der von Nordkorea in der Vergangenheit durchgeführten Bodenreform die Rechtmäßigkeit abgesprochen wird, müssen selbstverständlich Rückgaben oder Entschädigungen an die alten Besitzer (Landbesitzer) vor der Bodenreform durchgeführt werden. Jedoch ist eine tatsächliche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ohne offizielle Dokumente als Beweis der früheren Besitzrechte schwierig. In diesem Falle kann der Staat das gesamte Vermögen der Kolchose übernehmen und sich darum kümmern, wobei Unordnungen bezüglich der Einstellung von Vermögensrechten vorhergesehen werden und sich die Umstrukturierung in eine Marktwirtschaft verzögern wird.

Zweitens, es kann auch passieren, dass die Gesetzmäßigkeit der Bodenreform zwar anerkannt wird, die Gesetzmäßigkeit der Kollektivierung jedoch nicht. In

diesem Fall muss eine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an die Besitzer (Privatbetriebe) vor der Kollektivierung getätigt werden. Aber auch hier wird es wie im Falle der Nichtanerkennung der Rechtmäßigkeit der Bodenreform wegen fehlenden offiziellen Schreiben Unordnungen bezüglich der Einstellung gegenüber Vermögensrechte entstehen und sich die Umstrukturierung in eine Marktwirtschaft hinauszögern.

Drittens, falls die Gesetzmäßigkeit der nordkoreanischen Bodenreform und der Kollektivierung anerkannt wird, sind verschiedene Vorgehensweisen je nach Art des Vermögens möglich. Dem Staatsvermögen innerhalb der Kolchosen kann sich der Staat annehmen. Privatvermögen (Wohnungen usw.) innerhalb der Kolchosen kann als privates Vermögensrecht anerkannt werden. Betreffend des Allgemeinguts innerhalb der Kolchosen kann sowohl das Recht der Betriebsmitglieder (Benutzerrecht) als auch Staatsrecht (Verfügungsrecht) geltend gemacht werden. Hier muss es zu einer schnell durchgeführten gesellschaftlichen Debatte und Übereinkunft kommen und über den Anteil der Verstaatlichung und den Verteilungsanteil der Mitglieder entschieden werden.

Im Prozess der Debatte und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eil der Verstaatlichung und den Verteilungsanteil der Mitglieder des Allgemeinguts der Kolchosen muss folgendes berücksichtigt werden: Gerechtigkeit gegenüber den Arbeitern in Nordkorea, die nicht der Landwirtschaft angehören, Gerechtigkeit innerhalb der Landbevölkerung Nordkoreas und Gerechtigkeit zwischen der Landbevölkerung Nord- und Südkoreas. Im Bereich der Nichtlandwirtschaft muss mit lange andauernden Forderung nach Land gerechnet werden. Bei der Getreideproduktion und der Viehzucht muss der politische Wille berücksichtigt werden, eine extensive Landwirtschaft zu fördern.

Wenn der Anteil der Verstaatlichung festgelegt wird, kann nach der Einzahlung des verstaatlichten Vermögens in einen „Verstaatlichungsfonds“ ein

Privatisierungsprogramm des Staatsvermögens durchgeführt werden. Der zur Landwirtschaft genutzte Boden wird durch Vermietung und Verkauf unter der Bedingung, die Betrieblichkeit aufrecht zu erhalten, privatisiert und betreffend des restlichen Bodens können Maßnahmen ergriffen werden, auf Grundlage eines lang- bzw. mittelfristigen Bodennutzungsplanes Verkäufe durchzuführen.

Bezüglich des Verteilungsanteils an die Mitglieder kann nach der Aufnahme in einen „Bodenfonds für die Verteilung an die Betriebsmitglieder“ über die Verteilung auf Konsensbasis der Betriebsmitglieder entschieden werden. Für eine effektive Durchführung müssen rechtzeitig Regelungen für die Errichtung und Unterstützung eines neuen Agrarwirtschaftssystems ähnlich des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es“ in Ostdeutschland durchgeführt werden. Den Mitgliedern soll es ermöglicht werden, eigenständig über Verteilungsform, Vermietungsform und der Form des neuen Agrarmanagements zu entscheiden und die Regierung hat für die Bereitstellung von entsprechenden Informationen und gesetzlichen Unterstützungen zu sorgen

3.2. Privatisierung der Staatsbetriebe

Ausgenommen den Fall, dass der Staatsbesitz langfristig beibehalten werden muss, müssen auch die Staatsbetriebe privatisiert werden. Wird großer Wert auf die gesetzliche Form der Staatsbetriebe gelegt, können die Betriebe zuerst verstaatlicht werden und falls es nötig ist, kann eine Privatisierung mit anderen Staatsbetrieben zusammen durchgeführt werden. Bei den betreffenden Betrieben handelt es sich um Zuchtstätten, Saatgutproduktionsbetriebe, Reinrassenzucht und Agrar-Versuchsstationen.

Allerdings können Management-Verwaltungsmethoden von denen der Kolchosen nicht wirklich unterschieden werden und es gibt auch Staatsbetriebe, die einst Kolchosen waren, aber durch einen unbekanntem Prozess zu Staatsbetrieben wurd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den betreffenden Staatsbetrieben kann ähnlich verfahren

werden, wie im Falle der Kolchosen. Hier handelt es sich um gewöhnliche Agrar- oder Zucht-Staatsbetriebe, solche, die spezielle Feldfrüchte anbauen oder Staatsbetriebe in Landkreisen.

3.3. Systemeinrichtung

Für die reibungslose Privatisierung von Kollektivbetrieben ist die Bereitstellung eines entsprechenden Systems nötig. Betreffend des staatlichen Ackerlandes und der Staatsbetriebe müssen Gesetze für die Verwaltung des Vermögens der Staatsbetriebe und der Privatisierung geschaffen werden. Nötig ist auch ein Gesetz bezüglich eines Verwaltungssystems des neu gewonnenen Staatsvermögens und dann muss es hier auch Regelungen für die Verwaltung der Staatsbetriebe und der Privatisierung geben.

Ebenfalls besteht der Bedarf, ein System im Zusammenhang mit der Privatisierung der Kolchosen zu schaffen. Gesetze und Verordnungen für Richtlinien zur Bewertung von Kolchosen-Vermögen und Entscheidungen über Besitzrechte, Verteilungsmethoden des Kolchosen-Vermögens und für ihre Durchführung sowie für die Auflösung von Kolchosen sind notwendig.

Zum Schluss müssen Förderungsmaßnahmen für die neu eingerichteten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vorbereitet werden. Damit sich das nachfolgende Managementsystem der nordkoreanischen Landwirtschaftsbetriebe an die neue Umgebung gewöhnen und entwickeln kann sind spezielle Unterstützungsmaßnahmen zu ergreifen. Die Unterstützung für die Gewöhnung an den internationalen Markt und die Marktwirtschaft der neu eingerichteten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ist durch die Ergänzung bestehender südkoreanischer Gesetze einerseits und die Schaffung neuer Unterstützungsregularien möglich. Das bestehende südkoreanische „Grundgesetz für Agrar- und Fischereiwirtschaft/-wesen sowie Nahrungsindustrie“ und das „Gesetz zur Unterstützung und Förderung der Landwirtschaft- und

Fischereibetriebe“ können ergänzt und angewandt werden und auch die neue Festlegung eines „Gesetzes zur Landwirtschaftsunterstützung und der Landwirtschaftsanpassung in Nordkorea“, das nach der Wiedervereinigung auf die Landwirtschaftsbetriebe in Nordkorea angewandt wird, ist notwendig.

[Moderator – Herr CHUN]

Vielen herzlichen Dank Herr Dr. Kim. Sie haben darüber referiert, wie man die Landwirtschaft, Staatsbetriebe und Kollektivbetriebe privatisieren kann und haben die Voraussetzungen dafür genannt. Der Inhalt dieses Vortrages, also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wird, wenn wir in Korea über Wiedervereinigung diskutieren, immer wieder zur Sprache gebracht. Darauf reagieren wir in Korea derzeit sehr empfindlich, weil es eine sehr sensible Angelegenheit ist, wenn wir wiedervereinigt werden sollten, sowohl rechtlich als auch systemisch. Die Institutionen sollten schon vorbereitet sein darauf, aber es werden auch Missverständnisse in Bezug auf diese Frage produziert. Deshalb, Dr. Kim, haben Sie hier einen sehr wichtigen Punkt angesprochen. Zunächst ist das aber in erster Linie Dr. Kims persönliche Meinung und Auffassung in Bezug auf eine mögliche Privatisierung in Nordkorea - das möchte ich vorwegschicken. Ich glaube, die koreanischen Teilnehmer wissen, wie vorsichtig die koreanische Regierung mit dieser Frage umgehen will. Daher verstehe ich den Vortrag von Dr. Kim dahingehend, dass er hier seine eigene Meinung ausgedrückt hat und nicht eine allgemeine Stellungnahme abgegeben hat. Als nächstes wird nun Herr Dr. Hammann über das Thema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in Land- und Forstwirtschaft" sprechen. Herr Dr. Hammann, ich bitte Sie.

[Dr. Detlev Hammann Geschäftsführer der
Bodenverwertungs-und-verwaltungs GmbH]

Guten Morgen, ich bedanke mich zunächst bei Ihnen, Herr Abteilungsleiter Chun für die Einladung, die freundliche Aufnahme und die Möglichkeit Ihnen hier

vortragen zu dürfen. Das Thema ist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in Land- und Forstwirtschaft. Vieles ist ja schon von Prof. Dr. Schröder gesagt worden, sodass ich mich da auch etwas kürzer halten kann. Ich möchte also meinen Vortrag in vier Punkte gliedern. Einmal noch mal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in den Jahren nach 1945, der zweite Punkt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drittens die Arbeit der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und viertens noch ein paar Kennziffern zur Situation der Landwirtschaft in der DDR. Ich möchte gleich vorausschicken, dass die Themen der Diskussion, die sich gleich nach der Wende entzündet hat, auch heute noch die Diskussion bestimmen. Das ist zuerst einmal die Bewirtschaftung des Bodens, aber es ist dann anhaltend in der politischen Diskussion auch die Frage der Auseinandersetzung, zwischen denen, die das Land auch zu DDR-Zeiten bewirtschaftet haben, denen, die es danach bewirtschaftet haben, wenn man so will den Pächtern, und auf der anderen Seite den Ansprüchen der Alteigentümer. Zur sogenannten Demokratischen Bodenreform: Prof. Dr. Schröder hat es ja schon weitestgehend ausgeführt. Es gab Verordnungen im Jahre 1945. Alles wurde entschädigt. Wer 100 Hektar oder etwas darüber hatte, wurde vollständig enteignet, wenn jemand 99 Hektar hatte, wurde ihm das vorerst nicht weggenommen. Es wurde ja nicht nur Land- und Forstwirtschaft enteignet, sondern es wurde auch alles Hab und Gut enteignet. Den Menschen wurde viel Unrecht angetan, sie wurden sozusagen von Haus und Hof verjagt in dieser Zeit. Den anderen passierte erst einmal nichts. Sie haben in der Regel auch dann die sowjetische Besatzungszone verlassen, weil sie auch um ihr Leben fürchten mussten. Ein interessanter historischer Nebenaspekt ist die Tatsache, dass die Enteignungen, so wird das berichtet, niemals direkt auf Maßnahmen der sowjetischen Besatzungsmacht zurückgegangen sind, sondern jeweils auf Anordnung; die sowjetische Besatzungsmacht stand im Hintergrund. Es waren Anordnungen der jeweiligen zuständigen Behörden. Das war wohl auch seitens der sowjetischen Besatzungsmacht durchaus so gewollt. Es hätte gegen internationales Recht

verstoßen, wenn eine Besatzungsmacht selbst tätig wird. Das ist, wenn man so will, ein kleiner, aber nicht uninteressanter Nebenaspekt. Der Grundbesitz unter 100ha wurde dann bis zum Beginn der Zwangskollektivierung nicht enteignet. Die enteigneten Flächen gingen in einen sogenannten Bodenreformfonds ein. Interessant ist vielleicht die Tatsache, die auch schon erwähnt wurde, dass dieser Bodenreformfonds dann aufgeteilt wurde an Flüchtlinge oder Umsiedler aus den damaligen Ostgebieten, die nach Kriegsende dann nicht mehr zu Deutschland gehörten. Er wurde verteilt an die ehemaligen Bauern und Arbeiter auf den größeren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n. Aber die Fläche pro Betrieb war sehr gering, hier nenne ich eine Zahl von 10ha. Es gibt andere Angaben, danach betrug die durchschnittliche Fläche sogar nur 8ha. Die Frage ist, ob damit schon die spätere Zwangskollektivierung vorbereitet wurde, da man mit einer solch geringen Hektarzahl letztlich wirtschaftlich nicht überlebensfähige Betriebe geschaffen hat. Man hat dann auch im Grunde eine Abhängigkeit von den bestehenden Großbauern geschaffen. Großbauer ist ein falscher Ausdruck, es sind Bauern, die weniger als 100ha hatten, aber mit 80-90ha war man dann damals schon ein sogenannter Großbauer. Man musste Futtermittel von denen beziehen, Maschinen nutzen usw. Das Ziel der Bodenreform, eine selbstständig wirtschaftende Kleinbauernschaft zu kreieren, ist damit dann auch nicht erreicht worden. Sicherlich hat das dann auch eine Rolle gespielt, bzw. war der politische Wille im Hintergrund zur Zwangskollektivierung da. Die nicht umverteilten Flächen, das war ca. ein Drittel des Bodenfonds, der ging dann an die sogenannten volkseigenen Güter. Wir sprechen hier auch im Vortrag immer von Volkseigentum; Volkseigentum ist klares Staatseigentum, der Eigentümer war der Staat. Das, was an die Kleinbauern umverteilt wurde, war dann zunächst Eigentum dieser Kleinbauern. 1952 begann dann die Zwangskollektivierung, d.h. die Gründung vo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amit endete diese Phase der relativen Freiheit. Die Kleinbauern und die Umsiedler mussten ihre Flächen dort einbringen. Auch sicherlich unter Zuhilfenahme von physischem Zwang. Eine Besonderheit ist,

wie schon gesagt wurde, dass die bisherigen Eigentümer, die eben einen Hof von 8 oder 10ha hatten, formal Eigentümer blieben. Diese Form des Eigentums war kein Volleigentum in dem Sinne, sondern es wurde, wenn ich recht informiert bin, sogenanntes Arbeitseigentum. Es konnte nicht verkauft werden und es konnte nur vererbt werden, wenn der Erbe weiterhin Mitglied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 blieb.

Die Situation der Landwirtschaft vor 1989 wird hier kurz dargestellt: Es gab also 4.500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es gab 415 Volkseigene Güter. Es gibt bei der Zahl der Volkseigenen Güter auch andere Zahlen, das sind verschiedene Momentaufnahmen. In der unmittelbaren Zeit danach gab es auch noch Teilungen von VEGs. Es befanden sich 2,2 Millionen Hektar in Volkseigentum bzw. besser gesagt Staatseigentum. 90% der Forstfläche befand sich im Staatseigentum. Diese Grafik gibt einen kleinen Überblick. Sie sollten sich vielleicht auf die linke Hälfte konzentrieren, dort sind die Hektarzahlen angegeben, rechts die Zahl der sogenannten Flurstücke. Von einer Gesamtfläche von über 10 Mio. Hektar befand sich etwa die Hälfte in Staatseigentum, etwas weniger als die Hälfte befand sich in Privateigentum bzw. besser gesagt sogenanntem Arbeitseigentum. Dieses Privateigentum, diese 5,1 Mio Hektar wurden dann durch gesetzgeberische Maßnahmen, ein sogenanntes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Volleigentum. D.h. es bekam die Eigenschaften zurück, die es vorher nicht hatte, im Sinne eines verkaufbaren, vererbaren, beleihbaren Eigentums. Die Situation nach 1989 lässt sich dann wie folgt darstellen: Wir hatten im Westen eine mehr kleinbäuerliche Struktur, nämlich mit einer Durchschnittsgröße von 20ha. Wir hatten dann im jetzigen Osten eine sehr viel größere Hektarzahl pro Betrieb. Wir hatten einen sehr unproduktiven Landwirtschaftsbereich. Die Zahlen, die man so findet, sagen, dass es 1990 850.000 Beschäftigte im Landwirtschaftsbereich gab. Die letzte Zahl, die sich so auftreiben lässt, sagt, dass heute nur noch rund 150.000 Arbeitskräfte in der Land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tätig sind. Es gab natürlich einen riesigen

Investitionsbedarf überall in der DDR, gerade auch in der Landwirtschaft. Und es gab die spezielle Notwendigkeit sich auf den europäischen Agrarmarkt mit seinen Besonderheiten auszurichten. Auf der finanziellen Seite gab es die Notwendigkeit der Anpassung der Lebensverhältnisse zwischen Ost und West bei Löhnen, bei Mieten, es gab die Notwendigkeit zu schulen, auszubilden und angesichts des enormen Arbeitskräfteüberhangs ggf. frühzuverrenten. Und es kam dann zu umfangreichen Investitionshilfen für die Wieder- und Neueinrichtung und Anpassungshilfen. Es gibt weiterhin eine Diskussion, aber nicht mehr so stark, ob hier vielleicht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zu viel gefördert wurde. Tatsache ist, dass die Förderung beträchtlich war, dass sie vor allem über die Europäische Kommission erfolgte. Aber die Europäische Kommission schafft ja die finanziellen Ressourcen nicht selber, sondern bezieht sie aus den Etats der Mitgliedsländer. Die ursprüngliche Idee war, dass die Einnahmen aus der Privatisierung zur Finanzierung von Agrarstrukturmaßnahmen erhalten sollten. Diese Idee ist dann aber schnell aufgegeben worden. Wir haben im Grunde dann - und ich kann Ihnen die Zahlen jetzt auch nennen - durch den Verkauf bis heute Einnahmen an den Bundeshaushalt erzielt in Höhe von 5,5 Mrd Euro. Die Flächen, die wir als BVVG heute noch haben, haben einen Wert oder eine stille Reserve von 4 Mrd Euro. Diese Zahl finden Sie aber nicht in unseren Wirtschaftsberichten, wir bilanzieren nach Deutschem Handelsgesetz.

In den folgenden drei Folien wird noch einmal der Weg geschildert, wie die Dinge rechtlich zustande kamen: Die Treuhandanstalt hatte die Aufsicht über die Privatisier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 der DDR, das wird ja bis heute diskutiert. Rechtlich lief die Umgestaltung des sogenannten Volks- oder Staatseigentums über Anhänge oder sogenannte Durchführungsverordnungen, mit denen diese Flächen dann zunächst direktes Eigentum der Treuhandanstalt geworden sind. Für uns hier, für die Landwirtschaft, ist die sogenannte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von Ende August 1990 ausschlaggebend. Interessant ist vielleicht, dass es natürlich auch in anderen Bereichen Durchführungsverordnungen gab. Die Vierte

Durchführungsverordnung kümmerte sich um die von der Staatssicherheit genutzten Gebäude.

Dann war ja die Frage, wie mache ich bisheriges Staatseigentum verkehrsfähig, wie etabliere ich wieder funktionierende marktwirtschaftliche Beziehungen und hierzu - das wird bekannt sein - gab es Behörden, die sich an Vermögenszuordnungsgesetzen orientierten. So wurden auch der BVVG durch die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nächst viele Flächen zugeordnet, die dann aber bei genauerer Untersuchung wieder anderweitig zugeordnet werden mussten. Es gibt auch hier einen kleinen Nebenaspekt. Im Nachhinein ist da auch etwas passiert, was nicht passieren hätte sollen. So sind die Flächen anders zugeordnet worden als die jeweiligen Gebäude, sodass das eine Struktur begünstigt hat, wo der Bewirtschafter der landwirtschaftlichen Fläche nicht unmittelbar an der Fläche selbst gewohnt und gelebt hat, sondern dass es eine landwirtschaftliche Betriebsführung gab, die mehr sozusagen von der Ferne aus, jedenfalls nicht aus der unmittelbaren Nähe heraus, operiert hat. Hier sehen Sie noch einmal die Grundsätze, unter denen dann die Eigentumsordnung umgestaltet werden musste. Sie finden hier schon die Frage, die ja ausführlich diskutiert worden ist, das sogenannte Bodenreformland. Dieses Unrecht, das den Alteigentümern geschehen war, die ja wie Prof. Dr. Schröder gesagt hat, DDR-Bürger oder -Ansässige waren, die dann notgedrungen in den Westen übersiedelt sind, das hat dann auch die weitere Gesetzgebung, übrigens bis auf den heutigen Tag, bestimmt. Sie findet sich wieder in dem EALG (Entschädigungsausgleichsgesetz) und der von Prof. Dr. Schröder schon genannten Flächenerwerbsverordnung. Die EALG ist ein Artikelgesetz, eine Sammelbestimmung, die viele Bestimmungen im Einzelnen, Herr Prof. Dr. Pohl wird darauf noch eingehen, zusammenfasst. Der Gesetzgeber, die jetzige Koalitionsregierung, hat im Sinne der Alteigentümer auch noch einmal das EALG angepasst und besondere Bestimmungen für Grundstückserwerb, Flächenerwerb durch Alteigentümer geschaffen. Die ordnungspolitische Grundidee, mit der die Bundesregierung angetreten ist, ist die Privatisierung. Aber, die Privatisierung

- und das ist der große Unterschied zur Privatisierung in der Landwirtschaft und derjenigen, die durch die Treuhandanstalt z.B. in Industriebetrieben durchgeführt wurde - konnte in der Landwirtschaft nicht schnell vonstatten gehen. Der Markt war gar nicht da, die Aufnahmefähigkeit für den unmittelbaren, schnellen Verkauf der Flächen war nicht gegeben. Es hätten sich Strukturen entwickelt, die chaotisch gewesen wären. Es hätte möglicherweise auch eine ordnungsgemäße Bewirtschaftung dieser Flächen gefährdet. Deshalb ergab sich die Reihenfolge, dass wir zunächst die Bewirtschaftung sicherstellen mussten, dass dann aber ein schonendes Indenmarktbringen der Grundstücke folgen musste. Dieses schonende Indenmarktbringen folgte dann natürlich über den Abschluss von langfristigen Pachtverträgen.

Hier ist noch einmal eine Chronologie: Die Gründung der Treuhandanstalt erfolgte im März 1990, das Gründungsdatum der BVVG ist der Juli 1992 gewesen. Im letzten Jahr konnten wir zwanzigjähriges Bestehen feiern. Alle, die dabei waren, ich bin ein relativer Neuankommeling, sind schon von Anfang an dabei gewesen und wundern sich, dass es die BVVG immer noch gibt. Es erfolgte dann im Juli 1992 eine Ausgründung aus der Treuhand, man hatte diese beiden Ziele Privatisierung staatlichen Vermögens in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und die Restitution und Vermögensordnung. Die BVVG hat verschiedene Phasen durchlebt; das Eigentum war zum Teil auch mal bei Banken, aber das ist heute nicht mehr so wichtig. Sie ist heute die Privatisierungsstelle des Bundes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unter der Kontrolle des Bundesfinanzministeriums in Zusammenarbeit mit dem 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Hier habe ich Ihnen noch einmal die Phasen dargestellt. Die erste Phase, Verpachtung, Verwaltung. Dann die Sicherung der Bewirtschaftung des Bodens, damit eine fortgesetzte Nahrungsmittelproduktion überhaupt stattfinden konnte nach diesem Umbruch. Die zweite Phase, vergünstigter Verkauf nach dem EALG. In der ersten Phase hatte das EALG auch einen vergünstigten Verkauf an Pächter

vorgesehen, der ist aber beendet. Jetzt ist das EALG nur noch Grundlage für den Begünstigtenverkauf an Alteigentümer. Hier werden die gesetz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dargestellt: Es gibt in Deutschland noch Etliches an gesetzlichem Rahmenwerk, das sich speziell mit der Landwirtschaft beschäftigt; Grundstückverkehrsgesetz, Landpachtgesetz, das enthält bestimmte Bedingungen, aber der Grundsatz ist: „keine Lenkung des Bodenmarktes“. Es gilt die Verfügungsfreiheit gemäß des Grundgesetzes für Privateigentum. Es gibt aber traditionell im Bereich der Landwirtschaft bestimmte Bestimmungen, die hier staatliches Eingreifen noch ermöglichen, aber die Dinge sind so gestaltet, dass hier keine staatliche Beeinflussung des Marktes stattfinden soll, auch wenn, ich will das nicht verschweigen, es im Einzelnen immer wieder mal getestet wird, insbesondere von Sachsen-Anhalt, leider.

Wie verlief das im Einzelnen, diese drei Phasen? Die erste Phase war die Verpachtung 1992. Als Ergebnis einer langwierigen Diskussion, die zum Teil heftig war und mit großer Leidenschaft geführt wurde, wurde dann zunächst einmal langfristig verpachtet. Es wurde dann verpachtet nach bestimmten Grundsätzen: Wer bietet das überzeugendste Konzept für die Fortführung des Betriebes angepasst auf die Verhältnisse am Boden? Businesspläne wurden gemacht usw. Ich will nicht verschweigen, dass wir heute davon überzeugt sind, dass das kein guter Weg war. In der damaligen Situation musste er aber sein. Jeder, der verpachtet oder einen Antrag auf Verpachtung stellt, muss ein Konzept haben, muss sagen, was er machen will. Damals war natürlich die Diskussion, „wie sichere ich Arbeitsplätze?“. Aber in dem Fall, wo jemand gepachtet hat und dann die Zahl der versprochenen Arbeitsplätze nicht liefern konnte, was wollten Sie dann machen? Wollten Sie ihm das dann wieder wegnehmen, weil Sie sagen, er hat seinen Businessplan nicht eingehalten? Das ging nicht. Es haben sich dann zum Teil Rahmenbedingungen von der Europäischen Union geändert, über die der Pächter natürlich keinerlei Kontrolle hatte. Was hätten Sie da machen sollen? Hätten Sie dann einen neuen Pächter gefunden? Das ging nicht. Es war also eine lehrreiche

Phase, wo wir, die damals Verantwortlichen, zu dem Schluss kamen, das Einreichen von Businessplänen usw. ist nicht besonders sinnvoll. Es sind damals auch Entscheidungen zustande gekommen bei der Vergabe dieser Flächen, die möglicherweise auch heute nicht mehr so transparent erscheinen könnten. Die auch korrekturbedürftig waren, möglicherweise. Es sind bestimmte Interessenten einfach nicht zum Zuge gekommen, die vielleicht genauso gut oder sogar noch besser gewirtschaftet hätten. Aber die Situation war damals auch vom Zwang des Handelns diktiert.

Hier werden noch einmal die Gründe dargestellt, warum es sinnvoll war, nicht zu verkaufen, sondern zunächst zu verpachten. Der Kapitalbedarf der Betriebe für die Flächennutzung war geringer, die Konsolidierung konnte schneller voran gehen. Ein Verkauf hätte hohe Finanzmittel gebunden, wozu die Betriebe noch nicht in der Lage waren, weil die Eigenkapitaldecke einfach zu knapp war und wir wollten eben diese Schwankungen auf dem Bodenmarkt vermeiden. Der Preis war natürlich die Schaffung einer Behörde, der BVVG, die es sonst nicht gegeben hätte, hätte man es gleich verkauft. Hier noch einmal die Kriterien der Pächterauswahl, die ich eben schon einmal geschildert habe. Es durfte nicht unterverpachtet werden, der Pächter musste ortsansässig sein, bevorzugt wurden natürlich die Strukturen, die damals schon vor Ort vorhanden waren. Betriebsleiter mussten qualifiziert werden, Arbeitsplätze erhalten usw. Es wurden aber auch bestimmte Vorkehrungen für enteignete Alteigentümer geschaffen. Die zweite Phase war dann das, was aufgeschoben, aber nicht aufgehoben war, nämlich der nunmehrige Beginn der Überführung in Privateigentum. Damals wurde in dem EALG versucht hier Subventionen auszureichen, das ist auch gelungen. Aber auch eine wichtige Rahmenbedingung, unter der wir operieren, ist die Überwachung durch die Europäische Kommission, die in ihren sogenannten Grundstücksmitteilungen darauf achtet, dass die öffentliche Hand hier keine unzulässigen Subventionen ausreicht, sondern dass die öffentliche Hand in einem Rahmen agiert, der transparent ist und der natürlich auch jeweils den Marktwert sicherstellt. Ein Privater kann

verschenken oder unter sonstigen Bedingungen seine Grundstücke abgeben, ein Staat kann das nicht. Da leben wir im Regime der Europäischen Union. Ich sage mal, wir als BVVG sind damit zufrieden, andere in Deutschland sind damit nicht ganz zufrieden, aber damit können wir umgehen. Also diese Subventionen, die wir gewährt haben im EALG, nämlich, dass wir einen 35-prozentigen Abschlag vom Verkehrswert vorgenommen haben, diese Subvention wurde aufgehoben im Jahre 2009 und wir mussten dann übergehen zu einer Orientierung an dem Verkehrswert insbesondere für Pächter.

Die Phase Drei ist die Phase, in der wir uns derzeit befinden. Während wir früher bei der Einzelvergabe bei jeweiligen Interessenten waren, sind wir jetzt übergegangen in einen marktwirtschaftlichen Prozess. Wir schreiben aus im Internet, alle Flächen sind über unsere Homepage zu erkunden. Wir haben weiterhin aber natürlich die Auseinandersetzung mit bzw. die Frage der Pächter. Alle langfristigen Pächter haben weiterhin die Möglichkeit bei uns innerhalb bestimmter Höchstgrenzen, die durch sogenannte Privatisierungsgrundsätze festgelegt sind, Flächen zu erwerben. Diese Privatisierungsgrundsätze, die stellen so etwas wie agrarstrukturelle Veränderungsmöglichkeiten sicher. Sie erinnern sich, ich hatte ausgeführt, dass wir 1992 in einem Eilverfahren verpachtet haben, an diejenigen, die dann da waren. Da wurden zum Teil sehr große Flächen gleich auf einen Schlag verpachtet. Irgendwann liefen diese Pachtverträge aus, für 12, 18 Jahre wurde verpachtet. Um dann ein wenig mehr Zugang in den Markt zu ermöglichen, wurde eine Obergrenze geschaffen, innerhalb derer diejenigen, die bisher Flächen gepachtet hatten, tatsächlich diese Flächen auch kaufen konnten. Es war sozusagen ein agrarstrukturelles Instrument, um zu ermöglichen, dass jetzt Newcomer auch eine Chance zum Markteintritt haben. Wir stehen aber da dann vor dem Problem, das ist diese Direktvergabe, welche Preise nehmen wir dann von den Pächtern? Denn diese Flächen werden ja nur den bisherigen Pächtern angeboten. Weil wir ein großer Marktteilnehmer sind, haben wir ein Vergleichspreissystem entwickelt, wo wir nach den Vorgaben der Europäischen Kommissionen, mithilfe ausgefeilter

IT-Technik Preise ermitteln für vergleichbare Flächen in einer bestimmten Größenordnung und bestimmen dann die Preise innerhalb derer diese Pächter dann auch erwerben können. Und in der Regel wird dann auch erworben. Ich gehe hier noch mal auf diese Bedingungen in den Businessplänen ein. Wir machen keine Businesspläne mehr zur Voraussetzung, es entscheidet heute, wenn wir ausschreiben das Höchstgebot und bei den Pächtern entscheidet allein diese Frage. Wenn sie berechtigt sind, diese Flächen zu erwerben, und sie bereit sind den von uns ermittelten Preis zu zahlen, dann bekommen sie sie auch, dann werden wir an sie verkaufen.

Hier ist eine Folie, die versucht so ein bisschen die Entscheidungsprobleme oder den Dreiklang der Probleme, vor denen wir stehen, zu beleuchten. Das ist das jeweilige Bundes- und Landesrecht, das sind politische Vorgaben, die wir haben und das ist auch das EU-Recht, unter dem wir stehen.

Wo stehen wir heute? Die derzeitigen 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unter denen wir unsere Privatisierung vornehmen, sind noch gegeben durch die Vereinbarung der jetzigen Koalitionsregierung; sie hat uns ein Datum bis 2025 genannt, das ist ein sehr langer Zeitraum, das ist eine politische Vorgabe. Wir haben bei uns am 22. September Bundestagswahlen, es wird dann wieder eine Regierungsvereinbarung geben, ggf. gibt es dort ein anderes Datum. Das Bundesfinanzministerium hat uns bedeutet, dass es gerne die Dinge weiter beschleunigen will. Dann müssen entsprechend die Rahmenbedingungen geändert werden. Wir haben ein Flächenerwerbsänderungsgesetz, das ist ein Teil des Ihnen schon genannten EALG, das sieht einen bevorrechtigten Erwerb für Alteigentümer vor. Dieser bevorrechtigte Erwerb für Alteigentümer läuft nach unserer Einschätzung Ende nächsten Jahres mehr oder minder aus, es wird dann nur noch Einzelfälle geben. Dann ist diese ganze Frage des Erwerbs der Alteigentümer geregelt. Dann haben wir in diesem Fall die Folgen des Zweiten Weltkriegs in dem Bereich abgearbeitet, wenn man das so pathetisch formulieren will. Wir haben die Privatisierungsgrundsätze, die Vereinbarung zwischen Bund und

Ländern, die diese Höchstgrenze festlegt, innerhalb derer langfristige Pächter erwerben können. Die muss dann auch angepasst werden, wenn wir bis 2025 zuende sein wollen. Dann können wir irgendwann nicht mehr verpachten, sondern müssen zu einem Punkt kommen, ab dem wir nur noch verkaufen. Ein weiterer Punkt, der unsere tägliche Arbeit bestimmt, ist die Kritik an den hohen Preisen. Die Preise, die wir derzeit erzielen, liegen fünf Mal so hoch wie die Preise vor fünf Jahren. Wir haben dort eine ziemlich intensive öffentliche Diskussion in Deutschland, aber wir müssen diese Preise nehmen - wenn man polemisch ist, kann man sagen, wir sind Anbieter, nicht Nachfragender - wir bestimmen die nicht, wir sind nur auf einer Seite des Marktes tätig. Wir glauben, dass diese hohen Preise zustande kommen, weil dieser Bereich Deutschlands in einer bevorzugten Klimazone liegt. Wir stellen Versteppung in vielen Teilen der Welt fest, wir stellen ein weiter hohes Bevölkerungswachstum fest. mit entsprechenden Auswirkungen auf Nahrungsmittelnachfrage und Agrarflächen. Eine Rolle spielt möglicherweise auch die Entwicklung auf den Finanzmärkten, bei denen die Finanzmarktakteure heute keine gute Rendite mehr bei Finanzprodukten erzielen, sondern inzwischen ausweichen auf die Nachfrage nach Grund und Boden. Wir haben auch eine interne Diskussion in Deutschland: Wir sind ja ein föderales System mit 16 Bundesländern und in Ostdeutschland gibt es 2-3 Länder, die würden gerne unsere Flächen übernehmen. Aber das ist letztendlich eine politische Entscheidung, die nicht von uns getroffen wird, sondern vom Bundesfinanzministerium. Ich möchte zum Ende kommen. Ich habe hier nur noch einmal die Zahl der Betriebe gegenübergestellt: 1991 gab es rund 11.000 Betriebe, das waren noch sozusagen die großen aus der DDR gekommenen Betriebe. Die Zahl hat sich verdoppelt, sicherlich auch durch unsere Politik, die Höchstgrenze für Erwerbsmöglichkeiten zu begrenzen. Das Pendant der gesunkenen durchschnittlichen Betriebsgröße sehen Sie dort. Hier sehen Sie noch einmal die Zahl der Beschäftigten. Sie sehen, dass sich trotz gesunkener Zahl der Beschäftigten die Produktivität der Betriebe in Ostdeutschland deutlich erhöht hat. Vielleicht ganz zum Schluss noch, es gibt

auch eine Diskussion, die jetzt fragt: „Wie ist die Produktivität der ostdeutschen Betriebe im Vergleich zu westdeutschen Betrieben?“. Eindeutige Antworten gibt es da nicht, aber es gibt doch Hinweise, dass die Produktivität in den westdeutschen Betrieben immer noch höher ist. Es gibt auch andere Meinungen. Auf jeden Fall hat aber eine deutliche Angleichung zwischen Ost und West stattgefunden und die ostdeutschen Betriebe stehen vergleichsweise gut da, aufgrund ihrer sehr viel größeren Flächenausstattung gegenüber westdeutschen Betrieben. Die Produktionsbedingungen, die dort herrschen, werden natürlich sehr bestimmt durch die EU-Agrarpolitik mit ihren Förderungsmaßnahmen. Eine Rolle spielt auch die Frage der Verfügbarkeit des Bodens für nachwachsende Rohstoffe. Ich hoffe ich habe Sie nicht zu sehr verwirrt, bedanke mich für Ihre Aufmerksamkeit und stehe dann natürlich in der Diskussion für Fragen zur Verfügung.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in Land- und Forstwirtschaft

Detlev Hammann - BVVG -

Vortrag anlässlich der Dritten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Seoul, 27./28. Juni 2013

02.08.2013

Seite 0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in Land- und Forstwirtschaft

- 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45
Bodenreform 1945-1949; Kollektivierung nach 1949
- I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Privatisierung rechtlicher Rahmen, erste Maßnahmen
-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seit 1992 bis heute
Zunächst langfristige Verpachtung, später Mischung aus Verkauf und Verpachtung; in der Endphase nur noch Verkauf

Exkurs: Situation der Landwirtschaft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02.08.2013

Seite 1



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45

„Demokratische Bodenreform“

- Verordnungen im September 1945: entschädigungslose Enteignung von Grundbesitz über 100 ha und sämtliches Eigentum
- (bis zur Zwangskollektivierung 1952 zunächst) keine Enteignung von Grundbesitz unter 100 ha
- Enteignete Flächen gingen in einen Bodenreformfonds ein

02.08.2013

Seite 2



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45

- 30% der landwirtschaftlichen Nutzfläche; 7.160 Betriebe (und 4.537 Betriebe von sog. Kriegsverbrechern)
- Insgesamt Umverteilung von 3,3 Mio. ha; zwei Drittel an Landarbeiter, Umsiedler und Kleinbauern
- Durchschnittliche Betriebsgröße betrug 10 ha; ökonomisch unzureichende Betriebsgröße; Abhängigkeit von nicht enteigneten Bauern (Futtermittel, Maschinen)

02.08.2013

Seite 3



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45

- Nicht umverteilte Fläche – ca. ein Drittel des Bodenfonds - ging an sog. Volkseigene Güter (VEG; sog. Volkseigentum gleichbedeutend mit Staatseigentum)
- Seit 1952 beginnende Zwangskollektivierung; Gründung vo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
- D. h. die „Nutznießer“ der Bodenreform mussten ihre Flächen dort einbringen und wurden Teilhaber an der LPG, d.h. Genossen
- Auch die bisher selbständig gebliebenen Bauern mussten – zuletzt mit physischem Zwang – ihren Grund und Boden abgeben und wurden ebenfalls Genossen dieser LPG
- Bisherige Eigentümer blieben formell Eigentümer, konnten ihre Eigentumsrechte aber nicht mehr ausüben
- Umwandlung in sog. Arbeitseigentum (kein Verkauf möglich, nur vererbbar bei landwirtschaftlicher Nutzung, sonst Rückfall in den Bodenfonds).
- Abschluss der Zwangskollektivierung 1972

02.08.2013

Seite 4



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45; Situation der Landwirtschaft vor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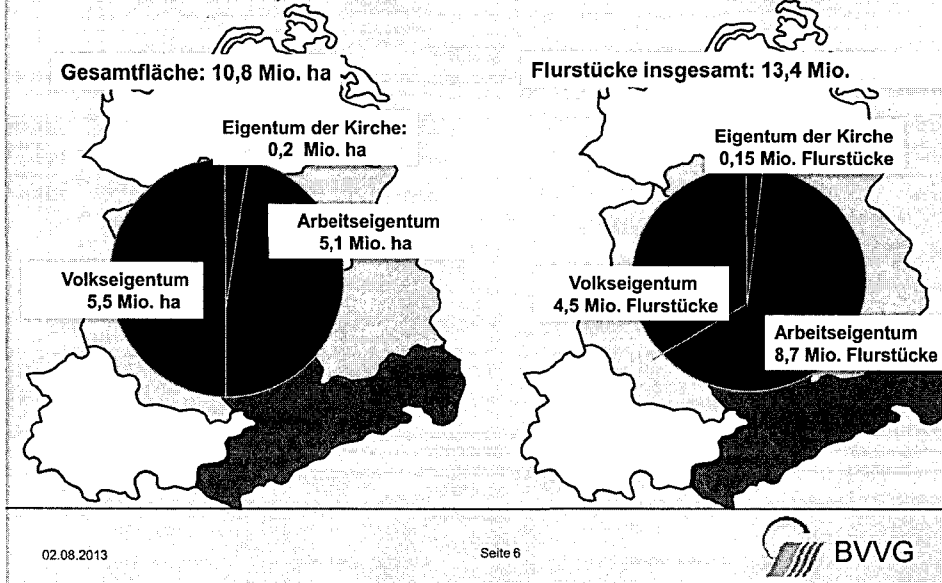
- 4.500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
- 515 Volkseigene Güter (VEG)
- 2,2 Mio. ha der landwirtschaftliche Nutzfläche im Staatseigentum (35% der landwirtschaftlichen Fläche)
- 2,0 Mio. ha der Forstfläche im Staatseigentum (90% der Forstfläche)

02.08.2013

Seite 5



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45; Situation der Landwirtschaft vor 1989



I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Ausgangssituation Agrarstruktur

- bäuerliche Familienbetriebe im Westen (Ø-Größe ca. 20 ha)
- Großbetriebsstruktur (LPG/ VEG) im Osten (Ø-Größe LPG ca. 3.500 ha; nur sog. pflanzenproduzierende LPG; sog. tierproduzierende LPG hatten keine Flächen)
- Überschuss an Arbeitskräften (1990: 850.000 Beschäftigte inkl. nichtlandwirtschaftlicher Nebenbetriebe; 2010: 148.000 Beschäftigte bzw. 98.000 AK-Einheiten)
- großer Investitionsbedarf bei Gebäuden und Maschinen
- Anpassungsbedarf des Angebots an die Nachfrage auf dem Europäischen Markt

I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Ausgangssituation Finanzen

- hoher Finanzbedarf zur Anpassung der Lebensverhältnisse zwischen Ost und West (Löhne, Mieten etc.)
- Kosten für Abbau von Arbeitslosigkeit: Ausbildung Umschulung, Frühverrentung
- Investitionshilfen zur Wieder- und Neueinrichtung landwirtschaftlicher Betriebe, auch über den EU-Haushalt
- Anpassungshilfen (Liquiditätshilfen) für ehemalige LPG und VEG
- Erste Idee: Verwendung der Einnahmen aus der Privatisierung zur Finanzierung von Agrarstrukturmaßnahmen

02.08.2013

Seite 8



I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erste Maßnahmen

- Hauptaufgabe der Treuhandanstalt (THA) war die Privatisier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 der DDR.
- Angesichts des Zusammenbruchs der Absatzmärkte im ehemaligen Ostblock musste dieser Prozess im industriellen Bereich schnell erfolgen.
- Jedoch andere Situation in der Landwirtschaft
- Die Umstellung der maroden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auf soziale marktwirtschaftliche Strukturen westlichen Musters erforderte die Überführung des Volkseigentums in private Hand.
- Optionen: Rückgabe an die Alteigentümer oder Verkauf an Investoren.

02.08.2013

Seite 9



I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 Durch das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vom 17. Juni 1990 (Treuhandgesetz) und seine Durchführungsverordnungen (DVO) waren wesentliche Teile des Volkseigentums direktes Eigentum der THA geworden
-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n Nutzflächen durch die 3. DVO vom 29. August 1990); Militär (2. DVO vom 22. August 1990); Staatssicherheit (4. DVO vom 12. September 1990)
- Nach dem Treuhandgesetz wurden die volkseigenen Betriebe (VEB) in Kapitalgesellschaften umgewandelt, deren Anteile die THA hielt. Das Eigentum an den von den VEB industriell und gewerblich genutzten Grundstücken ging auf diese GmbHs und AGs über und wurde damit mittelbares Eigentum der THA.

02.08.2013

Seite 10



I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Grundsätze und Gesetze

- Nach dem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vom 22. März 1991 (**Vermögenszuordnungsgesetz, VZOG**) entschied eine eigene Behörde, wem das etwa in den Grundbüchern noch verzeichnete ehemalige Volkseigentum zustand. Mit dieser Entscheidung wurden die Grundstücke verkehrsfähig gemacht und konnten veräußert werden.
- Privatisierung gemäß § 1 (6) **Treuhandgesetz**, d. h. unter Berücksichtigung der ökonomischen, ökologischen, strukturellen und eigentumsrechtlichen Besonderheiten der Landwirtschaft
- Begünstigter Verkauf nach **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 (EALG)** – Sammelvorschrift, regelt Entschädigungsfragen – und **Flächenerwerbsverordnung (FlErwV)** – regelt welche Flächen von wem (Pächter, juristische Person) erworben werden dürfen)
- Bis zum Verkauf: ordnungsgemäße Zwischenbewirtschaftung durch Verpachtung bzw. Eigenbewirtschaftung (ehemalige VEG)
-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LwAnpG)** – regelt Verfügungsgewalt über den landwirtschaftlichen Boden und die ordnungsgemäße Vermögensauseinandersetzung

02.08.2013

Seite 11



II. Die Umgestaltung der Eigentumsordnung nach 1989; von Staats- zu Privateigen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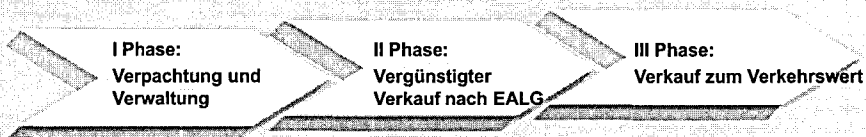
- **Gründung der Treuhandanstalt - März 1990**
 - Ziel: Privatisierung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Privatisierung landwirtschaftlicher braucht Zeit
- **Gründung der BVVG - Juli 1992**
 - Ziel 1: Privatisierung staatlichen Vermögens Land- und Forstwirtschaft
 - Ziel 2: Restitution und Vermögenszuordnung
- **Kontrolle der BVVG durch das Bundesfinanzministerium**
 - in Zusammenarbeit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02.08.2013

Seite 12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seit 1992



- Stabilisierung der Agrarbetriebe
- Sicherung der Flächenbewirtschaftung
- Sicherung der Waldbewirtschaftung
- Basis für den Verkauf 1992 - 1996

- Konsolidierung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 Schaffung einer breiten Eigentumsbasis
- Entwicklung neuer Privatwaldstruktur
- 1996 - 2009

- Verkauf von Agrarflächen auf dem Bodenmarkt
- Verkauf der Wald(rest-)flächen

02.08.2013

Seite 13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Langfristige Verpachtung vor schnellem Verkauf

- + Geringer Kapitalbedarf der Betriebe für die Flächennutzung; Kapitaleinsatz für Gebäude und Maschinen möglich.
- + Konsolidierung der Agrar- und Betriebsstruktur nach Fachkunde der Landwirte möglich, nicht nur nach Finanzkraft.
- + Vermeidung unvorhersehbarer Preisschwankungen auf dem Bodenmarkt.
- + Erhaltung der (wenigen) Eigentumsflächen als stabile Kreditsicherung
Höhere Kosten der Verwertung und Verwaltung durch längere Tätigkeit der durchführenden Gesellschaft (<=> Wertentwicklung der Flächen)

02.08.2013

Seite 14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Phase I - Verpachtung

- Ziel: Stabilisierung wettbewerbsfähiger Betriebe
- Weg: Marktpreise - Transparenz - Objektivität
- Art: Langfristige Verpachtung 12 bis 18 Jahre
- Basis: immer Business-Plan für mindestens 4 Jahre

02.08.2013

Seite 15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Kriterien der Pächterauswahl

- Eigenbewirtschaftung, keine Unterverpachtung
- Ortsansässigkeit
- Qualifikation der Betriebsleiter
- Umfang geplanter Investitionen/ Arbeitsplätze
- Auswirkungen auf die Agrarstruktur
- Interessenausgleich für enteignete Alteigentümer
- Existenzsicherung der Altbetriebe

02.08.2013

Seite 16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Phase II - Verkauf zum vergünstigten Preis für Alteigentümer und Pächter

- **Ziel:**
 - breite Eigentumsbildung in Privathand
 - Stabilisierung der Betriebe
 - Ausgleich Vermögenszug durch Bodenreform
- **Prinzip:**
 - Reduzierung des Kaufpreises bis zur Beihilfegrenze der Europäischen Union = 35 % des Marktwertes
 - Max. 200 ha je Betrieb

02.08.2013

Seite 17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Subventionierung des Verkaufs

Kombination von Wiedergutmachung für frühere Eigentümer und agrarstrukturellem Förderungsprogramm

Gefahr der Fehlallokation öffentlicher Mittel

- öffentliche Mittel fließen in die „falschen“ Betriebe
- Betriebe verwenden die vorhandenen Mittel für „falsche“ Maßnahmen

Risiko von Zielkonflikten und Ungerechtigkeiten

hohe Subventionen fördern das Betrugs- und Korruptionspotential

+ Beschleunigung des Flächenverkaufs

02.08.2013

Seite 18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Besondere Vertragsbedingungen...

- Verkaufsverbot:
 - 20 bzw. jetzt 15 Jahre - sonst Vertragsauflösung und Flächen zurück an BVVG
- Zweck- und Personenbindung:
 - Keine Umwidmung und keine Unterverpachtung
- Festschreibung der Eigentümerstruktur bei Kapitalgesellschaften
 - Änderung der Eigentümerstruktur > 25 % - Auflösung des Vertrages

02.08.2013

Seite 19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Phase III - Verkehrswertverkauf Agrarflächen

- Prinzip Ausschreibung vor Einzelvergabe
- Ausschreibungsprozedere
 - Internet, Anzeigen, Exposé
- Bewertung bei Direktvergaben nach Vergleichspreissystem
- Welche Bedingungen haben sich bewährt?
 - Arbeitsplätze
 - Investitionen
 - Umnutzungsbeschränkun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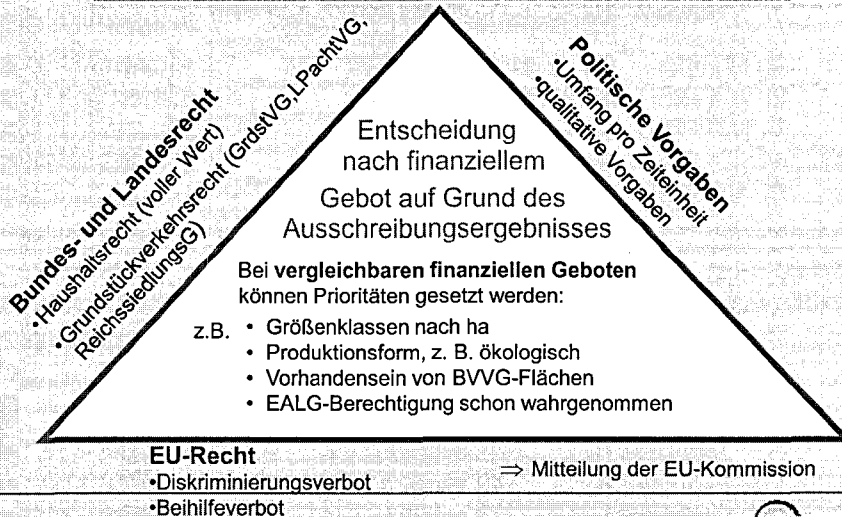
02.08.2013

Seite 20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Rahmenbedingungen für die Flächenprivatisierung



02.08.2013

Seite 21



III. Die Arbeit der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Derzeitige politische Rahmenbedingungen

- Koalitionsvereinbarung 2009
„... Abschluss im Wesentlichen bis 2025 ...“
- 2. Flächenerwerbsänderungsgesetz
bevorrechtigter Erwerb der Alteigentümer
- Privatisierungsgrundsätze 2010
berücksichtigen agrarstrukturelle Überlegungen der dafür zuständigen Länder.
Höchstgrenze für Verkauf an langfristige Pächter:
450 ha
- Kritik an hohen Preisen: globale Trends
- Erwerbswunsch der Länder
- Bisher 5,5 Mrd. € an den Bund abgeliefert

02.08.2013

Seite 22



Exkurs: Situation der Landwirtschaft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Jahr/Betriebe ab 5 ha	1991	2010
Zahl der Betriebe	11.158	22.256
Durchschnittsgröße (ha LF/Betrieb)	462	249
Zahl der Beschäftigten	850.000	150.000

- deutlicher Produktivitätszuwachs (Weizen: 1989: 45 dt/ha; 2008: 76 dt/ha)
- recht schnell gleiche Arbeitsproduktivität wie im Westen, aber noch geringere Flächenproduktivität

02.08.2013

Seite 23



[Moderator – Herr CHUN]

Vielen herzlichen Dank, Herr Dr. Detlef Hammann. Ich glaube Sie haben die Entwicklung von der Vergangenheit bis heute sehr im Detail erklärt. Vielen herzlichen Dank. Wir haben schon drei Vorträge gehört, deshalb wollen wir jetzt eine Kaffeepause einlegen. Weil wir schon spät dran sind, werden wir nur 10, statt 15 Minuten Pause haben.

[Moderator – Herr CHUN]

Meine Damen und Herren, wir werden mit der Sitzung fortfahren. Wir haben drei Vorträge gehört und jetzt wollen wir mit der Diskussion beginnen. Und zwar zunächst mit den ergänzenden Anmerkungen der deutschen Teilnehmer.

[Prof. Dr. Karl-Heinz Paqué ehem. Staatsminister der Finanzen in Sachsen-Anhalt]

Vielen Dank. Ich hätte zwei Anmerkungen. Die erste Anmerkung betrifft die Frage der Bedeutung der Alternative Restitution vs. Entschädigung aus volkswirtschaftlicher Sicht. Ich bin sehr dankbar für das, was der Kollege Prof. Dr. Schröder ausgeführt hat, nämlich, dass man die Frage in ihrer Bedeutung als Wachstums- und Strukturwandelhindernis nicht überschätzen sollte. Jedenfalls im Kontext der deutschen Entwicklung. Der zentrale Punkt dabei ist, dass die eigentlichen Probleme des Aufbau Ost wirtschaftlich vor allem in der Industrie lagen. In der Industrie [hat] die Frage Restitution vs. Entschädigung keine große Rolle gespielt. Wo sie eine gewisse Rolle spielte war im Dienstleistungsbereich, vor allem in den Städten. Aber das war wirklich ein vorübergehendes Problem, das sich auch relativ schnell mit pragmatischen Notlösungen in den Griff bekommen ließ. Das ist ganz wichtig für die Interpretation des Prozesses der 90er Jahre, dass hier eine Diskussion, die natürlich aus grundsätzlichen juristischen, humanitären Erwägungen sehr intensiv geführt wurde, sich später in der Realität des Angleichungs- und Wachstumsprozesses als relativ unbedeutend erwiesen hat.

Es ist eben in der Tat in einer modernen Wirtschaft so, dass industrielle Investitionen zumeist - oder sehr häufig - Green-Field-Investitionen sind und gar nicht orientiert an dem vorhandenen Kapitalbestand, den vorhandenen Grundstücken, sondern an der Produktpalette, die angeboten wird, für die man dann eine völlig neue Fabrik errichtet. Insofern spielen die Eigentumsverhältnisse keine große Rolle. Der zweite Punkt, den ich ansprechen wollte, dafür brauche ich die Grafik. Ich spreche von hier aus weiter, weil ich im Anschluss an die Darstellung von Herrn Dr. Hammann noch eine Ergänzung zur Produktivität in der Landwirtschaft machen wollte. Als Volkswirt mache ich das in einer aggregierten Betrachtung. Es ist ja immer die Frage, wie eng vergleicht man einzelne Bereiche der Wirtschaft. Ich glaube die ganz entscheidende Frage ist, wie hat sich die Landwirtschaft und wie hat sich die Industrie insgesamt in der Produktivität im Osten im Vergleich zum Westen entwickelt. Hier habe ich aus meinem Buch eine Grafik: Die Entwicklung der Landwirtschaft von 1991 bis 2008. Und zwar zwei Größen; das ist die Anzahl der Erwerbstätigen in der Landwirtschaft, obere Grafik und unten habe ich die Arbeitsproduktivität, also die Wertschöpfung pro Erwerbstätigem in der Landwirtschaft von 1991 bis 2009. Man sieht sofort, was Herr Dr. Hammann schon andeutete: Ein dramatischer Rückgang der Erwerbstätigen in den 90er Jahren. Dann anschließend ab Mitte der 90er Jahre kaum noch eine Veränderung im Trend dieser Produktivität; nur noch gewisse zyklische Schwankungen. Die Transformation der ostdeutschen Landwirtschaft war rein wirtschaftlich betrachtet ein früher Erfolg. Bitte vergleichen Sie dies mit der Industrie. Das ist eine andere Grafik, das ist die Arbeitsproduktivität in der gesamten Wirtschaft und in der Industrie ("manufacturing") von 1991 bis 2010. Da sehen Sie, dass der Prozess der Angleichung viel viel langsamer, gestreckt war, weil erst die Produktpalette durch Neuinvestitionen, die sich am Weltmarkt bewähren, entwickelt werden musste. Ein Problem, das sich in der Landwirtschaft nicht stellt, weil dort typischerweise commodities, also Produkte mit standardisierter Qualität, produziert werden und es einer innovative Weiterentwicklung darüber hinaus nicht bedarf.

Sie sehen auch, dass selbst heute die Industrie etwa 80% des westdeutschen Produktivitätsniveaus erreicht hat. 80%, aber nicht 100%. Es ist also auf lange Sicht eine Lücke geblieben gegenüber dem Westen. Das hängt zusammen mit der stärkeren Forschungsorientierung der westdeutschen Industrie, während die ostdeutsche Industrie noch stärker den Charakter von verlängerten Werkbänken hat, ganz grob gesprochen. Wir sehen hier einen fundamentalen Unterschied in der Entwicklung der Landwirtschaft zur Industrie und offenbar ist der industrielle Transformationsprozess erheblich schwieriger als der landwirtschaftliche Transformationsprozess. Das hat große Relevanz für Korea, weil ich höre, dass Nordkorea eben doch noch erheblich stärker agrarisch strukturiert ist als das Ostdeutschland war. Insofern kann das mit Blick auf eine Angleichung der Entwicklung volkswirtschaftlich betrachtet sogar ein Vorteil sein im Vergleich zu Deutschland. Das nur zur volkswirtschaftlichen Ergänzung der beiden Vorträge. Vielen Dank.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Prof. Dr. Pohl sprechen Sie bitte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Vielen Dank, dass Sie mir das Wort geben. Ich möchte insbesondere zu den Ausführungen von Herrn Kim etwas sagen, die mich sehr beeindruckt haben. Und zwar zwei Bemerkungen: Die erste Bemerkung betrifft die Frage der Ziele der Privatisierung in der Landwirtschaft. Sie haben ausgeführt, Landwirtschaft soll privatisiert werden. Aber da muss man natürlich die Frage stellen - was sind die Ziele? Ein Ziel ist sicherlich, dass wettbewerbsfähige Betriebe hergestellt werden. Es geht also um Wettbewerbsfähigkeit. Es nutzt ja nichts, Betriebe zu privatisieren, die dann nicht wettbewerbsfähig sind. Man muss also die Frage der Wettbewerbsfähigkeit in den Vordergrund stellen. Eine zweite Frage, die sich

in Deutschland gestellt hat, war die Frage der Eigentumsstreuung. Ich meine damit Folgendes: Sie können privatisieren an große Betriebe, an monopolartige Betriebe, oder sie können privatisieren an kleine Betriebe, an eine Vielzahl kleiner Betriebe, dann haben Sie eine breite Streuung des landwirtschaftlichen Eigentums im Gegensatz zur Monopolstruktur. Das ist eine Frage, die man sich stellen muss. Wie will man die Eigentumsstreuung haben? In Deutschland ist ja ein Ziel immer gewesen, das Eigentum möglichst breit zu streuen, das müsste man auch für Korea diskutieren.

Ein weiterer Aspekt ist die Frage, welche Agrarstrukturvorstellungen haben Sie? Wollen Sie beispielsweise große Agrarflächen haben, die praktisch industriell bewirtschaftet werden oder wollen Sie kleinere Strukturen haben, die eine sehr differenzierte, auch ökologische Struktur ermöglichen? Das ist in Deutschland bis heute ein Streitpunkt, ob nicht zu große Flächen geschaffen werden. Große Flächen bedeuten auch Monokulturen und damit möglicherweise ökologische Probleme. Von daher ist bei der Frage nach den Zielen der Privatisierung nicht nur die Wettbewerbsfähigkeit, sondern auch die Eigentumsstreuung und die angestrebte Struktur der Landwirtschaft zu diskutieren. Das ist der erste Punkt, den ich anmerken möchte.

Der zweite Punkt betrifft die Rahmenbedingungen. Wenn man Privatisierung macht, dann kann man natürlich heute sagen, ich privatisiere landwirtschaftliche Fläche oder Unternehmen, aber Sie müssen natürlich sehen, dass das für sich und isoliert betrachtet überhaupt nicht funktioniert. Sondern es muss ein Rahmen her, der diese Privatisierung überhaupt erst zum Erfolg führt. Zum Beispiel ist eine der Rahmenbedingungen: Sind überhaupt Finanzierungsmöglichkeiten da für den Erwerb von Unternehmen? Haben Sie ein Kreditsystem, haben wir ein Bankensystem, ein Finanzsystem? D.h. gibt es überhaupt Möglichkeiten diesen Erwerb zu finanzieren? Das ist eines der Elemente. Eine andere Frage - ich möchte nicht alle hier erwähnen, sondern nur die wichtigsten - welche Außenhandelsordnung wird man haben? Wird man z.B. den Import von

Nahrungsmitteln nach Nordkorea völlig freigeben? Dann werden Sie sehr schnell einen Verdrängungswettbewerb haben, auch im Bereich der Landwirtschaft, weil Sie dann natürlich ganz andere Märkte haben. Also ist die Frage, soll es im außenwirtschaftlichen Bereich weiterhin Handelsbeschränkungen geben? Handelsbeschränkungen, die immer den Vorteil haben, dass sie für Nordkorea Zeit schaffen, sich anzupassen an die neuen Strukturen, die aber auch die Gefahr bedeuten, dass man sich hinter dieser Handelsbeschränkung ineffizient aufstellt und ineffizient bleibt. Schließlich sind so Fragen zu regeln, wie die nach der Eigentumsordnung. Privatisieren heißt ja, man schafft Eigentum, aber was bedeutet das, Eigentum zu haben? Was ist z.B. wenn ein solcher Betrieb insolvent wird? Gibt es eine Insolvenzordnung? Welche Fragen stellen sich beispielsweise hinsichtlich der Arbeitsbedingungen? Gibt es soziale Gesetze und Vorschriften für die Beschäftigung von Arbeitnehmern? Ich will das mal hier beenden, aber mein Punkt ist: Man sollte nicht Privatisierung eines Bereiches als isolierte Aktion sehen, sondern in einem breiten Umfeld. Was in Deutschland der Vorteil gewesen ist, ist dass dieses Umfeld da war oder sehr schnell geschaffen werden konnte, weil man praktisch die institutionellen Rahmenbedingungen von Westdeutschland, also der Bundesrepublik, übernommen hat. Von da an hat der Prozess zum Erfolg geführt. Ohne die Klärung der Rahmenbedingungen würde Privatisierung scheitern. Vielen Dank.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vielleicht gibt es noch eine weitere Wortmeldung von deutscher Seite, dann würde ich das Mikrofon danach zur freien Diskussion geben.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Ich wollte noch einmal eine Frage stellen, die nur meiner Neugier dient. Es gibt also in gewissem Umfang auch heute noch in Nordkorea privat bewirtschaftete

Flächen, aber habe ich es richtig verstanden, dass die so um die 100m² groß sind? Ansonsten wollte ich noch folgendes bemerken. Wenn man also über Privatisierung nachdenkt, ob das jetzt Landwirtschaft, Unternehmen oder Häuser sind, muss man aufpassen, dass man sich nicht zu sehr daran ausrichtet, „wer bekommt etwas“, sondern Sie müssen natürlich auch den Zustand in Rechnung stellen, das haben wir in der deutschen Vereinigung gelernt. Wir haben gemerkt, dass die Maschinenausstattung in der Landwirtschaft wie auch in der Industrie mit einer 15 bis 20-jährigen Technologielücke im Grunde nicht viel wert war. Wir haben zwei drei Jahre nach der deutschen Einheit keine DDR-Traktoren mehr in der Landwirtschaft gesehen. Wir haben alles neu gekauft, denn das Bisherige galt als ineffektiv.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in Nordkorea schnell weltmarktfähig produziert werden soll, brauchen Sie sich gar nicht so sehr damit beschäftigen, wer was bekommt vom Inventar, sondern wo das Neue herkommt. Das Alte können Sie fast vergessen. Es interessiert mich auch sehr, ob Sie eine Anschauung haben über den Zustand von Häusern. Wenn Sie die Idee haben, dass Sie diese Häuser verschenken wollen, dann überlegen Sie mal, wer die Renovierung bezahlen soll. Man kann davon ausgehen, dass sich im Osten in den Innenstädten die Renovierungskosten preislich durch Vernachlässigung ohne Mühe in der Hälfte eines Neubaus bewegt haben. Sie dürfen sich nicht so sehr am Dinglichen orientieren, Sie müssen gucken, wie es aussieht. Zur Landwirtschaft habe ich noch folgende Bemerkung. Sie haben ja gesehen, wie dieser enorme Rückgang der Beschäftigungszahlen aussieht, auf 30% ungefähr, das liegt aber natürlich nicht unbedingt nur daran, dass die alle länger zum Kühefüttern gebraucht hätten, sondern das liegt daran, dass in diesen Bereichen landwirtschaftsfremde Beschäftigungen, Kindergärten, Bäckereien und sonst etwas, betrieben worden sind. Und sie müssen sich vor Augen führen, dass diese LPGs - und das wird in Nordkorea auch so sein - viel mehr sind als ein landwirtschaftlicher Betrieb. Die dort über die Zahl hinaus beschäftigt waren, das sind Aufgaben, die entweder an die Kommunen gehen oder zunächst mal wird der Kindergarten der LPG

bei der Privatisierung geschlossen und dann gibt es erst einmal gar keinen. Da kommen Folgeprobleme, die daraus entstehen, dass diese landwirtschaftlichen Kolchosen mehr sind als Produktionsbetriebe, das muss man sehr im Auge haben. Das ist in Deutschland zunächst übersehen worden. Da haben die Kommunen dann gesagt: „Jetzt sollen wir einen Kindergarten aufmachen, wo sollen wir das Geld dafür hernehmen?“. Da ist auch viel Unmut entstanden, weil diese Nebenfunktionen der Kolchosen in der Privatisierung ersatzlos wegzufallen droht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möchten Sie noch etwas sagen? Herr Dr. Hammann zunächst?

[Dr. Detlev Hammann Geschäftsführer der
Bodenverwertungs-und-verwaltungs GmbH]

Produktivität kann man natürlich von vielen Seiten aus betrachten. Ich hatte in meinen Ausführungen die Flächenproduktivität angesprochen. Dort hat es offenbar - und da beziehe ich mich auf neue Untersuchungen, die im vergangenen Jahr im Rahmen einer Enquete-Kommission, die sich vielfältig mit den Fragen der Landwirtschaft beschäftigt hat, deren Ergebnisse auch alle im Internet auf Deutsch zu beziehen sind und dem Brandenburger Landtag vorgelegt wurden - trotz vieler günstiger Faktoren, die die ostdeutsche Landwirtschaft gegenüber der westdeutschen aufweist, bei der sogenannten Flächenproduktivität keine Fortschritte gegeben, also dem Ergebnis pro Hektar. Es gibt dann auch den Begriff der Subventionsproduktivität und auch dort liegt die ostdeutsche Landwirtschaft noch deutlich zurück. Noch eine Antwort zu Herrn Prof. Dr. Pohl: Die Frage der Einrichtung kleinbäuerlicher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bei der Privatisierung. Sie erinnern sich an die durchschnittliche Fläche, die in Westdeutschland herrscht; ein Betrieb hat 20ha. Diese Frage hat sich nach meinem Dafürhalten nur in geringem Umfang gestellt. Das war keine Entscheidung, es gab dann einfach diese soziale Schicht von bereitwillig in derartige Strukturen

gehende Bauern nicht mehr. Nach 40 Jahren Kollektivwirtschaften in einem Volkseigenen Gut oder einer LPG hat es kaum mehr Leute gegeben, also nur wenige, die bereit waren, auf eigenes Risiko hier einen derartigen Betrieb wieder einzuricht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für Ihre Antwort. Vielleicht kann sich jemand von der koreanischen Seite zu Wort melden?

[HONG Yangho Vorsitzender, Stiftung für die Unterstützung des Kaesong Industrieparks]

Vielen Dank für die Kommentare in Bezug auf die Privatisierung. Es waren sehr konkrete Fälle und Erfahrungen. Das hat mir sehr geholfen zu verstehen. Was ich jetzt sagen möchte, ist mehr eine Fragestellung an Sie, nämlich wie es in Deutschland vonstatten ging. Boden- und Vermögensprivatisierung haben wir angesprochen. Und ich glaube die DDR war ein Land, wo die Industrieinfrastruktur im Vergleich zu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doch sehr gut aufgebaut war. Die DDR galt eigentlich als Industrienation, aber Nordkorea ist industriell sehr rückständig und wir Koreaner, die Experten über Nordkorea, machen sich Gedanken darüber, wenn wir vereinigt werden, sollten wir eine Infrastruktur systematisch aufbauen? Die bestehenden Straßen, Bahnen, Häfen und Flugplätze sollten natürlich renoviert werden, aber damit das Land richtig entwickelt werden kann, sollte eine neue Infrastruktur in Nordkorea aufgebaut werden. Wir wollen lieber neue Infrastruktur statt Renovierung. Daher meine Frage an die deutschen Teilnehmer, haben Sie sich im Zuge der Privatisierung schon Gedanken über diesen Infrastrukturaufbau für die industrielle Entwicklung der DDR gemacht oder haben Sie etwas renoviert und danach neue Infrastruktur gebaut? Worauf haben Sie Ihre Prioritäten gelegt? Renovierung vor neuer Infrastruktur? Oder von Anfang Gedanken an neue Industrie-Infrastruktur? Das ist meine Frage. Und Sie haben

gesagt, in der Landwirtschaft war die Produktivität in Ostdeutschland am Ende schon sehr hoch gewesen. Die ehemaligen DDR-Bürger haben als Pächter weiter das Land verwaltet. Wie wurden diese Flächen, die von ehemaligen DDR-Bürgern erworben wurden, dann später weiterverkauft?

Wir denken immer daran, wie die DDR-Bürger nach Westdeutschland gegangen sind, fast wie eine Massenflucht. Wir befürchten, dass es auch eine Massenflucht von Nord- nach Südkorea geben wird. Es wird ein Vakuum in Nordkorea entstehen. Deshalb wollen wir den Nordkoreanern möglichst helfen, also Incentives schaffen, dass die Nordkoreaner in Nordkorea bleiben können, das ist unser Plan. Wenn die Nordkoreaner z.B. als Pächter arbeiten können und Agrarflächen erworben werden können, wäre das ein wichtiges Incentive für die Stabilisierung nach der Vereinigung. Wie war das in der DDR, wie konnten die DDR-Bürger Pächter werden, das wäre meine zweite Fragestellung.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Hong. Bevor wir die Antworten und Anmerkungen der deutschen Seite hören, möchten wir von der koreanischen Seite vielleicht weitere Fragestellungen hören. Prof. Lee Gak-beom, Sie haben sich gemeldet.

[LEE Karkbum Ehrenprofessor, KAIST]

Ja, in Anschluss an die Frage von Herrn Hong möchte ich auch meine Frage stellen. Und zwar: Wir machen natürlich in Korea auch Stadtentwicklung und Infrastrukturaufbau und was dabei für Phänomene zu beobachten sind, möchte ich Ihnen kurz schildern. Es gibt deutlich weniger öffentliche Flächen als Privatflächen. Die meisten Flächen sind privatisiert in Südkorea. Wenn man Infrastruktur bauen möchte, muss sehr viel Geld für die Entschädigung des Bodens gezahlt werden. Ein Beispiel dafür: Wir wollen einen Kilometer Autobahn bauen - dann sind 90% der gesamten Baukosten Entschädigungen für den Boden, also Bodenkauf. Deshalb, wenn ein solches Eigentumssystem Südkoreas weiter besteht,

dann wird die Entwicklung Nordkoreas nach der Vereinigung sehr langsam vorankommen. Ich selber habe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ein Semester über Stadtentwicklung und Städtebau Unterricht gegeben und an Forschungsprojekten mitgearbeitet und daher frage ich Sie, wenn Sie Stadtplanung, Stadtentwicklung machen, gibt es ja bei Ihnen auf Landes- und Kommunalebene gewisse Prozesse, nämlich zuerst Plan und dann Entwicklung. Aber in Korea ist wegen dieses Bodeneigentumssystems ein solches Planverfahren wie in Deutschland unmöglich. Deshalb wird je nach Pachtfläche einfach gemacht. Wenn wir also das koreanische System des Bodeneigentums beibehalten, wäre es sehr schwierig für uns, Infrastruktur in Nordkorea aufzubauen. Deshalb machen wir uns Gedanken darüber, wie können wir die Privatisierung in Nordkorea zustande bringen? Das bereitet uns derzeit Kopfzerbrechen. Was in Südkorea passiert, möchte ich erklären. Wenn ein Entwicklungsplan bekannt gemacht wird, ist die erste Erscheinung, dass der Bodenpreis explodiert. Bodenspekulation ist enorm. Die rent-seeking class erscheint. Eine Gerechtigkeit in der Wirtschaft ist gar nicht zu realisieren wegen solcher explosionsartiger Preiserhöhungen des Bodens. Deswegen sollte man beim Bau der Infrastruktur solche problematische Erscheinungen auch mitberücksichtigen. Und ich glaube, von den Ackerflächen ist nur noch die Hälfte als Ackerfläche geblieben, die andere Hälfte ist schon zur industriellen Nutzung entwickelt, d.h. Ackerflächen werden nicht nur für Landwirtschaft, sondern für allgemeine Industrie genutzt. Solche Nutzungsbedingungen sollte man auch mitberücksichtig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Professor Lee Gak-beom. Wir hören heute Erfahrungen aus Deutschland. Sie haben einige sehr wichtige Punkte angesprochen, worauf wir achten sollten, z.B. haben Sie das Eigentumssystem Südkoreas und dessen Probleme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ganz präzise dargestellt. Das ist unser Problem in Südkorea bei der Entwicklung. Ich denke für die deutsche Seite ist es sehr

wichtig unsere Probleme, also unser Eigentumssystem des Bodens, zu verstehen. Herr Ahn, Sie haben sich gemeldet. Danach gebe ich das Mikrofon an die deutsche Seite, zunächst Herr Ahn, ich bitte Sie.

[AHN Doosoon Ehren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Zunächst möchte ich einige Kommentare abgeben bezüglich der Bemerkungen von Prof. Dr. Paqué. Das Rückgabeprinzip habe nicht so großen Einfluss gehabt auf die Investition in Deutschland, haben Sie gesagt. Das steht auch im Bilanzbuch. Wenn man sich den März 1991 anschaut, wurde damals das Entnahmegesetz erlassen. Im Jahre 1992 wurde das Investitionsvorrangsgesetz erlassen und dank dieser beiden Gesetze ist die Investition stark befördert worden. Und deshalb kann man im Großen und Ganzen sagen, im Gegensatz zu dem, was man ursprünglich gedacht hat, hat nicht das Rückgabeprinzip den Investitionen geholfen. Und dann ein weiterer Kommentar an Prof. Dr. Schröder. Am 15. Juni gab es ja die Gemeinsame Erklärung über Eigentum von beiden Ländern, aber wenn man sich den Inhalt anschaut, steht dort „einem künftigen deutschen Parlament soll die abschließende Entscheidung über etwaige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vorbehalten bleiben“. Was wurde aus dieser Erklärung, hat das Parlament irgendwelche Entscheidungen getroffen und wenn ja, wann und welche?

Ich komme zu den etwas konkreteren Fragen: Es ist inzwischen bekannt, dass die Vertreter der DDR bei den Verhandlungen über den Ersten Staatsvertrag starken Widerstand gegen das Prinzip Rückgabe vor Entscheidung geleistet haben. Was war eigentlich der Hauptgrund? Sie haben schon ein bisschen erläutert, ich hätte es gerne noch einmal gehört.

Die andere Frage, die Regierung Modrow hatte im März 1990 bereits den gesetzlichen Verkauf geeigneter Immobilien zu günstigen Bedingungen in Wege gesetzt. Ist das richtig? Davon profitierten vor allem die Privilegierten des SED-Regimes oder nicht? Ich habe von verschiedenen Quellen solche Behauptungen gehör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den Modrow-Erlass für

ungültig erklärt. Welche Wirkung hatte dieses Urteil?

Für heute die letzte Frage: Es war die Rede vom "redlichen Erwerb". Ich glaube wegen diesen Begriffs gab es viele Komplikationen und viele Rückgabeansprüche. Was heißt eigentlich redlich? Wie wurde das später geregelt? Soweit für heute.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für die Fragen. Die waren sehr konkret und detailliert. Ich bitte dann alle sich zu Wort zu melden, denen eine Frage gestellt worden ist. Herr Prof. Dr. Schröder...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Das ist glaube ich von Herrn Dr. Hammann dargestellt worden. Die Ausgleichsleistungen von denen in der Erklärung vom 15. Juni 1990 die Rede ist, sind geleistet worden, in Gestalt des Flächenerwerbsprogramms. Die Alteigentümer dürfen unterhalb des Verkehrswertes in der dargestellten Weise Flächen erwerben. Ich habe mir von einem Betroffenen sagen lassen, dass die damit ganz zufrieden sind, denn inzwischen ist außerdem noch der Bodenwert im Ganzen gestiegen. Das ist die Art und Weise, in der das geregelt worden ist. Die Vorbehalte gegen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waren psychologischer Art: Wir haben befürchtet, dass viele Ostdeutsche, weil sie die entstehende Lage natürlich noch gar nicht erkennen konnten, annehmen, dass sie rausmüssen. Es gab dann auch Vorkommnisse, dass Alteigentümer gekommen sind und sagen ich heiße soundso und komme aus dem Westen und Ihr Haus gehört mir. Es entstand ein allgemeines Gefühl der Rechtsunsicherheit, die in Wahrheit gar nicht bestand. Denn Sie konnten natürlich die Polizei rufen, wenn jemand unberechtigt Ihr Grundstück betreten hat. Ich hatte ja dargelegt, dass die Sache sich dadurch entschärft hat, dass die Fälle, in denen tatsächlich rückgegeben worden ist, sich durch die Gesamtregelung durchaus stärker reduziert haben als die Bevölkerung zunächst befürchtet hat. Wir, also Herr de Maizière und die Fraktionsvorsitzenden,

haben aber immer die Meinung vertreten, dass wir mit der Formel "Schutz des redlichen Erwerbs", die von der westlichen Seite auch akzeptiert worden ist, die wichtigsten Befürchtungen widerlegen können und das ist auch geschehen. Die Sache mit dem Verfassungsgerichtsurteil über den Modrow-Erlass, da bin ich nicht voll im Bilde, aber wenn das Verfassungsgericht den Modrow-Erlass für nichtig erklärt hat, ändert das doch nichts daran, dass durch die entsprechenden Gesetze des Bundestages de facto der Bereich geregelt worden ist. Zwei Drittel der Verkäufe unter Modrow waren Komplettierungsverkäufe. Das ist so gegangen: Die haben einen Wert bezahlt damals, weil es in der DDR keinen Markt gab, der Wert wurde berechnet nach dem Einheitswert von 1935 - ich kann das nicht im Einzelnen, also genau im Ganzen sagen, aber ich habe selber auch ein Haus erworben. Der Einheitswert von 1935 betrug in meinem Fall 12.000 Ostmark, dasselbe Grundstück kostete mit Haus unrenoviert 1992 200.000 Westmark. Damit Sie mal in einem Fall das Verhältnis zwischen Einheitswert von 1935 und dem Verkehrswert von 1992 haben. Das kann man nun nicht verallgemeinern, weil es von der Art der Grundstücke abhing, aber der Einheitswert war winzig. Man konnte also zu diesem winzigen Preis kaufen unter Modrow. Nun hat das Verfassungsgericht gesagt, das ist viel zu wenig. Und deshalb ist die neue Regelung, dass beim Komplettierungskauf (Grund und Boden ist Volkseigentum, das Haus gehört dem Käufer schon), das sind glaube ich zwei Drittel, ich weiß nicht, ob jemand eine genauere Zahl hier hat, die Hälfte des Bodenwertes [veranschlagt] wird. Der Bodenwert ist ja noch etwas anderes als der Verkehrswert.

Die anderen Fälle der Modrow-Fälle waren Mieter, die sich wie Eigentümer verhalten haben und kaufen wollten. Da hat der Gesetzgeber gesagt, aber nur, wenn sie mächtig Geld ausgegeben haben, d.h. wenn viel Geld von Dir im Haus steckt, dann ja. Wenn jemand mal schnell mitgehen lassen hat, dann hat der Alteigentümer Vorrang vor dem Mieter. Modrows Fälle wurden also modifiziert geregelt, aber nicht gänzlich anders.

Was der „redliche Erwerb“ ist, kann ich Ihnen ganz einfach sagen: Der redliche

Erwerb ist ein Erwerb ohne Korruption, ein Erwerb nach den in der DDR geltenden Regeln. Es hat natürlich Leute gegeben, die gesagt haben, die DDR war ein Unrechtsstaat, deswegen war in der DDR jeder Erwerb unredlich. Die Gerichte haben sich dieser alteigentümerfreundlichen Auslegung nicht angeschlossen. Redlich heißt "ohne Umgehung der Vorschriften, die in der DDR galten". Sie haben Recht, dass es viele Prozesse gegeben hat, aber es hat keine wirre Rechtslage gegeben, sondern die Gerichte haben gesagt, das ist klar. Ein weit verbreiteter Irrtum, aber ich habe ihn ausdrücklich schon angesprochen, ist, dass die Nutznießer Genossen gewesen seien. Ich sage Ihnen, die Genossen waren viel zu bequem, um bisher Eigentümer gewesen zu sein und die Komplettierungskäufe setzten doch voraus, dass man so dumm war in der DDR Eigentümer eines Hauses zu werden und damit nicht die Mietsubventionen zu genießen. Das hat man nur im Westen gedacht. Der Sozialismus brach für die Genossen jetzt schon aus, die haben doch zu billiger Miete viel besser gewohnt. Das Haus konnten sie sich einrichten lassen, wie sie wollten. Ein SED-Bezirkschef ist mal dadurch in Misskredit gekommen, weil er die Fliesen aus seiner Garage durch die einer anderen Farbe hat ersetzen lassen. Alles Volkseigentum, da hat er doch keinen Pfennig für bezahlt! Deswegen ist es ein großer Irrtum zu denken, die Genossen hätte ein Interesse an Eigentum gehabt, wo doch das Volkseigentum für sie viel billiger war.

Dr. Jörg Bentmann Leiter der Abteilung 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Herr Dr. Bentmann: Vielen Dank, ich möchte zwei Anmerkungen machen. Die eine bezieht sich auf die Fragestellung der Schaffung der Infrastruktur im Zuge der Wiedervereinigung. Hier sind natürlich zum einen vorhandene Verkehrswege instandgesetzt worden. Denn auch wenn die DDR in ihrer Präsenz in den letzten Jahren diese Verkehrswege nicht mehr in Ordnung gehalten hat und es erheblichen Investitionsbedarf gab, so war doch die Grundstruktur vorhanden und passte zu der notwendig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inige neue Verkehrsprojekte sind

hinzugekommen. Es gab dazu auch ein bestimmtes Planverfahren, die sogenannten „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 die dann auch einen besonderen Vorrang genossen haben bei der Finanzierung. Aber ich kann Sie beruhigen, auch in der alten Bundesrepublik und auch in der wiedervereinigten großen Bundesrepublik gab und gibt es erhebliche Probleme bei Umsetzung und Planung. Zwar war es nicht unbedingt die Frage des Eigentums, aber insgesamt gab es auch dort erhebliche Fragestellungen und Angriffe gegen solche Planungen aus Umweltgesichtspunkten und sonstigen Belastungsgesichtspunkten, weshalb wir ein sogenanntes Planungsbeschleunigungsgesetz geschaffen haben. Das diente dazu, das sehr komplizierte Verfahren zu straffen, um schneller zu einer bestandskräftigen Entscheidung zu kommen, ohne den Rechtsschutz und die Rechtsstaatlichkeit zu beseitigen. Das ist eine ganz wesentliche Voraussetzung gewesen, um schnellstmöglich die Infrastruktur wieder in einen sehr guten Zustand zu bringen und es gibt auch immer wieder politische Überlegungen dieses Modell auch auf die alten Bundesländer zu übertragen, weil wir nämlich insgesamt durchaus die Frage haben, ob und wie infrastrukturelle Großprojekte noch realisierbar sind. Die Frage der Entschädigung, also dass durch das Bekanntwerden eines Projektes eine Wertsteigerung erfolgt, wird formaljuristisch dadurch aufgefangen, dass Sie dann bestimmte Grenzen haben, von welchem Zeitpunkt die Betrachtung der Entschädigungsleistung ausgeht, also von welchem Wert ausgegangen wird, sodass Sie darüber kein "Geschäftsmodell" entwickeln können, sondern das wird dann bei der Entschädigungsregelung aufgefangen. Das zu dem Punkt.

Eine kleine Anmerkung zu Herrn Prof. Dr. Schröder noch. Er hat Recht; der Modrow-Erlass ist bzw. die aufgrund eines Modrow-Erlasses erworbenen Grundstücke sind in vielen Fällen bestätigt worden. Was immer wieder in der Presse auftauchte, das sind Einzelfälle von Erwerb durch SED-Genossen und hohen staatlichen Repräsentanten in der Übergangszeit als die merkten, jetzt ändert sich die Eigentumsordnung und das bisherige Volkseigentum ist jetzt vielleicht nicht mehr für mich zur Nutzung da. Deshalb haben sie versucht zu kaufen,

das waren aber nicht die Komplettierungsfälle, sondern eigene Kauffälle, die aber - wie ich das so aus Kenntnis einiger konkreter Fälle sehe - gar nicht an der Grundfrage der Verfassungsrechtlichkeit scheiterten, sondern daran, dass die Genossen dann vielfach schon Formfehler begangen haben. Ein Beispiel kenne ich dahingehend, dass jemand aus einem Ministerium das Grundstück gekauft hat, von dem Wohnhaus, auf dem er vorher gewohnt hat und der Zufall wollte es, dass er im Ministerium auch gleichzeitig zuständig war für die Veräußerung - er saß also sozusagen auf beiden Seiten des Tisches. Sie können sich vorstellen welche schwierigen Verhandlungen er geführt hat (Lachen im Saal). In dem Fall hat das Gericht schon die formalen Fragestellungen des Erwerbs nicht bejaht und er ist rückgängig gemacht worden. Insofern muss man unterscheiden beim Modrow-Erlass, welche Wirkung er hatte. Wie immer in solchen Fällen sind die Komplettierungsverfahren, die problemlos gelaufen sind, nicht Gegenstand der Presse geworden, aber die anderen Verfahren sind natürlich in den Vordergrund gerückt worden.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 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Das sind eben Mieter ohne Investition, die sind durch die Neuregelung dann natürlich durchgefallen. Die Komplettierungskäufe waren nur möglich bei jemandem, der Eigentümer eines Gebäudes auf volkseigenem Grund und Boden war. Und da gehörten die Genossen schon mal nicht zu der Gruppe. Und bei den Mietern, also beim Kauf durch Mieter, war der Modrow-Erlass großzügig. Die spätere Regelung hat aber hier zur Bedingung gemacht, dass der Mieter vor dem Mauerfall in das Grundstück groß investiert hatte (neue Heizung, neues Dach) und dadurch sind die anderen Fälle herausgefall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Ich gebe noch mal das Mikrophon an Herrn Schnappauf.

[Klaus-Dieter Schnapauff ehm. Leiter der Arbeitsgruppe "Deutsche Einheit" (Einigungsvertra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Ich möchte noch mal die Rechtsfrage aufgreifen, die Herr Kim angesprochen hat und die auch Herr Ahn kurz gestreift hat, nämlich die Frage, wie die Enteignungen im Rahmen der Bodenreform heute rechtlich zu bewerten sind. Herr Kim hat die Frage offen gelassen. Ich möchte Ihnen darstellen, wie wir das damals gesehen haben. Herr Ahn hat bereits die Gemeinsame Erklärung vom 15. Juni zu den sogenannten offenen Vermögensfragen zitiert und daraus die letzte Passage, nämlich, dass dem künftigen gesamtdeutschen Parlament eine abschließende Entscheidung über etwaige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vorbehalten werden muss. Davor steht die Passage, dass solche Enteignungen nicht rückgängig gemacht werden können. Wir haben in das Grundgesetz, Artikel 143, hineingeschrieben, dass diese Bestimmung verfassungsrechtlich Bestand hat. Es gab, Herr Prof. Dr. Schröder hat das bereits angedeutet, einen tiefgreifenden Streit darüber, ob die Vorschriften des Grundgesetz Artikel 14, die Eigentumsgarantie, hierauf Anwendung finden würden. Wir haben mehrheitlich in der Regierung damals die Auffassung vertreten, dass das nicht der Fall ist. Das Hauptargument war, dass es sich hier um Enteignungsmaßnahmen eines anderen Staates handele, nämlich der Sowjetunion als Besatzungsmacht, auch wenn richtig ist, was Herr Dr. Hammann sagte, nämlich dass die Maßnahmen selbst durch deutsche Behörden veranlasst worden sind. Die Frage, ob die Verfassungsgarantie des Eigentums insoweit einschlägig ist, ist in der Tat von manchen anders beurteilt worden, Herr Prof. Dr. Schröder hat die FDP erwähnt, ich kann zusätzlich die CSU erwähnen, insbesondere den damaligen Vorsitzenden der CSU-Landesgruppe Herrn von Gutenberg. Es hat in der Tat eine tiefgreifende Auseinandersetzung darüber gegeben. Ich möchte so weit gehen zu sagen, dass dies ein Knackpunkt für das Zustandekommen des Einigungsvertrags insgesamt gewesen ist, dass hierüber eine Einigung zustande kommt. Die Einigung, die gefunden worden ist, ist letztlich eine salomonische, nämlich dahingehend, dass diese Bestimmung, die

ich gerade zitiert habe, in den Vertrag hineingeschrieben wurde. Wir haben uns auf den Standpunkt gestellt, dass diese Bestimmung in Artikel 143 des Grundgesetzes eine verfassungsrechtliche Klarstellung darstellt, die sozusagen beide Seiten befriedigt. Wir haben gesagt, Artikel 14 Eigentumsgarantie ist nicht einschlägig, andere haben gesagt, doch, das muss gelten. In diesem Sinne ist diese verfassungsrechtliche Klarstellung ins Grundgesetz reingeschrieben worden und diese Auffassung ist auch vom Verfassungsgericht in seiner Entscheidung vom 22. Januar 1991 so bestätigt worden, sodass das auch vor der Verfassungsgarantie Bestand hat. Vielen Dank, Herr Vorsitzender.

[Moderator – Herr CHUN]

Ja, bitte Herr Kim.

[KIM Younghoon Research Director, Dept. of Global Cooperation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hr geehrter Herr Schnappauf, vielen Dank für Ihre Erklärung. Zu dem, was Herr Prof. Dr. Richard Schröder gesagt hat, möchte ich noch ein paar ergänzende Anmerkungen machen. Und sie und Herr Prof. Dr. Paqué sagen beide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habe nicht eine so große Rolle gespielt, wie später daraus gemacht wurde. Aber ich denke, die DDR konnte diese Rückgabe machen, weil es gesetzliche Grundlagen gab. Die Alteigentümer konnten gefunden werden, sie hatten offizielle Dokumente. Wer vor der Kollektivierung Alteigentümer war, dafür gab es Beweise, um die Alteigentümer zu identifizieren. Auf dieser Grundlage war es viel einfacher, es konnte vor Gericht ausgefochten werden. Aber Nordkorea ist ein völlig anderer Fall. Wenn wir uns in Nordkorea nach einer möglichen Wiedervereinigung für das Prinzip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entscheiden würden, bestünde keine offizielle Grundlage, es gäbe keine Dokumente, wer Alteigentümer ist. Wir könnten die gar nicht identifizieren. Wenn all diese Eigentumsstreitigkeiten vor dem Gericht geregelt werden sollten, weil es an gesetzlichen Grundlagen fehlt, wird es nur Streit geben und keine Ergebnisse

und die Umstrukturierung in die Marktwirtschaft wird gänzlich herausgezögert. Das ist meine Meinung, daher ist das Vorhandensein von Dokumenten, mit denen Alteigentümer zu identifizieren sind, sehr wichtig und diese gibt es nicht in Nordkorea. Nordkorea hat alle diese ursprünglichen Dokumente vernichtet. Es ist schwer herauszufinden, wer die Eigentümer von Kollektiven und Staatsbetrieben waren. Rückgabe wäre in Nordkorea also so gut wie unmöglich. Und wenn wir uns für Rückgabe entscheiden, würde es große Verwirrung verursachen.

Herr Prof. Dr. Rüdiger Pohl, Sie haben auch eine Frage an mich gestellt zum Ziel der Privatisierung. Wie Sie in Ihrem Vortrag bereits dargestellt haben; die Regierung kann nicht alles allein schaffen, das ist ja klar und auch meine Meinung. Ich glaube, Sie haben den Fokus darauf gelegt, dass nicht nur die Gründe für die Privatisierung wichtig sind, sondern auch die Art und Weise der Privatisierung, dass also konkurrenzfähige Betriebe entstehen, das ist sehr wichtig. Wir brauchen daher eine Art Verstaatlichungsfonds, der dann für den Bau der Infrastruktur verwendet werden kann, das ist meine Auffassung. Die Mitglieder der Kolchosen sollten auch Rechte haben, für sich einen eigenen Anteil zu beanspruchen. In Nordkorea gibt es auch Gesetze. Die Besitzrechte der kollektiven Betriebe sollten anerkannt werden und die Mitglieder entsprechend entschädigt werden. Im Zuge der Privatisierung sollte also eine Verteilung an die Mitglieder der Kollektive berücksichtigt werden.

[Moderator – Herr CHUN]

Herr Dr. Kim, Sie haben die Erfahrungen Deutschlands auf die koreanische Halbinsel angewandt. Das ist eine sehr empfindliche Angelegenheit, deshalb habe ich auch am Anfang gesagt, die koreanische Regierung ist sehr vorsichtig in dieser Sache, weil es ein sehr brisantes Thema ist. Frau Dr. Lee, ich bitte Sie...

[LEE Eunyo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Herr Prof. Dr. Schröder und Herr Dr. Hammann, vielen Dank für Ihre Vorträge.

Es waren konkrete Informationen, zu denen wir in Korea kaum Zugang haben. Sehr wertvolle Informationen waren das. Trotzdem glaube ich, dass es Unterschiede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gibt. Erstens, in Bezug auf die Agrarflächen. In Nordkorea, ob in Pyongyang oder in Kaesong, wenn man die Wohnverhältnisse oder industriellen Verhältnisse anschaut, dann sind das meistens hohe Apartmenthochhäuser. Die Privatisierung des Bodens sähe in Korea anders aus als in der ehemaligen DDR. Deutschland hat nur das Besitzrecht des Bodens anerkannt, aber das, was draufsteht, also die Gebäude, dort hat man das Betriebsrecht anerkannt, d.h. man hat beides getrennt betrachtet. Im Falle Koreas hat man zwei Bücher, Bodenbuch und Betriebsbuch für Gebäude. Sie haben dazu ja einiges erwähnt. Im Falle eines sehr hohen Gebäudes ist das Wohnungseigentum, also das Recht derjenigen, die in dem Gebäude wohnen, wichtiger als das Bodenbesitzrecht. Und wenn das privatisiert wird, Herr Prof. Dr. Schröder, diesbezüglich möchte ich Sie fragen: Wie ist in Deutschland nach der Reform dann das Buch über Besitzrecht und über den tatsächlichen Mieter behandelt worden? Ich habe auch gehört, dass es viele potentielle Investoren aus Westdeutschland gab, aber hat man am Ende denjenigen, die tatsächlich den Boden oder das Gebäude benutzt haben den Vorrang eingeräumt oder den Alteigentümer im Buch? Also wer hatte den Vorteil: Der tatsächliche Mieter bzw. Pächter oder der Eigentümer in den Dokumenten? Das möchte ich gerne von Ihnen wissen, was da in Deutschland wichtiger war. Eigentlich sollte denen die zur Zeit der Wiedervereinigung Nutzer waren, die Fläche gerechterweise mit Vorrang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bzw. sie sollten vorrangiges Erwerbsrecht haben, das ist meine Meinung und deshalb möchte ich Ihre Meinung dazu hören. In Bezug auf die Agrarflächen hat Dr. Kim in seinem Vortrag gesagt, 90% der Betriebe seien kollektiv betrieben, aber Gesetze in Bezug auf Kollektivbetriebe besagen, erstens, alles gehört zum Kollektiv und darüber steht, es gehört dem Staat. Es gibt also doppelte Eigentumsrechte in Nordkorea. In Südkorea haben wir ein anderes System, nämlich ein einziges Eigentumsrecht. Was in Südkorea gesetzlich

geregelt wird, wird in Nordkorea sehr abstrakt definiert, es gehöre schließlich alles dem Staat, sodass Nordkorea das Eigentum und Vermögen kontrollieren kann. Wenn wir wiedervereinigt werden, sollten kollektive Betriebe stufenweise privatisiert werden. Zunächst Betriebe zusammenbringen und dann an kleine Landwirte umverteilen oder man kann solche Betriebe nach einem Plan managen - wenn diese 90% Kollektivbetriebe z.B. wie in Deutschland als Zwischenstufe wie eine Treuhandschaft [betrieben werden]. Vielleicht könnte das der Privatisierung helfen? Also eine Weile als Gemeingut des Kollektivs betreiben, dann stufenweise an die einzelnen Mitglieder umverteilen, ist das besser? Oder ist es doch besser wie im Falle Deutschlands eine Treuhandschaft, eine Organisation zu haben, die sich komplett mit der Umverteilung beschäftigen sollte? Vielleicht könnten Sie uns diesbezüglich Ihre Erfahrungen mitteil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Prof. Lee, Herr Prof. Dr. Rüdiger Pohl hat sich zu Wort gemeldet. Danach werden wir fortfahren.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Die erste Bemerkung zu Herrn Kim. Und zwar geht es da um die Frage, dass Sie in Nordkorea keine Eigentumsrechte dokumentieren können, weil keine Bücher vorhanden sind. Ich kann nur sagen, wenn Sie keine Eigentumsrechte dokumentieren können, können Sie auch nichts rückübertragen, da gibt es dann einfach keine Basis. Aber wenn Sie das nicht können, können Sie auch nicht entschädigen, dafür gibt es auch keine Basis. Dann müssen Sie sagen, das ist, wenn man so will, staatliches Eigentum. Sie können es aber trotzdem privatisieren. Sie müssen dann natürlich fragen, welches Privatisierungsverfahren mache ich. Da müssen Sie eine ganze Reihe von Fragen klären. Die erste Frage ist, an wen wollen Sie privatisieren? Der den höchsten Preis zahlt? Das kann ein Investor aus Seoul

sein und wenn Sie dann lauter Investoren aus Seoul haben, die in Nordkorea einkaufen, können Sie ein Problem bekommen. Also müssen Sie fragen, was sind die Voraussetzungen dafür, dass jemand sozusagen in den Kreis der Berechtigten für die Privatisierung eingeführt werden kann? Zweite Frage, privatisieren heißt, Sie müssen es auch finanzieren können. Die, die es erwerben wollen, haben in der Regel doch nicht das Kapital, um diese Grundstücke oder Häuser oder ähnliches zu erwerben, d.h. Sie brauchen ein Finanzierungskonzept. Und dieses Finanzierungskonzept heißt, dass man ein Bankensystem braucht, das Kredite vergibt. Aber der Staat muss sich natürlich auch die Frage stellen, zu welchem Wert er privatisiert. Da kann man sich vieles vorstellen. Wenn man immer sagt, ein Grundstück hat einen bestimmten Marktwert, ist gar nicht gesagt, dass Sie auch unbedingt diesen Marktwert für die Privatisierung zugrunde legen. Sie können natürlich auch einen subventionierten Wert nehmen, um die Streuung des Eigentums in der Breite zu ermöglichen. Ich würde sagen, vergessen Sie alles über Rückübertragung und Entschädigung und fragen Sie sich lieber, wie ich kann diese Privatisierungsprozesse organisieren, denn das ist ja wohl klar: Nur weil Sie die Rückübertragung nicht möglich machen können, heißt das noch nicht, dass alles im Staatsbesitz bleiben muss. Das wäre die schlechteste Lösung. Also das würde ich dazu sagen.

Eine Bemerkung noch zu Ihnen, Frau Lee. Kollektiveigentum - Privatisierung geht nur schrittweise. Ich kann mir das überhaupt nicht vorstellen, von einem Tag auf den anderen, denn Sie haben nicht unbegrenzte Investoren. Wir haben dasselbe Problem wie eben; die haben nicht unbegrenzte finanzielle Mittel. Also muss dieses Kollektiveigentum Schritt für Schritt privatisiert werden. Nur ist die Gefahr, die ich immer sehe, wenn alles im staatlichen Besitz bleibt, dann kann das heißen, die Schritte dauern dreihundert Jahre. Dann haben Sie praktisch über lange Zeit eben doch wieder staatlichen Besitz und das ist ein Problem. Der Vorteil, den ich bei der Privatisierung durch die Treuhandanstalt gesehen habe war ja, dass dieser Prozess in einem kurzen Zeitraum abgeschlossen wurde, denn

hätten wir das nicht gemacht, hätten wir in Ostdeutschland heute noch einen riesigen staatlichen Industriesektor, der durch Subventionen dauerhaft finanziert werden müsste und das ist das Problem. Natürlich, schrittweise Privatisierung, stufenweise, anders geht es nicht, aber es muss klar sein, dass es es in Richtung Privatisierung geht. Und zwar in einer Zeit, so kurz wie möglich.

[LEE Eunyo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Darf ich hier noch eine zusätzliche Frage stellen? Was Herr Prof. Dr. Pohl erwähnt hat, ist Folgendes: Besitztum von Genossenschaften zu beleihen; es erst einmal zu staatlichem Eigentum zu machen und danach zu privatisieren, das ist viel wirtschaftlicher. Habe ich das so richtig verstanden?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Ja.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für diese Kommentare von Herrn Prof. Dr. Pohl, sie werden bei der Vereinigung beider Koreas sicher das heikelste Thema werden. Ich gebe das Mikrofon dann erst einmal an Herrn Prof. Dr. Schröder und dann anschließend an Herrn Dr. Hammann.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Ich wollte erst noch zu einer Frage Stellung nehmen, die ganz am Anfang gestellt worden ist, die ich gar nicht richtig einordnen konnte. Da wurde gefragt, ob Grund und Boden erst an DDR-Bürger verkauft und dann wieder enteignet worden sei. Ich wollte dazu nur sagen: Nein, nein. So etwas hat es nie gegeben in diesem Prozess. Zu der Frage, die Sie gestellt haben, muss man grundsätzlich sagen:

In Deutschland, in Europa gilt dieser Grundsatz des Römischen Rechtes, das Gebäude folgt dem Grund und Boden. Wir haben hier Eigentum und Besitz, das geht immer durcheinander. Das sind rechtlich gesehen natürlich sehr wohl unterschiedene Begriffe. Nun gehen in Ihren Fragestellungen, wenn ich das so sagen darf, auch zwei verschiedene Fälle durcheinander. In der DDR ist man von diesem Grundsatz des Römischen Rechtes abgewichen, man hat aber kein zusätzliches Grundbuch errichtet, sondern Seiten eingefügt, wenn der Eigentümer von Grund und Boden und der Eigentümer des Hauses verschiedene Personen waren bzw. wenn das Grundstück eben Volkseigentum geworden war, aber von einem Haus in Privatbesitz bebaut wurde, dann wurde ein Zettel eingeklebt und es hieß, auf diesem Volkseigentum befindet sich ein privates Gebäude. Dieses ist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und in der Bearbeitung der Grundbücher grundweg bereinigt worden.

Sie haben auch die Frage nach der Nutzung gestellt, das ist ein Mieter oder Pächter - und ein ganz anderer Fall. Jetzt reden wir nur von diesem Fall. Der ist, das habe ich aber schon gesagt, wie folgt bereinigt worden: Der Alteigentümer muss abgeben an den Hauseigentümer und der Hauseigentümer kann wählen: Er kauft zum halben Preis oder er macht einen Erbbauvertrag und insofern kann man sagen der Hauseigentümer ist bevorzugt. Er bestimmt und kann wählen und der Alteigentümer ist im Nachteil. So, jetzt kommt aber der andere Fall, bei dem wir „Nutzer“ sagen. Das ist der Datschenfall. Da ist es so: In diesem einen Fall, in dem der Mieter investiert hat, darf er, obwohl er nur Nutzer war, kaufen. Sonst kann er nicht kaufen. Aber jetzt hat man eben Sonderregelungen auf der Ebene des Pachtrechtes, Pächterschutzes und Mieterschutzes erfunden und hat gesagt, der Alteigentümer muss bis 2015 warten, bis er über sein Grundstück frei verfügen darf. Bis dahin darf der da sein Wochenende verbringen. Aber das sind zwei ganz verschiedene Fälle. Man hat ja auch grundsätzlich gesagt; der Mieterschutz wird durch Rückübertragung nicht berührt. Wenn jemand sein Grundstück zurückbekommt, kann er nicht sagen, alle mal raus, ich will jetzt

rein. Sondern da gilt das Mieterschutzrecht, das aber natürlich kein Eigentümerrecht ist. Dann habe ich das Erbbaurecht hier genannt; es gibt eben im jetzt gesamtdeutschen Recht den Sonderfall der Eigentumswohnung. Dann ist der betreffende von einem Haus nur Eigentümer seiner Wohnung und am Grundstück anteilmäßig. Das ist eine besondere Rechtsfigur, und dann gibt es noch das Erbbaurecht. Erbbaurecht heißt, dass Grund und Boden und Haus auch verschiedene Eigentümer haben, aber der Pachtvertrag läuft über 30 oder 90 Jahre. Bis dahin hat der Eigentümer kein Verfügungsrecht. In meiner Geburtsstadt hat die Kommune sämtliche Plattenbauten in Eigentumswohnungen umgewandelt und hat den Mietern gesagt, wenn Ihr soundsoviel pro Monat bezahlt, dann gehört Euch die Wohnung in zwanzig Jahren. Das hat man auch gemacht. Und das gibt die Recht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ch so her; man könnte also Apartmenthäuser bei uns in Eigentumswohnungen umwandeln und jeder wäre Eigentümer seiner Wohnung und müsste sich in einem komplizierten Verfahren anteilig an den Hauserhaltungskosten beteiligen. Das war es, was ich noch erläutern wollte.

[Dr. Detlev Hammann Geschäftsführer der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Anknüpfend an das, was Herr Prof. Dr. Pohl und das was Sie gesagt haben, bietet sich vielleicht dann in der Landwirtschaft die Lösung an, dass man erst einmal die Fortsetzung der Bewirtschaftung in den Vordergrund stellt. D.h. wenn es am Tage X zur Wiedervereinigung kommt, dann kann es ja Unruhe geben, es wird Massenfluchtbewegungen geben, die Sie ja auch skizziert haben. Dann ist möglicherweise eine Garantie angezeigt, dass die bisherigen Bewirtschaftungsformen erst einmal weitergeführt werden, dass jeder, der dort seinen Arbeitsplatz und sein Auskommen hat, darauf bauen kann, dass dies erst einmal weitergeführt wird. Es ist ja auch wichtig, dass keine Unterbrechung in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 stattfindet, wenn die Menschen das Land verlassen aufgrund der Unsicherheit, die da besteht und der schlechten

Lebensbedingungen, die dort herrschen, der schlechten Versorgungssituation. Dass also erst einmal eine Garantie gegeben wird, dass die Dinge so wie sie sind, weiterlaufen dürfen. Dass das aber natürlich gekoppelt wird - und das wird dann so sein wie Prof. Dr. Pohl es geschildert hat - dass wenn es über die Alteigentumsverhältnisse keine Unterlagen mehr gibt, das natürlich dann wahrscheinlich, dem würde ich mich anschließen wollen, in eine Form staatlicher Verwaltung übernommen wird, bei der dann Regelungen gefunden werden, die die begünstigen werden, die dort bisher vor Ort gearbeitet und Lohn und Brot gefunden haben. Dass denen dort eine eigenständige wirtschaftliche Perspektive in Aussicht gestellt wird. Aber die Menschen, die dort bisher gearbeitet haben, die werden wahrscheinlich nicht in der Lage sein, eigenständig Betriebe zu errichten, eigenständig zu wirtschaften, sodass sich dort vielleicht eine Parallele zu den Verhältnissen in der DDR ergibt, dass man ihnen ermöglicht in einer neuen rechtlich anverwandelten Form einer Genossenschaft dann wieder zusammen tätig sein zu dürfen, aber sie natürlich auch die Möglichkeit haben, mehr Freiheit zu genießen. Ich nehme mal an, die Möglichkeit eine Kolchose zu verlassen, wird in Nordkorea sehr beschränkt sein. Aber um das noch mal zu sagen; wichtig ist natürlich die Fortsetzung der Bewirtschaftung, gekoppelt mit einer Verhinderung einer Massenfluchtbewegung von Nord nach Süd, das denke ich, muss dann in einer ersten Phase wirklich im Vordergrund stehen.

[Moderator – Herr CHUN]

Herr Dr. Bentmann...

[Dr. Jörg Bentmann Leiter der Abteilung 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Ich möchte einige Bemerkungen machen zu den teilweise ja recht schwierigen Rechtskonstruktionen, die wir im Zuge des Vereinigungsprozesses finden mussten und auch gefunden haben. Herr Prof. Dr. Pohl und auch Herr Prof. Dr. Schröder haben es gesagt; wir hatten auch in der DDR immer noch Grundbücher, staatliche

Nachweise über Eigentumsrechte. Auch wenn die DDR versucht hat, ein neues Rechtssystem zu installieren und neue Rechtsfiguren geschaffen hat, die sich nach dem Bürgerlichen Gesetzbuch eben so nicht fanden, ist es gleichwohl so gewesen, dass das Grundbuch, in dem das dokumentiert wurde, vorhanden war. Es wurde teilweise geschwärzt, aber man konnte immer noch lesen, was da stand. Es wurden Seiten hinzugefügt, sodass man noch den Altbestand nachverfolgen konnte und selbst wenn es dazu kam, dass völlig neue angelegt wurden, hat man das alte nicht vernichtet, sondern wir haben auch immer noch Grundbücher aus den 30er und 40er Jahren in Archiven gefunden, im Keller, im Dachgeschoss von Grundbuchämtern - aber sie waren auffindbar. Sie waren noch in einem Zustand, dass man das dokumentieren konnte. Sowohl nachweisen, wer Eigentümer war als auch den Verlauf. Man muss ja bedenken, dass es in den Kriegszeiten und in der Weimarer Zeit ja auch schon Veränderungen gab - diesen Verlauf konnte man nachvollziehen. Das war eine ganz wesentliche Voraussetzung dafür, dass wir eine objektive Dokumentation der Eigentumverhältnisse hatten, aus der dann natürlich wieder Ansprüche generiert werden konnten und mit der Belege vorgelegt werden konnten, die dann zur Regelung kamen. Insofern muss man da einfach die Tatsachen anschauen. Wenn ich Sie richtig verstanden habe, gehen Sie davon aus, dass in Nordkorea mit diesem Regime auch alles, was mal an Dokumentation da war, schlicht weg ist. Dann haben Sie natürlich eine andere Basis und ich sage mal, dann haben Sie die Chance ein Modell zu entwickeln und daraus dann die Zukunft zu entwickeln - und Sie haben nicht das Problem zwei oder drei Rechtsordnungen gleich mit abwickeln zu müssen. Deshalb kommt es immer drauf an, worauf Sie Ihre Energie verwenden; ob auf die schwierigen Einzelfallfragestellungen, die wir in der deutschen Rechtsordnung positiv gezwungenermaßen, entwickelt haben, oder ob Sie sozusagen einen anderen Ansatz fahren können. Das ist glaube ich ganz entscheidend, dass wir da andere faktische Voraussetzungen haben, denn bei aller Fantasie der DDR-Verwaltung; eine gewisse preußische Grundbuchtuglichkeit war dann immer noch vorhand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herzlichen Dank für Ihre Kommentare. Frau Lee hat sich zu Wort gemeldet, bitte Frau Lee.

[LEE Eunyo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In diesem Zusammenhang hätte ich eine Frage. Heute im Parlament habe ich eine ganz interessante Idee gehört. Weil es kein Grundbuch gibt, aber wir Angst haben, dass eine Massenflucht am Anfang stattfinden könnte, wurde als Lösung dafür diskutiert, dass man die Häuser und den Boden zwar privatisiert, aber ohne Geld, d.h. quasi verschenkt. Ich weiß nicht, welche Rechtauffassung in Korea herrscht, aber wäre das in Deutschland eine Alternative gewesen? Von heute aus gesehen, Sie haben ja die koreanische Situation gehört, wäre das vorstellbar?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Möchten Sie sich vielleicht äußern und danach das Mikrofon der koreanischen Seite...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ch glaube diese Vorstellung hatte niemand bei uns. Und es wäre auch verfassungsrechtlich überhaupt nicht haltbar gewesen, denn der verfassungsrechtliche Anspruch auf Eigentum der ist da, der war nicht negiert. Sondern nach der deutschen Fiktion galt das Grundgesetz immer auch auf dem Gebiet der DDR. Insofern hatten Sie dort immer schon diese Rechtsgrundlage und waren nicht in einem rechtsfreien Raum. Es gab die entsprechenden Rechtspositionen und Ansprüche und Herr Schnappauf hat es ja eben sehr anschaulich gemacht, wie schwierig es vor diesem Hintergrund war, die Frage der sowjetischen Enteignungen verfassungskonform hinzubekommen, dergestalt, dass man eine Lösung über diese Konstruktion wählen musste, dass es ein anderer

Staat gewesen ist, der es gemacht hat. Und dann eben diese verfassungsrechtliche Ergänzung, um es verfassungsrechtlich hinzubekommen. Die Idee, die hinter Ihrem Modell steckt, wir befinden uns jetzt auf der grünen Wiese, alles was dort ist, ist staatliches Eigentum, der Staat kann damit machen, was er will, das hätte in Deutschland nicht funktioniert.

Ein nicht ganz so ernst gemeinter Punkt: Auch der Staat kann nicht alles verschenken, das wird gerade bei Industrie- und Wirtschaftsunternehmen sehr sehr deutlich. Dann begibt er sich nämlich in ein gefährliches Gebiet der Subventionierung und Beihilfen, die abgesehen vom Europäischen Recht auch Gleichbehandlungsfragestellungen aufwerfen, die auch deutsche nationale Verfassungsrechtfragen sind. Das wäre für Deutschland überhaupt kein Modell gewesen.

[Moderator – Herr CHUN]

So viele haben sich zu Wort gemeldet, vielleicht gebe ich allen, die sich zu Wort gemeldet haben, die Chance. Was Sie, Frau Prof. Lee, im Parlament gehört haben, ich glaube das ist eine radikale Idee. Ich habe schon davon gehört, dass radikale Ideen präsentiert wurden. Wer das gesagt hat, weiß ich nicht, in welcher Situation diese Idee geäußert wurde, weiß ich auch nicht, aber wie Dr. Kim in seinem Vortrag schon gesagt hat: Diese Frage ist eine hochempfindliche Angelegenheit, bei der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sehr sehr vorsichtig vorgehen will. Ich als Moderator sollte nicht so viel sprechen, aber Dr. Kim, Sie haben gesagt, dass es Grundbücher in Nordkorea nicht gibt. Aber ich glaube, wir wissen eigentlich nicht ganz genau, was in Nordkorea wirklich passiert und wie die Lage Nordkoreas ist, also ob so etwas wirklich nicht vorhanden ist oder vielleicht doch. Es gibt einige Südkoreaner, die sich sehr gern auf das Bodenregisterbuch, das es während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gab, beziehen und sagen, dass die Sachen nach diesem Buch geregelt werden sollten. Ob es dieses Bodenregisterbuch noch in Nordkorea gibt, können wir nicht wissen. Während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gab es ähnliche Probleme. Wir haben schon Erfahrungen, weil wir die japanische Kolonialherrschaft mitmachen mussten. Die Erfahrungen, die wir im Zuge der Befreiung von der Kolonialherrschaft gemacht haben, können wir als Vorbild nehmen, wenn wir im Zuge einer Wiedervereinigung eine Bodenreform mit Nordkorea machen.

[KIM Younghoon Research Director, Dept. of Global Cooperation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Herr Dr. Bentmann und Herr Prof. Dr. Pohl haben die Verstaatlichung angesprochen. Es war sehr interessant zu hören, was für eine Position Sie dazu haben. Wenn Alteigentümer nicht gefunden werden, kann es sein, dass es in Nordkorea, wie der Moderator gesagt hat, noch das Bodenbuch aus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gibt. Aber dieses Grundbuch aus dieser Zeit darf nicht offiziell anerkannt werden. Wir können diesem Buch nicht Recht geben. In Nordkorea gelten nordkoreanische Gesetze. Die jetzigen Eigentümer sind ein Faktum. Es gibt verstaatlichte Ackerflächen und Allgemeingut und es gibt natürlich Vermögen, das dem Regime gehört und wenn wir wiedervereinigt werden, dann wird das natürlich zunächst einmal verstaatlicht und verarbeitet. Wichtig ist, nach den jetzigen nordkoreanischen Gesetzen gibt es diese Kollektivbetriebe, deren Boden eigentlich den Mitgliedern der Kollektivbetriebe gehört. Diese Betriebe sind Allgemeingut, gemeinsamer Besitz. Der Staat kann aber auch diese Betriebe verstaatlichen und bearbeiten lassen. Meine Frage ist: Gilt zunächst dieses Besitzrecht der Mitglieder der Kollektive?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LEE Eunyo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Es gibt einige Überschneidungen, deswegen werde ich mich auf einige zentrale

Punkte konzentrieren. In Korea gab es vor 1917 ein Bodenbesitzrecht der damaligen Adligen. Diese wurden dann während der japanischen Kolonialherrschaft völlig ignoriert und danach, in Nordkorea, hat man die Besitzrechte von 1917 bis 1945 völlig ignoriert und dann hat Nordkorea ein ganz eigenes Immobiliensystem entwickelt: Staatsbetriebe, Kollektivbetriebe etc. etc. Die Lage ist völlig anders als in der DDR. Dieses Grundbuch, das es in der DDR gab, das rechtfertigt, wer Alteigentümer ist. Aber in Korea, auch durch die Kolonialherrschaft, sind die Eigentümerverhältnisse noch einmal zusätzlich verändert worden, deshalb ist der Fall Koreas noch einmal anders zu betrachten. Und zum Privatrecht: Wer hat die Priorität, also wer ist Nummer Eins, Zwei und Drei bei privatem Eigentumsrecht, das ist sehr wichtig. Es ist keinesfalls wünschenswert, dass die Nordkoreaner in Nordkorea Ihren Boden verlieren und plötzlich nach Süden komm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Frau Professor Lee. Warten wir auf Herrn Prof. Dr. Pohl, danach Herr Prof. Dr. Schröder.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Nur ganz kurz. Ich halte die Privatisierung durch Verschenken für eine ganz schlechte Idee, muss ich sagen. Sie werden viele Probleme gar nicht lösen können. Die Frage ist, an wen verschenken Sie das denn? Da gibt es Millionen von Menschen, die sollen jetzt alle was bekommen? Alle, auch die Kinder? Da gibt es schöne Grundstücke, da gibt es weniger schöne Grundstücke. Sie werden ein Ausmaß an Korruption in der Verteilung dieser Güter bekommen, das so viel Widerstand in der Bevölkerung erzeugt, dass es schiefgehen muss. Das der eine Punkt. Der andere Punkt: Mit dem Verschenken ist es doch nicht getan. Sondern es kommt doch darauf an, dass die Menschen dann auch mit dem Eigentum etwas anfangen

können. Herr Dr. Hammann hat immer wieder betont, für die Landwirtschaft kommt es darauf an, dass der Boden weiter genutzt wird. Ich kann es, wenn ich es geschenkt bekomme, natürlich auch einfach brach liegen lassen. Aber dann gibt es Versorgungsprobleme, d.h. Sie müssen Anreize schaffen, dass derjenige, der das Eigentum erhält, damit auch etwas Vernünftiges anstellt. Wir haben doch die Erfahrung, dass was man geschenkt bekommt, einem nicht so viel wert ist. Aber was ich bezahlen muss, das überlege ich mir doch vorher, denn ich muss ja eine Rendite erwirtschaften. Ich kann also nur sagen: Lassen Sie davon die Finger! Das andere Problem, das Frau Kollegin Lee eben angesprochen hat, ist für mich eigentlich das zentrale Problem, die Massenabwanderung, Sie hatten das auch schon angesprochen. Wenn Sie das nicht verhindern können, wird es massive Probleme nicht nur im Norden geben. Abwandern tun ja immer diejenigen, die am leistungsfähigsten sind. Sie werden also einen Verlust an Humankapital in Nordkorea erleiden, der sehr groß ist. Und Sie werden massive Probleme im Süden Koreas erhalten. Ich sehe dann schon um die Städte die Slums wachsen. Das ist natürlich ein Problem und das bedeutet, dass Sie Lösungen haben müssen, für diejenigen, die sich in diesem Prozess der Vereinigung auch als die Verlierer fühlen. Das ist ja die Erfahrung, die wir in Ostdeutschland auch gemacht haben. Es gibt Gewinner der Vereinigung, die davon profitieren, aber es gibt auch welche, die sich subjektiv oder objektiv gesehen als Verlierer empfinden. Ich will nur sagen, die Arbeitslosigkeit ist massiv nach der Wende angestiegen und die Leute, die da arbeitslos geworden sind, haben sich nicht als Gewinner des Prozesses empfunden, sondern als Verlierer. Was tue ich dann aber? Da muss ich als Staat eine Antwort haben, d.h. ich muss irgendwo ein System haben, das die Verlierer auffängt. Das ist in Deutschland natürlich durch Sozialgesetzgebung gewährleistet. Wenn Sie den Verlierern keine Perspektive bieten, werden die wandern müssen und dann entstehen diese großen Probleme. Deswegen ist die Wiedervereinigung ein Prozess, der mit einem massiven Ausbau von Sozialleistungen einfach abgesichert werden muss, damit diese Prozesse, die so gefährlich sind, gar nicht

erst entsteh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herzlichen Dank. Jetzt Herr Prof. Dr. Schröder und danach werden wir die Diskussion beschließen.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 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Ich will nur kurz sagen, weil die Frage aufkam, ob man auch in der DDR die Dinge hätte verschenken können. Auch in den Papieren, die wir von der koreanischen Seite bekommen haben, wurde ja mit dem Gedanken gespielt. Also nicht mit verschenken, sondern mit neuverteilen. In der DDR, unabhängig von der Vereinigung, stand das Wort Enteignung für Unrecht. Es wäre völlig undenkbar gewesen, dass der Rechtsstaat neu auftritt und als erstes enteignet, was die DDR noch nicht enteignet hatte. Da hätte man gesagt: Ihr seid ja genauso schlimm wie die Kommunisten! Das ist natürlich in Korea anders, denn bei Ihnen ist das so ein radikaler Schnitt gewesen. Aber in Deutschland konnte man auch nach der, nicht vollständigen, aber überwiegenden Gesinnung im Osten, nicht noch einmal enteign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für diese leidenschaftliche Diskussion. Vor allem unsere Mitarbeiter haben einen großen Beitrag geleistet, damit wir diese Veranstaltung haben können. Damit beenden wir die Vormittagssession. Natürlich haben wir viele Diskussionsstoffe, aber wir heben uns noch etwas für den Nachmittag auf. Für das Mittagessen haben wir einen Ort vorgesehen, zwei Etagen niedriger, das Restaurant Seven Square. Wir werden mit dem Nachmittagsprogramm um halb Drei anfangen. Wir werden wir uns dann wiedersehen in diesem Saal. Ich wünsche Ihnen allen einen guten Appetit.

Der Umgang mit dem Vermögen von Massenorganisationen und Parteien

27. Juni 2013



27. Juni 2013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Leiter der Abteilung
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ich darf Sie zum zweiten Teil der heutigen Diskussion begrüßen. In dieser Nachmittagssession wenden wir uns dem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zu. Das hört sich auf den ersten Blick an, als wäre das ein relativ enges Spezialthema, was in der Ausgestaltung sicherlich auch richtig ist. Allerdings gehört das durchaus zu einer der Kernfragen des Aufbaus einer funktionierenden Demokratie, wie man mit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umgeht und wie diese in einem dann demokratischen Gemeinwesen funktionieren und ausgestattet sind. Und wir können dazu heute einen ausgewiesenen Experten begrüßen. Ich hatte Ihnen ja schon Herrn Klaus-Dieter Schnappauf vorgestellt. Er war nicht nur der Verantwortliche im Innenministerium für den Abschluss und die Erarbeitung des Einigungsvertrages, sondern hat dann auch in der Folgezeit die Arbeit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zur Überprüfung des Vermögens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begleitet und im Ministerium die Rechtsaufsicht über diese Kommission ausgeübt. Insofern freue ich mich, dass Herr Schnappauf dazu vortragen wird. Vielen Dank.

[Klaus-Dieter Schnapauff ehm. Leiter der Arbeitsgruppe "Deutsche Einheit" (Einigungsvertra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Klaus-Dieter Schnapauff

1. Einleitung

Zu den schwierigsten und umstrittensten Aufgaben im Rahmen der Wieder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gehörten Eigentums- und Vermögensfragen. Darunter fiel auch die Notwendigkeit einer Neuordnung der Eigentums- und Vermögensverhältnisse der SED und der anderen, allerdings nur eine untergeordnete Rolle spielenden Parteien sowie der von ihnen beherrschten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bzw. ihrer jeweiligen Nachfolgeorganisationen. Die Notwendigkeit hierfür ergab sich vor allem aus 3 Gründen:

- (1) Als zentrale Schaltstellen des Macht- und Herrschaftssystems der DDR hatten vor allem die SED/PDS und der von dieser beherrschte FDGB beträchtliche Vswerte in Form von, Unternehmen im In- und Ausland, Konten im In- und Ausland sowie Kunstwerken angehäuft. Dazu zählten unter anderem 1.677 Immobilien bei der SED-PDS und 1.682 beim (einschließlich Feriendienst), die entsprechend der Eigentums- und Rechtsordnung der DDR zum Teil im Eigentum, Gebäudeeigentum, in Rechtsträgerschaft oder in Nutzung der Organisationen standen. Ein erheblicher Teil dieser Vermögenswerte war nach rechtsstaatlichen Maßstäben nicht rechtmäßig erworben worden. Mit der schrittweisen Anpassung der Eigentums- und Besitzverhältniss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und an das Zivil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gab sich somit auch die Notwendigkeit einer Neuordnung der Eigentums- und Besitzverhältnisse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 (2) Nach Art. 21 Abs. 1 GG wirken die politischen Partei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mit. Das Grundgesetz hat die Parteien demnach als verfassungsrechtlich notwendige Instrumente für die politische Willensbildung des Volkes anerkannt und in den Rang einer verfassungsrechtlichen Institution erhoben. Sie bilden die Zwischenglieder zwischen den Bürgern und dem Staat, ohne die ein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nicht denkbar ist. Ihre Funktion als Zwischen- und Bindeglied zwischen Volk und Staat erfüllen die Parteien vor allem durch ihre Beteiligung an Wahlen¹ zu und ihr Eintreten für ihr politisches Programm in indemokratischen Vertretungskörperschaften. Hiermit grundsätzlich unvereinbar ist eine eigene wirtschaftliche und unternehmerische Betätigung oder Beteiligung hieran in größerem Umfang, wenn diese – anders als etwa im Bereich der Medien – keinen Bezug zu den politischen Aufgaben der Parteien aufweisen oder die Gewinne die notwendige Finanzierung der politischen Aufgaben deutlich überschreiten². Daraus ergab sich das Erfordernis einer Rückführung der vergleichsweise exorbitanten Vermögenswerte insbesondere der SED-PDS auf „normale“, an den politischen Aufgaben politischer Parteien orientierte Verhältnisse. Dazu Alexandra Schindler, Die Partei als Unternehmer, 2006, Nomos-Verlag
- (3) Essentieller Bestandteil der verfassungsrechtlichen Gewährleistung der Freiheit der politischen Parteien und ihrer Mitwirkung an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ist die Gewährleistung von Chancengleichheit / Wettbewerbsgleichheit der Parteien. Nach den Feststellungen der – nachfolgend eingehend zu behandelnden „Unabhängigen Kommission Parteivermögen (UKPV)“ – beliefen sich die im Laufe ihrer bis zum Jahr

1. Vgl. BVerfGE 52, 63, 82 f.

2. Dazu Alexandra Schindler, Die Partei als Unternehmer, 2006, Nomos-Ver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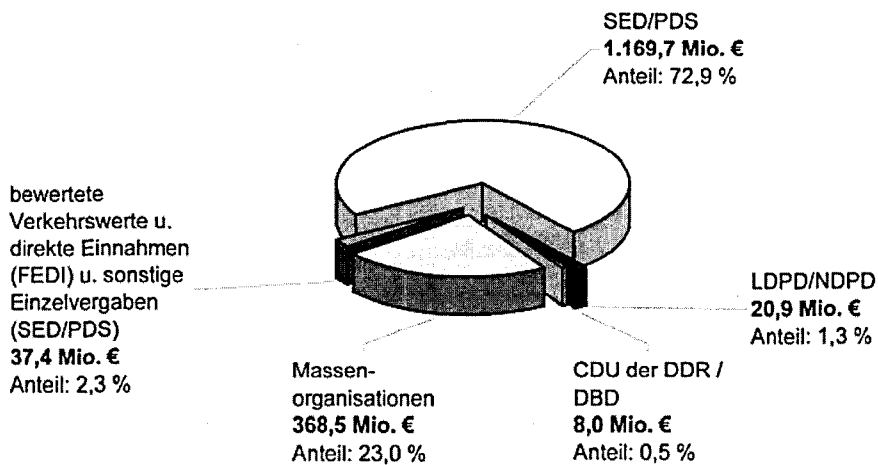
2006 währenden Tätigkeit sichergestellten Vermögenswerte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die am 7. Oktober 1989 bestanden haben oder an die Stelle dieses Vermögens getreten waren, auf einen Betrag in Höhe von knapp über 1,6 Mrd. €. Immerhin nahezu drei Viertel davon, nämlich 1,169 Mrd. € stammten aus Vermögenswerten, die die SED/PDS gehalten hat.

Wie sich diese Vermögenswerte zusammensetzten, veranschaulicht diese, dem Abschlussbericht der UKPV aus dem Jahre 2006 entnommene Grafik: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per 31.12.2005

Gesamtwert: 1.604,5 Mio. €



Im Vergleich hierzu verfügten die westdeutschen Parteien über sehr viel geringere Vermögenswerte. Nach den Rechenschaftsberichten der Parteien gegenüber dem Deutschen Bundestag für das Jahr 1990 verfügten sie über Vermögenswerte von etwa 370MioDM; dies ergibt bei einem Umrechnungskurs von Euro zu DM im Verhältnis 1 : 1.95583 einen Betrag von etwa 185Mio€ Dies waren nicht einmal 15% der von der UKPV festgestellten Vermögenswerte der SED-PDS, so dass ein gravierendes Missverhältnis bestand.

Somit bestand in mehrfacher Hinsicht Handlungsbedarf hinsichtlich der Vermögenswerte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2. §§ 20a, 20b PartG-DDR – UKPV

Ein erster Schritt zur Bereinigung und Neuordnung erfolgte noch durch die DDR selbst mit dem am 31. Mai 1990 von der am 18.3.1990 neu gewählten Volkskammer beschlossenen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Parteien und andere politische Vereinigungen (Parteiengesetz vom 21. Februar 1990 – PartG-DDR). Dieses stellte das Vermögen der Parteien und der mit ihnen verbundenen Organisationen, juristischen Personen und Massenorganisationen, das am 7. Oktober 1989 bestanden hatte oder seither an die Stelle dieses Vermögens getreten war, unter treuhänderische Verwaltung (§ 20 b Abs. 2 PartG-DDR). Denn es bestand die begründete Sorge, dass wesentliche Teile dieser Vermögenswerte verdunkelt und beiseite geschafft werden sollten. Die treuhänderische Verwaltung wurde durch § 20 b Abs. 3 PartG-DDR einer vom Ministerpräsidenten der DDR eingesetzten Unabhängigen Kommission (UKPV) übertragen. Zugleich bestimmte § 20 b Abs. 1 PartG-DDR, dass mit dem Inkrafttreten des Gesetzes zum 1. Juni 1990 Vermögensveränderungen seitens der Parteien und der mit ihnen verbundenen Organisationen, juristischen Personen und Massenorganisationen nur mit Zustimmung des Vorsitzenden der UKPV erfolgen durften.

Der UKPV wurde „zur Durchführung ihrer Arbeit das Recht der Beweisaufnahme, entsprechend den Verfahrensregeln der Strafprozessordnung Zeugen zu vernehmen, Hausdurchsuchungen, sonstige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vornehmen zu lassen“ übertragen (§ 20 a Abs. 4 PartG-DDR).

Diese Änderungen des PartG-DDR zielten folglich zunächst nur auf eine Sicherung von Vermögenswert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ab.

Die Unabhängige Kommission bestand zunächst aus 11 Mitgliedern, bei denen es sich überwiegend um Abgeordnete aller Fraktionen der Volkskammer handelte. Den Vorsitz führte ein parteiloser Rechtsanwalt. Für die Bewältigung der Aufgaben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insbesondere für die Aufarbeitung der von den Institutionen eingereichten Berichte, standen bis November 1990 neben dem ganztags tätigen Vorsitzenden lediglich zwei Berater zur Verfügung. Weder die Regierung noch die Volkskammer der DDR stellten Haushaltsmittel für ein Sekretariat und für die Beauftragung von Prüfgesellschaften zur Verfügung. Zudem waren die der Kommission vorgelegten Berichte nur sehr begrenzt verwertbar, denn sie enthielten zum überwiegenden Teil keine konkreten Angaben. Detaillierte objektbezogene Angaben fehlten ebenso wie eine Darstellung wirtschaftlicher Zusammenhänge. Die Bedingungen für eine wirksame Aufgabenerfüllung der Kommission waren somit zunächst nicht optimal. Gleichwohl wurden in einem ersten, dem Ministerpräsidenten der DDR bereits am 12.7.1990 erstatteten Bericht umfangreiche de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unterliegende Vermögenswerte insbes. der SED sowie des FDGB aufgeführt.

3. Einigungsvertrag

Aufgaben, Befugnisse und Organisation der UKPV wurden durch den Einigungsvertrag mit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der DDR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m 3.10.1990 auf eine wesentlich erweiterte Rechtsgrundlage gestellt. Der Vertrag regelte einerseits die Fortgeltung von §§ 20a und 20b PartG-DDR, knüpfte die Fortgeltung jedoch andererseits an eine Reihe von Erweiterungen und Änderungen („Maßgaben“):

- Die Bundesregierung wurde ermächtigt, sechs weitere Mitglieder der UKPV im Benehmen mit dem Bundestagspräsidenten zu berufen. Dies ermöglichte die Verbreiterung des Spektrums der in der Kommission repräsentierten Organisationen und Einrichtungen sowie die Berufung von mit der Materie vertrauten westdeutschen Fachleuten.
- Die UKPV wurde der Rechtsaufsicht – nicht der Fachaufsicht – der Bundesregierung unterstellt. Dies entsprach der Gewährleistung der prinzipiellen Freiheit der Parteien durch Art. 21 Abs. 1 Satz 2 GG, nach der die Parteien

zwar dem geltenden Recht, nicht aber politischer Einflussnahme seitens staatlicher Institutionen unterworfen sind, und dies war eine maßgebliche Voraussetzung dafür, dass die Arbeit der Kommission bis zum Abschluss ihrer Tätigkeit im Jahr 2006 von großer Sachlichkeit und breitem Konsens geprägt war.

- Aufgaben und Befugnisse der Kommission wurden wesentlich umgestaltet und erweitert:
 - Einerseits wurde die treuhänderische Verwaltung des Vermögens der Parteien, der mit ihnen verbundenen Organisationen, juristischen Personen und Massenorganisationen zur Entlastung der UKPV auf die Treuhandanstalt (THA) wegen des engen Sachzusammenhangs mit den von dieser ohnehin wahrzunehmenden Aufgaben übertragen.
 - Andererseits trat neben die der Kommission verbleibende Aufgabe, weiterhin noch nicht erkanntes und gesichertes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zu ermitteln, festzustellen und de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zu unterstellen, der Auftrag, maßgeblich über die künftige Verwendung des treuhänderisch verwalteten Vermögens zu entscheiden. Hierfür sah der Einigungsvertrag folgende Möglichkeiten vor:
 - (1) Soweit bei Vermögenswerten früher Berechtigte ermittelt wurden, waren sie an diese oder ihre Rechtsnachfolger zurückzuführen.
 - (2) Nur soweit Vermögen nach den Feststellungen der UKPV nachweislich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im Sinne des Grundgesetzes erworben worden war, war es den Parteien und sonstigen Institutionen wieder zur Verfügung zu stellen.
 - (3) Soweit keiner dieser Fälle vorlag, also weder früher Berechtigte ermittelt wurden noch ein Erwerb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festzustellen war, war das Vermögen zugunsten gemeinnütziger Zwecke, insbesondere der wirtschaftlichen Umstrukturi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verwenden.

Die entsprechenden Entscheidungen in der Rechtsform von Verwaltungsakten gegenüber den Betroffenen nach außen oblagen der für die treuhänderische Verwaltung zuständigen Treuhandanstalt. Diese handelte jedoch intern im Einvernehmen mit der UKPV, die die Entscheidungen verfahrensmäßig und materiell vorbereitete und damit maßgeblich verantwortete.

- Der UKPV kamen somit ganz wesentliche Aufgaben mit grundlegender politischer Bedeutung im Rahmen der Vollendung der deutschen Einheit zu:
 - Ermittlung, Feststellung und Sicherung von Vermögenswerten, die verdunkelt und beiseite geschafft worden waren, um sie de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zu entziehen;
 - Entreicherung insbes. der SED-PDS von immensen Vermögenswerten, an denen sie sich unrechtmäßig bereichert hatte, sowie Restitution an früher Berechtigte oder ihre Rechtsnachfolger;
 - Zurverfügungstellung erheblicher Vermögenswerte für die dringend notwendig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und den Aufbau in den Neuen Ländern;
 - Späte Genugtuung für die in der Bevölkerung verhasste unrechtmäßige Bereicherung insbes. der SED.

Zusammenfassend kann als Kernauftrag der UKPV die Herstellung der wirtschaftlich-finanziell-wettbewerblichen Chancengleichheit zwischen den konkurrierenden politischen Parteien bezeichnet werden. Demgegenüber war die Ermittlung des gesetzlich unter Treuhanderschaft gestellten Vermögens nur notwendiges Mittel und Sekundärzweck.

- Um die Effizienz der Aufgabenerfüllung der UKPV ganz wesentlich zu verbessern, erfolgten zudem wichtige organisatorische Veränderungen, insbes. zur Unterstützung und Entlastung der Mitglieder der Kommission:
 - Dazu gehörte die Berufung eines anerkannten und renommierten Hochschullehrers für Staats- und Verfassungsrecht zum Vorsitzenden der

Kommission. Dieser nahm das Amt fast 7 Jahre ab Anfang 1991 bis zu seiner Wahl zum Richter und Senatsvorsitzend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m Jahr 1998 wahr und war später, von 2002 bis 2010, Präsiden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ngagement, Sach- und Fachkunde, Unabhängigkeit und hohes Ansehen des Vorsitzenden, aber auch der weiteren – übrigens allesamt ehrenamtlich tätigen – Mitglieder der Kommission, sowie die weitgehende Kontinuität in der personellen Zusammensetzung trugen ganz wesentlich zur sehr erfolgreichen und weithin anerkannten Erfüllung der Aufgaben der Kommission bei.

- Die UKPV als Kollegialorgan von maximal 16 Mitgliedern mit lediglich 2 Beratern war von Anfang an nicht in der Lage, die alltägliche Arbeit – insbesondere die arbeitsintensiven Vermögensermittlungen – selbst durchzuführen. Ab Ende 1990 wurde die UKPV deshalb durch ein in Berlin eingerichtetes ständiges Sekretariat unterstützt. Der Personalbestand des Sekretariats variierte entsprechend der wechselnden, im Laufe der Jahre abnehmenden Aufgaben: Im Jahre 1992 waren 85 Mitarbeiter tätig, im Jahre 2006 waren es noch 8. Die Hauptaufgabe des Sekretariats bestand in der Vorbereitung von Entscheidungen der Kommission. Das Sekretariat bereitete dazu die Sitzungen der UKPV durch Vorlage entsprechender Beratungsunterlagen vor. Darüber hinaus nahm das Sekretariat für die Kommission die notwendige Zusammenarbeit mit der THA/BvS³ und den übrigen beteiligten Stellen wahr.
- Entscheidungen der Kommission, die keinen Aufschub duldeten (Eilentscheidungen), konnten vom Vorsitzenden der UKPV im Benehmen mit dem Leiter des Sekretariats getroffen werden.
- Außerdem konnte die Kommission ihre Befugnisse für Einzelfälle oder Fallgruppen auf den Leiter des Sekretariats übertragen (Delegationsentscheidungen).
- Schließlich oblag dem Leiter des Sekretariats die Vertretung der Kommission in vielfältigen Rechtsstreitigkeiten vor Gericht.

3.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4. Arbeitsweise und rechtliches Instrumentarium der Kommission

Es erscheint nicht sinnvoll, hier auf die Feststellungen und Entscheidungen der UKPV sowie die Ergebnisse ihrer Arbeit im Einzelnen einzugehen. Es handelt sich dabei um singuläre Vorgänge, die für Korea im Rahmen einer Wiedervereinig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nur insoweit beachtenswert erscheinen, als darin generelle Erfahrungen, Vorgehensweisen, Maßstäbe und Strukturen zum Ausdruck kommen. Im Folgenden werden daher unter diesem Aspekt die Arbeitsweise der UKPV und das ihr zur Verfügung stehende rechtliche Instrumentarium näher dargestellt.

a) Personelle und materielle Ausstattung des Sekretariats - Einsatz von Wirtschaftsprüfungsunternehmen bei den Vermögensermittlungen

Für die Erfüllung der Aufgaben der Kommission bedurfte es nicht nur der notwendigen Qualifikation und Kompetenz der Mitglieder der Kommission selbst. Dies galt auch für die Bediensteten und Mitarbeiter des die Kommission unterstützenden Sekretariats, zumal dessen Leiter, wie bereits ausgeführt, mit sog. Delegationsentscheidungen betraut werden konnte und wurde. Den unterschiedlichen, aus den Aufgaben der Kommission folgenden Anforderungen entsprechend mussten die Mitarbeiter des Sekretariats insbes. folgende Qualifikationen erfüllen:

- Einerseits wurden Mitarbeiter benötigt, die bereits allgemeine Kenntnisse und Erfahrungen in Vermögensverwaltung, Buchhaltung, Bilanzierung, Steuerwesen, Rechnungsprüfung u. ä. mitbrachten; nach Möglichkeit sollten sie auch bereits entsprechende Kenntnisse und Erfahrungen in Bezug auf die zu untersuchend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aufweisen, ohne dass sie selbst durch frühere Tätigkeit in oder für diese Parteien und Organisationen belastet waren. Und sie sollten möglichst auch bereits Erfahrungen in der Ermittlung und Aufklärung verdeckter und komplexer Sachverhalte sowie entsprechendes kriminalistisches Gespür besitzen.
- Andererseits wurden Juristen benötigt mit Kenntnissen und Erfahrungen im

Staats- und Verfassungsrecht, im Parteienrecht, im Zivilrecht, im Handels-,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recht sowoh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der DDR. Sie sollten zudem bereits über Verwaltungserfahrung verfügen und in der Lage sein, in einer Fülle von gerichtlichen Verfahren – Verwaltungsakte zur Frage eines materiell-rechtsstaatlichen Erwerbs von Vermögenswerten wurden von der PDS fast ausnahmslos verwaltungsgerichtlich angegriffen – den Standpunkt der UKPV zur Geltung zu bringen.

- Zudem mussten Mitarbeiter des Sekretariats, die in direkten Kontakt mit – vielfach prominenten – Vertretern der betroffen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 kamen und insbes. Auskünfte zu einzelnen Vermögenswerten von ihnen benötigten, in der Lage sein, ihre Aufgaben mit der gebotenen Sachlichkeit und unbeeindruckt von herablassendem oder offen feindlichem Auftreten und Drohungen sowie von vielfach unzutreffenden Angaben zu erfüllen.
- Besonders anzumerken ist hier, dass sich beim Aufbau des Sekretariats Ende 1990 und im Laufe des Jahres 1991 die Personalgewinnung deshalb schwierig gestaltete, weil zu diesem Zeitpunkt im Hinblick auf die zahlreichen einigungsbedingten neuen Aufgaben des Bundes und den Neuaufbau der Verwalt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r Markt an geeigneten Bewerbern bereits weitgehend erschöpft war. Aus diesem Grund, aber auch unabhängig davon zur Nutzung externen, in der Verwaltung nicht oder nur unzureichend vorhandenen Sachverständigen, verfügte das Sekretariat von Anfang an über einen Haushaltstitel für die Bezahlung von Honoraren von externen Sachverständigen. Hiermit war es möglich, bei den Vermögensermittlungen Wirtschaftsprüfungsunternehmen – teilweise in erheblichem Umfang – zu Rate zu ziehen und einzusetzen. Dies hat maßgeblich zu einem schnelleren Abschluss der Untersuchungen beigetragen.

b) Feststellung und Ermittlung der Vermögenswerte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Wie bereits ausgeführt, war nach der noch durch die Volkskammer geschaffenen

Rechtsgrundlage für die UKPV zunächst deren Aufgabe, das gesetzlich unter Treuhandenschaft gestellte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zu ermitteln und festzustellen.

Die UKPV hat dazu bereits am 20. Juni 1990 entsprechend § 20a PartG-DDR die gesetzlich zur Rechenschaftslegung verpflichteten Parteien und politischen Organisationen aufgefordert, ihre Vermögensverhältnisse zum Stichtag 7. Oktober 1989 offenzulegen. Die dementsprechend vorgelegten Berichte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erwiesen sich in vielerlei Hinsicht als unvollständig und fehlerhaft, wie überhaupt insbesondere in der Anfangsphase der Arbeit der Kommission die Angab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 vor allem seitens der SED/PDS – unvollständig und fehlerhaft waren. Die Gründe hierfür sind in einer bunten Mischung u. a. aus Umfang und Komplexität der Aufgabe, fehlender Sachkunde und fehlendem Überblick der Verantwortlichen in den betroffenen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Ignoranz, mangelnder Kooperationsbereitschaft sowie bewusster Verschleierung und Verdunkelung zu suchen.

Aufgrund der Unvollständigkeit und Fehlerhaftigkeit der Angaben erwies sich die ursprüngliche Absicht als nicht sinnvoll, die in Verantwortung der Parteien und politischen Organisationen erstellten Berichte über ihr Vermögen von unabhängigen Wirtschaftsprüfern auf Richtigkeit und Vollständigkeit überprüfen zu lassen. Die Zahlen entsprachen im Wesentlichen nicht den Grundsätzen der Wahrheit und Klarheit, zum Teil waren die Angaben offensichtlich unvollständig. Die UKPV hat deshalb in Absprache mit d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beauftragt, aus der Buchhaltung und den sonstigen Informationsquellen der Parteien und Organisationen neue Vermögensübersichten in Verantwortung gegenüber der UKPV zu erstellen. Außerdem wurden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mit der Überprüfung der Vermögensverhältnisse der zahlreichen alten und neu gegründeten verbundenen Unternehmen beauftragt. Beides erwies sich als notwendig, sinnvoll und erfolgreich zur Erfüllung des

Auftrags der Kommission.

c) Eigene Ermittlungen der Kommission

In erheblichem Umfang führte das Sekretariat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eigene Ermittlungen durch. Grundlage hierfür waren u. a. die Berichte d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mit Hinweisen auf eine Fülle offen gebliebener Fragen. So zeigten die Berichte z. B. Vermögensabflüsse in großem Umfang auf. Die Frage, ob die Beträge bei den aus der Buchhaltung ersichtlichen Empfängern tatsächlich eingegangen waren und ob die angegebenen Zahlungsgründe zutrafen, waren jedoch in der Regel nicht Gegenstand der Wirtschaftsprüferberichte. Diesen Fragen musste die Kommission bzw. das Sekretariat selbst weiter nachgehen. Eine wirksame und durchaus erfolgreiche Methode war hierbei eine „Vernetzung“ der Einzelergebnisse der verschiedenen Prüfungsberichte, bei der in akribischer Detailrecherche Einzelangaben und Zahlen auf ihre Richtigkeit und Stimmigkeit überprüft wurden.

Eine weitere erfolgreiche Ermittlungsmöglichkeit bestand in der Auswertung von Konten, die dem Sekretariat aufgrund von Anfragen an 761 Banken bekannt geworden waren. Hiermit wurden allein rund 1 000 Konten der SED ermittelt. Diese Auswertungen ermöglichten weitere gezielte Ermittlungen, z. T. durch das Sekretariat der Kommission selbst, z. T. wurden Wirtschaftsprüfer mit Einzeluntersuchungen beauftragt und z. T. wurde die Amtshilfe anderer Behörden in Anspruch genommen. Hierbei entwickelte sich eine enge Zusammenarbeit mit anderen Ermittlungsbehörden, etwa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r Kriminalpolizei. Besondere Schwierigkeiten ergaben sich beim Grund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Hier bezogen sich die Ermittlungen des Sekretariats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auf die Identifizierung der einzelnen Objekte und die Feststellung der Eigentumsverhältnisse. Den vorgefundenen Unterlagen waren dazu häufig nur — z. T. ungenaue — Anschriften zu entnehmen. Angaben zum Grundbuch, zur Größe, zur Zahl der Flurstücke, zur Art der Bebauung etc. fehlten. Die Ermittlung der Grundstücksdaten musste daher in vielen Fällen zeitaufwendig

durch Besichtigung des Objekts und Abfrage der Ämter vor Ort erfolgen. Weitere Schwierigkeiten ergaben sich durch den mangelhaften Zustand der Grundbücher und Grundstücksakten sowie durch die Überlastung der zuständigen Behörden.

d) Recht der Beweisaufnahme, entsprechend den Verfahrensregeln der Strafprozessordnung

Wie bereits ausgeführt, sah bereits § 20a Abs. 4 PartG-DDR die Befugnis der UKPV vor, entsprechend den Verfahrensregeln der Strafprozessordnung Zeugen zu vernehmen und Hausdurchsuchungen, sonstige Durchsuchungen sowie Beschlagnahmen vornehmen zu lassen. Von diesen Befugnissen musste die Kommission infolge der mangelnden Kooperationsbereitschaft der betroffenen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in nicht unerheblichem Umfang Gebrauch machen. So fanden Ende 1991 / Anfang 1992 umfangreiche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in der Parteizentrale der PDS in Berlin und ihren Landesgeschäftsstellen sowie bei Privatpersonen und Firmen an mehr als 50 Orten in 17 Einzelkomplex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wie in Koblenz und Bochum statt. Die beschlagnahmten Unterlagen wurden nach Auswertung durch das Sekretariat der UKPV an die Betroffenen zurückgegeben.

Hervorzuheben ist, dass nach deutschem Strafprozessrecht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richterlicher Anordnung bedürfen und dass die Betroffenen vielfach versucht haben, sich mit Rechtsmitteln dagegen zur Wehr zu setzen, jedoch alle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der gerichtlichen Überprüfung Stand gehalten haben.

Das strafprozessuale Instrumentarium kam ab dem Jahr 2003 nicht mehr zum Einsatz. Dies war vor allem der Tatsache geschuldet, dass zu diesem Zeitpunkt im Wesentlichen nur noch Auslandsermittlungen stattfanden und die Intention der sehr speziellen deutschen Rechtsgrundlage den ausländischen Behörden schwer vermittelbar war, was wiederum die ohnehin dornenreichen Wege der Amts- und Rechtshilfe weiter komplizierte.

e) Belohnung für Hinweise auf unbekanntes Vermögen

Als weiteres Instrument zur Erlangung von Informationen über bislang unbekanntes Vermögenswerte wurde 1994 auf Initiative des Deutschen Bundestages seitens der damaligen THA und der UKPV gemeinsam eine Belohnung von bis zu 5 Mio. DM (= 2,5 Mio. €) für Hinweise auf unbekanntes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ausgesetzt. Die Auslobung hat zwar einige für die Ermittlungen verwertbare Informationen erbracht, aber zu keiner endgültigen Rückführung von unbekanntem Vermögenswerten geführt.

f) Erwerb nachweislich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des Grundgesetzes

Wie bereits ausgeführt, regelte der Einigungsvertrag, dass nachweislich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im Sinne des Grundgesetzes erworbenes Vermögen den betroffenen Institutionen wieder zur Verfügung zu stellen war. Diese Regelung enthält drei Elemente, die hier näher beleuchtet werden sollen:

- Erwerb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 hierfür werden die Maßstäbe des Grundgesetzes angelegt;
- Kriterium der „Nachweislichkeit“.

(1) Maßstäbe des Grundgesetzes

Dass für die Rückgewährung von Vermögenswerten auf Maßstäbe des Grundgesetzes abgestellt wurde, könnte im Hinblick darauf als problematisch angesehen werden, dass die betreffenden Vermögenswerte ganz überwiegend vor dem Beitritt der DDR nach DDR-Recht erworben worden waren. Daher könnte man auf die Idee kommen, dass es sich hier um eine problematische rückwirkende Anwendung bundesdeutschen Verfassungsrechts und einen Eingriff in geschützte Rechtsgüter handeln könnte, und man könnte ausgiebig darüber streiten, ob hier eine sog. unechte Rückwirkung oder gar eine, nur in seltenen Ausnahmefällen zulässige echte Rückwirkung vorliegt. Dies kann jedoch im Hinblick auf zwei hier durchgreifende Gesichtspunkte dahingestellt bleiben:

Erstens: Ziel und Zweck der Regelung war die Herstellung der Chancengleichheit der politischen Parteien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ies war nicht nur verfassungspolitisch sondern auch verfassungsrechtlich im Rahmen der gebotenen Abwägung bedeutsam und legitimierte die Regelung.

Zweitens: Verfassungsrechtlich betrachtet war der Einigungsvertrag Verfassungsgebung für das wiedervereinigte Deutschland in der Form eines von den parlamentarischen Vertretungskörperschaft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mit verfassungsändernden Mehrheiten ratifizierten Vertrages und zudem – das kann hier nicht näher ausgeführt werden – unter den gegebenen Umständen der einzig realistische Weg zu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Dies ist ein Argument mit so überragendem verfassungsrechtlichen Gewicht, dass ein etwaiger Eingriff in Rechte der betroffenen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eindeutig legitimiert war.

(2) Vermögenserwerb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Mit dem Begriff des „Vermögenserwerbs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im Sinne des Grundgesetzes“ wurde auf einen unbestimmten Rechtsbegriff abgestellt, der – das liegt in der Natur eines unbestimmten Rechtsbegriffs – konkretisierungsbedürftig ist und den zur Anwendung und Umsetzung berufenen Stellen und Behörden – hier insbes. der UKPV sowie der THA – zunächst einmal einen gewissen Auslegungsspielraum eröffnet. Aber – so ist sogleich hinzuzufügen – nach deutschem Verwaltungsrecht unterliegen Auslegung und Anwendung eines unbestimmten Rechtsbegriffs im Einzelfall durch die Exekutive der uneingeschränkten Überprüfung und Kontrolle durch die Justiz.

Die UKPV war sich der Notwendigkeit sowie der Bedeutung und Tragweite einer Konkretisierung des unbestimmten Rechtsbegriffs des „Vermögenserwerbs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im Sinne des Grundgesetzes“ bewusst – sowohl im Hinblick auf die Erwartungen einerseits früherer Berechtigter und andererseits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Vermögenswerte wieder zur Verfügung gestellt zu bekommen, als auch und gerade im Hinblick auf die gebotene

Bewährung materiell-rechtsstaatlicher Grundsätze im Umgang mit den Protagonisten des alten DDR-Regimes.

Die Konkretisierung erfolgte daher nicht im Wege von Einzelentscheidungen von Fall zu Fall und somit nicht nur durch die Summierung solcher Einzelentscheidungen. Vielmehr entwickelte die Kommission zunächst einmal in einem aufwendigen und transparenten Verfahren „Kriterien“ für den Erwerb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im Sinne des Grundgesetzes. Dafür holte sie Rechtsgutachten zweier renommierter Staatsrechtslehrer ein. Außerdem gab sie den betroffen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 Gelegenheit zur schriftlichen Stellungnahme zu den zugrunde zu legenden Kriterien und hörte sie dazu in mehreren Sitzungen an. Auf dieser Grundlage fasste die Kommission dann im Sommer 1992 einen förmlichen Beschluss über die zugrunde zu legenden Kriterien, die sodann die Grundlage für die Entscheidungen der Kommission waren.

Ausgangspunkt für die von der UKPV entwickelten und ihren Entscheidungen zugrunde gelegten Kriterien war zum einen die Rechtsprechung des BVerfG, nach der eine Finanzierung der gesamten Tätigkeit der politischen Parteien über direkte Zuschüsse aus Haushaltsmitteln unzulässig ist und neben der Erstattung der notwendigen Kosten eines angemessenen Wahlkampfes⁴ nur eine Teilfinanzierung der allgemeinen Tätigkeit der politischen Parteien aus staatlichen Mitteln bis zur Höhe der von ihnen anderweitig selbsterwirtschafteten Einnahmen in Betracht kommt⁵. Das BVerfG begründet dies damit, dass die Parteien keine Staatsorgane seien und eine völlige oder auch nur überwiegende Deckung ihres Finanzbedarfs aus öffentlichen Mitteln sie der staatlichen Vorsorge überantworten würde, was mit der prinzipiellen Freiheit und Unabhängigkeit der Parteien unvereinbar sei. Die UKPV ging zum anderen davon aus, dass die Regelung des Einigungsvertrages, wonach nur nachweislich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erworbenes Vermögen zurück zu gewähren war, keine Enteignung der betroffenen Institutionen,

4. dazu BVerfGE 52, 63, 84 ff.

5. BVerfGE 85, 264, 289

sondern die Wiederherstellung einer „materiellen Rechtslage“ zugunsten der früher Berechtigten bezweckte und daneben gleichrangig die Herstellung der Chancengleichheit der politischen Parteien zu beachten war. Dementsprechend bedeutete die Herstellung der Chancengleichheit in der Sicht der UKPV eine Entprivilegierung der Parteien und sonstigen Institutionen im Hinblick auf die Macht- und Vorrangstellung, die sie in der DDR besessen hatten.

Im Ergebnis ging die UKPV davon aus, dass Vermögen nicht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im Sinne des Grundgesetzes erworben worden war, wenn und soweit es.

- unter Verletzung der Freiheits- und Eigentumsrechte Dritter,
- unter Ausnutzung der Führungsrolle der SED über Staat und Gesellschaft oder
- unter Ausnutzung einer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ohne rechtsstaatliche Herrschaftsordnung, die auf der Selbstbestimmung des Volkes und des einzelnen beruht, angeeignet worden war.

Diese (allgemeinen) Aussagen und Kriterien wurden in dem Beschluss der UKPV vom Sommer 1992 eingehend erläutert und begründet und es wurden dazu typische Fallgruppen entwickelt und dargelegt. Darauf kann hier im Augenblick nicht näher eingegangen werden, bei Bedarf können wir aber später gerne darauf zurückkommen. Wichtig ist, hier festzuhalten, dass die Kommission damit eine sehr fundierte und transparente Entscheidungsgrundlage für ihre darauf aufbauenden späteren Einzelentscheidungen entwickelt hat, die

- erstens grundsätzlich auch bei den Betroffenen weithin Anerkennung gefunden hat; trotz der erheblichen Interessengegensätze und Meinungsverschiedenheiten bei der Anwendung der Kriterien im Einzelfall ist es daher gelungen, jedenfalls im Grundsätzlichen bei den betroffenen Institutionen und im politischen Raum bis zu einem erheblichen Grad Konsens über Zielsetzungen und Vorgehen der Kommission herzustellen;
- zweitens ist hervorzuheben, dass sowohl die maßgeblichen Rechtsgrundlagen für die Tätigkeit der UKPV, d. h. §§ 20a und b PartG-DDR und die entsprechenden

Regelungen des Einigungsvertrages, als auch die von der Kommission dementsprechend entwickelten und ihren Entscheidungen zugrundgelegten Kriterien auch vor Gericht bis hin zum BVerfG⁶ in zahlreichen Verfahren Bestand hatten, in denen sich insbes. die PDS gegen die Anwendung im Einzelfall wehren wollte.

(3) Kriterium der „Nachweislichkeit“

Das letztere gilt auch für die Annahmen und Entscheidungen der UKPV zur Frage der Nachweislichkeit eines Erwerbs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Hierin könnte man auf den ersten Blick eine mit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nicht vereinbare Umkehrung der Beweislast zu Lasten der Betroffenen erblicken und vor Gericht haben Betroffene dementsprechend auch – im Ergebnis erfolglos – versucht, geltend zu machen, dass nicht sie einen Erwerb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darzulegen und ggf. nachzuweisen hätten, sondern dass umgekehrt seitens der UKPV darzulegen und nachzuweisen war, dass der Erwerb nicht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erfolgt war.

Dem konnte jedoch insbes. aus folgenden Gründen nicht gefolgt werden: nach deutschem Verwaltungsrecht unterliegen die zuständigen Behörden und Stellen grundsätzlich dem Amtsermittlungsgrundsatz, es gilt nicht wie im Zivilprozess die Darlegungs- und Beweislast der Beteiligten. Dies bedeutet: im Verwaltungsverfahren hat die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 ebenso wie im verwaltungsgerichtlichen Verfahren das Gericht – von Amts wegen die der Entscheidung zugrunde zu legenden Tatsachen zu ermitteln und festzustellen. Es stellt sich hier lediglich die Frage,

- unter Verletzung der Freiheits- und Eigentumsrechte Dritter,
- unter Ausnutzung der Führungsrolle der SED über Staat und Gesellschaft oder
- unter Ausnutzung einer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ohne rechtsstaatliche Herrschaftsordnung, die auf der Selbstbestimmung des Volkes und des einzelnen

6. BVerfGE 84, 290 (303)

beruht, angeeignet worden war.

Dies kann nicht für alle Sach- und Rechtsgebiete einheitlich beurteilt und beantwortet werden, sondern es hängt von deren jeweiligen Gegebenheiten und Besonderheiten ab. Etwa im Bereich von technischen Anlagen und Einrichtungen ist es gängige, notwendige und unbestreitbare Rechtspraxis, dass Zweifel hinsichtlich der Einhaltung festgelegter Standards und Grenzwerte zu Lasten des Betreibers gehen.

In Bezug auf das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bestand offenkundig die Vermutung, dass es ganz überwiegend nicht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erworben worden war. Dies ergab sich aus der – mit ihrer prinzipiellen Freiheit und Staatsferne in einem demokratisch-rechtsstaatlichen Gemeinwesen unvereinbaren – zentralen Verankerung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im Unrechtsregime der DDR sowie der massiven Entrechtung früher Berechtigter. Zudem erforderte das Gebot der Chancengleichheit politischer Parteien eine Rückführung der immensen, völlig unverhältnismäßigen Vermögenswerte, deren sich die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in der DDR bemächtigt hatten, eine Rückführung auf normale, demokratisch-rechtsstaatliche Verhältnisse. Daher waren sowohl die entsprechenden Regelungen im Einigungsvertrag, als auch die diese umsetzende Entscheidungspraxis der UKPV nicht nur materiell-rechtsstaatlich unbedenklich, sondern auch verfassungsrechtlich und verfassungspolitisch geboten.

5. Auslandsermittlungen

Während die Ermittlungen im Inland zu dem der Treuhandverwaltung unterliegenden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im Wesentlichen mit dem Bericht der UKPV im August 1998 an den Deutschen Bundestag abgeschlossen werden konnten, konnte dies bei den entsprechenden Ermittlungen im Ausland erst mit dem Schlussbericht der UKPV im Jahre 2006, also 8 Jahre später erfolgen. Diese Ermittlungen gestalteten sich aus Gründen, die sogleich darzulegen sein werden, als besonders aufwendig und schwierig und die UKPV

ist in ihrem Schlussbericht im Jahre 2006 zu dem Ergebnis gekommen, dass sie in diesem Bereich in ihrer ansonsten positiven Bilanz nur begrenzt erfolgreich gewesen sei.

Die Notwendigkeit zu intensiven Ermittlungen der UKPV im Ausland ergab sich aus vielfältigen Hinweisen. Schon zu Beginn der Tätigkeit der UKPV gab es immer wieder Hinweise auf Parteivermögen, das beizeiten in das Ausland verbracht worden sei oder sein könnte. Diese Hinweise waren jedoch zumeist allgemeiner Natur und inhaltlich eher vage und boten kaum Ansatzpunkte für Ermittlungen. Konkretere Ansatzpunkte ergaben sich u. a. aus Untersuchungen zweier Untersuchungsausschüsse des Deutschen Bundestages in den Jahren 1991 bis 1998 zum sog. Bereich „Kommerzielle Koordinierung“. Hierbei handelte es sich um eine

im
dereinrichtungsteAbteilung,dievorallemderBeschaffungvondiente,u.a.mitzahlreiche
nFirmenundUnternehmensbeteiligungenimAusland.MitdenUntersuchungsausschü
ssenarbeitetedieUKPVengzusammen.Sowohl aus den Feststellungen der
Untersuchungsausschüsse, als auch aus Erkenntnissen des BND und schließlich
der im Rahmen der eigenen Auslandsarbeit der UKPV gewonnenen Einblicke
ergab sich, dass Staats- und Parteivermögen offenbar tatsächlich in nicht
unerheblichem Umfang ins Ausland oder über das Ausland verschoben worden
war; nach Einschätzung der UKPV nur zum Teil in der „simplen“ Form einfacher
Geldüberweisungen oder Bar-Transaktionen, im Übrigen wahrscheinlich über
mehrfach grenzüberschreitende, jedenfalls sehr komplizierte, tatsächliche oder
fiktive Warengeschäfte unter Nutzung der Kenntnisse und Möglichkeiten von
versierten Händlern (oft wohl Embargohändlern) aus der Vorwendezeit.

Zwar konnte die UKPV auch bei den Ermittlungen in diesem Bereich einige Erfolge verbuchen. Dennoch kam sie in ihrem Abschlussbericht 2006 zu dem Ergebnis, dass es nach siebenjährigen, sehr intensiven Bemühungen und ca. 16 Jahre nach den Vorgängen selbst realistischerweise nicht mehr möglich sei, die Dinge weiter auch nur annähernd gerichtsfest zu ermitteln, und deshalb von einer

„Dunkelziffer an unentdecktem Parteivermögen“ ausgegangen werden müsse. Die Gründe hierfür sah die UKPV neben der Komplexität der Materie u. a. darin, dass sich die Ermittlungstätigkeit der UKPV in den ersten Jahren bis 1998 aus guten Gründen auf das Inland konzentriert hatte. Denn es lag nahe, zunächst vordringlich jene Komplexe zu bearbeiten, die zum einen am stärksten möglicherweise wettbewerbsverzerrend in der Konkurrenz der politischen Parteien wirken konnten und die zum anderen unter Ermittlungs-Gesichtspunkten den größten Erfolg versprachen. Mit zunehmendem zeitlichen Abstand von den Ereignissen schwanden jedoch die Beweismöglichkeiten. Hinzukamen folgende Faktoren:

- vielfach waren schon 1995 die gesetzlichen Aufbewahrungsfristen für Dokumente von Banken und Handelsunternehmen abgelaufen;
- es musste in jedem Fall erst die Bereitschaft ausländischer Staaten zur Zusammenarbeit und zur Aktivierung der je eigenen nationalen Möglichkeiten im Rahmen der Amts- und Rechtshilfe erlangt werden;
- zur Wendezeit und bis gegen Mitte der 90er Jahre war Geldwäsche in den meisten Staaten auf der Welt noch kein strafbewehrter Tatbestand;
- in Ungarn, auf das sich ein sehr konkreter Hinweis auf dort versteckte Vermögenswerte im dreistelligen Mio.-Bereich bezog, wurden in der Wendezeit und danach Archive ersichtlich „bereinigt“;
- das Bankgeheimnis stellte noch bis vor kurzem für viele Staaten ein besonders schützenswertes Rechtsgut und der Umgang damit eine besonders sensible Materie dar, ein Umdenken hat erst mit der Banken- und Finanzkrise eingesetzt;
- auch bei den im Ausland festgestellten Vermögenswerten konnten abschließende Entscheidungen vielfach nur nach langwierigen, besonders aufwendigen Rechtsstreitigkeiten erreicht werden. Erst in diesem Jahr wurde ein jahrelanger Rechtsstreit vor einem Schweizer Gericht rechtskräftig mit dem Ergebnis entschieden, dass die österreichische Bank Austria von inzwischen 254 Mio aus dem Vermögen der Firma Novum und einer weiteren ehemaligen DDR-Firma zu erstatten hatte.

6. Verwendungen gemäß gesetzlicher Zweckbestimmung

Von den sichergestellten Vermögenswerten in Höhe von ca. 1,6 Mrd. € konntennach Abzug von Abwicklungskosten, Verwaltungskosten, notwendigen Rückstellungen u. ä. bis zum Jahr 2006 Zuwendungen in Höhe von 917,0 Mio. € nach den gesetzlichen Vorgaben geleistet werden. Wie bereits ausgeführt war nach den Regelungen des Einigungsvertrages das verfügbare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zugunsten gemeinnütziger Zwecke, insbesondere der wirtschaftlichen Umstrukturierung, in den neuen Ländern zu verwenden. Diese ursprüngliche Verwendungsregelung wurde durch das Altschuldenregelungsgesetz vom 6. März 1997⁷ dahingehend geändert und ergänzt, dass verfügbares Vermögen hauptsächlich für die Tilgung der Altschulden der neuen Länder und ein kleinerer Teil für die Denkmalpflege in den neuen Ländern zu verwenden war. Außerdem bestimmte das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r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m 5. Juni 1998⁸, dass verfügbares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auch zur Erfüllung des Stiftungszwecks dieser Stiftung eingesetzt werden sollte.

Entsprechend den gesetzlichen Zweckbestimmungen wurde das verfügbare Vermögen wie folgt verwendet:

Erblastentilgungsfonds (ARG)	375,8 Mio. €	41%
Wirtschaftsförderung NeueLänder	311,1 Mio. €	34%
Kultur-, Kunst- und Denkmalpflege indenNeuenLändern	155,1 Mio. €	17%
Stiftung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75,0 Mio. €	8%

7. BGBl. I S. 434

8. BGBl. I S.1226

Auch wenn hiernach mit 41% der größte Anteil zur Tilgung der Altschulden der neuen Länder verwandt wurde, wurden die verfügbaren Vermögenswerte gleichwohl überwiegend für eine Vielzahl von Förderungsmaßnahmen im Sinne der ursprünglichen Zweckbestimmung des Einigungsvertrags eingesetzt. Das Spektrum reichte hierbei von der Kommunal- und Sportförderung über die Unterstützung kultureller Einrichtungen bis hin zu Zuwendungen an die Deutsche Stiftung Denkmalschutz für Maßnahmen des Denkmalschutzes in den neuen Ländern.

7. Abschluss der Arbeiten der UKPV zum 31.12. 2006

Die UKPV hat ihre Tätigkeit zum Jahresende 2006 und damit nach mehr als 17-jähriger Tätigkeit abgeschlossen. Sie hatte bis dahin in mehr als 85 Sitzungen in bemerkenswerter personeller Kontinuität ein umfangreiches Arbeitspensum erfolgreich bewältigt. Über ihre Tätigkeit hat die UKPV dem Deutschen Bundestag über die Bundesregierung regelmäßig und detailliert berichtet. Diese Berichte sind als BT-Drucksachen veröffentlicht und sie sind maßgebliche Grundlage der vorliegenden Ausführungen.

Als Resümee der Tätigkeit der UKPV ist festzuhalten, dass diese ganz wesentlich dazu beigetragen hat, dass beträchtliche Vermögenswerte, die von den Parteien sowie den von ihnen beherrschten Massenorganisationen der früheren DDR nicht nach materiell-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erworben worden waren, an frühere Berechtigte zurück geführt oder für gemeinnützige Zweck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verwendet werden konnten. Zugleich wurde damit ein wesentlicher Beitrag zur Herstellung von Chancengleichheit im politischen Wettbewerb unter den freiheitlichen Bedingungen des Grundgesetzes geleistet.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Herr Schnappauf, für diese sehr intensive und kenntnisreiche Darstellung der Rechtsmaterie. Ich darf vielleicht aus meiner Kenntnis noch zwei

fachliche, sachliche Anmerkungen machen. Zum einen muss man bei dieser sehr schwierigen, komplexen Materie sehen, dass sich die SED mit der Wendezeit ganz bewusst mit Blick auf ihr vorhandenes Vermögen nicht neu gegründet hat oder eine Neugründung vorgenommen hat. Es war immer juristisch gesehen eine Identität gegeben, es war immer der gleiche Rechtskörper, der sich weiterentwickelt hat. Es hat immer lediglich eine Umbenennung stattgefunden von SED in SED/PDS, dann zur PDS und dann später zur Linken. Insofern ist da immer ganz bewusst die Identität gewählt worden, um alle Fragen in Bezug auf die Vermögenswerte ganz klar geregelt zu haben, dass man immer der Vermögensinhaber war. Das ist der erste Punkt. Der zweite Punkt, auch ganz wichtig aus meiner Sicht: Sie haben ja gehört, welche komplexen Möglichkeiten bestanden, um auch Vermögensermittlungen durchzuführen. Auch da muss man wissen, dass die SED auch unmittelbar in der Wendezeit schon ganz klar ein Konzept aufgelegt hatte durch einen Vorstandsbeschluss im ganz engen Kreis, nur ganz wenige Genossen waren eingeweiht, wie das Vermögen auch verschleiert werden sollte. Man hat da also eine ganz bewusste Taktik aufgelegt und hat auch diese Maßnahmen konkret umgesetzt, um das Vermögen zu sichern. Das war einmal ganz konkret vor den Verhältnissen 1989 zu sehen, aber es war auch historisch in der Partei verankert aus der Illegalität der 20er und 30er Jahre, bzw. der Illegalität in den Anfängen der Bundesrepublik als dort der Ableger verboten war. Insofern hat man konspirativ versucht, dieses Vermögen zu sichern. Der Rechtsstaat war da eben auch aufgefordert, entsprechend zu reagieren. Eine Anmerkung dazu noch: Die SED hat diese Maßnahmen zwar konspirativ ergriffen, aber sie hat sich dabei auch wieder als deutsche Partei erwiesen, denn sie hat diese Verschleierungsmechanismen alle rechtlich korrekt gemacht, indem sie, um diese Vermögen zu verschleiern, Treuhandverhältnisse bei einem Notar begründet hat. Dieses war dann auch für die Kommission der Ansatz für die Ermittlungen, weil man bei dem Notar diese Verträge auffinden konnte und das ganze System aufrollen konnte. Nichtsdestotrotz muss man sehen, dass hier eine ganz klare Verschleierungstaktik angelegt war,

die entsprechende Maßnahmen beinhaltet hat. Im weiteren ist es bei den Verhandlungen mit der PDS immer sehr schwierig gewesen einen Verzicht auf irgendwelche Vermögenswerte zu erhalten. Es wurde im Grunde genommen immer nur das zugegeben, was die Kommission nachgewiesen hat. Hierbei muss man auch sehen, dass die Kommission, Herr Schnappauf hat es ja dargestellt, von der Volkskammer der DDR eingesetzt worden ist, aber eben auch die in der Volkskammer vertretenen Parteien, deren Vermögen unter Treuhand gestellt worden ist, in der Kommission ihre Vertreter hatten. Ich glaube, dass es gerade zu Beginn, abgesehen von der Person des Vorsitzenden ab 1991, aber auch schon mit der Person, die die Volkskammer berufen hat, nämlich einen Rechtsanwalt aus Berlin, Georg Reinicke, ganz wesentlich der Reputation dieser Person zu verdanken war, dass die Kommission ihre Arbeit gerade in der Anfangszeit unter den schwierigen Bedingungen wahrnehmen konnte. Das war dann auch die Grundlage, damit dann später mit dem Einigungsvertrag als dann die Verstärkungen und Unterstützungen kamen diese erfolgreiche Entwicklung [genommen werden konnte]. Vielleicht noch eine interessante Sache. Herr Schnappauf hat gerade erwähnt, dass erst in diesem Jahr ein Prozess abgeschlossen worden ist, in dem es um Verschiebung von Vermögen der SED ging im Wert von 254 Millionen. Dabei spielten zwei Firmen eine Rolle, nämlich die Firma Novum und Transcarbon. Da muss man einfach wissen, dass die Treuhandklärungen für diese Firmen, die von österreichischen Staatsbürger abgegeben worden waren, zugunsten der SED, aus dem Jahr 1949 stammen. Da kann man also sehen, wie die SED schon in den frühen Jahren entsprechend agiert hat und sich auch dieser konspirativen Methoden bedient hat, um das Vermögen anzureichern über die Jahre hinweg. Ich kann mir nicht vorstellen, dass man 1949 die Idee hatte, 1990 müssen wir das Vermögen vor dem Zugriff sichern. Sondern man wollte von Anfang an, dass es nicht bekannt [wird], dass eine sozialistische, kommunistische Partei am Außenhandel, und zwar an einem rigoros kapitalistischen Außenhandel, solche Vermögenswerte eingesammelt hat. Das nur als kleine Ergänzung und historische

Hintergründe zu diesem Vorgehen. Vielleicht gibt es auch noch weitere Anmerkungen zu dem Thema, bevor wir zur Fragerunde kommen. Wenn dem nicht so ist, schaue ich jetzt auf die Uhr. Wir sind genau in der Zeit, 15:30 Uhr. Dann machen wir jetzt eine kleine Kaffeepause, um dann um 15:45 Uhr wieder in die Diskussion der dargestellten und aufgeworfenen Fragestellungen einzutreten, wenn Sie damit einverstanden sind. Ich sehe Zustimmung, dann gibt es jetzt Kaffee. Vielen Dank.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darf ich Sie bitten, wieder Platz zu nehmen, dann können wir in der Tagesordnung fortfahren. Es steht jetzt auf dem Programm die Diskussion, das setzt voraus, dass es Fragen gibt. Deshalb meine Frage an die koreanischen Mitglieder des Konsultationsgremiums, mit der Bitte Ihre Fragen und Nachfragen zu stellen.

[AHN Doosoon Ehren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Die Informationen, die uns Herr Schnappauf mitgeteilt hat, sind sehr detailliert und zum Teil wirklich praktische Beispiele, wie man die Probleme angehen sollte. Während ich seinem Vortrag zuhörte, habe ich mir gedacht, im Falle Koreas, werden in den Medien viele Dinge erwähnt, z.B. die Schweizer Konten [der nordkoreanischen Elite]. Man spricht immer wieder von den Schweizer Konten und Sie haben ja sicher auch alle die Artikel über die Virgin Islands gelesen, eine sogenannte Steueroase. Wenn ich mir dann die Arbeit der UKPV anschau, dann kann ich mir noch besser vorstellen, wie schwer und umfangreich die Arbeit der UKPV gewesen sein muss. Falls es in Korea zu einer ähnlichen Situation kommen sollte, dann frage ich mich, ob wir Koreaner dazu überhaupt in der Lage wären. Wenn wir morgen die Gelegenheit haben könnten, über die unterschiedliche Lage von Korea und Deutschland diesbezüglich zu sprechen, würde ich mich sehr freuen. Aber davor möchte ich eine technische Frage stellen:

Die Ermittlungsverfahren in Bochum und in Koblenz, wie kam es dazu? Wie konnte es dazu kommen, dass man sogar an diesen Orten Werte verstecken konnte? Das hat mich neugierig gemacht.

Und zweitens, eher eine Sorge als eine Frage: Was die nordkoreanische Wirtschaft angeht, gibt es zwei Sektoren. Die normale Volkswirtschaft und dann die Militärwirtschaft. Beim zweiten Sektor können wir nicht einmal erahnen in welchem Maße und mit welchen Mechanismen dieser läuft, aber zumindest wissen wir, dass dieser zweite Sektor etwa ein Drittel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ausmacht. In Deutschland gab es ja die Volksarmee, die wurde einfach in die Bundeswehr absorbiert. Dabei dürfte es nicht so viele Probleme gegeben haben. Aber falls die beiden Koreas wiedervereinigt werden, dürfte es dadurch viele Probleme geben, die nicht in gleicher Weise angegangen werden können wie beim Vermögen der SED, denn abgesehen vom Vermögen des nordkoreanischen Regimes gibt es eine große Masse von Besitz bei der Armee. Wir können uns nicht einmal vorstellen, wie wir dieses Problem angehen sollten. Haben Sie dazu eine Lösung?

[CHUNG Chongwook Vorsitzender, Zentrales Gremium der Mitglieder des Bildungsausschusses für die Wiedervereinigungsbildung]

Ich möchte direkt daran anschließend eine Frage stellen, darf ich diese dann zuerst stellen? Seit heute morgen habe ich die Vorträge der deutschen Referenten verfolgen können. Ich habe vieles gelernt, auch wenn natürlich Korea und Deutschland verschiedene Ausgangslagen haben. Ich konnte den Eindruck gewinnen, dass die Deutschen sich viel vorbereitet haben, aber trotzdem gab es dann Mängel, Defizite und viel Verbesserungsbedarf. So wie Prof. Song auch gemeint hat, die Situation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ist sehr verschieden, nicht nur politisch von den Parteienstrukturen, sondern auch von der Wirtschaft her. Es wurde hier der zweite Sektor genannt. Von den 20 Milliarden Dollar des BIP nimmt der militärische Teil wahrscheinlich mehr als 5 Milliarden

ein. Das ist aber nur eine Schätzung.

Außerdem hat der Kim-Clan eine Macht in unvorstellbarem Ausmaße. Anders ausgedrückt, bei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gibt es auf der einen Seite die normale Volkswirtschaft, auf der anderen Seite gibt es die Familienwirtschaft der Familie Kim, d.h. die Wirtschaft des Regimes. Es wurde vieles hier bereits erwähnt, aber eines möchte ich noch betonen: Die wichtigsten Finanzquellen Nordkoreas sind illegal. Das Regime finanziert sich nicht über Steuern, sondern durch den Verkauf von Waffen, durch Falschgeld, Verkauf von Drogen - das sind die hauptsächlichlichen Einnahmequellen für das nordkoreanische Regime. Das ist wahrscheinlich der größte Unterschied zum Fall der SED. Nicht nur unterschiedlich von der Art, sondern auch vom Umfang her unvergleichbar. Also falls die beiden Koreas wiedervereinigt werden, wäre der größte Unterschied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folgender: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wird die Arbeitspartei nicht als Partei anerkennen. Laut koreanischer Verfassung ist die Arbeitspartei keine Partei, die die Stimme des Volkes vertritt.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d die Arbeitspartei für illegal erklärt werden und wird sich auflösen müssen. Und vor allem wegen des unvorstellbar großen Vermögens der Kim-Familie, das man im Ausland versteckt vermutet, wird der koreanische Fall viel schwerer sein als der deutsche, aber das ist natürlich keine Neuigkeit. Ich wollte Ihnen nur noch einmal meinen Eindruck mitteilen. Sei das jetzt die SED oder andere Parteien; als Sie das Vermögen diesem Verfahren unterzogen haben, denke ich, hatten Sie die Idee, dass solche Parteien auf der gleichen Ebene konkurrieren sollen wie die anderen westdeutschen Parteien, aber ich möchte Sie wissen lassen, im Falle Koreas wird so ein Gedanke gar nicht möglich sein. Zweiter Punkt. Im Falle Deutschlands war es den alten ostdeutschen Parteien erlaubt mit den westdeutschen Parteien zu konkurrieren. Weil die zu viel Vermögen versteckt hatten, hat man die Ermittlungsverfahren gestartet und Vermögen enteignet. Meine Frage lautet nun wie folgt: Welche Bedingungen sollte es dafür geben, um eine Partei auch als Partei anzuerkennen? Bis zu welchem Punkt erlaubt

man einer Partei das Vermögen zu behalten? Es gab bestimmt sehr kontroverse Diskussionen darüber, wie weit es der SED erlaubt sein sollte, ihr Vermögen weiter zu besitzen. Welche Standards hat man angelegt? Wie hat man entscheiden, wieviel eine Partei besitzen darf, um als Partei weiter anerkannt zu werden? Falls man solch ein Kriterium oder ein Gesetz dazu hatte, gab es dagegen keinen Widerstand der SED?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Gibt es noch eine weitere Frage? Ja, bitte. Dann kommen wir vielleicht zu einer ersten Antwortrunde.

[SONG Taesoo Professor,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of 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Das war ein schwieriges und detailliertes, sehr feines Thema. Vielen Dank für den Vortrag. Im Anschluss an die vorherigen Fragen möchte ich noch etwas hinzufügen. 761 Konten konnten Sie durch Banken ermitteln. War es damit mit den Konten der SED einfach getan? Ich denke es ist wichtig, schon in der anfänglichen Phase der Ermittlungen das Ausmaß der Ermittlungen festzusetzen. Im Übrigen denke ich nicht, dass die Arbeitspartei selbst überhaupt Vermögen besitzt. Das Vermögen der Arbeitspartei ist vielmehr gleichzusetzen mit dem Vermögen der Familie Kim. In Deutschland gab es bestimmt auch Probleme bei den Ermittlungsverfahren zu den Vermögen der politischen Elite, sei es jetzt bei Modrow oder anderen Ministern.

[KIM Younghoon Research Director, Dept. of Global Cooperation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eine nächste Frage: Was fällt unter das materiell-rechtstaatliche Prinzip und was nicht? Ich habe hier irgendwo gelesen, falls man finanzielle Unterstützung bekommen hat, ist das der Maßstab gewesen. Gab es keine weiteren Maßstäbe?

Hat man einfach von Fall zu Fall anders entschieden? Oder hat man einfach alle Entscheidungen der Justiz überlass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Herr Schnappauf, wenn Sie zuerst wollen?

[Klaus-Dieter Schnappauff ehm. Leiter der Arbeitsgruppe "Deutsche Einheit" (Einigungsvertra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Gerne, vielen Dank. Wobei ich gleich einfügen möchte, dass ich nur begrenzt auf die Fragen antworten kann, insbesondere auf die Fragen von Herrn Ahn. Zur Frage des Militärs kann ich z.B. überhaupt nichts sagen.

Was Koblenz und Bochum angeht, so ergibt sich folgendes, aber auch das weiß ich nur aus dem Bericht der UKPV von 1993: Bei Koblenz ist durchsucht worden, erstens, eine Jugendheim-GmbH, und zweitens, eine GmbH. Aber ich sehe, Herr Dr. Bentmann kann dazu ein bisschen mehr sagen. Das Gleiche gilt dann möglicherweise auch für den nächsten Punkt, Bochum. Betrifft die IG Wismut, IG Bergbau,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IG Bergbau und Energie in Berlin, Chemnitz, Gera und Bochum, also Gewerkschaftseinrichtungen. Ich vermute, ohne Ihnen, Herr Dr. Bentmann, vorgreifen zu wollen, das hängt damit zusammen, dass die westdeutschen Gewerkschaften Teile des Vermögens des FDGB - um es mal so zu formulieren - vereinnahmen wollten. Zur Frage Militär kann ich überhaupts nicht sagen.

Herr Song, ich glaube, dass ich mich vielleicht etwas missverständlich ausgedrückt habe. Durch die Abfrage bei Banken sind 761 Konten der SED neu ermittelt worden. Das waren nicht nur diese 761 Konten, aber diese sind aufgrund dieser Abfrage neu dazugekommen. Die fügten sich in ein Gesamtbild ein, das sich aus vielerlei Elementen zusammensetzte, aber das waren wichtige Hinweise. Was Untersuchungen hinsichtlich des Vermögens politischer Eliten angeht, muss ich eigentlich passen, mir ist nicht bekannt, dass etwas derartiges gemacht worden

ist. Ich vermute, dass es das auch nicht gegeben hat. Möglicherweise im kleineren Umfang, in dem Maße, wie bezogen auf die SED selbst bestimmte Dinge gelaufen sind. Aber das gezielt einzelne Funktion're unter diesem Aspekt unter die Lupe genommen wären, ist mir zumindest nicht bekannt.

Dann zur Frage von Herrn Kim, was der Maßstab für den materiell-rechtstaatlichen Erwerb gewesen ist. Ich habe vorhin dargestellt, dass die UKPV in einem sehr aufwendigen und transparenten Verfahren ihre Maßstäbe dafür entwickelt hat und insbesondere diese drei Fallgruppen, die ich erwähnt habe, zugrunde gelegt hat. Nach meiner persönlichen Einschätzung ist das ein sehr gutes und richtiges Verfahren, das auch erfolgreich gewesen ist. Es liegt in der Natur der Sache, dass ein solcher unbestimmter Rechtsbegriff Auslegungsspielräume eröffnet. Deswegen ist wichtig zu betonen, dass insoweit jedenfalls im Prinzipiellen Einvernehmen und großer Konsens bestanden hat. Abgesehen davon, dass die anderen auch den Einzelfall, naturgemäß von der SED insbesondere, fast durchweg vor dem Verwaltungsgericht auf den Prüfstand gestellt hab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Wenn ich das ergänzen darf, hinsichtlich der Beschlüsse für Koblenz und Bonn. Es gab tatsächlich auch in anderen Orten der alten Bundesrepublik, also im Westen, Durchsuchungen. Das hing damit zusammen, dass die SED, wie ich ja sagte, eine ganz klare Strategie hatte, um ihr Vermögen zu verschleiern. Da wurden z.B. GmbH, also Gesellschaften, juristische Personen, gegründet. Und diese Gesellschaften waren natürlich nach der Wiedervereinigung frei ihren Sitz zu suchen, sodass sie also nicht alle in den Neuen Ländern blieben, sondern auch durchaus in andere Städte gegangen sind. Das war das Eine. zum Anderen gab es aber auch Vermögenswerte der Parteien bzw. der Organisationen im Westteil, z.B. hatte die SED eine Wohnung in Bonn als Immobilie. Einfach weil sie natürlich nicht verboten war und insofern Vermögensgegenstände haben konnte. Und diese Jugendheim-GmbH war jetzt kein Bestandteil der SED, sondern gehörte zum

Vermögen der FDJ, der Jugendorganisation der SED. Jugendheim - daraus kann man das erkennen. Und dann gab es noch eine weitere Firma, die in dem Kontext genannt worden ist. Was die Gewerkschaften anbetraf, war es so, dass der FDGB als zentraler Gewerkschaftsbund in der Zeit von 1989 vom Mauerfall bis zur Wiedervereinigung intern umstrukturiert hat und sich die Einzelgewerkschaften, die formal im FDGB schon immer existiert hatten, verselbstständigt hatten. Herr Schnappauf hat sie genannt; IG Metall, IG Bergbau usw. Diese Gewerkschaften in der DDR haben sich in diesem kurzen Zeitraum dann angeschlossen und angedockt an ihre Westpartner. Im Rahmen dieses Zusammenschlusses sind auch Unterlagen von Ost nach West transportiert worden, weil die Geschäftsstelle, z.B. in Bochum war. Dann haben wir das ein- oder zweimal versucht, freundlich um Herausgabe der Unterlagen zu bitten und dann haben wir eben Gebrauch gemacht von den Unterlagen, so erklärt sich das. Aber wie gesagt, die Ermächtigung nach dem Parteiengesetz galt mit der Wiedervereinigung natürlich auch für Standorte in den westlichen Bundesländern und wir haben auch im Wege der sehr komplizierten Rechtsordnung entsprechende Sachen im Ausland versucht zu vollstrecken, z.B. auch Beschlüsse, die im Wege der Amtshilfe vom Berliner Gericht bewirkt worden sind an die Schweizer Behörden und dort über die schweizerische Staatsanwaltschaft. Da sind dann auch Untersuchungen in Schweizer Banken vorgenommen worden. Das war ein sehr sehr aufwändiges Rechtshilfeersuchen, aber es hat funktioniert. Vielleicht auch noch ein Punkt, den Sie ansprachen, nämlich das Vermögen von Ministern oder hohen Parteifunktionären. Da gebe ich Herrn Schnappauf Recht und kann ihn nur bestätigen. Die unmittelbaren hohen Funktionäre sind nicht durch eine persönliche Bereicherung aufgefallen. Das lag aber auch daran, wie Herr Prof. Dr. Schröder heute morgen schon gesagt hat, dass sie es gar nicht nötig hatten, Vermögen anzuhäufen, weil sie einfach Volkseigentum genutzt haben, wie Privatvermögen, aber ohne es sich anzueignen. Damit haben sie sich privilegiert. Allerdings gab es einige Strafverfahren wegen versuchter Unterschlagung. Das ist insbesondere im

Bereich der kommerziellen Koordinierung (Koko), vereinfacht gesagt der Bereich von Schalck-Golodkowski, so gewesen, das war aber kein Parteibetrieb. Das war formal eine staatliche Abteilung des Außenhandelsministeriums, die aber unmittelbar dem Generalsekretär der SED unterstand. Im Bereich Koko hat es also gegen einzelne Funktionäre und Mitarbeiter Strafverfahren gegeben, um Vermögen sicherzustellen. Das ist dann aber nicht durch die Unabhängige Kommission Parteivermögen erfolgt, sondern dort ist entweder aufgrund strafrechtlicher Ermittlungen der Staatsanwaltschaft vorgegangen worden oder aber das Bundesfinanzministerium hat als Rechtsnachfolger für den Staat DDR das rechtswidrig entzogene Vermögen versucht zurückzuerhalten. Dort gab es also auch entsprechende Prozesse, insofern ist da vielleicht eine ähnliche Position da, wie Sie sie mit dem Familienclan Kim genannt haben, denn auch der Bereich Koko hat mit Waffenlieferungen und Waffengeschäften, sowie rechtswidrigen Aktivitäten erhebliche Gewinne erzielt und Devisen für die DDR erwirtschaftet. Dann allerdings sind diese Devisen entweder dazu genutzt worden, um den Lebensunterhalt der Nomenklatura besser zu gestalten und dafür schöne Westwaren einzukaufen oder aber das Geld ist unmittelbar in den Staatshaushalt geflossen, um die Devisenknappheit des Staates zu lindern. Das ist aber trotzdem vielleicht ungefähr mit dem Komplex der Kim-Familie vergleichbar, denn auch im Bereich Koko gab es solche Strukturen, um das hinzubekommen.

Noch ein Punkt zu den Parteien, weil Sie sagten, wieso hat man nicht überlegt, die Partei zu verbieten oder gleich alle Parteien. Ich glaube, da muss man einfach berücksichtigen, dass es ja zwischen dem Jahr 1989, dem Fall der Mauer, den Kommunalwahlen im März und der Wahl der Volkskammer durchaus materielle Veränderungen im Parteiensystem gegeben hat. Nicht als juristische Person bei der SED, aber die Parteien haben sich ja doch inhaltlich teilweise verändert, insbesondere auch die Blockparteien und dort hatten sie dann auch bei den Kommunalwahlen bzw. auch bei der Wahl der Volkskammer ja durchaus eine demokratische Legitimation von den Bürgern der DDR erlangt. Insofern war das

dann glaube ich nicht mehr so einfach zu sagen, da findet jetzt ein Verbot der Parteien statt, denn es hatte sich ja schon eine inhaltliche Veränderung und Legitimation ergeben. Dass das hinsichtlich der SED auch berechtigt hinterfragt werden kann, gebe ich zu, aber das war dann eben auch im politischen Entscheidungsprozess notwendig diesen relativ komplexen Weg zu gehen und nicht einfach das Vermögen zu entziehen. Insofern noch einmal in Bezug auf Herrn Schnappauf: Es gab keine Enteignung, auch nicht der SED. Das Vermögen wurde überprüft und die Partei wurde entprivilegiert, aber nicht enteignet. Das ist juristisch ein feiner, aber aus unserer Sicht ein sehr wichtiger Unterschied. Aber ich will kein Koreferat zu Herrn Schnappauf halten. Und dann kommt auch Herr Prof. Dr. Schröder gleich dran.

[Klaus-Dieter Schnappauf ehm. Leiter der Arbeitsgruppe "Deutsche Einheit" (Einigungsvertra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Ich würde gerne ganz kurz das ergänzen, was Sie zuletzt ausgeführt haben und bedanke mich, dass Sie mir noch einmal das Wort geben, ich hatte es nämlich in der Tat in meiner ersten Wortmeldung vergessen. Die verfassungsrechtliche Freiheitsgarantie und die Gründungsfreiheit für politische Parteien gilt selbstverständlich auch für eine Gruppierung wie die SED/PDS. Ich möchte einen Schritt weiter gehen, dass es nämlich sogar erwünscht ist, dass sich eine möglichst vielgestaltige politische Landschaft in dem Beitrittsgebiet ergibt. Es hätte sich allenfalls andersrum die Frage stellen können, ob und inwieweit eine rechtliche Handhabe für ein Verbot der SED gegeben gewesen wäre. Erstens stellte sich diese Frage aber nach meiner Einschätzung damals nicht. Zweitens möchte ich sagen, dass wahrscheinlich die Voraussetzungen dafür nicht vorgelegen hätten.

[SUNG Nakin Prof. für Rechtswissen schafften, SNU]

Vielleicht sollte ich noch eine ergänzende Frage stellen. Dann können Sie mir antworten, Herr Prof. Dr. Schröder. Als ich Parteien erwähnt habe, habe ich

Folgendes gemeint: Ich bin ja Verfassungsprofessor, das ist mein Fachgebiet. Nach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ibt es die Möglichkeit eine Partei aufzulösen, die verfassungswidrig ist. Also eine Partei, die gegen demokratische Grundsätze verstößt. Eine ähnliche Klausel gibt es auch im Grundgesetz. Wir haben diese Klausel ja zum Vorbild genommen als wir die Verfassung erarbeitet haben. Und zur Kommunistischen Partei [Deutschlands] gab es bereits eine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nämlich dass eine kommunistische Partei keine legitime Partei ist. Es gibt ja auch viele illegale Taten, die aufgedeckt wurden. Gab es nach der Wiedervereinigung, bezüglich der SED, die ja auch Kern der DDR gewesen ist, keinen Antrag auf Prüf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Prof. Lee, Sie haben gesagt, die nordkoreanische Arbeitspartei werde nicht mehr existieren. Wahrscheinlich haben Sie das so formuliert, weil die Arbeitspartei nicht den Grundsätzen der koreanischen Demokratie entspricht. Also noch einmal meine Frage: Gab es keinerlei solche Prüfung oder einen Antrag auf Prüfung des Status der SED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Wenn ich noch eine zweite Frage stellen dürfte, die mir sehr am Herzen liegt? Dabei geht es nicht um Parteien, sondern um die Eigentumsfrage. Die Wiedervereinigung bedeutet auch die Umwandlung eines sozialistischen Staates in einen marktwirtschaftlichen Staat. Man kann ähnliche Beispiele anschauen, z.B. die Sowjetunion oder die osteuropäischen Länder, da ging es auch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Die DDR wurde ja von Westdeutschland absorbiert, da gab es dann bestimmt grundlegende Unterschiede, aber grundsätzlich wurde erst verstaatlicht, dann privatisiert. Sie haben gesagt, man hat etwa zu einem Drittel [des Wertes] verkauft, aber es gab auch vieles, was gar nicht verkauft werden konnte. Die DDR-Bürger konnten sich auch ein Drittel nicht leisten. Sie hatten also keine Chance auf Erwerb von Eigentumsrecht, nur Nutzungsrecht. Wäre es nicht besser gewesen, wenn man dieses Nutzungsrecht für eine bestimmte Zeit einfach hätte schützen lassen? Dann hätten die Bürger nach der Wiedervereinigung auch ihre wirtschaftliche Lage verbessern könn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Eine ganze Reihe von Fragestellungen, aber jetzt ist erst einmal Prof. Dr. Schröder dran.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Also diese letzte Frage ist ja jetzt noch einmal ein ganz anderer Komplex, das ist ja jetzt ein Nachtrag zu der Eigentumsfrage. Ich rede ja vielleicht zu lange, wenn ich jetzt auf alles eingehe. Ich wollte aber zunächst einmal etwas zu der Parteiensituation sagen. Zu Ihnen kann ich aber noch sagen, wenn Sie auf das Grundgesetz hinweisen oder das Verbot der KPD, dann machen Sie den Fehler, der hier oft gemacht wird: Sie übersehen, dass in der DDR eine Revolution stattgefunden hat und dass es fast ein Jahr gab, in dem hatten wir demokratische Verhältnisse und das Grundgesetz galt nicht. Für die Volkskammer galt doch das Grundgesetz nicht! Das war doch nicht unsere Verfassung, wir hatten doch eine eigene verfassungsrechtliche Lage. Das wird hier immer übersehen. Sie denken immer nur an Einheit. Sie werden auch möglicherweise eine andere Situation haben. In Deutschland aber gab es erst eine Revolution, dann hat die SED sich ein neues Programm gegeben, d.h. sie hat auf den Alleinvertretungsanspruch verzichtet. Jetzt hatten wir das Problem, wenn wir die SED hätten verbieten wollen, hätte die PDS sagen können: Wir haben uns ja von den Sünden längst befreit. Im Dezember 1989 hat sich die SED doch praktisch programmatisch neu orientiert. Aber ich denke wir sollten noch etwas weiter ausholen. Die DDR war formell kein Einparteiensstaat. Das ist ein Unterschied zu den meisten anderen sozialistischen Ländern. Das hängt mit der Situation nach dem Krieg zusammen. Die sowjetische Besatzungsmacht hat in ihrem Gebiet dieselben Parteien zugelassen wie in den anderen, sodass sich gesamtdeutsche Parteien bildeten, mit Pendanten in jeder Besatzungszone; KPD, SPD, CDU und FDP. Die FDP hieß aber in der DDR LDPD. Dann hat die sowjetische Besatzungsmacht zwei Mal die CDU gezwungen

ihren Parteivorsitzenden fallen zu lassen, weil sie oppositionelle Politik gegen die SED gemacht haben. Dann hat sie den Zusammenschluss von SPD und KPD organisiert, in der Erwartung die Mehrheit auf demokratischem Wege zu erhalten. Das hat aber nicht funktioniert. Daraufhin hat sie die anderen beiden Parteien domestiziert und zwei neue gegründet. Damit hatte sie eine formelle Mehrheit in der Volkskammer organisiert, die dann nie verändert wurde. Aber formell war es ein Mehrparteiensystem. Die Formel hieß: unter Führung der SED. Als die SED eine Koalitionsregierung machte, nämlich im Dezember 1989, war da die CDU mit drin, guckte aber schon ein bisschen nach Westen und verließ die Regierung, wurde also Opposition. In dieser Phase passierte zweierlei. Die Ost-CDU hat von der West-CDU verlangt, dass sie sie als Schwesterpartei wieder anerkennt. Helmut Kohl wollte das nicht und da hat der neugewählte Parteivorsitzende gesagt: Das ist doch ganz einfach, wir gehen in den Wahlkampf für die Volkskammerwahl und alle denken an Helmut Kohl, da können Sie gar nichts dagegen machen. Diesem Argument hat sich Helmut Kohl gefügt, hat aber nicht die kontaminierte Ost-CDU alleine nehmen wollen und deswegen eine Allianz gebildet, die aus einer Altpartei und zwei neuen bestand, nämlich DSU und der Demokratische Aufbruch. Ursprünglich wollten sie nur neugegründete Parteien als Partner haben und dann ist die Wahl erfolgt und die Allianz für Deutschland hat 47% erhalten. Bei der Wahl haben alle bisherigen Parteien kandidiert und die neugegründeten. Und dann hat die SED/PDS 16% erhalten. Und mit denen waren sie nun auch im Parlament. Einen Verbotantrag zu stellen, ist natürlich niemandem eingefallen, und warum? Die SED hatte eine Schutzmacht, nämlich die Sowjetunion. Und die Sowjetunion wollten wir gerne freundlich gestimmt haben, damit sie uns die Einheit erlaubt. Wir sind doch nicht so dumm eine Partei zu verbieten und dann dürfen wir uns nicht mehr vereinigen. Man kann natürlich darber spekulieren, ob die Sowjetunion scharf geworden wäre. Sie haben aber immerfort gefragt, wie wir mit der SED umgehen und auch Helmut Kohl haben sie gefragt und da war die stereotype Antwort: Es geht alles rechtsstaatlich zu. Damit war

Gorbatschow zufrieden. Alles geht rechtstaatlich zu hieß aber auch, solange die Partei den Umsturz nicht plant, können wir sie auch nicht verbieten. So ist das gekommen. Wir wollten aber natürlich die Millionen und Milliarden der SED neutralisiert haben. Da hat die Volkskammer heimlich, unter Nichtbeteiligung der PDS, das Gesetz vorbereitet, dass wir nicht enteignen, sondern unter Treuhand stellen und dann kam es am Vormittag mit Sonderantrag auf die Tagesordnung und die PDS-Leute waren natürlich völlig aus dem Häuschen und der Herr Hoyer hat gesagt, sein Vater habe in der Nazizeit im KZ gesessen und das hier sei die Vorbereitung für das Parteiverbot und er werde auch noch mal im Gefängnis enden. Und dann habe ich ihm gesagt, ich war ja Fraktionsvorsitzender, „wir wollen Euch nicht verbieten, wir wollen wirklich bloß Euer Geld“. Mit der Antwort waren sie aber nicht zufrieden. Nun muss ich Ihnen andererseits sagen, nachdem die PDS im Jahr 1990 gewissermaßen die seelische Stütze der Entrechteten geworden war, wenn da die Bundesregierung oder der Bundestag, also der gesamtdeutsche Gesetzgeber, nach der Vereinigung die PDS verboten hätte, dann hätten Sie den Aufschwung der PDS erlebt, denn es gab natürlich viel Ärger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und die PDS hat ja erfolgreich versucht als die Organisation der Entrechteten aufzutreten. Leute, die mit der PDS nichts zu tun hatten, hätten dann gesagt: „Das Verbot ist Unrecht“. Sie [in Korea] haben ja noch keine klaren Vorstellungen, können Sie ja auch nicht, aber stellen Sie sich vor, Sie vereinbaren eine Konföderation mit dem Norden, dann möchte ich Sie mal fragen, zu welchem Zeitpunkt Sie Ihren Vertragspartner verbieten wollen? Sie müssen sich das mal bis in diese Gründlichkeit vorstellen. Sie werden den Zeitpunkt nicht finden, wo Sie Ihn verbieten können! Denn wenn die Vereinigung geschehen ist, müsste sich die Arbeitspartei ja irgendwie auch demokratisch in den Wahlvorgang mit einbegeben. Am Ende verbieten Sie eine Leiche oder was? Solange sie arbeiten kann - und Sie brauchen sie ja als Partner - da können Sie sie ja ohnehin nicht verbieten. Ich weiß nicht, ob ich jetzt hier erst einmal einen Punkt mache oder ob ich jetzt noch etwas zur Eigentumsfrage sagen soll?

Also erst einmal muss ich sagen, dass die DDR von der Bundesrepublik "absorbiert" worden sei, ist eine Missachtung der Volkskammer. Wir haben das mit Zweidrittelmehrheit beschlossen, dass wir da hin wollen und wir lassen uns nicht gern nachsagen, dass wir dabei doof und manipuliert waren. Wir haben dabei als Abgeordnete unseren freien Willen praktiziert. Sie treten mir zu nahe, wenn Sie mir sagen, ich war zu blöd selbst zu beschließen, was ich wollte. Der Ausdruck Absorption beleidigt die Volkskammerabgeordneten, das will ich Ihnen ganz offen sagen. Sie nehmen auch nicht ernst, dass es eine Phase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gegeben hat, wenn Sie Absorption sagen. Also ich verzeihe Ihnen das, aber möchte darauf hinweisen, dass es verletzend ist.

Ich habe Ihnen doch heute früh erklärt, dass ausschließlich Ostdeutsche die Komplettierungskäufe gemacht haben. Das hängt nun damit zusammen, dass die Ostdeutschen als einzige ehemals sozialistische Staatsbürger ihre Sparguthaben über die Transformation hinweg erhalten konnten. Alle anderen sozialistischen Länder mussten die Staatsschulden mit Inflation ausgleichen, aber die DDR-Bürger behielten ihre Sparguthaben. Deshalb waren sie nicht ganz so arm, wie hier unterstellt wird. Jetzt will ich nicht erklären, woher die Höhe der Sparguthaben im Osten gekommen ist, die hing im Wesentlichen zusammen mit den Feierabendbrigaden, also mit dem, was man normalerweise Schwarzarbeit nennen würde, in der DDR aber teilweise erlaubt war. Außerdem hatten alle Frauen Arbeitsverhältnisse, sodass zwar die Einkommen des Einzelnen bei 30% West lagen, aber bei den Familieneinkommen war der Unterschied nicht ganz so groß, weil im Osten immer beide gearbeitet haben. Es steht ja auch in den Papieren, aber wenn Sie denken, dass die DDR-Bürger in zehn Jahren Vermögen hätten ansammeln können, in der Höhe, das die Westdeutschen in 40 Jahren ansammeln konnten, dann glauben Sie an Wunder. Beim Geldvermögen war das Verhältnis im Jahre 2000 Ost-West 30%. Man kann also nicht sagen, dass sie ganz arm waren.

Prüfung durch ein Verfassungsrecht - hatte ich schon gesagt. In der DDR gab

es keines darauf, auch nicht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Im Übrigen ist es natürlich so, wenn eine kommunistische Partei verboten ist, ist die nächste nicht auch gleich mitverboten und so gab es in Westdeutschland eine nichtverbotene Partei, die nur die Buchstaben umgestellt hatte. Sie hieß nicht mehr KPD, sondern DKP. Die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ist legal gewesen auch im Jahre 1990 in Westdeutschland. Nur die Jugendorganisation, die blieb verboten, die FDJ. Weshalb jetzt also der Witz passiert, wenn Sie mit einem [Ost-]FDJ-Hemd im Westen rumlaufen, passiert nichts, aber in Westberlin ist jemand gezwungen worden, das FDJ-Hemd westlicher Provinienz auszuziehen - auch alles Affentheater, Entschuldigung. Da sieht man, kaum dass Sie Parteien verbieten, können Sie vorgeführt werden. Kaum schreibt einer SED an die Wand, können Sie die Polizei hinschicken und den Straftatbestand klären lassen. Also Parteienverbote sind wirklich nur nötig, wenn die Demokratie sonst stirbt und sonst soll man das lass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Vielleicht noch eine Anmerkung zum Parteienverbot. Nach meiner Kenntnis hat es auch mit dem Augenblick der Wiedervereinigung und nachdem das Grundgesetz für ganz Deutschland galt, jedenfalls in relevanten politischen Organisationen in der Bundesrepublik, keine Überlegungen für einen Antrag auf Verbot der SED/PDS und dann PDS gegeben. Denn das hätte ja bedeutet, dass erst einmal ein Antrag an das Verfassungsgericht gerichtet hätte werden müssen, um dort dann das Verfahren durchzuführen. Und zum damaligen Zeitpunkt war es eigentlich politischer Konsens, dass dies nicht der richtige Weg ist, sondern man wollte die demokra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r Partei suchen und sie so diminieren. Herr Prof. Dr. Paqué hat das Wort.

[Prof. Dr. Karl-Heinz Paqué ehem. Staatsminister der Finanzen in Sachsen-Anhalt]

Ich bin kein Jurist, also alles, was ich sage, ist mit Vorsicht zu genießen in dieser Hinsicht, aber vielleicht ein Punkt noch zur Klärung für unsere koreanischen Freunde: Die Hürden, juristisch, liegen für ein Parteienverbot in Deutschland extrem hoch. Zumindest eine aggressive Form des Kampfes gegen die 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ist Voraussetzung. Völlig unabhängig von dem, was schon vorher gesagt wurde, von Herrn Prof. Dr. Schröder insbesondere, wäre es nicht leicht gewesen, juristisch - ganz abgesehen mal vom Zeitdruck - einen solchen Nachweis zu führen, in dem Augenblick, in dem in der Tat eine Partei, eine umgewandelte SED, in anderer programmatischer Form auftritt und von vornherein klarstellt, „wir arbeiten im Rahmen dieser freiheitlichen-demokratischen Grundordnung“. Das ist übrigens ein Problem, das wir ja auch ganz aktuell im Zusammenhang mit dem NPD-Verbot haben. Da kann man darüber diskutieren, ob man diesen Weg gehen soll oder nicht, ich bin da auch sehr skeptisch, aber auch da ist das Problem natürlich, dass man diese gezielte Aggressivität nachweisen muss. Mal unjuristisch gesprochen, ich bin wie gesagt kein Jurist, der den Tatbestand genau kennt, aber in Worten des gesunden Menschenverstandes läuft es wahrscheinlich darauf hinaus.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Es gibt da auch aus juristischer Sicht keine Korrekturen anzumerken. Eins ist glaube ich ganz wichtig, noch einmal hervorzuheben, nämlich dass es auch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wichtig ist, die Form der Vereinigung immer wieder in Erinnerung zu rufen. Der Begriff Absorption oder der Begriff Kolonisation ist völlig verfehlt, auch juristisch. Die DDR hat sich selbst verändert, Länder neu gegründet und ist dem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aufgrund der Entscheidung der Volkskammer mit Zweidrittelmehrheit beigetreten. Es ist nicht so, dass der Westen sein Netz ausgelegt hätte, sondern rein verfassungsrechtlich

ist der Weg über den Beitritt ganz bewusst gewählt worden, weil es so zu einem schnellen Beitritt und gesamtstaatlicher Struktur kam. Der andere Weg, eine verfassungsgebende Versammlung zu berufen und eine neue Verfassung auszuarbeiten, hätte zu erheblichen zeitlichen Fragestellungen, ganz abgesehen von den politischen, geführt, die es unmöglich gemacht hätte, die dringenden tatsächlichen Probleme zu lösen und insofern war es auch aus Sicht der DDR-Bürger sinnvoll, die bewährten Institutionen des Grundgesetzes zu übernehmen. Aber es war eine freie Entscheidung und das Grundgesetz ist nicht übergestülpt worden. Man hat diese Entscheidung nach intensiven politischen Diskussionen ganz bewusst getroffen. Auch juristisch ein Punkt. Jetzt habe ich noch drei Wortmeldungen. Erst Herr Prof. Dr. Pohl, dann wieder Herr Prof. Dr. Schröder und dann kommen wir in die nächste Runde.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Vielen Dank. Nachdem jetzt auch Nichtjuristen hier sprechen dürfen, möchte ich mich dem anschließen. Ich möchte noch etwas zum Parteienverbot von einer ganz anderen Seite sagen. Sie müssen nämlich noch ein anderes Problem sehen: Ich lebe in Ostdeutschland, seit 20 Jahren. Ich kann Ihnen sagen, nicht alle Ostdeutsche sind begeistert von dieser Wiedervereinigung. Oder mit anderen Worten: sie finden es zwar schön, dass wir ein wiedervereintes Deutschland haben, aber sie haben emotionale Probleme. Sie fühlen sich als Bürger zweiter Klasse und ähnliches mehr. D.h. Sie müssen davon ausgehen, dass der bisher unterdrückte Teil nicht einheitlich voller Begeisterung mitmacht und Sie brauchen dann auch eine Möglichkeit für die Menschen dort, sich zu artikulieren. Ihren Protest, wenn Sie so wollen oder ihre innere Distanz, ich versuche vorsichtig zu formulieren, zum Ausdruck zu bringen. Und das führt dann dazu, um es ganz konkret zu sagen, dass diese PDS, Nachfolgepartei der SED, beachtlich hohe Stimmenanteile hat und zwar deutlich höhere Stimmenanteile als in Westdeutschland. Wenn Sie

das mal versuchen zu verstehen, dann sind dort diese verbliebenen Reserven gegenüber dem Prozess oder der Stellung von Ostdeutschen heute im vereinten Deutschland zum Ausdruck gekommen. Wenn Sie solche Parteien verbieten, dann müssen Sie eine andere Form der Kanalisierung dieses Problems schaffen und das wird sehr schwer. Ich kann Ihnen nur sagen, der Weg über die Parteien, die dort vertraut sind, ist der beste Weg, diese Art von Konflikten zu beseitigen. Ich bin nicht dafür, eine Partei nur aus opportunistischen Gründen am Leben zu erhalten, wenn sie verfassungswidrig ist. Das ist sicherlich nicht der Punkt. Ich will nur darauf hinweisen, dass es Emotionen gibt, die Sie berücksichtigen müssen, denn Ost und West sind zwar jetzt in einem Land, aber sie sind doch nicht gleich emotional auf derselben Höhe. Das ist wieder das Gute! Herr Dr. Hammann weist darauf hin, dass diese Stimmenanteile der PDS - jedenfalls bis zur letzten Wahl - im Sinken begriffen sind, aber immer noch sehr hoch sind. Jetzt muss ich sagen, wir sind zwanzig Jahre nach der Einigung. Die Hoffnung ist ja, dass dieser Prozess des inneren Widerstandes sich allmählich auflöst, auch weil natürlich eine neue Generation nachwächst und sich dieses Problem auf die Dauer auflöst. Insofern hat Herr Dr. Hammann natürlich völlig Recht: Der Prozess ist im Gange, aber eben im Gange, d.h. er ist noch nicht abgeschlossen. Für diese Zeit brauchen wir diese Strukturen, das gebe ich zu bedenken, wenn man über Parteienverbote spricht. Man reißt da eine große gesellschaftliche Lücke auf und hat dann vielleicht eine Partei verboten, aber ein neues Problem an einer ganz anderen Stelle.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Bevor ich Herrn Prof. Dr. Schröder noch mal das Wort erteile, auch noch eine Anmerkung von mir zu diesem Punkt. Man muss sich dabei auch die Entwicklung, die die SED/PDS hin zur Linken genommen hat, in diesen zwanzig Jahren, vor Augen führen. Der Wechsel von der SED zur PDS bedeutete auch den Versuch einer inhaltlichen Umorientierung. In den ersten Jahren war es sicherlich so, dass

die PDS dann auch eine ostdeutsche Regionalpartei war, in dem Sinne, dass sie nämlich für die Menschen das war, was Herr Prof. Dr. Pohl gesagt hat: Sie gab ihnen einen gewisse Identifikation. Dann hat aber auch die PDS gemerkt, dass sie in ihrer Parteistrategie das auf Dauer nicht halten können wird, weil sie nämlich abnehmende [Wahl]ergebnisse hatte. Daraufhin ist plötzlich ein Strategiewechsel erfolgt und dann ein Versuch eine gesamtdeutsche linke Partei aufzubauen. Das war dann auch noch parallel mit einem anderem Prozess, innerhalb der SPD, aber das kam dann dazu. Dann gab es die Partei der Linken, die jetzt aber das Problem hat, dass sie dadurch eigentlich nicht mehr ihre regionale Spezifik für den Osten darstellen kann, weil sie ja einen gesamtdeutschen Anspruch hat, aber gleichwohl dort [im Osten] noch ihre Wählerreservoirs hat. Ein sehr komplexer Parteienverlauf also, aber das zeigt glaube ich, dass es bei allen Fragestellungen hinsichtlich der SED/PDS, auch angesichts der Vorgeschichte und der aktuellen Entwicklungen eine weise Entscheidung war, zu versuchen einen demokratischen Weg zu gehen.

[Prof. Dr. Karl-Heinz Paqué ehem. Staatsminister der Finanzen in Sachsen-Anhalt]

Ich würde nur eine ganz kurze Fußnote zu dieser politischen Einschätzung geben. Wir dürfen Eines nicht vergessen, nämlich dass viele von uns, ich gehöre selbst dazu, in der Frühphase der 90er Jahre glaubten, dass die PDS tatsächlich nur ein relatives kurzes Phänomen sein würde, weil es eine Generation von unmittelbaren Verlierern gibt, die dann aber schnell an Artikulationsfähigkeit verliert. Tatsächlich nimmt sie strukturell ab, aber doch mit bemerkenswert langsamer Geschwindigkeit, das hat Herr Prof. Dr. Pohl ja schon angedeutet. Es ist so, dass die Partei 20, fast 25 Jahre nach dem Mauerfall immer noch in Ostdeutschland in einem Potentialbereich von 20% liegt. Und das ist ein ganz wichtiges, politisches, soziologisches Phänomen. Das ist möglicherweise ein Thema, das wäre eine Anregung, das in einer späteren Sitzung der Behandlung

bedarf, denn nicht alles, was wir bei Vereinigungsfragen diskutieren, sind rein rechtliche oder rein wirtschaftliche Fragen, sondern es gibt auch so etwas wie eine politische und soziale Psychologie, die von ungeheurer Bedeutung ist und wo wir in Deutschland inzwischen einiges gelernt hab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Dann Herr Prof. Dr. Schröder...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Ich würde gerne zwei Punkte zur Charakterisierung der PDS, der Linken nennen. Jetzt ist es eine gesamtdeutsche Partei, mit folgendem interessanten Unterschied: Der ostdeutsche Flügel, der nach Mitgliedern der weitaus größere ist, ist an Realpolitik interessiert in den Kommunen. Und der größte Wunsch ist, dass sie mal an der Bundesregierung teilnehmen dürfen; an Landesregierungen haben sie schon teilnehmen können. Der westliche Flügel lehnt das System [der Bundesrepublik] grundsätzlich ab und ist gegen eine Regierungsbeteiligung. Nur damit Sie mal sehen, wie verrückt die Welt ist. Der westdeutsche Teil! Warum? Das sind die ehemals kommunistischen Splittersektierer: Trotzlisten, Maoisten und sonstwas. Das ist für die ostdeutschen PDS-Mitglieder ein Gräuelfür die nämlich Chaoten. Die Ostdeutschen sind vom Typ her konservativ, nämlich staatstragend. Die PDS ist die Partei mit dem höchsten Akademikeranteil in Deutschland. Warum? Weil die Staatselite drin steckt. Deswegen konnte die, als es schwierig wurde, aus ihrem riesigen Personalreservoir Rentner- und Mieterberatungen machen und sind so sehr beliebt geworden. Die anderen Parteien hatten gar keine Mitglieder dafür zur Verfügung und keine Zeit. Um das Jahr 2000 herum hatte die PDS im Osten mehr Mitglieder als alle anderen Parteien zusammen! Das müssen Sie sich mal klarmachen. Deswegen war das Verhältnis zwischen Wählerstimmen und Mitgliedern [bei der PDS] am ungünstigsten. Hätten

sich die Wählerstimmen nach den Mitgliedern gerichtet, hätte die PDS ja immer die absolute Mehrheit erreicht. Hat sie aber nicht. Sie sind eben über 20% nur selten, mal in Berlin, hinausgekommen. Ich bitte Sie, dass Sie sich das mal genauer anschauen. Die Partei hat einen Wandel unternommen - ich bin nun wirklich kein Freund von ihr - aber die Idee, die immer wieder von Westdeutschen aufgebracht wird, man habe doch 1945 die NSDAP verboten, dann müsste man doch jetzt [die SED] auch verbieten, die scheitert schon daran, dass man nicht sagen kann, zu welchem Zeitpunkt man es hätte machen können; es gab den Zeitpunkt nie. (Frage) Das ist richtig, ihr Hauptproblem ist die Sterberate, was aber auch für die Gesamtbevölkerung im Osten gilt. Sie können den Verlust durch Tod nicht durch neue Mitglieder ersetzen. Ich glaube so 2.000 bis 3.000 Mitglieder pro Jahr verlieren die pro Jahr einfach durch Tod, ohne Austritte.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Jetzt kommen wir wieder zu einer Fragerunde. Hier vorne Herr Ahn und dann hinten herum.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Zuzuhören wie unsere deutschen Gäste über deutsche Parteien diskutieren, war sehr interessant. Aber was uns interessiert, sind die Themen, die Herr Song und auch Prof. Chung(?) vorgestellt haben bezüglich der Arbeitspartei Nordkoreas. Wir haben über die Möglichkeit gesprochen, die Arbeitspartei von Nordkorea zu verbieten. Wir sehen Nordkorea nicht als Vertragspartner. Denn wenn es zu einer Notsituation kommen sollte und in diesem Zusammenhang Korea wiedervereinigt wird, wie sollen wir uns dann verhalten? Sollten wir dann immer noch die Arbeitspartei als legitim anerkennen?

Was ich auch noch erwähnen möchte ist der Artikel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emnach ist Nordkorea südkoreanisches Territorium und das nordkoreanische Regime ist somit eine illegale Institution. Falls das nordkoreanische Regime zerfällt,

wie sollten wir angesichts dieser Situation an die Sache herangehen? Verstehen Sie es bitte nicht falsch - wir gehen nicht grundsätzlich davon aus, dass wir die Arbeitspartei in jedem Fall verbieten werden. Ich möchte die hitzige Stimmung hier etwas beruhigen. Vielleicht möchten Sie zunächst das Wort ergreifen?

[LEE Eunyoung Prof. an der HUFV Law School]

Prof. Schnappauf, ich habe eine Frage an Sie. Die DDR hatte ja Vermögen nicht nur im Inland, sondern auch im Ausland, wie aufgedeckt wurde. Hatten Sie eine Richtlinie, was Sie mit dem enteigneten Vermögen machen sollen? Wurde das Vermögen wieder in die DDR investiert?

[Klaus-Dieter Schnappauff ehm. Leiter der Arbeitsgruppe "Deutsche Einheit" (Einigungsvertra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Wenn ich direkt antworten darf? Vielen Dank für die Frage. Ich habe vorhin dargelegt, dass es Kriterien dafür gegeben hat. Im Einigungsvertrag wurde festgelegt,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erseits die betroffenen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ihr Vermögen zurückbekommen konnten. Voraussetzung war ein Erwerb nach materiell-rechtstaatlichen Grundsätzen im Sinne des Grundgesetzes und andererseits, wenn diese Voraussetzung nicht vorlag, dass dieses Vermögen insbesondere für den wirtschaftlichen Wieder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gesetzt werden sollte.

[KIM Younghoon Research Director, Dept. of Global Cooperation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Vielen Dank für die Gelegenheit, mich zu Wort melden zu dürfen. Sie hatten den Fall der Auslandsuntersuchung bei Novum erwähnt. Vielleicht können Sie diesen Fall ein kleines wenig näher erklären? Mich interessiert, wie das vonstatten ging und wie ist die UKPV überhaupt auf den Novum-Fall gekomm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Wenn ich dazu antworten darf? Der Zufall will es, dass ich Novum von Anfang an begleitet habe, von der Entdeckung bis hin zu den ersten Prozessen in der Schweiz. Bei der Firma Novum und Transcarbon handelte es sich um zwei GmbHs, die Ende der 40er, Anfang der 50er Jahre in Ostberlin gegründet worden sind als GmbH. Diese GmbHs hatten Gesellschafter und Geschäftsführer aus Österreich, die eine Treuhandklärung zugunsten der SED unterschrieben haben. Diese Firma Novum und Transcarbon traten im Außenhandel der DDR auf und zwar dergestalt, dass wenn eine westdeutsche Firma an die DDR Schuhe verkaufen wollte, musste sich die westdeutsche Firma der Firma Novum bedienen, die dafür eine Provision kassierte, dass sie die Verbindung zu einem Staatsunternehmen der DDR herstellt. Diese Provision, die wurde dann nicht in die DDR gezahlt, sondern Novum hatte Konten in der Schweiz. Und dort wurden die Gelder dann verwahrt. Und mit diesen Geldern wurde dann im westlichen Wirtschaftssystem gearbeitet und ganz besonders aufgrund der historischen Verknüpfung zwischen den Gesellschaftern, österreichischen Kommunisten, die für die SED arbeiteten, war Novum und Transcarbon auch im Ost-West-Handel zwischen Österreich und der DDR aktiv. Insbesondere - für die intimen Kenner des Außenhandels - hat der österreichische Staatskonzern FirstAlpin auch sehr viel an Maschinen und an technischen Anlagen in die DDR geliefert und musste dafür immer Provisionen an die Transcarbon und an die Novum zahlen. Dieses Geld blieb dann aber wie gesagt in der Schweiz und wurde dort gut verwaltet. Wir sind auf die Beziehungen gestoßen, am Anfang ganz unschuldig, wie immer, indem wir eine Treuhandklärung bei einem Berliner Notar gefunden haben, die die Geschäftsführer und Gesellschafter dieser beiden GmbHs abgegeben haben. Dann haben wir nach den Regularien, die Herr Schnappauf gerade geschildert hat, jetzt muss ich noch einen Einschub machen: wenn ich wir sage, gehe ich wieder 15 Jahre, 20 Jahre zurück, ich habe nämlich im Sekretariat der UK gearbeitet ganz zu Anfang, deshalb habe ich das noch in Erinnerung -, dann ist also dieser Verwaltungsakt erlassen worden, dass die

Novum unter treuhänderische Verwaltung gestellt worden ist. Das ist dann vor dem Berliner Verwaltungsgericht angefochten worden und ist dann ganz normal gegangen. Erst im Zuge dieser Ermittlungen haben wir festgestellt, als plötzlich österreichische Personen auftauchten, dass da noch irgendwo mehr Geld sein müsste, weil diese Personen ein ungeheures Interesse an einer GmbH entwickelt haben, die in Ostberlin nach der Vereinigung eigentlich nur 50.000 D-Mark wert war an eigentlichem Stammkapital. Das eigentliche Betriebsvermögen war gar nicht vorhanden, da war nichts. Gleichwohl war ein riesiges Interesse an der Firma da, was uns etwas stutzig gemacht hat. Daraufhin sind Erkundigungen eingeholt worden, die Firmenbücher genau analysiert worden und dann sind wir auf die Schweizer Konten gestoßen. Daraufhin haben wir im Wege der Rechtshilfe versucht auf die Schweizer Konten zuzugreifen. Mithilfe der schweizerischen Staatsanwaltschaft haben wir dann in Zürich Einblick in diese Konten genommen. Und jetzt beginnt der eigentliche Kriminalfall: Dabei haben wir festgestellt, dass die Geschäftsführerin und Gesellschafterin der Firma Novum und Transcarbon mithilfe der Bankmanager der Bank Austria zum Zeitpunkt als die Unabhängige Kommission in Berlin die treuhänderische Verwaltung angeordnet hat, das Geld auf sehr schnellem Weg, auf auch für eine Schweizer Bank extrem unbürokratischem Weg, transferiert hat: Nach Österreich, nach Luxemburg, auch nach Israel. Das haben wir mit Hilfe der Schweizer Behörden rückgängig gemacht. Teilweise war das Geld aber schon weg. Und dann sind wir auf die Bank Austria zugegangen und haben von der Bank Austria Schadensersatz verlangt, weil sie die Firma Novum als Geschäftspartner hatte und nicht die Geschäftsführerin und damit Firmenvermögen, das unter treuhänderischer Verwaltung stand, veruntreut hat bzw. Beihilfe dazu geleistet hat. Sie müssen überlegen, wir haben ein besonderes [deutsches] parteienrechtliches Treuhandverhältnis einem schweizerischen Bundesgericht nahebringen müssen, um dort dem Gericht zu verdeutlichen, dass eine Schweizer Bank, denn die Bank Austria war in einer Zweigstelle in Zürich vertreten, rechtswidrig gehandelt hat. Das ist dann letztendlich durch die vielen

Instanzen gegangen und dann haben wir dieses Geld sichergestellt. Das ist in sehr kurzen, knappen Sätzen diese durchaus spannende Geschichte der Firma Novum, die aus treuhänderischen Erklärungen von Ende der 40er Jahre herrührte. Dieser verwaltungsrechtliche Prozess, den ich dann vor dem Verwaltungsgericht in Berlin selbst führen durfte, war im Grunde genommen auch eine Geschichtsstunde, weil dort nämlich die österreichischen Kommunisten aus den 40er Jahren, die die ersten Gesellschafter waren, treuhänderisch gebunden auftraten und im Sinne einer eisernen Parteidisziplin behauptet haben, dass diese Treuhanderklärungen, die zugunsten der SED abgegeben worden waren, nur eine Täuschung dargestellt hätten, denn sie wären eigentlich eine Treuhanderklärung zugunsten der österreichischen KP gewesen. Damit sei das Geld, das die SED vereinnahmt hatte und was wir dann beschlagnahmt haben, eigentlich der österreichischen KP zugehörig, denn es wäre eigentlich nur ein Akt der internationalen Solidarität der SED mit den österreichischen Genossen in den 40er und 50er Jahren gewesen, um die dort am Leben zu erhalten. Dazu muss man wissen, dass die österreichische KP in Österreich selber eine der reichsten Parteien war, weil sie auch in den Nachkriegsjahren einen erheblichen Geschäfts- und Industriekomplex ihr Eigen nannte, der weit über das hinausging, was eigentlich einer Partei zustand, auch historisch bedingt. Und eigentlich hätte die österreichische KP von ihrem Finanzhintergrund die SED unterstützen können, aber nein, im Sinne der Überlegungen wurde behauptet, es sei die internationale Solidarität der Genossen gewesen, also sei es eigentlich österreichisches Geld. Diese gesamte Story dann wie gesagt einem Schweizer Gericht zu vermitteln, nachdem wir das einem deutschen Verwaltungsgericht in zwei Instanzen - in erster Instanz hatten wir verloren und erst in der zweiten vor dem Oberverwaltungsgericht gewonnen, worauf wir dann noch ein Revisionsurteil vor dem Bundesverwaltungsgericht erstreiten mussten - also solange die Schweizer Justiz zum Mitmachen zu bewegen, war schon ein etwas schwieriger juristischer Drahtseilakt und daneben liefen natürlich noch die Prozesse gegen die Bank in Österreich und man muss dabei

wissen, die Bank Austria ist durchaus ein österreichisches Staatsunternehmen und pikanterweise war die Bank Austria eine gewisse Zeit lang auch die Tochter einer deutschen Landesbank, weil sie zwischenzeitlich nämlich nach Deutschland verkauft worden war. Das alles in diesem Konzert dieser Prozesse, also das würde reichen für drei Bücher, um allein die juristischen Konstruktionen aufzumalen. Sie sehen wie schwierig das Ganze juristisch aufzuarbeiten war. Es gab auch eine gewisse Form von Krimispannung bei der ganzen Sache, denn ich sage ganz offen aus dem eigenen Erleben heraus; in einer Schweizer Bank mit einem Schweizer Staatsanwaltschaft Kontenpapiere einzusehen, ist schon ein besonderes Erlebnis.

[CHUN Haesung Ministerialdirektor fuer Vereinigungspolitik,
Wiedervereinigungsministerium]

Bei der Vorbereitung solcher Veranstaltungen denkt man immer viel über das Nachmittagsprogramm nach, aber wir hatten sehr viel Leidenschaft. Wir sind nicht eingeschlafen während des Nachmittagsprogramms, das ist sehr erfreulich für den Veranstalter. Was die Themen angeht, die am Nachmittag besprochen wurden, habe ich mir folgende Gedanken gemacht. Im Falle einer Wiedervereinigung hätten wir vieles zu erledigen: Nicht nur politisch, sondern auch wirtschaftliche Aspekte sind dabei wichtig. In Deutschland gab es in allen Phasen die Unabhängige Kommission. Wenn man sich den Weg dahin anschaut, sieht man, dass es sehr viel Bemühen der Akteure gab. Für uns, die wir uns auf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vorbereiten, ist das bewundernswert, dass es solche sehr detaillierte Strukturen gegeben hat in der Kommission. Und ich freue mich, dass Sie sich uns gegenüber geöffnet und uns diese Informationen dargelegt haben haben.

Ich habe mir folgendes gedacht. Im Internet gibt es viele Schlagzeilen, dass immer wieder illegale Konten aufgedeckt werden in der Karibik. Die Besitzer der Konten seien die Familienmitglieder der Besitzer von Großkonzernen, Politi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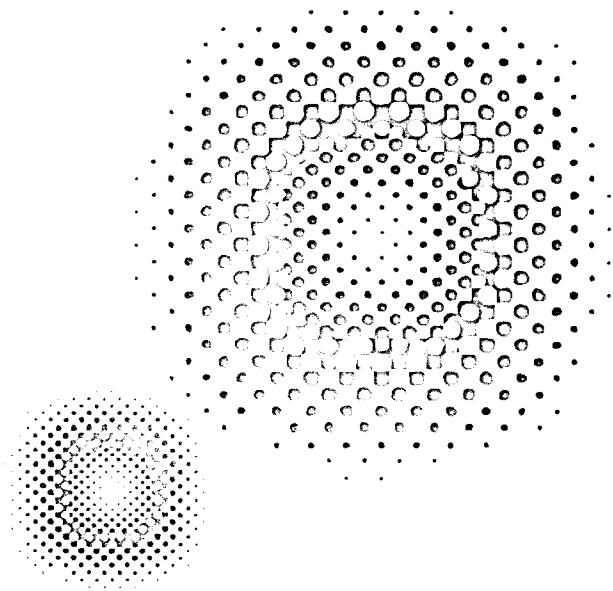
Familienmitglieder ehemaliger Präsidenten. Auch in Korea gibt es bestimmte Institutionen, die so etwas prüfen, wenn eine Firma Insolvenz anmeldet und wir verfolgen solche Fälle dann bis zum Ende. Vielleicht könnten wir auch in diesen Fällen die deutschen Erfahrungen als gutes Beispiel nehmen.

Bei den Vereinigungsszenarien in Korea gibt es bekanntlich eine große Vielfalt, aber unser Idealfall wäre die schrittweise Wiedervereinigung im Konsens. Trotzdem stellen sich viele eine sogenannte "contingency unification", also eine abrupte Wiedervereinigung vor. Sie haben uns die einjährige Phase vor der Wiedervereinigung in der DDR beschrieben. Das ist wirklich eine sehr wichtige Beschreibung gewesen für eine mögliche Situation, die auch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eintreten könnte. Bei der Vereinigung Koreas könnte es tatsächlich dazu kommen, dass die Arbeitspartei Nordkoreas einfach nicht mehr existiert. Dazu wurden ja von verschiedenen Teilnehmern Fragen gestellt. Deshalb sollten wir uns viele verschiedene Möglichkeiten überlegen und wir sollten uns auf diese verschiedenen Möglichkeiten dann gut vorbereiten. Nochmals vielen Dank für die rege Diskussion. Vielen Dank.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für das Interesse an unseren Überlegungen und wie der Kollege Chun schon dargelegt hat, ist es glaube ich wichtig, zu sehen, dass es immer nur beispielhaft ist, wie wir sowohl in der DDR in der Zeit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mit diesem Prozess umgegangen sind, wie aber auch die Bundesrepublik diese Fragestellungen bewältigt hat und insofern verstehen wir uns auch immer nur als Anregungsgeber und hoffen dass Sie daraus dann die entsprechenden Früchte ziehen können, um sich auf die vielfältigen Möglichkeiten vorzubereiten und insofern war es heute sicherlich ein ganz erfrischender Beitrag, mir jedenfalls hat es sehr viel Spaß gemacht, auch die Diskussion in dieser Form zu führen und zu erleben, wie es zu einem solch intensiven Austausch kommt. Das stimmt mich für morgen sehr zuversichtlich, wo wir dann ähnlich wichti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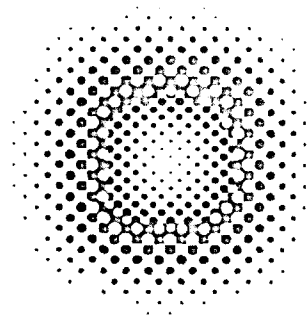
Themen behandeln werden, die den Komplex des Einigungsprozesses und der Frage der Eigentumsproblematik im Bereich anderer Fragestellungen berühren. Insofern danke auch von meiner Seite für Ihre regen Fragestellungen und einen schönen Abend und ich freue mich auf morgen. Vielen D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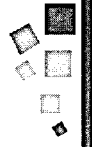
3

Der Umgang mit Ansprüchen Von Alteigentümern

28. Juni 2013



umentation der dritten Sitzung des Deutschen
n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8. Juni 2013

[CHUN Haesung Ministerialdirektor fuer Vereinigungspolitik,
Wiedervereinigungsministerium]

Sind Sie alle gut ausgeruht? Wir haben schon den zweiten Tag und beginnen bereits mit dem dritten Teil. Herr Staatssekretär Hong Yang-ho hatte bereits betont wie anstrengend unser Tagespensum ist. Wir werden heute wahrscheinlich einen genauso anstrengenden Tag haben und ich hoffe wir werden auch heute eine genauso rege Diskussion haben wie gestern. Ich möchte eingangs eine Mitteilung machen. Unser dritter Teil ist eigentlich das Thema Rückgabe von Alteigentum, aber mir wurde vorgeschlagen, das Thema zu wechseln und so haben wir uns entschlossen, erst einmal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zu besprechen und anschließend darüber zu diskutieren. Das Thema Rückgabe von Alteigentum werden wir dann auf den Nachmittag verlegen. Bevor wir dann mit dem Vortrag beginnen, möchte ich einige Gäste vorstellen, die erst seit heute bei uns sind. Von der deutschen und der koreanischen Seite jeweils eine Person. Herr Johannes Ludewig ist bei uns, können Sie sich kurzvorstellen?

[Johannes Ludewig Bundeskanzleramt, 1990 Koordinator Neue Länder]

Ich bitte um Nachsicht, dass ich erst heute hier mit dabei sein kann. Ich war ja auch vor zwei Jahren und im vorigen Jahr schon mit dabei. Meine Aufgabe im Rahmen der Wiedervereinigung war, dass ich Abteilungsleiter im Bundeskanzleramt war, mit Zuständigkeit für Wirtschaft und Finanzen und auch mit der Zuständigkeit der Restrukturier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Ich war

bis Ende 1994 im Bundeskanzleramt für diese ganzen Dinge, die Ostdeutschland betrafen, zuständig, bin dann als Staatssekretär ins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gegangen, habe aber die Zuständigkeit für den, wie wir es nannten Aufbau Ost, also die wirtschaftliche Restrukturierung Ostdeutschlands, mitgenommen und habe das bis 1997 gemacht, also insgesamt sieben Jahre. Die Themen, die wir ja heute auch noch besprechen, haben eine Menge damit zu tun und ich freue mich auf die Diskussio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Ludewig. Von der koreanischen Seite haben wir dann noch Yu Ho-yeol von der Korea-Universität, er ist Präsident der Gesellschaft für politische Wissenschaft.

[YOO Hoyeol Prof. für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

Vielen Dank für die Vorstellung. Ich bitte um Verständnis, dass ich erst heute teilnehmen kann. Ich komme gerade zurück von der Insel Jeju, da haben sich Wissenschaftler aus den drei Ländern China, Korea und Japan getroffen. Vielleicht kann ich Ihnen im Verlauf ja kurz mitteilen, was ich von dem Treffen in Jeju mitgenommen habe.

[Moderator – Herr CHUN]

Nochmals herzlich willkommen den beiden Personen, die heute gekommen sind. Und ich hoffe, dass wir auch eine genauso gute Diskussionsrunde haben werden [wie gestern]. Nun beginnen wir mit dem dritten Teil. Ich gebe das Mikrofon an Prof. Song Tae-su.

[SONG Taesoo Professor,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of 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Forschungsstand und Bewertungen in Südkorea bezüglich der Privatisierung deutschen Staatsvermögens sowie Fragen an die deutsche Seite"

Song Tae-su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I. Zusammenfassung und Einführung

Bezüglich der deutschen Einheit und der Privatisierungspolitik durch die Treuhand sind auch im geteilten Land Südkorea nicht wenige Forschungen durchgeführt worden. Allerdings wird bei den Forschungen noch immer ein starker Fokus auf eine allumfassende Behandlung der Themen gelegt. Die wesentlichen Forschungen betreffend der Privatisierung und der Umwandlung industrieller Strukturen lassen sich wie folgt grob unterteilen:

- Bewertung der deutschen Einheit aus einer makroökonomischen Sichtweise
 - Bewertung des Umwandlungsprozesses der Industrie- und Unternehmensstrukturen nach der Einheit sowie der Privatisierungspolitik
 - Forschungen bezüglich der Kosten der Einheit und den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Folgeerscheinungen.
- Die Forschungen, welche den Schwerpunkt speziell auf die Privatisierung des nordkoreanischen Staatsvermögens legen, lassen sich wie folgt unterteilen:
- Forschungen bezüglich Pläne zum Umgang mit dem nordkoreanischen Bodenbesitzrecht (hier sind am meisten Forschungen vorhanden)
 - Forschungen über regionale und industrieller Besonderheiten Nordkoreas für eine Beurteilung der Einführungsmöglichkeit marktwirtschaftlicher Faktoren oder

- inwiefern Industrie und Unternehmen konkret über Konkurrenzfähigkeit verfügen.
- Forschungen über die aktuelle Lage und den Charakter der Industriestrukturen hinsichtlich Alternativen, um Kosten der Einheit und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Folgeerscheinungen zu verringern.
 - Bei den Forschungen bezüglich der Privatisierung besitzen die Arbeiten zu einzelnen Themen einen starken Vorschlagscharakter, es gibt kaum Arbeiten, die sich mit der Umstrukturierung der jeweiligen Industrien beschäftigen. Abgesehen, dass es gegenwärtig viele Forschungen zu speziellen Bereichen mit Bezug auf die Privatisierung landwirtschaftlicher Betriebe und Ackerland gibt, sind Arbeiten zu Unterthemen/-bereichen kaum vorhanden.

II. Plan zum Umgang mit Eigentumsrechten

1. Prinzipien der Privatisierung

Bei der Privatisierungspolitik, die im Vereinigungsprozess Deutschlands betrieben wurde, galt das Prinzip der konsequenten Rückgabe und Erstattung des durch die Nazis und der Regierung Ostdeutschlands eingezogenen Vermögens. Auf Basis einer Grundeinstellung, eine rechtstaatliche Gerechtigkeit durch die Erneuerung rechtstaatlicher Prinzipien herzustellen galt zu Beginn das oberste Prinzip der Rückgabe an die alten Besitzer. Jedoch führte dies zu zahlreichen Streitigkeiten bezüglich der Eigentumsrechte, sodass die Ergreifung zweier Maßnahmen, der Beseitigung von Investitionshemmungen und der Investitionsförderung, unumgänglich war.

Auch der Marktpreis war in einem Zustand, in dem offizieller Handel kaum stattfand, nicht etabliert, weshalb die Errichtung von Erstattungskriterien nicht einfach gewesen sein dürfte. Z.B. wurde im Privatisierungsprozess von Acker- und Forstland zum Prinzip erhoben, für den Handelspreis das Dreifache des Bodeneinheitspreises von 1935 zu beanschlagen, also für Ackerland, das 1935 durchschnittlich 1000

Mark/ha kostete, einen Handelspreis von 3000 Mark einzurichten. Von Interesse wäre zu erfahren, durch was für Verfahren oder Methoden und mit was für einer Norm der Erstattungspreis festgelegt wurde, im Falle, dass bezüglich der Erstattungsnorm kein Einverständnis erzielt wurde, dürfte dies mit großer Wahrscheinlichkeit zu anderen Streitpunkten geführt haben, welche waren dies? Hinter diesen Fragen steht nämlich die Diskussion einer Politik, im Falle von Korea anstatt der Rückgabe oder der Erstattung an alte Besitzer eine Neuverstaatlichung zu betreiben. Unter den verschiedenen Vorgehensweisen mit dem Umgang dieses Themas ist dies eine, die aber über einen gewissen Grad an Überzeugungskraft verfügt. In dem Maße, wie sehr es in Korea nach der Befreiung von 36 Jahren japanischer Kolonialzeit nicht nur in Nord-, sondern auch in Südkorea durch die Bodenreform zu einem Wechsel der Eigentumsrechte im großen Stil kam, so wenig ist das allgemeine öffentliche Bewusstsein bezüglich der Legitimität der Eigentumsrechte ausgeprägt.

2. Forschungen über gesetzliche Handhabungspläne

- Bezüglich rechtlicher Maßnahmen betreffend Privatisierungen existieren speziell im Legislaturbüro Südkoreas viele Materialsammlungen und Übersetzungen. Von Interesse wären weniger konkrete Inhalte von Gesetzgebungen als vielmehr, was für Schwierigkeiten sich im Prozess der Gesetzgebung in Deutschland ergeben haben.

3. Allgemeine Beurteilung des Privatisierungsprozesses

Der Privatisierungsprozess der Treuhand vollzog sich in einer kurzen Zeit von gerade einmal viereinhalb Jahren, er lässt sich in vier Stufen unterteilen:

- Vorbereitungsphase und Errichtung der Treuhand durch die Ur-Treuhandanstalt (März 1990 – September 1990)
- Zügig vorangetriebene Privatisierung (Oktober 1990 – Frühling 1991)
- Zeit der passiven Normalisierung der Administration (Mitte 1991 – Herbst 1992)
- Teilweise Normalisierung des Industriekerns (Herbst 1992 – Ende 1994)

Fragen zu den jeweiligen Stufen stellen sich wie folgt:

- Was war der Hintergrund dafür, dass die Verkaufsverhandlungen während der äußerst kurzen ersten Stufe derartig schnell abgeschlossen werden konnten? Ist es richtig, dass es sich bei den Unternehmen, mit denen zu jener Zeit zügig vorangetriebene Verkaufsverhandlungen durchgeführt wurden, um die Schlüsselindustrien handelte (Luftfahrt, Strom und Energie)? Es dürfte auch Richtlinien für Grenzen bei den Verkaufsvereinbarungen gegeben haben, was waren sie?
- Betreffend der zweiten Stufe dürfte die Durchführung nach den Richtlinien des „Gesetzes über die Spaltung der von der Treuhandanstalt verwalteten Unternehmen“ nicht einfach gewesen sein, was waren die Kriterien, was waren die Schwierigkeiten bei den tatsächlichen Verkäufen?
- In der vierten Stufe wurde die Errichtung von Holdings von den Regierungen der neuen Bundesländer genehmigt, damit Holdings der Treuhandanstalt errichtet werden konnten, um die Kernindustrien wiederzubeleben, was gibt es für erfolgreiche Beispiele und gab es keine Fälle, die fehlgeschlagen sind? Was waren die generellen Auswahlkriterien der Kernindustrien?

4. Forschungen über Privatisierungspläne der jeweiligen Vermögen (ausgenommen die Bodenprivatisierung des Ackerlandes)

1) Unternehmen

Bei der Privatisierung der Unternehmen wurde eine strenge, schrittweise durchgeführte Systematisierung durchlaufen, die sich in Vorbereitungszeit, Ausführungszeit und Beobachtungszeit untergliedert. Aber aufgrund von einigen sich gegenseitig widersprechenden Standartanwendungen und Zielsetzungen im Privatisierungsprozess zeigten sich Grenzen hinsichtlich der Wiederbelebung der

jeweiligen Unternehmenskategorien und der Wiedererstellung einer autogenen lokalen Wirtschaft.

Erstens, die Treuhandanstalt bevorzugte eine nicht öffentliche Form des Verkauf, sodass nach der Übernahme der Investitionsplan des Übernehmenden und Fragen der Anstellung berücksichtigt werden konnten. Jedoch wurden die Vereinbarungen nicht richtig eingehalten, und dies hatte nur zu einer Senkung des Verkaufspreises geführt. Demnach wurde Investition und Anstellung dem Übernehmenden überlassen, und das Unternehmen wurde zu einem möglichst hohen Preis verkauft. Zweitens, es gibt viele negative Stimmen bezüglich des Fokus, den die deutsche Treuhandanstalt auf eine schnell durchgeführte Privatisierung gelegt hat, und den Nachlässigkeiten, die bei der Umstruktuiierung der Unternehmen und der Politik der Managementverbesserung gemacht wurden. Das bedeutet, dass man im Prozess der Abwicklung von Staatsunternehmen, bei denen eine prompte Privatisierung zwar nicht möglich war, die aber über einen Wiederbelebungs potenzial verfügten, jedoch zu der Ansicht kam, dass „mittels einer Konzentration auf die Ausweitung der Konkurrenzfähigkeit auf dem Markt durch eine aktive Managementnormalisierung die gesellschaftlichen und ökonomischen Nebenwirkungen, die sich aus dem Prozess der Systemumwandlung ergeben, minimiert werden müssen.“ Auch gibt es die Meinung, dass es für eine Wiederbelebung der eigenständigen Überlebensfähigkeit der lokalen Wirtschaft die Durchführung einer aktiven Mangementverbesserungspolitik auf Grundlage eines lang- und mittelfristigen Planes bezüglich der lokalen Basisindustrie bedurft hätte.

Drittens, es hätte auch die Errichtung einer konkurrenzfähigen Marktordnung durch den Nichtverkauf bei der Privatisierung der Großunternehmen Ostdeutschlands an gleiche Industriezweige des Westen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Viertens, bestand nicht die Notwendigkeit, im Falle, dass man sich für die deutsche Privatisierungsmethode entscheidet und großen Wert auf die Effektivität des Managements gelegt wird, die Aktienanteile für Angestellte als ergänzendes Mittel, mit denen die gesellschaftliche Akzeptanz vergrößert werden kann, auszuweiten,

oder hätte man nicht auch einen Plan zur Verteilung an Bürger in Form von Aktien, die vom Staat herausgegeben werden, berücksichtigt müssen?

Fünftens, Hans Werner Sinn hat einen alternativen Privatisierungsplan vorgelegt, in dem auf Grundlage der „Liquiditätsgrenzen“ nicht nur Bargeldinvestitionen, sondern verschiedene Investitionsformen akzeptiert werden, der Vermögenswert der Unternehmen maximiert und effektiv angewandt werden können. Es ist bekannt, dass es sich bei diesem Plan um einen äußerst realistischen gehandelt hat. Diese Ansichten bilden die Diskussionsgrundlage der kritischen Einstellung gegenüber der Unternehmensprivatisierung durch die Treuhandanstalt und ist die Bewertung der deutschen Unternehmensprivatisierungspolitik unter Berücksichtigung der Umständ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Es wäre interessant zu hören, was Sie über diese Ansichten denken.

2) Wohnhäuser

Die Ergebnisse von Privatisierungen von Wohnhäusern im öffentlichen oder Genossenschaftsbesitz, die den größten Anteil an privatisierten Wohnhäusern tragen, wiesen mit unter 5 % fünf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bis Ende 1995 ein äußerst geringes Niveau auf, und auch die Verkauftrate an Mieter liegt mit 30 % auf einem äußerst niedrigen Niveau. Anstelle der wirtschaftlich schwächeren Mieter haben finanzstarke Dritte (Immobilienfirmen usw.) die Wohnhausprivatisierung angeführt.

Es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 Kauftrate von Eigentumswohnungen durch Anwohner in Ostdeutschland deshalb so niedrig war, weil die Mieter beim Wohnhauskauf eine große finanzielle Bürde auf sich nehmen mussten. Zunächst benötigten sie viel Kapital zur Sanierung der rückständigen Wohneinrichtungen und die Finanzierung des für den Wohnungskauf notwendigen Zusatzkapitals brachte eine chronische Schuldenlast mit sich. Das durchschnittliche Nettoeinkommen von ostdeutschen Haushalten lag 1994 bei 75 % westdeutscher Haushalte, das Finanzvermögen lag bei 30 %. Aufgrund diesen schwachen Vermögensbesitzes fehlte es ihnen an wirtschaftlicher Potenz für den

Wohnungskauf. Diese problematischen Umstände wurden in genügendem Maße vorausgesehen. War es in einem Zustand, in dem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nicht einmal Zeit gelassen wurde, Vermögen zu formen, unbedingt notwendig, an dem politischen Ziel der CDU unter der Kohl-Regierung festzuhalten, Eigentumswohnungen auszuweiten? Oder hätte es nicht zu einem weitaus positiveren Ergebnis geführt, hinsichtlich einer gesellschaftlichen Einheit ost- und westdeutscher Bürger den Bewohnern Ostdeutschland genügend Zeit zu geben (z.B. 10 Jahre), bis sie sich eine Wohnung leisten können, und danach mit den Verkäufen zu beginnen? Oder hat es noch ein anderes politisches Ziel gegeben, weshalb die Verkäufe derartig zügig durchgeführt werden mussten?

Bezüglich der Wohnhausprivatisierung gibt es auch den Vorschlag ob man nicht hinsichtlich der in Südkorea stark verbreiteten Idee des Wohnungsbesitzes Verkäufe zu einem niedrigen Preis durchführen könnte, um einen Anreiz für Nordkoreaner zu schaffen, ihren Wohnort in Nordkorea nicht zu verlassen und eine Abwanderung der nordkoreanischen Bevölkerung von Nord nach Süd nach der Wiedervereinigung zu verhindern.

III. Vermögensverwaltungsinstitution und Betreibungsplan

1. Gesetzlicher Charakter und Verwaltungsaufsicht einer Institution zur exklusiven Vermögensverwaltung

Gesetzlich war die Treuhandanstalt direkt dem Bundesfinanzministerium unterstellt, doch ihre operative Tätigkeit wurde unter die gemeinschaftliche Verwaltung des Bundesfinanzministeriums/Bundeswirtschaftsministeriums und anderen Regierungsdienststellen mit Wirtschaftsbezug gestellt. Im Falle von besonders wichtigen Vorkommnissen machte der durch den Bundestag gegründete „Ausschuß Treuhandanstalt des Deutschen Bundestages“ seine starken Aufsichtsbefugnisse geltend, daneben waren noch der Bundesaufsichtsrat, die Aufsichtsinstitution der Treuhandanstalt selber und ein Verwaltungsausschuß mit der Aufsicht der

Geschäften der Treuhandanstalt betraut.

Abgesehen davon erhielt das vereinte Deutschland als Mitglied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G) im Falle, dass speziell bei Privatisierungsverkäufen von Großunternehmen konkurrenzhemmende Faktoren entdeckt wurden, die Aufsicht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auf einer hauptsächlich wettbewerbspolitischen Ebene.

- Die Aufsichtsinstitutionen waren mit der Aufsicht der Arbeitsprozesse und Buchhaltung betraut. Die Treuhandanstalt stand zuerst unter der Aufsicht der inneren Aufsicht und des Vollzugausschusses, während sie unter gemeinschaftlicher Verwaltungsaufsicht des Bundesfinanzministeriums/Bundeswirtschaftsministeriums und anderen Regierungsdienststellen mit Wirtschaftsbezug stand, war sogar der Ausschuß Treuhandanstalt des Deutschen Bundestages zur Aufsicht eingerichtet worden, wie unterteilt sich dieses Verwaltungsaufsichtssystem, was waren die Unregelmäßigkeiten, die tatsächlich aufgetreten sind und wenn man diese Unregelmäßigkeiten kategorisieren möchte, wie werden sie unterteilt, liegen konkrete Statistiken vor?

2. Betreibungsplan

Da sich die operative Tätigkeit der Treuhandanstalt auf einen kurzen Zeitraum konzentrierten, lag die Mitarbeiterzahl zu Beginn ihrer Errichtung bei 147, es ist jedoch bekannt, dass sie am Ende ihrer Tätigkeit durch den fortwährenden Anstieg der Arbeit rapide auf 4.200 Mitarbeiter angestiegen war.

- Nicht nur die Anzahl hochqualifizierter Arbeitskräfte wurde in einem kurzen Zeitraum ausgebaut, gleichzeitig musste nach Beendigung der Arbeit mit einer Vielzahl von Arbeitskräften irgendwie verfahren werden, von Interesse wären die Problempunkte, die sich im Verlauf dieses Prozesses ergeben haben. Auch wäre es schön zu erfahren, welcher Grad von Qualifikation die Arbeitskräfte und in was für einem Umfang dieses Personal benötigt wurden, und wie die Verwaltung dieser

Arbeitskräfte geleistet wurde.

- Die Arbeitsinhalten, mit denen diese Mitarbeiter betraut waren, unterlagen nicht nur einer hohen Sicherheitsstufe, es bestand auch die Möglichkeit von negativen Folgen, die aus einer zu großen Sympathie oder Vetternwirtschaft resultierten, diesbezüglich dürfte eine angemessene und ernsthafte Kontrolle äußerst wichtig gewesen sein. Von Interesse wäre es zu erfahren, wie das Problem der Einteilung der Arbeitskräfte je nach ihrem Grad der Qualifikation und ihrem Fachwissen behandelt wurde. In verwaltungstechnischer Hinsicht wäre es auch schön zu erfahren, was für Probleme im Prozess aufgetreten sind, in kurzer Zeit eine große Menge hochqualifizierten Personals anzuwerben und zu entlassen.
- Hinsichtlich der Privatisierungen ging die Treuhandanstalt in vier Folgeinstitutionen über, wie groß war die Menge an Arbeitskräften, die weiter beschäftigt wurden, wie wurde die Arbeitsteilung mit den Beamten geregelt?

III. Alternative Privatisierungspläne

Man kann sagen, dass es in Südkorea eine große Menge an Arbeiten gibt, die sich mit der Privatisierungspolitik im deutschen Einigungsprozess beschäftigen. Die südkoreanischen Wissenschaftler verstehen in ihrer Bewertung der deutschen Einheit die vielen strukturellen Restriktionen, die schwierigen Umstände, denen sich die alten ostdeutschen Unternehmen gegenüber sahen, das Problem der übergroßen Anzahl an Arbeitskräften in alten ostdeutschen Unternehmen und die niedrige Produktivität, was eine Folge der Währungseinheit und des Wechselkurses sowie des Niedergangs des Rates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COMECON) waren, und die Maßnahmen, die aufgrund politischen, gesellschaftlichen und makroökonomischen Restriktionen ergriffen werden mussten.

Die Treuhandanstalt hat innerhalb begrenzter Zeit unter Bedingungen, wo von verschiedenen Seiten durch den gesellschaftlichen Druck, hervorgerufen durch die

rapide Veränderung der Marktumstände und der umfassenden Arbeitslosigkeit, Vorderungen laut wurden, ihr Bestes gegeben und die Unternehmensprivatisierung hinsichtlich Geschwindigkeit und Ergebnis bis zu einem gewissen Grad erfolgreich durchgeführt. Besonders hinsichtlich des Umstandes, dass die erreicht wurde und dabei das Sozialversicherungssystem und die Wirtschaft standhalten konnten. Nichtsdestrotz führten die Unternehmensprivatisierungen unter Leitung der Treuhandanstalt zu gewaltigen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Kosten wie dem Anstieg der Arbeitslosenquote und der Verschlimmerung der Haushaltsdefizite. Zu Beginn der Privatisierungen traten Probleme auf, so fehlte es an Informationen über die Unternehmen, es gab Richtungswechsel der Politik, unzulängliche Organisationssysteme, fehlende Fachkräfte oder unzureichende Verwaltungssysteme, in dem Prozess der rapiden Privatisierungen traten gesellschaftliche Probleme auf wie einen Anstieg der Arbeitslosenquote sowie eine Verschlimmerung der Polarisierung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und der Monopolisierung, hinzu kam es zu wirtschaftlichen Problemen wie finanzielle Belastungen. Was für allgemeine Ratschläge könnten Sie Korea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Problempunkte geben, was gäbe es zu Beachten bzw. was für Prinzipien müssten gewählt werden, wenn wir uns für einen alternativen Privatisierungsplan entscheid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Prof. Song Tae-su. Er ist Professor des Employment Labor Training Institute de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Er hat seine Fragen im Manuskript dargestellt. Ganz ehrlich, ich war nicht über alle Einzelheiten, die er vorgetragen hat, informiert. Insofern war es eine gute Gelegenheit für mich diese Lücke zu schließen. Normalerweise, wenn die Regierung eine Politik durchführt und Maßnahmen ergreift, dann muss man wissen, was da in der Politik und Gesellschaft gerade für angemessen gehalten wird. Aber die Bewertung 10, 20 Jahre danach kann natürlich völlig anders ausfallen. Die

deutsche Seite, die jetzt schon 20 Jahre Erfahrung hat, kann gut diskutieren, warum man damals die Maßnahmen so ergriffen hat und wie die Bewertung heute ist. Nun wird Herr Paulin, ehemaliger Direktor der Treuhandanstalt, seinen Vortrag halten. Ich bitte Sie.

[Ken-Peter Pauline ehem. Direktor in the Treunhanstalt]

Dritte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 zu Wiedervereinigungsfragen

[Dr. Ken-Peter Paulin]

Privatisierung aus Sicht der Treuhandanstalt (THA)

Vortrag in Korea 28 Jun 2013

Gliederung

Ich möchte mich zu Beginn sehr für die Einladung zu diesem Vortrag bei allen Beteiligten bedanken. Es ist mir als operativ Beteiligter in der THA eine hohe Ehre, bei der Übertragung unserer Erfahrungen nach Korea mitwirken zu dürfen.

Der Vortrag beschreibt Prozess und Vorgehen bei der Privatisierung der Industrie der 5 Neuen Bundesländer durch die THA. Er gliedert sich in 3 Kapitel:

1. Vorbereitung
2. Privatisierung
3. Abschlussarbeiten.

1a. Erstellen eines Zeitplanes: das hat die THA nur bei ihrer Auflösung konsequent erfüllt.

- 1b. Organisation der THA: Erfassen der Unternehmen. Es lief gut nach der Reorganisation der THA mit klaren Zuständigkeiten in Zentrale mit Branchen und Niederlassungen mit den kleineren Unternehmen)
- 1c. erste Privatisierungen oder Abwicklungen: pragmatisches Vorgehen der noch wenig eingespielten THA
 - 2a. Regeln der Privatisierung
 - 2b. Strategien
 - 2c. Sanierung und Abwicklung

Die Lernkurve der THA war bei der Privatisierung sehr steil. Das gilt auch in Anbetracht der Tatsache, dass die Situation der Unternehmen durch mehrere handicaps geprägt war:

- veraltete Produktionsanlagen, veraltete Gebäude,
- wettbewerbsunfähige Produkte,
- ineffiziente Organisationsformen,
- hoher Personalaufwand,
- geringes Wissen um Marketing und Vertrieb,
- wenig ausgeprägtes Umweltbewußtsein,
- geringe Motivation der Mitarbeiter,
- wenig entwickelte Produktivität.

2a. Regeln der Privatisierung: Für die Privatisierung hat die THA im Laufe der Zeit Regeln erlassen. Im Zentrum stand das Unternehmenskonzept des Erwerbers. Dieses spielte immer eine Schlüsselrolle.

- 2b. Strategien: Direkte Strategien für die Privatisierung konnte die THA kaum entwickeln, dafür war die Zeit zu kurz, zudem entwickelte sich die Ausgangslage der Unternehmen stets weiter. Doch wurde bereits vor Beginn der Privatisierungsarbeit etliche strategische Festlegungen getroffen, wie z.B. die Währung und Rechtsfragen. Doch gab es in einzelnen Direktoraten durchaus Ansätze einer Privatisierungsstrategie.
- 2c. Sanierung und Abwicklung: Die Zahl der abgewickelten Betriebe war nicht so groß wie die Öffentlichkeit angenommen hatte. Ebenfalls war die THA viel intensiver mit der Sanierung ihrer Unternehmen beschäftigt als in der Öffentlichkeit angenommen wurde. Beides steht in wesentlichem Zusammenhang mit der wenig objektiven Berichterstattung durch die Presse.

3. Abschlussarbeiten

Das letzte Kapitel gliedert sich in 3 Abschnitte:

3a. Die Arbeit ist nicht (nie) abgeschlossen

Der Übergang auf die BvS ist dem THA-Image in der Öffentlichkeit geschuldet: sie sollte – wegen ihres schlechten Images - aus dem Gesichtsfeld der Öffentlichkeit verschwinden. Die BvS war noch viele Jahre aktiv. Viele Privatisierungen ereigneten sich in ihrer Zeit. Ebenfalls musste die BvS zahlreiche Verträge korrigieren.

3b. Auflösung der THA

Wie haben wir das im Direktorat gelöst....Die Mitarbeiter wurden nach einem vorher festgelegten Plan bereits ab Mitte 1993 abgebaut. Viele fanden neue Beschäftigungen in den (ehemaligen) Beteiligungsunternehmen.

3c. Ausblick

Mit einem Verlust von ca. 260 Mrd. DM erzielt die THA ein Ergebnis, das weit von den Vorab-Schätzungen (1.300 und >600 Mrd. DM) abweicht. Man hat folglich viel zu wenig Einblick/Übersicht gehabt.....

Die Schulden der BRD sind inzwischen auf über 2,0 Bio. € angestiegen. Ein überwiegender Teil ist wiedervereinigungsbedingt. Jedoch übernimmt die THA mit etwas mehr als 0,1 Bio. € nur einen recht geringen Teil. Wesentliche Bedeutung beim Anstieg der Schulden haben Sozialtransfers in die Neuen Bundesländer.

Mit 2 Beispielen soll gezeigt werden, dass inzwischen beinahe „Normalität“ für das Beitrittsgebiet eingetreten ist:

1. Die hohe Arbeitslosigkeit hat sich innerhalb von 10 Jahren „normalisiert“.
2. Beim BIP (Brutto-Inlandsprodukt) ist die Wiedervereinigung kaum zu erkennen.....

Antworten zu Fragen der koreanischen Seite:

A. Fragen Prof. Dr. Doo-Soon Ahn

Nr. 3 Ja, es gab im Direktorat Ausnahmen bei der Privatisierung, meist mit einer Einigung zwischen dem Investor und dem „Alt-Eigentümer“.

Nr. 7 Gegen eine „Wirtschaftszone“ sprechen drei Gründe: die Zeit, die Kosten, die „Flucht“ der besseren Arbeitskräfte. Theoretisch kann man eine derartige Zone als Schutz vor den gewünschten Wirkungsmechanismen des Marktes verstehen. Deshalb sollte sie möglichst vermieden werden. Man kauft sich nur Zeit, und das ist meist sehr teuer.

Nr. 8 siehe oben und Präsentation. Zusätzlich gibt es eine Direktors-interne Ausarbeitung über die Erfolge der Sanierungen.

Nr. 14 Bilanz der THA zum 31. 12. 1994

Aufkommen		Verwendung	
Was	Mrd. DM	Was	Mrd. DM
Privatisierungserlöse	73	Altkredite	101
Kreditaufnahme	264	Ökol. Sanierung	44
		Sanierung, Abwicklung	154
		Sonstiges	38
Gesamt	337	Gesamt	337

Das bedeutet rund 260 Mrd. DM Verluste.....

Nr. 15 Wir haben neben der Zentrale in Berlin 15 Niederlassungen in den 5 Neuen Bundesländern aufgestellt.

B. Fragen Prof. Tae Soo Song

Kapitel 3 Fragen :

1. Die frühen Privatisierungen im Fahrzeugbau (Opel Eisenach, VW Mosel/Zwickau, Mercedes Ludwigsfelde) erfolgten auf Anfrage dieser 3 Unternehmen. Richtlinien zur Privatisierung: siehe oben.
2. Antwort – siehe Vortrag und oben
3. Im Fahrzeugbau gelang es nicht, eine Holding (Unternehmenszentral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errichten. Ich denke, das gilt auch für die übrigen Direktorate. Selbst das Spitzen-Unternehmen des Direktorates Fahrzeugbau, die Deutsche Waggonbau (DWA), wurde in das Unternehmen Bombardier integriert.

Kapitel 4 Fragen :

Die Verträge wurden zunehmend mit Poenalregelungen versehen: dies erstreckte sich auf Mitarbeiter und Investitionen. Die Poenalisierung von Mitarbeitern

- ist 1. kritisch zu beurteilen. Im Falle eines Abschwunges kann das Unternehmen wegen der Poenale nicht reagieren oder es muss auf die dann gerade notwendigen Investitionen verzichten, da es die Poenaleleistungen (Erhöhung des Kaufpreises) erbringen muss.
2. Die Sanierung erfolgte parallel zur Privatisierung. Wir gingen davon aus, dass ein Unternehmer der bessere Sanierer ist als der Staat. Das bedeutet, je eher privatisiert wird, umso besser für den Gesamterfolg.
 3. Warum? Und ist sie allein deshalb konkurrenzfähig?
 4. Wurde im Plenum ausreichend diskutiert. MBI (Kauf durch das Management) wurde häufig durchgeführt.
 5. Über das Buch „Kaltstart“ von H.-W. Sinn wurde diskutiert.

Die Mitarbeiter der THA stiegen bis auf 4.200 (stock) an (1993). Insgesamt wurden etwa 20.000 (flow) Anstellungen ausgesprochen.

Gliederung

1. Vorbereitung
2. Privatisierung
3. Abschlussarbeiten

1



Kapitel

1

Vorbereitung

Wichtigste Phase für den Erfolg

2

Vorbereitung

a. Zeitplan

b. Organisation der THA / Erfassung der Unternehmen

c. erste Aktivitäten

3

Zeitplan

Vorbereitung	Privatisierung	Abschlussarbeiten
1,5 a	2,5 a	0,5 a
Unternehmen erfassen	Privatisieren	Übergabe an Vertragsabwicklung
Konzepte erstellen	Unternehmen entflechten	Auflösung der THA
1. Ansätze	abwickeln	
Branchen bilden	Erste Auflösungen	
Käufer ansprechen		

4

Erfassen der Unternehmen/Organisation der THA

Erfassen der Unternehmen

1. Bilden legaler Einheiten (GmbH, AG)
2. Branchen-Schlüssel
3. Je Unternehmen eine Nr.
4. Erste Daten: Umsatz, Mitarbeiter, Fertigungstiefe, Ergebnis, Flächen.....

Organisation der THA

1. Branchen, große Unternehmen zentral
2. kleine Unternehmen dezentral (Niederlassungen)
3. Querschnittsfunktionen

5

Direktorat	Kürzel	Bemerkung
Chemie	U4CH	
Bergbau/Steine/Erden	U3BS	In PEN integriert
Energie	PEN	
Anlagenbau	U1SB	aufgelöst
Fahrzeugbau	U4FB	
Werkzeugmaschinenbau		aufgelöst
Spezialmaschinen	U1SM	
Optik	U2OF	aufgelöst
Feinmechanik	U4FM	
Land- und Forstwirtschaft	U3LF	
Elektrotechnik	U4ET	
Sondervermögen	U3SV	
Eisen- und Stahlerzeugung		integriert
NE-Metallindustrie	U5EM	
Bauindustrie	U5BI	integriert
Aussenhandelsbetriebe	AHB	
Küstenindustrie	KI	aufgelöst
Verkehr	VK	1993 aufgelöst

6

Direktorat	Kürzel	Bemerkung
Dienstleistungen	U1DL	1993 aufgelöst
Flughäfen/Luftfahrt	U1FL	1992 aufgelöst
Nahrungs- und Genussmittel	U3GN	1992 aufgelöst
Holz/Papier	U4HP	1993 aufgelöst
Textil/Bekleidung/Leder	U4TL	1993 aufgelöst
Hotels/Ferienhäuser	U5HG	1992 aufgelöst

Stand September 1993

7

Niederlassungen der THA (Stand September 1993)

Lfd. Nr.	Ort	Bundesland
1	Berlin	Berlin
2	Cottbus	Brandenburg
3	Frankfurt/Oder	Brandenburg
4	Chemnitz	Sachsen
5	Dresden	Sachsen
6	Leipzig	Sachsen
7	Erfurt	Thüringen
8	Gera	Thüringen
9	Suhl	Thüringen
10	Halle	Sachsen-Anhalt
11	Magdeburg	Sachsen-Anhalt
12	Potsdam	Brandenburg
13	Neu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14	Rostock	Mecklenburg-Vorpommern
15	Schwerin	Mecklenburg-Vorpommern

8

Querschnittsfunktionen

Bezeichnung	Bemerkung	Dauer
Investor Services	Auslandsbüros	
Pressestelle		
Umweltschutz/Altlasten		
Länderfragen	Wunsch der Länder?	?
Recht		
Bund/Intl. Bez.		?
Controlling		
Prüfung Unt.konz.	Arm des Fin.Ministeriums	?
Koord. NL		?
Org./EDV		
Sonderbeauftragter Ostgeschäft	Sonderfall	?
Personal		
Reprivatisierung		

9

Erste Aktivitäten

- Verfügbarer cash, um Unternehmen liquide zu erhalten (geschätzt: 100 Mrd DM)
- Konzepte der Unternehmen anfordern (Entwicklung der Konzepte: Sanierung, Entflechtung, Privatisierung und erforderliche Abwicklungen)
- Erste Privatisierungen/Abwicklungen

10



Kapitel

2

Privatisierung

Die Kernaktivität

11

Privatisierung

- Regeln der Privatisierung
- Strategien der Privatisierung
- Brüder der Privatisierung: Sanierung und Abwicklung

12

Regeln der Privatisierung

Das Übernahmekonzept ist entscheidend

- Marktkennntnis
- Produktentwicklung
- Management
- Finanzierung
- Investitionen
- Ergebnisrechnung (pro Investor)

13

Strategien der Privatisierung

- Keine Vorgaben (aber zeitlicher Druck)
- Viele Ansätze (MBO/MBI, Management KG, Bankenpool, Messen, Werbung, Auktionen)
- Aber strategische Festlegungen: Währung, BRD-Recht, Eigentumsregeln/Restitution

15

Strategien

Privatisierungsmatrix des Direktorates (ab Mitte 1992 nach > 1,5 Jahren)

- Kombination von 2 Matrices (Unternehmens-Stärke und Privatisierungs-Status)
- Ergebnis: Vorgabe für die Privatisierung
 - Aggressiv vermarkten
 - Differenziert vermarkten
 - Opportunistisch vermarkten

16



Kapitel

3

Abschlussarbeiten

Es geht weiter

17

Abschlussarbeiten

1. Die Arbeit ist nicht abgeschlossen (THA,BvS)
2. Auflösung der Organisation, wie sind wir vorgegangen?
3. Ausblick: viele glauben.....viel zu verstehen.....

18

Schätzung des DDR-Wer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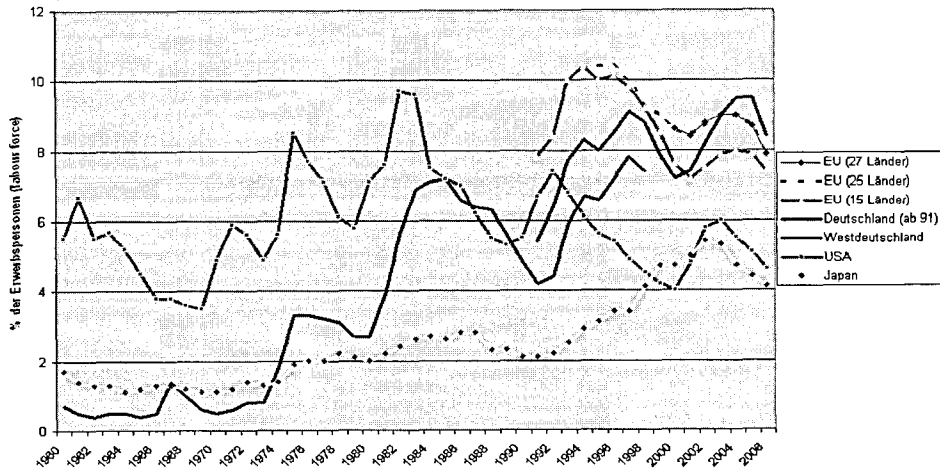
- DDR-Regierung Modrow: **1.300** Mrd. DM
- Rohwedder 1990: **600**
- THA-Abschluss (1994): **- 260**

→ wir haben wenig geah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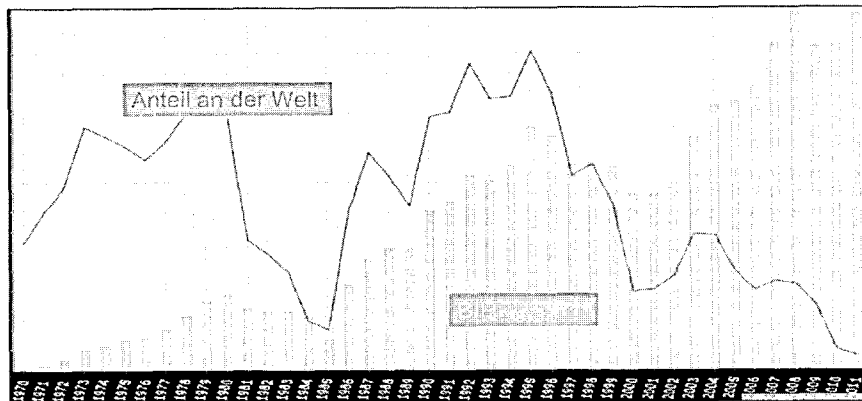
19

Nach 10 Jahren auf „normalem“ Niveau...

Arbeitslosenraten



Das BIP ist kaum betroffen...



Fragen....

- Tempo?????.....zu hoch?????.....nein!!
- Getrennte „Zone“.....ging nicht ...vermutlich viel teurer
- THA?????...ja, aber noch operativer....
- Presse.....muß man ertragen...embedding??
- Zuständigkeit in der THA???....eindeutig und nach Branchen

22

- Danke für die Aufmerksamkeit

23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Prof. Paulin. Das, was Sie am Anfang und am Ende gesagt haben, dass es alles anders kommt als man sich vorher vorgestellt hat, das hat mich sehr angesprochen. Das war sozusagen auch eine Vorhersage über unsere bevorstehende Aufgabe. Eigentlich wollten wir jetzt eine Pause einlegen - aber es ist ja erst eine Stunde vergangen, vielleicht können wir also erst einmal weiterdiskutieren und erst dann eine Pause einlegen. So wie gestern, würde ich jetzt erst einmal darum bitten, zuerst die Fragen der koreanischen Seite durch die deutsche Seite zu beantworten. Ich gebe das Mikrofon an Herrn Ludewig.

[Johannes Ludewig Bundeskanzleramt, 1990 Koordinator Neue Länder]

In Ihrem Papier, Herr Prof., sind so viele Dinge, das kann man jetzt nicht einzeln durchgehen. Das müssten wir noch einmal bilateral besprechen, weil mein Eindruck ist, wenn ich das so ehrlich sagen darf, da gibt es noch viele Missverständnisse, viele Dinge, über die man wirklich noch mal sprechen muss, weil sie so, wie sie da stehen, wie ich sie gelesen habe, mit der Wirklichkeit nicht übereinstimmen. Da sollten wir uns noch mal austauschen. Ich möchte auch noch mal grundsätzlich sagen, weil das in dem ganzen Papier gar nicht erwähnt wird, nämlich die Frage, warum war die Privatisierung eine besonders dringliche Angelegenheit? Die Kernantwort ist ganz einfach und die kommt in dem ganzen Papier gar nicht vor. Das Kernproblem war ja, dass mit der Öffnung der ehemaligen DDR hin zu den offenen Märkten die Betriebe der DDR gar keine Kunden mehr hatten. Das muss man sich mal klar machen, was das heißt. Sie haben auf einmal eine Wirtschaft, die von heute auf morgen ihre Kunden alle verloren hat, weil natürlich auch für die Kunden, die früher dort ihre Produkte im Rahmen der Planwirtschaft bezogen haben, der Markt offen war, egal, wo die in welchen Ländern im ehemaligen Ostblock saßen. Die haben sich jetzt in der Welt umgesehen und haben ihre Produkte dort gekauft, wo es am günstigsten war. Das war der Druck, der auf einmal entstand, dass Sie also Betriebe hatten, die keine Kunden mehr hatten.

Da können Sie als Staat so viel Geld reinstecken, wie Sie wollen - der Staat hat auch keine Kunden. Das müssen Sie sich klarmachen. Deswegen, was ich in Ihrem Papier lese, ob wir jetzt mit mehr Zeit mehr umstrukturiert und mit mehr staatlichem Geld geholfen hätten, das haben wir ohnehin getan, aber all das löst das Kernproblem nicht. Das Kernproblem war: Wie bekommen Sie Kunden für das, was diese Betriebe produzieren können? Deswegen hat man gesagt, diejenigen, die am ehesten Zugang zu Kunden haben, sind Investoren, sind solche, die in solche Betriebe bereit sind zu investieren, die aus einer ähnlichen Branche kommen, denn die haben ja die Kundenkontakte und die haben ähnliche Produkte schon an andere Kunden verkauft und wenn die Betriebe übernehmen, dann bringen sie auch Kundenkontakte mit. Das war der entscheidende Punkt. Wir haben ja nicht privatisiert, weil wir nichts anderes zu tun hatten oder weil wir zu einfalllos waren, sondern weil die Betriebe - ich wiederhole das noch mal, weil das scheinbar noch nicht verstanden worden ist - durch die Marktöffnung auf einmal über Nacht überhaupt keine Absatzmöglichkeiten mehr hatten. Das war der entscheidende Punkt und dafür musste die Regierung, also wir, eine Lösung finden. Und die Lösung war, dass Sie so schnell wie möglich Leute finden mussten, und das waren in der Regel Investoren, die hier Kundenkontakte mitbrachten und insofern einen Weiterbetrieb dieser Unternehmen überhaupt erst möglich machten. Das war der Druck, der da entstand und das war nicht politisch, dass man da irgendwie sagte, jetzt privatisieren wir schnell oder jetzt machen wir langsam. Ich habe das mit Ihren Phasen hier gelesen, von 1-6. Das hat es nie gegeben. Nie! Sondern es war die Frage, ich wiederhole es noch einmal, wie können wir sozusagen das Überleben möglichst vieler Betriebe sichern - und das ging nur indem Sie Kunden finden und der beste Weg Kunden zu finden, war Investoren zu finden, die mit diesen Branchen vertraut sind. Das war die Grundlogik dahinter. Dann gab es noch einen zweiten Punkt, der auch hier nicht richtig vorkam. Das war natürlich auch eine politisch sehr schwierige, anspruchsvolle Situation. Es gab ja eine große Euphorie in Deutschland. Alle in Ostdeutschland und in

Westdeutschland wollten die Wiedervereinigung. Da waren natürlich sehr hohe Erwartungen, natürlich auch in den Unternehmen. Die Frage war ja für uns politisch, wie kann man mit diesen Erwartungen umgehen. Das hatte Herr Paulin hier dargestellt: Alle Unternehmen in Ostdeutschland sind aufgefordert, über die Treuhandanstalt selbst ein Unternehmenskonzept zu entwickeln, welche Chancen und Möglichkeiten man sieht, Produkte zu produzieren, die im Weltmarkt Absatz finden, d.h. im internationalen und deutschen Markt. Dieses Konzept, das die Unternehmen entwickelt haben, konnte man natürlich nicht 1:1 übernehmen, denn die Versuchung sich so schön zu machen, wie es irgendwie geht, ist natürlich sehr groß. Deshalb mussten alle Konzepte durch Gutachter, Wirtschaftsprüfer, also durch Dritte, externe Fachleute überprüft werden. Ich wiederhole es noch einmal, weil es sehr wichtig war: Jedes Unternehmen macht ein Konzept und das wird von externen Fachleuten überprüft, ob es realistisch und sinnvoll ist. Die Grundaussage der Regierung war, dass jedes extern geprüfte Konzept, das eine sinnvolle Perspektive eröffnet, eine Privatisierung auf Zeit möglich zu machen, d.h. grundsätzlich Produkte herzustellen, die auf de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Markt verkauft werden können, dass diese Betriebe eine Chance erhalten und zwar indem die Regierung Kapital für diese Betriebe bereitstellt, auch wenn kurzfristig keine Privatisierung möglich ist. Denn Sie können natürlich nicht 10.000 Betriebe in zwei, drei Monaten privatisieren, das geht ja gar nicht. Ich wiederhole noch mal: Das war die Logik, das ist politisch sehr wichtig, jedes Unternehmen macht ein Konzept, dieses muss überprüft werden, ob es realistisch ist und wenn es realistisch ist, bekommt dieses Unternehmen auch eine Chance und zwar dadurch, dass Kapital über die Treuhand in dieses Unternehmen hineingegeben wird, um eine realistische Chance zu bieten, auf Zeit gesehen einen Investor zu finden. Das braucht ja Zeit, Herr Paulin hat das ja beschrieben, das geht ja nicht in drei Minuten. Damit Sie mal sehen, wie ernst das genommen wurde: Die schwierigen Privatisierungen sind ja gar nicht nach vier Jahren gewesen - diese Vierjahresfrist ist eine völlig theoretische Frist, das hatte Herr Paulin völlig richtig gesagt. Ein

großer Teil der Privatisierungen ist ja viel länger gelaufen als vier Jahre; die vier Jahre können Sie vergessen. Das hatte andere Gründe, die hatte Herr Paulin auch hier beschrieben. Nehmen wir bei schwierigen Privatisierungen mal das Beispiel der Chemieindustrie, Mitteldeutschland hat traditionell eine starke Chemieindustrie gehabt mit Schwerpunkt zwischen Sachsen und Sachsen-Anhalt. Die ist privatisiert worden 1996-7, also 6-7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Warum? Weil es zwar ein realistisches Konzept gab, aber wir hatten einen internationalen Markt, bei dem die gesamte Weltkonjunktur der Chemie einen Rücklauf hatte ab 1990 und es war sehr schwer in solch einem rückläufigen internationalen Markt, auch wenn das Unternehmen ein gutes Konzept hatte, eine Privatisierung möglich zu machen. Da hat die Bundesregierung gesagt und der Treuhandanstalt die Instruktion gegeben: Wenn es ein realistisches Konzept gibt, wird das Unternehmen solange finanziell unterstützt, bis eine sinnvolle Privatisierung möglich ist. Und das hat 6-7 Jahre gedauert. Und ähnlich ist es gewesen in der Stahlindustrie, wenn Sie mal schauen Ekostahl in Eisenhüttenstadt, die Werftenprivatisierungen - alle schwierigen Privatisierungen haben viel länger gedauert als vier Jahre und sind übrigens interessanterweise praktisch alle mit Ausländern gemacht worden, nicht mit deutschen Unternehmen. Das ist das Grundkonzept, das ist das Wichtige, das man das wirklich versteht.

Dazu noch ein weiterer Punkt, der sehr wichtig ist, es ist ja gestern auch angesprochen worden, ein Unterschied im Vergleich zu dem, wie bei Ihnen über Wiedervereinigung nachgedacht wird: Die Wiedervereinigung war keine Übernahme Ostdeutschlands durch Westdeutschland. Die hat es nie gegeben. Es gab in Ostdeutschland eine frei gewählte Regierung, ein frei gewähltes Parlament. Zwischen der westdeutschen und der ostdeutschen Regierung ist über die Konditionen und Einzelheiten verhandelt worden. Da war nicht alles einfach und einig, das waren zum Teil schwierige Verhandlungen und am Ende stand die Wiedervereinigung. Es gab keine Übernahme Ostdeutschlands durch Westdeutschland, sondern es gab Verhandlungen über die gemeinsamen

Bedingungen, unter denen das stattfindet. Und diese Bedingungen waren dann auch die, denen diese Privatisierungsaktivitäten zugrunde gelegen haben. Das war ein gemeinsames Konzept, das aus beiden Teilen Deutschlands gemeinsam entwickelt und getragen worden ist. Kein Takeover! Ein sehr wichtiger Unterschied, den man dabei nicht vergessen darf. Das sind eigentlich die Grundideen der Privatisierung gewesen.

Ich wiederhole noch einmal: Das Interesse, das Ganze zügig abzuwickeln, lag daran, dass wir dringend Kunden brauchten. Ich sage Ihnen noch ein Beispiel, damit Sie sehen, wie extrem schwierig das war. Die Hauptkunden vieler Industriebetriebe in Ostdeutschland waren natürlich in der damals noch existierenden Sowjetunion und wir hatten natürlich ein Interesse, um den Übergang zu erleichtern, dass diese Absatzbeziehungen nicht von heute auf morgen enden, sondern noch etwas verlängert wurden. Um Ihnen mal ein Beispiel zu nennen, gab es noch im Frühjahr 1991 ein Treffen von Bundeskanzler Kohl und Gorbatschow in der Nähe von Kiew, an dem ich selbst teilgenommen habe, bei dem genau darüber verhandelt worden ist. Ob man die angestammten Lieferbeziehungen trotz der sich öffnenden Märkte zwischen vielen Betrieben in Ostdeutschland und Abnehmern in der Sowjetunion noch verlängern könnte. Da hat sich damals Gorbatschow für die Sowjetunion verpflichtet, Waren im Werte von 25 Mrd. D-Mark weiter abzunehmen. Dann, das ist auch wichtig zu verstehen, damit man den Zeitablauf richtig sieht, war die eigentliche Schwierigkeit, der Höhepunkt der Schwierigkeiten auch der Absatzseite, der Zusammenbruch der Sowjetunion. Das Ende der Sowjetunion Ende 1991, als also die Sowjetunion zusammenbrach, da gab es gar keine Beziehungen mehr. Da hörte der letzte Rest der historischen Lieferbeziehungen, so weit es sie noch gab, auf. Das war für uns von der Regierungsseite her der schwierigste Punkt, weil dann auch noch die letzten alten Abnehmer und Kunden verschwanden. Das war der richtige Nullpunkt. Herr Paulin hat den Waggonbau genannt, der eines unserer Sorgenkinder, aber auch eines der bedeutenden und leistungsfähigen Unternehmen war, aber traditionell Waggons

in die Sowjetunion lieferte. Das war der Stammmarkt und der war weg und finden Sie mal für Waggonbau irgendwie auf einmal über Nacht neue Kunden für Absatz in Milliardenhöhe. Das waren die Herausforderungen, mit denen wir es zu tun hatten.

Ich wiederhole es noch einmal: Jeder Betrieb hat eine Chance, jeder Betrieb macht ein Konzept, dieses Konzept wird von neutralen, externen Experten geprüft und wenn es Bestand hat, dann wird es auch finanziert, solange bis eine vernünftige Lösung gefunden wird oder es stellt sich heraus, dass eine Sanierung keine Chance hat und abgewickelt werden muss, auch das hat es natürlich gegeben. Das ist die Philosophie, das ist wichtig, dass man das versteht, dann beantworten sich auch viele Fragen, die in ihrem Papier stehen, in einem anderen Licht. Das können wir auch gerne bilateral noch einmal durchgehen. So wie es hier steht mit diesen sauber geordneten Phasen Eins, Zwei, Drei, Vier, Fünf und Sechs. Das hat es nie gegeben. Die Frage war, sage ich noch einmal, wo finden wir Kunden für die Betriebe in Ostdeutschland und danach hat sich das Tempo und alles andere gerichtet. Entschuldigen Sie, wenn ich etwas lang geredet habe, aber es ist wichtig, dass man diese Grunddinge versteht, sonst kann man auch Einzelheiten glaube ich nicht so richtig gut einordnen. Vielen Dank.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Ludewig war ja selbst im Bundeskanzleramt, daher kennt er die Praxis. Und er war Staatssekretär im Wirtschaftsministerium, deshalb ist er derjenige, der tatsächlich all diese Begebenheiten selbst erlebt hat. Das konnte man seinem Kommentar anhören, dass er viele Erfahrungen gesammelt hat. Ich kann auch meinerseits sagen, eine politische Entscheidung ist immer gekoppelt an die sie umgebende Situation, sowohl politisch als auch ökonomisch. Ich hatte vorhin auch ein Gespräch darüber mit einem deutschen Kollegen. Die Kritik müssen wir akzeptieren. Um bessere Chancen zu haben [uns vorzubereiten], nehmen wir Ihre Erfahrungen gerne an. Ich gebe das Mikrofon an Herrn Prof. Dr. Paqué.

[Prof. Dr. Karl-Heinz Paqué ehem. Staatsminister der Finanzen in Sachsen-Anhalt]

Liebe koreanische Freunde. Ich glaube wir sind hier an diesem Punkt in dieser Diskussion wirklich an einem absoluten Kernpunkt der Problematik der deutschen Vereinigung. Ich bitte um Nachsicht, wenn ich auch aus volkswirtschaftlicher Sicht, als jemand, der nicht aktiv involviert war, hier auf die Fragen etwas grundsätzlicher antworte, da es in der Tat um einen Fundamentalpunkt der Interpretation der ökonomischen Seite der deutschen Einheit geht. Ich will anknüpfen an die außerordentlich scharfen Kritik, die von einem namhaften Kollegen von mir, Hans-Werner Sinn, bereits in den frühen 90er Jahren an dem Prozess der Privatisierung geäußert wurde. Ich werde jetzt einiges Kritisches dazu sagen, ich sage aber vorne weg: Hans-Werner Sinn hat eine Ehrendoktorwürde meiner Fakultät [inne]. Ich bin dort Dekan, wir sind gute Freunde und wir haben diese Dinge in aller Freundschaft bei einer Reihe von Gelegenheiten in aller Offenheit ausdiskutiert. Wir sind unterschiedlicher Meinung, aber es ist sehr wichtig, diese Unterschiede deutlich zu machen. Vielleicht würde es sich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ch einmal lohnen, Hans-Werner Sinn zur Diskussion einzuladen, weil seine Meinung, wie ich feststelle, einen außerordentlich starken Einfluss auf die Perzeption der Deutschen Einheit in Deutschland und im Ausland hat. Wenn man Hans-Werner Sinns berühmtes Buch "Kaltstart" von 1991 zur Hand nimmt, dann ist das ein Buch, das theoretisch außerordentlich interessant ist, denn darin ist ein Modell für eine Privatisierung entwickelt. Dieses Modell ist aber, ich habe es mir später auch noch einmal en detail angesehen, im Grunde ein Modell für eine Welt, wo man einen industriellen Kapitalstock eines Unternehmens, das bereits längst in Märkten integriert ist, das irgendeinen Kapitalwert hat - einen hohen positiven Kapitalwert - irgendwo in einem Privatisierungsverfahren möglichst dem Höchstbietenden zum Kauf anbietet. Das ist das Modell. Das ist im Grunde das Bild der britischen Privatisierungen in den 80er Jahren unter der Regierung Thatcher. Damals hat die britische Regierung einige berühmte Fälle

der Privatisierung gemacht und die liefen in einem entsprechenden, geordneten Verfahren der Marktsuche. Da wurde sich sehr viel Zeit genommen, die britische Regierung hatte auch viel Zeit, es waren ja typischerweise Staatsunternehmen, die einen wohldefinierten Markt hatten und die dann in eine Privatisierung überführt wurden. Das war überhaupt nicht die Welt, die in eindrucksvoller Weise Johannes Ludewig eben skizziert hat. Es war eine Welt, wo, das ist ganz wichtig, jedes Unternehmen, das privatisiert wurde und es handelte sich wirklich um eine überschaubare Zahl, einen positiven, sehr hohen Kapitalwert hatte. Während diese Unternehmen hier, wo letztlich die Kunden gesucht wurden, wo praktisch eine Produktpalette angeboten wurde, die zum damaligen Zeitpunkt niemand haben wollte, natürlich zunächst einmal praktisch einen Kapitalwert von Null hatten. Und wenn es gelang ein entsprechendes Unternehmenskonzept zu entwickeln, dann konnte dieser Kapitalwert in den positiven Bereich gehen, aber gleichzeitig hatten viele dieser Unternehmen auch Altlasten. Einige davon, es wurde ja von Herrn Paulin genannt, Schulden, aber es gab auch gewaltige ökologische Altlasten, also gewissermaßen Dinge, die den Kapitalwert ins Negative ziehen. Und über dem Ganzen, das muss man auch in aller Deutlichkeit sagen, stand ein Problem, das hat Herr Ludewig eindrucksvoll geschildert: Die Zeit. Denn die größte Befürchtung von damaligen Ökonomen (auch von Hans-Werner-Sinn) war, dass wir langfristig eben in Ostdeutschland mit Unternehmen landen würden, die nicht profitabel am Markt mit wettbewerbsfähigen Gütern auftauchen und permanent vom deutschen Staat hätten subventioniert werden müssen. Das hätte, wenn das in dieser Größenordnung geschehen wäre, Ostdeutschland ist ja vom Territorium her ein Drittel Deutschlands, gewissermaßen die Aushebelung der grundlegenden marktwirtschaftlichen Philosophi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die Ludwig Erhard erfolgreich nach 1948 etabliert hat, bedeutet. Das war eine gewaltige Drohung, gewissermaßen ein Damoklesschwert, das über dem ganzen Prozess hing. Deswegen: Man mag alles gehabt haben, aber eines nicht - Zeit. Zeit und Produkte. Wenn man das alles in Rechnung stellt, dann ist es überhaupt nicht überraschend,

dass das Verfahren, das gewählt wurde, im Wesentlichen das war, was Herr Paulin und Herr Ludewig geschildert haben. Ein Verfahren, das ich immer mit dem Wort „pragmatisch“ überschreibe. Es war eben nicht ein Verfahren, wo man an einen anonymen Markt geht, mit Vouchern oder irgendwelchen Anteilsscheinen, die von irgendwelchen Leuten in großer Zahl übernommen werden, die dann irgendwann durch weitere Verkäufe in anderen Händen landen und dann irgendwann in der Zukunft zu einem Management führen, das dann eingesetzt wird von diesen Eigentümern, die dann irgendwann Produkte entwickeln, die irgendwann wettbewerbsfähig sind international. So konnte es nicht sein. Andere Länder, wohlbemerkt, in Mittel- und Osteuropa, wie z.B. namentlich die Tschechische Republik, damals noch Tschechoslowakei, sind diesen Weg gegangen. Wenn Sie sich die Erfahrungen heute ansehen, dann ist die Bewertung sehr gespalten - ich formuliere das vorsichtig. Man kann argumentieren, dass nach einigen Umwegen die Tschechische Republik mehr oder weniger doch bei einem Managementmodell landete, wie das die Deutschen machten. Aber es gab einen gewaltigen Unterschied zwischen der Tschechischen Republik und Ostdeutschland oder anderen Ländern und Ostdeutschland: In Ostdeutschland herrschte, Herr Ludewig hat es gesagt, Mobilität. Die Menschen brauchten unmittelbar eine Perspektive. Das vereinte Deutschland war Mitglied der Europäischen Union mit Freizügigkeit, mit freiem Güterverkehr, freiem Kapitalverkehr, während die mittel- und osteuropäischen Länder noch eine gewisse Zeit hatten - zehn Jahre später sind sie erst Mitglied der EU geworden - sie konnten also einen evolutionären Weg gehen, keinen revolutionären. Ich füge aber hinzu, liebe koreanische Freunde, selbst heute hat ein Land wie die Tschechische Republik oder Ungarn oder Polen, Löhne, die etwa in der Größenordnung von einem Drittel bis einem Viertel liegen, von dem, was in Deutschland bezahlt wird. Da kann man sehr gut sehen, dass das gar keine denkbare Option wäre, denn nach 20 Jahren der durchaus erfolgreichen Entwicklung in diesen Ländern sind die bei einem Drittel des Lohnniveaus. Da hätte sich Ostdeutschland, wenn wir den Weg gegangen wären, geleert. Diese

Möglichkeit bestand überhaupt nicht. Deswegen halte ich es nicht nur für eine politisch notwendige Entscheidung, sondern für eine ökonomisch absolut richtige und kluge Entscheidung, dass man diesen Weg gegangen ist.

Jetzt schauen wir auf die Ergebnisse. Herr Paulin hat es ja außerordentlich eindrucksvoll geschildert, wir haben am Anfang dieses Prozess natürlich wenig gewusst. Es gibt ja das berühmte Zitat von dem ersten, später ermordeten, Vorsitzenden der Treuhandanstalt, Detlef-Karsten Rohwedder, der eine erste Schätzung des Vermögens des Kapitalbestandes abgegeben hat. Die hat sich nachher als völlig illusorisch erwiesen; er hat sie auch nie wiederholt. Er hat ganz schnell, wie alle anderen Beteiligten, erkannt; oh je, wenn wir der Tatsache ins Auge sehen, dass der sowjetische Markt zusammenbricht, dass hier keine Produkte sind, dass eine radikale Umstrukturierung nötig ist, werden wir im Ganzen bei einem Defizit landen. Und das Defizit war ja nachher etwa 200 Mrd D-Mark. Es war wahrscheinlich noch größer, wenn man gewisse Altlasten mit hineinnimmt, aber das spielt jetzt auch keine gewaltige Rolle. Jedenfalls war unter Maßgabe des Zeitdrucks und der fehlenden Produkte aus meiner Sicht, wenn man es nüchtern betrachtet, überhaupt nicht überraschend, dass hier ein Defizit herauskam. Das Defizit heißt natürlich letzens, wenn man es ökonomisch, volkswirtschaftlich durchdenkt: Dieser gesamte Kapitalbestand Ostdeutschlands hatte einen negativen Wert. Das hatte ganz weitreichende Folgen, auch für die Attraktivität von Voucher-Privatisierungen. Das heißt im Aggregat, hätte man irgendwelche Anteilsscheine an die Bevölkerung verteilt, hätten die einen negativen Wert gehabt. Die hätten überhaupt nichts gebracht. Die hätten zur Frustration der Leute geführt. Die hätten bezahlen müssen; sie hätten gewissermaßen die Haftung übernehmen müssen. Und wenn sie einen positiven Betrag herausbekommen hätten, kann ich Ihnen Folgendes sagen, dann hätte es einen Mordsärger in Westdeutschland gegeben. Denn dann hätten alle dort gesagt; wir haben hier das Defizit finanziert und jetzt werden da solche positiven Beträge ausgeschüttet. Aber von was? Das hätte wieder der Staat machen müssen, es wäre noch teurer geworden und es

wäre böses Blut zwischen West und Ost entstanden. Ich halte auch von dieser Seite her die Voucher-Vorstellung für völlig illusorisch. Jetzt noch ein Satz zur Größenordnung des Defizits, liebe koreanische Freunde. Es erscheinen immer wieder Bücher in Deutschland, wie vor kurzem von einem Journalisten, "Goldtausch" heißt das, da hat er sich ein paar Fälle rausgesucht, wo die Privatisierung vielleicht nicht so glatt läuft und tut so als hätte gewissermaßen Westdeutschland Ostdeutschland ausgeraubt. Es sei unglaublich viel Geld verschleudert worden. Bei diesem Defizit, das hört sich wahnsinnig an, 200 Mrd. Euro, da ist es naheliegend, eine Story daraus zu machen. Jetzt mal ganz nüchtern volkswirtschaftlich betrachtet: Ich habe in meinem Buch die Bilanz im Einzelnen ausgeführt. Zur Zeit der Vereinigung 1991 hat ein Erwerbstätiger in Westdeutschland etwa eine Wertschöpfung von 80.000 DM gehabt. Der Kapitalstock pro Arbeitsplatz lag damals rein rechnerisch gesamtwirtschaftlich bei 480.000 DM. Wenn man nun eine hypothetische Rechnung macht und sagt, um Ostdeutschland einigermaßen gut im Weltmarkt zu platzieren, mit einem nachhaltigen Kapitalstock, brauchen wir pro Kopf in etwa das Gleiche wie im Westen, vielleicht etwas weniger, aber im Wesentlichen das Gleiche. Dann ist das rein rechnerisch ein Kapitalbestand von 2,9 Billionen DM. Wenn Sie das Defizit, diese 200 Mrd. auf diese Zahl beziehen, ist das ein außerordentlich bescheidener Betrag. Man kann überhaupt nicht sagen, dass hier Geld verschleudert wurde. Es war die notwendige Investition, um überhaupt eine Volkswirtschaft dieser Größe mit 16 Millionen und einigermaßen wettbewerbsfähigen Produkten zurückzuführen, nach 40 Jahren Isolation vom Weltmarkt. Das, ein letzter Punkt, ist nach allem, was wir heute an empirischer Evidenz haben, nachhaltig gelungen. Es gibt Untersuchungen vom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n Nürnberg, die wirklich ökonometrisch recht sauber unterschiedliche Unternehmenstypen in ihrer Entwicklung in den letzten 20 Jahren gegenüberstellen, also Treuhandunternehmen, Nichttreuhandunternehmen im Westen und westdeutsche Unternehmen. Im Wesentlichen ist das Ergebnis, dass sich die

Treuhandunternehmen nicht nur normal entwickelt haben, sondern sogar überdurchschnittlich gut. Mit anderen Worten: Es ist eine industrielle Basis geschaffen worden, die nachhaltig ist. Es hat enorme Entlassungen gegeben. Es hat eine Schrumpfung gegeben, aber die Industrie, die entstanden ist, ist nachhaltig. Und ich weise noch mal auf einen Punkt hin, der zurückgeht auf das, was Herr Ludwig gesagt hat, was die Produkte betrifft. Wenn man sich die Branchen im Einzelnen ansieht. Wir wollen in der Zukunft dazu ein größeres Forschungsprojekt initiieren, wir sitzen, Prof. Dr. Richard Schröder und ich, daran. Wenn man es schon mal grob anschaut heute, kann man gut feststellen, dass es sehr große Unterschiede in den Branchen gibt. Im Konsumgüterbereich, z.B. bei den Biermarken, war es relativ leicht zu privatisieren, weil es immer noch einen Namen gab, eine Biermarke, die ihren Kundenstamm hatte. Radeberger Pils, berühmt in Dresden. Da musste man nur eine gute Marketingkampagne machen und dann konnte man das wieder platzieren. Aber je weiter Sie in die technologischen Bereiche hineingehen, in den Maschinenbau, in den Fahrzeugbau und schließlich in die Chemieindustrie, wo dann die ökologischen Probleme noch dazukamen, (die Unternehmen im Großraum Merseburg, die haben mit Technologien aus den 30er Jahren gearbeitet, da war praktisch nichts mehr zu gebrauchen), umso schwieriger und langwieriger und sorgfältiger musste der Privatisierungsprozess sein. Wenn man sich das eines Tages in einem Forschungsprojekt mal genau ansieht, wird man dies sehr genau feststellen können. Ein allerletzter Punkt, politisch. Die Treuhandanstalt war sehr unbeliebt, Herr Paulin hat es ja wunderbar dargestellt. Das ist auch überhaupt nicht überraschend. Wenn Millionen Menschen ihren Arbeitsplatz verlieren, sollen die etwa jubeln über diese Institution? Sie hat aber in dieser Rolle eine ganz wesentliche Funktion gehabt, nämlich sie war eine Art, was wir im Deutschen „Blitzableiter“ nennen, für einen natürlich entstehenden Zorn von Menschen, die ihren Arbeitsplatz verlieren. Die haben natürlich auf die Treuhandanstalt geschimpft. Die Treuhandanstalt und die entsprechenden Beteiligten haben das mit Grandezza

ertragen. Das politische Problem ist aber abgelenkt worden von der Regierung und die Treuhandanstalt hat diese Aufgabe gewissermaßen übernommen. Sie wurde aufgelöst, verschwand dann auch als eigentliche Institution und ich glaube auch das war ein relativ kluger Schachzug, genau wie Herr Paulin das beschrieben hat.

Ich bitte genau wie Herr Ludewig um Nachsicht, dass ich hier etwas ausführlicher die Dinge kommentiert habe, aber ich denke das war wirklich extrem wichtig, um die fundamentale Rationalität dieses Prozesses zu verstehen. Natürlich ist es dann immer noch schwierig und mit Fehlern abgelaufen, weil man ja ständig dazugelernt hat, aber die einfache ökonomische Modellvorstellung, die damals vorherrschte, allen voran die von Hans-Werner Sinn, der leider in diesem Punkt auch bis heute an seiner damaligen Auffassung festhält, obwohl wir das schon sehr ausführlich diskutiert haben, das war doch ein sehr sehr vereinfachtes Bild einer komplexen Realität.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Gestern hatten wir [schon] eine heiße Diskussion, heute haben wir eine genauso interessante Diskussion. Vielleicht könnten wir eine kleine Pause einlegen und danach können wir dann die Anmerkungen und Fragestellungen der koreanischen Seite anhören. Bevor wir mit der Pause anfangen, möchte ich noch einen Gast vorstellen, den wir vorhin nicht vorgestellt haben, und zwar Herrn Lee Wan-yong, Abgeordneter der koreanischen Nationalversammlung und Mitglied im Umweltausschuss. Herr Lee ist heute anwesend, deshalb möchte ich ihm jetzt das Wort geben.

[LEE Abgeordneter]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sehr geehrter Herr Chun, sehr geehrter Herr Prof. Dr. Schröder, sehr geehrte Delegationsmitglieder aus Deutschland, ich freue mich sehr darüber, dass ich die Gelegenheit habe, hier an dieser Sitzung teilnehmen

zu dürfen. Ich bin Mitglied der Koreanisch-Deutschen Parlamentariergruppe und fühle mich deshalb sehr mit Deutschland verbunden. Ich selbst habe 25 Jahre als Beamter gearbeitet und habe mehr als zehn Mal Deutschland besucht, sodass ich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auch vor Ort erleben durfte. Jetzt arbeite ich als Abgeordneter und ich denke die größte Aufgabe für Korea ist die Wiedervereinigung. Im Moment sprechen wir darüber, dass wir die kreative Industrie fördern wollen, das ist ein Motto der neuen Regierung. Ich denke auch das hat mit der Wiedervereinigung zu tun. Wenn wir wiedervereinigt werden, können wir auch viel besser solche Industrien fördern. Als ich jung war, war mein Herzenswunsch, genau wie der vieler anderer, die Wiedervereinigung. Ich selbst bin mit heißem Herzen zur Demarkationslinie gegangen, aber wäre ich da im Vereinigungswunsch durchgebrochen, wäre ich wohl nicht hier, sondern wäre erschossen worden. Über die Vereinigung lernen wir sehr viel, denn wir wollen uns auf dem Weg zur Vereinigung vorbereiten und dabei vom Prozess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lernen, d.h. lernen, was die Regierung tun sollte und was die Rolle der Parteien ist, welche Einstellung die Koreaner zur Wiedervereinigung haben sollten usw.. Die Wiedervereinigung ist natürlich verbunden mit zahlreichen Schwierigkeiten. Diese Schwierigkeiten dürften noch viel intensiver und größer werden als die Deutschlands, weil wir hier noch größere Probleme und viel größere Unterschiede zwischen Nord- und Südkorea haben. Man redet zunächst davon, die Kosten seien so hoch. Das ist in Korea eine allgemein verbreitete Meinung, aber ich glaube, es ist auch eine falsche Einstellung, denn bei der Wiedervereinigung sollte man nicht nur an wirtschaftliche Kosten denken. Wiedervereinigung bedeutet viel mehr als Kosten. Ich stelle mir aber die Frage, die sich übrigens auch China und die USA stellen: Sind die Koreaner eigentlich gut vorbereitet auf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Ich glaube unsere Diskussion hier wird mir in dieser Hinsicht eine sehr gute Lektion sein. Ich bedanke mich ganz herzlich für die Gelegenheit zur Teilnahme an dieser Sitzung. Vielen Dank.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Lee für Ihre Teilnahme und Ihr Interesse an Deutschland und Ihre Bereitschaft über Deutschland zu lernen. Ich freue mich sehr, dass Sie sich extra Zeit genommen haben, an unserer Sitzung teilzunehmen. Wie bereits gesagt, werden wir jetzt eine kleine Pause einlegen. Wir werden um 11:25 Uhr mit der Diskussion fortfahren, vielen Dank.

[Moderator – Herr CHUN]

Ich bitte die Anwesenden zu Ihren Plätzen zurückzukehren. Wir werden fortfahren. Wie ich beobachtet habe, gab es eigentlich keine Pause, weil die Diskussion auch in der Pause weiterging. Wir sind etwas hinter der Zeit insgesamt, wir haben es jetzt 11:35, eigentlich hätten wir bis 12:15 fertig werden müssen. Wir werden den Zeitplan um eine Viertelstunde nach hinten verlegen. Bis 12:15 Uhr werden wir diskutieren. Danach werden wir von 12:15 Uhr bis 14 Uhr etwa anderthalb Stunden Mittagszeit haben. Nach zwei Diskutanten der deutschen Seiten gebe ich nun das Mikrofon an Herrn Ahn Du-sun von der koreanischen Seite. Es folgen also zwei Diskutanten der koreanischen Seite.

[AHN Doosoon Ehren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Es gibt hier sehr viele Fachwörter, deswegen möchte ich meinen Kommentar auf Deutsch abgeben. Ein sehr eingehender Kommentar von Herrn Ludewig und Herrn Prof. Dr. Paqué. Diese Kommentare waren sehr überzeugend und wurden auch leidenschaftlich vorgetragen. Wir Koreaner würdigen alle sehr wie die Deutsche Einheit vor sich ging und welche Leistungen das deutsche Volk dabei erbracht hat. Das würdigen wir und wir beneiden Sie auch darum. Hoffentlich werden wir in nicht allzu langer Zukunft auch die Chance erhalten. Aber alle drei Herren haben uns Koreaner etwas erschreckt. Sie waren so überzeugt und Sie haben sich auch beängstigend deutlich ausgedrückt.

Da ist es schwierig Gegenargumente vorzubringen. Trotzdem möchte ich einige

kritische Fragen stellen. Kritisch heißt nicht unbedingt negativ, bitte verstehen Sie das nicht falsch. Fangen wir mit den einfachen Fragen an, den mehr technischen. Die Bilanz der Treuhandanstalt ist allen bekannt, das werde ich nicht wiederholen. Aber wir haben jetzt BMG, BVVG, PLG, BVS und den Erblastentilgungsfonds des Bundes. Das sind sozusagen die Nachfolger der Treuhand. So wie ich verstanden habe, ist die BVS die wichtigste und die anderen sind Zweigorganisationen. Meine Frage ist; was ist daraus geworden? Was machen diese Organisationen jetzt? Das ist wie gesagt eine technische Frage.

Zweitens, hätte man von Anfang an in Erwägung ziehen können, die Aufgaben der Treuhandanstalt aufzuteilen und sie an mehrere Organisationen zu delegieren, anstatt sie in einem Giganten zu konzentrieren?

Die dritte Frage ist etwas heikel vielleicht: Was ist der Grund, dass der erste Treuhandchef Rainer-Maria Golcke schon bald nach seiner Amtsübernahme zurücktrat? Ich habe irgendwo ein Zitat von ihm entnommen; er müsse jede halbe Stunde irgendeine Milliarde unterschreiben und dann zum nächsten Tagesordnungspunkt übergehen, so könne es nicht weitergehen, so sein Zitat. Herr Prof. Dr. Paqué hat den Einfluss der Kritik von Hans-Werner Sinn [genannt], den kenne ich auch gut, bzw. sein Buch Kaltstart. Aber neben ihm gibt es tausende [weitere] Kritiker. Ich nenne nur Jan Prügel und Wolfgang Seibel und vor allen Dingen Franziska Augstein. Sie war früher Redakteurin des Zeit-Magazins, der FAZ und der Süddeutschen Zeitung. Damit will ich verdeutlichen, in welchen Funktionen diese Dame bisher gearbeitet hat. Alle diese Leute, da gibt es wie gesagt tausende, die übten und üben starke Kritik an der Arbeit der Treuhand. Besagte Dame, Frau Augstein, schrieb z.B., die Mitarbeiter der Treuhand hätten beides zugleich zuwege gebracht: Einen katastrophalen Kapitalismus und eine kapitale Katastrophe. Das ist natürlich zugespitzt formuliert. Aber ich hätte gerne gewusst, was Sie dazu sagen. Ich habe noch mehrere Fragen, aber um auch den anderen eine Gelegenheit zu geben, möchte ich mich zurückhalten. Ich wiederhole: Sicher, Sie haben Recht, aber auch die Kritiker haben Recht. Es gibt genügend

berechtigte Gründe, warum die Leute ihre Kritik vorgebracht haben. Soweit erst einmal.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Prof. Ahn Du-sun. Jedes Mal, wenn Prof. Ahn Du-sun spricht, hört es sich an als spreche ein Deutscher. Herr Lee Gak-beom hat sich auch zu Wort gemeldet...

[LEE Karkbum Ehrenprofessor, KAIST]

Noch einmal vielen Dank für den Vortrag von Herrn Paulin und Herrn Ludwig. Herrn Prof. Dr. Paqué ebenfalls vielen Dank. Zum großen Teil stimme ich mit Ihnen überein und auf dieser Basis stelle ich meine Frage. Wie sie alle wissen, gab es in Ostdeutschland vor der Wiedervereinigung COMECON. Unter diesem System fand die Industrieproduktion statt. 40% der Industrieproduktion des gesamten COMECON-Gebiets trug die DDR bei. Was bedeutet das? Die DDR war Kerngebiet der COMECON. Diesen großen Teil umzustrukturieren war sehr wichtig für dieses Gebiet. 1991 habe ich Deutschland besuchen können. Damals habe ich zwei Anlagen besucht. Jena Optik ist Ihnen ein sehr bekannter Name und diese weltbekannte Fabrik war gerade in der Phase entflochten zu werden; jede einzelne Maschine wurde gerade auseinander gebaut. Ich habe damals viele [potentielle] Käufer gesehen, z.B. aus Dänemark. Da habe ich den dänischen Käufer gefragt: „Warum sind Sie hierher gekommen, um Maschinen zu kaufen?“. Da hat er gesagt, die Maschinen [von hier] haben weltweit eine gute Reputation. Aber das Problem ist, dass der Standort, an dem diese Maschine stand, keine weltweite Wettbewerbsfähigkeit hatte. Sie hatten keine Produktion unter den Bedingungen des Weltmarktes, sondern nur unter dem System von COMECON, daran liegt das.

Eine zweite Fabrik, die ich damals besuchte, lag an der Elbe. Die Produktionslinie war einen Kilometer lang, war nagelneu gebaut. Auch diese Fabrik war in der

Phase der Demontierung. Die Russen mögen ja alles groß und gigantisch, und nach diesem Konzept, alles Große ist gut, wurde die gebaut. Um wettbewerbsfähig zu sein, hätte sie sich etwas verkleinern müssen. Damit die Fabrik auch den westdeutschen Standards entspricht, hätte sie den [dort geltenden] Umweltrichtlinien entsprechen müssen und das hätte zu viel Kosten für diese Fabrik verursacht. Ich habe diese beiden Beispiel genannt, um den Unterschied zwischen Nordkorea und der DDR zu verdeutlichen. Die DDR war Kern und Zentrum von COMECON. Nordkorea auf der anderen Seite ist schon lange aus diesem System heraus und seit mehr als 20 Jahren ist Nordkorea praktisch richtungslos. Was man auf Deutsch Verflechtung der Industrie nennen würde, ist zusammengebrochen. Abwicklung, Privatisierung - das war in der DDR ein viel kleineres Problem als es in Nordkorea werden wird.

Meine zweite Frage: Es soll Kosten gegeben haben, die Unternehmen nicht übernehmen wollten, soziale Kosten, seien es jetzt Umweltkosten oder im Falle Koreas gibt es bestimmte Beiträge, die sie für die Gesellschaft leisten sollten. Als Sie die Privatisierung fortgeführt haben, wie sind Sie umgegangen mit den Themen soziale Kosten, die die Unternehmen tragen musst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Prof. Dr. Schröder hat sich von der deutschen Seite zu Wort gemeldet. Würden Sie gerne sprechen?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Zum Vorigen. Ich weiß nicht, ob es jetzt hierhin passt. Soll ich es machen? Gut, mir ging es darum, ein paar Worte zu dem Abschnitt zu sagen, der nicht vorgetragen worden ist. Soll ich das jetzt machen? Zu den Wohnungsangelegenheiten.

[Moderator – Herr CHUN]

Vielleicht können wir dazu etwas später kommen. Sie können kurz dazu Stellung nehmen, aber wenn Sie zusätzlich eine Antwort haben zum aktuellen Thema, dann bitte ich Sie darum.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Ich mache jetzt den Vorschlag, dass ich die Sache mit den Wohnungsgesellschaften, die ja im Papier steht, aber nicht vorgetragen worden ist...jetzt sind aber eigentlich andere eher berufen, ich selbst fühle mich höchstens berufen zu der Angelegenheit mit Franziska Augstein etwas zu sagen, weil das den Typ der Kritik betrifft. Franziska Augstein, lässt übrigens nicht erkennen, dass sie sich mit den Problemen im Detail befasst hat. Sie vertritt eine Kritik unter folgender Voraussetzung: Wenn es irgendwo Millionen von Arbeitslosen gibt und 30% der Betriebe geschlossen werden, dann muss irgendetwas falsch gemacht worden sein. Sie fragt aber nicht, wer etwas falsch gemacht hat, sie nimmt einfach an, dass das die Treuhand war. Ich würde sagen, in diesem Fall wird aber der Arzt für die Krankheit, der Bote für die Nachricht verantwortlich gemacht wird. Der Zustand der DDR-Wirtschaft, der in der Verantwortung der SED lag und der auch in den Augen der SED-Fachleute höchst kritikwürdig war - ich habe Sie das letzte Mal schon mal darauf hingewiesen, dass es dieses Gutachten von Schürer für Egon Krenz gibt, in dem er den Zustand der DDR-Wirtschaft vor der Vereinigung im Oktober 1989 höchst kritisch beschreibt - da hat keine Treuhand einen Finger an die Wirtschaft gelegt. Da sagte ein SED-Funktionär [über die DDR-Wirtschaft]; sie ist ein Saustall. Aber Franziska Augstein ist der Meinung, die Treuhand muss dran Schuld sein; sie macht den Boten für die Botschaft verantwortlich. Dass die DDR-Wirtschaft in so erheblichem Maße nicht weltwirtschaftstauglich war, lag natürlich an der SED-Wirtschaftspolitik und das hat für die anderen ehemals sozialistischen Länder vergleichsweise auch so gegolten. Ich ärgere mich sehr

darüber und halte das für naseweis. Ich bin mit Franziska Augstein in der Sache richtig böse. Sie nimmt die schöne Position des Anklägers [ein]. Wissen Sie, die Position des Anklägers ist ungeheuer begehrt. Man kann auf die anderen herabsehen und das macht sie. Diese Art von Moralismus ist eine subtile Form von Hochmut.

[Johannes Ludewig Bundeskanzleramt, 1990 Koordinator Neue Länder]
Ich möchte auch noch einmal an diesem Punkt mit der Kritik anschließen. Man muss auch ein bisschen aufpassen. Ich bin damals ja die ganzen Jahre mit dieser Sache beschäftigt gewesen. Sie haben hunderte Journalisten und Leute, die dazu etwas schreiben. Nicht alle haben die gleiche Kompetenz, aber ich will Ihnen mal sagen, wie wir das gemacht haben. Wir haben - und das würde ich Ihnen auch empfehlen - nachgelesen, was der Sachverständigenrat in den Jahren damal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gesagt hat]. Herr Prof. Dr. Pohl war ja auch Mitglied des Rates, an sich die wissenschaftlich, wirtschaftlich höchste unabhängige Instanz, das würde ich Ihnen also empfehlen, mal nachzulesen in den Jahresgutachten. Oder die Gutachten der sogenannten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Forschungsinstitute, die ja auch halbjährlich in Deutschland ihre Gutachten schreiben. Wenn Sie das mal nachvollziehen und lesen, dann werden Sie sehen, dass doch eine fundiertere Auseinandersetzung mit der Situation damals auch zu ausgewogeneren und fundierteren Schlussfolgerungen und Empfehlungen führt. Also dieses Operieren mit einzelnen Journalisten, da könnte ich hier ein abendfüllendes Programm bieten. Da gibt es alles, was Sie sich wünschen. Aber die, die wirklich Kompetenz haben, das lohnt sich schon. Wir haben uns damals in der Bundesregierung, das darf ich Ihnen sagen, sehr intensiv damit auseinandergesetzt. Wir haben Gespräche geführt, der Bundeskanzler selbst, bei mehreren Gelegenheiten, mit Mitgliedern des Sachverständigenrates und auch der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Forschungsinstitute. Uns war ja klar, dass dies eine Situation war, die es so vorher

nie gegeben hat, da war das natürlich eine echte Herausforderung und wir haben versucht uns auch von der wissenschaftlichen Seite mit dieser Frage sehr grundsätzlich auseinanderzusetzen. Ich glaube, wenn Sie die Kommentare in diesen Gutachten mal nachlesen, dass das auch anerkannt worden ist. Ein zweiter Punkt, den Sie in Hinblick auf die Treuhandanstalt vielleicht auch berücksichtigen sollten, der nie erwähnt wird: Die Treuhandanstalt hatte ja einen Verwaltungsrat. Im Verwaltungsrat saßen nicht nur die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die waren sogar in der Minderheit. Da saßen im Wesentlichen nämlich nur die Vertreter des Wirtschafts- und des Finanzministeriums. Im Übrigen saßen da die sechs Ministerpräsidenten der ostdeutschen Länder und alle waren sie Mitglied im Verwaltungsrat und wir hatten vier Vertreter der Gewerkschaften. Der DGB, also die Dachorganisation, die DAG, die Angestelltengewerkschaft und die beiden großen Einzelgewerkschaften, IG Chemie und IG Metall. Die waren jeweils durch ihre Vorsitzenden im Verwaltungsrat vertreten und die grundsätzlichen Entscheidungen sind dort besprochen und abgesegnet worden. Das ist wichtig, damit man sich mal klarmacht, das waren keine Kommandoaktionen auf Weisung des Bundesfinanzministers oder des Bundeswirtschaftsministers, sondern das sind Dinge, wo wir versucht haben in einem Konsens mit den Verantwortlichen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d.h. den gewählten Ministerpräsidenten und auch den Gewerkschaften zu gemeinschaftlichen Lösungen zu kommen. Das ist eigentlich in fast allen Fällen gelungen. Nur damit man diese Landschaft etwas sieht. Ich glaube die Anstrengung hier zu gemeinsamen Lösungen zu kommen, ist wirklich groß gewesen, sonst hätten ja, gerade auch die [Chefs] der Gewerkschaften, gar nicht mitgemacht.

Noch ein Wort zu der Sache mit Herrn Golcke und Herrn Rohwedder, das habe ich nun selbst aus nächster Nähe miterlebt, weil ich ja im Kanzleramt für diese Dinge verantwortlich war. Ich sage Ihnen das mal einfach so: Das war ausschließlich eine Frage vollkommen unterschiedlich geprägter Persönlichkeiten zwischen Herrn Golcke und Herrn Rohwedder. Herr Rohwedder war damals zunächst Vorsitzender

des Verwaltungsrates und Herr Golcke war sozusagen der CEO dieser Treuhandanstalt und wenn Sie mit beiden Herren mal zu tun gehabt haben - die Gegensätze wie zwei Manager arbeiten, hätten nicht größer sein können. Es gibt einfach manchmal Persönlichkeiten, die nicht zusammenarbeiten können. Das ist keine Frage von Verschulden, sondern es passt einfach nicht, weil unterschiedliche Philosophien und Methoden der Arbeit [zusammentreffen]. Das hatte sich so entwickelt, dass die Bundesregierung hier eine Entscheidung treffen musste. Wir haben uns damals für Herrn Rohwedder entschieden. Das war nicht angenehm, ich habe nämlich das Abschlussgespräch mit Herrn Golcke geführt. Das war, wie ein früherer Chef des Bundeskanzleramts sagte, nicht vergütungssteuerpflichtig. Denn er hatte durchaus erhebliche Verdienste. Aber das war eine klassische Managementfrage, die Sie unter Managementgesichtspunkten entscheiden mussten. Da standen keine unterschiedlichen Philosophien oder Ideen im Raum, wie man die Arbeit der Treuhandanstalt organisiert, das hatte damit nichts zu tun. Das waren die beiden Punkte. Ich wollte noch einen Punkt ergänzen, nämlich zu dem, was Sie gesagt haben, Herr Prof. Lee, mit COMECON, das ist ein sehr wichtiger Punkt, vor allem auch psychologisch, weil wir Unternehmen damals gehabt haben, wie Sie richtig sagten, die im COMECON-Bereich eine absolute Spitzenposition hatten. Ich habe vorhin als wir uns bilateral unterhalten haben, das Beispiel der Filmfabrik Wolfen genannt. Die stellte Filme her für den ganzen COMECON-Bereich. War überall die Topqualität, die im COMECON-Bereich vorhanden war. Dann fielen die Grenzen und auf einmal stellte die Filmfabrik Wolfen fest, dass ihr Film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im Weltmarkt, nicht mehr verkaufbar war. Ich bin da gewesen, ich habe mit der Belegschaft gesprochen und das ist psychologisch für die Beschäftigten natürlich wahnsinnig schwer. Gestern waren sie die Topfabrik im ganzen COMECON und einen Monat später, der Markt ist auf, will keiner ihre Filme mehr haben. Der Wert des Unternehmens sinkt von ganz oben auf Null innerhalb von ein oder zwei Monaten. Das haben wir in vielen Fällen gehabt in der früheren DDR, in Ostdeutschland. Das war

natürlich psychologisch für die Betroffenen, gerade die Arbeitnehmer, das können Sie sich denken, eine sehr schwierige Situation, das kann man ja auch menschlich in jeder Beziehung verstehen. Die Anstrengungen für Privatisierungen, Umstrukturierungen wurden dadurch nicht unbedingt erleichtert. Zu diesen beiden Fragen wollte ich etwas sagen. Herr Dr. Hammann könnte bestimmt etwas sagen zu den Nachfolgeorganisation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Ich glaube die deutsche Seite hat sich zu Wort gemeldet und wir wollen noch eine Meinung hören. Herr Prof. Dr. Paqué hat sich als Erster zu Wort gemeldet. Wer möchte als Erster? Zunächst schnell Herr Prof. Dr. Paqué und danach gebe ich das Wort dann an Sie.

[Prof. Dr. Karl-Heinz Paqué ehem. Staatsminister der Finanzen in Sachsen-Anhalt]

Ich wollte noch auf einen Punkt eingehen, der hier kam. Eine fast persönliche Bemerkung, was die Leidenschaft und die Rationalität angeht. Wir diskutieren da natürlich leidenschaftlich, weil es Teil unserer Wirtschaftsgeschichte ist, aber ich glaube, dass gleichwohl in der Diskussion absolute Rationalität gefordert ist. Ich glaube, dass wir gerade in der Diskussion, die Prof. Dr. Richard Schröder angesprochen hat, natürlich auch von denen, die kritisieren, verlangen, dass sie sich dann auch auf die Diskussionsdiskussion einlassen und nicht gewissermaßen nur auf einer pauschalen Ebene ein Urteil fällen. Da ist Franziska Augstein in der Tat mit den Begriffen katastrophaler Kapitalismus und kapitalistische Katastrophe - das kann man sagen, aber was heißt das? Aus meiner wissenschaftlichen Sicht - und ich war nicht persönlich beteiligt an dem Ganzen, denn ich bin erst später, nämlich 1996 nach Ostdeutschland gegangen - muss ich dann natürlich auch die Frage stellen; was meinen Sie konkret? Gehen wir die Schritte durch, gehen wir die Verfahren durch. Da wird es dann erstaunlich dünn, ich spreche jetzt

über die deutsche Diskussion. In der Tat bleiben dann zu Recht nur die Wissenschaftler übrig und bei den Wissenschaftlern ist ja durchaus nicht ein so breiter Dissens über das damalige Handeln. Da ist tendenziell eher die stark kritische Position die Minderheit. Das ist aber nicht der zentrale Punkt, auf den ich eingehen wollte.

Ich wollte noch einmal, Herr Ludewig hat es schon angesprochen, auf diesen COMECON-Punkt eingehen. Herr Ludewig hat es sozusagen von der praktischen Seite beschrieben. Ich will es noch mal von der volkswirtschaftlichen Seite betonen, das ist nämlich das absolut zentrale Problem. All diese Unternehmen kamen aus einem hermetisch protegierten Bereich, der nicht unter weltwirtschaftlicher Konkurrenz stand und in dem es noch nicht einmal eine allgemein konvertible Währung gab. Also ein völlig wasserdicht abgeschlossener Bereich. Es kam tatsächlich vor, dass, Herr Lee, sie haben es glaube ich angesprochen, einem völlig neuen Unternehmen eine große Investition mit nach dem damaligen Anspruch modernen Maschinen hingestellt wurde und anschließend fällt die Mauer, öffnet sich der Markt und plötzlich sind die tatsächlich physisch ganz neuen Maschinen einfach völlig entwertet, weil sie Produkte herstellen, die niemand haben will. Also wenn man das Beispiel der Fotoindustrie nimmt, ein wunderbares Beispiel, weil die Konkurrenz im Weltmarkt relativ klar strukturiert ist, da sind große Unternehmen wie Fuji, Kodak damals, da war mit der großen Agfa-Tradition das Nachfolgeunternehmen Orwo bestens platziert im COMECON und in dem Augenblick, wo der Weltmarkt sich öffnet, ist damit Schluss. Das muss man sich immer klar machen, dass es in Ostdeutschland wirklich diese Öffnung in einem Zug gab, während in Mittel- und Osteuropa viel abgefedert werden konnte. Es gab noch eine Zollpolitik, die man einsetzen konnte, es gab vielfältige Instrumente. Die hatte man in Deutschland eben nicht mehr zur Verfügung. Das ist für die Menschen, die wirklich an ihrem Arbeitsplatz motiviert gearbeitet haben natürlich eine Tragik, aber ich habe noch keine Rezepte entdecken können, die die Dramatik der Situation in irgendeiner Weise auffangen [hätten können], außer

dem Versuch dann wirklich und möglichst schnell private Unternehmen zu haben, die weltmarktfähige Produkte herstellen, um nachhaltig ihre Position im Weltmarkt zu finden. Und das ist ja im Wesentlichen volkswirtschaftlich betrachtet der Weg gewesen, der gegangen worden ist. Also gerade die Situation, dass Ostdeutschland ein hochentwickeltes Industrieland innerhalb des COMECON war, macht die Situation so tragisch. Das könnte übrigens auch ein Unterschied sein zwischen Ostdeutschland und im Falle einer koreanischen Vereinigung [Nordkorea], weil man schon den Eindruck hat, dass erstens Nordkorea ein noch stärker agrarisch geprägtes Land ist und zweitens dieses Niveau [Ostdeutschlands] nie erreicht wurde und auch die Frustration, die daruch entsteht in der Bevölkerung, dass man das Gefühl hat, man produziert wirklich Wertvolles und das wird einem praktisch durch den Weltmarkt weggenommen, diese Frustration könnte möglicherweise erheblich geringer sein in Nordkorea. Das ist einer der wenigen Aspekte, wo ich glaube, dass eine koreanische Vereinigung psychologisch "einfacher" wäre, als eine deutsche Vereinigung. Gerade im Falle Mitteldeutschlands, der Region, wo ich auch tätig bin, wenn Sie sich da die Vorkriegsleistungsfähigkeit der mitteleutschen Industrie ansehen, dann war das eine Topregion in Deutschland und das wurde natürlich in den COMECON hineingerettet, aber eben unter diesen protegierten Bedingungen, wo innerhalb von 40 Jahren die Wettbewerbsfähigkeit verloren ging und dann sind wir bei dem, was Sie sagten, Herr Prof. Dr. Schröder; es war diese Isolierung vom Weltmarkt und die Kommandowirtschaft, die letztlich diese fehlende Wettbewerbsfähigkeit verursacht hat und die Treuhandanstalt hat sie praktisch nur aufgedeckt, in dem Augenblick, wo man dann in die Marktwirtschaft hineinging. Dann wird eben der Bote zum Sündenbock gemacht. Das war die Situation, die Sie dann in der Journalistik find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herzlichen Dank. Ich glaube die koreanische Seite hat sich zu Wort gemeldet. Herr Prof. Ahn, Herr Song, Herr Hong, sprechen Sie bitte in dieser Reihenfolge.

[AHN Doosoon Ehren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Ich habe vorhin gesagt, dass meine kritische Frage nicht unbedingt negativ verstanden werden sollte. Die Kritiker, deren Namen ich hier genannt habe, [die habe ich nicht genannt, um Einzelpersonen hervorzuheben], sondern ich habe nur Beispiele nennen wollen, welche Argumente angeführt werden, dafür bitte ich um Verständnis. Vielen Dank für Herrn Ludewigs Rat, verschiedene Gutachten und Berichte der Forschungsinstitute nachzulesen. Ich bin nicht in der Lage alle Berichte und Dokumente nachzulesen, aber ich habe schon versucht möglichst viele Dokumente und Papiere im Zusammenhang mit der Deutschen Einheit [zu lesen], z.B. 16 Bände der Enquete-Kommission. Auch die Dokumente des Kanzleramtes über die Deutschlandpolitik. Damit will ich sagen, dass ich [bei meiner Forschung] natürlich nicht nur die Kritiker berücksichtige, sondern natürlich auch die positiven, detaillierten Berichte. Damit wollte ich mögliche Missverständnisse ausräumen. Danke schö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dann Herr Prof. Song...

[SONG Taesoo Professor,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of 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Erst einmal vorweg. Wir machen hier postsituationale Bewertungen. Die Lage ist beendet, die Bewertung findet jetzt danach statt. Worauf es bei der Vorphase, der früheren Phase ankam, waren verschiedene Faktoren; man musste auf die Zeit achten, es brach alles zusammen, viele sollten ihre Arbeitsplätze trotzdem behalten. Dass Sie uns diese vielen Faktoren genannt haben, hat uns viele

Anregungen gegeben. Herr Prof. Dr. Paqué hatte es ja bereits erwähnt, aber die Kluft zwischen Nord- und Südkorea ist viel größer als zwischen Ost und West. Die nordkoreanische Wirtschaft ist die sogenannte Jaju-Wirtschaft [Autarkie]. Selbst wenn sich Nordkorea zum Weltmarkt hin öffnen sollte, kann man sich [die Rückständigkeit des Niveaus] der Wirtschaft gar nicht vorstellen, wie sollen wir da Wettbewerbsfähigkeit herstellen? Ich glaube wir sollten einfach bei Null starten, d.h. über Wettbewerbsfähigkeit auch nur nachzudenken wäre Luxus im Falle Nordkoreas. Sei es das Arbeitsmarktproblem oder Mobilität, wir können die Mobilität von Nordkoreanern nicht stoppen, das ist auch ein wichtiger Faktor. In Nordkorea haben wir ja ausreichende Arbeitskräfte. Diese Arbeitskräfte könnten als eine Art Reservoir benutzt werden. Wenn wir all diese Faktoren zusammennehmen und [in dieser Lage] Privatisierung durchführen, könnten weitere wesentliche Probleme auftauchen: Sie als jemand, der über die Politik nachgedacht hat, was sollte man ganz fundamental bedenken, wie sollte man fundamental arbeiten? Wenn Sie uns dazu Vorschläge machen könnten.

[Moderator – Herr CHUN]

Herr Hong Yang-ho.

[HONG Yangho Vorsitzender, Stiftung für die Unterstützung des Kaesong Industrieparks]

Bevor ich meine Frage stelle, möchte ich einige Missverständnisse klären. Als Deutschland wiedervereignet wurde, dachten viele, dass Westdeutschland Ostdeutschland absorbiert hat. Aber nun weiß man ja, dass es in Ostdeutschland eine friedliche Revolution gab. Das haben wir schon so verstanden, die Koreaner wissen das, darüber sollte es keine Missverständnisse geben.

Zweiter Punkt. Meine Frage gilt der Arbeit der Treuhandanstalt. Herr Paulin, Sie haben ja die Erfahrung gemacht, dass Sie ohne die Erfahrungen anderer an die Arbeit gehen mussten. Im Falle Koreas gibt es bei Unternehmen sogenannte

ungesunde Verbindlichkeiten [bzw. faule Kredite]. Dafür gibt es in Korea eine bestimmte Regierungsinstitution, die besonders dies zur Aufgabe hat, nämlich Unternehmen mit ungesunden Verbindlichkeiten zu übernehmen und dann zu managen. In Deutschland soll es auch eine ähnliche Institution gegeben haben vor der Wiedervereinigung. Diese Institution hätte dann ja eigentlich diese Aufgabe auch übernehmen können, ohne eine Gründung der Treuhandanstalt oder nicht? Meine nächste Frage ist dann bezüglich des Personals: Von 400 ist die Zahl der Mitarbeiter der Behörde auf über 4000 angestiegen. Meine Frage ist, welche Leute waren das? Haben Sie von vorn herein Fachkräfte rekrutiert oder wurden die einfach angestellt und dann ausgebildet? Ich stelle diese Frage, weil im Falle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schon von vornherein Fachkräfte trainiert werden könnten, dann könnten wir uns viel effektiver vorbereiten. Wenn Sie uns dazu einen Rat geben würden, wie wir rekrutieren sollen für solche Institutionen? Meine nächste Frage. Herr Ludewig und Herr Prof. Dr. Schröder haben es schon erwähnt, zwischen Ost und West gab es Verhandlungen und die Stimmung war für die Vereinigung. Sie meinten, es habe eine Kommission gegeben, mit Wirtschaftsexperten, Ministerpräsidenten und Gewerkschaften. Ich kann kaum glauben, dass es immer zu einer friedlichen Lösung gekommen sein soll. Es hat bestimmt sehr viele Konflikte gegeben. Welche Konflikte, Streitpunkte hat es gegeben? Wie haben Sie diese gelöst? Dann noch eine persönliche Frage: Die Treuhandanstalt ist ja eigentlich ein westdeutsches System, es ist also eine Art Installierung des westdeutschen Systems in Ostdeutschland. Diejenigen, die zuständig waren für diese Struktur waren sicherlich Westdeutsche. Noch einmal zurück zur vorherigen Frage: Die ostdeutschen Mitglieder haben bestimmt ihren ostdeutschen Stand verteidigt. Wie sind Sie also vorgegangen, wie haben Sie verhandelt und wie sind Sie zu einer Einigung gekomme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Hong. Von der deutschen Seite Herr Dr. Hammann oder Herr

Prof. Dr. Schröder oder Herr Prof. Dr. Pohl, Sie haben sich zu Wort gemeldet. Sie können Kommentare abgeben, Fragen beantworten oder selbst Fragen stellen. Herr Dr. Hammann?

[Dr. Detlev Hammann Geschäftsführer der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Nur ganz kurz. Es bezog sich auf anfänglich gestellte Fragen von Herrn Ahn. Die Antwort unterstreicht auch noch einmal den Punkt, den Herr Ludewig gemacht hat, nämlich, dass z.B. die TLG erst Ende vergangenen Jahres erfolgreich privatisiert worden ist. Der erste Versuch ist gescheitert, weil das zur Zeit der Lehman-Brothers-Krise nicht geklappt hat. Ich hatte ja gestern ausgeführt, die Privatisierung im Bereich Land- und Forstwirtschaft zieht sich noch sehr viel länger hin. Da ist ganz klar ein Unterschied zu dem, was hier im Bereich der Industrie geschildert wurde. Die BVS selbst gibt es immer noch. Sie ist personenlos, sie ist seit vielen Jahren in Abwicklung; offenbar als Zustand und nicht so sehr als Prozess aufgefasst, aber das ist ein anderes Thema. Da gibt es auch eine Abwicklerin, das ist die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Wir machen das alles sehr kompliziert. Hintergrund ist, dass die BVS als Nachfolger der Treuhandanstalt steuerfrei ist und das ist ein gewisser Vorteil. Den Erblasttilgungsfonds gibt es auch noch. Er ist im Grunde aber technisch finanziert. Er wurde mal finanziert durch die Gewinne der Bundesbank und durch Erlöse von Ersteigerungen von Frequenzen. Er wird weitergeführt, aber er ist etwas in den Hintergrund getreten. Wir können das gerne noch einmal bilateral klären. Vielen Dank.

[Moderator – Herr CHUN]

Herr Prof. Dr. Schröder..sprechen Sie bitte .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Es gibt in unserer Diskussion jetzt drei Ebenen, wenn ich das richtig sehe. Die erste Ebene ist die Ebene, was tatsächlich geschehen ist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Die zweite Ebene ist die, wie man das interpretieren soll und dann kommt die dritte Ebene, ob man für Korea was daraus lernen kann. Ich sehe so ein bisschen meine Aufgabe, wo ich feststelle, dass auf der ersten Ebene was nicht stimmt, obwohl das ein bisschen wie Oberlehrer wirkt, das zurechtzurücken, denn es wird natürlich alles Folgende falsch, wenn bestimmte Tatsachen falsch verstanden sind. Das ist der Grund, warum ich diese Eigentumswohnungssache aus dem Referat, die nicht vorgetragen worden ist, noch mal aufgreifen möchte.

Da ist die Rede davon, dass 1,1 Million Häuser von Genossenschaften übernommen worden sind durch die Kommunen. Da muss ich Sie einfach darauf hinweisen: Wohnungsgenossenschaft bezeichnet etwas völlig anderes als eine Wohnungsgesellschaft. Eine Wohnungsgesellschaft, die es bis heute noch gibt, ist Eigentümer der Wohnungen, die im Wesentlichen vermietet werden, bis heute. Mehr als die Hälfte der Ostdeutschen, im Westen ist das nicht anders, lebt auch heute in Mietwohnungen. Wohnungsgenossenschaften sind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überhaupt nicht angefasst worden. Diese Wohnungsgesellschaften hießen KWV. AWG, das waren echte Genossenschaften, bei denen die Genossenschaftsmitglieder Eigentümer ihres Hauses sind. Da ist gar nicht dran gerührt worden. Das muss man sehen. Hier entsteht der Eindruck, es sei eben doch irgendwie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noch einmal verkauft worden. Das habe ich das letzte Mal schon gesagt: Sie müssen genau unterscheiden. Ich weiß nicht, wie das im Koreanischen ist, das sind vielleicht Übersetzungsfragen. Aber Eigentumswohnungen und Häuser als Eigentum sind bei uns zwei verschiedene Rechtsfiguren. Sie wissen es vielleicht, entschuldigen Sie, wenn es etwas oberlehrerhaft erscheint, aber warum haben die Wohnungsgesellschaften Häuser, also meistens Hochhäuser oder große Häuser

verkauft? Der Grund ist der, das Problem kam auch bei der Treuhand auf, dass die DDR ihren Staatshaushalt stimmig gemacht hat, indem sie ohne korrekten Anlass Schulden teils auf Wohnungsgesellschaften, teils auf Betriebe einfach politisch draufgelagert hat, damit die Einnahmen und die Ausgaben stimmen. Das kann man nur im Sozialismus machen. Und das platzt auch erst, wenn der Sozialismus zuende ist. Nun war die Frage, was man mit diesen Schulden macht. Die Betriebsschulden, also politische Schulden, die nichts mit der Art zu tun hatten, wie der Betrieb gewirtschaftet hat, sind bei der Treuhand gelandet. Bei den Wohnungsgesellschaften hat man einen Teil getilgt und von dem anderen Teil gesagt, Ihr müsst so viele Häuser verkaufen, bis Ihr diese Schulden auch weg habt. Diese Hausverkäufe sind eine Strategie der Entschuldung der Wohnungsgesellschaften gewesen und haben nichts damit zu tun gehabt, reichen Menschen etwas in die Tasche zu stecken. Die Dresdner wissen das noch genau, die haben ja einen großen Coup gemacht. Die Kommune hatte ziemlich viele Schulden und da sind sie auf die Idee gekommen, dass sie die gesamten Wohnungsgesellschaftsbestände verkaufen und schuldenfrei sind. Die einen sagen, das ist ja fantastisch, was Ihr da gemacht habt. Die anderen sagen, wie könnt Ihr einem Privatinvestor diese Häuser geben. Solange sie in der kommunalen Wohnungsgesellschaft waren, war doch sicher, dass nicht der Mietwucher ausbricht. Andere sagen, dafür haben wir ja Gesetze und Gerichte, dass der Mietwucher nicht ausbricht. Das war jetzt mein Versuch, Ihnen deutlich zu machen, es ist noch viel differenzierter und wir müssen immer darauf achten, dass nicht schon auf der Ebene des Tatsächlichen Fehlinformationen entstehen.

[Moderator – Herr CHUN]

Herr Prof. Dr. Pohl. Sprechen Sie bitte..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Vielen Dank. Prof. Lee hat ein Wort gewählt, "neue Arbeitsteilung für Ostdeutschland". Das war ein Thema und Prof. Song hat von Nordkorea gesagt, man müsse es beim Start auf Null setzen. Das ist genau der Punkt, wo ich jetzt Stellung nehmen will.

Hier muss man verstehen, was eigentlich das Grundproblem in Ostdeutschland war und was das Grundproblem genauso auch für Nordkorea sein wird. Das Grundproblem war nach der Öffnung der Grenze in Ostdeutschland, dass niemand Produktion von ostdeutschem Boden aus brauchte. Ich gebe Ihnen ein Beispiel. Um Autos in Ostdeutschland zu verkaufen, können Sie sich von allen Märkten der Welt Autos holen. Chemische Produkte müssen Sie nicht im Osten produzieren, die können Sie importieren, Kleidung... - Sie brauchten eigentlich nichts. Auf den Weltmärkten ist alles im Überfluss vorhanden. Damit ist doch klar: Wenn Sie das einfach laufen lassen, wird jede industrielle Produktion in Ostdeutschland untergehen, weil natürlich die Kapazitäten an den Weltmärkten da sind und es [dort] Wettbewerbsvorsprünge gibt. Das wird in Nordkorea ganz genauso sein. Wenn Sie das öffnen, werden sofort alle Anbieter der Welt vor der Tür stehen, Fernsehapparate, Kameras, Autos anbieten. Das bedeutet, es entsteht dort überhaupt keine Produktion. Das ist das strategische Problem auch in Ostdeutschland gewesen und jetzt ist die Frage, was tun Sie? Jetzt können Sie sagen, internationale Arbeitsteilung ist eben so. Dann kaufen wir eben die Autos aus Frankreich oder aus China, aber produzieren sie nicht dort. Das bedeutet natürlich eine Katastrophe für das Land, denn wenn Sie nichts produzieren, haben Sie keine Kaufkraft, keine Arbeitsplätze. Also ist doch die Aufgabe gewesen und das wird in Nordkorea überhaupt nicht anders sein, Sie müssen gegen den internationalen Wettbewerb und gegen den Bedarf der Weltmärkte eine eigenständige industrielle Produktion entwickeln. Das ist die wesentliche Aufgabe der Treuhandanstalt gewesen. Man hätte ja alle Unternehmen einfach schließen können, dann wären trotzdem Autos

da gewesen. Das ist aber genau der Punkt: Jetzt ist die Frage, reicht das? Die Antwort ist, es reicht natürlich nicht. Wenn Sie jetzt sagen, in Nordkorea Start auf Null, unterstelle ich, dass Sie überhaupt keine Unternehmen dort erwarten, die man durch Privatisierung wettbewerbsfähig machen kann. Dann fällt natürlich dieser Weg weg, den die Treuhandanstalt gegangen ist. Aber wir haben in Deutschland ja nicht nur die Unternehmen privatisiert, die da waren, sondern ein ganz wesentlicher Teil war doch die Entstehung neuer Unternehmen. Wir haben Investitionen gefördert. Durch massive Programme Neugründungen [von Unternehmen gefördert]. Das ist ein ganz schwieriger Prozess. Sie können ja nicht einfach sagen, wir gründen jetzt mal ein Unternehmen. Sie brauchen einen Investor, eine Idee, Manager, technisches Wissen, Sie brauchen Innovation. Das ist ein ganz wesentlicher Punkt. Dass Ostdeutschland heute vergleichsweise gut dasteht, ist nicht nur auf die Privatisierungen zurückzuführen, sondern auch auf die Investitionsförderung. Natürlich ist dieser ostdeutsche Standort heute im internationalen Wettbewerb nicht so stark wie es der westdeutsche ist. Das ist die Tragik, die dann entsteht, wenn nach 40 Jahren Sozialismus der Raum in eine andere Ordnung kommt. Aber ich kann nur sagen, wenn Sie sich über Nordkorea Gedanken machen, müssen Sie erstens sehen, es gibt keinen Bedarf für Produktion dort, Sie werden Verdrängungswettbewerb haben, also müssen Sie ein Programm haben, dort Investitionen zu fördern. Unternehmerisches, Aktivität dort zu fördern. Dann sage ich noch etwas ganz Böses, etwas, was wir in Deutschland nicht gemacht haben, aber was hier wahrscheinlich unumgänglich ist: Wenn Sie eine solche Situation haben, können Sie natürlich die heimische Wirtschaft, sagen wir mal die ostdeutsche Wirtschaft, wir hätten die ja schützen können, indem wir Importbeschränkungen machen, also Eingriffe in den Außenhandel. Das ist natürlich für Deutschland völlig undenkbar, das ist keine Option, das man in den freien Handel eingreift und es war auch nicht nötig, weil wir natürlich als gesamtdeutscher Wirtschaftsraum so viel Kraft besaßen, dass wir das verkraften konnten. Aber Sie werden sich im Falle Nordkoreas die Frage stellen müssen,

wenn es nicht so schnell mit den neuen Investitionen geht, ob man dann eine Phase hat, in der man die Region abschottet vor dem internationalen Wettbewerb. Ich weiß, das ist eine sehr heikle Sache, weil das zu Fehlentwicklungen führen kann, aber Sie müssen die Zeit gewinnen, damit überhaupt im Norden eine Industrie entstehen kann und insofern bedarf es dann auch außenwirtschaftlicher Eingriffe. Es bedarf Subventionen und diese Subventionen, um überhaupt Investitionen zu erhalten, muss der Süden zahlen. Wer denn sonst? Im Norden ist ja nichts da! Das ist der Preis, den man dann zahlen muss. Wir in Deutschland haben das mit den Subventionen auch gemacht und machen das bis heute noch, also Investitionsförderung. Wir haben es mit der Privatisierung gemacht, mit Erfolg. Wir brauchten dieses außenwirtschaftliche Instrument nicht. Das bedeutet jetzt aber, Herr Lee, neue Arbeitsteilung - die neue Arbeitsteilung, die sich ergibt, wird sich danach richten, inwieweit es gelingt, sozusagen gegen den Druck der Weltmärkte, gegen den Bedarf der Weltmärkte, dort industrielle Produktion anzuregen durch Subventionierung und ähnliches mehr. Jeder Investor soll willkommen sein, nicht nur Leute aus dem Land, sondern auch von den Weltmärkten, aber Sie brauchen eine Schutzmaßnahme und wenn Sie das beachten, dann glaube ich, kommen Sie auf einen Weg, der sozusagen den wirtschaftlichen Teil der Wiedervereinigung möglich macht. Wenn Sie das nicht machen, werden Sie am Ende mit einem Dauersubventions- bzw. Dauerkrisengebiet Nordkorea zu tun haben. Sie sagten, die Mobilität lasse sich nicht stoppen. Die Mobilität lässt sich nicht stoppen, wenn die Lage im Norden aussichtslos ist. Aber wenn Sie den Menschen glaubhaft machen, dass sie eine Perspektive haben, dass es vorangeht, dass es besser wird, dann werden Sie die Mobilität vielleicht nicht stoppen, aber stark reduzieren. Ich meine, auch bei uns in Deutschland, wo die Lohnunterschiede heute immer noch 20% sind - im Osten also nur 80% des Westniveaus - gibt es keine massive Abwanderung, denn der Abstand ist so [gering] geworden, dass die Leute das akzeptieren und man im Osten auch eine Perspektive hat. Der einzige Weg Mobilität zu stoppen, und das müssen Sie [beachten], wenn

Sie hier nicht ein Plätzen des Ganzen haben wollen, ist eine Perspektive durch Investitionen im Norden zu schaffen und das können Sie nur unter der Wahrnehmung von Investitionsförderung und der Beschränkung des Außenhandels.

[Moderator – Herr CHUN]

Das waren sehr wertvolle Informationen, die wir als Beispiel für Korea nehmen können. Herr Yu Ho-yeol hat sich zu Wort gemeldet, sehe ich. Herr Prof. Yu Ho-yeol...

[YOO Hoyeol Prof. für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

Was die Treuhandanstalt angeht, hatte ich meinerseits Vorurteile, die haben Sie größtenteils abgebaut. Aber wie ich Ihnen so zuhörte, kam mir ein Gedanke: Falls Korea wiedervereinigt wird, glaube ich gar nicht, dass es zu wenige Unternehmen in Nordkorea gibt. Ich kann ja die Biermarke nennen, Taedonggang. Die Südkoreaner lieben ja den Geschmack von Taedonggang-Bier, das ist zumindest ein Faktor. Wenn wir nach einer Alternative suchen, kann man den Kaesong-Industriepark als Kooperationsprojekt nennen. Gab es in Deutschland vor der Vereinigung eine solche Form der Zusammenarbeit? Wir haben ja 50.000 Angestellte im Industriepark Kaesong beschäftigt. Hätte der Park eine positive Entwicklung genommen, hätte sich diese Zahl noch weiter erhöht.

Meine zweite Frage ist, in Nordkorea gibt es vornehmlich den Agrarsektor, aber es gibt auch durchaus wettbewerbsfähige Sektoren wie die Rüstungsindustrie und als zweiter Sektor wären Bergbau und Schwerindustrie zu nennen. Wie können wir diese beiden Sekto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gut nutzen? Hier sollten wir nicht nur wirtschaftliche Aspekte, sondern auch politische Aspekte bedenken. Gab es in Ostdeutschland ähnliche Beispiele? Was ist aus der Rüstungsindustrie der DDR geworden, falls es die dort gegeben hat?

Nächster Punkt: Nordkorea hat langfristige [Kooperations-]Verträge mit China. Wie sind Sie mit ähnlichen Dingen in Ostdeutschland umgegangen, wenn es in

Ostdeutschland einen langfristigen Vertrag mit einem Drittland gegeben hat, was ist dann mit diesen Unternehmen passiert?

[Moderator – Herr CHUN]

Herr Prof. Yu Ho-yeol hat einige Fragen gestellt, aber die Zeit ist leider um. Es ist an der Zeit für das Mittagessen und wir haben noch genug Zeit am Nachmittag für die Diskussion. Auf der deutschen Seite hat sich Herr Ludewig zu Wort gemeldet. Wir werden also nur noch die Antwort von Herrn Ludewig hören und die restlichen Antworten werden wir auf den Nachmittag verlegen.

[Johannes Ludewig Bundeskanzleramt, 1990 Koordinator Neue Länder]

Vielen Dank, ich möchte noch zwei Dinge sagen. Zum Einen zur Treuhandanstalt, weil das wichtig ist, dass man das versteht. Die Treuhandanstalt ist ja nicht nur konzipiert worden als ein Instrument, um diese ganzen Privatisierungen, Sanierungen und Abwicklungen zu machen, sondern auch als ein Instrument oder ein Ort, wo man versucht, mit den wesentlichen Gruppen, die politisch eine Rolle spielten, mehr oder weniger im Konsens zu handeln. Ich betone noch einmal, der Verwaltungsrat, also der Aufsichtsrat der Treuhandanstalt in seiner Zusammensetzung, das wird viel zu wenig beachtet, ich war selbst einmal als Staatssekretär des Wirtschaftsministeriums Mitglied des Verwaltungsrates und dann hatte ich noch den Kollegen aus dem Finanzministerium, wir waren aber nur zwei - da gab es aber daneben sechs Ministerpräsidenten und es gab vier Gewerkschaftsvertreter. Es gab sicher manchmal Diskussionen, aber ich sage mal, im Wesentlichen, also die wichtigen Entscheidungen der Treuhandanstalt sind einvernehmlich getroffen worden. Ich habe nie erlebt, dass sich von Entscheidungen, die die Treuhandanstalt getroffen hat, nachher ein Ministerpräsident oder eine Gewerkschaft wieder distanziert hätte. Vor allem die Ministerpräsidenten nicht, bei den Gewerkschaften war das manchmal etwas schwierig, weil natürlich die Arbeitnehmervertreter in den betroffenen Betrieben etwas anders sahen als die

Gewerkschaftsorganisation als Ganzes. Das kann man ja auch verstehen. Das ist sehr wichtig, das wirklich zu sehen, dass hier die wichtigen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Gruppen gemeinsam vertreten waren und eigentlich diese Politik der Treuhandanstalt vom Anfang bis zum Ende unterstützt und mitgetragen haben. Mein zweiter Punkt, anschließend an das, was Herr Prof. Dr. Pohl gesagt hat, denn das ist ja eigentlich das nach vorne gerichtete: Was kann man sich vorstellen, was könnte sinnvoll sein bzw. was müsste Südkorea tun, um sich vorzubereiten, wenn eine solche Situation kommt? Ich glaube alles, was Herr Prof. Dr. Pohl gesagt hat, ist richtig. Man muss vielleicht noch Eines hinzufügen: Sie müssten, das haben wir auch gemacht als das bei uns mehr oder weniger plötzlich kam, eine Art Dialog führen mit Ihrer eigenen Wirtschaft. Die Probleme in Ostdeutschland kann nicht die Politik allein lösen, das war immer meine Meinung. Sie müssen einen Dialog führen mit der Wirtschaft, wie sieht denn die Wirtschaft ihre Aufgabe eigentlich? Wir haben z.B. als dieser Prozess losging, im Bundeskanzleramt regelmäßige Runden, also Treffen, gemacht, die wir Aufbau Ost genannt haben. Dort haben sich getroffen die Bundesregierung, die Leitung hatte der Bundeskanzler, die zuständigen Minister, die sechs ostdeutschen Ministerpräsidenten, die Gewerkschaften und die Spitzenverbände der Wirtschaft, der Industrie und auch - je nach Thema - große Einzelunternehmen, die hier eine Rolle gespielt haben. Die waren alle da vertreten. Wenn ich selbst zurückblicke, ist es wichtig, dass man der Wirtschaft klar macht, dass ein solcher Prozess der Wiedervereinigung, ich wiederhole es noch einmal, von der Politik alleine nicht gelöst werden kann. Es gab in Deutschland, aus meiner Erfahrung betrachtet, zwei Arten von Unternehmensführern: Es gab die einen, die gesagt haben, selbstverständlich, das ist eine historische Situation und mein Unternehmen wird zur Lösung dieser Probleme einen Beitrag leisten. Ich sage Ihnen mal ein Beispiel: Der damalige Chef von Volkswagen, der erschien im Bundeskanzleramt beim Gespräch mit dem Bundeskanzler. Der hat da gar keine Rechnung aufgemacht, der hat gesagt, das ist eine historische Situation, Volkswagen wird ein Werk in Ostdeutschland bau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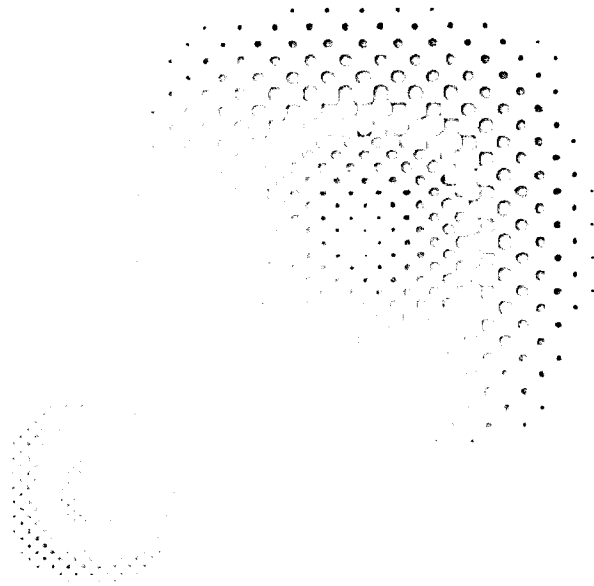
Punkt. Dasselbe, das war noch interessanter, hatten wir auch bei dem Autohersteller Opel, ein amerikanisches Unternehmen. Der damalige Chef von Opel war ein Amerikaner in Deutschland, David Hughes. Das werde ich nie vergessen. David Hughes kam auch ins Kanzleramt und hat dem Bundeskanzler gesagt, Herr Bundeskanzler (er sprach ein wunderbares Deutsch mit etwas amerikanischem Akzent), wir sind ein deutsches Unternehmen, wir wissen, was wir zu tun haben! Und Opel hat ja auch ein Automobilwerk in Eisenach gebaut, das wurde vorhin ja von Herrn Paulin erwähnt. Es gab also eine Reihe von Unternehmen, die haben diese Situation als eine historische Aufgabe für ihr Unternehmen gesehen, einen Beitrag dazu zu leisten. Es gab aber auch Unternehmen, das will ich hier ganz offen sagen, die das nicht so gesehen haben, die gesagt haben, wenn sich das rechnet, dann mache ich das und wenn es sich nicht rechnet, dann machen wir das nicht. Haben wir auch gehabt in Deutschland. Wir hatten ja nicht sehr viel Zeit das vorzubereiten, weil es so plötzlich kam. Deshalb ist es wichtig, eine Art Dialog mit der Wirtschaft zu beginnen und zu überlegen, dass auch die Wirtschaft versteht, dass sie in einem solchen Prozess eine wichtige Aufgabe, eine zentrale Aufgabe hat. Ich habe früher in Deutschland in einigen Reden gesagt: „Es darf nicht passieren, dass wir eine Situation [haben] wie beim Fußballspiel: Alle sitzen auf den Rängen als Zuschauer und unten spielen nur wenige, die aktiv sind. Wir brauchen nicht so viele Zuschauer, sondern wir brauchen Leute, die mitmachen“. Das ist ein Gefühl, eine Botschaft, die Sie Ihrer Wirtschaft rechtzeitig mitteilen [müssen], dass also von der Politik her erwartet wird, dass man nicht als Zuschauer dazusitzt und schaut, was die Politik da macht, also schaut, ob es gut genug ist, damit man sich engagiert, sondern dass man selbst aktiver Mitspieler ist. Dass also Gesellschaft und Politik einen Beitrag der Wirtschaft, d.h. der Unternehmen, erwarten. Das ist gut, wir hatten keine Zeit, das so vorzubereiten. Sie haben ja etwas mehr Zeit. Dann kann man auch überlegen, Sie kennen ja das Profil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wo sind die Stärken, wo sind die Schwächen, da kann man ja Überlegungen anstellen, wo denn

Investitionen im Falle eines Falles sinnvoll sein könnten. Wenn man diese Überlegungen schon einmal angestellt hat, ist man schon einen ganzen Schritt weiter und kann dann noch weiterführende Überlegungen anstellen. Das wäre schon ein sehr konkreter Weg, immer auf der Basis all der Dinge, die Prof. Dr. Pohl vorhin beschrieben hat. Sie könnten sogar überlegen, ob Sie eine eigenständige Währung eine zeitlang weiterführen. Auch der Wechselkurs ist ja ein Mechanismus, den man in diesem Zusammenhang benutzen kann. Wenn Sie diese Parameter alle zusammen sehen und ein interessantes, weiterführendes Gespräch mit der Wirtschaft führen, könnte das eine sehr wichtige und erfolgreichversprechende Vorbereitung einer solchen Situation sein.

[Moderator – Herr CHUN]

Vielen Dank, Herr Ludewig. Auch unser Vormittagsprogramm war genauso leidenschaftlich, wie ich mir das vorgestellt habe. Ich möchte meinerseits eine Zusammenfassung machen. Herr Yu Ho-yeol hat erwähnt, was überhaupt in Nordkorea wettbewerbsfähig ist. Er hat die Biermarke Taedonggang erwähnt. Die Deutschen wissen wahrscheinlich nicht, was diese Marke für Nordkorea bedeutet. Sie kennen ja die Zeitschrift The Economist aus Großbritannien, dort ist ein sehr interessanter Artikel erschienen. Dort wurden verschiedene kommerzielle Biermarken aus Südkorea und Nordkorea bewertet und die Zeitschrift bewertet das Taedonggang-Bier geschmacklich viel besser als südkoreanische Marken. Kurz danach hat die südkoreanische Tageszeitung Joongang Ilbo geschrieben, wie kann es sein, dass Nordkorea besseres Bier braut als Südkorea? Die Zeitung hat dann Experten aus aller Welt kommen lassen und hat einen Blindtest gemacht mit Biermarken aus Nordkorea und Südkorea. Einstimmig haben sie die nordkoreanische Marke als die beste gewählt. Ich bin ja ebenfalls Bierliebhaber und unter den Bierliebhabern in Südkorea gab es darüber eine große Kontroverse. Eine Theorie ist, Nordkorea verfolge die Tradition Osteuropas viel besser, weil diese Tradition in Nordkorea unverändert, unkontaminiert blieb. Au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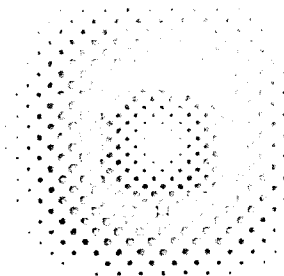
der anderen Seite habe Südkorea [sowohl] den Einfluss der USA und auch den Einfluss der Tradition aus Deutschland; die Traditionen hätten sich in Südkorea also vermischt. In Südkorea wird außerdem Bier nicht benutzt, um Bier allein zu trinken, sondern man nutzt es vor allem als Mischung mit Schnaps. Deshalb sei für die Südkoreaner der Geschmack von Bier unwichtig. Deshalb sei auch der Geschmack der südkoreanischen Marken nicht gut. Es gibt also auch hier viele verschiedene Theorien. Einige sagen, Nordkorea sei eine Agrargesellschaft, aber früher war Südkorea eher die Agrargesellschaft und Nordkorea war eher das Land der Industrie, mit vielen Mineralien und Industrieanlagen. Diese Charakteristik hat sich inzwischen sehr geändert, aber wenn wir uns auf die Wiedervereinigung vorbereiten, können wir nicht sagen, dass wir alles wissen über Nordkorea. Ich habe ja die Biermarke als Beispiel genannt, aber wir sollten das gut analysieren und verfolgen, ob es nicht doch weitere Sektoren gibt, die genauso wettbewerbsfähig sind wie die Marke Taedonggang. Eine solche Analyse wäre für uns sehr hilfreich. Damit beende ich das Vormittagsprogramm. Auf der 22. Etage gibt es einen Saal namens Ruby Hall, da werden wir unser Mittagessen haben. Vielen Dank für Ihre Teilnahme.



4

Unternehmensprivatisierung

28. Juni 2013





28. Juni 2013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Leiter der Abteilung
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liebe koreanische Freunde, liebe deutsche Kollegen, wenn wir dann mit der Veranstaltung fortfahren könnten und Sie so langsam Platz nehmen...ich verstehe, dass nach einem derart guten Mittagessen die erste Reaktion nicht ist, gleich wieder an die Arbeit zu gehen, aber ich glaube, ein bisschen haben wir noch zu tun. Ich würde vorschlagen, dass wir in der Agenda, die wir uns selbst gesetzt haben, jetzt fortfahren und die Fragestellungen, die sich vielleicht noch aus der morgentlichen Diskussionsrunde ergeben haben, dann im Anschluss in der gemeinsamen Diskussion oder auch bei der vorgesehenen Gesamtdiskussion am Ende noch einmal kurz aufgreifen, um dann ein gesamtrundes Bild zu bekommen. Wir hatten und haben vorgesehen, dass wir uns heute Nachmittag den besonderen Fragen des Umgangs mit Ansprüchen von Alteigentümern zuwenden wollen. Dazu darf ich als Erstes, einen Vortrag zu den besonderen Fragestellungen der koreanischen Kollegen zu diesen Ansprüchen erbitten und darf Sie bitten, Herr Prof., dass Sie beginnen. Vielen Dank.

[AHN Doosoon Ehren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Vielen Dank Herr Vorsitzender. Ich habe drei Teile vorzutragen, die beiden ersten Teile möchte ich auf Koreanisch vortragen. Erstens, Unübersichtlichkeit der Besitzrecht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Zweitens, Notfallplan zur Verhinderung von erwarteten Katastrophen im Falle eines Kriegs auf der Halbinsel.

Mein dritter Teil gliedert sich in verschiedene Fragen.

Dann komme ich zum ersten Teil, in dem ich grob schildern werde, wie komplex die Situatio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st. Korea und Deutschland haben Gemeinsamkeiten, zuallerst die Teilung natürlich, aber wenn man noch näher schaut, gibt es vor allem sehr viele Unterschiede. Heute Vormittag wurde die wirtschaftliche Kluft immer wieder betont; sowohl geographisch als auch geschichtlich. Zwischen Ost und West gab es Kommunikation, also Austausch, aber zwischen Nord- und Südkorea gab es immer wieder mal Zeiten, wo es überhaupt keine Kommunikation gegeben hat. Ein weiterer Unterschied ist, dass es einen Krieg der Ideologien zwischen beiden Ländern gegeben hat. Das alles zusammen ergibt Folgendes: Man weiß nicht, in welcher Form auch immer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eine Wiedervereinigung stattfinden wird, aber das Thema Besitzrecht wird auf jeden Fall viel komplexer sein als in Deutschland.

Damit komme ich zu der Zeit gleich nach der Befreiung von der japanischen Kolonialmacht. 58% des gesamten Ackerlandes war in der Hand von 4% der Landbesitzer. Die armen Bauern machten 57% aus, die hatten gerade einmal 5,7% Prozent [des Landes]. Im Jahre 1946 wurde eine Volkskommission gegründet und mit der Verstaatlichung gab es eine Bodenreform. Die Bodenreform folgte dem Prinzip der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 und Verteilung. Die Grundstücke von Kollaborateuren und Großgrundbesitzern wurden verteilt an über 720.000 landwirtschaftliche Haushalte. Also verteilt wurde z.B. an angestellte Bauern, Bauern ohne Grundbesitz oder Bauern mit wenig Grundbesitz. Sie machten bis zu 72% der Haushalte aus. Aber nicht nur die Grundstücke in der Landwirtschaft, auch in anderen Bereichen [gab es das]. Im Jahre 1958 wurde [die Maßgabe] verkündet: Arbeiter als alleinige Herrscher über die Produktionsmittel. Im März 1947 wurde abgesehen von Ackerland [auch] die Enteignung von Forstgebieten vorangetrieben, auch Obstgärten, Bewässerungsanlagen und über 14.000 Gebäude, alles wurde enteignet. Die Bodenreform war dabei ein großer Teil und über 70% der Bauernhaushalte haben enteignete Grundstücke bekommen, nicht nur in

Nordkorea, sondern auch in Südkorea. In Südkorea gab es drei Phasen der Bodenreform. Im Jahr 1950 gab es Enteignung gegen Entschädigung, danach gab es verschiedene Entschädigungen für Besitzer von Flächen südlich des 38. Breitengrades. Wenn man sich das alles anschaut, kann man ahnen, dass es nach der Wiedervereinigung Probleme geben wird mit den Besitzrechten. Aber was noch schlimmer ist; weil sich nach dem Krieg die Grenze verändert hat, ist die Lage wegen des Krieges zwischen den beiden Koreas noch komplexer geworden. Während des Krieges gab es am 4. Juli 1950 die sogenannte Bodenreform in den südlichen Gebieten. Am 16. Januar 1952 gab es dann weitere Enteignungen und hier hat sich die Grenze noch einmal geändert, das macht die ganze Situation noch komplexer. Die Frage der Eigentumsrecht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steht in Zusammenhang mit dem System und somit in Verbindung mit verfassungsrechtlichen Fragen. Ein weiterer Faktor ist die Besetzung durch Großmächt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ob Korea es wollte oder nicht, die Lage hat sich dadurch noch zugespitzt. Dazu gibt es viele verschiedene Fragen, aber ich möchte hier nur drei wichtige Punkte oder Fragen nenn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rtikel 3 gibt es eine Definition unseres Territoriums. Nach dem Artikel 3 ist Nordkorea illegales Territorium, d.h. alles Eigentum, das es in Nordkorea gibt, kann nicht als legal anerkannt werden. Die zweite Frage, die sich stellt ist, in Deutschland waren das Rückgabeprinzip und das Entschädigungsprinzip zwei getrennte Sachen. Im Falle von Korea gab es vor der Einrichtung von nordkoreanischen Volkskommission weitere Phasen, d.h. sollte man beim Ansatz der Besitzrechte in Nordkorea 1947 als Standard nehmen, wäre das dann vor und nach der Volkskommissionsgründung. Dritte Frage, alle Grundbücher in Nordkorea sind vernichtet. Wie soll man da die Urbesitzer auseinander differenzieren können?

Ich komme dann zum Kapitel Zwei. Ich erkläre hier wie komplex die Sach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st. Man hat die nordkoreanischen Flüchtlinge während des Krieges mit einer Million beziffert. Und ungefähr 2,2 bis 3 Millionen

hätten durch den Krieg Schaden erlitten. Aber zwischen 1945 und 1953 soll es zwischen 840.000 und 1,4 Millionen weitere Flüchtlinge gegeben haben. Das heißt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d unser eigentliches Problem die [Klärung der] Besitzrechte der Flüchtlinge sein. Das hat eigentlich auch auf der anderen Seite mit den Flüchtlingen von Süden nach Norden zu tun. Es gibt auch Flüchtlinge, die in den Norden gegangen sind, ihre Zahl beträgt etwa 300.000, d.h. falls Flüchtlinge, die nach Süden gekommen sind, ihre Besitzrechte erheben wollen, werden die anderen das ebenso tun wollen. Ein weiterer Punkt ist der folgende: Falls den Bürgern, die fast ihr Leben lang ihrer Rechte beraubt wurden, ihre Rechte erneut genommen werden, dann wird das nicht nur ein Schock für die Betroffenen [sein], sondern auch für das ganze Land. Das Beispiel Deutschlands wurde immer wieder erwähnt. Man hat immer wieder Ausnahmeregelungen für Entschädigungen oder Rückgabe in Deutschland [geschaffen]. Das hat zu Konflikten geführt. Aber ich möchte noch weitergehend beton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st die Sache noch komplexer, denn Korea wurde anders geteilt. Falls es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eine schnelle Wiedervereinigung geben sollte, muss man sich überlegen, wie wir diese Krise bewältigen sollen. Als erstes Problem wird dann Massenflucht auftauchen, als zweite Frage stellt sich dann, ob man Besitzrecht überhaupt nach gesetzlichen Prinzipien entscheiden kann. Der dritte Punkt wäre, wie soll man die alltäglichen Probleme der nordkoreanischen Bürger bewältigen, z.B. die Gefahr von Immobilienspekulation. Vor diesem Hintergrund habe ich eine Theorie immer wieder hervorgehoben und zwar ein Modell von Wirtschaftssonderzonen in Nordkorea, d.h. wenn wir nicht gut vorbereitet sind auf eine Wiedervereinigung, sollte man Nordkorea durch die Einrichtung von Wirtschaftssonderzonen schützen. Was ich noch einmal betonen möchte: So ein sogenannter Notfallplan ist natürlich kein Idealvorschlag, sondern es ist ein virtuelles Modell für den Fall, dass wir in eine Notsituation geraten. Falls wir das Modell Wirtschaftssonderzonen nehmen, sollten wir weitere Pläne einführen, Unterstützungspläne wie den Marshall-Plan. Daneben müssen wir also

parallel weitere Unterstützungsmaßnahmen treffen für die nordkoreanischen Bürger. Man sollte hier eine vorübergehende Verwaltungsform haben. Hier möchte ich verschiedene Punkte betonen. Erstens, temporäre Grenzdurchlassregulierungen bzw. graduelle Grenzöffnung und temporärer Schutz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Dritter Punkt, grundsätzlicher Lösungsplan bezüglich der nordkoreanischen Eigentumsrechte - und zwar vor der Öffnung! Und vierter Punkt, Vorzugsrecht für Bürger Nordkoreas bezüglich Verteilung und Privatisierung der Nutzrechte des öffentlichen Vermögens. Fünftens, Erstellung eines großangelegten Hilfsprogramms, einhergehend mit Sicherung von Arbeitsplätzen. Die temporäre Aufrechterhaltung Nordkoreas als Sonderwirtschaftszone dient der Angleichung an die südkoreanische Wirtschaft durch eine Verhinderung von Chaos nach dem Zusammenbruch des Systems und der zügigen Sicherung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Dieser Hilfsplan beinhaltet Folgendes. Erstens, zügige Hilfsmaßnahmen zur Sicherung einer Lebensgrundlage der nordkoreanischen Bevölkerung. Zweitens, Bereitstellung von Hilfsvorrichtungen, die nordkoreanisches Vermögen, Böden und Wohnungen miteinschließen. Drittens, für die Förderung von privaten Unternehmen sollte es verschiedene Unterstützungsleistungen geben, sowohl finanziell als auch industriepolitisch. Viertens, großangelegte Investitionen für die Modernisierung der rückständigen nordkoreanischen Infrastruktur und des Sozialkapitals. Ich möchte noch mal betonen, dieses Modell, das ich beschreibe, ist kein Idealmodell. Es ist ein Notfallplan. Ich komme dann zum dritten Teil. Er gliedert sich in verschiedene Fragen, die ich vorbereitet habe, aber ich denke einige Fragen wurden gestern und heute Vormittag bereits beantwortet. Ich möchte nur die restlichen oder ungelösten Fragen stellen. Heute morgen haben wir über die Kritik an der Treuhandanstalt gesprochen und zwar wurde darüber gesprochen, dass es durchaus Kritik an der sogenannten Schocktherapie gab. Korea und Deutschland haben ja andere Strukturen, wenn man das beachtet, was für Ideen oder Meinungen haben Sie zu der Idee, Nordkorea zeitlang als Wirtschaftszone zu führen?

Prof. Dr. Pohl wird ja vielleicht noch detaillierter über Rückgaberecht sprechen. Der Einigungsvertrag und das Vermögensgesetz §5 haben mehrere Ausnahmen von der Rückgabe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festgelegt. Trotzdem wurden bis Mitte 1995 insgesamt 2,7 Millionen Rückgabeanträge gestellt. Gestern fiel die Zahl 2,2 Millionen, ich habe 2,7 Millionen genommen. Die Frage ist; welche waren die Ausnahmen vom Rückgabeprinzip und zweitens, wie konnte diese Flut von Anträgen gemeistert werden, zumal die Justizverwaltung direkt nach der Wende quasi lahmgelegt war?

Drittens, wieviele Anträge wurden genehmigt? Das sind ein bisschen spezifische Fragen, aber sie interessieren uns trotzdem.

Frage Nr. Elf, trotz der Antragsflut zur Rückgabe, war die Erfolgsquote der vielen Antragsteller gering, wie ich berichtet bekommen habe, woran liegt das? Wie wäre es, wenn von Anfang an auf das Prinzip Rückgabe verzichtet worden wäre? Frage Zwölf, das Ent...gesetz und das Investitionsvorrangsgesetz vom Juli 1992 haben die Ausnahmepalette des Prinzips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im Nachhinein erweitert. In diesem Zusammenhang noch zwei Fragen, nämlich: Hätte man schon im Vermögensgesetz von September 1990 die erweiterte Ausnahmeregelung verankern können? Gab es Gründe dagegen? Und zweitens, gibt es Schätzungen über die wirtschaftlichen Effekte dieser Änderungen?

Nun komme ich zu Frage Nr. 13. Handelt es sich bei den Vermögen der DDR-Flüchtlinge nicht eigentlich um Enteignungen, sondern um War also der Erwerb von diesen dann ein rechtmäßiger Kauf? Diese Frage ist für Korea auch sehr relevant, weil es Millionen von Flüchtlingen gab, die von Nordkorea nach Südkorea gekommen sind. Wie gesagt, ich habe bereits mehrere Fragen gestellt, deshalb halte ich mich [jetzt] zurück und beende meinen Vortrag. Vielen Dank.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für diesen Vortrag und auch die Fragestellungen. Insbesondere Ihre

Erläuterungen zu den besonderen Problematiken der Besitzverhältniss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auch die Punkte hinsichtlich des Vorgehens in Nordkorea sind sicherlich ganz wichtige Informationen, um dann auch später in der Diskussion entsprechend drauf eingehen zu können. Insofern haben Sie uns da eine sehr informative Grundlage geliefert und auch die Fragestellungen sind dann sicher Gegenstand der weiteren Erörterungen. Ich darf jetzt Prof. Dr. Pohl bitten seinen Vortrag zu den Regelungen zu den Ansprüchen der Alteigentümer im Rahmen der Wiedervereinigung zu halten.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Vielen Dank.....[Vortrag Prof. Dr. Pohl]

Prof. Dr. Rüdiger Pohl

Die Regelung der Ansprüche von Alteigentümern

Vortragsmanuskript, vorbereitet für die Dritte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am
27. und 28. Juni 2013 in Seoul

- (1) **Politischer Konsens:** In der DDR sind durch staatliche Eingriffe viele Eigentümer aus ihrem privaten Eigentum verdrängt worden. Das geschah vor allem durch die Enteignung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sowie durch die häufig zwangsweise Verstaatlichung von privaten Unternehmen. Betroffen waren davon Bürger der DDR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er auch Ausländer. Die Maßnahmen des Staates wurden von den Eigentümern als Unrecht empfunden. Nach dem Fall der Mauer (im November 1989) und der Abkehr der DDR vom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system bestand in der

deutschen Bevölkerung die feste Erwartung, dass das geschehene Unrecht korrigiert wird. Dies war auch der erklärte politische Wille beider deutschen Staaten, der DDR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zur Wiedervereinigung am 3. Oktober 1990 gab es zwei deutsche Staaten). Dieser breite politische Konsens war die Voraussetzung dafür, dass bald Regeln aufgestellt wurden, nach denen Alteigentümer berechnete Ansprüche auf einen Ausgleich des erlittenen Vermögensschaden geltend machen konnten.

- (2) **Gemeinsame Erklärung:** Die Regierung der DDR hatte bereits im Frühjahr 1990 erste Maßnahmen zur Korrektur des Vermögensschadens ergriffen. Die umfassende Regelung der offenen Vermögensfragen wurde dann durch eine gemeinsame Initiative der Regierungen beider deutscher Staaten auf den Weg gebracht. Das entscheidende Dokument ist die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 In diesem bemerkenswerten Dokument von nur zwei Seiten Länge wurden die entscheidenden Eckpunkte für die Wiedergutmachung der Vermögensschäden aufgelistet. So heißt es dort unter anderem: „Enteignetes Grundvermögen wird ... den ehemaligen Eigentümern oder ihren Erben zurückgegeben.“ Und: „Bei (staatlich, RP) verwalteten Betrieben werden die ... Verfügungsbeschränkungen aufgehoben; der Eigentümer übernimmt sein Betriebsvermögen.“ Auf der Basis der „Gemeinsame Erklärung“ wurde im September 1990 das Vermögensgesetz verabschiedet. Dieses Gesetz ist die wichtigste Grundlage für die Regelung der Ansprüche der Alteigentümer.

Die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st im Anhang wiedergegeben. Im Einigungsvertrag, Art. 41 Abs. 1, wurde festgelegt: „Die vo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bgegebene Gemeinsame Erklärung vom 15. Juni 1990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nlage III) ist Bestandteil dieses Vertrages.“

Der Terminus „offene Vermögensfragen“ bezieht sich auf den Grundlagenvertrag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Beide Staaten konnten sich nicht auf eine Regelung der Vermögensfragen einigen, sodass diese „offen“ blieben. Hiermit wurde zugleich deutlich, dass zahlreiche Eingriffe des DDR-Staates in das private Eigentum nach westdeutschem Verständnis inakzeptabel, wenn nicht rechtswidrig waren. Das sah die DDR nicht so.

- (3) **Marktwirtschaft:** Die Regelungen zu den Vermögensfragen sind von beiden deutschen Staaten einvernehmlich getroffen worden. Sie wurden nicht etwa der DDR durch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oktroziert. Allerdings orientierten sich die Regelungen an den Vorstellungen vom privaten Eigentum, wie sie im Grundgesetz, der Verfass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ankert sind. In der Bundesrepublik besteht eine soziale Marktwirtschaft. Privates Eigentum ist ein konstitutives Element dieses Systems. In der DDR vollzog sich 1990 der Wandel vom sozialistischen zum marktwirtschaftlichen System westdeutscher Prägung.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ikel 14

- (1) Das Eigentum und das Erbrecht werden gewährleistet. Inhalt und Schranken werden durch die Gesetze bestimmt.
- (2)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em Wohle der Allgemeinheit dienen.
- (3) Eine Enteignung ist nur zum Wohle der Allgemeinheit zulässig. Sie darf nu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erfolgen, das Art und

Ausmaß der Entschädigung regelt. Die Entschädigung ist unter gerechter Abwägung der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und der Beteiligten zu bestimmen. Wegen der Höhe der Entschädigung steht im Streitfalle der Rechtsweg vor den ordentlichen Gerichten offen.

- (4) **Rasche Entscheidungen:** Die gesetzlichen Regelungen, nach denen Alteigentümer ihre Ansprüche geltend machen konnten, wurden in einem extrem kurzen Zeitraum, praktisch in nur sechs Monaten, geschaffen. Das wichtige Vermögensgesetz stand bereits im September 1990, zehn Monate nach dem Fall der Mauer zur Verfügung. Dies ist angesichts der Komplexität der Vermögensprobleme eine beachtliche politische Leistung. Der Vorteil war, dass die Aufarbeitung der Vermögensschäden rasch beginnen konnte. Dies wog schwerer als der Nachteil, dass die gesetzliche Regelungen anfangs noch Lücken aufwiesen. Anerkennung verdienen auch die deutschen Gerichte. Die Regelung der Vermögensfragen war in dieser Form ohne Vorbild und musste aus dem Stand heraus bewältigt werden. Streit um die Auslegung der Regeln war an der Tagesordnung. Die Gerichte legten das auch für sie neue Recht angemessen aus. Schließlich wurden schnell leistungsfähige staatliche Ämter eingerichtet. Sie führten die Verfahren nach dem Vermögensgesetz durch. Diese drei Elemente – rasche gesetzliche Regelungen, kompetente Gerichte, leistungsfähige Ämter – waren entscheidend dafür, dass der Ausgleich für den in der DDR erlittenen Vermögensschaden erfolgreich bewältigt werden konnte.

Während das Vermögensgesetz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Rückgabe von Vermögenswerten bestimmt, blieben drei Aspekte zunächst offen: die Höhe der Entschädigungen, Ausgleichsleistungen für Enteignungen auf besatzungsrechtlicher Grundlage zwischen 8.5.1945 (Ende des zweiten Weltkriegs) und 7.10.1949 (Gründung der DDR), Bestimmungen

über NS-Verfolgtenentschädigungen. Diese Lücken wurden durch das Entschädigungs- und Ausgleichleistungsgesetz (EALG) vom 27.9.1994 geschlossen. Es umfasst das Entschädigungsgesetz (regelt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und die Bedingungen und Verfahren zur Gewährung der Entschädigungen), das Ausgleichleistungsgesetz (regelt Ansprüche von natürlichen Personen und deren Erben auf Ausgleichleistungen, soweit diese Personen durch entschädigungslose Enteignung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Vermögenswerte verloren haben) und das NS-Verfolgtenentschädigungsgesetz (regelt Geldentschädigungen für in der Zeit von 1933 - 1945 Verfolgte des NS-Regimes, die einen Vermögensverlust erlitten haben, der nicht durch Rückgabe ausgeglichen werden kann oder für den Entschädigung gewählt worden ist).

- (5) **Anspruchsberechtigung:** Einen Anspruch auf Wiedergutmachung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haben generell Personen, die durch DDR-Maßnahmen einen Vermögensschaden erlitten haben, und deren Erben. Das können Bürger der DDR aber auch sogenannte „Westbürger“ (Westdeutsche oder Ausländer) sein. Aus der DDR waren bis 1990 rund 4 Millionen Menschen abgewandert. Der Begriff des Vermögens ist weit gefasst. Die größte Rolle spielen Ansprüche auf Grundstücke. Für gut 2,2 Millionen Flurstücke wurden Anträge gestellt. Zur Sicherung dieser Ansprüche bedarf auch heute noch jeder Verkauf eines Grundstückes auf dem Gebiet der DDR einer 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 Dabei wird geprüft, ob in Bezug auf dieses Grundstück ein Antrag gestellt ist, der noch nicht beschieden ist. Zum Vermögen zählen weiter Unternehmen. Für knapp 97.000 Unternehmen wurden Ansprüche angemeldet. Schließlich konnten Ansprüche auf bewegliche Sachen, Kontoguthaben und bestimmte Rechte, zum Beispiel Urheberrechte, geltend gemacht werden. Die Anspruchsberechtigten und die in die in die Regelung einbezogenen Vermögenswerte sind in § 2 Vermögensgesetz aufgelistet. Neben natürlichen

und juristischen Personen sowie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und deren Erben und Rechtsnachfolge wird insbesondere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 als Rechtsnachfolger der Ansprüche von jüdischen Berechtigten anerkannt. Die Rückgabe von gelöschten Unternehmen konnte beantragt werden, wenn ehemaligen Gesellschafter als Antragsteller mehr als die Hälfte der Anteile, die zum Zeitpunkt der Schädigung vorhanden waren, vertreten.

- (6) **Einschränkungen für Ausgleichsansprüche:** Ausgleichsansprüche können geltend gemacht werden für Vermögensschäden, die der Eigentümer auf dem Gebiet der DDR erlitten hat. Allerdings ist hier eine wichtige Einschränkung zu beachten. Es war nicht der politische Wille, sämtliche Eingriffe der DDR in private Vermögen zu korrigieren. Das basierte auf der Einsicht, dass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Verhältnisse in der DDR nach vierzig Jahren nicht einfach rückgängig gemacht werden konnten. Es geht also nicht um eine Totalrevision, im Gegenteil: im Einigungsvertrag wurde festgelegt, dass die von der DDR getroffenen Maßnahm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grundsätzlich weiter gelten. Vielmehr geht es um die Korrektur von Vermögensschäden, die sich aus bestimmten Zwangsmaßnahmen der DDR und aus der Teilung Deutschlands ergeben (sogenanntes „Teilungsunrecht“). Der Staat musste also konkret die Fälle beschreiben, die einen Ausgleichsanspruch begründen.

Da es – anders als in Westdeutschland – in der DDR so gut wie keine Wiedergutmachung für Enteignungen in der Nazi-Zeit gegeben hatte, wurde das Vermögensgesetz auch auf diesen Zeitraum ausgedehnt (z. B. wegen der Enteignung jüdischen Eigentums, von Widerstandskämpfern, politischen Parteien und Gewerkschaften).

(7) **Anspruchsgrundlagen:** Die Fälle für einen Ausgleichsanspruch sind im Vermögensgesetz aufgeführt. Es sind insgesamt neun Fälle. Hier sollen drei Fälle hervorhoben werden:

- (a) Entschädigungslose Enteignung: Ein typischer Fall ist die Enteignung des Vermögens von Flüchtlingen.
- (b) Ökonomischer Zwang/Überschuldung aufgrund der Gesetzgebung der DDR: Ein typischer Fall betrifft Mietwohngebäude. Die DDR schrieb Niedrigstmieten vor. Die Eigentümer konnten damit nicht einmal die Instandsetzungskosten der Gebäude erwirtschaften. Das führte zu Überschuldung und zwang die Eigentümer zum Verkauf der Gebäude an den Staat.
- (c) Unlautere Machenschaften: Hiermit sollen Zwangsmaßnahmen wiedergutmacht werden, die nach DDR-Recht rechtswidrig waren. Es handelt sich um Fälle von Machtmissbrauch, Korruption, Nötigung, Täuschung. Wichtigstes Beispiel: Ausreisewillige wurden entgegen DDR-Recht zur Veräußerung ihrer Grundstücke genötigt.

Für einen Ausgleichsanspruch kommt es nicht darauf an, dass die Eingriffe der DDR in das Vermögen nach DDR-Recht unzulässig waren. Ein Ausgleichsanspruch besteht in den vom Vermögensgesetz genannten Fällen auch dann, wenn der Eingriff in das Vermögen nach DDR-Recht zulässig war. Anträge auf Wiedergutmachung, die nicht durch die vorgegebenen Fälle abgedeckt waren, wurden abgelehnt oder von den Antragstellern zurückgenommen. Dies kam häufig vor. So gab es im Bereich der Grundstücke 2,2 Millionen Anträge. Davon wurden 1,3 Millionen Anträge abgelehnt oder zurückgenommen.

Das Vermögensgesetz listet in § 1 die Fälle auf, die einen Ausgleichsanspruch begründen können:

- Entschädigungslose Enteignung

- Diskriminierende Entschädigung

Die DDR hat zum Beispiel bei Enteignungen (z.B. von Grundstücken) an Westeigentümer geringere Entschädigungen gezahlt als an DDR Bürger.

- Veräußerung durch staatliche Verwalter

In manchen Fällen hat die DDR private Vermögenswerte eingezogen, unter staatliche Verwaltung gestellt (das Eigentum blieb den Privaten erhalten, war jedoch seiner Nutzung entzogen und somit nur mehr eine leere Hülse) und dann an Dritte veräußert. Damit wurde das staatliche Unrecht vertieft, weil das Eigentum nun gänzlich entzogen war.

- 1972 verstaatlichte Unternehmen

Die DDR hatte im Jahr 1972 Unternehmer gezwungen oder genötigt, ihre Unternehmen an den Staat zu verkaufen (unter Zahlung eines für DDR-Verhältnisse hohen Kaufpreises). Viele der Unternehmen waren zuvor durch politischen Druck, aber auch durch staatliche Maßnahmen wie eine überzogene Besteuerung oder Liefersperren gegenüber volkseigenen Betrieben benachteiligt worden. Mit dem Unternehmensgesetz vom Frühjahr 1990 wurde den früheren Eigentümern die Möglichkeit zum Rückkauf ihrer Unternehmen eröffnet. Beachte: es war ein Rückkauf vorgesehen, nicht Rückgabe; diese wäre nach dem Vermögensgesetz für den Eigentümer günstiger gewesen.

- Ökonomischer Zwang/Überschuldung

- Unlautere Machenschaften

- Staatliche Verwaltungen

Die DDR hat Vermögen unter staatliche Verwaltung gestellt, zum Beispiel weil die Eigentümer die DDR ohne die erforderliche Genehmigung verlassen haben. Die Staatliche Verwaltung wurde per Gesetz zum 31.12. 1992 generell aufgehoben.

- Verfolgingsbedingte Vermögensverluste

Hier werden Vermögensschäden erfasst, die Bürger in der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erlitten haben, die aus rassistischen, politischen, religiösen oder weltanschaulichen Gründen verfolgt wurden.

- Rückgabe nach erfolgter Rehabilitierung

Es handelt sich um Vermögen, die durch rechtsstaatwidrige Entscheidungen in der DDR eingezogen wurden. Voraussetzung ist die Aufhebung der rechtsstaatwidrigen Entscheidung in einem Rehabilitationsverfahren.

- (8) **Ausnahmen:** In einigen Fällen schließt das Vermögensgesetz einen Ausgleichsanspruch aus. Das trifft insbesondere für Enteignungen zu, die in der Zeit der sowjetischen Besatzung (1945 – 1949) vorgenommen wurden. Begründet wird dies mit Vorbehalten der Sowjetunion. Sie hat ihre Zustimmung zu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avon abhängig gemacht, dass Maßnahmen der sowjetischen Besatzungsmächte nicht in Frage gestellt würden (allerdings ist bis heute umstritten, ob der Vorbehalt wirklich bestand). Für die geschädigten Alteigentümer (nur natürliche Personen, also keine juristischen Personen/Unternehmen) sind später auf andere Weise Kompensationsmöglichkeiten geschaffen worden (durch das Ausgleichsleistungsgesetz).
- (9) **Antragsverfahren:** Die Alteigentümer müssen den Ausgleich für den erlittenen Vermögensschaden beantragen, d.h. es findet kein Schadensausgleich von Amts wegen statt. Für die Anträge war eine Ausschlussfrist festgesetzt worden (bis 31.12.1992). Damit sollte Klarheit hergestellt werden, welche Vermögenswerte antragsbelastet sind. Die Bearbeitung der Anträge und deren Genehmigung oder Ablehnung lag in der Zuständigkeit der neuen Länder und dem Land Berlin. Diese hatten zu diesem Zweck Ämter und Landes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errichtet. Zum Ablauf des Verfahrens vgl. Fallstudie.
- (10)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Dies ist der wichtigste Grundsatz für die Wiedergutmachung des Vermögensschadens. Der Anspruch des

Alteigentümers auf sein Vermögen wird durch Rückgabe des enteigneten Vermögensgegenstandes erfüllt. Wo dies nicht möglich ist oder ausgeschlossen wird, erhält er eine finanzielle Entschädigung. Der Grundsatz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ist gut begründet. Die Rückgabe des Vermögens entspricht dem Eigentumsgedanken des Grundgesetzes. Der Eigentümer behält das Eigentumsrecht an einem Vermögensgegenstand, auch wenn dieser ihm durch einen rechtswidrigen Vorgang entzogen wurde. Darüber hinaus wäre eine finanzielle Entschädigung in manchen Fällen keine gleichwertige Wiedergutmachung. Beispiel: wird ein enteignetes Grundstück zurückgegeben, kann der Eigentümer von künftigen Wertsteigerungen des Grundstücks profitieren; wurde statt der Rückgabe eine Entschädigung gezahlt, geht der Eigentümer bei künftigen Wertsteigerungen leer aus. Schließlich sprechen auch finanzielle Erwägungen zugunsten der Rückgabe. Durch finanzielle Entschädigungsleistungen würde der Staatshaushalt belastet, nicht notwendigerweise aber bei der Rückgabe des Vermögensgegenstandes.

- (11) **„Wie er steht und liegt“**: Ein Vermögenswert wird so rückübertragen, „wie er steht und liegt“. Die Rückübertragung soll Alteigentümer nicht besser stellen, als er ohne den Eigentumsverlust dastehen würde. Früher erhaltene Gegenleistungen für die Enteignung sind zurückzuzahlen. Für Wertverbesserungen ist ein Ausgleich zu zahlen. Zum Zeitpunkt des Eigentumsverlustes bestehende Grundpfandrechte müssen abgelöst werden. Bei der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wie es heute steht und liegt“) müssen allen Aktiva und Passiva, also auch die Schulden mit übernommen werden. Grundstücke, die erst nach der Enteignung zu dem Unternehmen kamen, werden mitübertragen; Grundstücke, die nach der Enteignung aus dem Unternehmensvermögen entfernt wurden, werden nicht ersetzt. Eine eventuelle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wird ausgeglichen. Das Unternehmen wird mit einem Mindestkapital ausgestattet, damit es weiter arbeiten kann.

- (12) **Ausschlussgründe:** Das Prinzip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wurde allerdings keineswegs streng durchgehalten. Im Gegenteil: es wurde auf vielfältige Weise durchbrochen. Der Staat hat in besonderen Fällen die Rückgabe ausgeschlossen. Ausschlussgründe sind:
- (a) Die Rückgabe ist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öglich.
 - (b)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ist ausgeschlossen, wenn der Geschäftsbetrieb eingestellt ist und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Wiederaufnahme fehlen.
 - (c) Die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ist ausgeschlossen,
 - wenn die Grundstücke mit erheblichem Aufwand in ihrer Nutzung verändert wurden und 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ieser Nutzung besteht,
 - wenn die Grundstücke dem Gemeingebrauch gewidmet sind,
 - wenn sie im komplexen Wohnungs- oder Siedlungsbau (großflächige Bebauung oft über Grundstücksgrenzen hinweg) verwendet wurden oder
 - wenn sie der gewerblichen Nutzung zugeführt wurden und nicht ohne erhebliche Beeinträchtigung des Unternehmens zurückgegeben werden können.
 - (d) Ebenso ist die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ausgeschlossen, wenn DDR-Bürger in redlicher Weise Eigentum oder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etwa das Recht, auf dem Grundstück ein Wohnhaus zu errichten).
 - (e) Ein sehr wichtiger Grund für den Ausschluss der Rückgabe ist der Investitionsvorrang.
- (13) **Investitionsvorrang:** Nach der Wiedervereinigung war es dringend notwendig, Investitionen auf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einzuleiten. Hier erwies sich der Vorrang für die Rückgabe von Grundstücken, Gebäuden und Unternehmen als ein Investitionshemmnis. Die Verfahren zur Rückgabe sind zeitlich sehr aufwändig (insbesondere, wenn mehrere Rückgabeansprüche konkurrieren). Solange die Eigentumsverhältnisse ungeklärt sind und daher

über die Rückgabe nicht entschieden ist, können auf dem Grundstück, in dem Gebäude, in dem Unternehmen keine Investitionen vorgenommen werden. Investitionsvorrang bedeutet, dass das Grundstück, Gebäude, Unternehmen bei noch ungeklärten Eigentumsverhältnissen trotzdem für Investitionen freigegeben und verkauft werden kann. Der Anspruch des Alteigentümers würde nach Klärung durch Entschädigung befriedigt.

Gegen diese Argumentation kann eingewendet werden, dass gerade die Rückgabe Investitionen begünstigt, weil der Eigentümer ein besonderes Interesse habe, das zurückgegebene Grundstück, Gebäude, Unternehmen durch Investitionen aufzuwerten. Dies ist in vielen Fällen geschehen. Jedoch kann man auch heute noch in vielen ostdeutschen Städten beobachten, dass zurückerstattete Gebäude weiter verfallen, weil die Eigentümer keine kostendeckende Nutzungsmöglichkeit sehen.

Der Investitionsvorrang wurde bereits im Einigungsvertrag, Art. 41 Abs. 2, vorgesehen: „Nach Maßgabe besonderer gesetzlicher Regelung findet ein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oder Gebäuden nicht statt, wenn das betroffene Grundstück oder Gebäude für dringende, näher festzulegende Investitionszwecke benötigt wird, insbesondere der Errichtung einer gewerblichen Betriebsstätte dient und die Verwirklichung dieser Investitionsentscheidung volkswirtschaftlich förderungswürdig ist, vor allem Arbeitsplätze schafft oder sichert. Der Investor hat einen die wesentlichen Merkmale des Vorhabens aufzeigenden Plan vorzulegen und sich zur Durchführung des Vorhabens auf dieser Basis zu verpflichten. In dem Gesetz ist auch die Entschädigung des früheren Eigentümers zu regeln.“ Im Einzelnen wurde der Investitionsvorrang in dem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Investitionsvorranggesetz – InVorG)“ vom 22.7.1992 geregelt. Dort lautet

§ 1: „Grundstücke, Gebäude und Unternehmen, die Gegenstand von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oder sein können, dürfen nach Maßgabe der nachfolgenden Vorschriften ganz oder teilweise für besondere Investitionszwecke verwendet werden. Der Berechtigte erhält in diesen Fällen einen Ausgleich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Der „besondere Investitionszweck“ wird in § 3 wie folgt geregelt (auszugsweise wiedergegeben): „(1) Ein besonderer Investitionszweck liegt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or, wenn sie verwendet werden zur

1. Sicherung oder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
2. a) Schaffung neuen Wohnraums, b) Wiederherstellung abgegangenen oder vom Abgang bedrohten Wohnraums oder c) Durchführung baulicher Maßnahmen, die den Gebrauchswert bestehenden Wohnraums nachhaltig erhöhen, die allgemeinen Wohnverhältnisse auf Dauer verbessern oder nachhaltige Einsparungen von Heizenergie oder Wasser bewirken,...
3. Schaffung der für Investitionen erforderlichen oder hiervon veranlassten Infrastrukturmaßnahmen. ...“

- (14) **Interessenkonflikte:** Das größte Problem bei der Regelung der Ansprüche der Alteigentümer waren die dabei massiv auftretenden Interessenkonflikte. Beispiel: auf einem enteigneten und nun volkseigenen Grundstück hat ein DDR-Bürger ein Einfamilienhaus errichtet. Das Haus ist sein Eigentum, für das Grundstück hat er in redlicher Weise ein Nutzungsrecht vom Staat erworben. Nunmehr beansprucht der Alteigentümer die Rückgabe des Grundstückes; der Bauherr des Eigenheimes besteht auf weiterer Nutzung des Grundstückes. Ein Konflikt! Er war nicht dadurch zu lösen, dass der Rechtsakt der DDR (Verkauf des Nutzungsrechts an den Hauseigentümer) einfach aufgehoben wurde. Im Einigungsvertrag ist ausdrücklich vorgesehen, dass Rechtsakte der DDR erhalten bleiben und nur im rechtswidrigen Einzelfall korrigiert werden (was im vorliegenden Beispiel nicht der Fall ist). Konflikte

dieser Art traten in großer Zahl auf, und sie waren dem Gesetzgeber bewusst. Schon in der „Gemeinsamen Erklärung“ war von „unterschiedlichen Interessen“ die Rede, für die ein „sozial verträglicher Ausgleich“ zu schaffen sei. Im geschilderten Beispiel besteht der Konflikt zwischen den Rückgabeinteresse des Alteigentümers und dem Bestandsschutzinteresse des Hauseigentümers. Der sozial verträgliche Ausgleich bedeutet hier, so hat der Gesetzgeber entschieden, dass der Anspruch auf Rückgabe entfällt und der Alteigentümer eine Entschädigung erhält. Generell ging es beim Ausschluss der Rückgabe darum, dass Veränderungen der Nutzungsart und Zweckbestimmung von Vermögen, die in den vierzig Jahren der DDR stattgefunden haben, beispielsweise bei Grundstücken, nicht durch Herstellung früherer Eigentumsverhältnisse in Frage gestellt werden. Das dient den bisherigen Nutzern, steht freilich den Interessen der Alteigentümer auf Rückgabe entgegen.

- (15) **Manipulationen:** Es musste allerdings 1990 und danach verhindert werden, dass die Ausschlussgründe für eine Rückgabe erst durch Manipulationen zu Lasten der Alteigentümer geschaffen wurden, um dadurch die Rückgabe zu vereiteln. Zu diesem Zweck wurden Stichtagregelungen eingeführt. Die Gründe, die gegen eine Rückgabe geltend gemacht werden, müssen bereits vorgelegen haben, bevor absehbar war, welche Ausschlussgründe der Gesetzgeber zulassen würde.
- (16) **Politische Bewertung:** Die Regelungen zu den Ansprüchen der Alteigentümer auf Rückgabe und zum Ausschluss der Rückgabe haben in Deutschland in den 1990er Jahren beträchtliche Emotionen, Aggressionen und Konflikte ausgelöst. Den Rückgabeansprüchen der Alteigentümer standen die Bestandsinteressen derjenigen gegenüber, die in der DDR „auf redliche Weise“ Nutzungsrechte an Vermögensgegenständen (z.B. Grundstücken) erworben

hatten. Da die Alteigentümer häufig aus Westdeutschland stammten, während die Nutzungsberechtigten in Ostdeutschland angesiedelt waren, entwickelte sich hier sogar ein Ost-West-Konflikt. Aus westdeutscher Sicht wurde vorgeworfen, dass die Einschränkungen der Rückgabe das DDR-Unrecht endgültig festschreiben würden. I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ging derweil die Angst um, in der DDR redlich erworbene Besitzstände zu verlieren und damit zu den Verlierern der Wiedervereinigung zu gehören. Die Politik setzte auf einen "sozialverträglichen Interessenausgleich". Die Bestandsinteressen der Nutzer wurden weitgehend anerkannt. Damit wurden die Ansprüche der Alteigentümer auf Entschädigung statt auf Rückgabe begrenzt. Dennoch überwogen in der Summe die Rückgaben. Im Bereich der Grundstücke gab es knapp 420.000 Rückübertragungen gegenüber 103.000 Entschädigungsbescheiden. Man wird anerkennen müssen, dass ein anderes Vorgehen, die einseitige Bevorzugung der Rückgabeinteressen der Alteigentümer gegenüber den Bestandsinteressen der Nutzer, gesellschaftlich in Deutschland kaum zu verkraften gewesen wäre. Inzwischen ist der Streit um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verebbt.

ANHANG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

Chronologie vom Fall der Mauer bis zu Wiedervereinigung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 eine Fallstudie

Statistik

Quellen

Dieser Beitrag basiert wesentlich auf: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ffene Vermögensfragen. Versuch einer Bilanz
Berlin 2001

Sehr hilfreich ist die folgende Internetpräsentation: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Stichwort: Offene Vermögensfragen

http://www.badv.bund.de/003_menu_links/e0_ov/index.html

Über diese Seite ist der Zugriff auf die einschlägigen gesetzlichen Bestimmungen möglich.

Die in den vorgenannten Quellen wiedergegebenen Regelungen sind zu finden im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 VermG)

vom 23.9.1990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9. Februar 2005 (BGBl. I S. 205), zuletz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23. Mai 2011 (BGBl. I S. 920) geändert.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darauf verzichtet, die vorgenannten Quellen im Detail zu zitieren.

Ich danke Kai Broschat (BMF) für ergiebige Diskussionen zum Thema.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

Die Teilung Deutschlands, die damit verbundene Bevölkerungswanderung von Ost nach West und die unterschiedlichen Rechtsordnungen in beiden deutschen Staaten haben zu zahlreichen vermögensrechtlichen Problemen geführt, die viele Bürg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treffen.

Bei der Lösung der anstehenden Vermögensfragen gehen beide Regierungen davon aus, dass ein sozial verträglicher Ausgleich unterschiedlicher Interessen zu schaffen ist. Rechtssicherheit und Rechtseindeutigkeit sowie das Recht auf Eigentum sind Grundsätze, von denen sich die Regier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Lösung der anstehenden Vermögensfragen leiten lassen. Nur so kann der Rechtsfriede in einem künftigen Deutschland dauerhaft gesichert werden.

Die beiden deutschen Regierungen sind sich über folgende Eckwerte einig:

1. Die Enteignungen auf besatzungsrechtlicher bzw.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1945 bis 1949) sind nicht mehr rückgängig zu machen. Die Regierungen der Sowjetunion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ehen keine Möglichkeit, die damals getroffenen Maßnahmen zu revidieren.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mmt dies im Hinblick auf die historische Entwicklung zur Kenntnis. Sie ist der Auffassung, dass einem künftigen gesamt-deutschen Parlament eine abschließende Entscheidung über etwaige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vorbehalten bleiben muss.
2. Treuhandverwaltungen und ähnliche Maßnahmen mit Verfügungsbeschränkungen über Grundeigentum, Gewerbebetriebe und sonstiges Vermögen sind aufzuheben. Damit wird denjenigen Bürgern, deren Vermögen wegen Flucht aus der oder aus sonstigen Gründen in eine staatliche Verwaltung genommen worden ist, die Verfügungsbefugnis über ihr Eigentum zurückgegeben.
3. Enteignetes Grundvermögen wird grundsätzlich unter Berücksichtigung der unter a) und b) genannten Fallgruppen den ehemaligen Eigentümern oder ihren Erben zurückgegeben.
 - a)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deren Nutzungsart bzw. Zweckbestimmung insbesondere dadurch verändert wurden, dass sie dem Gemeingebrauch gewidmet, im komplexen Wohnungs- und Siedlungsbau verwendet, der gewerblichen Nutzung zugeführt oder in eine neue Unternehmenseinheit einbezogen wurden, ist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öglich. In diesen Fällen wird eine Entschädigung geleistet, soweit nicht bereits nach den fü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Vorschriften entschädigt worden ist.
 - b) Sofern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zurückzuübereignenden

Immobilien Eigentum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in redlicher Weise erworben haben, ist ein sozial verträglicher Ausgleich an die ehemaligen Eigentümer durch Austausch von Grundstücken mit vergleichbarem Wert oder durch Entschädigung herzustellen. Entsprechendes gilt für Grundvermögen, das durch den staatlichen Treuhänder an Dritte veräußert wurde. Die Einzelheiten bedürfen noch der Klärung.

c) Soweit den ehemaligen Eigentümern oder ihren Erben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zusteht, kann statt dessen Entschädigung gewählt werden.

Die Frage des Ausgleichs von Wertveränderungen wird gesondert geregelt.

4. Die Regelungen unter Ziffer 3 gelten entsprechend für ehemals von Berechtigten selbst oder in ihrem Auftrag verwaltete Hausgrundstücke, die auf Grund ökonomischen Zwangs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5. Mieterschutz und bestehende Nutzungsrechte von Bürger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durch diese Erklärung betroffene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werden wie bisher gewahrt und regeln sich nach dem jeweils geltenden 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6. Bei verwalteten Betrieben werden die bestehenden Verfügungsbeschränkungen aufgehoben; der Eigentümer übernimmt sein Betriebsvermögen.

Für Betriebe und Beteiligungen, die 1972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wurden, gilt das Gesetz vom 7. März 1990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Hierbei wird § 19 Absatz 2 Satz 4 des Gesetzes so ausgelegt, dass den privaten Gesellschaften der staatliche Anteil auf Antrag zu verkaufen ist; die Entscheidung über den Verkauf steht somit nicht im Ermessen der zuständigen Stelle.

7. Bei Unternehmen und Beteiligungen, die zwischen 1949 und 1972 durch Beschlagnahme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worden sind, werden dem früheren Eigentüme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ertentwicklung des Betriebes das Unternehmen als Ganzes oder Gesellschaftsanteile bzw. Aktien des Unternehmens übertragen, soweit er keine Entschädigung in Anspruch nehmen

will. Einzelheiten bedürfen noch der näheren Regelung.

8. Sind Vermögenswerte - einschließlich Nutzungsrechte - auf 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z.B. durch Machtmissbrauch, Korruption, Nötigung oder Täuschung von seiten des Erwerbers) erlangt worden, so ist der Rechtserwerb nicht schutzwürdig und rückgängig zu machen. In Fällen des redlichen Erwerbs findet Ziffer 3.b) Anwendung.
9. Soweit es zu Vermögenseinziehungen im Zusammenhang mit rechtsstaatswidrigen Strafverfahren gekommen ist,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ie gesetzlichen Voraussetzungen für ihre Korrektur in einem justizförmigen Verfahren schaffen.
10. Anteilsrechte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von Bürg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rden einschließlich der Zinsen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1990 - also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 bedient.
11. Soweit noch Devisenbeschränkungen im Zahlungsverkehr bestehen, entfallen diese mit dem Inkrafttreten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12. Das durch staatliche Stel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er Grundlage des Rechtsträger-Abwicklungsgesetzes treuhänderisch verwaltete Vermögen vo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auf dem Gebiet der DDR existieren oder existiert haben, wird an die Berechtigten bzw. deren Rechtsnachfolger übergeben.
13. Zur Abwicklung:
 - a)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ie erforderlichen Rechtsvorschriften und Verfahrensregelungen umgehend schaffen.
 - b) Sie wird bekanntmachen, wo und innerhalb welcher Frist die betroffenen Bürger ihre Ansprüche anmelden können. Die Antragsfrist wird sechs Monate nicht überschreiten.
 - c) Zur Befriedigung der Ansprüche auf Entschädigung wir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 rechtlich selbständiger Entschädigungsfonds getrennt vom Staatshaushalt gebildet.

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afür Sorge tragen, dass bis zum Ablauf der Frist gemäß Ziffer 13.b) keine Verkäufe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orgenommen werden, an denen frühere Eigentumsrechte ungeklärt sind, es sei denn, zwischen den Beteiligten besteht Einvernehmen, dass eine Rückübertragung nicht in Betracht kommt oder nicht geltend gemacht wird. Veräußerungen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an denen frühere Eigentumsrechte ungeklärt sind und die dennoch nach dem 18. Oktober 1989 erfolgt sind, werden überprüft.

14. Beide Regierungen beauftragen ihre Experten, weitere Einzelheiten abzuklären.

Quelle: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http://www.badv.bund.de/003_menu_links/e0_ov/c0_gesetze_verordnungen/b0_grundlagen/gemeinsame_erklaerung.pdf

Download am 18.6.2013

Chronologie vom Fall der Mauer bis zu Wiedervereinigung

- 09.11.1989 Fall der Berliner Mauer, die DDR-Diktatur bricht zusammen
- 18.11.1989 Regierung Modrow bildet die Regierung der DDR (bis 12.04.1989)
Maßnahmen der DDR (Auswahl)
- 25.01.1990 Joint -Venture Verordnung, ermöglicht Beteiligung ausländischer
Investoren an Gemeinschaftsunternehmen
- 01.03.1990 Umwandlungsverordnung: Umwandlung von volkseigenen
Betrieben in Kapitalgesellschaften
- 01.03.1990 Errichtung der Treuhandanstalt (die später die Privatisierung der
ostdeutschen Unternehmen durchführt)
- 07.03.1990 Unternehmensgesetz: eröffnet Rückübertragungsansprüche
zugunsten der in der Aktion '72 verstaatlichten Unternehmen
- 06.03.1990 des Bodenreformigentums werden aufgehoben
- 19.03.1990 Verkaufsgesetz tritt in Kraft: ermöglicht Mietern den Erwerb des
Eigentums an volkseigenen Grundstücken
- 18.03.1990 aus den ersten (und einzigen) demokratischen Wahlen in der DDR
geht die Regierung de Maiziere hervor (bis 03.10.1990)
- 15.06.1990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entscheidendes Dokument mit
den Eckwerten zur Behandlung der Vermögensfragen
- 23.08.1990 Volkskammer der DDR beschließt den Beitritt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m 03.10.1990
- 20.09.1990 inigungsvertrag zwischen der DDR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von beiden deutschen Staaten angenommen:
übernimmt als Bestandteil in Art 41 die Gemeinsame Erklärung
von 15.06.1990 und erklärt den Investitionsvorrang vo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 23.09.1990 Vermögensgesetz (VermG) wird von der DDR-Volkskammer beschlossen (und gilt nach der Wiedervereinigung weiter): schafft die Rechtsgrundlage, nach denen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an Vermögenswerten geltend gemacht werden können.
- 03.10.1990 Wiedervereinigung: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 eine Fallstudie

Antragsteller: Bürger aus Westdeutschland

Objekt: Grundstück mit Mietshaus in Berlin (Ost): Eigentum der Eltern
 Eltern sind 1960 in den Westen geflohen Antragsteller ist der einzige Erbe der inzwischen verstorbenen Eltern Geringe Belastungen des Grundstücks durch Hypotheken zum Zeitpunkt der Flucht DDR übernimmt nach der Flucht Grundstück in Treuhandverwaltung Mieteinnahmen werden dem Staatshaushalt zugeführt Verwalter nimmt Aufbaukredite auf (führt jedoch nur geringe Reparaturen aus)

Überschuldung: staatlich vorgeschriebene niedrige Mieten decken die Kosten nicht Enteignung: Verkauf des Grundstücks wegen Überschuldung an eine Genossenschaft oder Überführung in Volkseigentum
 Stand 1990: Gebäude als Mietshaus genutzt baulicher Zustand 1990: stark renovierungsbedürftig

Antrag: durch Antragsteller auf Rückgabe des Mietshauses/Grundstück gestellt vor dem 31.12.1992 an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ROV

ARoV Bln: Örtliche Zuständigkeit: ja Prüfung, ob der Antrag einer Fallgruppe

der Vermögensgesetzes zugeordnet werden kann: ja Amt ermittel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Antragsteller wirkt aktiv bei der Ermittlung des Sachverhalts mit Gründe für einen Ausschluss der Rückgabe: keine gegeben Ergebnis: alle Fakten bzgl. des Miethauses werden bestätigt

Entscheidung: Kein Einvernehmen über Rückgabe zw. Antragsteller und Wohnungsgenossenschaft Entscheidung des Amtes: Rückübertragung entsprechender Bescheid an Antragsteller Antragsteller will Rückübertragung (keine Entschädigung) Wohnungsgenossenschaft legt keine Rechtsmittel ein Kein Wertausgleich für Baumaßnahmen (schlechter Zustand des Gebäudes) Rückübertragungsentscheidung wird unanfechtbar Grundbuchberichtigung durch ARoV Bln beantragt

Im vorliegenden Fall stellen sich keine Komplikationen ein. Komplikationen könnten sein: Ein Dritter behauptet, das Gebäude redlich erworben zu haben Genossenschaft ist zur Rückgabe nicht bereit und klagt Streit über den Wertausgleich für durchgeführte Erhaltungsmaßnahmen

Statistik

Vermögensgesetz (ohne Anträge von Verfolgten des NS-Regimes)

Stand: 31.12.2012

Quelle: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ntragsteller	815.313
beanspruchte Vermögenswerte	2.372.729
darunter Flurstücke	2.227.079
Erledigungen Flurstücke	2.221.908
darunterertragungen	419.009

Aufhebung staatlicher Verwaltung	101.270
Entschädigungsbescheide	103.027
Ablehnungen	1.006.339
Rücknahmen	300.373
Unternehmensbezogene Anträge/Antragsteller	
Insgesamt	244.052
Unternehmen zum Zeitpunkt der Schädigung	96.657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Herr Prof. Dr. Pohl, für die Darstellung. Ich denke gerade auch durch die klare Systematik und Darlegung der Grundsätze sind viele Punkte deutlich geworden, wie die Prinzipien angewandt worden sind und bilden insofern dann auch eine gute Grundlage für die weitere Diskussion. Bevor ich jetzt das Wort erteile, lassen Sie mich noch eine Anmerkung machen, zumal Sie die Frage auch gestellt hatten, wie denn die Flut von Anträgen gehandelt worden sei. Hier hat Herr Prof. Dr. Pohl ja auch schon einen Teil der Antwort gegeben. Es ist eine klare Struktur einer Vermögensverwaltung aufgebaut worden, dreistufig. Regional vor Ort Vermögensämter, auf Landesebene dann auch wieder Vermögensämter und dann ein Bundesamt für offene Vermögensfragen. Das war der verwaltungstechnische Aufbau, wo die Anträge dann relativ schnell und zügig abgegeben werden konnten und auch beschieden worden sind. Das ist aber noch nicht alles. Dazu gehört dann auch eine funktionierende Verwaltungsgerichtsbarkeit, damit auch die Streitfälle, die aus den Verwaltungsakten entstehen, gerichtlich beigelegt werden können. Insofern spielte wie bei anderen Fällen auch hier eine Rolle, dass einmal schnell eine funktionierende Verwaltung aufgebaut wurde in den neuen Ländern und daneben auch ein funktionierendes Justizwesen. Das geschah auch durch ganz praktisch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Kommunen auf der Verwaltungsebene, zwischen Kreisen und auch zwischen Bundesländern

jeweils in den verschiedenen Hierarchieebenen und im Justizwesen genauso. Auch dort gab es "Patengerichte" für die jeweiligen neu eingerichteten Gerichte. Insbesondere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 war ja als solche nicht bekannt in der DDR und die musste völlig neu eingerichtet werden. Da haben dann die Verwaltungsgerichte aus den alten Ländern sehr schnell Richter entsandt, die natürlich diese Rechtsmaterie neu erlernen und damit umgehen mussten, aber die Rechtssystematik aus ihrer bisherigen Tätigkeit [bereits] kannten. Insofern ist auch für diese Fragestellung, also wie kann man mit solch einem Problem rein praktisch klarkommen, wichtig, dass die staatlichen Institutionen funktionieren und dass die vorhandenen dann auch so schnell in die Lage gesetzt werden bzw. neue Institutionen durch Übertragung der vorhandenen Institutionen geschaffen werden. Das soll erst einmal auf Ihre Frage unmittelbar die Antwort sein, aber jetzt möchte ich die Diskussion freigeben. Bevor ich Ihnen Frau Lee das Fragerecht erteile, hatte Herr Ludewig noch eine Anmerkung.

[Johannes Ludewig Bundeskanzleramt, 1990 Koordinator Neue Länder]
Ich würde gerne noch eine Anmerkung machen, weil ich selbst damals an den Verhandlungen zu dieser Erklärung zu den offenen Vermögensfragen beteiligt war. Ich habe damals für das Kanzleramt die Verhandlungen auf Westseite mit der ostdeutschen Regierung mit geführt. Ich kann Ihnen sagen, deshalb wollte ich das noch einmal erwähnen, das waren knallharte Verhandlungen, weil, wie Prof. Dr. Pohl ja dargestellt hat, die Interessen ja sehr widerstreitend waren. Es war nicht nur die Unterschiedlichkeit frühere Eigentümer gegen heutige Nutzer, sondern, das war auch eine Sorge bei uns, das Ganze könnte zu einer Blockade des wirtschaftlichen Wiederaufbaus führen. Wir brauchten ja für den wirtschaftlichen Wiederaufbau schnelle Investitionsentscheidungen. Deswegen ja auch dann dieses Investitionsvorrangsgesetz. Es hatte eine erhebliche wirtschaftliche Bedeutung. Damit Sie sehen, wie hart die Verhandlungen waren: An sich war geplant, die Erklärung bereits im Mai zusammen m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als ein Paket [zu verabschieden]. Es hat sich dann aber herausgestellt, dass die Verhandlungen so schwierig waren, dass man das getrennt hat. Man hat dann im Mai, Mitte Mai die ganzen Verhandlungen über die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abgeschlossen und hat dann nur über die Vermögensfragen weiterverhandelt und ist dann einen Monat später, am 15. Juni 1990, zu dieser Verständigung gekommen.

Noch eines, wenn ich ergänzen darf, dieser Punkt Acht, weil ich ja selbst dabei war, diese Ausnahme für die Alteigentümer von 1945-48, das war eine ganz knallharte Forderung der ostdeutschen Regierung und auch des Parlaments. Ich weiß noch heute, der Verhandlungsführer der ostdeutschen Regierung, Günther Krause, erschien, nachdem wir uns lange nicht hatten einigen können, in der Verhandlungssitzung und hat gesagt, also jetzt müsste sich die westdeutsche Seite überlegen, was sie wollte. Entweder sie wolle die Wiedervereinigung, das wolle die Ostseite auch, aber auf der ostdeutschen Seite und im freigewählten ostdeutschen Parlament gebe es keine Mehrheit für die Rückgabe des unter russischem System enteigneten Eigentums von 1945-49. Es gäbe da keine Mehrheit und darüber könne man nicht diskutieren, da müssten sich die Westdeutschen jetzt entscheiden. Ich weiß, dass in den Koalitionsrunden, dem höchsten politischen Gremium auf der Westseite diese Frage das allerschwierigste Problem war, weil natürlich nach unserem Rechtsverständnis Unrecht das geschehen war, eigentlich wieder gutgemacht werden müsste. Ist ja klar. Und Unrecht von 45-49 ist genauso Unrecht wie nach 1949. Nur dass eben das Regierungssystem ein Besatzungsregime war und noch keine DDR. Wir hatten da zwei ostdeutsche Mitglieder, der ehemalige Außenminister Genscher kam aus Ostdeutschland und der Fraktionsvorsitzende der FDP, Herr Mischnick, auch. Die haben also gekämpft bis zur letzten Minute. Erst als sie gesehen haben, dass es der ostdeutschen Seite Ernst war und dass die Frage der Wiedervereinigung auf dem Spiel stand, haben sie nachgegeben. An diesem Beispiel können Sie wirklich sehr gut sehen; der Westen konnte das nicht einfach aufkrotzieren, sondern da gab es knallharte Verhandlungen, die

sind an keinem einzelnen Punkt so schwierig gewesen wie hier. Ich habe es selbst erlebt bei meiner Aufgabe im Kanzleramt. Ich bin in keiner Frage persönlich von den Betroffenen so angegriffen worden, wie in dieser Frage 45-49. Das ging, wie man so schön auf Deutsch sagt, ans Eingemachte. Das war wirklich eine extrem spannende und harte Geschichte, aber wie Prof.Dr. Pohl gesagt hat, rückblickend muss man heute sagen, es ist kein Thema mehr. Das zeigt, dass dieser Ausgleich der Interessen, bei allen Schwierigkeiten im Einzelfall, doch gefunden worden ist. Das wollte ich noch kurz ergänz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für die Ergänzung, das ist ja immer besonders hilfreich von Augen- und Ohrenzeugen bzw. auch den Aktiven an diese Verhandlungen, also nicht nur Zeuge, sondern unmittelbar Beteiligter, zu erleben. Jetzt war noch eine Wortmeldung von Herrn Schnappauf gekommen. Unmittelbar dazu? Sonst haben Damen Vorrang, Frau Prof. Lee.

[LEE Eunyo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Vielen Dank, dank der Erklärungen von Prof. Dr. Pohl, ist unsere Neugier gut gestillt worden. Trotz allem, in Korea müssen wir uns ja auf den Notfall vorbereiten, deswegen wollen wir noch mehr wissen.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 wenn man darüber entscheiden sollte, gibt es natürlich mehrere mögliche Entscheidungen. Aber stellen Sie sich mal vor, ein Südkoreaner bekommt ein Grundstück zurück von einem Nordkoreaner, also ein Grundstück, das von dem Nordkoreaner genutzt wird. Wenn es zur Entschädigung kommt, dann soll das Geld ja vom Staat kommen. Im Falle von Korea, sei es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stellt das in beiden Fällen eine große Belastung für die Regierung dar. Auch im Falle der Rückgabe muss die Regierung ja das Grundstück zur Verfügung stellen. Wenn das nun Vermögen des Regimes oder der Arbeitspartei ist, ist das einfach, weil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einen Grund zur Intervention hat. Aber wenn das

Grundstücke sind, die zu privaten Zwecken genutzt werden, sollte man da nicht einfach den Nutzern der Grundstücke oder Gegenstände die weitere Nutzung zusichern? Entspricht das nicht dem guten Willen?

Herr Prof. Dr. Pohl, Sie haben gesagt, im Juni 1990 gab es eine gemeinsame Erklärung, basierend darauf seien dann Entschädigung oder Rückgabe entschieden worden. Wieso hat die westdeutsche Regierung eine solche enorme finanzielle Belastung in Kauf genommen, um eine solche Erklärung abzuschließen? Im Falle Koreas, falls es zu einer Notsituation kommt, und falls das nordkoreanische Territorium mit dem südkoreanischen zusammengeschlossen wird, glaube ich nicht, dass wir auch noch die finanziellen Kapazitäten haben werden, um das Problem der Privatgrundstücke zu lösen. Meine Frage ist: Welchen politischen Hintergrund gibt es für das Zustandebringen der gemeinsamen Erklärung und was war der Anlass?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Möchten Sie direkt Herr Prof. Dr. Pohl oder...?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Das ist die Frage, in welcher Wirtschaftsordnung wollen Sie leben und wir wollen in der Marktwirtschaft leben. Und zur Marktwirtschaft gehört der Schutz des privaten Eigentums, das ist ein Wesensmerkmal. Wenn Sie das nicht wollen, dann müssen Sie eine andere Wirtschaftsordnung machen, das ist Ihr gutes Recht. Aber für uns war die Entscheidung, dass das Eigentumsrecht ein zentraler Punkt ist. Auch nicht einfach aus Spaß, sondern weil wir davon ausgehen, dass das Eigentum einen Anreiz schafft für den Erhalt. Wenn mir etwas selbst gehört, dann erhalte ich das und entwickle das weiter. Insofern ist das für uns eine klare ordnungspolitische Entscheidung. Wenn ich sage Entschädigung, dann ist das die Ausnahme, die aus diesem Interessenkonflikt [stammt]. Wenn Sie auf die

finanzielle Belastung eingehen, dann muss ich natürlich sagen, dann muss man eben Wege finden, die diese finanzielle Belastung tragbar machen. In Deutschland ist das z.B. so geschehen: Wenn jemand eine Entschädigung bekommen hat, dann hat er jetzt nicht gleich 100.000 DM in die Hand bekommen, sondern ein Wertpapier, einen Rechtsanspruch, es ist in der ersten Zeit nur in geringem Maße Cash gelaufen, und diese Wertpapiere haben einen Anspruch gegeben und die wurden dann später allmählich eingelöst, sodass diese Finanzlast gestreckt wurde. Nächster Punkt: Wenn Sie eine Entschädigung machen, ist natürlich auch die Frage, wie hoch ist die. Bei uns ist das ja nicht so gewesen, dass ich 500.000 DM erhalten habe, wenn mein Grundstück 500.000 DM wert war. Man hat glaube ich 17% davon erhalten, also je teurer das Grundstück war, umso weniger in Prozenten hat man bekommen, man hat Abschläge gemacht.

[LEE Eunyou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Sie haben meine Frage missverstanden. Das Unrecht ist von den Nazis oder der Sowjetunion begangen worden. Die westdeutsche Regierung hat nichts Böses gemacht, aber die Westdeutschen müssen das bezahlen, laut gemeinsamer Erklärung. Diese politische Entscheidung macht uns skeptisch.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Neben wir mal die NS-Fälle. Das hat ja eigentlich mit DDR zunächst mal nichts zu tun. Die DDR hat keinen Ausgleich für Enteignung in der NS-Zeit gemacht, Westdeutschland hatte das gemacht. Deshalb hat man jetzt in diesem Verfahren gesagt, wir gleichen auch Eigentumsschäden aus der NS-Zeit mit aus.

Der andere Punkt, Ihre zentrale Frage. Da liegt ein Irrtum vor: Nicht der Westdeutsche zahlt die Entschädigung, sondern der deutsche Steuerzahler und der lebt in Westdeutschland oder in Ostdeutschland. Mit dem Anteil, das die Ostdeutschen am Steueraufkommen haben, beteiligen sie sich auch an der

Finanzierung dieser Entschädigungszahlungen. Mit dem Augenblick der Wiedervereinigung ist das West-Ost-Denken kein Thema mehr, sondern es ist ein gesamtdeutsches Thema und das Einzige, was Sie jetzt sagen können, ist, dass das gesamte Volk dafür eintritt.

[LEE Eunyou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Ich werde auf Koreanisch sprechen. Wenn z.B. die Wiedervereinigung durch Südkorea zustande kommt, müsste die dann vereinte südkoreanische Regierung dann entschädigen, was z.B. von der Sowjetunion enteignet wurde? Ich glaube nicht. Meine Frage ist, ob die Regierung auch bei Privatgrundstücken eingreifen müsste. Die Privatpersonen können durch einfache Gerichtsprozesse ihr Recht erstreiten. Der Staat muss da nicht unbedingt eingreifen. Man kann ja Verjährungsfristen festlegen. Ich rede wie gesagt von der Privatsphäre, was bei den Privatpersonen geschehen ist, da muss der Staat nicht entschädigen. Nach dem koreanischen Gesetz kann man das so interpretier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Wenn Sie das zu einem privaten Konflikt zwischen Alt- und Neueigentümer werden lassen, werden Sie der Aufgabe des Staates als Konfliktlöser und Richter über einen solchen Konflikt nicht gerecht. Herr Prof. Dr. Pohl hat es glaube ich in seinem Vortrag sehr deutlich gemacht. Es prallen dann zwei Interessen aufeinander und dann ist es glaube ich für die Schlichtung und für den gesellschaftlichen Frieden notwendig, dass Sie eine Regelung finden, die im Konsens von der demokratischen Mehrheit getroffen worden ist, dann können Sie zu einer Befriedung kommen. Dann schaffen Sie es, dass man dort hinkommt, um eine schnelle, positive Entwicklung zu erreichen. Wenn Sie das ausschließlich einer privaten Streitkultur überlassen, indem Sie die beiden Interessen zwar vor einem staatlichen Gericht, aber gegeneinander antreten lassen, würde das nicht zu einer Befriedung der Gesellschaft und vor allem nicht zu einer schnellen Lösung der Problematik

beitragen. Aber jetzt waren hier noch zwei Wortmeldungen. Zuerst einmal Herr Prof. Dr. Schröder...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Hier war auf unserer Seite fast ein Konsens, nämlich darin, dass die Verhältnisse, die hier beschrieben werden und die koreanischen deshalb unvergleichbar sind, weil Sie keine Grundbücher haben im Norden. Sie haben doch keine Grundbücher im Norden. Warum diskutieren Sie denn als hätten Sie welche. In Ostdeutschland standen Westdeutsche als Eigentümer im Grundbuch. Das war erst einmal der Einstieg. Da hätte man den Westdeutschen sagen müssen: Also die DDR hat Euch noch gar nicht enteignet, das machen wir jetzt, die frei gewählte Volkskammer. Na das ist ein schöner Rechtsstaat! Das heißt, diese beiden Punkte gibt es bei Ihnen nicht. Es gibt keine Grundbücher im Norden, in denen Südkoreaner als Eigentümer drin stehen. Ich habe doch gelesen, dass das Privateigentum an Grund und Boden zur Zeit höchstens 100m² beträgt. Wenn Sie die Häuser verschenken wollen, dann kommt noch die Grundfläche des Hauses dazu. Diese Nutzung wird doch sowieso niemand niemandem streitbar machen. Wie ich gehört habe, ist die private Verfügung über Grund und Boden im Norden eingeschränkt auf den Garten, ist das denn richtig? Das sind die Nutzer im engsten Sinne. Sie verstehen jetzt vielleicht noch unter Nutzer diejenigen, die das Feld pflügen. Das ist auch berechtigt, das so zu verstehen, aber ich wollte nur sagen: Warum geben Sie sich an dieser Stelle Mühe, wenn wir einig waren, dass Sie keine Rückgabe machen können. Dann lassen Sie doch das Thema und kommen Sie zum nächst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Jetzt waren aber noch Wortmeldungen...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Damit wir es noch einmal verstehen. Für uns war ganz wichtig, dass Gerechtigkeit wiederhergestellt wird. Es war Unrecht geschehen durch den Staat und das musste wieder - das war die Erwartung in Ost- und Westdeutschland - bereinigt werden. Das war dieser Interessenausgleich und der hat im Ergebnis überraschend gut funktioniert.

[LEE Eunyou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Dann etwas zu Deutschland. Warum gibt es solche Gedanken, dass das Eigentumssystem im Osten ungerecht ist?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Es gibt immer Leute, die nicht zufrieden sind. Aber im großen Ganzen ist die Regelung, die getroffen worden ist und wie sie umgesetzt worden ist, breit akzeptiert. Das ist ja das, was erreicht werden sollte. Was wichtig war: Der wirtschaftliche Aufbau ist nicht behindert worden.

[LEE Eunyou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Die Grundidee ist also die Wiederherstellung von Gerechtigkeit?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Herr Dr. Hammann?

[Dr. Detlev Hammann Geschäftsführer der
Bodenverwertungs-und-verwaltungs GmbH]

Ich würde zwei besondere Fälle hervorheben wollen. Die hängen eben auch mit der deutschen Vergangenheit zusammen. Durch den Entschädigungsfonds sind

natürlich vor allem diejenigen entschädigt worden, die im Nationalsozialismus gelitten haben. Da war klar, das war staatlich begangenes Unrecht. Das hat Westdeutschland versucht zu heilen, so gut es ging, aber das war dann in der DDR er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möglich. Das ist die erste Bemerkung, die ich dazu machen möchte und die zweite betrifft meinen Vortrag von gestern. Wir haben ja die sogenannte Bodenreform gehabt zwischen 1945 und 1949, d.h. die Grundsatzentscheidung, dass den Alteigentümern damals dieses Eigentum entgegen unserem rechtlichen Verständnis nicht zurückgegeben wurde. Aber gleichzeitig haben wir bzw. hat die Bundesregierung auch auf der Grundlage entsprechender Urteile des Verfassungsgerichts gesagt, die Alteigentümer müssen gleichwohl entschädigt werden. Das ist auch erfolgt, das ist auch richtig so. Da hat es zwei Wellen gegeben, zuletzt jetzt noch einmal durch eine gesetzliche Änderung im sogenannten Zweiten Flächenerwerbsänderungsgesetz. Wenn ich das mal kurz schildern darf, dann bekommen Alteigentümer, die meinetwegen damals über 100ha abgeben mussten, einen bevorrechtigten, preisgünstigen Zugang heute, im Durchschnitt sind das 30ha. Müssen dafür aber zahlen. Das ist sozusagen ein milder Ausgleich, eine Entschädigung für das damals erlittene Unrecht, vor dem Hintergrund der besonderen politischen und dann auch rechtlichen Situation im Rahmen der Einigungsverhandlungen. Das sind zwei konkrete Fälle, um die es hier geht und die auch richtig sind, dass man sie entsprechend angeht.

[LEE Eunyong Prof. an der HUFS Law School]

Das koreanische Problem ist, geht es um gerechte Verteilung oder ökonomisch [sinnvolle] Verteilung. Beide Faktoren, beide Aspekte sollen miteinander harmonisieren. Was meinen Sie, Prof. Dr Pohl, kann die Verteilung sowohl gerecht als auch wirtschaftlich sein?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Was ist gerecht? Wenn Sie mir sagen, was gerecht ist..

[LEE Eunyoung Prof. an der HUFV Law School]

Dass die Alteigentümer ihr Eigentum zurückbekommen.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ch sage es mal so. Privateigentum zu haben ist mein Recht. Das ist konstitutives Recht. Der Staat kann dieses Recht einschränken, wenn das Gemeinwohl es erfordert. Dann muss der Staat mir aber für das Eigentum eine Entschädigung zahlen. Das empfinde ich als gerecht. Wenn der Staat mir das Eigentum wegnimmt, ohne eine Entschädigung zu zahlen, dann ist das ungerecht. Die Wiederherstellung der Gerechtigkeit geht genau in diese Richtung. Wir wollen das, was da geschehen ist, also die rechtswidrige, entschädigungslose Enteignung korrigieren. Das ist der eine Punkt. Ich denke wir alle auf der Seite hier sind überzeugt, dass dieses Recht auf Eigentum ganz wesentlich für das Funktionieren einer Marktwirtschaft ist. Denn die Alternative zum Recht auf Eigentum ist das Staatseigentum und das ist nun gerade in der DDR schiefgegangen. Insofern ist alles, was man zum Schutz des Eigentums macht, etwas, was auch die Effizienz der Wirtschaft fördert. Das ist jedenfalls das Verständnis, was dahinter steht.

Ich sage noch mal, man muss ja keine Marktwirtschaft einführen, dann hat man natürlich auch ganz andere Lösungen für die Eigentumsfrage. Aber wenn man der Meinung ist, die Marktwirtschaft ist ein sinnvolles System, dann gehört jedenfalls nach unserem Verständnis das Eigentum dazu. Insofern besteht kein Widerspruch zwischen gerechten Vermögensverhältnissen und wirtschaftlich effizienten Regelung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Herr Prof. Dr. Pohl. Jetzt war hier vorne noch eine Frage von Prof. Nak-In Song.

[SUNG Nakin Prof. für Rechtswissen schaffen, SNU]

Wir haben zwei Tage lang wirklich leidenschaftlich diskutiert. Ich komme heute schon wieder erst am Ende zu Wort. Ohne die Hand zu heben, hätte ich überhaupt keine Chance bekommen, mich zu Wort zu melden. Deswegen habe ich die Hand gehoben, mich bemerkbar gemacht.

Wenn ich auf unsere zwei Tage Sitzung und Programm zurückblicke, merke ich immer wieder, die Situation von Deutschland und Korea ist anders. Hier sollen auch unterschiedliche Lösungen vorgestellt werden. Als wir Leipzig besucht haben letztes Jahr, haben wir damals unweit von Fabriken Blumen und Felder gesehen. Ich konnte nicht anders als die Bilder mit Nordkorea zu vergleichen. Man hat ja auch die DM und DDR-Mark 1:1 umtauschen können. Sie waren dazu fähig. Auch wenn es noch unsichtbar bleibt, noch vor der Wiedervereinigung sollte in Südkorea das Fundament für die Soziale Marktwirtschaft geschaffen werden. Aber wie Sie wissen, die nordkoreanische Wirtschaft ist eine der schwächsten der Welt, deshalb kann man das deutsche Modell hier nicht anwenden.

Was das Rückgaberecht angeht, wurde immer wieder die Verfassung erwähnt. Hier geht es ja um Vermögensrecht, genauer gesagt um Grundstücke. Soweit ich weiß, gab es sowohl in Ostdeutschland als auch in Nordkorea vor dem kommunistischen Regime natürlich privates Besitzrecht. Bis in die 30er oder 40er Jahre hatten alle Grundstücke einen Besitzer, es sei denn es gehörte [damals schon] dem Staat. Danach kamen die sowjetischen Truppen und dann kam das Volksregime. Aber ich sehe, dass erst seit 1971 die Grundstücke vollständig verstaatlicht wurden. In Nordkorea wurde die Verstaatlichung bereits im Jahre 1946 vervollständigt. Wir haben ja darüber gesprochen: Was ist die Akzeptanz gemeinsamer Werte? Das soll alles einhergehen mit der historischen Situation.

Man kann Verfassungswerte oder Gerechtigkeit nicht trennen von der historischen Situation.

Herr Prof. Ahn Du-sun hat es bereits erwähnt und auch ich möchte über einen möglichen Regimewechsel sprechen. In Ostdeutschland war es das gleiche Land, aber das Wirtschaftssystem hat sich gewandelt von Planwirtschaft zu Marktwirtschaft. Die Planwirtschaft wurde dann integriert in die Marktwirtschaft. So wie Herr Ahn Du-sun es auch gesagt hat, haben wir eine große Kluft zwischen Nord- und Südkorea. Wir haben sogar Krieg geführt. Nach der Wiedervereinigung könnten wir eine eigene Wirtschaftszone in Nordkorea aufbauen. Mich würde interessieren, ob es sowas in Ostdeutschland gab. Herr Ahn Du-sun hat das gesagt, weil er Ökonom ist. Ich aber als Verfassungsprofessor finde, das ist etwas, das unmöglich ist. Deswegen möchte ich wissen, ob es überhaupt ähnliche Diskussionen gegeben hat über die Einrichtung einer Wirtschaftszone?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Herr Schnappauf, dann Herr Prof. Lee.

[Klaus-Dieter Schnappauf ehm. Leiter der Arbeitsgruppe "Deutsche Einheit" (Einigungsvertra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ielen Dank, Herr Vorsitzender. Durch die Diskussionen der letzten Minuten ist ein Teil dessen vorweg genommen worden, was ich ansprechen wollte, allerdings nur ein Teil. Ich möchte einen Gedankengang, eine Fragestellung von Herrn Ahn aufgreifen, die sich auf Seite 3 unten seines Manuskripts befindet, wo er Artikel 3 der südkoreanischen Verfassung anspricht und die Frage aufwirft, ob vor dem Hintergrund, dass die nordkoreanische Obrigkeit danach eine illegale Gruppierung ist, sämtliche Maßnahmen rückwirkend als illegal zu betrachten sind und rückabzuwickeln sind. Ich maße mir nicht an, [mich] in irgendeiner Weise zur südkoreanischen Verfassung äußern zu wollen, ich möchte nur mit aller Zurückhaltung den Rat bzw. die Empfehlung geben, an diese Frage nicht

dogmatisch, sondern pragmatisch heranzugehen. Ich hatte gestern bereits die Gelegenheit [zu erläutern], dass wir eine ähnliche Fragestellung im Rahmen des Einigungsvertrages zu überlegen hatten, nämlich ob das, was Herr Ludewig gerade sehr eindrucksvoll geschildert hat, Nichtrückgängigmachung der Bodenreform, unter unseren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überhaupt rechtlich hinnehmbar war. Ich habe Ihnen geschildert, dass in der Tat auch bei uns die Auffassung vertreten wurde, es sei rechtlich nicht hinnehmbar, sodass wir vor einer potentiellen Blockadesituation standen: Auf der einen Seite war das eine unübersteigbare Forderung und auf der anderen Seite stand für uns die Frage, können wir das überhaupt hinnehmen? Ich habe Ihnen dargestellt, dass wir diese salomonische Lösung, wie ich das genannt habe, im Einigungsvertrag gefunden haben, dass wir eine verfassungsrechtliche Klarstellung gemacht haben, die das ermöglicht hat. Ich denke es kommt in der Tat entscheidend darauf an, hier vernünftige, gerechte Lösungen herbeizuführen. Es gibt sicherlich eine unübersteigbare Grenze, die aber nach meiner Einschätzung sehr weit gezogen ist, nämlich dort, wo ganz grundlegende rechtsstaatliche Prinzipien berührt sind. Ich glaube, dass wir hier sehr weit davon entfernt sind. Insbesondere dann, das habe ich gestern bereits angesprochen, wenn es um die Frage geht, ob überhaupt eine Wiedervereinigung möglich ist oder nicht. Deshalb noch einmal meine Aussage: Gehen Sie pragmatisch an die Sache heran und versuchen Sie Lösungen zu finden, die von den Menschen als gerecht empfunden werden und die für die Zukunft zu einer positiven Lösung und Entwicklung beitragen könn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Herr Schnappauf. Jetzt Prof. Lee und dann kommen Sie...

[LEE Karkbum Ehrenprofessor, KAIST]

Was die Wiedervereinigung angeht, sind für uns die praktischen Erfahrungen der deutschen Seite wichtig. Hier sind ja diejenigen anwesend, die aktiv bei den

Verhandlungen anwesend waren. Das ist für uns eine sehr wichtige Angelegenheit. Ich hatte auch die Gelegenheit mit Experten aus China und Japan zu sprechen. Falls Korea eigenständig vereinigt wird, hat das Land überhaupt die Fähigkeit, die Wiedervereinigung zu schultern? Hier teilen wir die Meinung der japanischen Wissenschaftler: Hat Südkorea die gleiche Fähigkeit Nordkorea zu verwalten wie Westdeutschland damals Ostdeutschland? Wir waren einig darüber, dass hierfür Unterstützung von japanischer Seite notwendig ist.

Im Zusammenhang damit, was die Immobilien angeht: Entschädigungen als langfristige Wertpapiere verteilen haben Sie gesagt, aber bei der Umstrukturierung oder Sanierung von Unternehmen braucht man schon Bargeld, also Cash, keine Wertpapiere. Wie haben Sie dieses Problem gelöst? Bevor ich eine weitere Frage stelle, möchte ich die Frage kommentieren, die Prof. Song Nak-in gestellt hat. Ich kenne einen Medizinprofessor, er ist ein Sympathisant von Nordkorea, er besucht Nordkorea regelmäßig, um medizinische Versorgung zu geben. Obwohl er ein großer Kenner Nordkoreas ist, meint er, wenn die Vereinigung kommt und Nordkoreaner und Südkorea zusammenkommen, dann wird eine Katastrophe passieren, was den medizinischen Sektor angeht. Tuberkulose ist eine Krankheit aus vergangenen Zeiten, in [Süd-]Korea gibt es schon seit langem keine Tuberkulose mehr. Auch Malaria, Typhus, so etwas gibt es seit langem nicht mehr in Südkorea. Dadurch möchte ich beschreiben, es gibt in sehr vielen verschiedenen Sektoren Unterschiede in der Lage von Ostdeutschland vor der Wiedervereinigung und Nordkorea. Dazu gehört nicht nur der medizinische Sektor, sondern auch die Freiheit von Bürgern. Anstatt den Nordkoreanern volle Freiheit zu gewähren, sollten wir vielleicht eine Art Anpassungsphase einführen für eine gewisse Zeit. Das könnte auch in der Wirtschaft angewendet werd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Wenn ich dazu anmerken darf, so habe ich jedenfalls Ihre Ausführungen verstanden, auf der einen Seite ist die Vereinigung von Nord und Süd, wenn sie denn kommt,

glaube ich selbstverständlich eine nationale Aufgabe und sollte von Korea [selbst] bewältigt werden. Dass es natürlich auch der Unterstützung anderer Staaten durch Investitionen und wirtschaftliche Hilfe bedarf, ist glaube ich auch unstreitig. Auch wir haben ja ganz bewusst, Herr Ludewig hat es ja erzählt, aber auch vorhin wurde es deutlich, bei der Frage der Aufgaben der Treuhandanstalt internationale Investoren gesucht, die in Ostdeutschland dann auch entsprechend zu dies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beigetragen haben und dort auch ganz bewusst diese Stärkung genommen, denn alleine aus der deutschen Wirtschaft heraus wäre es sicherlich nicht möglich gewesen, bei allen Anstrengungen. Aber auch aufgrund der Situation, dass wir uns in einem freien Wirtschaftsraum befanden.

Wenn ich Sie weiter richtig verstanden habe, gehen die Überlegungen dahin, ob Sie vor dem Hintergrund der besonderen Fragestellungen im Gesundheitswesen, im Eigentumswesen, auch in vielen anderen Bereichen, was ja auch schon öfter anklang, sozusagen eine Sonderwirtschaftszone errichten mit einem quasi halbsouveränen Staat Nordkorea, um dann dort einen Transferprozess in einer geschützten Umgebung zu schaffen und dann erst anschließend eine tatsächliche Vereinigung zu machen. Das ist ein Modell aus meiner Sicht, das man sicherlich fahren kann, man muss dann aber eben auch schauen, ob so etwas in der konkreten politischen Situation machbar ist. Ich glaube, dass zunächst einmal zu schauen ist, inwieweit das verfassungsrechtlich aus handelbar ist, da sind Sie viel näher dran als wir das beurteilen können. Rein faktisch kann man das sicher so versuchen, hinzubekommen. Es war nur auf der deutschen Seite glaube ich kein ernstes Modell, das über längere Zeit diskutiert worden ist. Es gab ja auch Überlegungen die Währungsunion herauszuschieben. Es gab dann Überlegungen auch in der freien Volkskammer, aber Herr Prof. Dr. Schröder ist da viel besser informiert, eine andere DDR zu schaffen, um dann sukzessive weiterzugehen. Aber das ist durch die Dynamik des Prozesses schlicht überholt worden und die wirtschaftlichen Gegebenheiten waren einfach so, dass diese Maßnahmen, die wir geschildert haben, notwendig waren. Dass es als Modell im Raum steht, sicherlich richtig. Inwieweit

es dann auch handelbar ist in der konkreten politischen Situation, die Sie vorfinden, wo Sie dann auch berücksichtigen müssen, inwieweit die Bevölkerung in Nordkorea, die dann auch Freiheit spürt... - das ist eine Erfahrung: wenn das erste bisschen frische Luft und Freiheit da ist, dann wird der Wunsch nach Freiheit größer und die Dynamik dieses Wunsches wird dann manches theoretische Planspiel glaube ich überholen. Insofern muss man da schauen, inwieweit das als Modell funktionieren kann. Die Frage von 1989 vom Mauerfall bis zum Oktober 1990 war das in Deutschland kein realistisches Modell, so etwas aufzubauen, sondern da waren einfach die Gegebenheiten tatsächlicher politischer, auch rechtlicher Art so, dass dieser Weg dann gegangen werden musste. Hatte ich das als Wortmeldung verstanden, Herr Prof. Dr. Paqué? Herr Prof. Kim hatte sich auch noch gemeldet.

[KIM Younghoon Research Director, Dept. of Global Cooperation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Vielen Dank, Herr Prof. Dr. Pohl hat ja einen Vortrag gehalten. Wir sprechen über Freiheit, Verfassung, kommen wir doch zurück zur Praxis. Ich möchte noch mal meine Neugierde befriedig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gab es eine beispielslose Situation und diese Pragmatik der deutschen Bürger hat mich immer wieder überrascht und war sehr beeindruckend für mich.

Ich komme zu Punkt 11 von Ihrem Vortrag. Hier meinten Sie, es soll zurückgegeben werden, wie es steht und liegt, also wenn ein Unternehmen zurückgegeben wird und es hat Schulden, dann wird es mit Schulden zurückgegeben. Wenn ein Unternehmen mehr Vermögen hat, weil es guten Umsatz gemacht hat, wurde dann dieser Mehrgewinn auch zurückgegeben? Das ist meine erste Frage.

Meine zweite Frage könnte vielleicht etwas komplex sein: Es gab die Verwaltungsämter, die die Aufgabe hatten, bestimmte Unternehmen zu verkaufen. Wir brauchen dann in Korea auch ähnliche Ämter, ähnliches wie eine Treuhandanstalt. Aber was möglicherweise Nord- und Südkorea gemeinsam bauen,

könnte eine andere Form haben. Denn in Ostdeutschland gab es immer noch Unternehmen mit Wert, es gab Fachkräfte, es gab Immobilien und Technologie usw. Man konnte den Wert der Unternehmen gut bewerten, nach guten Standards bemessen. Aber außer der Biermarke Taedonggang kann man sich kein gutes Unternehmen in Nordkorea vorstellen. Es fehlt an Gebäuden, an Technologien, an Werten von Unternehmen. Die Entsorgungskosten sind viel höher als die Werte eines Unternehmens. Vielleicht sollte man einfach nur das Grundstück nehmen. Meine Frage lautet: Falls ein Unternehmen überlebt hat, sollte man in dem Unternehmen die Mitarbeiter weiter beschäftigen, aber wenn ich mir vorstelle, dass die Beschäftigungskonditionen nicht weiter aufrecht erhalten werden können, kann das zur Katastrophe führen. Wenn man nur das Grundstück anerkennen würde, würde das die Sache viel einfacher machen. Was meinen Sie zu meiner Fragestellung?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Herr Prof. Dr. Pohl, Sie waren jetzt glaube ich angesprochen.

[Prof. Dr. Rüdiger Pohl ehemaliger Präsident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Dann werde ich es versuchen. Das erste zu der Ziffer 11, wie es steht und liegt. Man muss es so sehen, wenn ein Grundstück enteignet worden ist und jetzt wird es rückübertragen und in der Zwischenzeit ist auf dem Grundstück ein werthaltiges Gebäude entstanden. Dann stehe ich ja nach der Rückgabe besser da als zum Zeitpunkt der Enteignung. Da muss ich dann einen Ausgleich dafür zahlen, weil man soll ja nicht durch die Rückgabe zum Gewinner werden, sondern man soll nur zurückbekommen, was man verloren hat. Bei Unternehmen ist das jetzt etwas anderes. Sagen wir mal so, Sie haben ein Unternehmen, das ist in der DDR weitergeführt worden und dieses Unternehmen hatte bestimmte Grundstücke und einige Grundstücke sind ausgelöst worden, sind nicht mehr in dem Unternehmen

drinnen, dafür sind andere Grundstücke hinzu gekommen, weil der Betrieb sich verändert hat. Dann müssen Sie das so hinnehmen, wie das Ihnen jetzt vorliegt. Das Grundstück, das weggegangen ist, das kriegen Sie nicht zurück, aber das Grundstück, das hinzugekommen ist, brauchen Sie auch nicht wegzugeben. Wenn der Betrieb jetzt überschuldet ist, also Sie erhalten einen Betrieb zurück, wo die Schulden größer sind als die Aktiva, der Betrieb also eigentlich pleite ist, dann haben Sie ja kein Interesse an der Rückgabe, dann wird in diesem Fall ein Ausgleich gezahlt. Diese Überschuldung wird dann durch den Staat ausgeglichen, sodass der wenigstens anfangen kann. Das ist so die Lösung dazu. Jetzt zu dem zweiten Thema. Sagen wir mal so, wenn es keine Unternehmen gibt, kann man keine Unternehmen bewerten und kann man keine Unternehmen rückübertragen. Dann kann man gar nichts machen, dann gibt es nur das Grundstück. Dann ist natürlich die Frage, wer soll das Grundstück bekommen, wer bezahlt dafür und was macht er mit dem Grundstück. Da sehe ich kein Problem. Wenn aber auf dem Grundstück doch ein Unternehmen ist, dann stellt sich natürlich die Frage, in welchem Zustand ist das. Da würde man nach unserem Verständnis so vorgehen: Gibt es eine Chance dieses Unternehmen zu privatisieren, zu verkaufen, d.h. findet sich ein Investor, der dieses Unternehmen übernimmt? Wenn ja, würden wir das tun, wenn es unter keinen Umständen einen Investor gibt, dann würden wir dieses Unternehmen schließen. Dann ist es einfach nicht sanierungsfähig. Wenn Sie das nicht schließen, müssen Sie ja ständig irgendeinen Zuschuss zahlen, damit das Unternehmen überhaupt überlebt. Wenn Sie das in großer Zahl machen, haben Sie als Staat ein ganzes Spektrum an Unternehmen, die nicht sanierungsfähig, die nicht verkaufbar sind, die Sie viel Geld kosten und die ineffizient sind. Das kann man mal machen für eine gewisse Zeit, sagen wir mal 1-2 Jahre, da wird man nicht gleich sagen, am nächsten 1. geschieht das. Aber auf die Dauer ist das eine schlechte Lösung. Bei uns heißt ja die Lösung nicht, alle Unternehmen privatisieren, sondern es heißt ja auch, wo das nicht möglich ist, stilllegen. Das wäre die Antwort darauf. Die Frage ist jetzt dann, wenn Sie ein Unternehmen

haben, wie bewerten Sie das. Das bekommen Sie natürlich nicht heraus, indem Sie einen Wert ansetzen, sondern nur indem Sie versuchen, es zu verkaufen. Wenn lauter Ablehnungen kommen, keiner will das haben, dann ist das Unternehmen nichts wert. Aber wenn Sie zehn Interessenten haben, oder fünf oder drei, die dafür bereit sind, einen Preis zu zahlen, dann müssen Sie mit denen über den Preis verhandeln. Insofern bleibt dann am Ende natürlich das Grundstück übrig. Das kann man dann auch so machen. Nur muss man jetzt sehen, wir haben jetzt hier zwei Dinge vermischt. Wir haben vorhin über das Rückübertragen von geredet Eigentum - das Privatisieren von Unternehmen ist ein ganz anderes Thema. Das muss man sehen. Kollege Paulin hat geredet über das Privatisieren von Unternehmen, ich habe geredet über das Zurückgeben an Alteigentümer und da sage ich Ihnen, was nicht mehr da ist und was nicht werthaltig ist, können Sie auch gar nicht zurückgeben. Deswegen sage ich ja, ich hatte es heute morgen schon mal gesagt, ich möchte es an der Stelle noch einmal wiederholen: Ein Entwicklungskonzept für Nordkorea kann nicht darauf beruhen, dass man nur vorhandene Unternehmen irgendwie privatisiert, sondern ich kann es mir überhaupt nicht anders vorstellen als dass hier massive Anstrengungen unternommen werden, neue Unternehmen zu etablieren. Zur Not auch für eine gewisse Zeit mit staatlichen Subventionen. Und möglichst Unternehmen, die weltweit Erfahrung haben. Das ist sozusagen unumgänglich. Vielleicht kann ich an der Stelle noch mal etwas sagen zu dieser Sonderwirtschaftszone. Ich sagte ja, Ostdeutschland ist eine Sonderwirtschaftszone gewesen, weil dort andere Möglichkeiten der Förderung und der Besteuerung vorhanden waren als in Westdeutschland, das ist ganz klar. Wenn Sie jetzt sagen, wir machen da eine Sonderwirtschaftszone und eine Anpassungsphase, dann frage ich mich: Mit wem verhandeln Sie denn darüber? Ich stelle mir vor, wir hätten mit der DDR darüber verhandelt, eine Anpassungsphase zu machen, da hätte uns die Volkskammer gesagt, dann kommen wir nicht zu Euch, dann bleiben wir lieber bei uns selber. Man muss sich klarmachen: Solche Prozesse gehen nur in Verhandlungen aller

Beteiligten. Ich weiß jetzt nicht, ob Ihnen das gelingen wird, aus südkoreanischer Sicht ein Modell vorzugeben. Ich kann mir das nicht vorstellen. In Deutschland hätte das nicht funktioniert. Deshalb muss man immer die Frage auch aus der Sicht des anderen stellen: Akzeptiert der das, macht der das mit? Wenn er nicht mitmacht, können Sie dieses Modell nicht verfolgen, dann bekommen Sie die Wiedervereinigung nämlich nie.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ich hatte jetzt eben noch eine Wortmeldung von Herrn Botschafter Chung. Dann würde ich vorschlagen, dass wir uns nach dem Beitrag eine kurze Kaffeepause verdient haben, denn die intensive Diskussion sollte dann auch belohnt werden. Danach haben wir ja dann noch die Gelegenheit die Diskussion weiterzuführen. Jetzt Herr Botschafter Chung...

[CHUNG Chongwook Vorsitzender, Zentrales Gremium der Mitglieder des Bildungsausschusses für die Wiedervereinigungsbildung]

Ich weiß nicht, ob ich die Zeit für mich beanspruchen darf oder ob ich vielleicht besser nach der Kaffeepause in der Schlussdiskussion das Wort ergreifen sollte. Wir sprechen jetzt über Enteignung und Rückgabe, aber ich möchte zu einem größeren Thema sprechen. Gestern und heute habe ich mir alle Kommentare und Fragestellungen angehört. Zunächst muss ich sagen, ich habe sehr viel von Ihnen gelernt, das möchte ich betonen. Sie haben eine schwierige Phase hinter sich und Ihre Erfahrungen sind so wertvoll für uns. Die Wiedervereinigung in Deutschland liegt zum Glück schon so lange zurück, wovon wir jetzt lernen können. Ich denke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wird noch viel schwieriger sein, das ist auch mein Eindruck.

Wir haben auch von der Treuhandanstalt gehört; zuerst waren es nur ein paar hundert Leute, aber später dann ein paar Tausend. Die rasante Vergrößerung der Zahl der Belegschaft zeigt, wie schnell die Aufgaben sich angehäuften haben

bei der Treuhand. Ich kann mir gut vorstellen, dass es eine Frage werden wird, wenn wir uns wiedervereinigen, ob wir genug Fachkräfte haben, die damit umgehen können. Ich mache mir Sorgen darüber. Ich möchte noch einmal den deutschen Mitgliedern für Ihr Mitteilen ihrer Erfahrungen danken. Ich glaube, dass der Fall Deutschlands und der Koreas sehr unterschiedlich ist, das liegt jetzt auf der Hand.

Angesichts dieser Unterschiede ist mir ein Gedanke gekommen. Ich habe keinen griffigen Ausdruck, um meinen Gedanken zum Ausdruck zu bringen, aber ich möchte das Thema Kultur ansprechen; wir haben unterschiedliche Kulturen. Wenn mich jemand fragen würde, woran liegt es, worin unterscheiden sich beide, würde ich sagen, ist es die kulturelle Heterogenität. Was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 Deutschland geschah, inklusive der Handhabung Entschädigung und Rückgabe und was in Korea passieren könnte, da dürfte es große Unterschiede geben im Bezug auf die Kultur. In Deutschland soziale Gerechtigkeit, Rechtsstaatlichkeit, Verfassungsrechte, wirtschaftliche Effektivität und solche wichtigen Begriffe, das haben wir alles angesprochen - das sind natürlich auch unsere Grundsätze und sollten sie auch bleiben. Aber im Fall Koreas wird die politische Kultur eine große Rolle spielen, vielleicht eine viel größere Rolle als in Deutschland. Deutschland hatte auch eine eigene politische Kultur, die sich wohl auch auf die Entscheidung über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ausgewirkt hat. Vielleicht gibt es also aus der Sicht der politischen Kultur gewisse Dinge, die Einfluss auf die Entscheidungen über offene Vermögensfragen ausüben.

Meine zweite Frage, Nordkorea und die DDR sind völlig unterschiedliche Länder, das kann man nicht oft genug betonen und ich bin auch dieser Auffassung. Gestern haben wir schon mal angesprochen, dass es vielleicht eine Übergangsphase geben könnte. Ich weiß nicht, wie das von sich statten gehen könnte, aber wenn ein Vakuum in Nordkorea entsteht, wird es Turbulenzen geben. In einer solchen turbulenten Zeit der Übergangsphase könnten die Nordkoreaner die Opfer werden. Wir machen uns darüber Sorgen. Diejenigen, die politisch belastet sind, das ist

vom Umfang und Charakter unvergleichbar mit der DDR, die werden erheblich zu kurz kommen. Ich weiß nicht, wie es in der DDR war, aber in Nordkorea gibt es die sogenannten politischen Häftlinge und die Flüchtlinge, aber innerhalb Nordkoreas sind diese Leute nichts anderes als Verräter. Die Familien werden politisch verfolgt und die verbleiben noch in Nordkorea. Wenn Nordkorea zusammenbricht und wir uns für eine neue Ordnung entscheiden, wie können wir dann mit diesen politischen Häftlingen oder Regimekritikern in Nordkorea umgehen, die derzeit deswegen unterdrückt werden. Könnten Sie Ratschläge geben, wie wir mit diesen Menschen umgehen soll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für diese Fragestellungen. Ich denke die sind ganz wichtig und eröffnen zwei weitere Aspekte, die wir sicherlich noch im Anschluss diskutieren können. Jetzt haben wir uns aber erst einmal einen Kaffee verdient. Ich würde vorschlagen, dass wir uns um 20 vor wieder im Saal zu den Abschlussdiskussionen einfinden. Vielen Dank.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Meine Damen und Herren, darf ich Sie so langsam wieder bitten Platz zu nehmen, damit wir fortfahren können. Vielen Dank, ich glaube, dass auch die in der eigentlich als Pause gedachten Kaffeepause fortgesetzten Diskussionen zeigen, wie intensiv und interessant die Themen aufgenommen sind von beiden Seiten und insofern glaube ich, dass wir auch auf der letzten Etappe, die wir laut der Tagesordnung noch vor uns haben, das gut bewerkstelligen werden. Herr Botschafter Chung hatte eben zum Ausklang noch zwei wichtige Punkte angesprochen. Das eine ist sicherlich die Frage, wie das politische System, die politische Kultur, die in Deutschland sowohl in der Bundesrepublik, wie sie sich aber auch in der dann freien DDR entwickelt hatte, die glaube ich auch eine gewisse Unterscheidung immer noch deutlich werden lassen, aber gleichwohl von einem grundsätzlichen

Punkt ausgingen, mit den Kernfragen des Einigungsprozesses umgegangen ist und was daraus abzuleiten ist auch unter dem Gesichtspunkt der koreanischen politischen Kultur und der koreanischen politischen Verhältnisse. Das ist glaube ich eine ganz interessante, wichtige Frage.

Der zweite Aspekt, den Sie angesprochen hatten, den hatte ich jedenfalls so verstanden, dass es darum geht, wie gehen wir im Fall der Wiedervereinigung mit politischen Häftlingen um, also mit Personen, die neben der allgemeinen Repression des Systems einer besonderen Unterdrückungsmaßnahme ausgesetzt worden sind. Wie kann man damit umgehen und wie fängt man das auf, um auch die innernordkoreanische Gesellschaft wieder zu befrieden? Denn das ist ja auch eine Notwendigkeit, auch dort Frieden in der inneren Gesellschaft herzustellen, um dann auch einen Vereinigungsprozess in Gesamtkorea gestalten zu können.

Auf die erste Frage möchte ich aus meiner Sicht jetzt noch nicht eingehen, aber die zweite ist sicherlich ein Punkt, den wir auch mit Blick auf die nächste Sitzung uns noch mal vor Augen führen können, denn es gab ja auch schon in der DD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ie Frage, wie arbeiten wir das ergangene Unrecht auf? In der Folge hat es ja dann auch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entsprechende gesetzliche Regelungen zur Rehabilitierung von Verfolgten bzw. Häftlingen gegeben. Das eine ist sozusagen das formaljuristische Verfahren, wie man damit umgeht, das andere ist aber auch der gesellschaftliche Aufarbeitungsprozess, der ganz intensiv begonnen worden ist, ja auch schon in der DDR mit der Stürmung der Stasi-Zentrale und der Sicherung und Wahrung der Unterlagen als ein Ausgangspunkt der Aufarbeitung. Wobei aber auch hervorzuheben ist, aus meiner Sicht jedenfalls, dass man es nicht nur an der Staatssicherheit festmachen darf, sondern dass es insgesamt um eine Aufarbeitung des Unrechtssystems gehen muss und dass es dort eines gesellschaftlichen Diskurses und Prozesses bedarf, um eine Versöhnung zwischen den dann ehemaligen Machteliten und den Betroffenen und Unterdrückten herzustellen. Man will ja

mit Blick auf die Zukunft eine Gesellschaft haben, die nicht nur formaljuristisch, sondern auch gesellschaftlich befriedet ist, damit man dann auch voranschreiten kann.

Das sehe ich als den Kern Ihrer Punkte an und da sehe ich durchaus Möglichkeiten, das noch einer vertieften und intensiven Diskussion zuzuführen, aber das leitet für mich dann auch über zu den Punkten oder zu den Komplexen, die wir mit Blick auf die weiteren Sitzungen von Ihrer Seite einfach mal gerne erfahren würden, wo Sie sagen, das sind thematische Fragestellungen, die wir gerne erörtern wollen. Denn von mir, in einer ganz persönlichen Bilanz der fast zwei Tage intensiver Diskussion, hatte ich das Gefühl, dass es aufgrund dieser strukturierten Thematiken, die wir besprochen haben, erstens zu sehr intensiven Diskussionen gekommen ist, dass wir auch verstanden haben, wo wir Fragen an Sie haben, um zu begreifen in welche Richtung Sie denken. Es wurde aber auch immer wieder deutlich, dass man von den speziellen Fragen dann auch mal auf die Grundsatzentscheidungen reflektiert und dann diese Fragestellungen mit in den Blick nehmen kann, sodass mein Vorschlag dahingehen würde, aber das ist bitte nur ein Vorschlag, dass wir eben genau so überlegen und hoffen von Ihnen die Themen genannt zu bekommen und dass wir das dann wieder so strukturieren können, um zu so einem intensiven Gedankenaustausch zu kommen, jedenfalls scheint das für mich ein ganz wichtiger Punkt zu sein. Das war jetzt eine Frageform, ich sage es noch mal ganz deutlich, auch wenn ich nur eine Pause gemacht habe, es war ein großes Fragezeichen gemeint, mit der Bitte sich dann auch entsprechend zu positionieren.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Ich habe eine Frage zur Geschäftsordnung; sind wir jetzt schon beim Abschluss oder noch in der Diskussio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Ich wollte das verknüpfen und überleiten, weil wir ja den Zeitplan nicht so konkret eingehalten haben, wie er in der Agenda ursprünglich vorgesehen war. Ich wollte die Fragen von Herrn Botschafter Chung aufnehmen, um damit schon einmal in eine kurze Bilanzierung, aber auch in einen Ausblick dazu, wie wir das nächste Mal angehen sollen, überzuleiten. Im Grunde genommen beides offen, aber natürlich auch mit Blick auf die Fragestellungen, die Sie interessieren, die wir behandeln sollten.

[HONG Yangho Vorsitzender, Stiftung für die Unterstützung des Kaesong Industrieparks]

Was Privatisierung angeht, haben wir genug diskutiert, denke ich. Hier bedarf es keiner weiterer Diskussion. Wir haben ja weiterhin viele Stoffe zu studieren. Wir haben darüber gesprochen, dass wir einen Teil der Beispiele nicht einfach so übernehmen können. Sie haben ja auch über die Themen fürs nächste Mal gesprochen. Ich bin von Anfang dabei gewesen als Teilnehmer. Bei der ersten Sitzung haben wir bereits frei über verschiedene Themen gesprochen. Letztes Jahr haben wir über Verteidigung und wirtschaftliche sowie soziale Integration gesprochen. Dieses Jahr war Wirtschaft das Thema, eingehend insbesondere das Thema Privatisierung. Vielleicht sollten wir jetzt das Thema wechseln und noch konkretisieren. So weit ich weiß, haben wir fünf Jahre Zeit. Vielleicht sollte bei der nächsten Sitzung wieder ein nichtwirtschaftliches Thema erörtert werden. Bei der zweiten Sitzung war Herr Teltschik dabei und wir haben viel über Diplomatie gesprochen, aber trotzdem könnten wir noch mal über diplomatische Angelegenheiten sprechen, also über Außenpolitik. Wirtschaft ist natürlich auch wichtig, aber genauso interessant wäre wie man das Bildungswesen gestaltet hat. Die anwesenden Experten sind ja zum großen Teil auch Wirtschaftsexperten, aber ich würde gerne auch Experten aus dem Bildungswesen oder der Außenpolitik hören. Natürlich möchte ich auch die anwesenden deutschen Experten bitten,

Vorschläge zu diesem Thema abzugeben.

[SUNG Nakin Prof. für Rechtswissen schaften, SNU]

Herr Bentmann hat uns ja gebeten, vorzuschlagen, was das nächste Thema sein sollte. Wir sind inzwischen bei der dritten Sitzung. Vielleicht gibt es noch Defizite bei der Diskussion der Bewältigung des Systemwechsels. Soweit ich weiß, ist das in Deutschland relativ glatt gelaufen, aber falls es in Korea dazu kommt, könnte uns der deutsche Fall gute Beispiele liefern. Natürlich sind die anderen Themen genauso wichtig, auch die Privatisierung. Unrecht durch Systemwechsel - ob das nun Franco ist oder in Südafrika mit Mandela, wenn man sich solche Beispiele anschaut, kann man sich genauso vorstellen, was in Korea passieren könnte. Ich möchte vorsichtig vorschlagen, dass wir einen moderat konservativen Weg gehen; in diesem Sinne wird uns der deutsche Weg gute Beispiele liefern. Was die Justiz angeht: Wir haben über deutsche Rechtstaatlichkeit gesprochen, da ist natürlich das Justizsystem sehr wichtig. Insofern könnte die Rolle der Justiz genauso interessant sein, vielleicht auch in Kopplung mit den anderen Themen, die ich angesprochen habe. Soweit mein Kommentar.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Sehr wichtiger Punkt, vielen Dank. Einmal Unrecht durch Systemwechsel. Auch die Frage für mich damit verknüpft, Umgang mit den bisherigen Eliten. Wie wird versucht diese Eliten in das neue System zu integrieren. Wie arbeite ich das strafrechtlich mit auf. Es gehört ja auch in den Komplex, quasi als Gegenstück zur Rehabilitierung der vorigen Unrechtsmaßnahmen. Aber auch die Verfolgung dieser Unrechtsmaßnahmen ist ein ganz wichtiger Punkt, der auch im Prozess der deutschen Einigung eine besondere Aufmerksamkeit erfahren hatte. Ich habe es einfach mal notiert, ist glaube ich ein ganz wichtiger Punkt. Jetzt habe ich zwei Wortmeldungen. Erst Herr Ludewig, dann Herr Prof. Dr. Paqué und dann Frau Prof. Lee.

[Johannes Ludewig Bundeskanzleramt, 1990 Koordinator Neue Länder]
Ich wollte noch was zur wirtschaftlichen Seite sagen, weil ich das Gefühl habe, dass wir noch nicht das Gesamtspektrum richtig diskutiert haben bzw. umfassend. Warum? Ich versuche mir das mal vorzustellen, wie das bei Ihnen funktionieren könnte. Ein Szenario, das nicht völlig utopisch ist, ist, dass vielleicht aus wirtschaftlichen Gründen, in Nordkorea in der Regierung das Gefühl entsteht, eine engere Zusammenarbeit wirtschaftlicher Art ist von Nutzen. Nehmen wir das mal an. Dann ist ja für Sie die Frage ganz konkret: Wie reagieren Sie darauf? Da kommen die Nordkoreaner und sagen, bei uns läuft alles nicht so gut, jetzt sind wir bereit, mehr mit den Südkoreanern zusammenzuarbeiten. Dann ist ja die Frage konkret für Sie, was schlagen Sie dann vor? Da ist die Frage Privatisierung usw. erst einmal weiter hinten, Justiz und Unrechtsaufarbeitung das ist dann alles noch weit entfernt. Ich komme noch mal zurück auf das, was Prof. Dr. Pohl gesagt hat: Die Grundsatzfrage ist ja, was muss eigentlich passieren, damit eine planwirtschaftliche Wirtschaft sich schrittweise dynamischer, besser entwickeln kann. Das ist die Frage, die ich meine: Wie macht man eine allgemeine Wirtschaftspolitik. Was kann man politisch empfehlen, damit da eine andere Dynamik in Nordkorea entstehen kann. Wir brauchen ja Neugründungen und die Frage ist ja, wie bekommen Sie die da hin? Investitionsanreize, das haben wir in Ostdeutschland auch gemacht. Wer investiert, der bekommt einen bestimmten Betrag, Prozentsatz, staatlicherseits dazu. Und Sie brauchen eine minimale Rechtsordnung, damit Investitionen verlässlich sind. Niemand wird investieren, wenn es nicht eine gewisse minimale, verlässliche Rechtsordnung gibt. Das haben wir auch in Ostdeutschland erlebt. Wenn Sie kein Grundbuchamt haben, das funktioniert, wo Grundstückskäufe eingetragen werden oder Rechte an Grundstücken, dann investiert kein Mensch. Also brauchen Sie Grundbücher oder etwas Ähnliches, was Rechtssicherheit schafft, sonst werden Sie niemals einen Investor da hinkriegen, weder aus Südkorea noch von woanders her, der auch nur einen Dollar oder Euro in Nordkorea investiert. Deswegen lohnt es sich meiner

Meinung nach, wenn ich mal die Wahrscheinlichkeit von Szenarien bedenke, dass man sich überlegt, für den Fall, dass Nordkorea ein Interesse an engerer wirtschaftlicher Zusammenarbeit hätte, was wären denn dann Ihre konkreten Vorschläge, was in Nordkorea passieren müsste, damit zusätzliche Investitionen aus Südkorea oder anderen Ländern da stattfinden. Dass sich Unternehmen da wirtschaftlich engagieren. Darüber haben wir eigentlich noch nie gesprochen. Wir haben immer nur über bestimmte Erfahrungen gesprochen, die wir in Deutschland mit Privatisierungen gemacht haben, weil wir eine andere Situation hatten. Wir hatten ja keine schrittweise, langsame Annäherung, sondern wir hatten eine friedliche Revolution, die dann sehr schnell zu einer wirklichen Wiedervereinigung geführt hat. Das ist aber aus meiner Sicht, aus der Ferne gesehen, ein eher unwahrscheinliches Szenario; das kann passieren, muss aber nicht passieren. Eigentlich ist das Wahrscheinlichere, dass es eine schrittweise Annäherung Öffnung, Interesse an wirtschaftlichen Aktivitäten gibt. Wenn ich jetzt in Südkorea wäre, dann würde ich mir mal überlegen: Was ist denn mein Konzept für eine solche Situation? Was ist mein Zehn-Punkte-Plan, den ich der nordkoreanischen Regierung auf den Tisch legen würde und sagen würde: Damit es wirtschaftlich besser werden kann in Nordkorea, muss Folgendes passieren. Ohne dass man das ganze Regime ändert und alles anders macht. Da wird die Regierung nicht so entzückt sein, wenn man ihr erst einmal sagt, sie solle abtreten. Das wird sie wohl nicht machen. Also muss man sich ja solch ein Szenario mal überlegen. Das haben wir nie diskutiert, das sollte man sich mal konkret vornehmen. Sie kennen ja Nordkorea am besten; wenn Sie mal ein paar Ideen entwickeln, dann können wir das zusammen diskutieren. Dann wird es wirklich konkret. Z.B. unsere Erfahrungen mit einer Investitionszulage, die vielleicht aus einem gemeinsamen Fonds, den Nord- und Südkorea finanziert werden könnte. Weiter: Was braucht man an minimalem Rechtsrahmen, damit Investoren sagen, okay, das ist verlässlich genug, ich kann da investieren. Was ist dafür notwendig? Das wäre ja ein erster Beginn einer intensiveren Zusammenarbeit, abgesehen von Ihren Sonderzonen, die Sie bis jetzt

haben. Das fällt mir gerade ein, was wir mal überlegen sollt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Jetzt der Reihe nach, Herr Prof. Dr. Paqué, dann Frau Lee, dann Herr Ahn, Herr Prof. Dr. Schröder...

[Prof. Dr. Karl-Heinz Paqué ehem. Staatsminister der Finanzen in Sachsen-Anhalt]

Ich habe in meinen bisherigen Einlassungen bisher immer als Wirtschaftsprofessor und Beobachter und Analyst Ostdeutschlands gesprochen. Ich möchte jetzt vielleicht eine Anregung eingeben, die mir mehr in meiner Rolle als ehemaliger Finanzminister eines Landes, nach den zwei Tagen Diskussion, in den Kopf kommt. Mir ist doch aufgefallen in der Diskussion, dass in der deutschen Erfahrung die Vereinigung im Verwaltungsbereich vielleicht noch nicht hinreichend diskutiert und gewürdigt wurde.

Was meine ich damit? Ich meine, dass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doch früh so angelegt war, dass man im Auge hatte, dass eine wirklich effiziente, nicht korrupte, qualitativ hochwertige ostdeutsche Verwaltung auf allen Ebenen entsteht. Und das ist von außerordentlich großer Bedeutung, weil das natürlich ein zentrales Element des Zusammenwachsens ist. Sicherlich ist es in der Frühphase so, dass die Spitzenpositionen in vielen Bereichen natürlich von Westdeutschen besetzt wurden, aber man kann sehr gut beobachten in den letzten Jahren, ich sehe das selbst im Universitätsbereich, aber ich habe es auch in der Finanzverwaltung meines eigenen Landes erlebt, dass dann doch eine Generation nachwächst, die dann entsprechend zügig auch höhere Verantwortung übernehmen kann. Ich meine in der Politik ging es bei uns noch erheblich schneller. Wir haben eine Bundeskanzlerin und einen Bundespräsidenten [aus Ostdeutschland], aber in der Verwaltung insgesamt geht es etwas langsamer. Wir hatten ja Modelle in Deutschland, die speziell föderalistisch bedingt waren, die aber außerordentlich

interessant sind. Um es noch mal zu sagen, es geht nicht darum, dass da irgendwas übertragen werden soll von Deutschland auf Korea, Korea hat andere Verhältnisse, aber es sind einfach ein paar Ideen von Strukturen, die interessant sein könnten. Ich will Ihnen da ein Beispiel geben aus meiner eigenen Verwaltung, als Finanzminister hat man ja die gesamte Finanzverwaltung eines Landes zu leiten. In der Finanzverwaltung, in der Steuerverwaltung bis runter in die Finanzämter wird inzwischen eine Art Vergleich gemacht, [das Magazin] Capital hat damit angefangen, die Finanzverwaltung nach der Qualität ihres bürgerfreundlichen Services zu untersuchen. Das sind 600 Finanzämter etwa in Deutschland und diese Ergebnisse werden publiziert, werden öffentlich diskutiert und gehen zurück in die Verwaltung. Wir hatten Partnerschaften westdeutscher Länder für ostdeutsche Länder. Mein Land, Sachsen-Anhalt, hatte als westdeutschen Partner Niedersachsen. In der neuesten Erhebung, fiel zufälligerweise in meine Amtszeit, ich glaube 2004, zur Kundenfreundlichkeit der Finanzverwaltung, hatte Sachsen-Anhalt Niedersachsen überholt, obwohl Niedersachsen beim Aufbau maßgeblich und außerordentlich konstruktiv beteiligt war. Was ich damit sagen will: Die Finanzverwaltung, gerade in den Finanzämtern bestand bei den Sachbearbeitern zum Großteil aus Ostdeutschen, also es wären dann gewissermaßen 12-13 Jahre nach einer Vereinigung Nordkoreaner, um im Beispiel zu bleiben und die haben letztlich dafür gesorgt, dass eine außerordentlich kundenfreundliche Verwaltung entstanden ist. Ist nur ein Beispiel, in anderen Bereichen könnte man sich ähnliches anschauen. Der Ansatz war von vornherein, dass hier gemeinsam das Land verwaltet und regiert wird und dass man von vornherein die Weichen in diese Richtung stellt. Ich glaube es ist psychologisch im Ergebnis von ungeheurer Bedeutung, wahrscheinlich wird man die psychologische Wirkung dessen erst in zehn Jahren wirklich im ganzen Ausmaß sehen, in dem Augenblick, in dem diese neue Generation hineinwächst. Das Gleiche kann ich beobachten an den Universitäten. Der erste universitäre Nachwuchs in meinem Fach Wirtschaftswissenschaft, die ja stark ideologisch geprägt war in der DDR-Zeit,

war kaum zu verwenden, das wäre ja bei Nordkorea genauso. Die Wirtschaftswissenschaftler hier studieren in Harvard, Yale, Stanford und Chicago; da muss erst eine ganz neue Generation entstehen, aber auch da haben wir inzwischen die ersten Lehrstühle im Westen, die besetzt sind mit Ostdeutschen und es gibt zunehmend eine Vermischung. Das halte ich für ein ganz wesentliches Thema, was gewissermaßen die psychologische Operationalität eines Einigungsprozesses betrifft. Ob wir da alles richtig gemacht haben in Deutschland, weiß ich nicht, da ist auch vieles schief gelaufen, aber auf jeden Fall lohnt es sich, das mal anzuseh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Dann Herr Prof. Dr. Schröder...

[Prof. Dr. Richard Schröder ehem. SPD-Fraktionsvorsitzender in der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Ich möchte noch einmal anknüpfen an das, was Herr Ludewig gesagt hat. Ich habe das glaube ich auch gestern schon anklängen lassen: Ich habe so den Eindruck, dass die koreanischen Kollegen sich mit dem Fall befassen, dass Nordkorea herrenloses Gut wird und dass sie da hingehen und alles ordnen. Wenn ich das so sehe, ist das der Fall, der nicht eintritt. Man kann sich ein revolutionäres Szenario rein theoretisch denken, nun sehe ich aber kein revolutionäres Potential im üblichen Sinne in Nordkorea. Hunger und Elend machen keine Revolutionäre; ein terroristischer Staat kann immer dafür sorgen, dass es nicht zur Revolution wegen Hunger kommt. Es könnte natürlich eine Palastrevolution geben, aber bei der Palastrevolution haben Sie dieselbe Situation wie beim evolutionären Prozess, dass nämlich die nordkoreanische Führung einen Reformweg einschlägt. Ich sage das jetzt so ausführlich, weil ich nämlich den Eindruck hatte: wir gehen dahin und ordnen das und die Bösewichter ins Gefängnis. Sie werden aber möglicherweise bei einem evolutionären Prozess mit denjenigen reden und verhandeln müssen,

die Sie eigentlich lieber ins Gefängnis stecken wollten. Sie können denen nicht sagen; wir machen jetzt Verträge, aber damit Ihr es gleich wisst; wenn wir die Macht haben, kommt Ihr ins Gefängnis. Sie können es aber auch nicht verheimlichen, weil das das Gegenteil von Transparenz ist. Sie dürfen ja kein Misstrauen in Ihre Absichten entstehen lassen. Ich wollte Ihnen nur mal sagen: Ich habe nirgends gespürt, dass Sie an den Aporien dieses Problems leiden, vielleicht tun Sie es ja trotzdem, aber ich habe immer den Eindruck, Sie stellen sich das Schönste vor, nämlich herrenloses Gut - wir gehen da hin und ordnen es. Was mein Kollege aus Halle, Herr Prof. Dr. Pohl, schon ein paar Mal betont hat, ist Folgendes: Wenn das Regime sich öffnet, auch nach Innen, aber auch wenn es abtreten sollte, wird es eine nordkoreanische Meinungsbildung und eine nordkoreanische Repräsentanz geben. Wie die aussieht, weiß ich nicht, aber Sie müssen immer damit rechnen, dass dann in Nordkorea auf demokratischem oder sonstigem Wege Leute auftreten, die sagen, wir sprechen für unsere nordkoreanischen Landsleute. Mit denen müssen Sie dann so oder so zurechtkommen. Das können Sie nicht vollständig antizipieren. Natürlich hängt das auch alles zusammen mit dem Problem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Ich habe ja in meinem ersten Referat zum Schluss gesagt, weil mir da diese Gedanken schon gekommen waren: Wenn es nicht anders möglich ist, ist auch eine Amnestie kein zu hoher Preis für die Freiheit. Ich glaube, dass das in Südkorea nicht Sympathie auslöst.

[LEE Eunyoung Prof. an der HUFV Law School]

Was Herr Prof. Dr. Paqué und Herr Prof. Dr. Schröder gesagt haben, enthält vieles von dem, was ich auch sagen möchte. In der DDR gab es ja Verwaltungsbeamte, Richter, Professoren, Lehrer, Journalisten. Wie wurden diese umgesetzt bzw. ausgetauscht durch andere Personen? Wir wollen wissen, was passierte mit diesen Personen? Das tangiert ein anderes Thema: Austausch von verschiedenen Posten der Gesellschaft, das ist auch wichtig. Mit oder ohne Sturz

eines Regimes.

Mein zweiter Punkt lautet wie folgt: Die Dokumente der DDR, ob es nun staatliche Archive sind oder die Stasi-Akten, wie wurden diese Archive übernommen und verwaltet? Wie hat man die Akten später genutzt? Das wäre mein Vorschlag für die nächste Sitzung als Thema.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Sie hatten sich noch gemeldet und dann Herr Chun.

[LEE Karkbum Ehrenprofessor, KAIST]

Wir haben uns bei dieser dritten Sitzung mit den Themen Privatisierung, Eigentumsrecht und wirtschaftlichen Aspekten beschäftigt. Worüber wir uns zudem Gedanken machen sollten: Der Energieverbrauch in Korea ist enorm. Die Höchsttemperatur heute ist 31 Grad, jedes Grad mehr führt zu einer erheblichen Zunahme des Energieverbrauchs. Wir haben eine Art Alarmsituation. Warum ich das erwähne: Die Stromreserve in Korea beträgt unter 10%; in Deutschland beträgt sie 40%. Wie Sie alle wissen, importiert Deutschland aus Frankreich oder der Schweiz Strom, das ist möglich, weil es entsprechende Netze gibt. Zurück zu Korea, zum Thema Investitionsförderung, bzw. zum Thema, was wir in dieser Hinsicht tun sollten. Die Energiefrage ist wirklich eine Kernfrage, die man zunächst lösen muss. Erst dann können wir an Investoren denken. Infrastruktur muss gebaut werden, damit Investoren kommen können. Ob Südkorea das alles auffangen kann, das frage ich mich sehr intensiv. In den 90er Jahren gab es die sogenannte Erste Atomkrise und die Genfer Vereinbarung. Die Lösung dafür war der Bau von zwei Atomreaktoren in Nordkorea. Ich glaube, wenn wir an Infrastruktur denken, ob Straßen oder Strom, da müssen wir uns Gedanken über die Gegebenheiten machen, ob die Infrastruktur schon vorhanden ist, um Investoren aus dem Ausland anzulocken. Die Energiefrage kann man nicht in ein oder zwei Jahren lösen, deswegen betone ich das so.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Herr Chun.

[CHUN Haesung Ministerialdirektor fuer Vereinigungspolitik,
Wiedervereinigungsministerium]

Vielen Dank für die Gelegenheit zu sprechen. Jetzt sind wir bei der Bilanz, aber wir sprechen nicht nur über die Bilanz, sondern auch über das Thema für die nächste Sitzung. Ich bin ja als Ministerialdirektor zum ersten Mal bei einer solchen Sitzung dabei, das war wirklich sehr hilfreich für mich. Was die Erfahrungen aus Deutschland angeht; Korea wird die Erfahrungen aus Deutschland sich mehr zu nutze machen als jedes andere Land auf der Welt und in Deutschland gibt es mehr Arbeiten und Studien dazu als in jedem anderen Land der Welt. Es wurde immer wieder erwähnt, es habe Kritik gegeben, ohne dass diejenigen wussten, was hinter den Kulissen passiert ist. Deswegen war es sehr bedeutungsvoll, diejenigen einzuladen, die tatsächlich aktiv dabei gewesen sind beim Prozess, bei den Verhandlungen. Ich spüre, Erfahrungen können geteilt werden. Ich möchte es noch mal zum Ausdruck bringen, dass ich zutiefst dankbar bin, dass wir diese Erfahrungen gemeinsam teilen können.

Ich habe es gestern schon erwähnt, aber die Vision, die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hat, ist: schrittweis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Es ist ja nicht so, dass wir einfach mit Gewalt Nordkorea erobern und dort alle zur Rechenschaft ziehen und bestrafen und dass wir dann dort eine Rechtsordnung schaffen. Solche Ideen haben wir nicht. Jeder hat viele verschiedene Ideen, aber eine friedliche Lösung, das ist, was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als Idee hat. Wenn die Süd-Nord-Beziehungen sich weiterentwickeln, können wir diese Idee weiterverfolgen, d.h zwei Staaten, zwei Systeme als Übergangsphase und erst zum Schluss die beiden Länder vereinigen. So wie die Teilnehmer bereits gesagt haben, Vereinigung im Konsens. Wir wissen nicht, ob Nordkorea wirklich so ist, wie wir es uns vorstellen, aber natürlich wollen wir uns vorstellen, dass

Nordkorea friedlich wird und die Nordkoreaner Freiheit genießen.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wird immer wieder eine Notfallsituation bzw. der Sturz des nordkoreanischen Regimes diskutiert.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muss sich ihrerseits auch darauf vorbereiten und es vorsichtig angehen. Sowohl die aktuelle als auch die letzte Regierung fanden aber, es ist nicht angebracht, offen darüber zu diskutieren, denn wir wollen Nordkorea nicht unnötig provozieren. Auf dieser Linie befindet sich das Vereinigungsministerium, wollte ich betonen. Was die Themen für die nächste Sitzung angeht; hier sind ja schon viele gute Ideen aufs Tableau gebracht worden. Wir wollen diese Ideen gerne alle sammeln und wir wollen dann darüber mit dem Vereinigungsministerium und den Experten sprechen. Auf jeden Fall wird die Sitzung noch aufschlussreicher und bedeutungsvoller werden als dieses Jahr. Das ist mein Kommentar.

[YOO Hoyeol Prof. für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

Vielen Dank. Wir lernen viele Beispiele aus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und wir werden auch in Zukunft viel davon lernen.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hat uns bereits viele Lektionen gegeben, aber Nordkorea wird auch einiges davon lernen wollen. Wenn wir die Gipfelgespräche zwischen den Deutschlands anschauen und wir hatten unsererseits ja auch schon zwei Mal Gipfelgespräche, hat sich Nordkorea dabei nicht unbedingt als kooperativ erwiesen. Die wollen natürlich keine Wiedervereinigung. In Korea gibt es eine neue Generation, die heranwächst und das Bild von Nordkorea ist da verzerrt. Und wenn es zum Punkt der Entscheidung kommt, kann ich mir nicht vorstellen, dass es in Nordkorea eine Gruppe gibt, die eine eigene Meinung vertritt und eine gesetzgebende Versammlung baut. Genau deshalb finde ich die Erfahrung, die die Ostdeutschen gezeigt haben, sehr beneidenswert.

Noch mal zurück zu Nordkorea: Die neue Macht wäre das Militär oder die Kernelite. Nordkorea will ja über China sein Regime aufrecht erhalten. Man kann jetzt schon die Polarisierung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spüren. Hier gibt es den

starken Willen Nordkorea aufrecht zu erhalten. Wie können wir das schwächen? Das wäre der Schlüssel für uns. Aus dem deutschen Beispiel zu lernen, ist wichtig für uns, aber genauso wichtig, wäre zu lernen, wie die Deutschen umgegangen sind mit denjenigen, die dem alten System gegenüber loyal waren. Man kann dieses Know-How nicht nur uns, sondern auch Nordkorea mitteilen, dann kann Nordkorea beruhigt sein, dass ein Regimewechsel nicht unbedingt zu einer Tragödie führen würde. Sie können so den Eindruck bekommen, auch nach einer Vereinigung können sie ihr System einigermaßen erhalten. Neulich gab es ein südkoreanisch-chinesisches Gipfeltreffen. Ich glaube das Ergebnis dieses Gesprächs ist, dass die Chinesen den Eindruck gewonnen haben, dass eine Wiedervereinigung ihnen nicht schaden würde. Ich meine, wie gesagt, die Beispiel aus Deutschland wären auch für Nordkorea nützlich. Wie sind also die Deutschen umgegangen mit denjenigen, die sich ans alte Regime geklammert haben?

[AHN Doosoon Ehren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Ich habe jetzt viele Vorschläge gehört, die klingen alle sehr wichtig. Aber bevor wir über das nächste Thema für die nächste Sitzung sprechen, sollten wir über das Problem sprechen, das Herr Ludewig angesprochen hat. Was sollen wir machen, falls Nordkorea kooperativ reagiert, falls Nordkorea meint, wir sind bereit für enge Zusammenarbeit? Seit 1974 gibt es immer das Versprechen zu Zusammenarbeit. Die Frucht dieses Versprechens ist der Kaesong-Industriepark. Hier ist auch jemand anwesend, der sich bis zum letzten Tag im Industriepark aufgehalten hat. Wir haben hier sehr viele Dokumente. Wir haben deutsche Fälle studiert und anhand der Dokumente haben wir immer wieder Nordkorea gegenüber Annäherungsvorschläge gemacht, aber sie reagieren so gut wie nicht. Ich denke der Grund liegt darin, dass das Regime seine Macht verlieren würde, wenn die neue freie Wirtschaft Nordkorea überrennt. Das waren zum Teil sehr gute Vorschläge, aber diese Vorschläge, die wir gemacht haben, wurden einfach verweigert.

Ost und West konnten die Wiedervereinigung relativ einfach vollbringen, was daran liegt, dass es in der DDR ein relativ gut entwickeltes soziales Sicherheitsnetz gab. Dadurch war eine Annäherung einfacher. Von den Ideen, die auch Herr Hong vorgeschlagen hat, würde ich die innere Integration ansprechen wollen. Wie könnte man die sozialen Sicherheitsnetze miteinander verknüpfen? Wie sind die Erfahrungen, wie konnten die Ostdeutschen bei der Zusammenführung der Sozialsysteme ihren Lebensstandard aufrecht erhalten?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Vielen Dank. Ich glaube das war jetzt noch mal zum Abschluss, aber auch insgesamt eine ganz ansehnliche und intensive Themenliste. Wenn ich das jetzt mal versuche, zeitlich etwas zu strukturieren: Von Herrn Ludwig die Frage, wie kann ich jetzt eine Übergangszeit gestalten, um dann in die Fragestellung hineinzukommen, dann aber auch die anschließenden Fragen, wie ist der Umgang mit dem Systemwechsel, dem Elitenwechsel. Wie funktioniert die innere Neustrukturierung der Gesellschaft, wie kann man dort den notwendigen Ausgleich hinbekommen, dann aber auch die Frage Schaffung eines Justizsystems, eines Bildungswesens; wie ist dieser Transformationsprozess geschafft worden, welche besonderen Fragestellungen haben sich dabei aufgetan - das ist ein solch intensiver Strauß, dass ich im Augenblick jedenfalls nicht sehe, dass wir das schaffen in einer Sitzung alles abzuarbeiten, denn dann haben wir nicht nur einen 12-, sondern einen 48-Stunden-Tag innerhalb von 24 Stunden zu bewerkstelligen, sodass mein Vorschlag wäre, dass wir jetzt in der nächsten Zeit, unsere beiden Häuser reflektieren, dann miteinander in Kontakt treten und daraus wieder eine Struktur aufarbeiten und abstimmen. Dann wäre mein Vorschlag, dass wir dann auch wieder unabhängig von dem Thema oder den Themen, die man auch vielleicht parallel wie bei der zweiten Sitzung behandeln kann, um auch alle Mitglieder interessengerecht einzusetzen bzw. zu beschäftigen, wieder so verfahren, wie wir es in der heutigen Sitzung gemacht haben, was ich ausgesprochen interessant

fand. Da möchte ich auch noch einmal meinen Dank sagen an unsere koreanischen Kollegen, dass wir durch die Einführungsvorträge ein Verständnis dafür erlangen konnten, wie Sie die Situation in Nordkorea beurteilen, wo Sie die Fragestellungen haben, die man dann auch daraus herauskristallisieren kann. Dass zum anderen aber auch durch die Fragestellungen unsere Beiträge auch etwas konkreter und themenorientierter sind, sodass mein Vorschlag wäre, um jetzt auch langsam zum Ende zu kommen, dass wir das in bisher gut bewährter Manier weitermachen und dann das Programm versuchen so aufzustellen und fortzuschreiben. Insofern gestatten Sie mir dann jetzt eine kurze Bilanz zu ziehen, die ich gar nicht inhaltlich machen will, sondern mehr über die Atmosphäre der beiden Tage gestern und heute, aber auch der Arbeitsdiskussionen in den Pausen, dass das für mich ein sehr intensiver, spannender, manchmal auch sehr streitiger Dialog war, aber das gehört dazu, denn nur über die Diskussion kommen wir den Fragestellungen, die Sie interessieren noch näher und können das noch präziser machen. Insofern fand ich das sehr anregend, ermunternd und hat auch ganz erheblich dazu beigetragen, dass der Jetlag überhaupt keine Rolle gespielt hat, weil es so eine lebhaftige Diskussion war. Dafür möchte ich mich neben der von Ihnen wieder bewiesenen Gastfreundschaft ganz ganz herzlich bedanken und freue mich insofern auf die nächste Veranstaltung und die nächste Runde. Vielen Dank für Ihre Mitarbeit. Wenn ich noch zwei Anmerkungen zum weiteren Ablauf, sozusagen zur Geschäftsordnung machen darf: Das eine ist, heute Abend haben wir noch ein gemeinsames Abendessen. Da steht im Plan 18:30, das ist die Abfahrtszeit des Busses, ist das richtig?

[CHUN Haesung Ministerialdirektor fuer Vereinigungspolitik,
Wiedervereinigungsministerium]

Ich glaube es kommt drauf an, wann Sie bereit sind. Wir können auch früher losfahren. Das Restaurant, wo wir essen gehen, ist auf dem Weg zur Botschaftsresidenz. Da in der Nähe ist ein Restaurant namens Samcheonggak.

Es ist jetzt bald Berufsverkehr. Trotzdem können wir es in 10-15 Minuten erreichen, es ist in der Nähe dieses Hotels. Wenn wir um 18 Uhr oder 18:10 Uhr losfahren, sind wir um 18:30 am Restaurant.

[Moderator – Dr. Jörg Bentmann]

Ok, 18:15 Uhr spätestens Einstieg in den Bus, dass wir dann pünktlich sind. Und für morgen schon mal, bevor wir das vergessen, der Hinweis, dass das Besichtigungsprogramm um 9 Uhr beginnt, sodass ich Sie bitte um 8:55 Uhr in der Lobby zu sein, um dann mit dem Bus abzufahren. Aber das hat ja bisher alles geklappt und das wird auch weiter klappen. Vielen Dank und ich freue mich auf das gemeinsame Essen.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록

Dokumentation der dritten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인쇄일 | 2013년 12월

발행일 | 2013년 12월

발행처 |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

주 소 | 서울시 중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전 화 | 02-2100-5757 팩스 : 02-2100-5759

편집·인쇄 | JNK(제이앤케이) 02-2266-2204

